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발 간 등 록 번 호
11-1500714-000013-10

한국지리지

▸▸▸▸ 전라·제주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리지

전라 · 제주편

국토지리정보원

빈 면

발간사
發刊辭

전라 · 제주편을 발간하며

국토는 우리 조상들의 얼이 스며있고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살아갈 보금자리입니다. 지난 20여년간 국토는 각종 국토개발과 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전과는 크게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지구촌의 세계화에 따라 국토에 관한 최신의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국내 · 외에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2003년도부터 체계적인 지도수정 · 갱신계획과 연계하여 국토의 자연 및 인문현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의 『韓國地誌』발간이후 2003년도에 한국지리지 충청편이 발간되었으며, 올해 전라 · 제주편을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에도 경상편, 강원편, 수도권편 및 총론을 연차적으로 집필할 예정입니다.

본 편에서는 동북아 물류 · 교역 및 자연환경 · 해양관광,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고 있는 전라 · 제주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여 알기 쉽게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이 지역의 전망을 조명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본 책자는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국토공간상에 발생한 변화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국토와 해당지역의 문제점을 성찰하여 국토계획 및 개발, 정책결정, 학술진흥, 교육 및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더욱 알찬 내용의 한국지리지가 편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지리지 편찬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대한지리학회 및 지리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2004년 11월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장 신 인 기

빈 면

전라지방

제1장 과거와 현재

1. 지리적 특성 ····· 23
   1) 위치와 영역
   2) 행정구역의 변천
2. 역사와 문화 ····· 30
   1) 인구
   2) 산업활동
   3) 교통 및 통신체계
   4) 정주취락
3. 지역의 대외적 위상과 그 변화 ····· 42
   1) 면적과 인구
   2) 경제와 산업
   3) 생활여건

제2장 자연 및 생태환경

1. 자연환경 ····· 53
   1) 지형과 지질
   2) 기후
   3) 토양
2. 생태환경의 이용과 관리 및 보전 ····· 81
   1) 산지의 관리 및 보전
   2) 물 자원 이용과 간척 중심의 개발
   3) 섬들의 관리와 보전
3. 자연재해 ····· 101

제3장 인구의 구조와 변동

1. 인구구조와 분포 ····· 107
   1) 인구변화
   2) 인구구조
   3) 인구분포
2. 인구이동 ····· 128
   1) 권역외 이동
   2) 권역내 이동

3. 인구 문제 148
1) 구조적 문제 : 인구의 절대 수 감소
2) 경제적 문제 : 연령별 구조의 문제
3) 사회적 문제 : 노령화, 여성화, 부양비율 증가

제4장 취락의 발달과 구조
1. 촌락의 구조와 변화 155
1) 촌락의 형성
2) 촌락의 입지별 유형
3) 촌락의 변화
2. 도시화와 도시공간의 변화 166
1) 도시의 입지와 발달
2) 도시화와 도시분포패턴
3) 도시체계와 도시권
4) 도시내부구조의 변화

제5장 산업구조의 개편과 지역경제의 변화
1. 산업구조의 변화 207
1) 산업별 지역총생산
2) 경제활동 인구의 변화
3) 산업별 및 직업별 취업자
2. 지역경제의 특성 213
1)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2) 주요 산업별 특성
3. 신산업의 발달 238
1) 산업단지의 발달
2) 산업단지의 현황
3) 공간적 특징

제6장 교통 · 통신체계의 발달
1. 교통 249
1) 육상교통로의 확충과 교통유동
2) 수상 및 항공교통
2. 유통활동 279
1) 상품의 지역적 유통
2) 유통기관의 지역적 분포

3. 정보통신 293
1) 매스컴의 지역적 분포
2) 정보통신체계
4. 에너지 수급 체계 319
1) 에너지 자원
2) 전력공급체계

제7장 관광 및 여가활동
1. 관광지 및 관광자원의 현황 331
1)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현황
2) 자연적 관광지 및 관광자원의 분포
3) 사회 · 문화적 관광지 및 관광자원
2. 지역의 관광산업 현황과 특징 348
1) 관광호텔 및 숙박업의 현황과 특징
2) 가족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의 현황과 특징
3) 여행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현황과 특징
3. 관광객의 현황과 관광환경의 특징 353
1) 방문관광객의 수요변화
2) 숙박관광객의 수요변화
4. 관광문화축제의 공간적 분포와 특징 356
1) 관광문화축제의 현황
2) 관광문화축제의 분포와 특징
3) 축제목적 및 주제에 의한 분류
4) 주요 문화관광축제의 특성
5. 지역별 관광개발계획 및 주요 관광지 371
1) 호남권 관광개발의 특징
2) 광주시 관광개발의 특징과 개발계획
3) 전라남도의 관광개발 특징과 개발계획
4) 전라북도 관광개발의 특징과 개발계획

제8장 정치적 성향과 지역주의
1. 정치적 성향의 변화 385
1) 1945년~1961년
2) 1961년~1980년
3) 1980~현재

2. 지역주의 419
1) 지역주의의 근원으로서 지역 기질론과 문제점
2) 호남 지역주의의 형성
3) 호남 지역주의의 미래

제9장 지역구조와 지역정책
1. 지역구조 431
1) 지역구조의 개관
2) 인구구조
3) 경제 구조
4) 주민의 생활환경 구조
2. 지역문제와 지역정책 458
1) 지역 문제
2) 지속 가능한 지역정책

제10장 전라의 발전전망
1. 21세기 전라권 발전의 여건 477
1) 사회적 여건
2) 경제적 여건
3) 해양 · 도서자원 여건
2. 전라권 미래발전 485
1) 국토종합계획 상의 전라권
2) 여건변화 전망
3) 시 · 도별 발전전략과 전라권 발전 비전
4) 전라권의 미래상
3. 전라권과 신행정수도 건설 501
1)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극화된 국토공간구조 설정
2) 호남고속철도 조기 건설
3) 전라권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육성
4) 지방 중심전략이 효율적이라는 중앙의 새로운 인식 필요
4. 동북아경제권시대의 전라권 510
1) 전라권과 동북아경제권
2) 전라권과 대중국 교류 · 협력
3) 전라권의 효율적인 대중국 교류 · 협력 추진전략

제주지방

제1장 과거와 현재

1. 지리적 특성 ····· 525
   1) 위치와 영역
2. 역사와 문화 ····· 527
   1) 제주의 역사
   2) 제주의 문화

제2장 자연 및 생태환경

1. 자연환경 ····· 539
   1) 화산활동사와 지질
   2) 지형
   3) 토양
   4) 수문
   5) 기후
2. 생태환경 ····· 551
   1) 토지이용 및 식생피복
   2) 생물종 다양성
   3) 생활환경 현황
   4) 환경보전
3. 자연재해 ····· 558
   1) 자연재해 현황
   2) 재난관리시스템

제3장 인구의 구조와 변동

1. 인구의 성장, 구조와 분포 ····· 565
   1) 인구의 성장
   2) 인구구조와 분포
2. 인구이동 : 양적 그리고 질적 측면 ····· 569
   1) 인구이동의 양적 측면
   2) 질적 측면의 고려
3. 인구문제와 지역발전 ····· 574

제4장 취락의 발달과 구조
1. 정주체계의 형성과 구조 579
2. 촌락의 구조와 변화 580
3. 도시화와 도시 내부구조 583
1) 도시화 과정
2) 도시 내부구조

제5장 산업구조의 개편과 지역경제의 변화
1. 산업구조의 개편 595
1) 산업구조의 변화
2)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2. 지역경제의 특성 598
1) 산업별 지역내총생산의 실태
2)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3) 주요 산업별 특성

제6장 교통 통신 에너지체계의 발달
1. 교통 611
1) 육상 교통
2) 해상 교통
3) 항공교통
4) 유통 활동
2. 정보통신 619
1) 방송과 신문
2) 우편 및 전화
3) 인터넷 정보
3. 에너지 수급체계 621
1) 전력 공급 및 수요
2) 대체에너지 개발
3) 에너지자원 수급

제7장 관광 및 여가활동
1. 관광자원과 관광시설의 분포현황 627
1) 관광자원 분포현황
2) 관광사업체의 현황

2. 관광객의 관광동향과 특성 635
1) 관광객과 관광수입의 실태
2) 교통수단과 관광형태별 관광객의 동향

제8장 지역정체성
1. 제주인의 에토스와 자연환경 645
2. 화산회토에의 적응기제인 자립정신(Self-relianceship) 649
3. 산고원야에의 적응기제인 주인정신(Ownership) 651
4. 풍다도에의 적응기제인 해민정신(Seamanship) 652
5. 제주인의 정체성으로서의 해민정신의 특수성과 보편성 656

제9장 지역구조와 지역정책
1. 지역구조 661
1) 토지이용
2) 계층구조
2. 지역문제 : 지역문제의 유형과 원인 666
1) 지역문제의 유형
2) 지역문제의 원인: 제주발전 전략과 검토
3. 지역개발 정책과 방향 671

제10장 제주의 발전전망
1. 21세기 제주권 발전의 여건 677
2.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679
1)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
2)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제주도
3. 세계화시대의 제주도 682

부 록 6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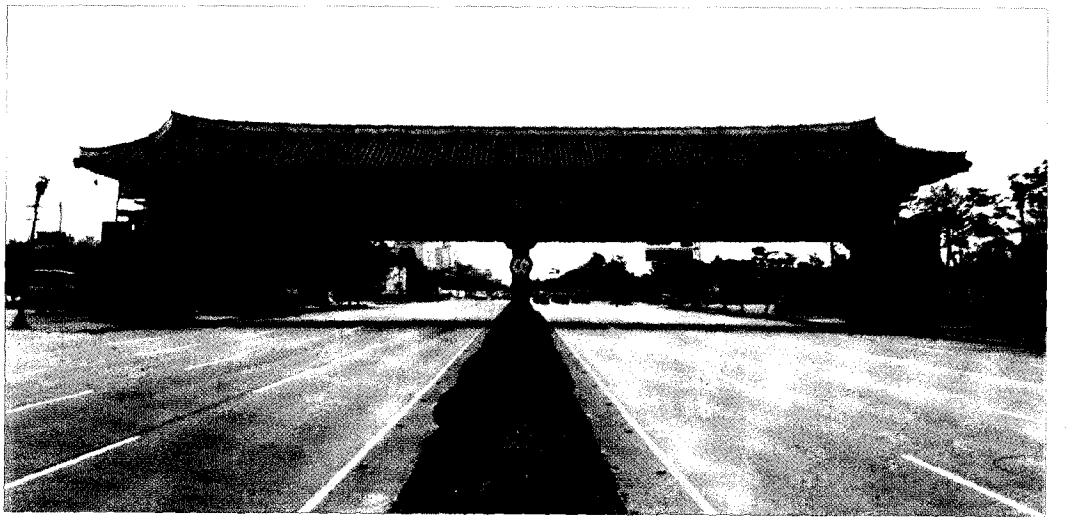
참고문헌 703

찾아보기 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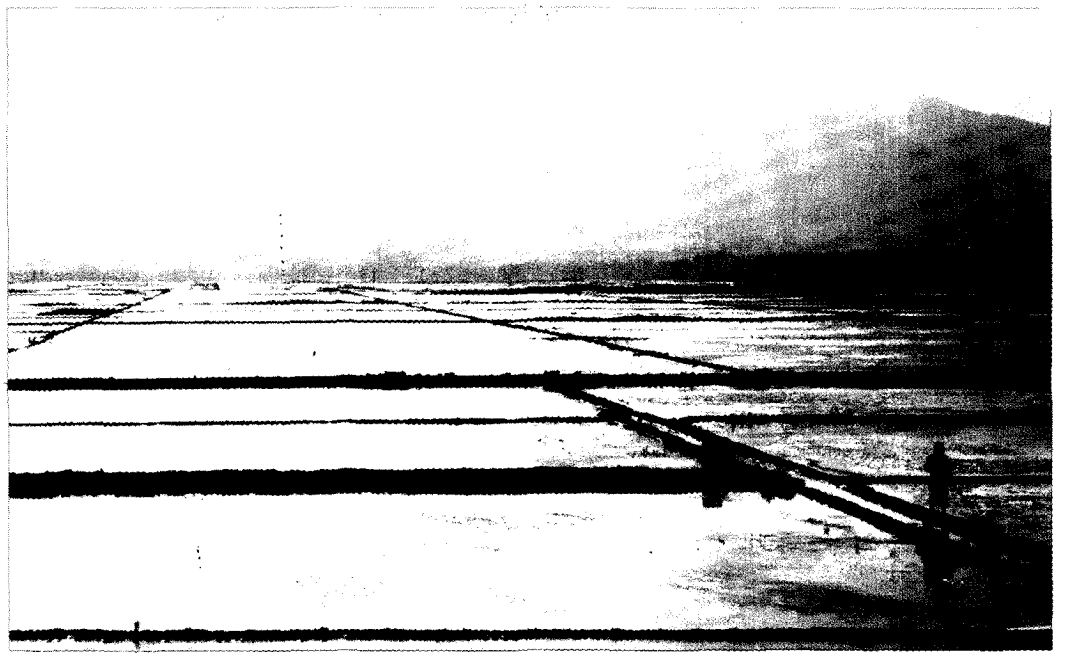
빈 면



전주-한옥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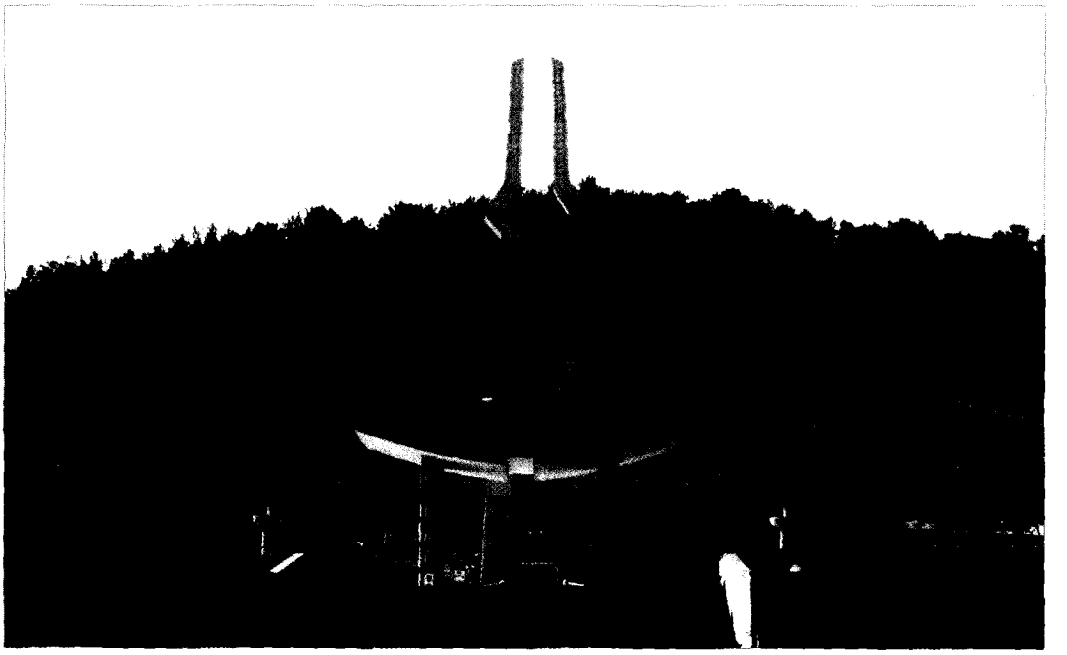
전주-호남제일문



부안-염전



순창-고추장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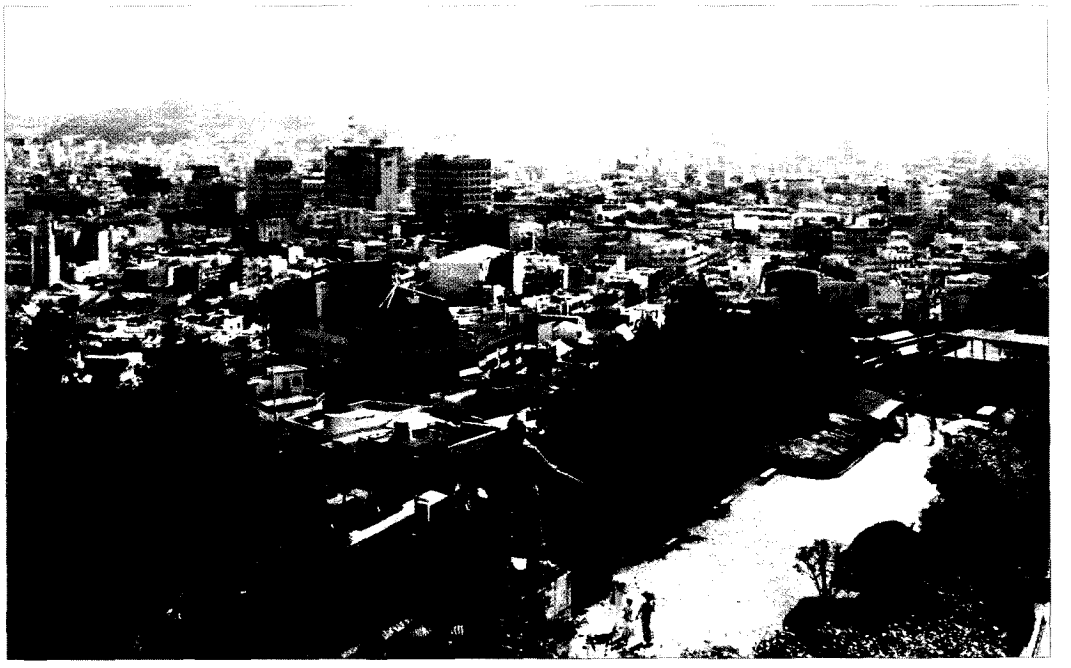
광주-망월동518묘지



광주-시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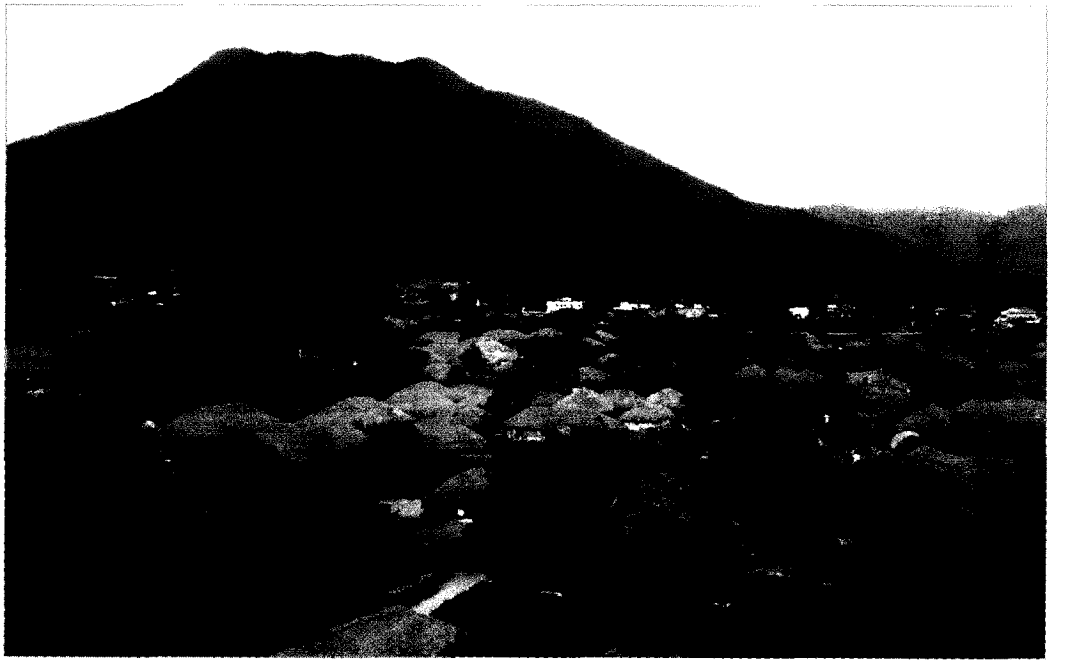
남원-광한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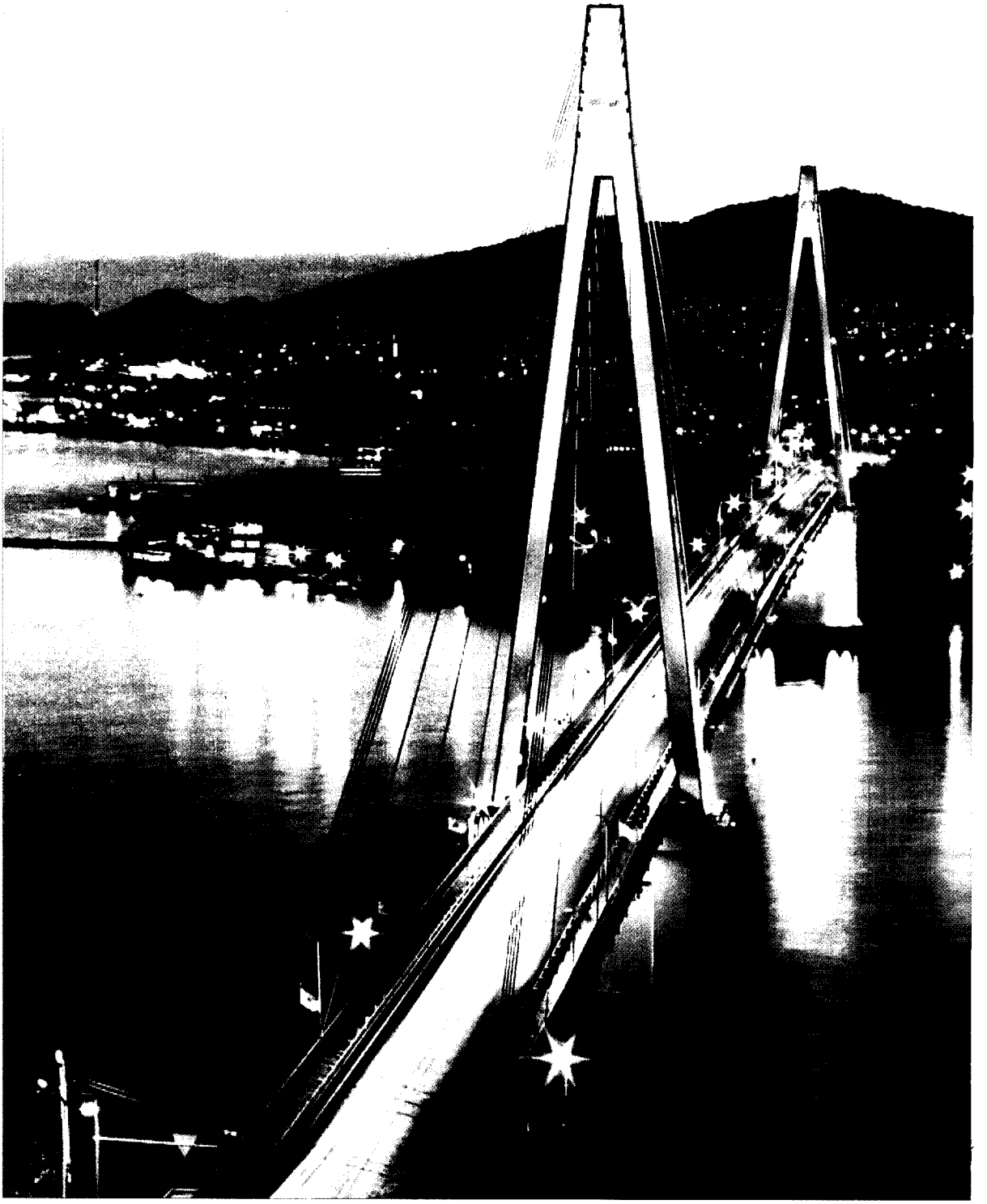
목포-유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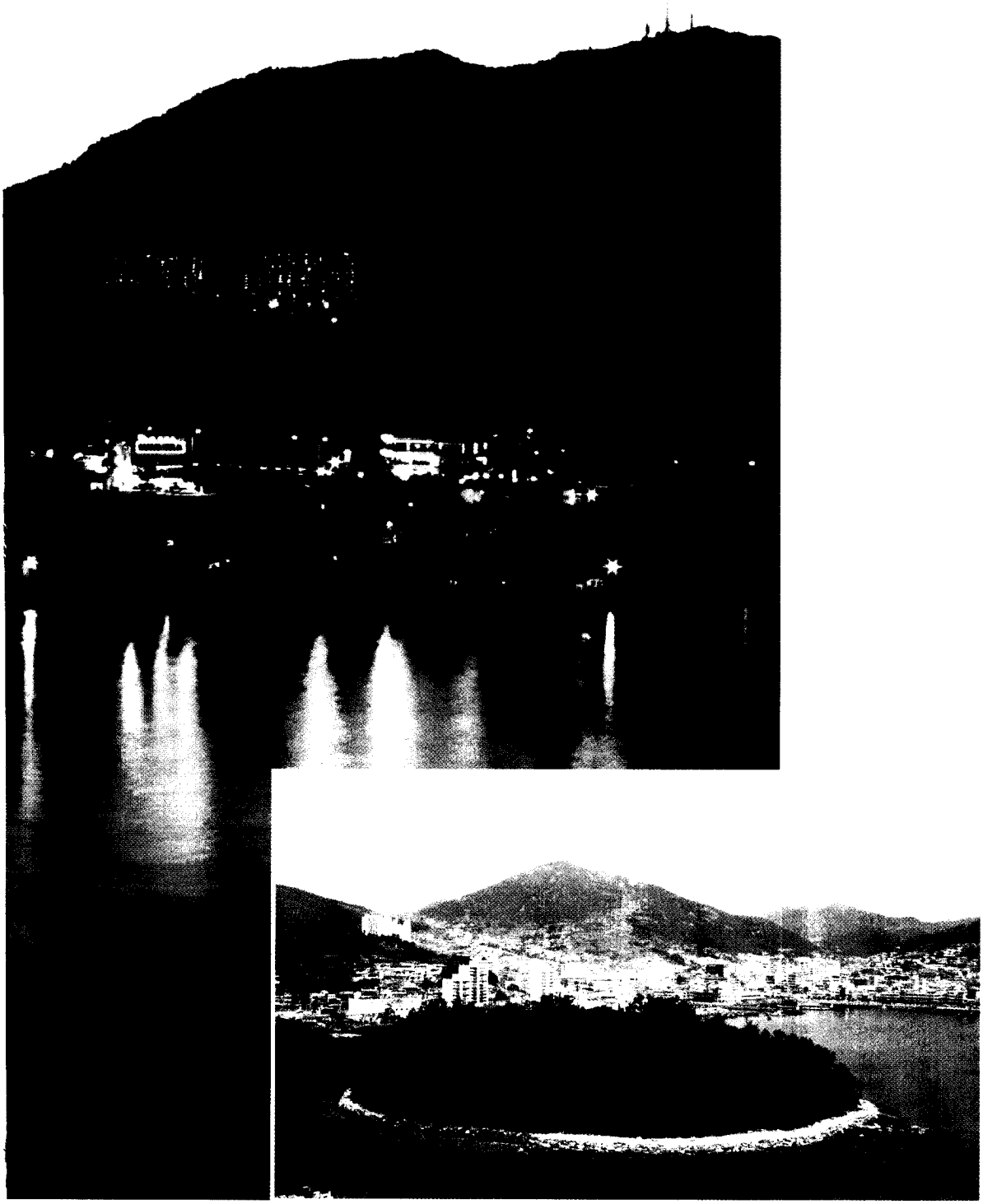
보성-녹차밭



순천-낙안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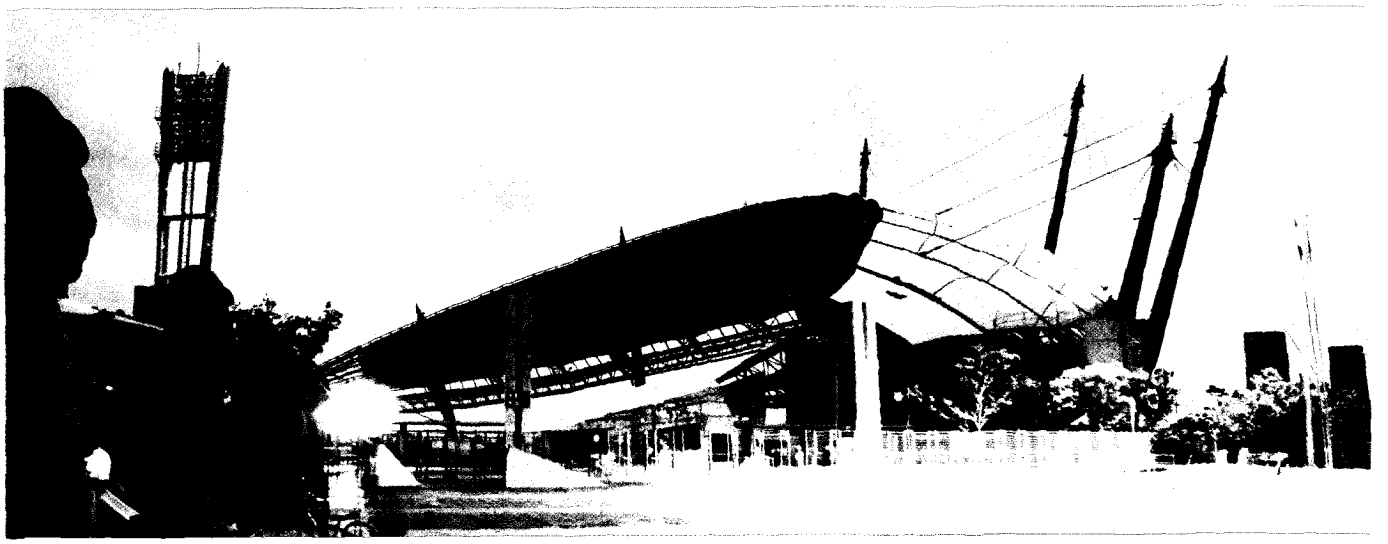


여수-돌산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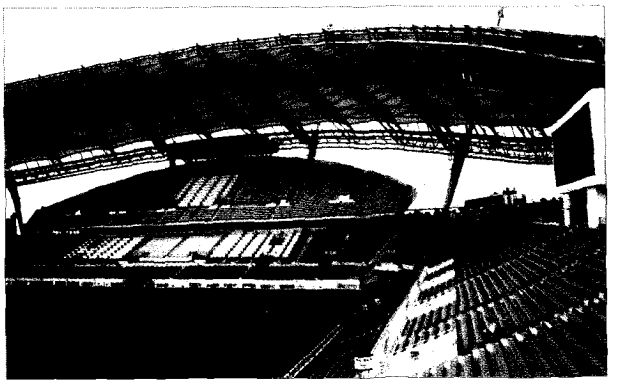
여수-장군도

제주-월드컵경기장





제주-천지연폭포



제주-월드컵경기장



제주-주상절리

〈사진출처〉전라도 · 제주도 제공



제1장
전라지방 - 과거와 현재

박영한 (서울대학교)

안영진 (전남대학교)

황철수 (경희대학교)

빈 면

제1장 과거와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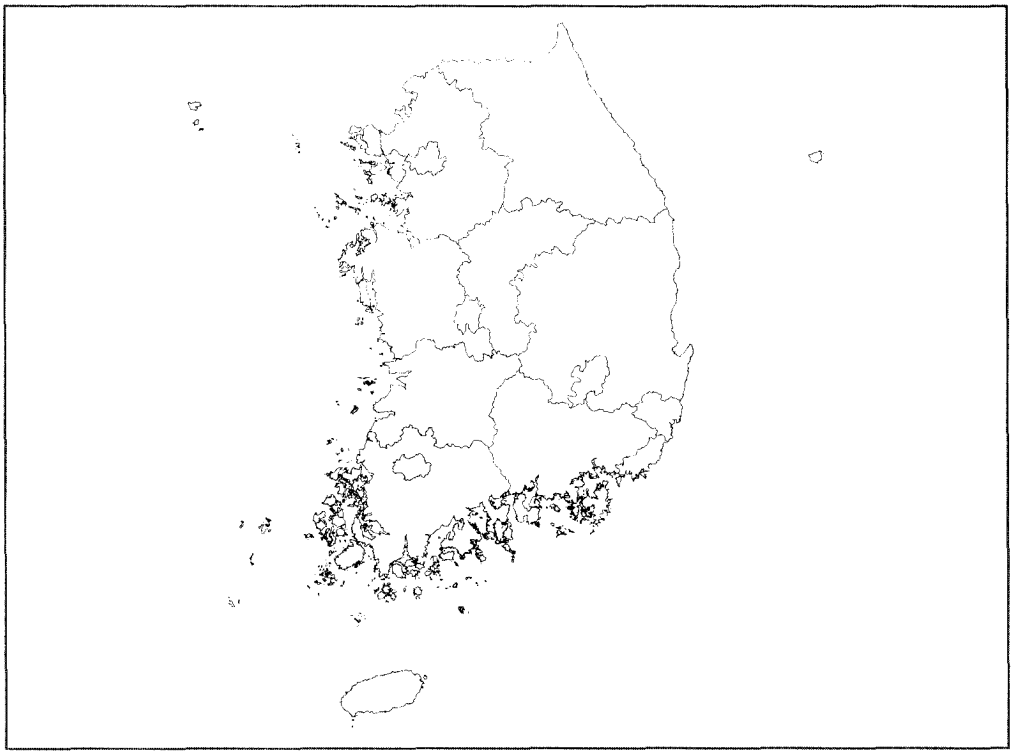
1. 지리적 특성

1) 위치와 영역

수려한 자연경관과 온화한 기후환경 그리고 다채로운 삶의 양식을 보여주는 전라(全羅)지역은 본래 마한의 땅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의 옛 영토에 속했으며, 후삼국 시대에 견훤(甄萱)이 후백제를 창건한 지역이기도 하다. 멀리는 고려시대로부터 가깝게는 일제 강점기에 이르기까지 민족과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수많은 우국 열사들이 분연히 일어나 국난 극복에 앞장선 의기의 고장이다. 높고 낮은 산과 비옥하고 너른 평야, 그리고 긴 해안선과 바다를 함께 끼고 있어 풍성하게 산출되는 갖가지 산물을 바탕으로 하여 일찍부터 풍류와 멋을 아는 예술의 고장이자 맛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전라지역은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에 걸쳐 고대의 바닷길을 통해 중국이나 일본을 연결하는 대외 교역로에 자리 잡고 있어 한반도에서 선진 문물의 유입통로이자 문화의 선도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고대 시대의 개방성과 선진성은 대외적으로 전라지역이 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대륙에 이어져 있고, 서쪽으로는 중국과 남동쪽으로는 제주도를 넘어 일본과 접할 수 있는 천혜의 요충적 입지에 힘입은 바 컸다.

그러나 조선시대 이후 국가의 도읍이 한양에 굳건히 자리 잡은 후, 이 지역의 사회와 경제, 문화, 인간생활이 여러 측면에서 적잖은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점은 지리적 위치성, 다시 말해 상대적 원격성(遠隔性)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상대적 원격성이란 역사적으로 중앙정부가 있는 왕도와 멀리 떨어져 위치하고, 중앙과 격리되어 있었다는 것을 일컫는다. 반드시 중앙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던 전통시대에서는 중앙의 각종 파문(波紋)과 정보, 새로운 혁신적 아이디어 등이 이 지역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거리 조락의 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많은 경우 중심부에서 벗어난 주변적 위상을 상대적으로 면치 못했다는 것이다.



〈그림 1-1〉 전라지역의 위치

조선시대에 전라도가 함경도 다음으로 유배지가 되었던 것도 정치적 이유 이외에 도성인 한양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농업경제가 국가의 핵심적 산업기반이었던 당시에 이 지역이 가장 풍요로운 곳이었으면서도 미비한 국가 공권력으로 말미암아 지배 계층의 경제적 수탈이 우리 국토의 그 어느 지역보다 가혹하여 많은 민중들이 피폐하고 궁핍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러한 지리적 위치성과 결코 무관치 않았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전라지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와 국토공간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은 중앙집권적 관료화와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 등으로 표현되는 이른바 근대화 과정에서 변화와 성장의 물결에서 빗겨 선 채 낙후와 정체의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오랫동안 중앙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채 새로운 시대발전에 발맞춘 성장 활력을 찾지 못하고, 모든 것을 흡수해 온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효과 속에서 끊임없이 유출되는 인구와 자본 등으로 인하여 그 나마 남아있던 발전 잠재력도 거의 고갈한 상태에 처해 있다. 각종

사회간접자본과 하부구조시설이 여전히 부족하고 부실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여타 지역과의 사회경제적 격차도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또한 전라지역의 주변적 위치성과 관련이 있다고 진단된다.

물론 이러한 원격성은 다른 한편에서 전라지역에 문화적으로 독특한 성격을 부여해 왔다. 전라지역의 언어, 민요, 민속, 민예, 민가 등에서 우리 국토공간의 타 지역에 비해 그 특색이 뚜렷하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동시에, 그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따라서 전라지역은 대외적으로 타 지역과 구별되는 하나의 총체적인 문화공동체이자 대내적으로 굳건한 정체성을 견지하고 있는 개성 있는 생활공간이자 인문적 실체(human entity)임에 틀림없다.

행정구역상 광주광역시와 전라 남 · 북도를 함께 포용하고 있는 전라지역은 한반도의 서남부에 자리 잡고 있어 오늘날 종종 서남권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주지하다시피 전라라는 말은 북도의 전주와 남도의 나주에서 그 첫 자를 빌어 만든 말이다. 따라서 "온(全) 고을에 비단(羅)을 깔아 놓은 듯 아름답다"는 뜻으로, 이는 수려한 산수와 누우런 황금 벌판의 자연경관을 비유한 것이다. 전라지역은 조선시대부터 호남(湖南)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도 불리어 왔다. 이는 공주에서는 웅진강, 부여에서는 백마강으로 불리는 금강의 옛 이름인 호강(湖江)의 남쪽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삼한시대에 축조된 김제 벽골제나 제천 의림지 또는 눌제와 황등제 등의 큰 저수지의 남쪽을 호남이라고 부르는 논설도 있다. 그렇지만 전라지역의 영역과 지리적 환경에 비추어 볼 때, 금강 남쪽이라는 주장이 옳은 견해로 판단된다.

따라서 금강하류는 오래 전부터 충청도와 이루는 전라지역의 북쪽 경계였다. 그리고 전라지역은 동쪽으로 소백산맥과 섬진강을, 서쪽으로 서해를, 그리고 남쪽으로 남해를 경계로 삼아 왔다. 특히 전라지역은 서남쪽으로 다도해를 끼고 있어 크고 작은 수많은 섬들이 산재

[표 1-1] 전라지역의 경 · 위도 상의 위치

구 분	극지점명	수리적 위치
동 단	전남 신안군 흑산면 소흑산리	동경(E) 125°04′39″
서 단	전북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동경(E) 127°54′40″
남 단	전남 완도군 소안면 장수리	북위(N) 33°54′00″
북 단	전북 익산군 용안면 용두리	북위(N) 36°0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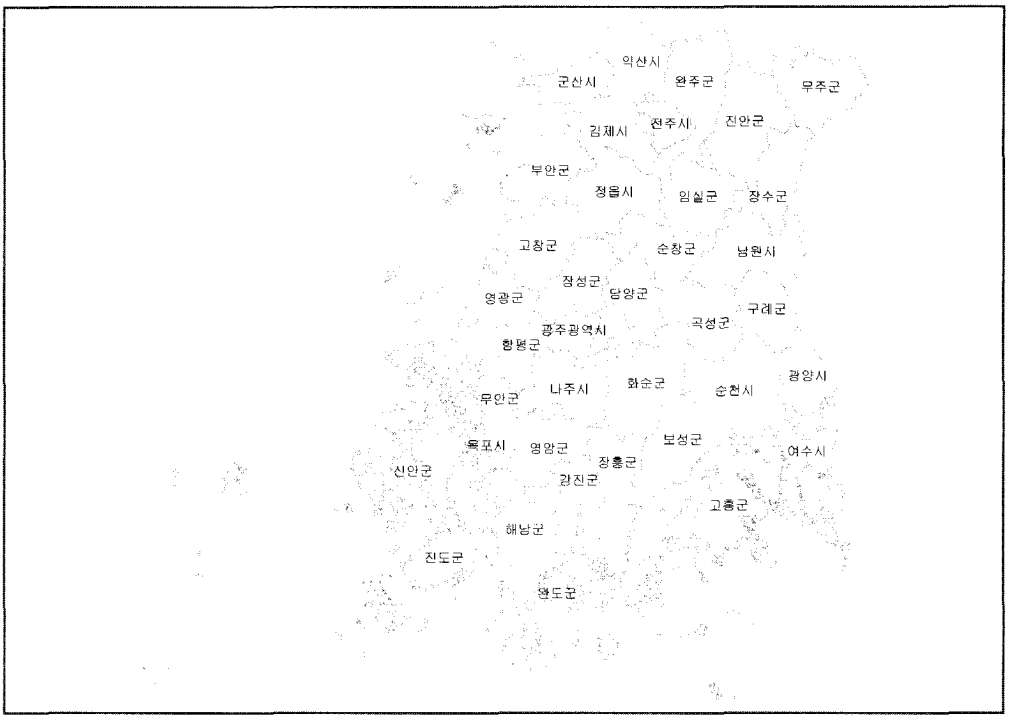
해 있고, 해안선의 출입이 대단히 심하고 복잡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경도와 위도로 나타낸 전라지역의 수리적 위치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이 북위(N) 36°69' ~33°54' 와 동경(E) 125°04' ~127°54' 를 나타내고 있다. 전라지역은 충청남 · 북도와 경상 남 · 북도와 접하고 있다. 북쪽은 충남의 사천군 · 부여군 · 논산군 · 금산군, 충북의 영동군과, 동쪽은 경상북도의 김천시와 경상남도의 거창군 · 함양군 · 산청군 · 하동군 등과 맞닿아 있다.

2) 행정구역의 변천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통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듯이, 전라지역은 옛 마한 땅에 속했으며, 그 뒤에 백제의 땅이 되었다. 백제시대의 경우 오늘날의 전남지방에는 무진의 1주와 추자혜(지금의 담양), 복홀(지금의 보성) 등 12군과 물내혜(지금의 무안), 미동부리(지금의 남평) 등 42현과 탐라의 1군이 있었다. 그리고 전북지방에는 완산(지금의 전주)의 1주와 벽골(지금의 김제), 고사부리(지금의 고부) 등 10군과 두내산(지금의 만경), 모량부리(지금의 고창) 등 35현이 존재하였다. 그러다가 660년(의자왕 20년) 신라의 무열왕이 당나라의 원군을 받아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의 옛 땅에 5도독부를 설치하고 주와 현으로 나누어 다스리게 했다. 뒤이어 신라 제35대 경덕왕은 당나라의 제도를 좇아 전라지역을 전주와 무주로 나누고, 전주의 도읍은 지금의 전주에 두고 무주의 도읍은 지금의 광주에 두어 다스리게 했다. 그 후 891년(진성여왕 5년)에 견훤이 무진주에서 군사를 일으키고 백제의 옛 땅을 차지하면서 수도를 전주로 옮겨 후백제의 왕이 되었다. 후백제시대에 전라지역은 별다른 명칭 없이 40여년에 걸쳐 후백제의 지배 아래 있었다.

후백제를 통일한 고려는 995년(성종 14년)에 전국을 10도로 분할하여 지금의 전남지방을 해양도로 그리고 전북지방을 강남도로 불렀다. 전주, 영주(지금의 고부), 순주(지금의 순창), 마주(지금의 마령) 등의 주와 현은 강남도에 속하였으며, 나주와 광주, 정주(지금의 영광), 승주(지금의 순천), 패주(지금의 보성), 담주(지금의 담양), 낭주(지금의 영암) 등은 해양도에 속하였다. 그 뒤 1018년(현종 9년)에 이르러 이 두 지방을 합쳐 처음으로 전라도로 일컫고, 그 도읍을 전주에 두어 다스렸다.



〈그림 1-2〉 전라지역의 행정구역

조선시대에 들어서서 1407년 태종은 지방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전국의 행정구역을 8도로 나누었는데, 군사행정상 편의를 위하여 전라도를 좌·우로 구분하고 동쪽 산악지대를 좌도로, 서쪽의 평야지대를 우도로 일컬었다. 따라서 전라좌도에는 남원, 담양, 순창, 용담, 창평, 임실, 무주, 곡성, 진안, 옥과, 운봉, 장수, 순천, 낙안, 보성, 능성, 광양, 구례, 흥양, 동복, 화순등 21관이 속하였다. 그리고 전라우도에는 전주, 익산, 김제, 고부, 금산, 진산, 여산, 만경, 임피, 금구, 정읍, 흥덕, 부안, 옥구, 용안, 함열, 고산, 태안, 나주, 광산, 영암, 함평, 고창, 장성, 진원, 무장, 남평, 무안, 장흥, 진도, 강진, 해남, 제주, 대정, 정의 등 36관이 속하였다. 다시 6년 뒤인 1413년(태종 13년)에 일부 지역을 병합하거나 유지 또는 존속시키면서 행정구역을 다시 개편하였는데, 그 내용은 1목(나주목), 5부(순천부, 장흥부, 담양부, 전주부, 남원부) 외에 광주와 순창군 등 14군과 함평과 김제현 등 36현으로 개편하였다. 물론 전라도는 조선 인조 때에는 광남도로 그리고 영조 4년(1728년)에는 전광도로 불

리기도 했다.

1895년(고종 32년)에는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전국을 23부로 나누는 등 행정구역을 대폭적인 개편을 단행하였다. 전라도에는 전주, 남원, 나주, 제주의 4부가 설치되었다. 전주부는 전주, 여산, 고산, 임피, 함열, 옥구, 용안, 익산, 부안, 만경, 금구, 고부, 흥덕, 정읍, 태인, 장성, 고창, 무장, 영광 등 19개 군을 관할하게 되었고, 남원부는 남원, 구례, 운봉, 곡성, 수천, 광양, 임실, 장수, 진안, 담양, 순창, 옥과, 평창, 용담, 부주 등 15개 군을 관할하였다. 한편 나주부는 나주, 해남, 진도, 강진, 장흥, 흥양, 보성, 영암, 함평, 능주, 화순, 동복, 광주, 남평, 낙안 등 16개 군을, 제주부는 제주, 대정, 정의 등 3개 군을 관할하게 되었다.

[표 1-2] 전라지역의 행정구역 현황 (2004)

구 분	지 역	면 적(㎢)	구 분	지 역	면 적(㎢)
전라남도	목표시	47.23	전라남도	신안군	654.16
	여수시	489.68	전라북도	전주시	206.22
	순천시	907.38		군산시	378.19
	나주시	604.05		익산시	506.97
	광양시	447.19		정읍시	692.81
	담양군	455.11		남원시	752.81
	곡성군	547.41		김제시	545.20
	구례군	443.14		완주군	820.92
	고흥군	778.06		진안군	789.09
	보성군	663.37		무주군	631.85
	화순군	786.62		장수군	533.64
	장흥군	618.02		임실군	597.15
	강진군	500.14		순창군	495.70
	해남군	886.73		고창군	606.82
	영암군	565.79		부안군	493.28
	무안군	436.36	광주광역시	동구	48.87
	함평군	392.68		서구	46.76
	장성군	473.80		남구	61.07
	영광군	518.52		남구	121.83
	완도군	392.69		광산구	222.91
	진도군	430.70	계	-	20,597.86

이러다가 바로 이듬해인 1896년에 부제를 폐지하고 도제를 실시함에 따라 한성부를 제외한 전국을 13도로 나누고, 그 아래에 다시 7부 1목 331군을 되었다. 당시 13도는 대체로 종래의 8도에 바탕을 두어 경기, 강원, 황해의 3개 도를 제외한 충청, 경상, 전라, 함경, 평안 5개 도를 남과 북으로 분할한 것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전라도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로 분할되기에 이르렀다. 전라남도는 남원부의 남원, 구례, 운봉, 임실, 장수, 무안, 진안, 용암, 부주의 8개 군을 전라북도에 넘겨주는 대신에 전주부의 장성, 흥덕, 고창, 무장, 영광 등 5개 군을 편입하고 완도군을 신설하여 1부 1목 39군을 관할하게 되었다. 또한 그 이듬해인 1897년에 무장, 고창, 흥덕 등 3개 군을 전라북도에 넘겨줌과 동시에 구례군을 편입하고, 좌수영과 순천군의 율촌, 여수, 삼임, 소과의 4개 면을 합쳐 여수군을 신설하였다.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 변천사에 있어 또 하나의 큰 획은 1914년에 그어졌다. 일제에 의해 군과 면의 통폐합이 이루어졌으며, 오늘날의 각급 행정구역의 명칭과 규모는 이때에 그 기틀이 확립되었다. 다시 말해 도의 관할구역 과 부와 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 대폭 조정되었는데, 특히 이때의 부와 군의 관할구역이 대폭적으로 병합됨으로써, 그 하부의 면과 동 ·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의 대대적인 개편까지 단행되었다는 점에서 가히 전면적인 개편이었다고 할 수 이다. 이때 전국을 13도 12부 220군으로 정비함에 따라 전라남도는 1부 22군을 그리고 전라북도는 1부 27군을 거느리게 되었다.

이후 전라남도는 1935년 10월 부령 125호에 의하여 광주군 광주읍이 부로 승격되어 광주부와 광산군이 분리되고, 1946년 8월 군정 법령 제94호에 의하여 제주군이 도로 승격되어 2부 21군이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대통령령 제161호에 의하여 여수군의 여수읍과 순천군의 순천읍 등이 부로 승격하고, 다시 부가 시로 개칭되면서 전라도는 4시 21군이 되었다. 반면 전라북도는 1931년 전주, 익산, 정주가 읍으로 승격하고, 1935년 전주읍이 부로 승격함에 따라 2부 14군이 되었다. 또한 전라북도는 광복 후인 1947년 이리읍이 부로 승격하고, 1949년에 부가 시로 개칭됨에 따라 전주, 이리, 군산 등 3개 시와 완주, 진안, 금산, 무주, 장수 등 14개 군을 포용하게 되었다.

1979년에는 면 가운데 군청 소재지는 인구와 관계없이 읍으로 승격하였으며, 인구 100만에 이르는 시의 경우 도와 같은 차원에서 내무부의 지휘를 받는 직할시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1986년 11월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하면서 전라남도와 나누어지게 되었으며,

1988년 11월 광주직할시가 송정시와 광산군을 편입하여 행정구역을 확대한 뒤 1995년 광주광역시로 개칭되었다. 그 산하에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가 있다. 전라남도는 현재 목포시 외에 1995년 이후 도농 복합형태의 통합시가 출범함에 따라 신설된 순천시(순천시와 승주군), 나주시(금성시와 나주군), 광양시(동광양시와 광양군), 여수시(여수시와 여천시 · 군) 등 5개 시와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의 17개 군을 관할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등 6개 시를 비롯하여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의 8개 군을 관할하고 있다.

2. 역사와 문화

1) 인구

인구는 어느 한 시점에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총수를 일컫는다. 인간은 사회문화적 존재로서 경제활동과 문화, 사회제도, 사상, 생활양식 등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환경의 변화까지도 일으키는 주체이다. 특히 전통시대에 있어서 인구는 한 사회의 발전을 파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인구는 국방과 관련해 전략적 가치가 높고 경제적 노역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명목의 부세를 책임졌기 때문이다. 인구는 또한 식량문제나 이주, 소득과 고용, 도시화, 취락발달 등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기본 변수가 되기도 한다.

현재로선 조선시대 이전의 전라도의 인구가 어느 정도였으며,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인구의 개략적인 수를 알 수 있을 뿐이다. 특히 8도제가 확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징병과 과세 등을 위하여 호구(戶口) 조사를 시행하면서 조선왕조 시대의 전체 인구와 아울러 전라도의 인구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행정력의 미비와 지방관리의 무능과 부패, 그리고 교통의 미발달 등으로 정확한 호구 및 인구 조사는 불가능했다.

조선 초기에 해당하는 1404년(태종 4년)에 있어 전라도의 전체 인구는 3만 9,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당연히 16세에서 60세에 해당하는 남자들의 인구수로 여성이나 소년, 노비, 유랑인 등이 제외된 수치이다. 전라도의 경우에는 또한 섬이 많아 교통상의 어려움 때문에 누락된 수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조선 중기에 해당하는 1669년(현종 10년)에 있어 전라도의 전체 인구는 약 97만 3,3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십수년 전에 해당하는 1657년(효종 8년)의 인구수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대략 이때부터 여자 인구도 인구조사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후 전라도의 인구는 1717년(숙종 43년)에 약 110만 9,500명, 1786년(정조 10년)에 약 121만 5,200명, 그리고 1807년(순조 7년)에 약 125만 1,000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표 1-3] 조선시대 전라도의 인구

(단위 : 명, 호, %)

구분 / 시대	전국			전라도			전라도 인구비율 (B/A)
	가구수	인구수 (A)	호당 인구	가구수	인구수 (B)	호당 인구	
태종 4년(1404)	153,403	322,746	2.1	15,703	39,151	2.5	12.1
태종 6년(1406)	180,146	270,365	1.5	15,714	39,186	2.5	14.5
인조26년(1648)	441,827	1,521,165	3.4	122,659	431,837	3.5	28.4
효종 8년(1657)	668,737	2,201,098	3.3	159,496	522,033	3.3	23.7
현종10년(1669)	1,313,652	5,018,744	3.8	263,206	973,371	3.7	19.4
숙종 4년(1678)	1,331,446	5,872,217	4.4	256,158	1,000,004	3.9	17.0
숙종43년(1717)	1,560,734	6,788,789	4.4	285,024	1,101,641	3.9	16.2
경종 3년(1723)	1,575,966	6,865,404	4.4	290,797	1,097,846	3.8	16.0
영조 2년(1726)	1,614,598	6,995,400	4.3	281,554	1,105,249	3.9	15.8
영조29년(1753)	1,772,749	7,298,735	4.1	326,924	1,192,950	3.6	16.3
정조 1년(1777)	1,715,371	7,238,522	4.2	315,073	1,189,778	3.8	16.4
정조10년(1786)	1,740,592	7,330,965	4.2	318,417	1,221,624	3.9	16.7
정조13년(1789)	1,752,837	7,403,606	4.2	319,160	1,220,804	3.8	16.5
순조 7년(1807)	1,764,504	7,561,403	4.3	320,990	1,251,069	3.9	16.5
헌종 3년(1837)	1,591,963	6,708,529	4.2	264,102	1,016,744	3.8	15.2
철종 3년(1852)	1,588,875	6,810,206	4.3	272,567	1,068,171	3.9	15.7
고종 1년(1864)	1,703,450	6,828,521	4.0	260,982	996,804	3.8	14.6
광무 8년(1904)	1,419,899	5,928,802	4.2	124,310	490,054	3.9	8.3

자료 : 善生永助, 1925, 朝鮮の人口 ;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1993, 전라남도지 제1권.

를 통해 전라도의 인구가 비교적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에서 전라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해 왔다. 1669년에 전국 인구에서 19.4%를 차지하던 것이 1807년에는 16.5%로 떨어졌다. 1904년(광무 8년)의 전라도 인구는 93만900여 명으로 1807년에 비해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그 이전의 인구통계가 부정확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910년 이후부터는 체계적인 인구조사가 실시되면서 전라도의 인구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일제는 식민통치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이미 한일합병 이전부터 인구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1910년 합병 이후로는 한층 정호가한 호구 및 인구 조사를 시행해왔기 때문이다. 먼저 광주의 인구를 살펴보면, 1912년에 10,432명을 1916년에 10,860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1919년의 인구는 10,713으로 3년 전에 비해 147명 감소하였으나, 1921년의 인구는 12,533명으로 1919년에 비해 1,820명 증가하였다. 1925년 10월에 실시된 국세조사에 의하면 광주의 인구는 23,100명이며, 1930년에는 32,547명으로 파악되었다. 읍에서 부로 승격한 1935년의 광주의 인구는 52,600명이었으며, 5년 후인 1940년의 인구는 60,400명이었다. 1945년 해방 직후 광주의 인구는 83,000명으로 추산된다. 광주의 인구는 20세기에 들어와서 꾸준히 성장해온 것을 알 수 있으나, 해방 전까지 인구 10만명 선은 여전히 넘지 못했다.

1920년 전라도의 인구는 318만명으로 조사되었다. 그 후 전남의 인구는 1925년 352만 6,000명, 1930년 383만 6,000명, 1935년 411만 4,000명, 1940년 419만 8,000명, 그리고 해방 한해 전인 1944년 442만 1,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증가율에 있어서는 1920년에 비해 1944년에는 약 39%의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전국 약 50%가 증가한 것에 비하면 전라도의 인구증가율은 오히려 낮은 편이다. 전국 인구에 대한 전라도 인구의 비율도 1920년 18.4%에서 17.1%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일제의 식민지 공업화 정책에 힘을 기울인 함경도, 평안도, 경기도 등의 인구가 전국의 평균 인구 증가율을 상회한 반면, 전라도 지방은 일제의 산미증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수탈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인구가 1910년, 153만 5,000명, 1915년 182만 6,000명, 1920년 199만 5,000명으로 조사되었다. 1925년에 215만 8,500명으로 기록한 후 연평균 1.5%의 성장

률을 보이며 1935년에 250만 8,300명으로 증가하였다. 해방 직전인 1944년의 전남 인구는 274만 8,000명으로 파악되었다. 일제시대 동안 전남의 인구는 매년 평균 1.7% 정도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 평균 증가율은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 인구에서 전남 인구의 비중은 1920년 11.3%를, 1930년 11.1%, 1940년 10.8%, 그리고 1944년 10.6%로, 큰 변동은 아닐지라도 점차 감소해 왔다. 한편 전북의 인구 변화를 보면, 1920년 136만 9,000명, 1925년 136만 9,000명, 1935년 160만 7,000을 거쳐 1944년 167만 3,000명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전남과 마찬가지로 전국 인구에 대한 비중이 1920년 7.1%에서 1944년 6.5%로 시간에 지남에 따라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내부적으로 국지적인 인구 성장의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평야지대나 도시 지역에서는 인구가 증가한 반면에, 여타 지역에서는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거나 매우 미약한 인구증가율을 보여주었다.

2) 산업활동

근대적 산업구조가 자리 잡기 이전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생활을 영위하던 단계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농업이 국가 및 지역경제의 기본 축이었다. 상업이나 수공업, 수산업 등의 경제활동도 있었으나, 일차적으로 농업 생산력의 뒷받침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문제였다. 무엇보다도 전라도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곡창지대로서, 예로부터 '나라 사람 살이의 근간(湖南國之根本)' 으로 일컬어져 왔다. 또한 이중환은 택리지(擇里志)에서도 전라도에 대하여 "땅이 기름지고 서남쪽은 바다에 면해 있어 생선, 소금, 벼, 깁, 솜, 모시, 닥, 대나무, 귤, 유자 등이 생산 된다"고 적고 있다.

기원전 100년경 마한에서는 파종과 추수 행사가 있었으며, 특히 호남지방의 농경은 이처럼 일찍부터 발달하여 하나의 거대한 농경문화권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후한서 동이전에는 마한의 토지가 비옥하고 벼와 보리 등의 오곡이 생산되고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 백제시대에 와서도 여러 왕들의 권농시책과 도전(稻田)의 개시와 제방축수가 자주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개전개답에 의한 농경지 확장의 노력이 컸던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시대의 경우 12세기 전라도 원율(지금의 담양)에 무인정치가인 최씨의 농장이 있어 옥토의 중

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전라도의 농업경제 상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로서 농경지의 면적, 즉 토지결수로 살펴보면, 조선왕조 초기인 1404년(태종 4년)의 경우 전국의 18.8%를 차지하는 24만결로 기록되고 있다. 임진왜란 직전인 1591년 전국의 토지가 215만 6,000결인데 비해 전라도가 62만결로 28.8%를 차지하여 전라도의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후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폐농지로 인하여 토지결수가 크게 감소한 후,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이다가 뚜렷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여튼 전라도의 경지면적은 전국 경지면적의 5분의 1 수준으로 농업 경제력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라도의 농업상황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도 큰 변동은 없었다. 일제 하에서 일본의 공업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식량 확보를 위하여 산미증식 계획 등이 강력히 시행되었으나, 경지면적 자체는 큰 변동 없이 완만한 증가양상을 보여 왔다.

이처럼 전근대 사회에서 전라도 지방은 농업이 산업경제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았으나, 상업도 오래전부터 나름대로 성장해 오고 있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일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은 상인을 매개로 지역간 교역이 이루어졌다. 백제시대에는 신라처럼 수도에 관설시장을 설치하고 그 시장을 감독하는 기구를 두어 시장

[표 1-4] 조선시대 전라도의 농경지 면적

(단위 : 결, %)

구 분	전 국			전 라 도			비고 (B/A)
	전	답	계 (A)	전	답	계 (B)	
1391년	593,825	514,526	1,108,350	-	-	-	
1404년(태종 4)	664,919	616,807	1,281,726	83,695	157,085	240,780	18.8
1444년(태종 24)	1,190,205	1,104,085	2,294,290	133,912	251,336	385,248	16.8
1591년(선조 24)	874,543	1,281,836	2,156,379	215,611	404,674	620,285	28.8
1646년(인조 24)	843,562	548,557	1,392,120	97,731	183,542	281,273	20.2
1719년(숙종 45)	1,995,130	1,053,260	3,048,391	298,946	281,741	580,687	13.5
1769년(영조 45)	1,142,048	652,867	1,794,915	70,175	172,794	242,969	13.5
1807년(순조 7)	1,185,748	672,616	1,858,365	109,600	205,622	315,222	17.0
1893년(고종 30)	1,126,974	627,404	1,754,378	114,252	197,275	311,527	17.8
1869년(고종 33)	1,407,215	791,082	2,198,297	139,132	240,308	379,440	17.3
1910년(순종 4)	1,588,854	840,988	2,399,842	141,613	198,585	340,198	14.2

자료 :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1993, 전라남도지 제12권.

의 개폐, 질서유지, 분쟁조정, 불법매매 단속, 세금징수, 관수품 조달 등의 업무를 광장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지방에도 가로시와 성읍시가 산재하여 상당히 광범위한 시장체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당시 전라도 지역에도 정기적인 형태의 시장이 개설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잉여물의 교환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에 내려오면, 개성을 비롯하여 평양, 경주, 한성 등지에 몇몇 큰 도시의 상업은 상설점포인 시점을 중심으로, 농촌지방의 상업은 비상설적 장시(場市)를 중심으로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라도의 경우에는 선상(船商)의 활동도 있었다.

조선시대의 상업은 흔히 중앙의 시전과 지방의 장시 또는 향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시전이 왕실이나 중앙관천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상설시장이라고 한다면, 장시는 흔히 5일장으로 불리는 지방의 정기시장을 일컫는다. 일정 기간마다 열리는 장시의 발달은 분업의 전개와 농업 생산력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다. 지역간의 생산특화와 잉여산물의 존재를 통해 교환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장시가 최초로 발생한 곳이 전라도 무안이라는 사실도 이런 점에 우연한 일은 아니다. 16세기 들어 전국적으로 개설되고 있던 전시는 두 차례의 전란을 거친 뒤 급격히 발전하는데, 특히 숙종대(1674~1720)에 이르러 종래의 장시의 금지에서 장세 징수로 정책이 바뀌자 장시는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에 따르면, 당시 전국에 1,061개의 정기시장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가운데 전라도에만 214개의 정기시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임원경제지 등을 통해 당시 장시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된 물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전라도에서 이루어진 상품유통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거래된 물품은 쌀이었다. 그 다음으로 면포가 많은 장시에서 교환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대동법 실시이후 쌀과 면포가 물품화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과일과 해산물 따위도 거래 지역이 비교적 많았을 뿐만 아니라, 물품의 종류도 대단히 다양한데, 이는 긴 해안선을 끼고 있는 전라지역의 자연적 조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생활용구나 농기구(죽물, 목물, 철물 등) 및 직물류(마포, 저포, 명주 등)가 교환되고 있었다. 이것은 곧 17세기 이후 활발히 전개된 전라지역의 분업

관계가 장시에서 거래된 물품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라도의 공업은 고대 삼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마한의 우수한 직조기술은 이미 일본에까지 알려져 있었으며, 백제시대에도 무기, 장식품, 철전, 귀금속 등을 생산하는 금속공업이 크게 발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일신라시대를 거치면서 수공업은 지방분업이 형성되고, 전업도 출현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수공업이 더욱 발달하여 관영수공업, 사영수공업, 농민수공업의 생산조직으로 비교적 체계적인 면을 갖추게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특수한 물품을 생산하여 공납하는 소(所)를 중심으로 하여 수공업이 발달하였는데, 예를 들어 전라남도의 경우 63개의 소가 있었으며, 장흥(13), 광양(13), 강진(8), 순천(6) 등지에 많았다.

조선시대의 수공업은 고려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종전의 향 · 소 · 부곡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에 관영수공업과 민간수공업이 중심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관영수공업에 종사하는 수공업자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중앙의 경우 경공장이라고 했고, 지방관청에 예속된 경우는 외공장이라고 불렀다. 1471년 경국대전에는 경공경의 종류를 129종으로 종사자가 2,841명이었으며, 외공장의 종류는 27종으로 종사자가 3,656명에 달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전라도의 외공장은 종이 만드는 기술을 지닌 지장(紙匠) 등을 비롯하여 총 775명이 종사하고 있었다.

16세기말 임진왜란을 겪은 후 관영수공업이 점차 붕괴되기 시작하여, 국가의 공업적 수요도 사영수공업에 의존하게 된다. 관영수공업의 쇠퇴는 상대적으로 수공업자들의 집단거주지인 점촌(店村)의 형성을 촉진하였다. 농촌수공업의 발전을 배경으로 17세기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점촌은 18세기에 들어오면서 더욱 더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전라도의 점촌의 사례를 보면, 변산지방에 사철점촌이 있었고, 영암은 참빗의 새로운 생산지역으로 발돋움하였다.

한편, 서해와 남해를 면하고 있는 전라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과거부터 수산업이 생업의 일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은 연안의 굴곡이 심하여 해안선이 길고 간만의 차이가 크며, 크고 작은 도서가 산재하고 또한 광활한 간석지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다도해라고 불리는 연안해역은 어류와 해조류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입지적 조건을 갖고 있다. 물론 이러한 천혜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산업과 더불어 전라

도의 수산업도 어업을 천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 한반도 연안 어장과 내수면 어장을 확보하게 된 조선 초기부터 전라도에서는 수산물이 다양하게 생산되었다. 당시 전라도 지방에서 어획된 수산자원은 어류, 패류, 해조류 등 비교적 다양하고 여러 가지의 가공품도 산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주요 어종으로는 은어, 상어, 조기, 숭어, 청어, 병어, 홍어, 민어, 전어, 복어 등이며, 패류로는 굴, 전복, 홍합, 소라, 바지락, 근죽합 등이며, 갑각류로는 대하, 쌀새우, 중하, 곤쟁이, 게 등이 있었다.

일제시대에 와서 수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은 괄목하게 이루어졌는데, 안강망과 수조망을 비롯하여 각종 어망과 기선이 소개되어 어획량이 비약적으로 신장하였다. 당시 전라도의 주요 어장으로는 청산도, 거문도, 흑산도, 안도, 위도, 완도, 추자도, 소안도 등의 어장과 해남, 여수, 광양, 법성포, 고흥, 영암, 강진, 무안, 진도 등의 연해 어장이 있었다. 또한 한국 전래의 양식업은 김 양식 위주였으나, 1910년대 이후 내수면과 연안에서 어류 및 패류 양식도 행해지게 되었다.

3) 교통 및 통신체계

특정 지역의 교통발달 수준은 그 사회의 발전 정도를 반영하는데, 교통이 발달할수록 지역간 분업이 촉진되며, 생산 · 분배 ·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자원의 개발과 산업화가 촉진된다. 지역 간 이동의 정례화 됨에 따라 교통로와 교통망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교통로는 정치 ·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성쇠를 겪지만, 한번 개통된 교통로는 지리적 관성에 의해 오랫동안 존속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개화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육로교통은 도성과 외방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도성도로는 크게 대로(56척), 중로(16척), 소로(11척)의 셋으로 구성되었다. 외방도로는 6대 간선으로 나뉘었는데, 위주로, 경흥로, 평해로, 동래로, 제주로, 강화로가 그것이며 부수적으로 통영로, 충청수영로 등의 지선도 요소 요소에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경우 한성에서 과천 – 수원 – 진위 – 직산 – 천안 – 공주 – 노성 – 은율 – 여산 – 삼례 – 전주 – 임실 – 남원 – 운봉 – 함양 – 산청 – 단성 – 진주 등으로 연결된 통영로와 한성에서 삼례까지 통영로와 같으며 뒤이어 금구 – 태인 – 정읍 – 장성 – 나주 – 영암 – 해남 – 제주로

이어지는 제주로가 전라도를 통과하였다.

도로는 기본적으로 전쟁, 무역, 개척 등 여러 계기로 형성 · 유지 ·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체계적인 도로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역제를 들 수 있다. 신라시대부터 성립한 역은 공문의 전달, 관물의 수송, 공무를 띤 출장관리의 왕래와 숙박 등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제도였다. 고려시대의 경우 수도인 개경과 남경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망이 뻗어 있었는데, 대체로 개경이북 지역은 개경을 기점으로 간선도로가 이루어져 있고, 개경이남 지역은 반드시 남경을 거쳐 각 지방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전국이 22개 역도로 나누어진 고려시대의 경우 전라북도에는 전공주도에 삼례, 양제, 재곡, 채평, 내재, 무원, 거산, 천원, 소안, 진현 등 21개 역이 있었고, 산남도에 반석, 축산, 단령, 소남 등 25개 역이, 그리고 남원도에 통도, 조원, 인월 등 12개 역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도로망의 정비와 함께 역원제도 전래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확립되는데, 경국대전에 의하면 역은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는 간선도로변에 주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각 역간의 거리는 대체로 30리를 원칙으로 하였다. 이들 역은 수개를 하나의 역도로 편성하여 찰방 또는 역승의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했다. 당시 전라도의 역제는 6도 59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중 현재의 전남지방의 해당하는 역도는 청암도, 경양도, 벽사도 등이었고, 전북지방에 해당하는 역도는 삼례도, 제원도, 오수도 등이었다.

우리나라에 있어 근대적인 도로정책은 1895년 당시 내무아문에서 각 도읍에 시달된 88개조의 훈시에서 비롯된다. 광무융희 연간에 이르러 그 당시 5,5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투입하여 약 800km이 이르는 전국의 간선도로를 건설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전남지방의 광주-목포간 도로였다. 당시의 사정이 비추어 보아 두 지역간에 인적, 물적 교류의 대규모 확대를 초래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전라도의 도로망은 1904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일제가 그들의 식민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로상태의 개선이라는 명목아래 1906년부터 7개년 사업으로 전국의 주요 도로를 개수한 이른바 도로개수계획으로 또 한번의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07년에 시작된 제1기 사업시 노폭 7m, 연장 46.7km의 전주-군산선이, 또 1910년에는 전주-여수선의 일부가 신작로라는 이름으로 신설되었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교통체계에 커다란 전환점은 일제에 의한 철도의 부설이었다. 전라도

의 철도는 1912년 호남선의 이리 이북과 군산선이 개통됨으로써 최초가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대전에서 연산, 강경, 이리, 군산, 이리, 김제, 정읍, 송정리를 연결하는 호남선은 다른 노선에 비해 정치적, 군사적 중요성이 덜한 반면, 경제적 효과성이 큰 것으로 1914년에 완공되었다. 그 뒤 이리와 곡성, 그리고 여수를 잇는 전라선(198.8km)도 개통되면서 본격적인 철도교통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과거 봉수는 변방에서 군사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앙으로 통보하는 중요한 통신수단이었다. 우리나라의 봉화신호의 기원은 삼국시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봉화신호를 조직적으로 제도화하여 국방에 이용한 것은 고려 18대 예종(1149년)이었다. 조선에 이르러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북방의 오랑캐와 남방의 왜구를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 조선시대에 전국의 봉수는 5개의 거준(炬準)으로 구분되었는데, 제1거준은 함경도 방면으로부터의 봉화, 제2거준은 경상도 방면으로부터의 봉화, 제3거준은 평안도 만포진으로부터의 봉화, 제4거준은 평안도 길주 · 고정주로부터의 봉화, 그리고 본도에 해당하는 제5거준은 전라도 방면으로부터의 봉화였는데, 순천에서 시발하여 경성 목멱산(남산)에 이르는 것이었다.

전통시대에는 도로교통이 크게 발달하지 못한 관계로, 해상 교통로가 국가통치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조운은 전국의 세곡을 일정한 장소에 수납하였다가 이것을 다시 선박에 의하여 수도로 운반하는 것으로, 육상의 도로와 운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던 과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교통체계의 하나였다. 그래서 전국의 중요 수로 연변에는 각지의 조세를 징수하여 운반하는 조창이 설치되었다. 전국에 13개 조창이 설치되어 조운제가 정비된 것은 고려의 성종 때의 일이지만, 고려 초기에 이미 세곡은 조운을 통하여 운반되고 있었다. 고려시대의 조창은 개경 이남에 12개 소 그리고 그 이북에 1개 소가 설치되었는데, 오늘날 전북지방의 조창은 부안의 안흥창과 옥구의 금강하구에 있었던 진성창을 들 수 있으며, 전남지방에는 해릉창(나주), 부용창(영광), 장흥창(영암), 해룡창(승평) 등을 들 수 있다.

조선시대 전라의 조운 중심지는 용안 덕성창으로 함열에 있었는데, 인조 때에는 성당포로 옮겨 성당창이 되었다. 덕성창은 함열, 용안, 전주, 임파, 김제, 금구, 익산, 만경, 여산, 금산, 진산, 태인, 옥구, 고산, 용담 등지에서 거둔 세곡을 저장하였다. 또한 나주의 영산창에

는 광주에서 광양에 이르는 전남의 동남부 16개 고을의 전세를 모으는 창고가 있었다. 법성포창은 영광, 흥덕, 부안, 함평, 무장, 장성, 정읍, 고부, 고창, 옥과, 담양, 곡성, 창평, 순창 등 15개 고을의 전세를 모았다.

4) 정주취락

한 국가의 영역인 국토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물자와 정보의 흐름과 교환을 통해 교통망과 더불어 그 교차점에 결절을 형성하여, 이것이 더욱 발전하여 복잡한 계층체계를 이루게 된다. 인간의 정주취락인 도시와 촌락은 이러한 국토구조에 있어 결절이자 배후지를 거느리고 있는 중심지이며,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수직적 · 수평적 위계질서를 지니고 있다. 이렇듯 정주체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될 뿐만 아니라,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지만 대단히 영속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주취락의 기원과 발달, 기능과 입지, 형태 등은 아직 자세히 밝혀져 있지 않아,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다만 과거 우리의 정주취락의 출현과 발달은 고대국가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라도의 도시 발생은 삼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한에서는 일찍부터 철기를 도입하여 이용하였으므로 벼농사뿐만 아니라 잠업과 면작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도시의 발생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나, 생활터전은 부족을 중심으로 한 촌락 중심이었기 때문에 도시 같은 정주취락의 형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전라지역의 도시발달은 삼국시대에 들어서서 백제가 이 지역에서 마한과 병합하고 지방에 정방제(正方制)를 실시함으로써 그 형태를 점차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제왕국으로 출발한 백제는 왕권을 강화하면서 전국을 5방으로 나누어 지방장관인 방령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다. 수도와 함께 이들 지방 소도시에는 시장이 형성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성곽을 쌓아 군대가 주둔하였으므로, 당시의 도시는 행정과 군사의 중심지로 기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신라는 행정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685년(신문왕 5년)에는 전국을 9주로 나누고 그 밑에 군과 현을 설치하는 동시에, 주와는 별도로 독립된 일종의 특별 행정구역인 오경도 두었다. 전라도에서는 완산주와 무주와 함께 오경의 하나로 남원경(지금의 남원)을 설

치하였다. 바로 이 완산주와 무주, 그리고 남원경은 군사와 행정 측면에서 지역의 중심지로서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보여 진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특히 현종 9년(1018년)에 오도양계제를 확립하고, 오도양계제를 바탕으로 4경 4도호부 8목 56주군 28진 20현을 두었다. 목은 군사 및 행정의 중심지로서 중세시대 도시형성의 계기가 되었는데, 대부분 성벽으로 둘러쌓아 도회지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당시 강남도라 불리던 전북과 해양도라 불리던 전남의 양도를 합하여 전라도라 명명하고 그 안찰사를 전주에 두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지역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전제군주국가를 세우고 군현제를 실시하여 중앙집권적 봉건체제를 확립하였다. 태종 13년(1413년)에 행정구역을 8도제로 정비하며, 그 아래에 부, 목, 대도호부, 도호부, 군, 현 등 약 330개의 행정구역을 두었다. 부, 목, 대도호부는 한양 주변의 요진과 역사적 지방도시(즉 군사적, 행정적 요지)에 설치되었다. 도호부, 군, 현의 소재지는 도읍이자 군 · 현의 청사가 소재하는 이른바 읍내는 정보의 집적지로서, 대개 5일장이 서는 상업 중심지였다. 주민의 상당수가 비농업적 또는 반농업적 직업인으로 부분적으로 도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전북지방의 경우 전주부와 남원도호부는 당시에 이미 꽤 큰 도읍이었고, 옥구, 임파, 함열, 부안, 태인, 고산, 여산, 무장, 순창, 장수, 무주, 흥덕 등도 큰 고을에 속하였다. 반면 전남지방의 경우에는 광주, 능주, 나주 등이 20목의 하나로서 행정기관인 동헌을 비롯하여 향교와 시장 등을 지닌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기반이 농업이었으므로 도회적 인구는 소규모였으리라 짐작된다. 장흥, 담양, 순천, 장성이 도호부로서, 낙안, 진도, 영암, 영광, 보성이 군으로서, 그리고 창평, 해남, 강진, 함평, 남평, 무안, 구례, 곡성, 광양, 화순, 동복, 옥과가 현으로서 지역 행정의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여수(좌수영)와 우수영(해남현)은 지역 해군사령관 격인 수군절도사(수사)가 있었던 군사적 기지이며, 법성포와 영산포는 조세용 곡물을 서울로 실어 나르기까지 쌓아 두었던 조운창이 설치된 항구로서 크게 번성하였다. 갑오경장기인 1896년에 종전의 23부제를 폐지하고 13도제가 채택되었다. 과거의 전라도를 전라 남 · 북도로 분할하고 여러 개의 군을 두었다. 이들 군청 소재지들이 도읍의 모습을 지닌 지역 중심지로 등장하게 되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문호가 개방하자 서구의 문물이 물밀 듯이 들어와 근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도회지의 모습도 커다란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의 금융기관이 진출하여 상업, 광업, 공업, 교통, 해운 등의 각 분야에서 특권을 확보하고, 항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는 일본인 상가가 형성되어 도시구조에 일대 변화를 일으켰다. 식민지 전반기는 우리나라 근대 도시의 맹아단계로서 전남에서는 1987년 개항된 목포에 항만시설이 건설되면서 나주평야의 비옥한 곡창지대에서 생산된 쌀의 집산지이자 수출항으로서 또한 부두를 중심으로 일본인 상가와 거류지가 확장되면서 크게 성장하였다. 광주는 주변 배후지를 기반으로 하여 호남지방의 중심지로서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담양, 순천, 강진, 병영, 목포, 영광, 여수도 3,000명 이상의 도시로 발전하였다. 전북지방의 경우에는 오랜 역사를 두고 발전해 온 전주보다 군산이 먼저 부로 승격하였는데, 이는 금강 입구에 위치하여 대일 미곡 수출항으로서 1899년 개항된 이래 일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축항과 시가지 조성에 따른 근대적 항만도시로 발전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전라도에서는 과거로부터 발전해 온 군사적, 행정적 지방중심지 위주의 도읍 발달에서 근대적 교통도시, 항만도시, 또는 산업도시로의 발달이 특히 경제적, 교통적 요인에 의해서 유도되기 시작했다.

일제 식민지의 후반기에는 무엇보다도 근대 공업이 성립함에 따라 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 북부지방의 도시가 성장하고, 호남의 중소 도시들은 정체 하였다. 하지만 1934년 일제에 의해 이른바 시가지계획령에 따라 이를테면 1938년에는 광주와 목표, 그리고 1939년에는 여수가 근대 도시로 변모하였다. 또한 전북의 이리와 김제는 지속적인 발전을 보여주는데, 김제의 성장은 미곡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서 일인 농장주와 각종 창고와 도정시설이 집중하는 집산지로서 호남선 철도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 역으로서 급격히 확장된 데 그 원인이 있었다. 이리는 농산물 생산지를 배후지로 하고 호남선과 전라선, 그리고 군산선이 교차하는 철도 교통의 요지로 이용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3. 지역의 대외적 위상과 그 변화

지난 1960년대 이후 우리의 국토공간은 대단히 짧은 시간동안 과거 수백 년 동안의 누적

적인 변화보다 훨씬 더 심대한 변화를 겪어 왔다. 우리 현대사가 경험한 이러한 변동은 무엇보다도 국토의 분단과 저발전이라는 역사적 유산 위에 생존과 새로운 시대적 도전을 이겨내기 위한 우리 민족의 끈질긴 노력의 산물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인 국토공간의 모양새와 짜임새, 그리고 그 질적 품격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또한 지난 40여 년 간의 한국 사회의 발전은 국토라는 사회공간체계의 구성요소인 여러 지역의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전개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생업, 생락의 공간인 개별 지역 혹은 권역은 사회발전과 국토공간의 변동을 수용하거나 대응하는 한편으로 여타 지역 및 권역과 때로는 의존하고 때로는 경쟁해 왔다.

전체 국토공간 안에서 개별 지역의 변동과 발전 양상은 일차적으로 자연조건과 생태환경,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어 온 문화전통과 생활양식 등 독특한 독자적 영역성에 의해 규정되지만, 또 한편으로 여타 단위 지역들과 맺고 있는 기능적 통합과 분화 관계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도 한다. 특히 후자의 기능관계에서 연유하는 단위 지역 혹은 개별 권역의 대외적 위상, 다시 말해 한 국가 내에서 특정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地域勢)은 지역 간의 수평적, 수직적 관계로 파악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위상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닌, 국토공간의 의미와 그에 대한 지각, 국토공간의 이용패턴, 국토공간상의 발전 중심 등의 변화에 의해 끊임없이 바뀌어 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라지역은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이른바 호남의 푸대접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국토개발의 사각지대였다.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이끈 주된 발전 동력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내부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지 못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중심에서 밀려났다. 또한 농업 위주의 취약한 산업구조와 발전에 장애가 되는 도서의 불리한 여건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저발전의 악순환에 처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양대 거점인 수도권 지역과 대구 내륙 및 동남 해안권 지역과 지리적 원격성으로 인하여 주변화 과정을 겪으면서 낙후와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라지역은 그 동안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역기능이 가장 적은 곳이자, 오염이 덜 된 자연환경과 원형이 그 어느 지역보다 잘 보존되어온 풍부한 문화유산을 지닌 아름다운 고장이다. 더군다나 21세기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대륙과의 교류가 수월하고, 해

양을 통한 세계로의 진출에 대단히 유리한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 미래의 발전 잠재력은 무한한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개발전략을 뒷받침하고 꾸준히 추진해 나갈 때, 전라지역은 21세기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능동공간으로서 대외적 위상을 점차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면적과 인구

전라지역의 전체 면적은 20,597.86 ㎢로 남한 전체 면적인 99,912.95 ㎢의 약 20.7%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전라남도가 12,045.83 ㎢로 전라도 전체 면적의 58.5%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가 8,050.65 ㎢로 전체의 39.1%, 광주광역시가 501.38 ㎢로 전라도 전체 면적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권역별로 비교해 볼 때, 전라지역의 면적은 수도권과 경상도에는 미치지 못하나, 충청도와 강원도, 그리고 제주도보다는 큰 편이다.

[표 1-5] 전라지역의 면적 (2004년)

구 분		전 국	충 청 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	소계
면적	㎢	99,912.95	501.38	12,045.83	8,050.65	20,597.86
	%	100.0	0.5	12.1	8.1	20.7
인구	인	48,823,837	1,400,683	2,024,422	1,962,867	5,387,972
	%	100.0	2.9	4.1	4.0	11.0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KOSIS(통계 DB).

2004년 현재 전라지역의 전체 인구규모는 539만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4,882만명의 11.0%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의 인구는 140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2.9%를, 전남의 인구는 202만명으로 전국인구의 4.1%, 그리고 전북의 인구는 200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196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비중은 지난 1970년 이래 꾸준히 떨어져 왔다. 1970년 전라지역의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4%였으나, 1980년 16.2%로, 1990년 13.2%로 계속적으로 낮아져 왔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난 30여년 동안

[표 1-6] 전라지역의 인구수와 인구비중 추이

(단위 : 1000명, %)

지역권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전 국	30,882	100.0	37,436	100.0	43,520	100.0	46,136	100.0
수도권	8,730	28.3	13,298	35.5	18,601	42.8	21,354	46.4
충청권	4,262	13.8	4,380	11.7	4,504	10.2	4,680	10.1
호남권	6,319	20.4	6,068	16.2	5,737	13.2	5,240	11.4
영남권	9,376	30.4	11,436	30.5	12,571	28.9	12,861	27.9
강원도	1,837	5.9	1,791	4.8	1,592	3.6	1,487	3.2
제주도	358	1.2	463	1.2	515	1.2	513	1.1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 총조사보고서.

전라지역의 인구 규모는 절대수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도 감소해 왔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 집중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라지역의 인구정착기반이 크게 약화되어 왔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특히 절대수에 있어 강원도를 포함하여 지난 30여년 동안 전라지역의 인구수가 유일하게 감소하였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가운데 여타 권역들의 인구가 적어도 절대수에 있어서는 증가해 왔으나, 전라지역의 인구는 대폭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2) 경제와 산업

전라지역의 인구와 그 성장 동태는 전라지역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위상, 다시 말해 지역세의 일면을 말해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의 절대수와 그 전개양상으로 지역의 경제활동과 그 총량적인 경제력(經濟力)을 충분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지역의 경제력을 파악하는 데에는 다양한 지표를 원용할 수 있으나, 역시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에 근거하여 그 주된 요소들을 도출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최근 경제력의 지역간 비교 분석을 위해 고안된 총량 경제력의 구성지표를 통해

전라지역의 경제력을 검토하고, 이를 전국 및 타 권역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 구성 지표는 생산, 고용, 금융, 노동, 수출, 소득, 재정 등 6개 분야에 걸쳐 지역내 총생산, 제조업 고용자수, 도소매 · 음식 · 숙박업 고용자수, 예금은행 예금액과 대출액, 경제활동인구, 수출액, 국세와 지방세의 수입 등의 7개 지표이다.

[표 1-7] 총량 경제력 구성지표에 따른 전라지역의 비중(2000년)

(단위 : %)

지역권	지역내 총생산*	제조업 고용*	도소매업 고용*	금융거래	경제활동 인구	수출	조세수입	합계
전 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00.0
수도권	46.3	45.3	47.5	66.8	46.4	45.0	70.9	368.2
충청권	10.6	10.1	9.5	5.5	10.0	13.1	5.2	64.0
호남권	7.3	7.3	10.7	6.4	11.2	6.9	4.6	57.9
영남권	35.9	35.9	27.1	18.9	28.1	34.8	17.3	190.6
강원도	2.6	1.2	3.7	1.6	3.1	0.2	1.4	13.8
제주도	1.0	0.2	1.5	0.8	1.3	0.0	0.7	5.5

주 : 1) 인구는 주민등록인구 기준 ; 제조업고용기회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기준 ; 도소매업고용에는 음식숙박업이 포함됨; 금융거래규모는 예금은행 예금액과 대출액의 합계 기준 ; 조세수입은 국세(직접세)와 지방세의 합계 기준임. 2) *는 1999년 자료 기준임.
출처 : 박양호 외(2001).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량 경제력의 5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에는 47%가 분포하는 가운데, 전라지역이 약 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남권의 총량 경제력 27.2%에는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지만, 충청권의 9.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전라지역의 총량 경제력 비중은 전라지역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라지역의 경제력이 경제활동인구와 도소매 고용에서만 인구 비중에 근접할 뿐, 여타 부문에서 인구 비중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 때문이다. 특히 금융거래와 조세수입의 비중은 대단히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전라지역의 경제력은 생산기반에서 뿐만 아니라, 소득 및 금융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대단히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라지역의 산업 및 경제활동은 다대한 변화를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위상 역시 적잖은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 총생산과 취업자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의 경우 지역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어진 생산 총액을 말하는데, 각 지역의 산업활동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그 총액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면, 지역 내 총생산은 낮아진다. 그리고 후자 역시 지역의 산업활동을 나타내는 대표적 경제지수의 하나로, 한 지역의 사업체수의 절대수와 그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총생산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전라지역의 경우 1960년 18.7%에서 1970년 15.6%, 그리고 1980년 10.9%로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다. 1990년 역시 10.9%로 10년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0년 현재 7.3%로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자의 경우에는 전라지역의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27.1%에서 1970년 22.5%로 감소하였다. 1980년에는 전라지역의 비중이 17.8%를, 1990년에는 14.3%를 기록하며, 빠른 속도로 떨어져 왔다. 비록 취업자의 절대수에서 다소 증가하였지만, 그 증가폭에 있어서는 전국 평균을 미치지 못한 결과인 것이다.

뒤이어 은행에 저축된 자금과 대출된 자금을 합한 것으로, 각 지역의 자본의 크기와 흐름을 나타내어 주는 은행 거래액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중심지인 서울 및 그 주변 지역을 지향한 자본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은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행 거래액에서 전라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본적으로 대단히 미약하다. 이러한 비중은 지난 30여년 동안 다소 등락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꾸준히 낮아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자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지역의 금융 활동은 다른 어떤 경제부문에서보다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시간적으로도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을 나타내어 주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인 지방세의 변화 추이를 보면, 역시 수도권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980년대 이후 전국 지방세액의 약 50% 이상이 수도권에서 징수되어, 수도권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방의 경우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으며, 단지 1980년대 이후 부산 및 경남지역의 지방세액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라지역의 경우 1960년 13.1%에서 1970년 9.8%, 1980년 8.3%, 2000년 7.7%를 기록하고 있다. 전라지역의 지방세액의 비중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전라지역의 인구비중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지역

의 잉여자본이 특히 서울로 유출되어 순환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표 1-8] 전라지역의 은행거래액 및 지방세액 비중 추이

(단위 : %)

권 역	은행거래액				지방세액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전 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67.4	69.6	64.3	66.8	48.1	53.3	53.4	57.2
충청권	4.2	3.9	5.1	5.5	9.7	7.2	7.7	8.1
호남권	6.6	5.2	6.4	6.3	13.1	9.8	8.3	7.7
영남권	19.2	19.0	21.7	18.9	25.2	26.7	26.6	23.5
강원도	1.9	1.6	1.7	1.6	2.8	2.0	2.9	2.4
제주도	0.7	0.7	0.8	0.8	1.1	1.0	1.1	1.1

자료 : 통계청, 해당연도, 한국통계연감.

3) 생활여건

전라지역의 사회문화적 여건과 복지 및 삶의 질을 우리나라 전체 및 타 지역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생활여건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부문에 걸친 대표적인 지표들을 원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전라지역의 생활여건은 몇 개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1세기를 맞이하여 다른 어떤 부문보다 생활여건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 지역주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문화 부문의 시설은 주민 차원에서의 개선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가나 지방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확충해야할 것이다. 쾌적한 삶과 생활의 여유를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춤으로써, 전라지역의 내실 있는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9] 전라지역의 주요 사회생활지표

구 분			전국 (A)	전라지역 (B)	전국대비비중 (B/A)
주택	가구수	천가구	13,736	1,783	13.0
	주택수	천호	12,637	1,680	13.3
	주택보급률	%	92	94	-
의료보건	병원수	개소	44,217	4,497	10.2
	병상수	개소	317,411	42,652	13.4
	의사수	인	291,712	32,004	11.0
도시공원	공원수	개소	10,653	1,402	13.2
	공원면적	천㎡	8,991	3,390	37.7
	1인당 공원면적	㎡	185	625	-
도로	도로연장	km	96,318	18,208	18.9
	1인당 도로연장	m	1.98	3.36	-
상수도	상수도보급률	%	88.7	77	-
	시설용량	천톤/일	84,725	2,919	3.4
	급수량	천톤/일	15,544	1,410	9.0
	1인당 1일 급수량	l	358	336	-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인구	천인	37,337	3,365	9.0
	하수도보급률	%	77.8	62.0	-
사회복지문화	생활보호대상자수	인	2,334,568	294,072	12.6
	사회복지 시설수	개소	1,001	180	17.9
교육	대학수	개소	202	30	14.9
	학생수	인	1,825,941	250,764	13.7
	교수수	인	47,356	6,049	12.8

자료 : 통계청, 2003, 지역통계연감.

빈 면



제2장
전라지방 - 자연 및 생태환경

장 호 (전북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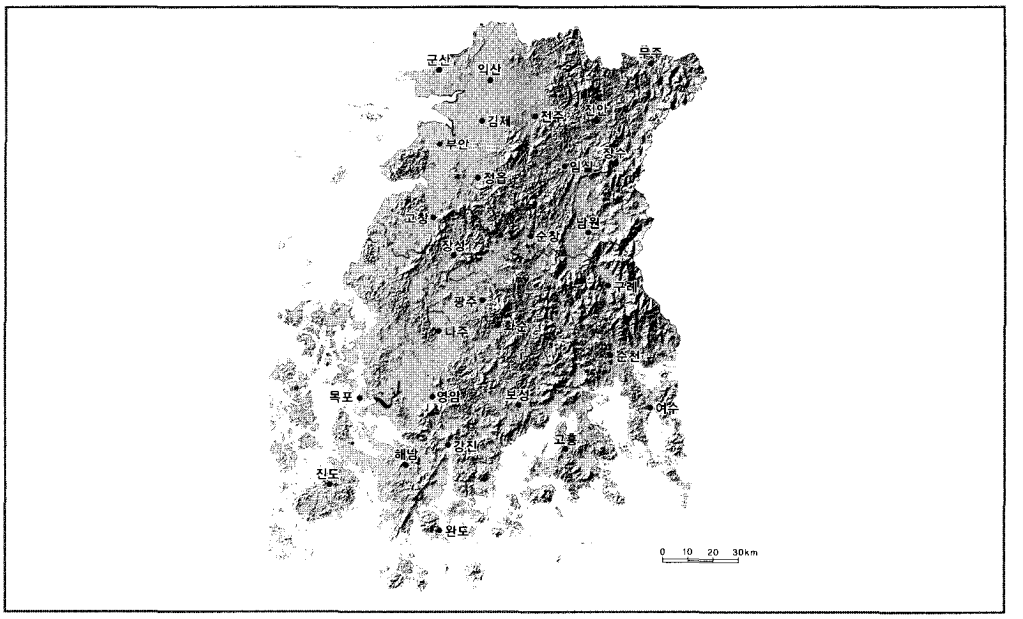
빈 면

제2장 자연 및 생태환경

1. 자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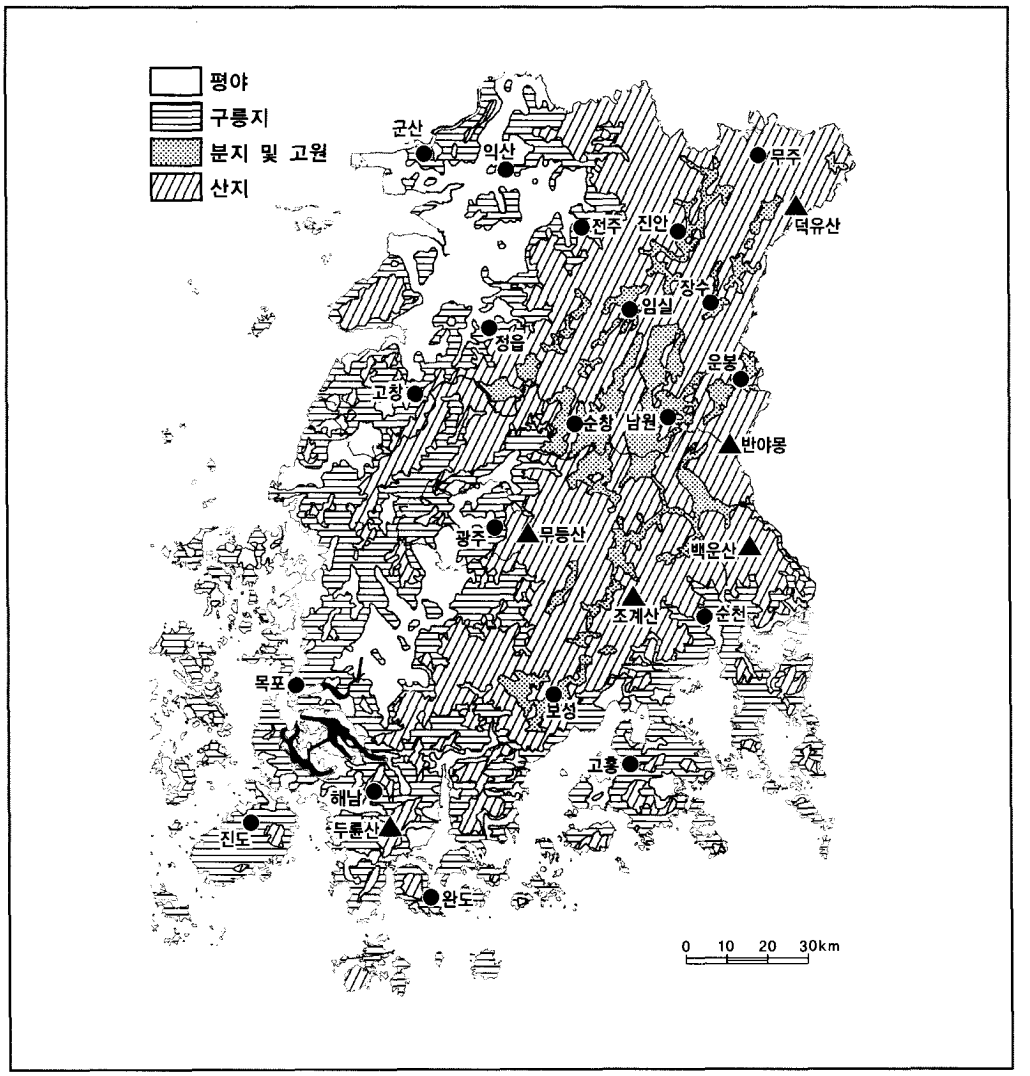
1) 지형과 지질

한반도 남서부를 이루는 호남권은 동부가 노령산맥과 소백산맥 서사면의 산지, 서부가 김제 · 만경평야 및 나주평야 등의 평야로 이루어져 동부가 산악지대, 서부가 평야지대이다(그림 2-1). 이런 호남권 동부 · 서부의 대조적인 지세는 역사적으로는 조선시대 전라우도(右道) 및 좌도(左道)(서울에서 바라 본 좌 · 우로, 대체로 동부산악지대가 전라좌도에 속했음)의 군사조직에, 물자원의 이용에서는 동부 산악지대의 강물을 서부 평야지대로 끌어들인 유역 변경식으로 지역개발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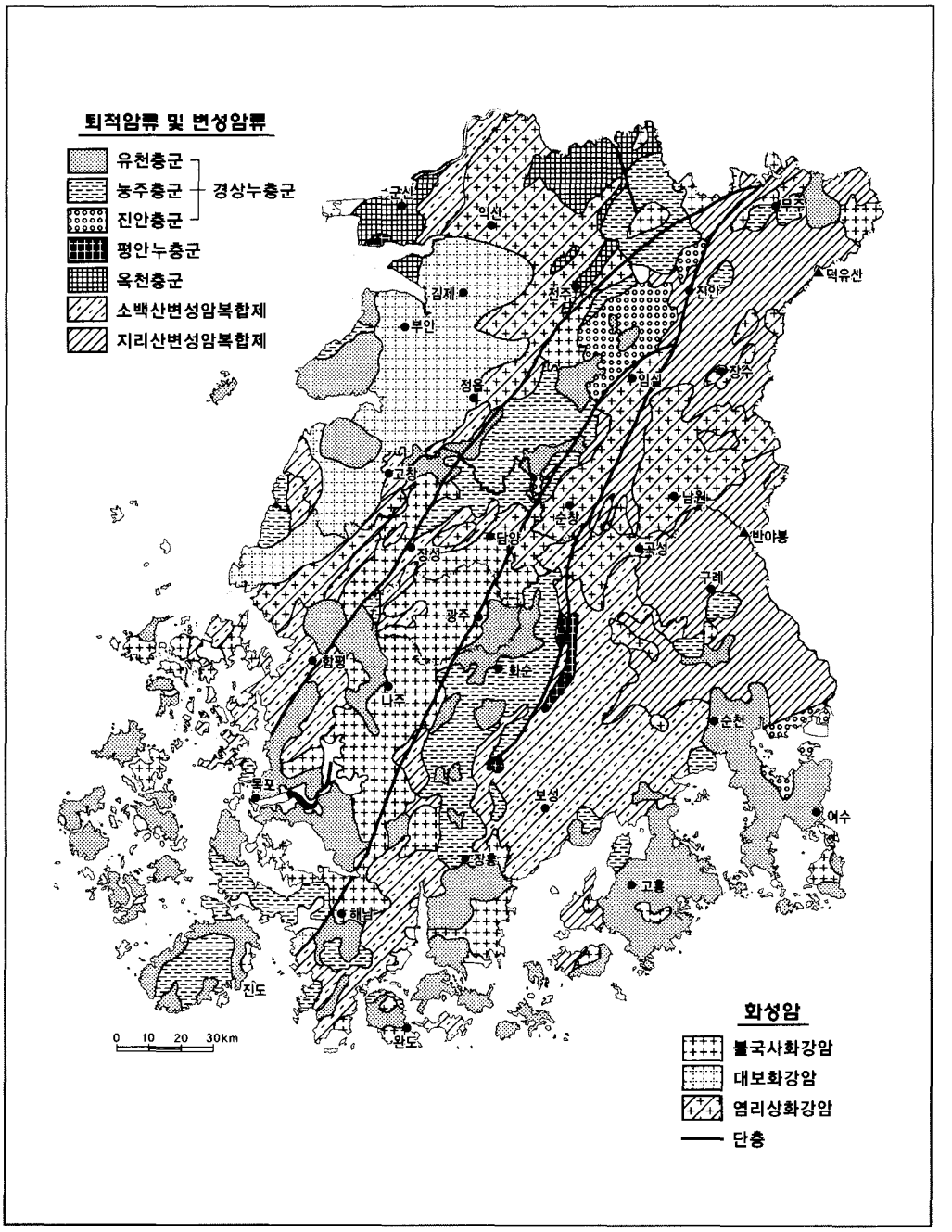


〈그림 2-1〉 호남권의 음영기복도

지형은 산지 및 고원, 구릉지 및 평야, 해안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대지형 구분). 이에 호남권의 대지형을 해발고도 50m 이하 지대를 평야, 50~100m 지대를 구릉지, 100m 이상이지만 경사가 완만하고 평지가 넓은 지대를 산간분지 및 고원, 100m 이상이며 급경사인 지대를 산지로 구분하였다(그림 2-2). 이런 대지형 별로 주요 분포지와 구성 암석 및 지형 특징(그림 2-3 , 표 2-1) 등을 기술한다.



〈그림 2-2〉 호남권의 지형구분도



〈그림 2-3〉 호남권의 지질 개략도

출처 : 권혁재(1995)에서 전북과 전남을 합성함.

[표 2-1] 호남권의 지질계통표

절대연대 (만년전)	지질시대			퇴적층, 퇴적암류 및 변성암류		화성암 및 화산암류	주요 지형 및 분포지
1-	신생대	제4기	현세	충적층, 사구 및 갯벌			충적평야, 해안사구
			플라이스토세	제4기층(미고결 퇴적층)			선상지, 하안단구, 해안단구
200-		제3기					
6,500-	중생대	백악기		경상누층군	유천층군(화산각력암)	불국사 화강암, 유문암, 안산암	월출산지
					능주층군(응회암, 세일)		변산반도, 무등산지
					진안층군(세일,사암,역암)		노령산맥
		쥬라기				대보 화강암 엽리상화강암	구릉, 산간분지
		트라이아스기					
25,000-	고생대	페름기		평안누층군(점판암, 무연탄)			화순탄전
		석탄기					
		데본기					
		사일루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옥천층군(규암, 석회암)			카르스트지형 : 여산
		캄브리아기					
57,000-	원생대			소백산변성암복합체 (규암, 석회암) 지리산변성암복합체 (편마암류)			두륜산지, 보성강연안 산지
							덕유산지, 지리산지
	시생대						

출처 : 전라남도지 제1권 (1993), 전북학연구(I) (1997), 한국의 지질(1999)

(1) 산지지역

호남권의 산지지역은 덕유산지, 지리산지, 노령산맥, 변산반도, 무등산지, 보성강 유역산지, 월출산지, 두륜산지로 구분할 수 있다.

덕유산지는 전북 무주군 및 장수군에 걸친 지대로, 높은 산은 북쪽에서부터 민주지산(1242m) · 대덕산(1290m) · 덕유산(1614m) · 남덕유산(1508m) 등이다. 지리산지는 전북 남원시 동부, 전남 구례군 및 광양시 북부에 이르는 지대로, 덕두산(1149m) · 세걸산(1200m) · 만복대(1420m) · 반야봉(1732m) · 노고단(1507m) · 왕시리봉(1243m) · 백운산(1218m) · 도솔봉(1123m) 등이다. 광양시 북부의 백운산 · 도솔봉 일대의 산지는 구례~하

동 사이의 섬진강 본류에 의해서 지리산지와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두 산지는 구성 암석이 동일하며 산의 능선과 해발고도 등의 산지 지형이 연속성을 나타내고 백운산과 도솔봉 등을 연결한 주능선의 북사면은 섬진강 수계에 속하여(그림 2-15) 백운산 일대를 지리산지로 구분한다.

덕유산지와 지리산지를 이루고 있는 암석은 약 5억 7천만년 이전인 원생대 전기의 퇴적암이 변성된 것(지리산변성암복합체)으로, 대부분이 편마암류이다. 덕유산에서 남덕유산에 이르는 20여 Km의 덕유산지의 남북 주능선, 덕두산~세걸산~만복대에 이르는 지리산지의 북서 주능선에서 노고단 · 반야봉과 경남의 세석 및 천왕봉(1915m)에 이르는 동서 주능선까지의 60여 Km에는 산꼭대기가 완경사인 평정봉(平頂峰)들이 연속적으로 분포한다(장호, 1983a). 이런 평정봉에는 토양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어서 예로부터 토산(土山)으로 불려 왔다.

덕유산지와 지리산지는 남부지방의 중앙부에 분포하면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지대이고 편마암류의 풍화에 기인하는 토양층이 지하수를 많이 함유하여 금강 · 낙동강 · 섬진강 물자원의 주요 공급지(급수원(給水源))가 된다. 또 이들 산지에는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고 북사면은 적설기간도 길어서 무주리조트처럼 스키장으로 개발되기도 하였다.

노령산맥은 충북 영동에서 전남 무안에 이르는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산맥이다. 호남권에 속하는 노령산맥의 산지는 전북 완주군 동부, 진안군, 임실군, 정읍시 동부, 순창군, 고창군 동부와 전남 장성군 동부, 담양군 북부, 함평군 북부, 무안군 동부에 걸친 지대이다. 주요 산은 북쪽부터 운장산(1126m) · 마이산(678m) · 내장산 신선봉(763m) · 방장산(734m) · 태청산(593m) · 불갑산(516m) 등이다.

노령산맥을 이루는 주요 암석은 중생대 백악기(약 1억년~6500만년 전)에 북북동-남남서 방향 단층 사이의 저지(지구(地溝))에 퇴적된 백악기 하부층으로 경상누층군의 신동층군에 대비되는 진안층군(셰일 · 사암 · 역암) 및 백악기 중부층으로 경상누층군의 하양층군에 대비되는 능주층군(셰일 · 응회암)과 백악기 상부층인 화산성 퇴적암인 유천층군(화산각력암)이다. 노령산맥의 지질구조는 주변보다 낮은 지구인데도 불구하고, 노령산맥의 지형은 그 서쪽의 평야지대 보다 높은 산지를 이루고 있다. 이는 백악기 말의 화산 분출로 그 이전의 퇴적암인 진안층군 및 능주층군이 경화(硬化)되어 보존이 양호한데 반해서, 서쪽의 평야지

대 기반 암석인 대보화강암은 풍화에 약하여 차별침식으로 낮아져서 형성되었다. 이런 지형의 역전(逆轉)은 진안층군의 역암으로 이루어진 마이산(678m)이 주변의 편마암으로 이루어진 진안읍(300~400m) 보다 높은 바위산을 이루고 있음에서 잘 관찰된다.

따라서 노령산맥은 지질구조와 차별침식으로 형성된 산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북북동-남남서 방향이지만, 주능선은 굴곡을 나타낸다. 이 주능선을 "산맥"으로 이해하여 "호남정맥"의 일부로 고쳐 부르면서 우리나라의 산맥체계를 조선시대 말의 『산경표(山經表)』 체계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조석필, 1997). 그러나 『산경표』체계의 산줄기는 폭 수 10Km로 분포하는 산맥이 아니라, 선으로 연속된 산능 분수계이다(그림 2-15). 수 10Km의 폭을 나타내는 노령산맥을 서북쪽에서는 만경강과 동진강이, 남동쪽에서는 섬진강과 영산강의 여러 상류 지류들이 파먹어 들면서(두부침식(頭部浸蝕))현재의 분수계(分水界, divide)를 만들고 있다.

변산반도(부안군 서부)는 해안지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해발고도 100~500m의 산지이며, 이런 산지는 남쪽으로 곰소만을 사이에 두고 선운사 주변(고창군 북부)에도 분포한다. 주요 산은 의상봉(508m) · 삼예봉(354m) · 경수산(선운산이라고도 함, 444m) 등이며, 구성 암석은 백악기 말의 화산성 퇴적암인 유천층군(화산각력암)이다.

변산반도는 동쪽이 대보화강암의 풍화로 이루어진 구릉지와 동진강 유역의 충적평야 및 간척지이며 나머지 쪽은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산지이다. 해변(海邊)의 산이라는 의미의 변산에 해발고도 350~500m대의 산봉오리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은 같은 시기에 분출한 화산암체이기 때문이다.

무등산지는 무등산(1187m)을 중심으로 광주광역시 남동부, 전남 화순군 북부 및 나주시 동부에 걸쳐 분포하는 산지 지역이다. 구성암석은 중생대 백악기에 퇴적된 진안층군(셰일 · 사암 · 역암) 및 능주층군(셰일 · 응회암)과 화산성 퇴적암인 유천층군(화산각력암)이다.

무등산의 해발고도 400~450m 이상 지대의 암석들은 백악기 말에 화산 분출과 용암 흐름(유문암 및 안산암의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졌다. 정상부 바로 남쪽에 보이는 완경사 지대인 장불재(800~900m)의 암석은 화산 분출로 퇴적된 화산각력암이며, 정상부의 바위 절벽인 입석대 및 서석대(1000m)는 용암 흐름으로 형성된 안산암으로, 용암이

식으면서 만들어진 각진 기둥 모양의 절리(주상절리(柱狀節理))가 많다. 이런 바위 절벽 밑의 완경사 지대에는 직경 1m 내외의 암괴가 넓게 덮여 있는 곳이 많다. 이는 절벽의 바위틈으로 스며든 수분의 얼고 녹음의 반복으로 바위가 부서져서(동결풍화, frost weathering) 떨어진 암괴들이 쌓인 암괴원(岩塊原, block field)이다. 이는 너덜 또는 너덜겅에 해당하여, 지공너덜(1000m) 및 덕산너덜(480m)처럼 무등산의 해발고도 400m 이상에 넓게 분포한다(赤木, 1971; 박승필, 1996). 암괴원은 쌓인 암괴들 사이에 틈이 많기 때문에 비나 눈 녹은 물이 잘 스며들어 지하수 저장이 양호하며, 이에 따라 산지사면의 침식 방지 및 산사태를 방지하는 등, 중요한 산지지형 자원이다. 암괴원에는 식물이 자라지 못하여 멀리서 바라보면 암흑색을 띠어, 광주 시가지에서 여름에 무등산을 바라보았을 때, 초록의 삼림지대와 대조된다.

보성강은 섬진강 수계의 남서부 지류이다(그림 2-15). 보성강의 집수역(集水域)인 전남 곡성군 남부, 화순군 동부, 순천시 북서부, 보성군 북서부, 장흥군 북동부에 걸친 지대는 산지로, 이를 보성강 유역산지로 구분한다. 화순군 남동부의 일부(동면 · 한천면 · 이양면)는 영산강의 상류인 지석천 유역에 속하나, 이 산지는 분수계를 넘어 보성강 유역산지에 연속되므로 이에 포함시켰다. 이 지역의 높은 산은 조계산(884m) · 백아산(810m) · 제암산(779m) · 존재산(704m) · 화학산(614m) 등이다.

보성강 유역산지를 이루는 암석은 대부분이 편마암류와 규암으로, 원생대 후기의 퇴적암이 변성된 것(소백산변성암복합체)이다. 화순군 남동부인 동면 · 한천면 · 이양면의 암석은 고생대 말의 평안누층군에 속하는 변성퇴적암(주로 점판암)으로, 이 중에 무연탄층이 끼여 있다. 화순군 북동부 산지의 암석은 중생대 백악기의 능주층군에 속하는 자줏빛의 응회암 및 셰일이다. 보성강 상류인 동복천 연안에는 이서면의 명승지인 물염적벽 및 동복적벽(동복댐으로 일부는 수몰됨) 등, 자줏빛 지층으로 이루어진 절벽(적벽(赤壁))이 여러 곳에 있다. 장흥군 북동부 산지의 암석은 백악기 말의 화산 분출(유천층군의 화산각력암)과 용암 흐름(안산암 등)으로 형성된 것들로, 사자산(666m) 및 제암산(779m)의 산정부는 안산암으로 이루어져 탑 모양을 나타낸다.

월출산지는 전남 영암군 영암읍 · 군서면과 강진군 성전면에 걸쳐 최고봉인 천황봉(809m)을 중심으로 직경 10여 Km의 고립된 돔(dome) 모양의 바위산이다. 구성 암석은 담

양-나주-영암을 연결하는 길이 100여 Km에 이르는 백악기 말의 불국사화강암이다. 동일한 화강암인데도 불구하고 월출산지가 독특한 산 모양을 이룬 것은 절리 간격의 차이에 따라 풍화물이 제거된 때문이다. 즉, 월출산지는 풍화에 남은 잔류암체(殘留岩體)로 절리 간격이 넓은 지대는 첨봉(尖峰)을, 좁은 지대는 골짜기를 이루고 있다(『자연사 기행』, 162쪽).

월출산지에는 나마(gnamma) · 타포니(tafoni) 등의 풍화된 구멍, 핵석(核石, core stone)이나 토르(tor) 의 흔들바위 등 다양한 풍화지형이 분포한다(장 호, 1983b; 기근도, 1991). 나마는 산정의 평평한 바위에 파인 솥단지 모양의 구멍으로, 구정봉(九井峰, 705m)에 9개가 있다.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Ⅳ』 영암군 조에 따르면, 구정봉이란 지명은 오목하고 물이 담겨 있는 동이 같은 곳이 아홉 개 있어, 영암(靈岩)이란 지명은그 무게는 비록 천 백인을 동원해도 움직이지 못할 것 같으나, 한 사람이 움직이면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떨어뜨릴 수 없는 동석(動石), 즉 흔들바위가 구정봉 아래 세 개 있어 붙인 것이다.

두륜산지는 전남 남해안의 강진군 도암면에서 해남군 송지면 땅끝(토말(土末))까지 북동-남서 방향으로 40여 Km에 이르는 산지이다. 주요 산은 북쪽부터 만덕산(409m) · 덕용산(400m) · 두륜산(700m) · 대둔산(673m) · 달마산(489m) · 도솔봉(421m) 등으로, 두륜산지는 이 산들의 주능선이 직선으로 연결된 폭 2~3Km의 산맥이다. 이 산지를 이루는 암석은 원생대 후기의 퇴적암이 변성된(소백산변성암복합체) 규암 및 석회암 등으로, 두륜산지가 산맥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은 이 산지가 매우 단단한 광물인 석영을 주성분으로 하는 규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규암을 깨뜨린 규석은 유리 제조의 원료 및 시멘트 제조의 부원료가 되므로, 두륜산지의 도암면 등에는 규석광산들과 유리공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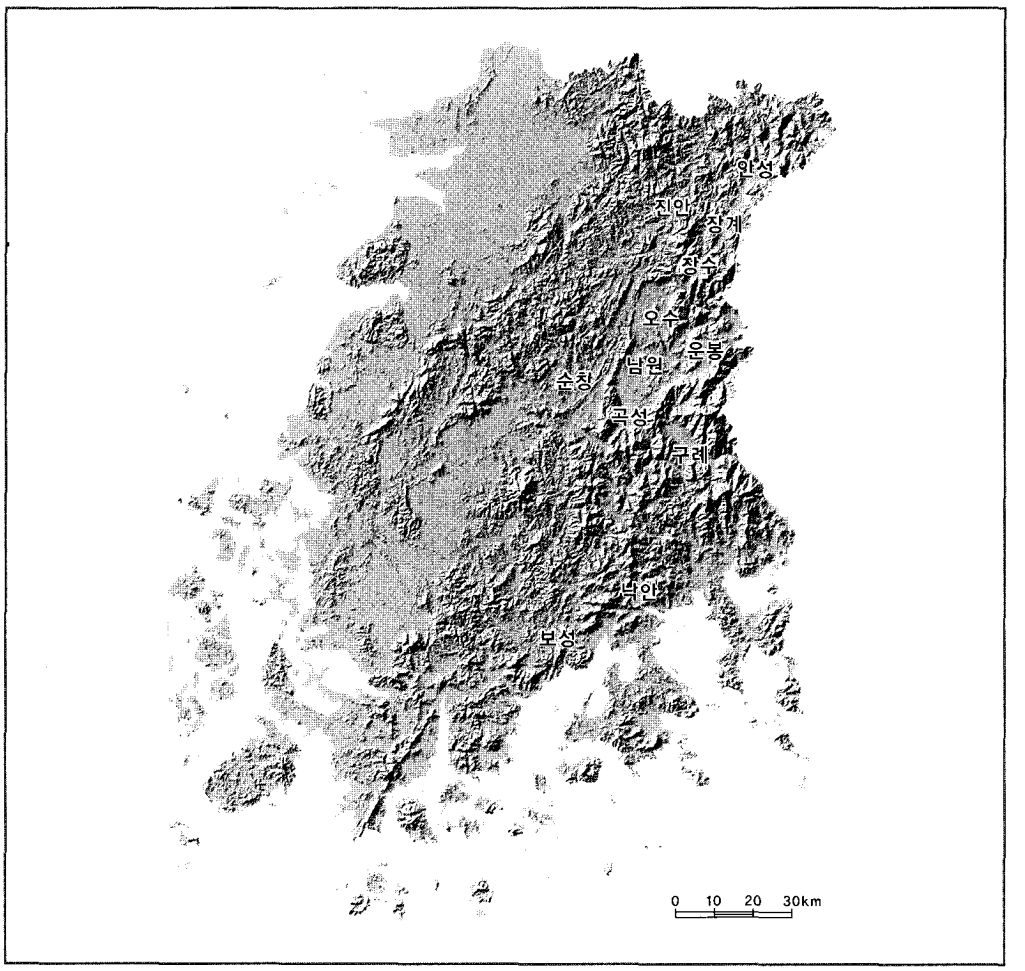
두륜산지는 지질구조에 지형형성작용이 가해져서 만들어진 전형적인 산맥으로, 도암면에서는 석문천(石門川)이 두륜산맥을 가로 지르면서 흘러 도암만에 이른다. 이처럼 강은 산을 넘지는 못하지만, 산지를 침식 · 횡단하기도 한다. 이런 지대의 지명에는 도암 석문이나 전북 임실군의 삼계 석문처럼 석문(石門)이란 보통명사가 첨부된 예가 많다.

(2) 분지 및 고원지역

호남권에서 분지 및 고원지역은 오수-남원-곡성, 구례, 운봉, 안성 · 장계 · 장수, 진안,

순창, 보성, 낙안 등이다(그림 2-4).

오수-남원-곡성분지는 전북 임실군 오수에서 남원시의 대부분을 거쳐 전남 곡성읍에 이르는 지대로, 남북 길이가 50Km에 이른다. 이 분지는 소백산변성암복합체의 규암(서쪽 분지벽) 및 지리산변성암복합체의 편마암류에 넓게 관입한 화강암 저반(底盤, batholith)이 깊게 풍화되어 형성되었다. 분지를 구성하는 지형은 남원시가지에서 곡성읍에 이르는 섬진강 지류인 요천 연안의 충적평야처럼 하천 연안의 충적평야, 구릉, 분지벽 쪽의 산록완사면(장재훈, 1972; 1997; 1998) 등이다.



〈그림 2-4〉 호남권의 분지 및 고원

구례분지는 지리산지의 남서쪽에 인접하여 그 분지저(basin floor)는 구례군을 구성하는 1읍 7개면 중, 산동면(지리산온천 소재지)을 제외한 구례읍, 광의 · 용방 · 마산 · 문척 · 토지 · 간전면에 걸친 지대이다. 섬진강 본류 및 그 지류인 서시천 연안은 좁은 충적평야이며, 동쪽 분지벽(basin wall) 쪽으로 계단 모양으로 높이를 달리하는 완경사면이 넓게 분포한다. 이런 계단 모양의 완경사면들은 선상지(박노식, 1959), 산록완사면(장재훈, 1983), 페디먼트(고의장, 1983)로 기재되었다. 최근에는 이 완경사면들은 동쪽 분지벽의 분수계인 지리산지 서쪽 주능선(종석대(1356m)-노고단(1507m))에서 발원한 산지하천들이 분지저에 이르러 형성시킨 선상지가 단구화한 기후단구로 해석되고 있다(Chang, 1987; Ono, 1990; 장호 · 박희두, 2001).

운봉분지는 지리산지의 북서쪽에 인접하며 분지저의 길이는 동서 8Km, 남북 14Km, 해발고도는 450~500m로 그 서쪽의 남원시가지에 비해서 350m 이상 높은 고원 분지이다. 이런 높이 차이는 요천의 유로인 북동-남서방향의 단층에서 비롯되었다. 구성지형은 낙동강 상류인 광천 연안의 좁은 충적평야, 구릉, 산록완사면, 넓은 기후단구 등이다(고기만, 1993). 운봉분지는 해발고도가 높은 고랭지여서 기후단구면 및 산록완사면과 동쪽의 바래봉(1186m) 일대의 평정봉은 1970년대에 면양목장으로 개발되었다(현재는 축산기술연구소의 종축장이다).

안성 · 장계 · 장수분지는 덕유산지의 서쪽 전북 무주군 안성면, 장수군 장계면 및 계남면, 장수읍에 걸쳐 서로 나누어져서 있으나, 북동-남서의 직선 방향으로 분포한다. 이런 직선상 분포는 지리산변성암복합체에 섬 모양으로 관입한 화강암(그림 2-3)이 분지저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들 분지저의 해발고도가 400~500m인 고원 분지이며, 덕유산지의 최고봉인 향적봉(1614m) 서쪽에 인접한 안성분지에는 제4기의 기후변화로 형성된 여러 면(面, surfaces)의 기후단구가 분포 한다(장 호, 1997, 67쪽; 장호 · 박희두, 2001).

진안읍과 진안군 백운면 및 마령면의 섬진강 상류와 정천면, 상전면, 안천면의 금강 상류 연안에는 해발고도 300m 내외의 넓은 골짜기들이 여러 방향으로 뻗어 있고, 골짜기 주변의 산지도 비고가 작다. 이 지대는 노령산맥 서쪽의 만경평야에 비해서 해발고도가 높은 산간지대여서 고토 분지로(小藤文次郎)가 고원지역(Highland Region)으로 기재한(Koto, 1909의 한반도 종단면 Ⅲ) 후부터 진안고원으로 부르고 있다. 진안고원의 하천연안은 좁은

충적평야이며 이에 인접하여 하안단구 및 개석되어 구릉화된 단구면들이 분포한다(장호, 1980).

순창분지 및 고원은 순창읍과 그 주변의 해발고도 100여m 지대의 분지와 쌍치고원(200~250m) 및 복흥고원(300~350m)이다. 순창분지의 분지저는 소백산변성암복합체의 규암(동쪽 분지벽)과 유천층군의 화산성 퇴적암(서쪽 분지벽) 사이의 화강암 지대이다. 쌍치 및 복흥고원은 순창분지의 서쪽 분지벽을 이루는 노령산맥 내에 분포한다.

보성분지는 보성읍과 보성강 연안을 따라 순천시 주암면(강성렬 · 박승필, 2004)과 곡성군 석곡면까지 연장되며, 좁은 충적평야와 넓은 구릉들로 구성된다. 보성군 겸백면, 복내면 등 보성강 곡류대 연안의 구릉 중에는 하안단구가 개석된 것들이 많다.

낙안분지는 순천시 낙안면(이곳에 낙안읍성 민속마을이 있음)과 보성군 벌교읍에 걸친 지대로, 남해안에 가깝다. 분지저는 충적평야, 구릉, 선상지 및 기후단구로 이루어져 있다(기근도 · 이오석, 2004).

(3) 평야 및 구릉지역

호남권에서 평야 및 구릉지역은 김제 · 만경평야와 그 주변, 나주평야와 그 주변, 불갑천 연안, 탐진강 연안 등이다. 이들 평야는 범람원 등의 충적평야와 하천 하구의 간척지이며, 구릉지를 이루고 있는 암석은 탐진강 연안지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화강암이다.

김제 · 만경평야는 호남평야라고도 부르는 지대이다. 만경강 하류의 만경평야와 동진강 하류의 김제평야는 김제시 북부 등에서 구릉지로 일부 분리되기도 한다. 그러나 군산시 동부, 익산시, 완주군 서부, 김제시, 정읍시 서부, 변산반도를 제외한 부안군에 걸쳐 대부분이 서로 연결되고 있어서(그림 2-2), 합친 이름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평야는 제4기 최종빙기의 해수면 하강으로 형성된 침식곡이 후빙기 이래의 해수면 상승으로 메워진(매적(埋積)) 하곡충적평야(권혁재, 1975; 조화룡, 1987), 만경강 하구와 동진강하구의 광활 및 계화도간척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의 개발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기술 한다.

김제 · 만경평야 및 주변 구릉지의 기반암은 영광 불갑천 연안까지 북동-남서 방향으로 연장되는 중생대 쥬라기의 대보화강암과 옆리상화강암으로, 이 지대에서 평야 및 구릉 분

포는 화강암 분포와 일치한다. 이 구릉지의 지형 종류는 화강암의 심층풍화로 이루어진 적색토의 구릉(소기복 침식면), 미풍화의 화강암체가 노출된 고립된 바위 산(잔류구릉), 단구면이 개석된 구릉 등이다(장호, 1995). 잔류구릉은 익산 황등 돌산의 예처럼 양질의 화강암 채석장이 된다.

이 지역에서 가장 넓은 구릉지대인 고창군(아산 · 무장 · 흥덕 · 대산면)의 구릉지는 197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로 야산개발이 이루어져 수박, 땅콩, 채소 등을 재배하는 밭으로 개간되었다. 익산시 북부 망성면의 구릉지는 1980년대 금강하구둑의 완공으로 관개용수의 양수가 가능해져서 논으로 바뀌었다. 최근의 농공단지는 대부분이 이 구릉지에 조성되었다. 그러나 구릉지 주변은 바로 충적평야여서 구릉지에서 침식된 토양은 곧바로 논을 매몰시킬 수 있는 토사가 되므로, 토양 침식에 유의해야 한다.

나주평야는 담양-광주-나주-영암에 걸쳐 북동-남서 방향으로 100여 Km 길이에 이르는 화강암지대를 관류하는 영산강 연안지대이다. 이 지대는 황용강과의 합류부 일대인 서창들, 남평읍 소재지에서 지석천과의 합류부까지인 산포들, 영산포의 영강들 등, 나주시 동강면 곡천리까지는 대부분이 범람원인 하곡충적평야이다. 동강면과 무안군 몽탄면을 연결하는 몽탄대교 이하의 영산강 연안, 특히 삼포천 및 영암천과의 합류부 일대의 평야는 간척지이다. 이는 영산강하구둑 완공으로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됨에 따라 하류 연안 감조구간(感潮區間)의 간석지를 간척한 것이다.

나주평야 주변의 화강암 구릉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나주시 노안면 · 금천면 · 영산포 · 반남면, 영암군 시종면 · 신북면 · 도포면 · 덕진면 일대에 걸쳐 매우 넓게 분포한다.이런 구릉지는 영암군의 구릉지대의 연구에서 지금부터 약 10만년 전인 최종간빙기의 고온 건조한 기후에서 형성된 페디먼트 평원(pediplain)으로 추정되기도 한다(Akagi, 1974; 赤木祥彦, 1975). 이 구릉지는 화강암의 심층풍화대에 형성된 적색토지대로,나주배의 주산지인 금천면과 같이 과수원으로 이용되는 곳이 많다.

불갑천 연안의 평야는 영광군 불갑면의 불갑저수지에서 염산면 및 백수면 접경부의 하구까지 20여 Km길이의 분포하며, 대부분이 조석(潮汐)의 영향으로 형성된 임해충적평야로, 하구부는 간척지와 염전으로 개발되었다(강대균, 2004). 불갑천 연안 평야의 남쪽인 군남면 · 염산면 일대는 화강암 구릉지이다.

장흥군 유치면 및 부산면, 장흥읍을 관류한 후, 강진군 강진읍과 군동면 접경부의 도암만으로 유입하는 탐진강 연안에 좁은 평야 및 구릉지가 분포한다. 이 지대의 기반암은 응회암 및 세일 등의 퇴적암(능주층군)과 화산각력암(유천층군) 및 화산암이다. 장흥읍 일대에서는 하안단구(장호 · 박희두, 2001)가 평야를 이루며, 탐진강 하구인 도암만 연안의 평야는 간척지이다.

(4) 해안지역과 간석지(갯벌)

해안은 육지와 바다가 접하는 지대여서 바다는 육지의 굴곡에 따라 들고 난다. 해안의 지세는 좁은 범위에서는 육지가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곶과 육지가 우묵하게 들어가 있어서 바다가 들어와 있는 후미의 연속이다. 그러나 큰 규모에서 보면 해안지역은 반도와 만의 연속이다. 해안선은 곶을 이루는 바위 절벽의 암석해안, 후미의 모래 및 자갈해안, 방파제 및 방조제의 인공해안으로 구분한다.

호남권의 해안선은 굴곡이 매우 심하여 반도와 만이 교대 된다(그림 2-15). 주요 반도는 북서부에서 남동부로 옥구반도 · 변산반도 · 해제반도 · 화원반도 · 고흥반도 · 여수반도 등으로, 옥구반도를 제외한 위의 반도들 대부분의 기반암은 화산각력암(유천층군) 및 화산암이다(그림 2-3). 화산각력암으로 이루어진 해안선은 변산반도처럼 주로 암석해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만은 곰소만 · 함평만 · 도암만 · 보성만 · 순천만 · 광양만 등으로, 함평만에서 광양만에 이르는 해안지역은 세계적으로도 대표적인 리아스해안(Ria Coast)이다. 이들 만의 연안에는 간석지(갯벌)가 분포한다(그림 2-12).

호남권의 갯벌 면적은 약 1,400㎢로 남한 전체 갯벌 중, 절반을 차지한다. 주요 갯벌은 다음과 같다(고철환, 2001의 77-81쪽). 군산에서 김제, 부안에 이르는 길이 100여Km의 해안은 금강, 만경강, 동진강의 하구이며 외해 쪽에 고군산군도가 위치하여 갯벌 형성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는 군산 앞바다의 옥구갯벌, 만경강 하구의 만경갯벌, 동진강 하구의 동진갯벌, 계화에서 변산해수욕장까지의 부안갯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갯벌은 1991년부터 시작하여 33Km 길이의 방조제 공사가 대부분 끝난 새만금간척지구로 갯벌 면적은 200여㎢(매립 계획면적은 400여㎢)이다.

곰소갯벌은 부안군 변산반도 남쪽, 줄포, 고창군 흥덕면 · 부안면 · 심원면 북쪽의 곰소만에 분포한다. 그 면적은 약 40㎢로, 1970년대에는 "부창지구"라 하여 간척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전라남도의 갯벌은 영광, 함평, 망운, 무안, 영암, 해남, 벌교 갯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영광갯벌은 영광군 백수읍 및 염산면 해안가에 폭 4Km 이상으로, 함평갯벌은 함평군 군남면 · 손불면 · 함평읍과 무안군의 현경면 및 해제면 사이의 함평만 연안에 발달한 갯벌이다. 망운갯벌은 함평갯벌 남쪽 갯벌로 무안군 현경면 · 해제면 · 망운면과 신안군 지도면으로 둘러싸여 있다. 무안갯벌은 무안군 현경면 해안에서 목포 북항까지 남북으로 분포하여 서쪽은 압해도를 경계로 한다.

영암갯벌 및 해남갯벌은 영산강 하구 연안의 갯벌로, 영산강하구둑 · 영암방조제 · 금호방조제로 간척되었다(그림 2-17). 벌교갯벌은 순천시 별량면, 벌교읍, 고흥군 동강면 해안에 분포하며(박의준, 2000), 이 일대는 순천만의 북부로 여자만이라고도 부른다.

해안사구는 갯벌이나 모래해안의 미세한 모래가 바람에 불려와 모래해안의 내륙 쪽에 길게 둑 모양으로 쌓인 것이다. 미세한 모래는 특히 겨울철의 북서계절풍에 의해서 많이 날리므로 호남권을 비롯한 서해안에서는 북서-남동 방향의 해안에 따라 해안사구가 만들어진다. 호남권의 해안사구는 하서, 변산, 심원, 동호-구시포, 염산, 임자도, 자은도, 비금도, 도초도, 신지도, 평일도 사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그림 2-12 , 2-18).

하서 해안사구는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해안에 폭 50여m 길이 1Km로, 변산 해안사구는 부안군 변산면 고사포 해안에 폭 50여m 길이 700여m로 분포한다. 변산 해안사구의 바다 쪽은 모래해안(고사포 해수욕장)과 갯벌이다. 고사포에서 마포에 이르는 만입지(후미)가 사주(모래해안) 발달로 석호가 되면서 변산 해안사구가 형성되고 있어서 석호는 줄어들고 있다.

심원 해안사구는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삼양염전 방조제의 해안 쪽(곰소만 입구 쪽)에 최대 폭 250m(부등마을 일대), 길이 3Km로 만들어지고 있다. 심원 해안사구는 1937년 방조제 완공 이래, 67년 동안 불려온 모래를 방조제가 가로막아 이루어진 인공 해안사구이다. 이처럼 해안사구의 성장이 빠른 것은 곰소만의 넓은 갯벌과 북서계절풍을 정면으로 받는 방조제의 방향 때문이다. 동호-구시포 해안사구는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 광승리 · 장호리

와 상하면 용정리 · 구시포 · 자룡리 해안에 걸쳐 길이 10Km, 최대 폭 1Km에 이른다. 이 일대의 개발과 해안선 변화에 대해서는 생태환경에서 다룬다(그림 2-19).

염산 해안사구는 영광군 백수읍 상사리, 하사리에 걸쳐 길이 3.6Km 최대 폭 1.5Km로 분포하며, 이는 불갑천 하구의 모래가 불려온 것이다(강대균, 2004). 임자도 해안사구는 신안군 임자도 도찬리 해안에 길이 7.5Km 폭 250m로 분포하며, 임자도(荏子島)라는 섬 이름도 사구 모래를 들깨(임자(荏子))에 비유한데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신안군의 섬들인 자은도 · 비금도 · 도초도에도 해안사구가 만들어 지고 있다. 완도군 신지도 명사십리 해수욕장과 평일도 금일 명사십리해수욕장에도 모래해안-해안사구-사구간 습지(swale)나 석호의 해안지형의 한 유형체계(setting)를 이루며 해안사구가 형성되고 있다.

(5) 도서지역

다도해(多島海)인 전라남도 바다를 포함하는 호남권 해역(海域)에는 섬들이 많다. 도서지역의 인구 감소로 유인도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호남권의 유인도는 전국 464개 중, 66%인 306개에 이른다(전라남도 280개, 전라북도 26개). 신안군 · 진도군 · 완도군은 섬들로만 이루어진 군으로 호남권의 대표적인 도서지역이다. 면 전체가 섬들인 곳은 군산시 옥도면(어청도, 선유도 등), 부안군 위도면, 영광군 낙월면(안마도 등), 고흥군 금산면(거금도 등) 및 봉래면(외나로도 등), 여수시 남면(금오도 등) 및 삼산면(손죽도, 거문도 등)이다(그림 2-20).

섬은 지형학적으로 육도(陸島, continental island)와 양도(洋島, oceanic island)로 구분된다. 육도는 대륙과 같은 구성물질로 이루어져 이와 연결되어 있다가 지반 침강이나 해수면 상승으로 분리, 고립된 것이다. 양도는 바다에서의 화산활동이나 산호초의 성장으로 새로 만들어진 섬으로 화산도와 산호섬이 대표적이다. 호남권 도서지역의 암석은 부근 반도 해안 일대와 비슷하여 대부분이 유천층군의 화산각력암과 불국사화강암이다(그림 2-3). 따라서 호남권의 섬들은 육도이다.

신생대 제4기(200만 년 전 이래의 지질시대) 플라이스토세에는 기후변동에 따라 해수면이 오르내렸다(빙하성 해수면 변동). 해수면은 플라이스토세 말(1만 년 전)에 지금보다 100

여m 낮았고, 약 6,000년 전에 현 해수면에 이르렀다. 제주도 부근 바다를 포함한 서해의 바다 깊이는 100m 미만이다. 한반도에서 남서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가거도(신안군 흑산면 소속으로 소흑산도라고도 부르며 목포항에서 145Km 거리임) 부근의 바다 깊이도 80m 내외이다. 따라서 플라이스토세의 최종빙기(약 7만 년~1만 년 전)에는 서해는 없었으며 현재의 그 바다 밑은 모두 육지였다. 호남권의 도서지역은 최종빙기가 끝난 후(후빙기), 기후 온난화에 따른 빙하 축소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서해가 만들어지는 약 1만 년~6,000년 전 사이에 바닷물로 둘러싸여 육지와 분리, 격리되어 섬들이 되었다(장호, 1994).

(6) 지하자원

호남권에서 채굴하는 지하자원은 광산물 10종(표 2-2) 및 무연탄이다. 이들의 용도와 산지 등은 다음과 같다.

전주 남서부에서 김제시와 접경하는 모악산(794m)을 이루고 있는 엽리상화강암에는 함금석영맥(含金石英脈)이 많아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등에는 석금(石金) 광산이 있었으나 현재는 채굴하지 않고 있다. 현재 채굴하고 있는 전북의 금광은 모두 사금광으로, 엽리상화강

[표 2-2] 호남권의 광산물 생산실적(2002년)

단위 : 금, 은(Kg), 기타(톤)

광종	전 국	전 북	전 남	계	전국대비(%)
금	26,181	3	168	171	0.7
은	973,140	0	6,755	6,755	0.7
납석	889,961	0	347,960	347,960	39.1
장석	415,580	3,780	87,935	91,715	22.1
고령토	2,831,026	35,176	215,434	250,610	8.9
석회석	86,082,295	72,340	448,674	521,014	0.6
규석	3,040,561	104,524	402,893	507,417	16.7
규사	890,559	0	248,584	248,584	28.0
사문석	283,002	1,070	0	1,070	0.4
명반석	1,120	0	1,120	1,120	100

출처 : 「2002년도 광산물수급현황」, 한국지질자원연구원(2003)

암의 풍화물이 하천에 의해서 이동 · 퇴적되면서 집적된 충적층 하부와 기반암 또는 플라이스토세의 접촉부에 사금이 포함되어 있다. 모악산에서 김제시 쪽으로 흐르는 원평천(김제시 봉남면) 및 두월천(김제시 금구면)과 전주시로 흐르는 삼천천(전주시 중인리)의 논에서 사금을 캔다.

해남군 황산면에서는 은 광석 중에 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함께 채굴한다. 납석은 높은 온도에 견디는 내화벽돌 및 타일 제조의 원료와 옥돌공예품을 만드는 원석으로 해남군 화원반도의 옥매산(174m), 나주시 다도면, 신안군 임자도, 진도군 조도, 완도군 노화도 등에서 채석한다.

장석은 도자기를 비롯한 요업원료와 석재로 이용된다. 주요산지는 순천시 승주읍 및 황전면, 진안군 백운면 및 동향면, 장수군 장계면 등이다.

고령토는 요업원료 및 종이 표면을 매끄럽게 코팅하는 점토 혼합물로 사용된다. 주요산지는 군산시 성산면, 김제시 황산면 및 용지면, 장성군 삼계면, 화순군 남면, 고흥군 남양면, 순천시 승주읍 및 별량면, 신안군 지도 등이다.

석회석은 시멘트 원료, 제철과정의 첨가제와 화학제품 생산에 사용된다. 석회석이 변성된 대리석은 석재로 이용된다. 호남권의 석회암은 옥천층군이나 소백산변성암복합체 중에 규암과 함께 분포한다. 시멘트용 석회암은 장성군 장성읍 및 황룡면에서 채석하여 장성읍 시멘트공장의 원료가 된다. 화학용 석회석은 화순군 춘양면, 대리석은 정읍시 산외면 등에서 채석한다.

규석은 시멘트 부원료와 유리 제조 및 건축 재료로 이용된다. 규석은 규암을 파쇄한 것으로, 규암은 지리산변성암복합체나 소백산변성암복합체 중에서 채석한다. 주요산지는 두륜산지인 강진군 도암면, 화순군 한천면, 무주군 무풍면, 장수군 장계면 등이다. 규사는 규산함량이 높은 모래로, 모래해안과 해안사구의 석영 모래가 이에 해당한다. 주요산지는 영광군 낙월면 및 진도군 조도의 모래해안, 신안군 임자도의 해안사구 등이다.

사문석은 제철용 첨가물과 비료용으로 사용되며, 장수군 번암면에 소규모 광산이 있다. 알루미나 제조의 원료 광물인 명반석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해남군 황산면에서 채굴한다.

무연탄층은 화순군 남동부인 동면 · 한천면 · 이양면에 분포하는 고생대 말의 평안누층군

에 속하는 변성퇴적암(주로 점판암)에 끼여 있어〈그림 2-3〉, 동면에 1개소, 한천면에 4개소, 이양면에 3개소의 탄전이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래 무연탄의 수요 감소로 폐광되고 동면의 화순탄전(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서만 채굴하고 있으며, 2003년의 채탄량은 276,000 톤이었다.

2) 기후

호남권은 북위 33° 54′ ~ 36° 09′ 사이에서 한반도 남서쪽에 약 2만㎢ 의 면적을 차지하고 남북 간의 위도 차이가 2° 15′에 불과하여 지역 간의 기후특성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좁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전남 · 북을 가로지르는 노령산맥, 영남지방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동쪽의 소백산맥, 서쪽과 남쪽의 바다와 굴곡이 심한 리아스식 해안, 2,100여 개의 많은 섬 등, 지형이 복잡하다. 이들이 기후인자로 작용하여 다양한 기후특성이 예상되기는 하나 관측점이 부족하여 보다 실증적인 지역기후의 특징을 알아내기 어렵다. 이에 기상관측 자료(기상청, 2001) 및 광주지방기상청 홈페이지(gwangju.kma.go.kr)를 이용하여 호남권의 개략적인 기후 특징을 기술한다.

호남권 기후의 개략적 특징은 한반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전형적인 계절풍의 영향 때문이다. 즉, 여름철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고온 다습한 무더운 날씨를, 겨울철에는 시베리아에서 발달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한랭 건조한 차가운 날씨를 보인다. 특히 요즈음은 뚜렷한 삼한사온의 겨울철 기온 변화는 줄어들었으나 주기적인 날씨변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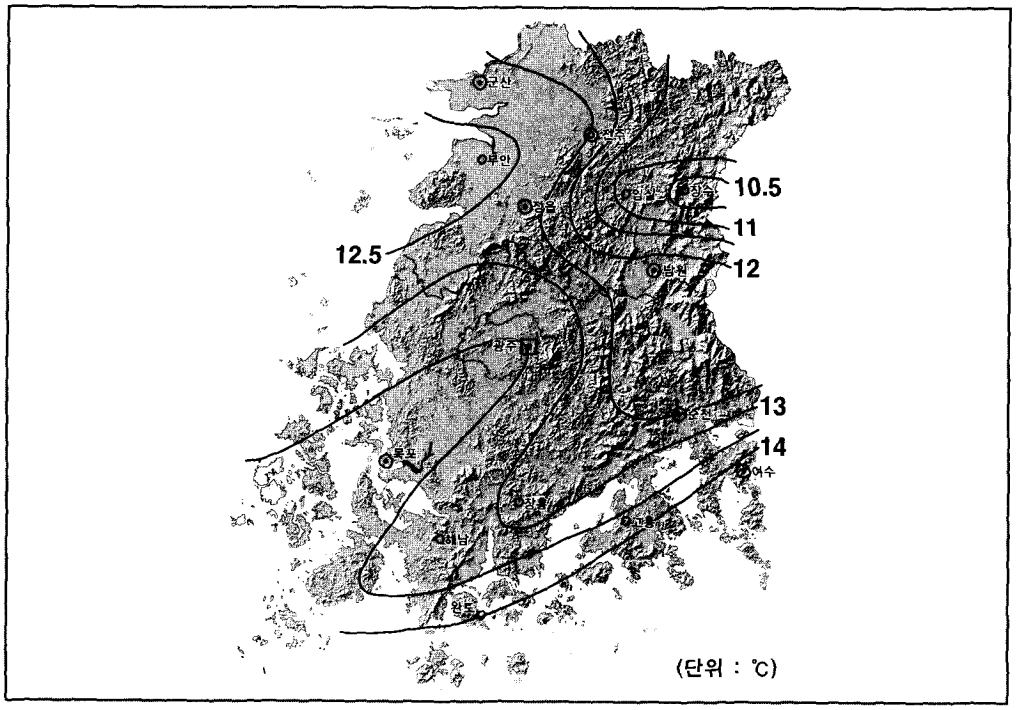
호남권의 기상관측은 광주지방기상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산 · 전주 · 광주 · 목포 · 여수 · 흑산도 · 완도 · 진도 기상대의 8개 기상대와 부안 · 임실 · 정읍 · 남원 · 장수 · 순천 · 장흥 · 해남 · 고흥 기상관측소의 9개 기상관측소, 총 17개소의 기상관측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밖에 100여개 소의 자동 기상관측소가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총 17개소의 기상관측점에서 관측된 여러 기후요소 중, 1971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의 기온, 강수량 자료에 따른 지역별 분포 특성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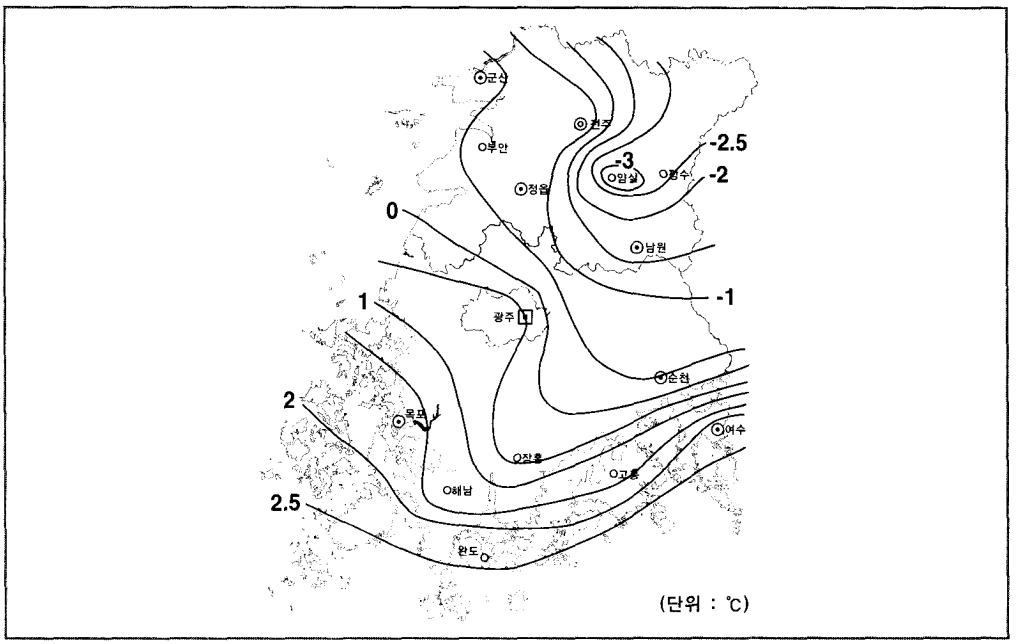
(1) 기온

호남권의 연평균기온은 〈그림 2-5〉에 따르면 대체로 10~14℃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해안 지역으로 약 14℃를 보인다. 그 다음이 호남서해안지역으로서 12~13℃이며 가장 낮은 기온은 장수지역으로 10.4℃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연평균기온의 분포는 위도 및 해발고도, 바다 및 해륙분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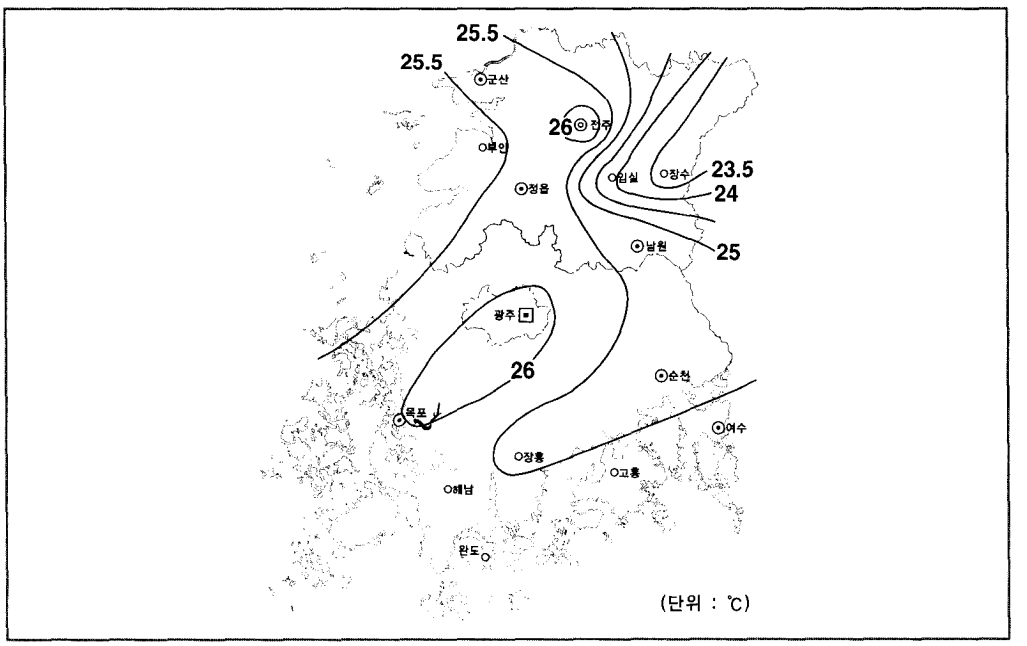
계절별로 보면 겨울철 기온분포는 〈그림 2-6〉에서와 같이 연평균기온 분포의 양상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가장 높은 기온분포는 호남남해안 지역으로 2.5℃내외, 기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내륙 내부에 위치한 임실 · 장수 지역으로 영하 3℃내외로 기온차가 5.5℃에 달하고 있어 전형적인 대륙성기후의 특성을 보인다. 여름철 기온분포는 〈그림 2-7〉과 같이 남북 간의 기온차가 겨울철처럼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기단이 한반도 전역에 영향주기 때문이다.



〈그림 2-5〉 호남권의 고도분포와 연평균기온 분포



〈그림 2-6〉 호남권의 1월 평균기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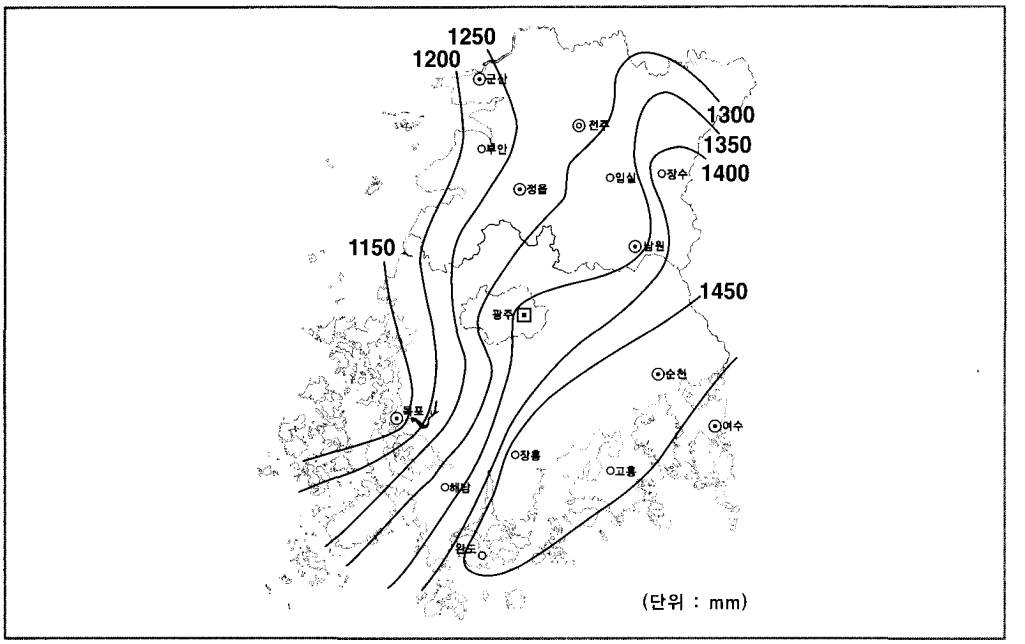
〈그림 2-7〉 호남권의 8월 평균기온 분포

(2)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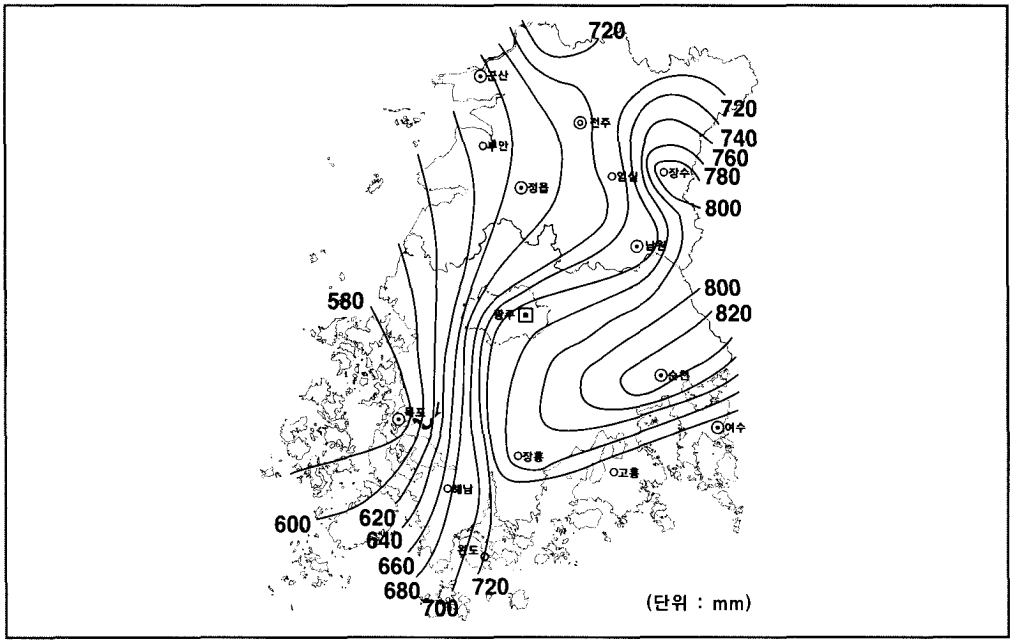
한반도에서 연평균 강수량은 600~1,800mm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호남권의 연강수량은 〈그림 2-8〉과 같이 1,100~1,500mm로, 한반도에서는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한다.

지역적인 분포는 남해안 지방이 가장 많은 강수량을 나타내며 북서쪽으로 갈수록 그 양이 줄어들어 서해안지역에서 가장 적은 1,150mm 내외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포를 나타내는 까닭은 여름철에 집중되는 강수의 특성으로 보아 남동계절풍에 실려 온 고온다습한 공기의 유입 때문이다. 계절적인 강수분포는 북태평양기단의 북상에 따른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며, 시베리아기단이 남하하는 겨울철에는 저온 건조하여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매우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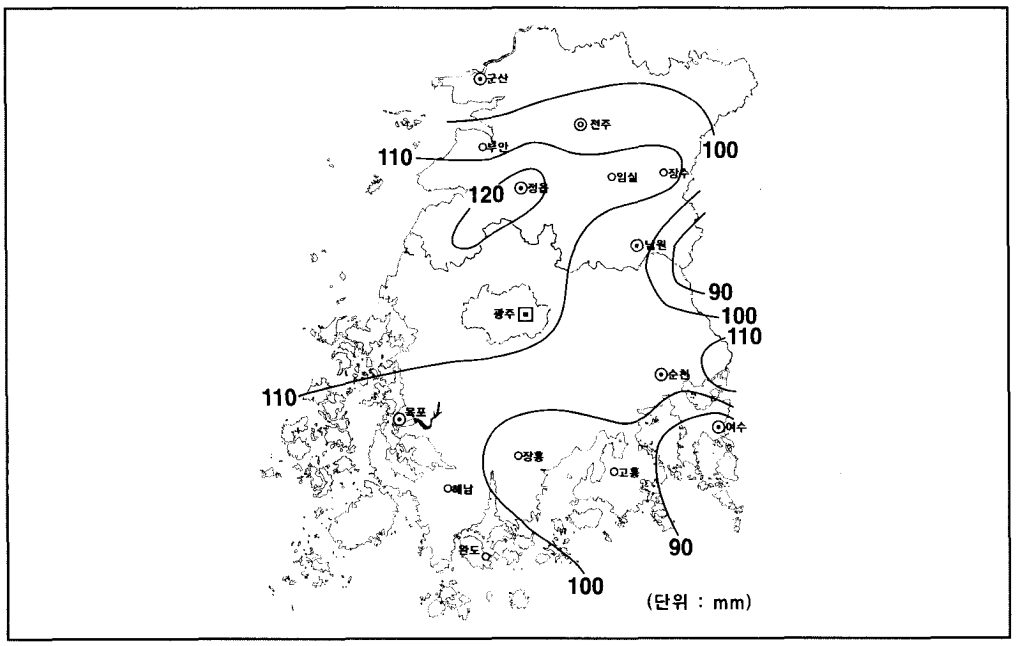
호남권의 여름철 강수량 분포〈그림 2-9〉는 연강수량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 여름철의 최다우지역은 순천 일대로 820mm이며, 서해안 쪽으로 갈수록 여름철에는 강수량이 줄어들어 남서부 특히 목포에서는 580mm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름철 강수량이 상대



〈그림 2-8〉 호남권의 연강수량 분포



〈 그림 2-9 〉 호남권의 여름철(6, 7, 8월) 강수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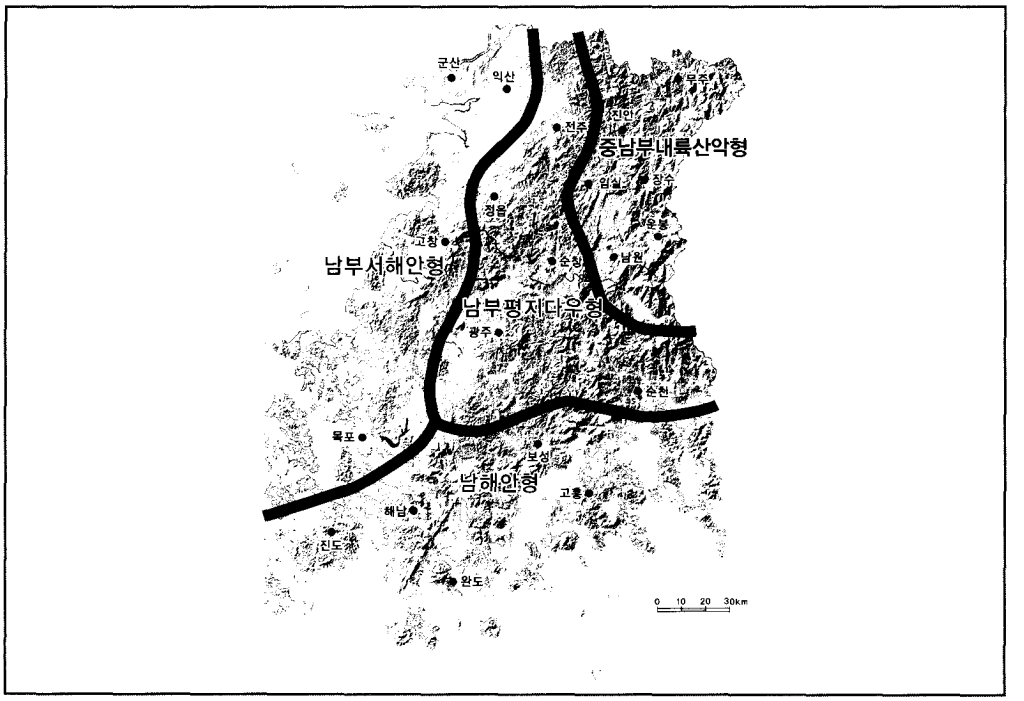


〈그림 2-10〉 호남권의 겨울철(12, 1, 2월) 강수량 분포

적으로 적다. 이는 순천 · 광양 일대가 지리산지의 일부인 백운산(1217m) 남쪽에 위치한 남동계절풍의 바람받이여서 지형성 강우가 빈번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일대는 한반도 전체의 다우지역 중, 하나인 섬진강 하류지역에 속한다.

호남권의 겨울철 강수량(그림 2-10)은 여름철 강수량의 15% 내외로, 시베리아기단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역적 분포는 90~120mm로 그 차이는 크지 않으나 정읍 · 복흥고원 · 장성 일대가 가장 눈이 많이 내리는 지대이다. 이는 한랭 건조한 대륙고기압에서 북서계절풍으로 이동해온 공기가 서해상을 통과하면서 수분을 공급받아 노령산맥 일대에서 강제 상승하여 지형성 강설(地形性 降雪)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는 호남권 겨울철 대설(大雪)의 특징으로(이승호 · 이현영, 2002, 94-95), 겨울철에 호남고속도로 정읍-장성 구간에서 자주 관찰된다.

(3) 호남권 기후의 지역적 차이



〈그림 2-11〉 호남권의 기후지역구분도

호남권의 기후는 쾨펜의 기후구분에 따르면 대부분이 온대 동계건조 하계고온기후(Cwa)이며, 남해안지역이 온대 습윤 하계고온기후(Cfa)에 속한다. 그러나 이는 세계적 규모에서의 구분이기 때문에 호남권 기후의 지역적 차이를 기술하기에는 너무 단순하다. 김광식(1984, 210-214쪽)은 기상관측소별의 기온, 강수량, 강수일수, 적설, 구름, 안개, 서리, 일조시간, 바람 등 기후요소와 산맥, 지형, 하천, 해륙분포 등 기후인자를 기초로 한반도 기후를 17개 기후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르면 호남권의 기후구는 〈그림 2-11〉과 같이 남부서해안형 · 남부평지다우형 · 중남부내륙산악형 · 남해안형의 4개 기후지역으로 나누어진다.

남부서해안형

노령산맥 서쪽의 군산 · 부안 · 영광 · 무안 · 목포 · 흑산도지방과 서해안 및 서해 섬들이 이 기후구에 속한다. 연평균 기온은 12~14℃, 최난월 평균기온은 26℃ 내외, 최한월 평균기온은 -1~1℃ 정도이다.

연강수량은 1,100~1,300mm, 최습월 강수량은 200~270mm, 최건월 강수량은 30~40mm 정도로 월별 강수량의 차가 호남권의 다른 기후구에 비해 적다. 강수일수는 연간 110~120일 내외이다. 상대습도는 76~78%로 다른 기후구보다 높은 편이고, 바람은 2~4㎳로 다른 기후구보다 2~3㎳ 강하다. 연간 일조시간은 2,110~2,730시간, 일조율은 47~61% 정도로 타 기후구보다 약간 높다.

눈 내리는 일수는 23~32일, 적설일수도 24~32일 정도이다. 연간 서리일수는 목포 36일, 부안 84일로 지역 차가 큰 편이며, 얼음일수는 목포 72일, 부안 105일로 지역 간 차가 심하지만 타 기후구 보다는 적다. 우박은 연간 1~2일 정도 피해를 주고 안개는 25~41일 끼며 황사와 뇌전일수는 각각 2~3일과 8~11일 가량이다.

남부평지다우형

노령산맥 북동부와 영산강 상류 및 선진강 하류에 위치한 평야지대로 전주 · 정읍 · 순창 · 광주 · 순천지방과 주변 지역으로 연평균기온은 12~13℃, 최난월 평균기온은 25~26℃, 최한월 평균기온은 -1~0℃ 정도이다.

연강수량은 1,280~1,500mm, 최습월 강수량은 250~300mm, 최건월 강수량은 25~45mm 정도로 월별 강수량의 차이가 호남지방의 타 기후구에 비해 적다. 강수 일수는 연간 110~130일 정도이다. 상대습도는 73~75% 내외로 타 기후구 보다 낮다. 바람은 1~2㎧ 정도이며, 일조시간은 2,050~2,500시간, 일조율은 45~58% 정도이다.

연간 눈 내리는 일수는 23~33일 이고, 적설일수도 23~32일 정도이다. 서리일수는 72~93일. 얼음일수는 100~110일이다. 우박은 연간 1회 정도 피해를 주고 안개는 10~16일로 타 기후구에 비해 훨씬 적으나, 순천은 87일로 주암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황사는 2~4일 나타나며, 뇌전일수는 8~10일 정도이나 광주지방은 16일로 호남지방에서 가장 자주 나타난다.

중남부내륙산악형

덕유산지와 노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의 분지 및 고원으로 무주 · 진안 · 장수 · 임실 · 운봉 · 남원 지방과 주변 산간지역이 이 기후구에 속한다. 최난월 평균기온은 24~26℃ 내외, 최한월 평균기온은 -4~-2℃ 정도로 가장 한랭하다.

연강수량은 1,350mm 내외, 최습월 강수량은 270~310mm, 최건월 강수량은 30~40mm 정도로 월별 강수량의 차이가 호남권의 타 기후구에 비해 적다. 강수일수는 연간 110~130일 내외이다. 상대습도는 74~78% 정도이며, 바람은 1~2㎧ 분포로 약한 편이다. 연간 일조시간은 2,200~2,600시간, 일조율은 49~57% 정도이다.

연간 눈 내리는 일수는 24~28일 정도이나, 적설일수는 26~41일 정도로 타 기후구보다 많으며 특히 북사면에서는 더 많다. 서리일수는 112~115일 정도이며, 얼음일수는 115~135일로 타 기후고 보다 훨씬 많다. 우박은 연간 1회 정도 피해를 주고, 안개는 평야에 가까운 지역은 24~25일 정도나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많아져 산악지역은 70일이 넘는다. 황사는 2일 정도 나타나며, 뇌전일수는11~12일 정도이다.

남해안형

해남 · 보성 · 고흥 · 여수 · 진도 · 완도지방과 남해안 및 섬들이 이 기후구에 속한다. 연평균 기온은 13~14℃, 최난월 평균기온은 26℃ 내외, 최한월 평균기온은 0~2℃ 정도로 온난

하다.

연강수량은 1,360~1,520mm로 타 기후구보다 많으며 최습월 강수량은 240~270mm, 최건월 강수량은 30~40mm 정도이다. 강수일수는 102~120일로 타 기후구보다 적다. 상대습도는 바다의 영향이 강하여 겨울철에 습도가 낮은 여수는 68% 정도이나 그 밖의 지방은 74~76%이다. 바람은 연평균 2~4㎧정도 불고 일조시간은 2,050~2,720시간, 일조율은 46~61% 정도이다.

연간 눈 내리는 일수는 12~23일이며, 적설일수도 5~20일로 타 기후구에 비해 눈 내리는 일수와 적설 일수가 적다. 연간 서리일수는 여수 · 완도가 25~31일 이고 그 밖의 지방은 70~86일로 지역 차가 심하다. 얼음일수도 여수 · 완도는 66~76일, 그 밖의 지방은 92~106일로 나타난다. 우박은 완도 · 해남에 하루정도 나타나고, 그 밖의 지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안개일수는 고흥이 8일, 그 밖의 지방은 16~35일 나타나고, 황사현상은 2~4일 정도 발생하며, 뇌전일수는 7~10일 정도 나타난다.

[표 2-3]은 호남권 4개의 기후구에 속해있는 관측소 중, 대표적 관측소로 여겨지는 남부

[표 2-3] 호남권 주요 관측소의 월별 기온 및 강수량 (1971~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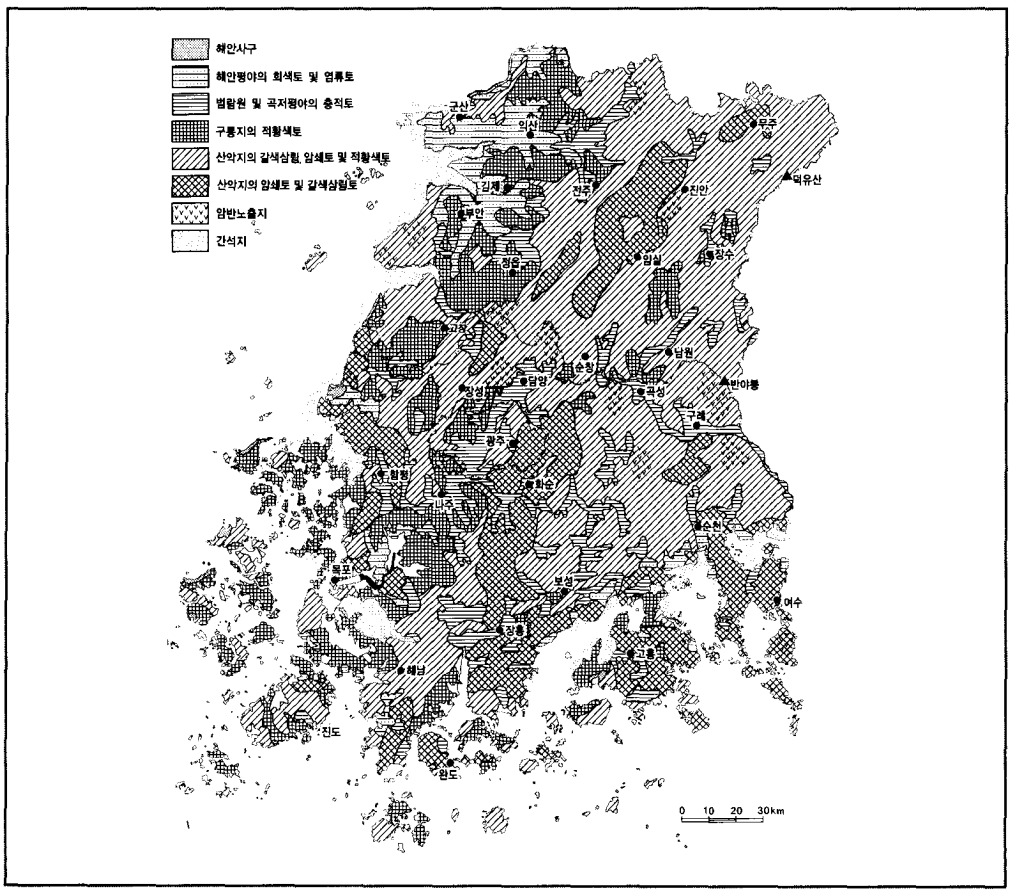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기온(℃) / 합계(mm)
남부서해안형	군산	기온	-0.4	0.9	5.1	11.1	16.5	21.1	24.9	25.7	21.1	15.1	8.4	2.3	12.7
		강수량	30.5	32.4	51.1	79.9	86.8	158.7	240.7	250.9	125.6	51.9	58.2	34.6	1201.3
	목포	기온	1.8	2.6	6.5	12.3	17.0	21.1	24.8	26.0	22.0	16.6	10.2	4.4	13.8
		강수량	34.7	44.5	60.8	79.1	86.6	172.5	214.1	174.3	130.9	51.0	49.6	27.9	1225.0
남부평지다우형	전주	기온	0.6	0.9	5.9	12.6	17.8	22.2	25.8	26.1	21.1	14.7	7.9	1.9	13.0
		강수량	33.7	39.2	59.0	83.9	93.8	173.6	266.7	253.8	134.4	59.7	56.8	31.0	1286.8
	광주	기온	0.5	1.9	6.5	12.9	17.8	22.0	25.5	26.1	21.4	15.4	8.7	2.8	13.5
		강수량	38.0	43.9	64.5	95.3	97.3	190.3	281.9	276.0	137.7	55.3	55.4	32.4	1368.0
중남부내륙산악형	장수	기온	-2.7	-1.2	3.8	10.2	15.4	19.7	23.1	23.1	18.0	11.1	5.1	-0.6	10.4
		강수량	39.5	46.3	67.1	82.9	95.0	219.1	300.2	291.1	150.7	47.4	52.8	30.0	1422.1
남해안형	완도	기온	2.7	3.7	7.4	12.6	16.8	20.3	24.1	25.6	22.1	17.0	10.8	5.2	14.0
		강수량	32.5	49.1	89.7	123.0	133.5	236.9	259.1	227.5	161.1	60.2	58.1	26.2	1456.9

출처 : 「한국기후표(1971~2000)」, 기상청(2001)

서해안형의 군산 · 목포, 남부평지다우형의 전주 · 광주, 중남부내륙산악형의 장수, 남해안형의 완도기상대의 기온 및 강수량의 기후표(1971~2000)이다.

3) 토양

〈그림 2-12〉호남권의 토양분포도는 1/100만 한국토양도(농촌진흥청, 1983)에서 호남권을 간략화 한 것이다. 해안사구에는 바람에 불려온 모래가, 간석지(갯벌)에는 밀물 · 썰물의 교대에 따라 진흙이 지속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토양이 만들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지대



〈그림 2-12〉 호남권의 토양분포도

출처 : 농촌진흥청(1983), 한국토양도(축척 : 1/100만)

는 지형만으로 그 분포를 나타냈고, 이에 대해서는 해안지역에서 기술하였다. 산악지에서 바위가 드러나 있는 암반노출지는 토양이 없는 지대이기 때문에 그 분포지만을 표시하고 있다.

위의 3 지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형과 그 지대에 주로 분포하는 대표적인 토양형(soil type) 또는 대토양군(great soil group)을 관련시킨 것이다. 이는 지형에 따른 개략적 토양 분포이기 때문에, 지형과 토양형과의 연관에는 이 분포도와는 다른 지역도 있을 것이다.

해안평야는 갯벌 및 하천 연안의 저습지를 간척하여 논으로 이용하는 지대로 김제 · 만경평야, 불갑천 연안평야, 하구둑 완공으로 간척된 영산강 하류 연안과 남해안의 간척지인 보성 득량만 연안 등이다. 이 지대의 대표적인 토양형은 염류토 및 회색토이다. 염류토는 갯벌 간척지의 초기에 소금기가 덜 제거된 토양이다. 회색토는 해안 저지대나 하천 연안의 배후습지에서 침수 기간이 길어 토층 중에 회색 무늬를 나타내는 토양이다. 염류토 및 회색토는 대부분이 물이 잘 빠지지 않는 토양이기 때문에 배수에 유의해야 한다.

영산강 연안의 나주평야, 만경강 중 · 상류 와 섬진강 및 탐진강 연안의 범람원과 분지 및 곡저평야의 토양은 충적토이다. 이는 자갈 · 모래 · 진흙 등, 하천퇴적물로 형성된 충적평야의 토양으로, 대부분이 논으로 이용된다.

적황색토는 구릉지 및 해발고도 600m 이하의 완경사의 산기슭에 분포하며, 일반적으로 황토라고 부르는 토양이다. 호남권에서는 충적평야 주변의 낮은 구릉지대에 적황색토가 넓게 분포하며, 그에 대해서는 구릉지역에서 기술하였다. 적황색토는 호남권 서부 평야지대의 대표적 토양형으로, 고구마 재배 등, 대부분이 밭으로 이용된다.

생성론적 토양 분류(pedology)에서는 적황색토를 적색토라고 부른다. 한반도의 적색토는 최종간빙기(지금부터 약 10만년 이전의 온난 습윤기) 및 그 이전의 간빙기에 형성된 고토양(古土壤)으로, 지형 형성 및 고고학 유물의 연대 추정에서 한 지표가 된다(장호, 1995).

갈색삼림토는 삼림과 풀로 덮인 산악지에 형성된 유기물이 많은 토양이며, 암쇄토(岩碎土)는 바위 부스러기로 이루어져 유기물이 부족하다. 산지의 완만한 능선지대와 평정봉에는 갈색삼림토가, 골짜기 쪽의 급사면에는 암쇄토가 덮여 있다. 암쇄토 및 갈색삼림토는 호남권 동부 산악지대의 대표적 토양형으로, 삼림지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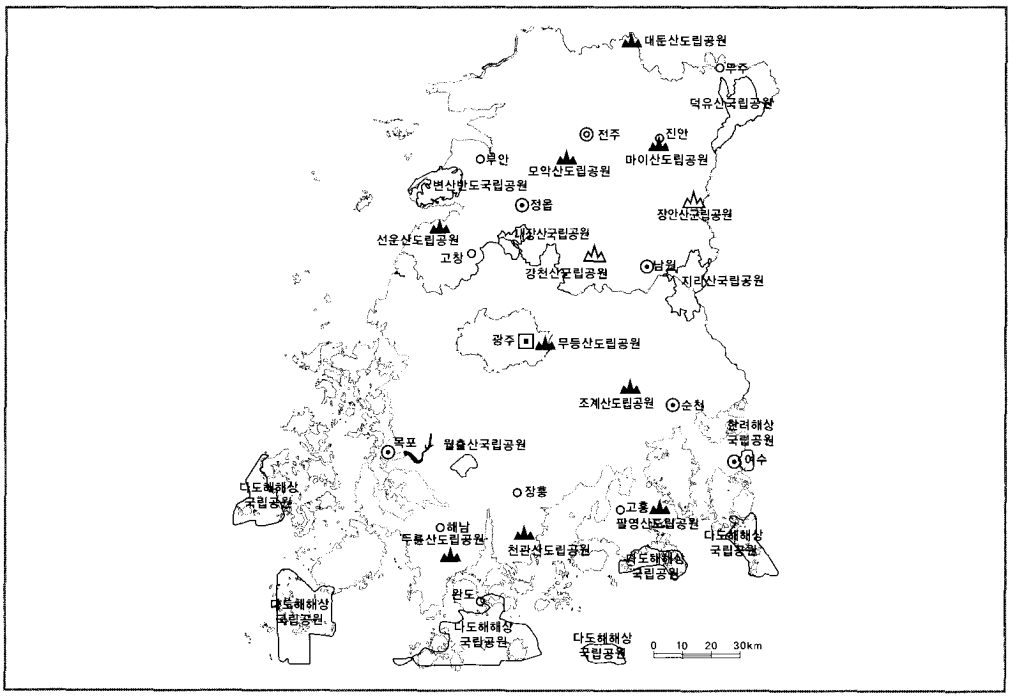
2. 생태환경의 이용과 관리 및 보전

자연환경 편에서는 호남권의 지형과 지질, 기후, 토양의 지역적 특성과 분포 등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본 편에서는 주민들의 자연환경 이용과 생물 서식지환경(생태환경)의 관리 및 보전 실태를 기술하면서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하고자 한다.

1) 산지의 관리 및 보전

(1) 자연공원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 문화유적을 보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일정 구역으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구분된다. 호남권에는 7개소



〈그림 2-13〉 호남권의 자연공원

의 국립공원, 9개소의 도립공원, 2개소의 군립공원이 있다 이는 전국의 국립공원이 20개소, 도립공원이 22개소, 군립공원이 31개소이므로, 호남권에는 국립 및 도립공원이 다른 권에 비해서 많이 지정되어 있다(지리산, 한려해상, 덕유산 국립공원은 영남권에도 걸쳐있음)(『환경백서』, 환경부, 2004).

호남권의 자연공원은 지리산 · 한려해상 · 내장산 · 덕유산 · 다도해해상 · 변산반도 · 월출산 국립공원, 모악산 · 무등산 · 대둔산 · 마이산 · 조계산 · 두륜산 · 선운산 · 팔영산 · 천관산 도립공원, 강천산 · 장안산 군립공원이다(그림 2-13). 이 18개소의 호남권 자연공원 중, 한려해상 ·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의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6개소가 산지지역에 지정되어 있다(변산반도국립공원은 바다까지 지정됨).

지리산은 1967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지리산국립공원지구는 동서 34Km, 남북 26Km 거리이며 면적은 약 472㎢이다. 이 국립공원의 동반부는 경남 함양군 · 산청군 · 하동군에, 서반부는 호남권에 속한다. 호남권의 지리산국립공원은 남원시 운봉읍 · 인월면 · 산내면 · 주천면과 구례군 산동면 · 광의면 · 마산면 · 토지면의 해발고도 700m 이상 지대이다.

지리산국립공원의 완만한 산능과 암괴원의 사면 등은 지하수 함양대가 되어 달궁 · 뱀사골 · 피아골 · 화엄사 · 천은사 계곡 등을 통해 섬진강과 낙동강의 급수원(給水源)이 된다. 최근 임도(林道) 등의 도로 개설에 따른 산사태와 등산로의 토양침식 등이 가속화하고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 2003). 암괴류 등의 산지사면 보전과 탐방로 이외의 출입제한 등이 필요하다.

내장산의 정읍시 및 순창군과 장성군의 접경부에 걸친 약 82㎢가 197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내장산지구와 백양사(백암산)지구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다. 이 국립공원은 가을철 단풍, 굴거리나무 군락, 비자나무 군락 등 식물종이 특이한 지대이므로 그 생장 지대의 보전이 지속되어야 한다.

덕유산의 무주군 무풍면 · 설천면 · 적상면 · 안성면 및 장수군 계북면과 경남 거창군에 걸친 약 232㎢가 1975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덕유산국립공원은 1982년의 보이스카우트 국제 잼보리대회, 1995년 완공된 무주양수발전소, 1980년대 말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1997년 1월에는 동계 유니버시아드를 치른 스키장 등으로 지형과 산림이 많이 훼손되었다.

변산반도의 부안군 변산면 · 하서면 · 상서면 · 보안면 · 진서면의 산지와 주변 바다 9㎢를 포함한 약 155㎢가 1971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1988년 국립공원으로 승격 지정되었다. 화산암체의 산지와 바다가 함께하는 이 공원은 그 중앙부에서 서해로 백천내가 흐르며 해안지대를 외변산, 백천내 연안을 내변산이라 부른다. 외변산의 해창(백천내 하구) 부근의 산지는 새만금방조제 공사의 토사 채취로 훼손되고, 1996년 백천내 하류부에 부안다목적댐이 완공되어 내변산의 해발고도 50m까지는 수몰되었다.

변산해수욕장도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해수욕장 부대시설 신축 문제 등으로 주민들이 공원지구 해제를 주장하고 있어서 보전과 개발 사이의 마찰이 심각하다.

월출산은 약 56㎢가 1973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1988년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다.

모악산(794m)은 김제시 금구면 및 금산면, 완주군 구이면, 전주시 중인동에 걸친 약 42㎢가 1971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공원 안에 금산사가 있다. 등산객이 과도하게 오르내려 등산로의 토양침식이 심각하다.

대둔산도립공원은 마천대(878m)를 중심으로 전북 완주군 운주면과 충남 금산군 및 논산시에 걸친 약 64㎢이다. 이 중, 전북지역(약 38㎢)은 1977년에, 충남지역은 1980년에 지정되었다. 급경사를 이루는 전북지역에는 구름다리(임금바위와 입석대 사이의 50m 길이)와 케이블카(길이 927m)가 설치되어 있다(전라북도 완주군, 2003).

마이산은 해발고도 667m와 673m의 역암으로 이루어진 돔(dome) 모양의 두개 암봉(岩峰)으로, 진안군 진안읍과 마령면에 걸친 약 17㎢가 197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선운산도립공원은 1979년에 공원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선운사 주변 경수산(444m)을 중심으로 고창군 아산면, 부안면, 심원면에 걸쳐 면적 약 44㎢이다.

무등산(1187m)은 광주광역시, 담양군 남면, 화순군 이서면에 걸친 약 30㎢가 1972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조계산(884m)은 순천시 승주읍, 주암면, 송광면에 걸쳐 약 27㎢가 197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공원 안에 송광사와 선암사가 있다.

해남 대흥사 주변의 삼산면, 현산면, 북평면, 북일면에 걸친 면적 약 27㎢의 산지는 1979년에 두륜산도립공원으로, 고흥군 영남면의 팔영산(609m) 일대 약 10㎢는 1997년에 팔영산도립공원으로, 장흥군 관산읍과 대덕읍의 천관산(723m) 일대 약 8㎢는 1998년에 천관산도립공원으로 각각 지정되었다. 이 세 도립공원에서는 다도해를 잘 조망할 수 있다.

순창군 팔덕면 강천산(584m) 일대 약 16㎢는 1981년에, 장수군 장수읍 장안산(1237m) 일대 약 6㎢는 1986년에 각각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2) 백두대간과 분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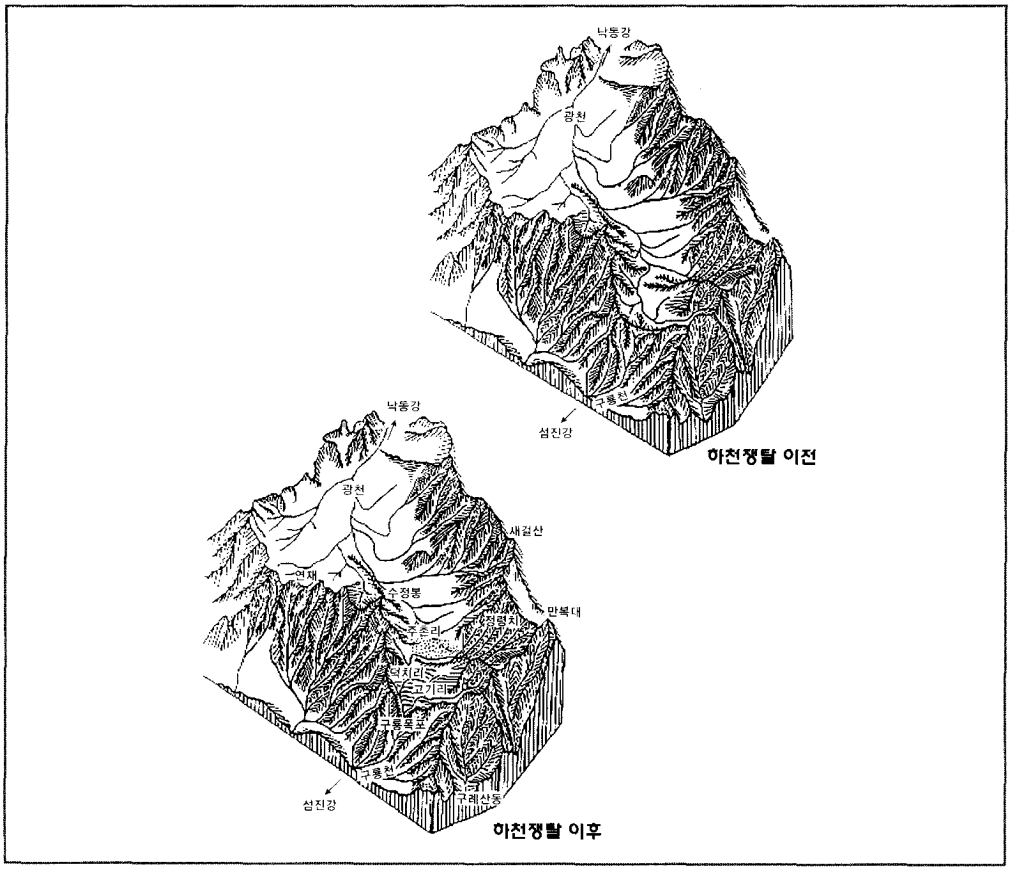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3년 말에 제정되고, 1년 경과 후인 2005년 초의 시행을 앞두고 해당 주민들과 마찰 중이다. 이 법률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을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해서 토지형질 변경 등, 토지이용의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호남권에서 이 보호지역에 속하는 지대는 무주군 무풍면 · 설천면 · 안성면 및 장수군의 계북면 · 장계면 · 번암면의 덕유산지, 남원시의 인월면 · 아영면 · 산내면 · 산동면 · 운봉읍 · 주천면 및 구례군의 산동면 · 광의면 · 마산면 · 토지면의 지리산지이다. 이 가운데 남원시 운봉읍 및 주천면 주민들과의 마찰이 특히 심하다. 이는 남원시는 684Km의 남한 백두대간 중, 11%에 해당하는 71Km가 포함되며 운봉읍과 주천면의 경우에는 마을 안길로 백두대간이 지나고 있기(『실전 백두대간 종주산행』, 조선일보사, 2003의 27쪽 가재마을 세밀도) 때문이다.

백두대간은 한반도 분수계로, 산능선(마루금) 또는 산줄기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분수계의 대부분은 능선 분수계이지만, 좁은 지대에 걸쳐 곡중 분수계(谷中分水界, divide in valley) 및 지하수 분수계가 있다. 곡중 분수계는 급경사를 흐르는 강이 상류 쪽으로 유로를 연장시켜 가면서(두부침식(頭部浸蝕), headward erosion)인접한 완경사의 하천유역과 경합관계를 이룬 지대에서 만들어 진다. 이런 지대에서는 급경사의 하천이 완경사의 인접 하천과 합류되게 되는데, 이를 하천쟁탈(river capture)이라고 한다(그림 2-14). 운봉분지의 정령치에서 덕치리까지의 구룡천(섬진강 수계) 상류는 본래 낙동강 수계인 광천으로 흘렀으나(〈그림 2-14〉의 하천쟁탈 이전), 구룡천의 두부침식에 따라 섬진강 수계로 흘러가게 되었다(〈그림 2-14〉의 하천쟁탈 이후). 이 하천쟁탈은 약 3만년 전에 이루어졌다(고기만, 1993; 장호, 1997의 69-71쪽).

운봉읍과 주천면의 행정구역 경계인 이 지대의 백두대간은 곡중 분수계인 평탄지이므로 마을 안길로 백두대간이 지나고 있으며(〈그림 2-14 하천쟁탈 이후〉의 덕치리), 이를 경계

로 섬진강 수계와 낙동강 수계가 나누인다. 이처럼 백두대간 전체가 능선 분수계로 연결되지는 않으므로, 그 보호지역 지정에서 예외 구역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하수 분수계는 카르스트지형에서 나타난다.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 동쪽 천호산(500m) 일대는 고생대 초의 옥천층군에 속하는 석회암지대(그림 2-3)로, 석회동굴인 천호동굴이 있다. 천호산 남북 방향 능선은 서쪽으로 흐르는 여산천(금강 수계)과 동쪽의 화평천(만경강 수계)으로 나누이는 분수계이다(그림 2-15). 그런데 천호산 남북 방향 능선의 동쪽에는 직경 100여 m, 깊이 20여 m의 돌리네가 있어 이 일대 지표수는 천호동굴로 스며든 후, 용출하여 서쪽의 여산천으로 흘러간다. 따라서 능선 분수계로는 만경강 수계로 흘러가야 할 지표수가, 지하수로는 금강 수계로 흐른다.



〈그림 2-14〉 운봉분지의 하천쟁탈

이를 『신증 동국여지승람』 제 34권 여산군 산천 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누항(漏項) : 군의 동쪽 7리 에 있다. 고산현(高山縣)에서 나온 시내물이 서쪽으로 흘러 호산 기슭에 새어 들어가서 스며 흐르다가 서쪽 산기슭에 이르러 내가 된다(민족문화추진회 번역, 국역 신증 동국여지승람 Ⅳ, 450쪽). 고산현은 현 완주군 북부 일대의 조선시대 행정구역 명칭이며, 현지주민들은 누항(漏項)을 샐목이라 부른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도 지하수 분수계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돌리네나 싱크 홀(sink hole)을 샐목이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만경강 능선 분수계 동쪽에 있어 완주군 화산면에 속해야 할 성치 및 누항 마을은 이 지하수 분수계 때문에 현재에도 능선 분수계 서쪽인 익산시 여산면에 속한다(장호, 1995). 지하수 분수계는 수질 오염원의 조사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철저하게 분수계에 따라 행정구역을 구분하여, 산능 분수계뿐만 아니라 곡중 분수계(운봉과 주천의 경계의 일부) 및 지하수 분수계(여산과 고산의 경계 일부)를 행정구역의 경계로 삼았다.

2) 물 자원 이용과 간척 중심의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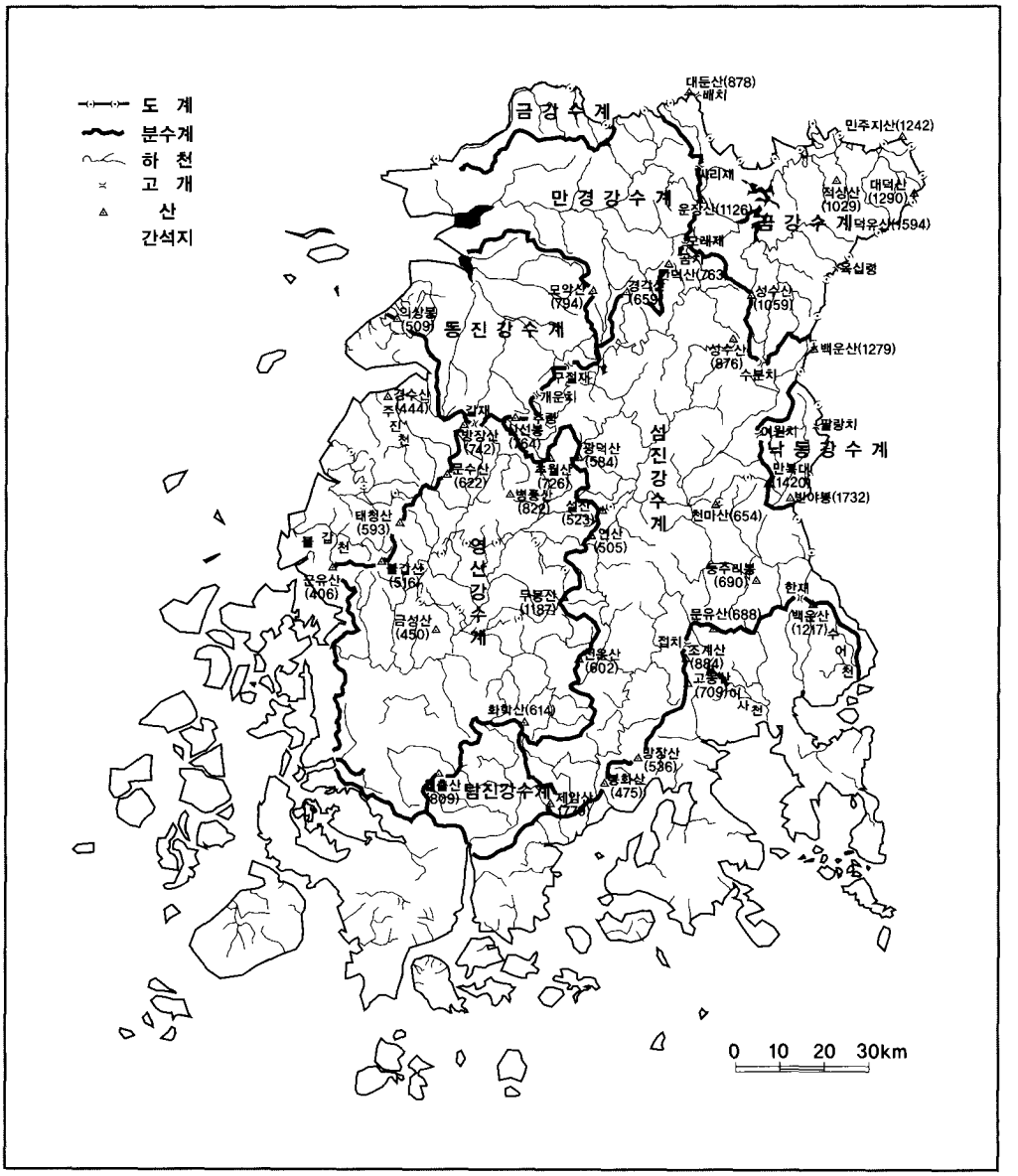
본 편에서는 호남권의 물 자원을 하천을 중심으로 개관한 후, 그 개발 과정에 대해서 기술한다.

(1) 하천과 물 자원의 이용

호남권의 하천들을 동일 하구로 흐르는 수계(水系) 별로 구분하면 〈그림 2-15〉와 같다. 집수역이 호남권만인 것은 영산강 · 만경강 · 동진강 · 탐진강 수계이며, 다른 권에도 걸치는 것은 금강 · 섬진강 · 낙동강 수계이다. 이들 외에 서해로 흐르는 주진천(인천강) 및 불갑천, 남해로 흐르는 수어천 및 이사천 등이 있다.

영산강 수계의 집수역은 장성군 · 담양군 · 화순군 · 광주광역시 · 나주시 · 함평군 · 무안군 · 영암군 등에 걸쳐 약 3,371㎢로, 호남권 전체 면적의 약 16%를 차지한다. 하구(영상강 하구둑)에서 가장 긴 거리(최장유로(最長流路))는 담양군 용면 용추봉(570m) 남쪽 계곡까

지 약 136Km이다. 최장유로에 해당하는 강(본류)의 가장 상류 지점을 그 하천의 발원지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일정 하천의 발원지는 그 하천의 분수계 전체이다. 그 이유는 분수계 안의 지표수 및 지하수가 모여서 그 강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림 2-15〉 호남권의 수계도

영산강 수계의 주요 지류는 광주천(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에서 서구 치평동까지의 24Km), 황룡강(장성군 북하면 신성리~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 : 61Km), 지석천(화순군 이양면 중리~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 53Km), 고막원천(장성군 삼서면 학성리~나주시 다시면 동당리 : 39Km), 함평천(영광군 군남면 대덕리~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사포 : 32Km)이다(영산강환경관리청, 1995). 감조구간은 하구둑 완공(1981) 이전에는 하구에서 39Km 거리인 나주시 토계동까지였으며 영산포(나주시 영산동)까지 작은 배들의 운항이 가능했다.

영산강 수계의 물 자원 이용율(물 자원 부존양에 대한 총이용량의 비율)은 30~40%로, 높은 편이다. 전체 이용양 중에서 약 63%가 농업용수로 이용된다(수자원공사 홈 페이지(kowaco.or.kr)에 따른 것으로 생활, 공업, 농업, 하천유지 용수 중의 비율임). 이처럼 농업용수 이용율이 높은 것은 1970년대의 영상강유역 농업종합개발의 결과로, 이 과정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만경강 수계의 집수역은 완주군 · 전주시 · 김제시 · 익산시 등에 걸친 1,570㎢, 최장유로는 하구(군산시 대야면과 김제시 만경읍 사이)에서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율치 북동쪽까지 74Km이다. 주요 지류는 소양천(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용진면 구만리 : 27Km), 전주천(상관면 용암리~전주시 덕진동 : 30Km), 삼천(구이면 백여리 : 25Km)이다. 감조구간은 하구에서 30Km 거리인 익산군 춘포면 대장촌까지이다.

만경강 수계의 물 자원 이용율은 40~50%로 높으며, 이 중에서 67%가 농업용수로 이용된다. 이런 물 자원 이용은 1920년대 이래, 상류부에 대아저수지, 경천저수지를 만들고 이 물을 대간선수로를 통해 군산 옥구저수지까지 이동시켜 옥구반도 서쪽의 미옥(미면-옥구) 간척지 등의 관개용수로 이용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동진강 수계의 집수역은 정읍시 · 김재시 · 부안군 · 고창군에 걸쳐 1,000㎢, 최장유로는 하구(김제시 죽산면과 부안군 동진면 사이)에서 정읍시 산외면 종산리 팽나무정까지 약 41Km이다. 주요 지류는 원평천(김제시 금산면 화율리~하구 : 26Km), 정읍천(내장산 연지봉 동쪽~신태인읍 우령리 : 23Km), 고부천(고창군 신림면 도림리~하구 : 28Km)이다. 감조구간은 하구에서 20Km 거리인 정읍시 신태인까지이다.

동진강 수계의 물 자원 이용율은 30~40%로 높은 편이며, 이 중에서 90% 이상이 농업용

수로 이용된다. 이처럼 우리나라 최고 비율의 농업용수로의 물 자원 이용은 동진강 하구 연안 간척지의 관개용수 때문으로,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탐진강 수계의 집수역은 장흥군과 영암군 및 강진군 일부에 걸쳐 508㎢, 최장유로는 하구(강진군 강진읍과 군동면 사이)에서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까지의 55Km이다. 물 자원 이용율은 10~20%로 낮았으나, 2003년 말에 탐진강다목적댐이 완공되었으므로 높아질 것이다.

섬진강 수계의 집수역은 진안군 · 순창군 · 임실군 · 남원시 · 곡성군 · 구례군 · 화순군 · 보성군 · 순천시 및 광양시 일부와 경남 하동군(하구에서 화개까지 35Km 거리의 본류 및 그 동쪽 지류)의 4,896㎢ 로, 대부분이 호남권이다. 최장유로는 하구에서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팔공산(1151m) 서쪽 계곡까지 212Km이다. 호남권의 주요 지류는 오수천(장수군 산서면 오성리~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 40Km), 요천(장수읍 대성리~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 52Km), 보성강(보성군 웅치면 봉산리~곡성군 오곡면 압록 : 120Km)이다. 감조구간은 하구에서 25Km인 광양시 다압면 항동나루터까지이다.

섬진강 수계의 물 자원 이용율은 10~20%로 낮은 편이며, 이 중에서 약 78%가 농업용수로 이용된다. 이 수계에 보성강댐, 섬진강다목적댐(옥정호), 동복댐, 주암다목적댐이 있으며 이들의 물 자원 이용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금강 수계의 집수역은 9,810㎢, 최장유로는 군산과 장항 사이의 하구에서 장수읍 수분리(섬진강과의 분수계인 수분치(水分峙)가 있음) 신무산(897m) 동쪽 계곡까지 396Km이다. 금강 수계 중, 호남권에 속하는 집수역은 하구에서 45Km까지의 군산시 및 익산시 망성면(충남 강경읍과 인접함)의 하류역과 305Km 거리(무주읍 앞섬과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의 접경)이상의 상류역인 무주군(남대천) · 진안군(구리향천, 정자천, 주자천) · 장수군이다.

1990년에 하구에서 10Km 거리인 군산시 성산면과 충남 마서면 사이에 길이 1,840m의 금강하구둑이 완공되어, 하구에서 65Km 거리인 부여 규암까지 영향 미쳤던 감조구간이 없어졌다. 금강 하구에서 335Km 거리인 용담면 옥거리의 강바닥 해발고도 200m에 높이 70m의 용담다목적댐이 2001년에 완공되었다. 옥정호의 면적은 약 36㎢로, 진안군에 속하는 구리향천, 정자천, 주자천 연안 해발고도 265m 까지 용담면 · 정천면 · 안천면 · 상전면과 진안읍 및 주천면 일부가 수몰되었다.

낙동강 수계의 집수역에 속하는 호남권은 지리산지 북동부인 남원시 운봉읍(광천) · 아영면 · 인월면 · 산내면(만수천)으로, 이들 낙동강 상류 지류는 임천(경남 함양군 마천면 등)을 지나 진주 남강으로 흘러든다.

주진천(인천강)의 집수역은 고창군 성송면 · 고창읍 · 아산면(선운산 또는 경각산(444m) 등) 등 229㎢이며, 최장유로는 곰소만 남쪽 하구에서(하류를 풍천이라고도 부름) 성송면 구황산(450m) 서쪽 계곡까지 28Km이다. 불갑천의 집수역은 영광군 불갑면 · 백수읍 · 염산면 등 181㎢이며, 최장유로는 백수읍 하사리와 염산면 송암리 사이의 하구에서 불갑면 자비리 계곡까지 25Km이다. 불갑저수지는 불갑천 연안 평야 및 하구 간척지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1926년에 축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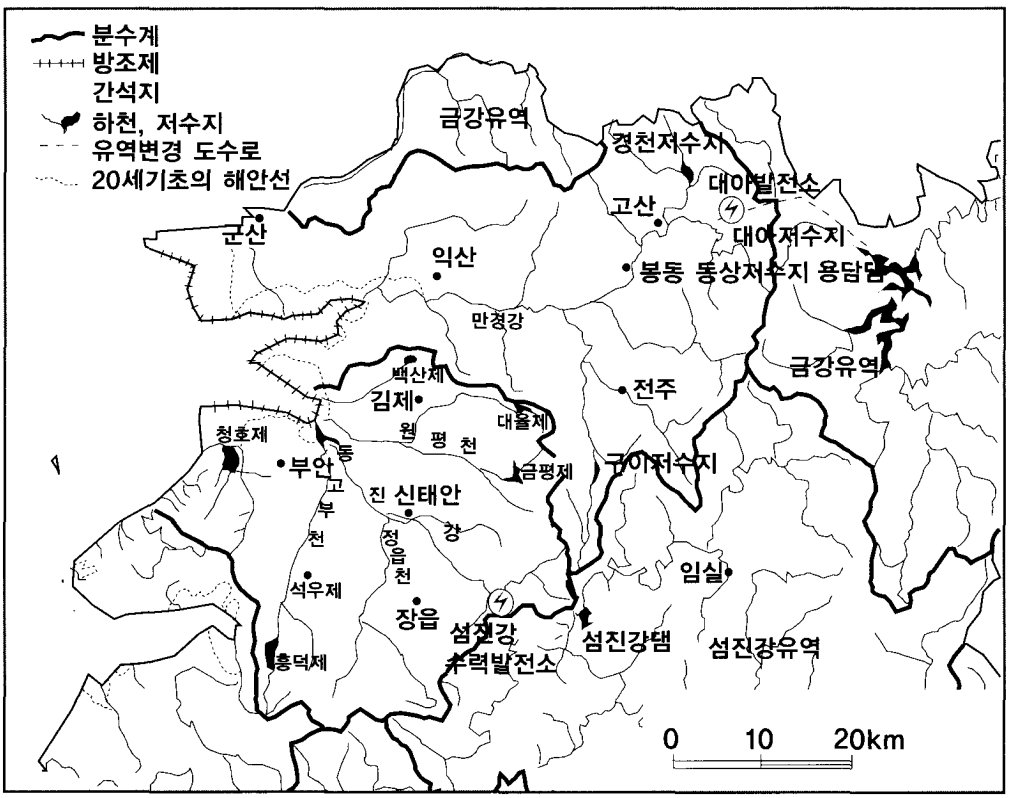
수어천의 집수역은 지리산지 남부인 백운산(1217m)-매봉(862m) 남사면 등 120㎢이며, 최장유로는 광양제철소 북쪽 하구에서 백운산 남동쪽 계곡까지 36Km)이다. 광양제철소의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수어댐(1978년 준공)이 있다. 이사천의 집수역은 순천시 승주읍 유치산(530m)-문유산(688m)의 남사면 및 조계산(884m) 동사면과 상사면 등 198㎢이며, 최장유로는 순천만 하구에서 유치산 남쪽 계곡까지 45Km이다. 1992년 이사천댐의 완공으로 주암다목적댐의 조정지인 상사호가 만들어졌다. (집수역 면적 등은 『우리ㄱㄹ름 길라잡이』, 건교부(2002)에 따름)

(2) 유역변경에 의한 물 자원 확보와 간척

호남권 농업개발의 특징은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지세를 이용하여 유역 변경시킨 물 자원을 간척지의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유역변경식 농업개발 방식은 수력발전의 한 방법을 응용한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공업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여 여러 나라들은 유역변경식에 의한 수력발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1916~1928년에 걸쳐 조선의 수력전원(水力電源)을 조사하여 17개 수계에서 145개소의 유역변경에 의한 수력발전 가능 지점을 발견하였다(이 중에 섬진강 수계에서는 2개 지점이 있음). 이런 조사에 의해서 1928년 압록강 수계에서 부전강수력발전소가 건설되었다(『동진농지개량조합 50년사』, 11-12쪽).

임실군 운암면(섬진강 집수역)과 정읍시 산내면(동진강 집수역)은 노령산맥으로 인접하여 섬진강의 강바닥 해발고도는 155m이나 동진강의 강바닥은 55m로, 유역변경시키면 100m 이상의 낙차가 가능하다. 1927년 운암제와 김제시 광활면 간척지(10Km의 방조제 축조로 약 18㎢를 간척)가 완공되었다(남궁 봉, 1990). 1931년에는 제2의 터널을 뚫고 운암발전소를, 1945년에는 제3의 터널로 칠보발전소를 건설하여 섬진강 물이 터널(수도(隧道))을 통해 유역 변경되어 발전용수 및 동진강 하구 간척지 농업용수로 다목적으로 이용되게 되었다(그림 2-16 , 그림 2-18).

1965년에는 운암제보다 더 높게 섬진강다목적댐(옥정호)이 완공되고, 추가로 확보된 물은 1968년에 약 13Km의 방조제 축조가 약 40㎢의 간척지 완료된 계화도간척지(40㎢의 간척지는 1978년 완공)의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운암발전소는 폐쇄되고 칠



〈그림 2-16〉 개발 전 · 후의 군산, 김제, 부안 일대 및 서해안의 지형

보발전소가 섬진강수력발전소로 이름을 바꾸어 운행 중이다. 운암발전소 폐쇄로 발전소 건물은 팔리고 터널은 방치되어 있다. 터널 출구와 발전소 건물을 산업유적의 박물관으로 복구하여 광활 및 계화간척지와 연계시키면 관광 자원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금강 상류의 용담다목적댐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추진되다가 1992년 착공되어 2001년 완공되었으며 유역변경식이다. 용담호의 금강 물은 댐에서 본 수계의 발전용수로 이용되며, 한편으로는 도수터널을 통해 서쪽의 만경강 유역으로 유역 변경되어 대아발전소에서 발전용수, 고산정수장에서 전주시 · 익산시 · 군산시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로 보내진다(그림 2-16).

섬진강 수계의 보성강댐도 유역변경식이다. 1937년 보성강 상류인 보성군 겸백면 용산리에 보성강댐이 완공되었다. 보성호의 섬진강 물은 남해안 쪽으로 도수터널을 통해 분수계를 넘어 유역 변경되어 득량면 삼정리에서 발전용수(보성강발전소)가 된 후, 1940년에 완공된 득량간척지(약 4㎢)의 농업용수로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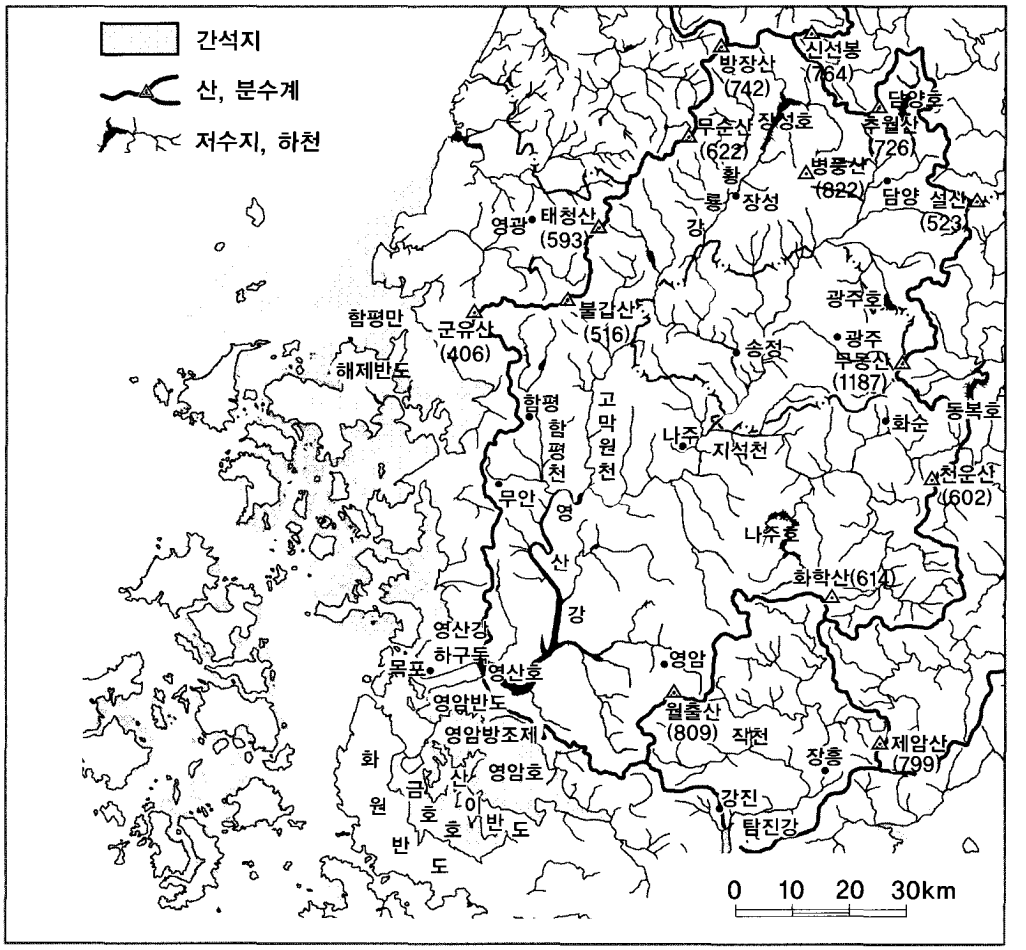
1992년 완공된 주암다목적댐(면적 : 33㎢)도 섬진강 물을 유역 변경하여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댐과 본 수계 발전소는 승주군 주암면 대광리에 있다. 주암호의 섬진강 물은 11Km 길이의 도수터널을 통해 남동쪽으로 분수계를 넘어 이사천으로 유역 변경되어(상사호) 발전용수가 된 후, 순천시 · 여수시 · 광양시의 생활 및 공업용수로 이용된다. 한편, 주암호 및 동복호의 섬진강 물은 도수터널을 통해 서쪽으로 분수계를 넘어 영산강 집수역으로 유역 변경된 후 광주광역시 · 화순군 · 나주시 · 목포시의 생활 및 공업용수로 이용된다.

(3) 홍수 조절과 간척

홍수 때 범람이 잦았던 영산강 중류 연안은 1970년대 영산강유역 농업종합개발계획의 추진으로 범람 빈도가 크게 줄어들었다. 1단계 사업으로 상류에 장성호 · 담양호 · 광주호 · 나주호의 4개 홍수 조절 및 농업용수 저수지가 1977년까지 준공되었다. 장성호(댐 높이 : 36m, 길이 : 603m, 만수 면적 : 6.9㎢)는 황룡강 상류(장성군 장성읍)에, 담양호(댐 높이 : 46m, 길이 : 316m, 만수 면적 : 4.1㎢)는 영산강 본류 상류(담양군 용면)에, 광주호(댐 높이 : 25m, 길이 : 505m, 만수 면적 : 1.9㎢)는 영산강 본류 상류(담양군 고서면)에, 나주호(댐

높이 : 31m, 길이 : 496m, 만수 면적 : 7.8㎢)는 지석천 상류(나주시 다도면)에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1단계 사업으로 영산강 상류부가 넓게 수몰되었다. 이들 농업용 저수지는 영산강 중류 지대 평야부의 관개용수 확보와 홍수기의 수리 조절을 위한 것들이다(그림 2-17).

영산강유역 농업종합개발계획의 2단계(1978-1981)는 영산강하구둑의 축조와 하류 연안의 간척 및 홍수에 따른 침수방지 사업으로, 이에 의해서 영산강 하류의 수문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 영산강의 감조구간은 하상의 해발고도 3m 내외인 영산포(현재의 나주시 영산



〈그림 2-17〉 영산강 유역의 댐과 하구 연안의 간척

동, 영강동) 및 나주시 토계동까지로, 홍수기에는 이 일대 해발고도 10m 미만의 충적평야 지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었다.

영산강하구둑(길이 : 4,530m, 높이 : 20m)이 1978년 착공하여 1981년 12월에 준공되어, 영산강 하류부에서 감조(感潮)현상이 없어져서 홍수기에 만조에 따른 밀물 때의 침수가 방지되었다. 이와 함께 영산강하구둑에 의한 담수호인 영산호(만수 면적 : 34.6㎢) 침수선 밖의 영산강 하류 연안에 제방을 쌓아 하구둑 축조 이전의 하류부 갯벌 55㎢을 간척하였다. 더불어 영산강하구둑 내의 간척은 [표 2-4]의 영산강Ⅱ에 해당한다. 간척한 갯벌 면적 보다 매립 면적이 더 넓은 것은 갯벌과 방조제 사이를 매립하여 간척지를 넓게 하기 때문이다.

[표 2-4] 1970년대 이후의 호남권 간척지

* 100ha은 1㎢임

간척지 이름	위치	매립면적 (ha)	담수호 면적(ha)	방조제 길이(km)	착공-준공 연도	비 고
새만금	전북 부안	40,100	11,800	33.0	1991～	2003년 7월 일시중단
군장국가공단 (군산 · 장항지구)	군산, 장항	15,000			1989	단계별로 간척하고 있음
대불공단	영산강 하구	1,500			1989～	〃
영산강 Ⅱ	전남 영암	10,800	3,460	8.6	1978～82	
영산강 Ⅲ-1	전남 영암	12,800	4,300	2.2	1988～93	영암국가산업단지
영산강 Ⅲ-2	전남 해남	7,400	2,300	2.1	1989～2005	
해 남	전남 해남	3,000	830	1.9	1985～88	
만 덕	전남 강진	315		3.0	1989～96	
사 내	전남 강진	820		3.2	1989～97	
해창만	전남 고흥	2,700		3.4	1978～92	
강 산	전남 고흥	209		1.3	1988～94	
고 흥	전남 고흥	3,100	750	2.8	1991～96	
보 전	전남 진도	290		0.9	1987～95	
군 내	전남 진도	900		3.2	1991～96	
약 산	전남 완도	257		1.3	1987～96	
완 도	전남 완도	370		1.1	1989～96	
고 금	전남 완도	243		1.7	199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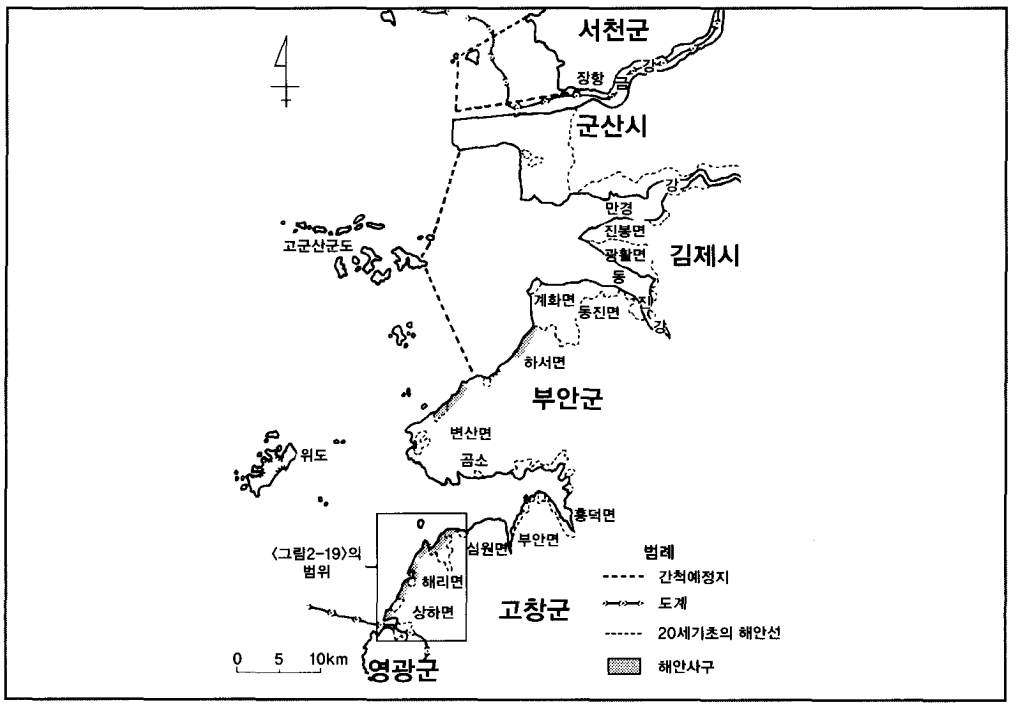
출처 : 「한국의 갯벌」, 고철환 엮음(2001), 82-83쪽 [표 2]에서 호남권을 발췌함

영산호의 담수는 16개소의 양수장과 164㎞의 간선수로를 통하여 상류쪽으로 다단계 양수되어 농경지 207㎢의 관개용수로 이용된다.

(4) 해안 간척과 간척지 토지이용의 변화

[표 2-4]는 1970년대 이후 호남권의 간척 현황으로, 영산강하구둑 내의 간척(영산강Ⅱ) 후 1980년대 이래로 영산강 하구 남쪽에 대규모 간척사업이 이루어졌다(그림 2-17). 영산강 Ⅲ-1 간척지는 2.2Km의 영암방조제를 축조하여 만들어진 영암호 주변 128㎢의 갯벌 및 매립지이다. 이 간척 매립지는 대불공단과 함께 영암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다. 영산강 Ⅲ-2 간척지는 2.1Km의 금호1 및 2방조제 축조로 만들어진 금호호 주변에 74㎢의 간척 매립지를 만들고 있다(2005년 완공 예정).

광양제철소는 1982년 이래, 섬진강 및 수어천 하구의 금당도와 태인도 주변의 갯벌을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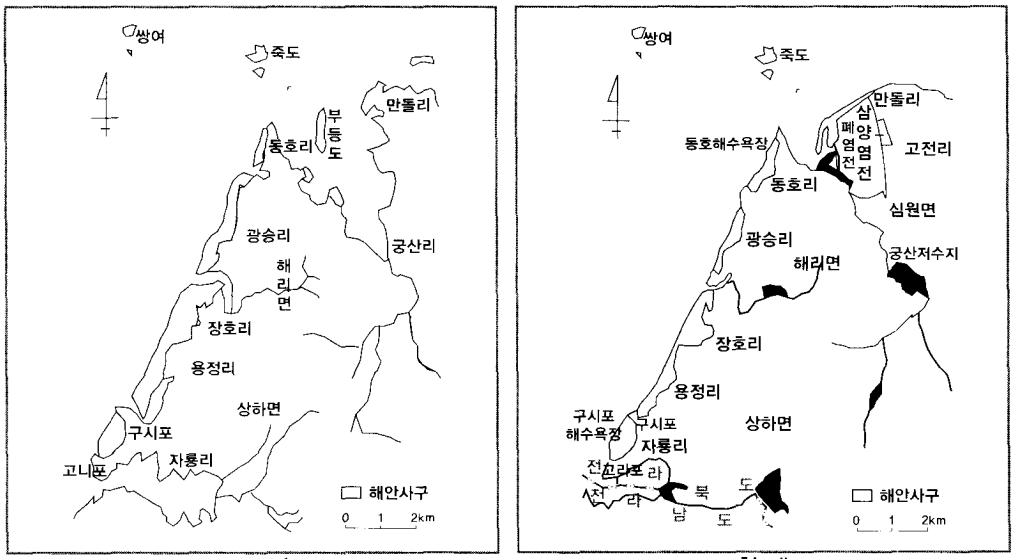
〈그림 2-18〉 전북의 해안선 변화와 해안사구 분포

립하여 세워졌다. 이 후, 대불공단(1989년 착공)과 군장국가공단의 군산지구(1989년 착공)가 만들어져 해안 및 하구의 대규모 간척과 매립에 의한 공업단지 조성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농경지를 만들기 위한 간척사업은 해남군 · 강진군 · 고흥군 · 진도군 · 완도군 해안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 끝나고 새만금간척사업만 남아 있다(표 2-4).

1991년 착공된 새만금간척사업은 33Km의 방조제 중, 수문 설치 구간 2.7Km 만 남기고 물막이 공사가 일시 중단되고 있다. 이는 간척지의 토지이용의 변화, 습지로서의 갯벌 기능의 재인식, 시화호에서 촉발된 수질오염 문제 등을 내세운 반대와 법정소송 때문이다.

〈그림 2-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부터 100여년 전의 전북 해안선은 현재와는 매우 달랐다. 이는 1920년대 이래의 간척, 특히 군산시 산북동 및 옥서면(미옥간척지), 김제시 광활면(광활간척지), 부안군 계화면(계화도간척지) 등의 대부분 토지는 대규모로 간척된 것들이다. 새만금간척사업은 이와 같은 금강 · 만경강 · 동진강 하구의 간척을 더욱 확대시켜 이들 하구 갯벌 전체를 간척하려는 원대한 구상이다.

간척지의 토지이용은 곰소만 남쪽 해안에서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9〉는 고창군 해안과 심원면 삼양염전의 간척 이전과 현재의 해안선 변화를 나타낸다. 심원면 삼



1934년 현 재

〈그림 2-19〉 고창군의 해안선 및 해안사구 분포의 변화

양염전 일대는 간척 전(〈그림 2-19〉의 1934년)에는 곰소만 남쪽의 만입지(후미)였다. 당시에는 갯벌이였던 만의 입구(만돌리와 부등도 사이)를 1936년 4월부터 1937년 6월의 14개월에 걸쳐 방조제로 막아 7.3㎢의 간척지를 만들고, 그 저수지로 상류 쪽에 궁산저수지를 만들어 해리농장이 되었다.

해리농장은 1949년 이래, 일부는 염전으로 전환되고 1985에는 3㎢가 염전이 되어 이름도 삼양염전으로 바꾸었다. 1992년에는 중국산 소금의 수입 등으로 경제성이 떨어져서 염전은 고전리 쪽의 0.6㎢로 축소되고 나머지 2.4㎢는 폐염전으로 방치되고 있다(〈그림 2-19〉의 현재). 폐염전을 포함한 이 일대는 현재, 골프장을 만들고 있다(고창 동호골프장 21홀 예정).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및 장호리, 상하면 구시포에는 지금부터 70여년 전에는 동호(冬湖), 장호(長湖), 구시포(九市浦)라는 석호가 있었다. 서해안과 동해안 석호들의 차이는 밀물과 썰물의 해수위 차이(조차) 때문이다. 조차가 작은 동해안에서 석호는 썰물 때도 호수에 물이 차있으나, 서해안에서는 조차가 크기 때문에 밀물 때만 물이 차서 호수로 느끼기 어렵다. 서해안의 석호들은 썰물 때, 바닥이 드러나는 갯벌로 염전과 간척지를 만들기 적합한 지대여서, 서해안의 석호들은 대부분이 간척되어 그 흔적은 이름으로만 남아 있다. 동호 자리는 삼정염전으로 이용되다가 현재는 내수면 수산연구소, 장호는 간척되어 농경지, 구시포는 구시염전으로 이용되다가 현재는 폐염전으로 방치되고 있다.

곰소만과 그 남쪽 일대의 만입지(후미)는 만입지의 간척 → 농경지 → 염전 → 새우 양식장으로 토지이용이 변화된 곳들이 많다. 그러나 이런 토지이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갯벌, 북서계절풍, 방조제와 해안사구 및 사초와 소나무 숲에 의해서 해안사구는 계속적으로 특히 겨울철에 내륙 쪽으로 전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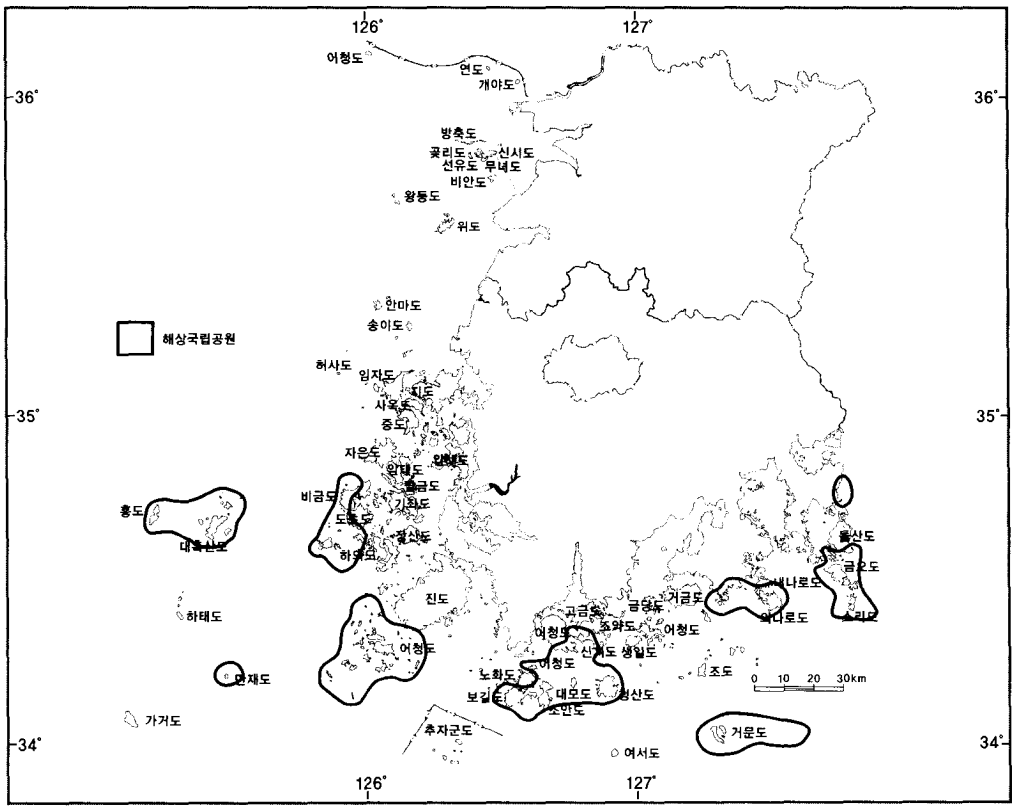
새만금간척사업은 1920년대 이래, 호남권의 해안 간척의 관성(慣性)에서 비롯된 개발 구상일 것으로, 부안군 위도 핵폐기장 선정에 대한 갈등과 함께 전국적인 환경문제가 되고 있다.

3) 섬들의 관리와 보전

(1) 해상국립공원과 유인도의 관리

〈그림 2-20〉은 호남권 섬들의 분포와 해상국립공원을 지도화한 것이다. 호남권에는 해상국립공원으로 다도해해상 국립공원과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일부가 지정되어 있다(변산반도국립공원은 바다까지 포함).

신안군 · 진도군 · 완도군 · 고흥군 · 여수시에 걸쳐 육지의 해안, 해상, 섬들을 포함하여 약 2,322㎢가 1981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 해상국립공원은 흑산 및 홍도, 만재도, 도초도, 조도, 소안 및 청산, 나로도, 거문도 및 백도, 금오도 지구의 8개 구역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홍도는 기반암이 자줏빛의 규암과 사암의 교대층으로 다양한 지형을 나타낸다. 소안 및 청산지구에 속하는 신지도 명사십리해수욕장에는 해안사구 외에 해안단구와 석호가 있어 해안지형이 다양하다. 그러나 흑산도에서는 어업전진기지의 방파제를 쌓기 위한 채석으로, 금오도에서는 유자과수원과 해안도로 개설로 사면이 불안정해져



〈그림 2-20〉 호남권 섬들의 분포

서 토양포행으로 산지들이 붕괴되고 있다.

여수시에서 경남 거제시에 이르는 한려수도 연안의 약 546㎢가 1968년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 해상국립공원은 6개 구역으로 나뉘어 관리되며, 이 중에서 여수시 동쪽의 오동도지구가 호남권에 속한다. 오동도는 740m의 방파제로 여수반도와 연육되어 있으며 동백나무숲 등 상록활엽수림으로 덮여 있다.

진도는 해남 화원반도와 진도대교로, 완도는 해남 남창과 완도연륙교로 연륙되었다. 군산시 옥도면인 고군산군도의 섬들 중 서로 가까운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대장도 사이는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연도교(連島橋)로 연결된다. 신안군의 섬들 중에서 서로 가까운 자은도와 암태도는 은암대교로, 팔금도와 안좌도는 안좌팔금연도교로, 비금도와 도초도는 서남문대교로 연결된다. 현재 목포와 압해도 사이, 지도와 임자도 사이에 연륙교를 만들고 있다. 압해도와 암태도 사이 등에서 연도교를 놓을 예정이므로 이런 다리들이 완공되면 신안군의 유인도는 대부분이 연륙되게 된다.

유인도의 환경 문제는 바다로 내륙과 격리되어 있어서 생활용수가 부족하고 양식장 등에서의 버린 어구(漁具)와 스티로폼 등, 쓰레기 처리의 어려움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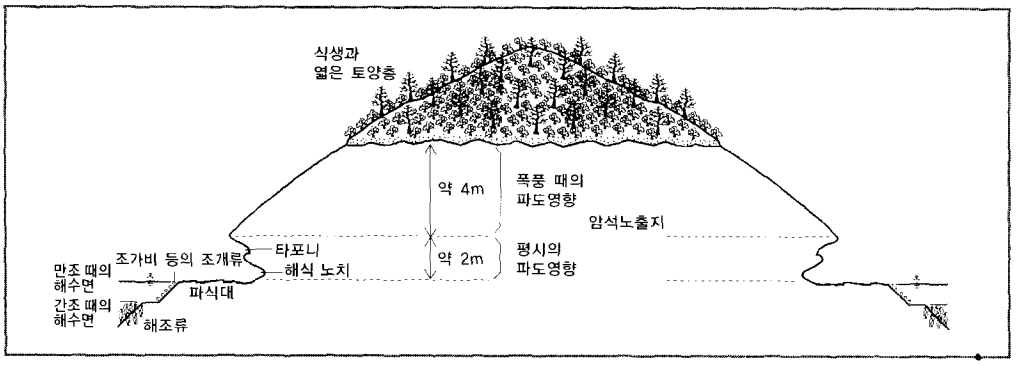
(2) 무인도의 관리와 보전

호남권의 무인도는 1,770개(전남이 1,687개 전북이 83개)로 전국 무인도 2,684개 중, 약 66%를 차지한다(「도서지」, 내무부, 1985). 호남권 무인도의 지형 경관은 내해형(內海型) 및 외해형(外海型)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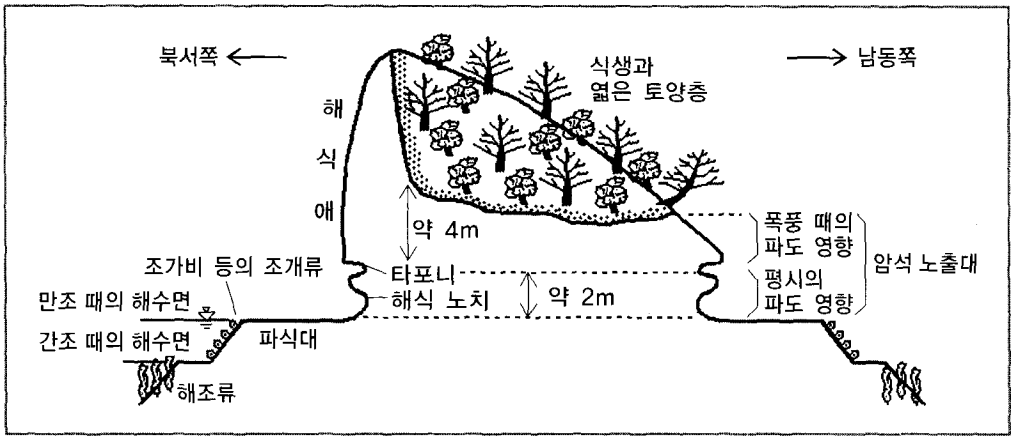
내해형 무인도는 주변의 여러 섬들이 자연의 방파제가 되어 탁월풍(겨울철의 북서풍)에 의한 파도의 침식이 약해서, 섬 전체가 대칭적으로 모자 모양을 이룬다. 여러 방향에서의 파도와 좁은 수로(수도(水道))에서 간조 · 만조에 따른 강한 조류(潮流)의 침식작용으로, 만조 때와 간조 때의 해수준 부근에 파식대가 발달하며, 이 침식작용은 특히 만조 때에 강하고, 최대 폭은 10여 m에 이른다. 파식대에 수직으로 접하여 해식애가 발달해 있으며, 그 하단 약 2m까지에는 해식 노치(notch)와 타포니(tafoni)가 형성되는데 이들은 평시의 파도와 물보라의 영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에 연속하여 높이 약 4m 구간이 암석 노출대이다. 이

지대는 폭풍 때의 파도 침식 때문에 토양이 만들어지거나 유지될 수 없어, 기반암이 드러난 경관을 이룬다. 이에 인접하여 식생과 엷은 토양으로 덮인 사면(斜面(slope))이나 산지가 연속된다. 신안군 하의면 및 장산면, 여수시 돌산읍 등에 속하는 무인도들은 내해형이다.

외해형(外海型) 무인도들은 북서부가 남동부에 비해서 급경사나 수직의 해식애를 나타내며, 남동부가 식생과 엷은 토양으로 덮인 사면이나 산지로, 섬 전체의 모양이 비대칭적이다. 이는 이 섬들이 서해의 외해에 위치하여 특히, 겨울철에 북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북서



내해형(內海型) 무인도



외해형(外海型) 무인도

〈그림 2-21〉 내해형 무인도와 외해형 무인도의 지형 경관 개념도

출처 : 전국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전라남도 신안 Ⅳ, 환경부(2002)

부가 파도의 침식을 많이 받기 때문일 것이다. 신안군 흑산면에 속하는 무인도들은 외해형이다.

내 · 외해형 무인도의 산지 및 사면은 표층이 부스러지거나 흘러내리기 쉬운 토양과 풍화대여서 매우 불안정하다. 산지 및 사면에서 암석 노출대의 경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토양과 풍화대는 미끄러져(mass movement; 중력에 의한 물질의 집단 이동) 토양포행(soil creep)이나 산사태가 나타나게 된다. 암석 노출대에 가까이 있는 나무들이 쓰러지거나 밑줄기가 굽어 있는 것, 나무들이 말라죽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가축의 방목으로 식생이 줄어들어 사면 표층부의 메스 무브먼트는 더 심해지고 있다.

섬의 주변부 끝자락에 해당하는 이런 암석 노출대에 채석장이 만들어지면, 사면이 더욱더 불안정해져서 토양포행이 빈번해지게 된다. 무인도에서 산지 및 사면의 엷은 토양층이 토양포행으로 제거되면, 무인도는 식생이 덮이지 않은 바위섬으로 바뀌게 된다. 무인도가 생물의 서식지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살기 어려운 빈 집인 것은 파도의 침식에 의한 급경사의 암석 노출대, 불안정한 지표 등 그 지형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 양식장이나 어장에서 쓸려 온 대나무, 스티로폼 등의 어구, 낚시꾼들이 버린 쓰레기, 흑염소 등의 가축의 방목에 따른 식생 훼손과 채석장 등으로 그 취약함은 더 심해지고 있다.

위와 같은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주변 연안과 도서 주민들 및 바다 낚시꾼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도서지대의 쓰레기 수집 및 처리를 지원하면서 가축의 방목을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3. 자연재해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해일, 폭설,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명과 재산 등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자연재해 중, 호남권의 자연재해는 매년 한두 차례의 태풍 내습에 따른 풍수해이다. 이에 최근 10년 동안의 호남권 풍수해의 피해현황을 정리한 것이 [표 2-5] 및 [표 2-6]이다.

태풍 내습에 따른 호남권의 주요 피해는 다도해 등 바다와 항구에서의 선박과 섬지역의 피해, 영산강 등 하천 연안의 농경지 침수, 덕유산지 및 지리산지 등의 산사태와 계곡 주변

[표 2-5] 전북지역 풍수해 피해현황(연도별)

년도	사망 및 실종	이재민	침수면적 (ha)	피해액(천원)				
				건물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기타
1993	5	962	16,142	12,931	648,978	180,341	5,622,133	2,485,347
1994	.	1,502	133	15,373	114,832	.	1,146,465	4,018,472
1995	1	365	5,295	32,372	490,294	2,108,136	13,615,752	2,596,129
1996	.	25	5,544	5,896	.	26,236	1,442,358	22,216,575
1997	.	168	9,585	68,499	15,186	250,265	7,082,795	4,707,683
1998	7	272	3,085	240,839	44,412	421,088	17,377,549	3,315,941
1999	2	70	24	863,830	399,847	10,729	4,660,421	34,368,033
2000	6	166	11,041	1,222,036	1,649,819	156,954	18,423,554	2,360,984
2001	1	12	1,599	74,000	.	278,452	12,146,280	4,302,691
2002	18	878	1,862	1,665,900	240,361	21,240,950	259,466,275	38,031,190

출처 : 통계청(www.nso.go.kr)/통계연보

[표 2-6] 전남 · 광주지역 풍수해 피해현황(연도별)

년도	사망 및 실종	이재민	침수면적 (ha)	피해액(천원)				
				건물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기타
1993	31	5994	17,242	185,842	1,056453	1,331,023	11,224,870	3,276,267
1994	7	2166	7.0	132,699	397,146	.	1,697,519	15,886,923
1995	41	4005	2,214	1,144,018	1,050,190	277,962	13,058,117	23,807,221
1996	10	128	2,988	58,362				
1997	12	1298	5,082	135,776				
1998	30	297	47,421	1,524,306				
1999	13	3119	17,946	9,006,811				
2000	2	429	5,043	2,963,963				
2001	1	43	9,310	298,692				
2002	22	1067	58,274	11,726,688				

출처 : 통계청(www.nso.go.kr)/통계연보

야영객의 인명 피해 등이다. 특히 피해가 컸던 호남권의 풍수해를 태풍과 관련시켜 소급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04년 8월 17~19일 : 15호 태풍 메기에 따른 홍수로 영산강 지류인 지석천의 남평읍

연안, 만봉천(나주시 세지면~운곡동) 둑이 터진 운곡동 일대, 영산강 상류역 등이 침수되어 큰 피해가 있었다(박종관 · 양해근 · 조민경, 2004). 이 3일 동안의 강수량은 나주시 다도면이 457㎜로 전국 최다강수량을 나타냈다.

· 2003년 9월 12~13일 : 14호 태풍 매미 내습으로 전국에서 131이 사망 · 실종되었다. 전북에서는 14명이 숨지고 특히 무주군 설천면, 남원시 산내면 등 덕유산지와 지리산지 계곡물의 범람으로 도로 유실 및 침수 피해가 컸었다.

· 2002년 8월 30~9월 1일 : 15호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전국에서 246명의 인명피해가 나면서, 호남권에서는 4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이는 최근의 풍수해로는 기록적인 것으로, 특히 영동지방에서 피해가 심했다. 이 기간 중, 강릉에서 하루 강수량이 870㎜로 기상관측치 중, 최다강수량 기록하였으며, 고흥에서는 413㎜였다.

· 2000년 8월 31~9월 2일 : 12호 태풍 프라피툰으로 풍수해가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해남에는 100㎜의 강수량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이였다.

· 1998년 : 7월 31~8월 1일의 지리산 일대 집중호우로 진주 남강 유역에서 큰 피해가 나타났으며, 호남권에서는 지리산지의 산사태와 계곡 야영객들의 인명 피해가 나타났다. 이 기간에 전국에서는 324명이 사망 · 실종되었다. 9월 29~10월 1일에는 9호 태풍 야니의 내습으로 또 피해가 발생하여, 이 해에 호남권에서는 37명이 사망 · 실종되었다.

· 1995년 : 7월 23~24일의 3호 태풍 페이와 8월 25~27일의 7호 태풍 제니스의 영향으로 호남권에서는 42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1년 중, 바닷물 높이가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리(음력 7월 15일)를 전후해 군산시 및 목포시 해안 저지대에서 밀물 때, 침수 피해가 자주 일어난다. 이는 군산항의 경우 평균 조차가 6.2m, 목포항은 3.1m인데 비해서 백중사리 때는 군산이 7.6(내항)~8.0m(외항), 목포가 5.0~5.7m로 조차가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기간 중에 집중호우나 태풍에 따른 홍수나 해일이 겹칠 경우, 밀물 때의 수위는 1~2m 더 높아져 피해 지역이 더 넓어진다.

영산강하구둑과 금강하구둑의 완공으로 감조구간의 바닷물 침수 피해는 없어졌으나 섬진강 등 다른 하천의 감조구간과 방조제에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해안선 중, 갯벌 간척을 위한 방조제가 많은 호남권에서는 방조제의 지속적인 유지 · 관리가 필요하다. 1970년대 영산강유역 농업종합개발계획의 1단계 사업으로 영산강 중 · 하류 연안지대의 홍수 피해

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4년 8월의 만봉천 둑 붕괴에 따른 침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축조된 하천 둑도 지속적으로 관리 · 보수되어야 한다.

1990년대 이래, 전국의 연간 미지진 발생 횟수는 30회 내외로, 이 가운데 호남권을 진앙으로 발생한 것은 2001년의 경우 8회였다. 그러나 이에 따른 피해는 없었다.



제3장
전라지방 - 인구의 구조와 변동

조성욱 (전북대학교)

빈 면

제3장 인구의 구조와 변동

1. 인구의 구조와 분포

1) 인구 변화

호남 지역(전북, 전남, 광주)의 인구수는 최초로 인구센서스가 실시된 1925년 약 450만 명에서, 1949년 약 500만 명을 넘어서고, 1966년에는 약 657만 명으로 최고 인구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후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이촌향도로 인구수의 감소가 계속되어 1985년에는 600만 명 선이 무너지고, 2000년 현재의 인구수는 5,239,922명이다. 2000년도의 인구수는 최고 인구수를 기록했던 1966년 인구수의 약 80% 수준이다(표 3-1, 그림 3-1).

호남지역 인구수의 전국대비 비중은 해방 이전인 1944년에는 약 17% 수준이었으나, 해방 이후 사회적 요인과 자연증가의 영향으로 1949년에는 약 25.2%로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했다. 이 후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전국대비 약 20%대를 유지했으나, 1970년대 이 후 전국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하여 호남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여, 2000년도에는 약 11.36%까지 전국대비 비중이 감소했다(그림 3-2).

2000년 현재 호남지역 인구수는 최고 시기였던 1966년에 비해서 약 80% 수준이며, 전라북도는 약 75%, 전라남도는 약 50% 수준으로 인구수가 급감했지만, 광주광역시는 오히려 행정구역 분리 이후 약 150%의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다. 즉, 호남지역 전체 인구수가 감소하고, 전국대비 비중도 감소하는 경향 속에서도, 도시 지역인 광주광역시의 인구수는 계속 증가하여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간의 인구증감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의 극심한 인구 감소는 광주광역시의 행정구역 분리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전국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한데 비해서, 호남지역은 1966년을 정점으로 인구수가 약 20% 정도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 비중은 1949년 약 25.2%에서 2000년에는 약 11.36%로 감소했다. 또한 1925년에는 전북과 전남의 인구규모의 차이가 약 20만 명이었으나, 1966년에는 전남이 약 400만 명, 전북이 약 250만 명으로 약 150만 명까지 차이가 벌어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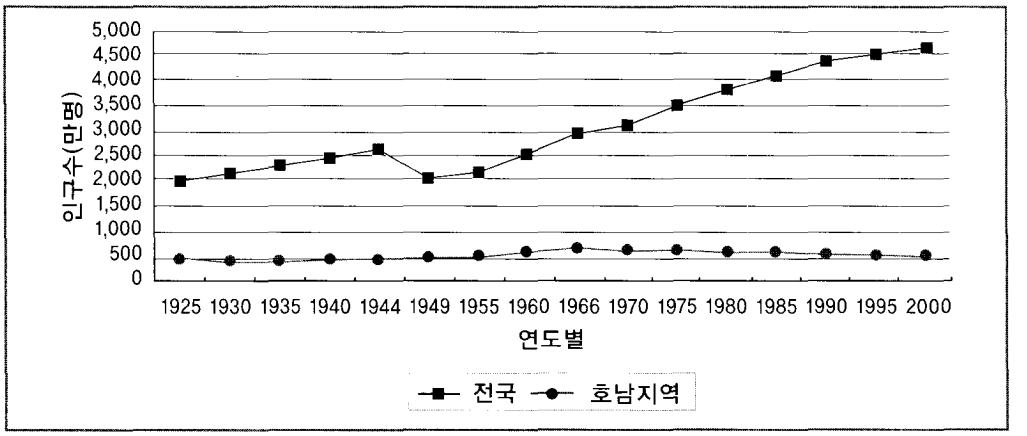
다. 광주와 전남을 합산하면 이러한 인구규모의 차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표 3-1] 호남 지역의 인구 변화와 전국대비 비중 변화(1925-2000)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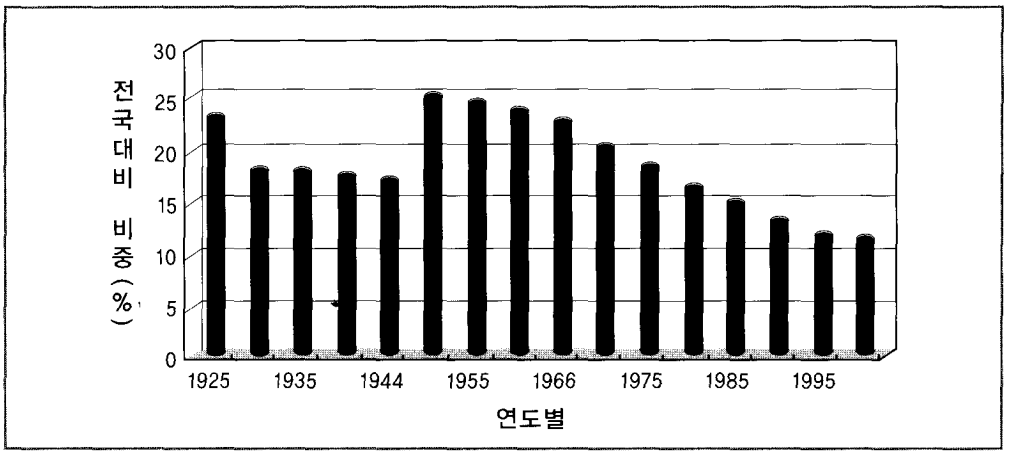
연도별	전국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호남지역	비중(%)
1925	19,522,945	2,158,513	2,332,572	-	4,491,085	23.00
1930	21,058,305	1,503,695	2,332,256	-	3,835,951	18.22
1935	22,899,038	1,607,236	2,508,346	-	4,115,582	17.98
1940	24,326,327	1,598,614	2,638,969	-	4,237,583	17.42
1944	25,900,142	1,673,041	2,747,814	-	4,420,855	17.07
1949	20,188,641	2,050,485	3,042,442	-	5,092,927	25.23
1955	21,502,386	2,124,521	3,126,377	-	5,250,898	24.42
1960	24,989,241	2,395,224	3,553,041	-	5,948,265	23.80
1966	29,159,640	2,521,207	4,048,769	-	6,569,976	22.53
1970	30,882,386	2,386,381	3,932,540	-	6,318,921	20.46
1975	34,706,620	2,456,403	3,984,123	-	6,440,526	18.56
1980	37,436,315	2,287,689	3,779,736	-	6,067,425	16.21
1985	40,448,486	2,202,078	3,748,428	-	5,950,506	14.71
1990	43,410,899	2,069,960	2,507,439	1,139,003	5,716,402	13.17
1995	44,608,726	1,902,044	2,066,842	1,257,636	5,226,522	11.72
2000	46,136,101	1,890,669	1,996,456	1,352,797	5,239,922	11.36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광주광역시는 1986년 11월 1일 전남에서 분리되었고, 1988년 1월 1일 전남의 송정시와 광산군을 편입함.



〈그림 3-1〉 전국과 호남지역의 인구수 비교(1925-2000)

출처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그림 3-2〉 호남지역 인구의 전국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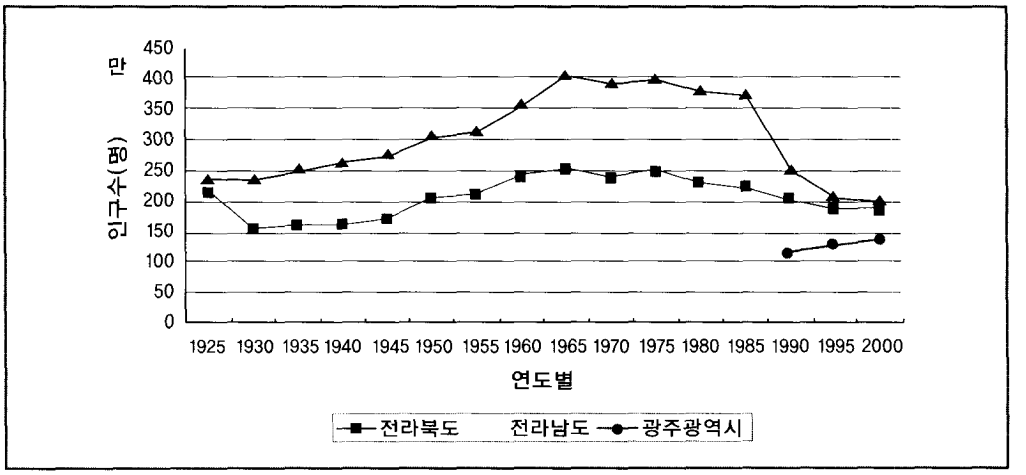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시도별 인구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그림 3-3), 전라북도는 1925년 인구수가 2,158,513명으로 전국대비 11.1%를 차지하였으나, 1930년대와 1940년대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약 150만 명으로 인구수가 감소했다. 그러나 1949년에는 약 200만 명으로 전국대비 10.2%를 차지했고, 이 후 인구수는 계속 증가하여 1966년 약 250만 명으로 최고에 도달했다. 이후 산업화와 이에 따른 이촌향도 등의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인구수가 감소하여, 1995년에는 200만 명 선이 무너지고, 2000년에는 1,890,669명으로, 전국대비 4.1%로 떨어졌다. 2000년도의 인구수는 인구수 최고의 시기였던 1966년 인구의 약 75% 수준이며, 전국대비 비중은 최고 시기였던 1925년의 11.1%에서 2000년 4.1%로 약 7%가 감소했다.

전라남도는 1925년 인구수가 2,332,572명으로 전국 인구의 약 11.9%를 차지하였다. 이 후 계속적인 인구 증가로 1949년에는 300만 명 선을 넘어섰으며, 1966년에는 400만 명 선을 넘어서 최고 인구시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 후 광주광역시의 분리와 이촌향도에 의해 인구수가 감소하여, 1990년에는 300만 명 선이 무너지고, 2000년에는 200만 명 선도 무너져, 2000년에 인구수가 1,996,456명으로 전국대비 비중이 4.3%까지 감소했다. 2000년도의 인구수는 최고의 시기였던 1966년 인구의 약 49.3% 수준이며, 전국대비 비중은 1966년 13.9%에서 2000년 4.3%로 약 9.6%가 감소했다. 이와 같이 전남 지역의 인구 감소가 극심했던 이유는 사회적 인구 이동의 영향도 있지만, 1986년 광주직할시로 행정구역이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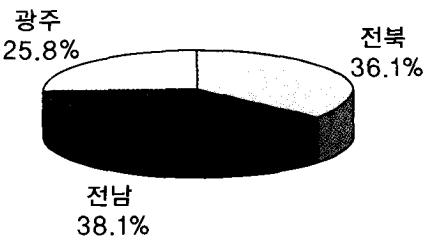
리된데 더 큰 원인이 있다. 전남과 광주의 인구를 합하면 3,349,253명으로(2000년도), 인구 최고 시기였던 1966년 인구수의 약 83%에 해당하여, 전북(75%)에 비해서 인구감소 폭은 작다.

광주광역시는 1986년 직할시로 전라남도에서 분리되고(1985년 인구수는 905,896명), 1988년 전남의 송정시와 광산군을 편입하여 면적의 증가와 함께 인구 증가가 계속되었다. 1988년에는 인구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2000년에는 1,352,797명으로, 전남에서 분리된 1986년에 비해서 인구수가 약 150% 증가했으며, 전국 대비 비중은 2.9%이다. 이와 같은 광주의 급격한 인구 증가는 전남과 전북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대조적이다.



〈그림 3-3〉 호남 지역의 인구수 변화(1925-2000, 시도별)

출처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그림 3-4〉 호남지역 내에서의 인구분포(2000년)

출처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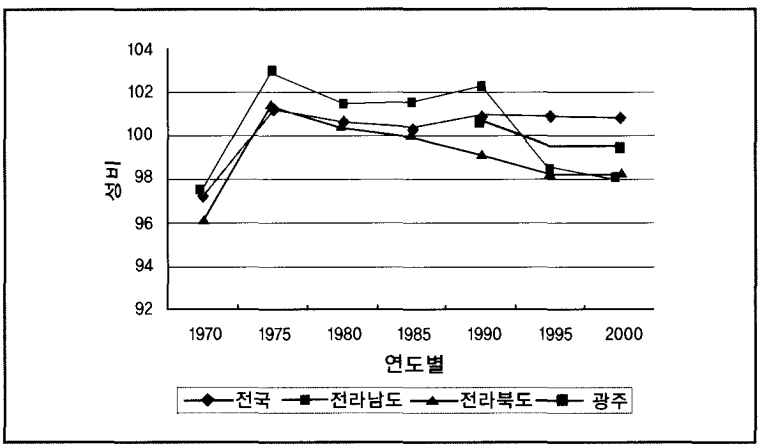
2000년도 인구를 기준으로 호남지역 내에서의 인구 비중은 전북이 약 36.1%, 전남이 약 38.1%, 광주가 약 25.8%를 차지한다(그림 3-4).

2) 인구 구조

(1) 성별 구조

인구의 성별 구조는 성비(sex ratio)로 나타내는데,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의 수이다. 2000년도 전국의 성비는 100.79로 남초현상을 보이지만, 호남 지역은 전북 98.19, 전남 98.02, 광주 99.36으로 여초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는 1980년대까지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남초현상을 보이다가, 1990년대 이후 여초현상으로 전환되었다. 전라북도는 1980년대부터 여초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여초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광주는 여초 현상이 나타나지만, 전북과 전남에 비해서는 정도가 약하다(그림 3-5, 표 3-2).

각 연령대별로 성비와 인구구조를 비교해 보면(표 3-3), 전국적으로 0-14세 인구의 비중은 1980년도 33.8%에서, 2000년도 21.0%로 약 12.9% 감소했는데, 전북(16.73% 감소)과



〈그림 3-5〉 전국과 호남 지역의 성비 비교

출처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표 3-2] 호남 지역의 성비 변화(1970-2000)

연도별	전국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1970	97.13	96.05	97.34	-
1975	101.25	101.4	102.77	-
1980	100.53	100.34	101.36	-
1985	100.19	99.98	101.43	-
1990	100.71	99.10	102.08	100.61
1995	100.76	98.22	98.16	99.46
2000	100.79	98.19	98.02	99.36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전남(18.06% 감소)은 감소 폭이 전국 평균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연령대에서는 전국과 호남 지역 모두 남초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5-64세 인구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1980년도 62.3%에서, 2000년도 71.7%로 약 9.4% 증가했는데, 전북(10.4% 증가), 전남(9.5% 증가)도 같은 경향성을 보여준다. 이 연령대에서 전국적으로 남초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인데, 호남지역의 경우 전북은 남초현상이 심화되는

[표 3-3] 호남지역의 연령별 성비

지역별	연도별	1980년		1990년		2000년	
	성별	성비	인구수(%)	성비	인구수(%)	성비	인구수(%)
전국	0-14	106.94	33.8	107.97	25.7	111.79	21.0
	15-64	100.30	62.3	101.78	69.4	102.53	71.7
	65이상	59.50	3.9	59.98	5.0	61.76	7.3
전라북도	0-14	105.00	37.0	104.62	25.8	108.00	20.3
	15-64	101.82	58.1	102.13	67.0	102.97	68.5
	65이상	59.00	4.9	61.09	7.2	61.60	11.2
전라남도	0-14	106.02	37.9	103.92	25.9	108.64	19.8
	15-64	109.85	57.1	107.61	66.5	105.16	66.6
	65이상	55.35	5.0	60.09	7.7	59.31	13.6
광주	0-14	-	-	108.31	27.4	108.88	22.9
	15-64	-	-	101.70	68.5	100.36	71.5
	65이상	-	-	49.08	4.0	58.87	5.6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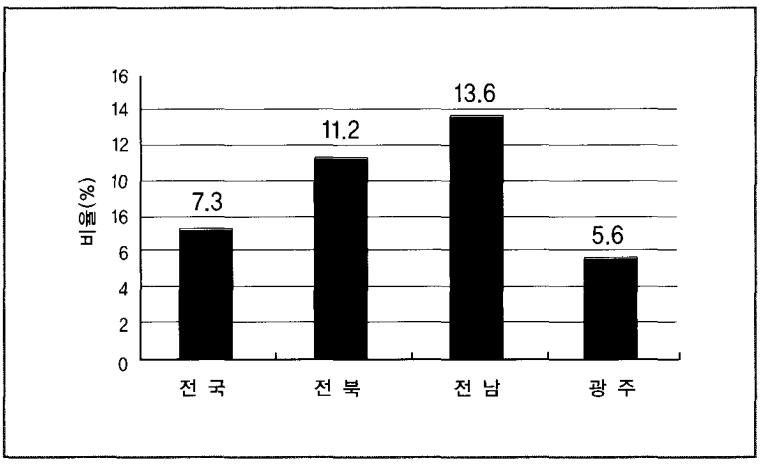
데 비해서, 전남과 광주는 남초현상이 약해지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전국적으로 1980년도 3.9%에서, 2000년도 7.3%로 약 3.4% 증가했는데, 전북(6.3% 증가)과 전남(8.6% 증가)은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어 인구의 노령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출생시의 성비 차이, 남여의 사망률 차이, 성별 인구이동의 차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출생시의 성비를 살펴보기 위해서, 0-14세 인구의 성비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이 111.79(2000년)로 남초 현상을 보이고 있고, 전북 108.00, 전남 108.64, 광주 108.88로 호남 지역도 같은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0-14세 인구의 비중도 전국 평균이 약 21.0%인데, 전북 20.3%, 전남 19.8%, 광주 22.9%로 전국 평균과 유사하게 나타나, 출생시의 성비차가 호남 지역의 여초현상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여의 사망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65세 이상 인구의 성비를 살펴보면, 2000년 65세 이상 인구의 전국 평균 성비는 61.76으로 여초 현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호남지역에서도 유사하다. 그러나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이 약 7.3%인데 비해서, 호남지역은 전북 11.2%, 전남 13.6%, 광주 5.6%로 광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10%를 넘고 있어, 상대적으로 노년인구의 비중이 높다(그림 3-6).



〈그림 3-6〉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2000년)
출처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인구 이동이 비교적 많은 15-64세의 경제활동 인구에서는 전국 평균 성비가 102.53으로 남초 현상을 보이고, 전북(102.97)과 전남(105.16)도 이러한 경향성은 일치한다. 그러나 15-64세 인구의 비중은 전국이 71.7%인데 비해서, 호남지역은 전북 68.5%, 전남 66.6%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호남 지역에서 여초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출생시의 성비 차이보다는, 여초현상을 보이는 65세 이상 노년인구의 비중 증가와 15-64세의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 감소때문이다.

(2) 연령별 구조

인구의 총체적인 연령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위연령(median age)을 비교해 보면, 호남 지역의 중위연령은 광주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 호남지역 인구의 노령화를 보여주고 있다(표 3-4). 특히 호남 지역은 여성인구의 중위 연령이 전국 평균 남녀차이(2.1세)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전북 4.1세, 전남 5.1세, 광주 1.5세).

전국과 호남지역의 연령별 인구구조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1980년, 1990년, 2000년의 인구 피라미드를 비교해본다.

1980년 인구 피라미드에서, 가장 많은 인구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10-14세 구간으로 전국과 호남지역이 일치한다. 0-14세 사이의 인구 비중은 전국이 약 33.8%를 차지하는데 비해서, 전북은 37.0%, 전남은 37.9%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비중이 높다. 65세 이상 노년 인구의 비중은 전국이 약 3.9%인데 비해서, 전북은 4.9%, 전남은 5.0%로 노년 인구의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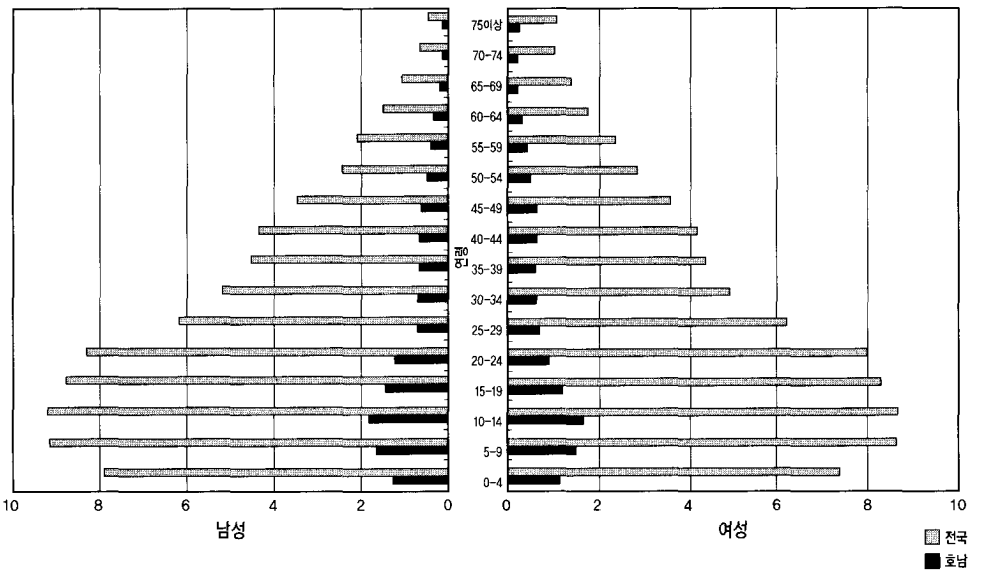
[표 3-4] 전국과 호남 지역의 중위연령

(단위:세)

지역별	연령중위수	남	여
전국	32.0	31.0	33.1
전라북도	33.5	31.5	35.6
전라남도	35.9	33.4	38.5
광주광역시	29.2	28.5	30.0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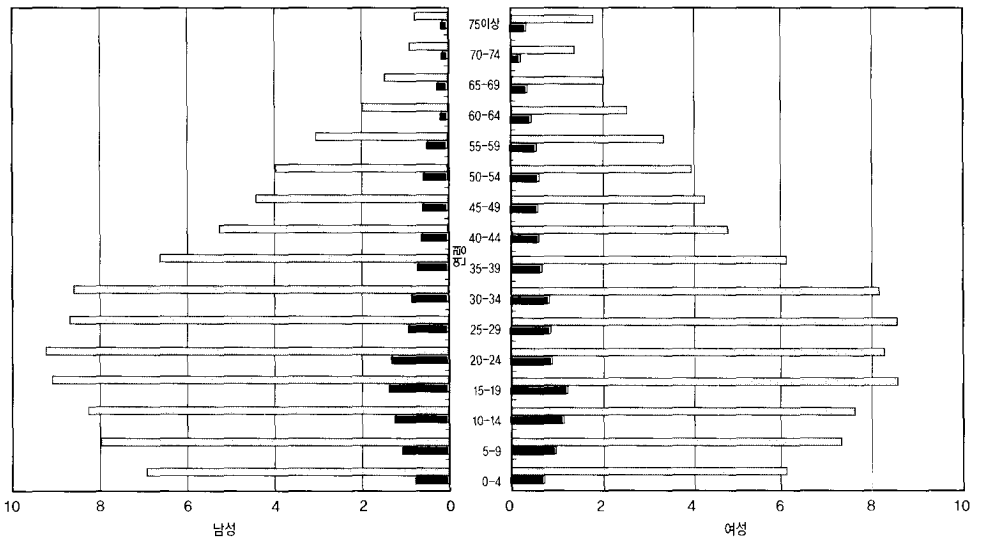
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전체적으로 1980년 호남지역 인구구조에서는 0-14세의 유소년층 인구와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를 합한 비경제활동인구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그림 3-7).



〈그림 3-7〉 1980년 전국과 호남지역의 인구피라미드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1990년 인구 피라미드에서, 가장 많은 인구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15-19세 구간으로 10년 전보다 5세가 상향되었으며, 전국과 호남지역이 일치한다. 0-14세 사이의 인구 비중은 전국이 약 25.7%를 차지하고, 전북은 25.8%, 전남은 25.9%, 광주는 27.4%로 전국 평균과 비슷하다. 반면 65세 이상 노년인구의 비중은 전국이 약 5.0%인데 비해서, 전북은 7.2%, 전남은 7.7%, 광주는 4.0%로 노년 인구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1980년도보다 전국 평균과의 차이가 더 커졌다. 전체적으로 1990년 호남지역 인구구조는 1980년에 비해서 0-14세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65세 이상의 노년인구 비중은 전국 평균과의 차이가 더욱 커졌다(그림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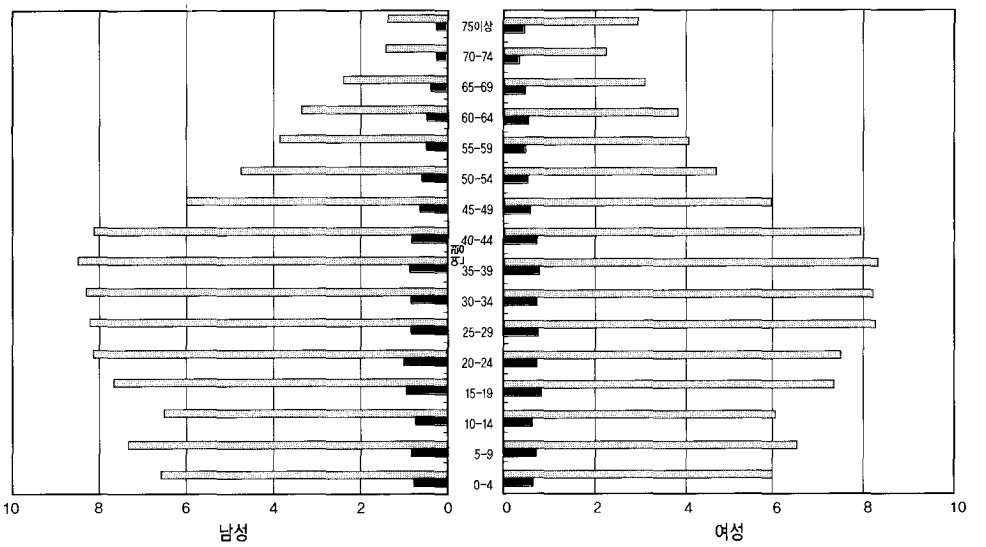
〈그림 3-8〉 1990년 전국과 호남지역의 인구피라미드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2000년 인구 피라미드에서, 가장 많은 인구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전국적으로는 35-39세인데 비해서, 호남지역은 15-19세이다. 2000년에는 1980년이나 1990년과는 달리 10%를 넘는 연령대가 없어졌다. 0-14세 사이의 인구 비중은 전국이 약 21.0%를 차지하는데, 전북은 20.3%, 전남은 19.8%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오히려 비중이 작다. 또한 65세 이상 노년인구의 비중은 전국이 약 7.3%인데 비해서, 전북은 11.2%, 전남은 13.6%, 광주는 5.6%로 노년 인구의 비중은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다. 전체적으로 2000년 호남지역 인구구조는 0-14세 인구의 비중 감소와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 증가로 인구의 노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다(그림 3-9).

호남지역 인구의 연령별 구조의 특징은,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0-4세의 인구 비중과 전국 평균을 훨씬 초과하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으로, 인구의 자연증가율 감소, 노령화, 여초현상이 심화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인구 구조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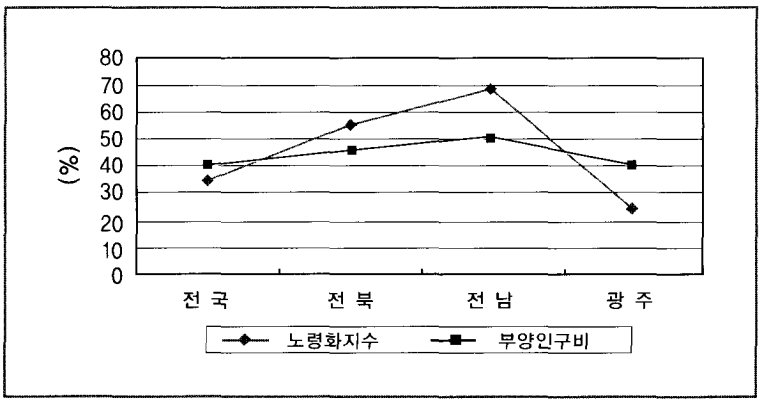
호남지역 인구구조의 특성은 자연증가율의 둔화와 노령화의 진행이다. 노령인구의 증가를 지수로 나타내는 것이 노령화 지수인데 노령화 지수는 0-14세 사이의 유소년층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인구의 노령화를 의미한



〈그림 3-9〉 2000년 전국과 호남지역의 인구피라미드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다. 전국의 노령화 지수는 1980년 11.4에서 2000년에는 35.0으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호남 지역은 전북이 13.2에서 55.4로, 전남은 13.1에서 68.5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광주는 노령화 지수가 24.4로 전국 평균에 비해 훨씬 낮아 도시 지역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3-10, 표 3-5).



〈그림 3-10〉 노령화 지수와 부양인구비(2000년)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표 3-5] 노령화 지수와 부양인구비

지역별	1980년		1990년		2000년	
	노령화 지수	부양 인구비	노령화 지수	부양 인구비	노령화 지수	부양 인구비
전국	11.4	60.5	19.4	44.2	35.0	39.5
전라북도	13.2	72.0	28.0	49.2	55.4	45.9
전라남도	13.1	75.0	29.6	50.4	68.5	50.2
광주	-	-	14.7	45.9	24.4	39.9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노령화 지수가 인구구조의 노령화 정도를 알려주는 지수라면, 15세에서 64세 인구 100명당 0세에서 14세 인구와 65세 이상의 인구수를 합한 인구수를 말하는 부양인구비는 인구의 경제구조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즉, 15-64세의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인구수와 0-14세와 65세 이상의 피부양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이 지수는 생산연령층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수를 말하기 때문에, 수치가 높을수록 부양인구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15-64세 인구 비중의 증가와 인구의 자연증가율 감소로 인한 0-14세 인구 비중의 감소로 부양인구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호남 지역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부양인구비가 높은데, 그 이유는 1980년대에는 0-14세 인구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고, 200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3) 인구 분포

(1) 전라북도

2000년 현재 전라북도는 6개 시 8개 군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시 지역 거주 인구는 약 80.2%이고, 군 지역 거주 인구는 약 19.8%로 대부분의 인구가 시 지역에 거주한다. 14개 시군을 인구규모에 따라 분류하면, 인구수 30만 이상 지역은 전주시(약 62만)와 익산시(약 34만)의 2개 시지역이고,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인 지역은 군산시(약 28만) 1개 시 지역이다. 그리고 10만 이상 20만 미만 지역은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 3개 시 지역

[표 3-6]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인구규모별 분류

인구규모 \ 연도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30만 이상	-	전주	전주	전주, 익산
20만 이상-30만 미만	전주, 정읍, 김제	정읍	이리, 군산	군산
10만 이상-20만 미만	익산, 군산, 옥구, 남원, 완주, 부안, 고창, 임실	이리, 익산, 군산, 옥구, 김제, 남원, 완주, 부안, 고창	익산, 부안	정읍, 김제, 남원
5만 이상-10만 미만	이리, 순창, 진안, 무주, 장수	순창, 임실, 진안, 무주, 장수	옥구, 완주, 부안, 고창, 정읍시, 정읍군, 김제시, 김제군, 남원시, 남원군	완주, 부안, 고창
5만 미만	-	-	순창, 임실, 진안, 무주, 장수	순창, 임실, 진안, 무주, 장수

자료 :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이다.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지역은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의 3개 군 지역이며, 인구 5만 미만 지역은 순창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의 5개 군 지역이다(표 3-6).

시기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30만 명 이상 도시는 없었고, 전주시(약 26만), 정읍군(약 26만), 김제군(약 23만)의 3개 지역의 인구규모가 비슷했으며, 대부분의 시군 지역이 인구규모 10만 명대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있었던 군 지역 중 읍 지역의 시로 승격하여 1990년대에는 대부분의 군 지역이 10만 명대 미만 지역으로 분리되었다. 특히 순창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은 1990년대부터 5만 미만으로 분류되기 시작하였으며, 무주군은 인구규모가 3만 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1970년과 2000년의 30년간의 인구증감을 비교하면, 30년 사이에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로 모두 시 지역인데, 특히 전주시는 이 기간 동안 인구수가 약 237% 증가했다(표 3-7). 익산시와 군산시는 도농 통합으로 인구가 증가했으나, 통합 이전의 군 지역 인구수는 감소한 반면, 시 지역의 인구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했었다. 그러나 도농통합이 된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는 시 이면서도 1970년 당시의 인구보다 인구가 감소한 농촌적인 성격이 강한 도시 지역이다. 이들 3개 지역은 1980년대 읍지역만 시로 승격되었다가 1990년대 다시 시군통합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그 외의 8개 군 지

[표 3-7] 전라북도 시군별 인구변화(1970-2000)

(단위:명)

연도별 / 시군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인구
							인구수	인구밀도	증감율(%)
1. 전주시	262,816	311,432	366,997	426,498	517,104	570,570	622,238	3,017	237
2. 익산시	86,770	117,111	145,358	192,275	203,401	329,212	336,651	664	120
(익산군)	193,352	175,572	156,131	127,929	106,003				
3. 군산시	112,453	154,485	165,318	185,661	218,216	276,263	278,577	738	110
(옥구군)	140,244	116,911	105,883	95,259	68,850				
4. 정읍시	-	-	-	79,332	86,850	151,353	152,574	220	59
(정읍군)	259,570	248,156	220,964	120,476	98,434				
5. 김제시	-	-	-	-	55,136	128,490	116,211	213	50
(김제군)	233,564	221,462	193,263	171,009	94,651				
6. 남원시	-	-	-	61,447	63,121	109,224	103,783	138	58
(남원군)	179,702	175,289	154,984	78,796	61,362				
7. 완주군	173,987	168,650	152,192	136,974	88,338	86,570	84,327	103	48
8. 부안군	161,273	155,887	130,894	114,306	102,787	84,383	74,877	152	46
9. 고창군	181,946	175,248	144,990	125,245	95,698	85,239	74,227	122	41
10. 임실군	107,898	104,307	83,955	68,486	48,339	44,637	37,605	63	35
11. 순창군	96,516	91,696	73,580	60,586	45,451	39,763	34,691	70	36
12. 진안군	96,099	95,769	78,502	63,235	44,759	40,125	31,359	40	33
13. 장수군	75,717	73,138	57,819	47,388	34,165	31,502	30,126	57	40
14. 무주군	72,615	71,199	56,682	47,341	37,183	32,320	29,254	46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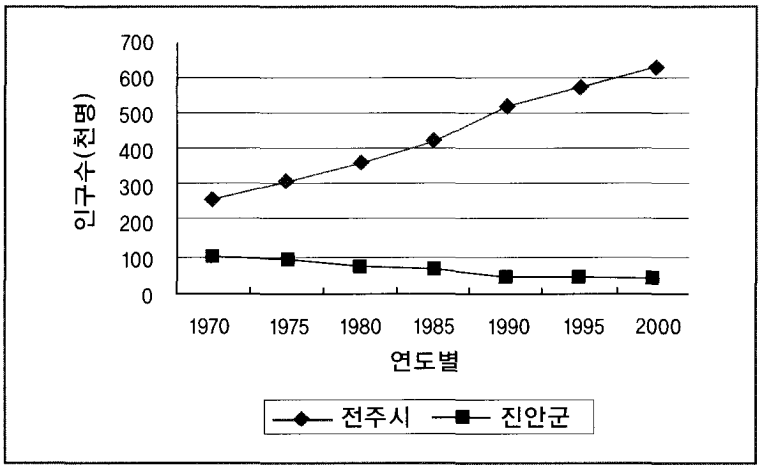
주) 1) 1981년 7월 1일 시로 승격(읍 지역만 시로 승격 : 정주시, 남원시)
2) 1989년 1월 1일 시로 승격(읍 지역만 시로 승격 : 김제시)
3) 1995년 1월 1일 시군통합 : 정읍시(정읍군 + 정읍시), 김제시(김제군 + 김제시), 남원시(남원군 + 남원시), 군산시(군산시 + 옥구군)
4) 1995년 5월 10일 시군통합 : 익산시(이리시+익산군)

자료 :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표 3-8]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30년간 인구증감율에 따른 분류

분류 기준	해당 시군
1. 인구가 증가한 지역(3개 지역)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2. 인구 감소가 50% 이하 지역(3개 지역)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3. 인구 감소가 50% 이상인 지역(8개 지역)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임실군, 진안군

자료 :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그림 3-11〉 전주시와 진안군의 인구 변화

자료 :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역은 30년 사이에 모두 인구수가 50% 이하로 감소했다. 전라북도의 시군별 인구를 30년(1970년 - 2000년) 사이의 인구증감율에 따라 분류하면 3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인구가 증가한 곳은 도시 지역이며, 군 지역은 인구수가 50% 이상 감소했고, 농촌적 성격이 강한 도농통합시는 인구가 감소하기는 했어도, 군 지역보다는 감소폭이 작다. 인구 증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전주시이며, 인구감소가 가장 심했던 곳은 진안군이다(표 3-8, 그림 3-11).

(2) 전라남도

2000년 현재 전라남도의 행정 구역은 5시 17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시 지역 거주 인구는 약 51.0%이고, 군 지역 거주 인구는 약 49.0%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22개 시군을 인구규모에 따라 분류하면, 인구수 30만 이상 지역은 여수시(약 32만) 1개 시지역이고,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인 지역은 순천시(약 27만)와 목포시(약 25만) 2개 시지역이다. 그리고 10만 이상 20만 미만 지역은 광양시, 나주시, 고흥군 3개 시군지역이다.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지역은 담양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의 11개 군 지역이다. 인구 5만 미만 지역은 곡성군, 구례군, 강진군,

[표 3-9] 전라남도 시군의 인구규모별 분류

인구규모 \ 연도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인30만 이상	-	여수	여수	여수
20만 이상-30만 미만	여수, 순천, 나주, 고흥, 해남	순천, 목포	순천, 목포	순천, 목포
10만 이상-20만 미만	목포, 광양, 담양, 보성, 화순, 장흥, 강진,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나주, 고흥, 보성, 화순, 장흥, 해남, 무안, 영광, 완도, 신안	나주, 광양, 고흥, 보성, 해남, 신안	광양, 나주, 고흥
5만 이상-10만 미만	곡성, 구례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강진, 영암, 함평, 장성, 진도	담양, 화순, 장흥, 강진,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담양, 보성, 화순, 장흥, 해남, 영암, 무안, 영광, 장성, 완도, 신안
5만 미만	-	-	곡성, 구례	곡성, 구례, 강진, 함평, 진도

자료 : 전라남도, 전남통계연보

함평군, 진도군의 5개 군 지역이다(표 3-9).

시기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30만 명 이상 도시는 없었고, 여수시(약 27만, 시군포함), 순천시(약 24만), 나주시(약 23만), 고흥군(약 23만), 해남군(약 21만)의 5개 지역의 인구규모가 비슷했으며, 대부분의 시군 지역이 인구규모 10만 명대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대부분의 군 지역이 10만 명 미만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동부 산지 지역인 곡성군과 구례군은 1990년대부터 5만 미만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에는 강진군, 함평군, 진도군의 인구가 5만 미만으로 감소했다.

전라남도의 22개 시군을 1970년과 2000년 사이의 30년간의 인구증감을 비교하면, 30년 사이에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여수시, 순천시, 목포시, 광양시의 4개 시 지역이다(표 3-10). 이 중 목포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1995년 이후 도농통합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시 지역 중 에서는 나주시가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했고, 그 외 17개 군 지역은 전부 인구가 감소했다. 전라남도의 시군별 인구를 30년 사이의 인구증감율에 따라 분류하면 3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이전부터 시 지역이었던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이고, 특

[표 3-10] 전라남도 시군별 인구변화(1970-2000)

(단위:명)

연도별 / 시군명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인구 증감율(%)
							인구수	인구밀도	
1. 목포시	177,801	192,927	221,856	236,078	253,423	239,571	245,831	5,224	138
2. 여수시	113,651	130,641	161,009	171,929	173,164	185,696			
(여천시)	-	-	44,952	53,659	63,802	77,942	324,217	651	120
(여천군)	156,807	151,416	101,527	87,218	68,546	65,729			
3. 순천시	90,910	108,034	114,223	121,938	167,209	251,316	270,698	298	114
(승주군)	145,879	138,505	123,778	123,221	104,388				
4. 나주시	-	-	-	58,893	55,306	116,322	108,962	180	48
(나주군)	227,261	212,096	185,827	108,052	103,151				
5. 광양시	-	-	-	-	70,118	129,177	138,097	310	146
(광양군)	94,451	88,662	78,696	90,797	85,440				
6. 담양군	112,661	108,270	91,174	84,785	73,842	61,260	55,459	122	49
7. 곡성군	99,774	93,118	75,186	63,824	49,672	41,780	41,276	75	41
8. 구례군	75,108	68,712	57,975	49,476	41,423	36,454	33,663	76	45
9. 고흥군	228,879	217,583	191,607	160,864	134,280	112,399	101,071	130	44
10. 보성군	166,865	152,928	127,460	121,544	106,671	70,061	61,423	93	37
11. 화순군	140,921	130,411	107,397	92,015	86,693	70,788	78,850	100	56
12. 장흥군	136,138	123,913	112,975	89,641	68,288	60,135	53,487	87	39
13. 강진군	117,818	107,575	91,770	79,130	70,579	55,052	49,313	99	42
14. 해남군	214,459	199,030	168,546	150,788	134,295	104,660	99,358	116	46
15. 영암군	127,888	118,606	99,980	86,289	68,815	62,400	65,495	120	51
16. 무안군	131,788	128,045	115,238	102,637	90,579	75,049	70,467	162	53
17. 함평군	127,240	117,237	96,344	78,173	63,081	51,703	45,369	116	36
18. 영광군	147,689	142,693	119,516	114,059	85,281	76,199	72,910	154	49
19. 장성군	120,007	115,882	94,918	81,626	61,819	58,964	56,223	108	47
20. 완도군	145,339	141,074	126,732	111,200	85,793	74,033	67,033	171	46
21. 진도군	105,195	100,376	83,335	72,827	54,616	47,262	42,263	98	40
22. 신안군	166,532	157,529	130,973	115,026	102,241	62,856	53,164	81	32

주) 1) 1981년 나주군에서 금성시 분리(1986년 나주시로 명칭변경).
2) 1986년 여천출장소가 여천시로 승격.
3) 1988년 송정시와 광산군이 광주직할시로 편입.
4) 1989년 광양출장소가 동광양시로 승격.
5) 1995년 도농통합 : 순천시(순천시 + 승주군), 나주시(나주시 + 나주군), 광양시(동광양시 + 광양군)
6) 1998년 여수시(여수시 + 여천시 + 여천군)
7) 여천시의 1980년과 1985년은 여천출장소 인구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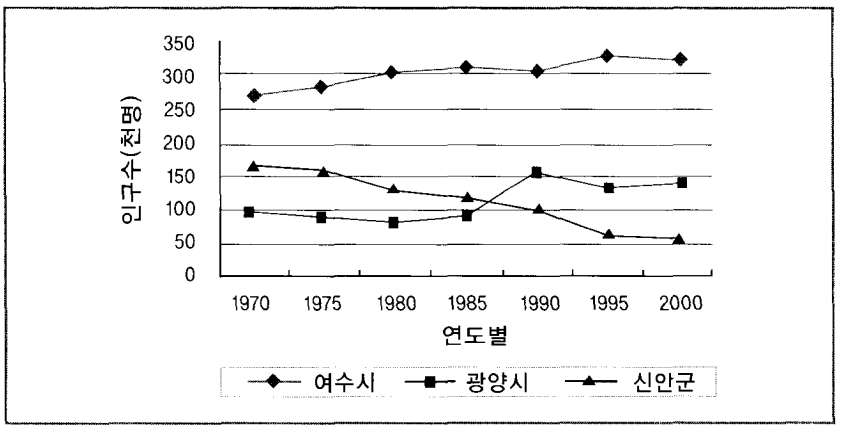
자료 : 전라남도, 전라남도 통계연보.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히 1989년 동광양시로 승격하고, 1995년 광양군과 도농통합을 이룬 광양시가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 외 군 지역은 모두 인구가 30년 사이에 50%이상 감소했는데, 특히 인구감소가 가장 심했던 곳은 신안군이다(표 3-11, 그림 3-12).

[표 3-11]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30년간 인구증감율에 따른 분류

분류 기준	해당 시군
1. 인구가 증가한 지역(4개 지역)	여수시, 순천시, 목포시, 광양시
2. 인구 감소가 50% 이하 지역(3개 지역)	화순군, 영암군, 무안군
3. 인구 감소가 50% 이상인 지역(15개 지역)	나주시, 담양군, 구례군, 해남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곡성군, 고흥군, 강진군, 진도군,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신안군

자료 : 전라남도, 전라남도 통계연보



〈그림 3-12〉 여수시, 광양시, 신안군의 인구 변화

자료 : 전라남도, 전라남도 통계연보

(3) 광주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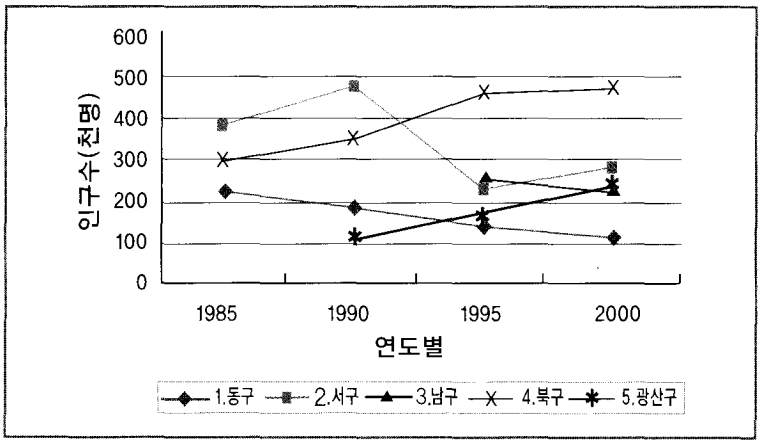
2000년 현재 광주광역시는 5개구로 행정구역이 구성되었다. 이 중 서구, 북구, 광산구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광산구의 인구 증가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10년 사이에

[표 3-12] 광주광역시의 구별 인구변화(1985-2000)

(단위:명)

구별 \ 연도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인구 증감율(%)
				인구수	인구밀도	
1. 동 구	222,814	191,843	147,601	116,519	2,539	52
2. 서 구	383,153	472,336	226,007	280,810	6,161	133
3. 남 구	-	-	255,206	229,491	3,796	90
4. 북 구	299,929	353,063	459,065	477,962	3,913	159
5. 광산구	-	121,761	169,757	248,015	1,141	204

주) 1986년 11월 1일 직할시 승격(3구), 1988년 1월 1일 송정시와 광산군 편입(광산구 신설, 4구), 1995년 3월 1일 서구에서 남구 분리(5구).
자료 : 광주광역시, 광주통계연보,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그림 3-13〉 광주광역시 5개구의 인구 변화

자료 : 광주광역시, 광주통계연보,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204% 증가). 그러나 동구와 남구(1995년 서구에서 분리)는 도심공동화 현상에 의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도심 지역인 동구는 15년 사이에 인구가 거의 반으로 감소했다. 인구규모에서는 북구가 약 48만 명으로 가장 많고, 동구는 약 12만 명으로 가장 적다. 인구밀도는 서구가 가장 높으며, 광산구가 가장 낮다(표 3-12, 그림 3-13).

호남지역의 41개 시군구(11개시, 25개군, 5개구) 중에서, 인구규모가 30만 이상인 지역은 전주시(약 62만), 광주시 북구(약 48만), 익산시(약 34만), 여수시(약 32만)의 4개 지역이다.

[표 3-13] 호남지역 시군구의 인구규모별 분류(2000년)

인구규모별	해당 지역
30만 이상	전주, 익산, 여수, 북구(4)
20만 이상- 20만 미만	군산, 순천, 목포, 서구, 남구, 광산구(6)
10만 이상- 20만 미만	정읍, 김제, 남원, 광양, 나주, 고흥, 동구(7)
5만 이상- 10만 미만	완주, 부안, 고창, 담양, 보성, 화순, 장흥, 해남, 영암, 무안, 영광, 장성, 완도, 신안(14)
5만 미만	순창, 임실, 진안, 무주, 장수, 곡성, 구례, 강진, 함평, 진도(10)
합 계	총 41개 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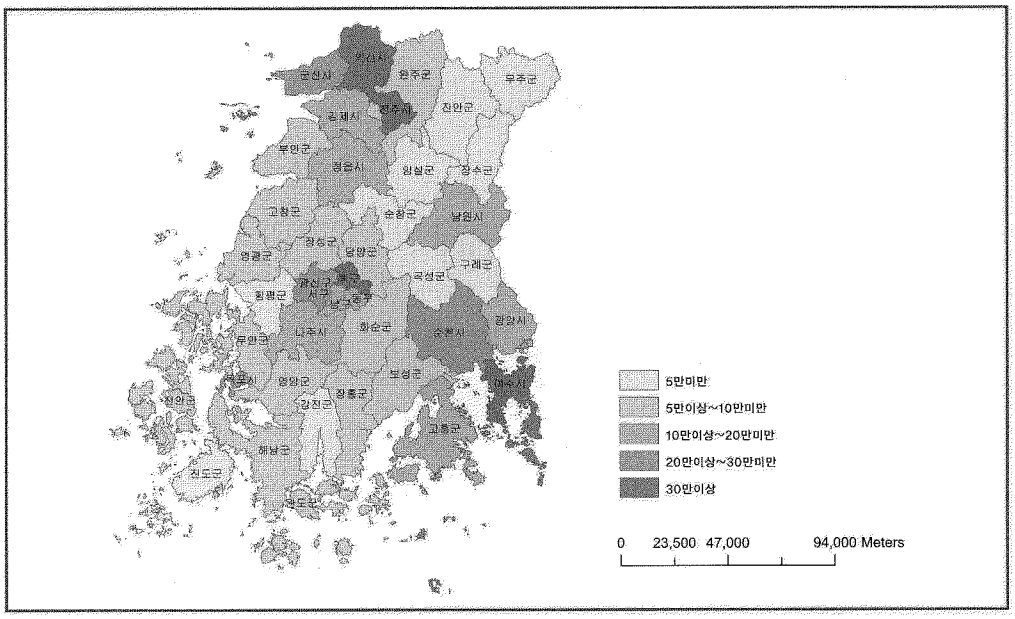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인구 20만 이상 30만 이하 지역은 군산시, 순천시, 목포시, 광주시 서구, 남구, 광산구의 6개 지역으로, 이 중 3개 지역이 광주광역시이다. 10만 이상 20만 이하 지역은 7개 지역이며, 5만 이상 10만 이하 지역은 14개 군 지역이고, 5만 미만의 인구를 가진 군은 10개 지역인데, 이 중 7개 지역이 동부 산악 지역이다(표 3-13, 그림 3-14).

[표 3-14] 인구증감에 따른 지역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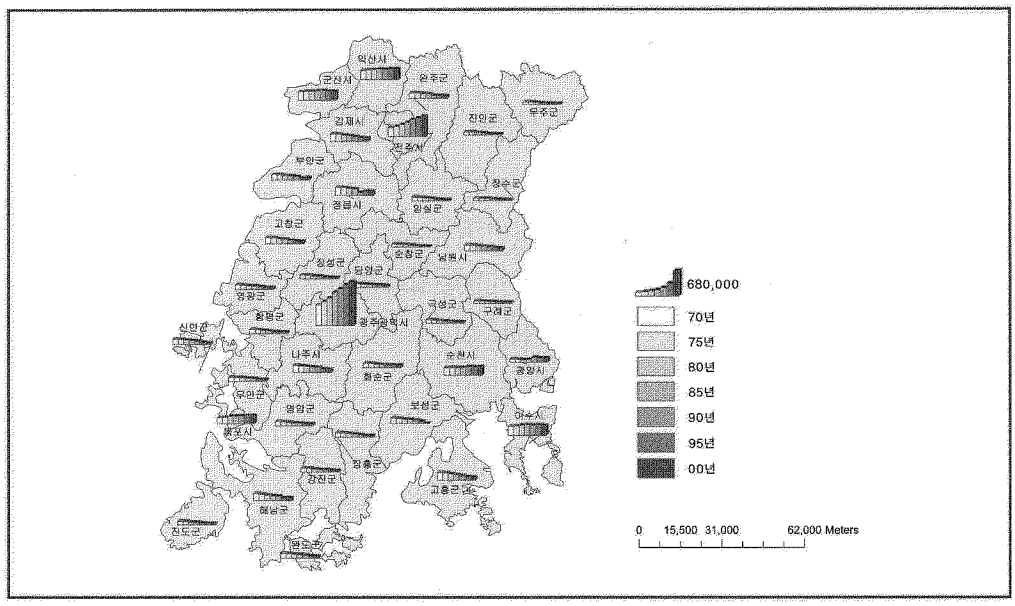
지수별	지역별	시군구 단위
(1) 인구증가 지역(11)	전북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목포시, 광양시
	광주	서구, 북구, 광산구
(2) 인구 감소 지역(8) (50%미만 감소 지역)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	화순군, 영암군, 무안군
	광주	남구, 동구
(3) 극심한 인구 감소 지역(22) (50%이상 감소 지역)	전북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 순창군, 임실군,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나주시, 담양군, 구례군, 해남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곡성군, 고흥군, 강진군,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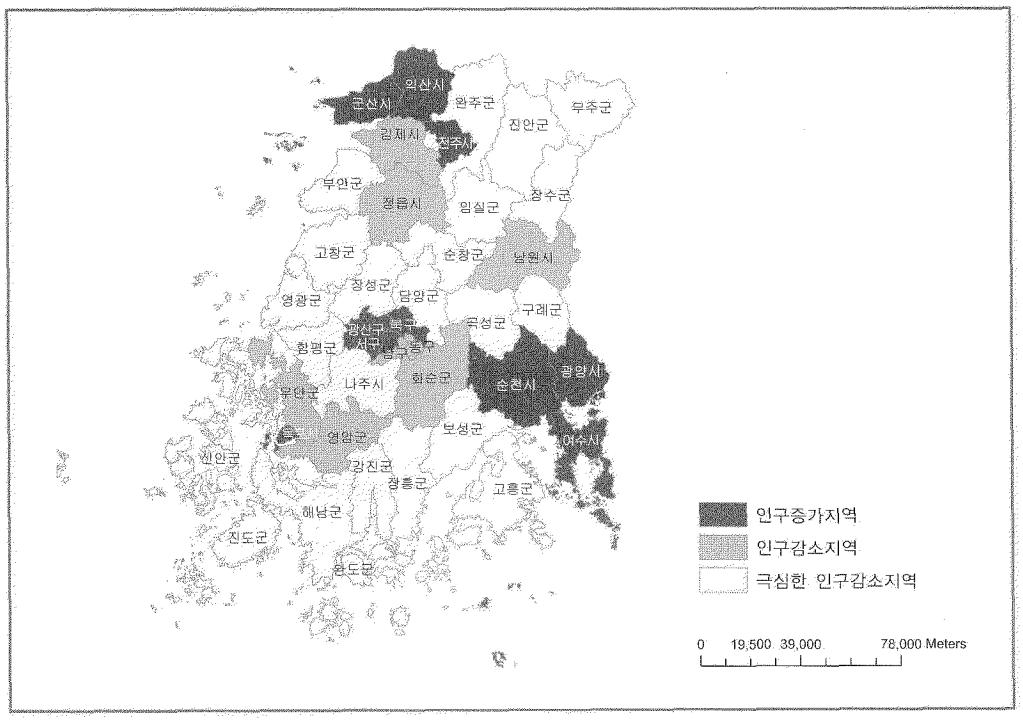
〈그림 3-14〉 호남지역 시군구의 인구규모별 분포(2000)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그림 3-15〉 지역별 인구변화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그림 3-16〉 호남 지역의 시군별 인구 증감(1970-2000)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호남지역의 인구증감을 살펴보면, 41개 시군구 중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10개 지역으로 모두 시 지역이며, 이 중 인구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은 전주시이다. 나머지 31개 시군구는 모두 인구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비교적 인구 감소가 적은 지역이 8곳이며, 나머지 22개 지역은 30년 사이에 인구수가 반 이하로 감소했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전북의 진안군과 전남의 신안군이다(표 3-14, 그림 3-14~16).

2. 인구이동

여기에서는 호남지역의 인구이동을 시도를 넘어 인구이동이 이루어지는 권역외 이동과 시도내에서의 이동인 권역내 이동으로 구분하여, 인구이동의 동태를 살펴본다.

1) 권역외 이동

(1) 인구 동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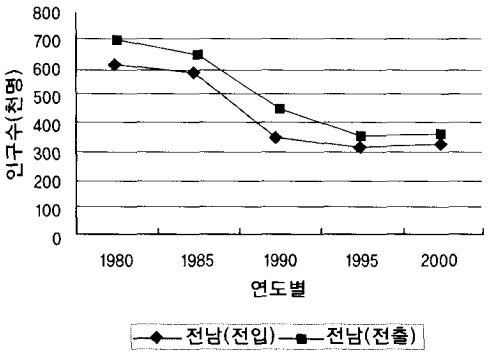
호남지역 인구동태는 인구의 자연적 증가는 계속되고 있으나, 사회적 이동에서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표 3-15, 그림 3-17~20). 단 광주시는 자연적 증가와 함께 전입인구의 초과로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구의 사회적 이동으로 인한 인구유출은 계속되고 있지만, 1990년대 이후 유출인구의 절대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광주를 제외하고는 차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표 3-16, 그림 3-21).

[표 3-15] 호남지역의 인구변동(1980-2000)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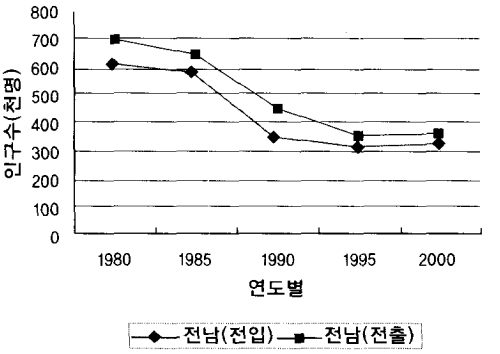
연도별	지역별	총인구	사회적 변동			자연적 변동			총변동
			전입	전출	순이동(A)	출생	사망	순증감(B)	(A+B)
1980년	전북	2,287,689	334,630	405,854	-71,224	53,219	22,067	+31,152	-40,072
	전남	3,779,736	603,459	686,232	-82,773	100,763	41,765	+58,998	-23,775
1985년	전북	2,202,078	332,232	392,339	-60,107	27,880	17,315	+10,565	-49,542
	전남	3,748,428	577,823	639,179	-61,356	47,807	32,122	+15,685	-45,671
1990년	전북	2,069,960	342,446	395,786	-53,340	23,753	16,352	+7,401	-45,939
	전남	2,507,439	342,318	442,388	-100,070	26,976	24,894	+2,082	-97,988
	광주	1,139,003	121,111	92,634	+28,477	17,388	5,329	+12,059	+40,536
1995년	전북	1,902,044	361,364	371,479	-10,115	27,085	14,874	+12,211	+2,096
	전남	2,066,842	331,240	350,404	-19,164	28,069	20,160	+7,909	-11,255
	광주	1,257,636	89,954	93,975	-4,021	22,861	5,824	+17,037	+13,016
2000년	전북	1,890,669	350,628	372,218	-21,590	24,934	14,384	+10,550	-11,040
	전남	1,996,456	325,511	359,049	-33,538	25,719	18,058	+7,661	-25,877
	광주	1,352,797	102,574	102,588	-14	20,987	5,812	+15,175	+15,161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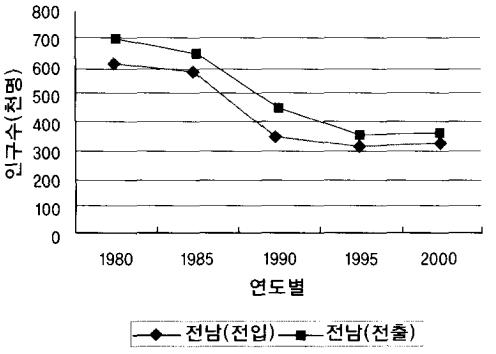
〈그림 3-17〉 전북의 전 · 출 인구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이동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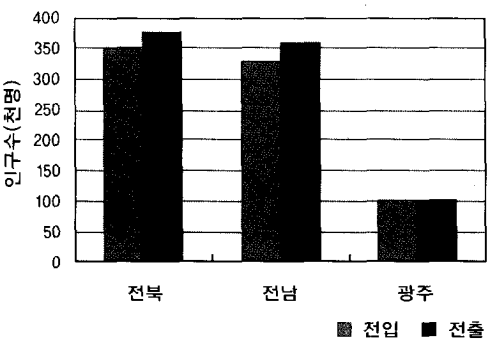
〈그림 3-18〉 전남의 전 · 출 인구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이동 통계연보



〈그림 3-19〉 광주의 전 · 출 인구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이동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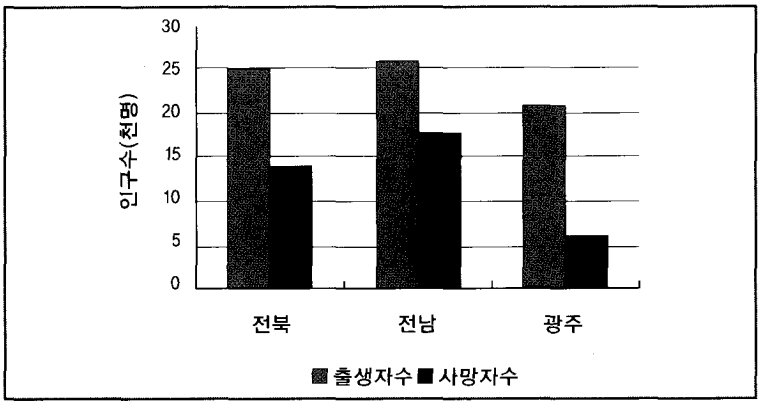
〈그림 3-20〉 호남지역 인구의 사회적 변동(2000년)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이동 통계연보

[표 3-16] 호남 지역의 자연증가율

연도별	전국(%)	전북(%)	전남(%)	광주(%)
1980년	15.4	13.7	15.7	-
1985년	10.2	4.8	4.2	-
1990년	9.6	3.6	0.9	10.8
1995년	10.6	6.1	3.6	13.3
2000년	8.2	5.2	3.6	11.1

자료 : 통계청, 인구 통계 조사
주 : 자연증가율 = 조출생율(출생자수/총인구×1,000) - 조사망율(사망자수/총인구×1,000)



〈그림 3-21〉 호남지역 인구의 자연적 변동(2000년)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동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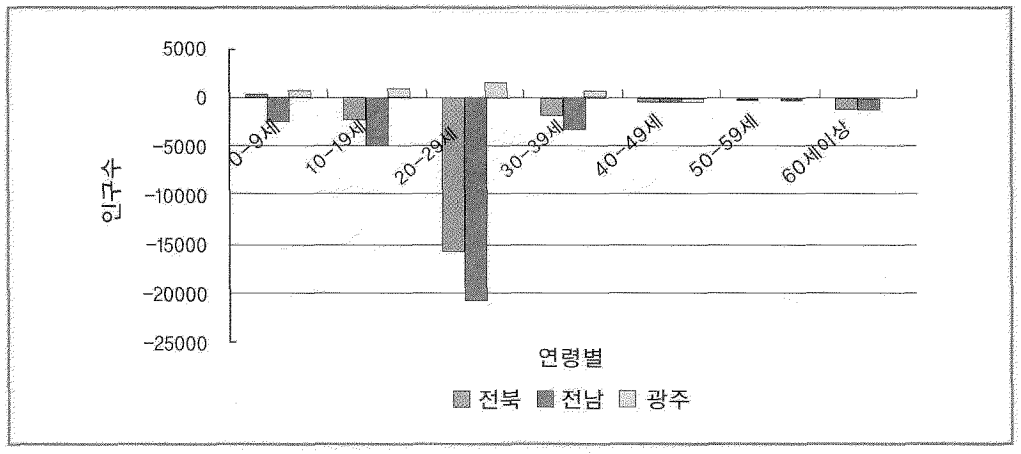
(2) 연령별 특성

호남지역 사회적 인구이동의 연령별 특징을 살펴보면(표 3-17, 그림 3-22), 전 연령대에서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데, 특히 20대의 인구유출 비중이 약 70.2%로 가장 높다. 지역별로 보면 20대의 비중이 전북 74%, 전남 63%를 차지하며, 광주는 20대 인구의 유입이 순수 증가수의 약 42%를 차지한다. 그 다음이 10대의 인구유출로 약 11.1%를 차지하는데, 10대와 20대를 합하면 인구유출이 약 80% 이상을 차지한다.

[표 3-17] 호남 지역의 연령별 사회적 이동(2000년)

연령별	전북	전남	광주	합계
0-9세	151	-2,506	793	-1,562(2.8%)
10-19세	-2,292	-4,785	978	-6,099(11.1%)
20-29세	-15,924	-21,142	1,657	-38,723(70.2%)
30-39세	-1,806	-3,215	466	-4,555(8.3%)
40-49세	-288	-438	-410	-1,136(2.1%)
50-59세	-126	24	-239	-341(0.6%)
60세 이상	-1,305	-1,476	55	-2,726(4.9%)
합 계	-21,590	-33,538	-14	-55,142(100%)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이동 통계연보



〈그림3-22〉 호남지역의 연령별 인구이동(2000년)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이동 통계연보

연령별 인구이동을 1995년과 2000년을 기준으로 각시도별로 특징을 보면, 전북은 10세 미만의 인구유입이 많이 감소하고 있으며, 20대 인구의 유출이 주춤한 반면, 10대와 30대 이상 전 연령대에서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40대 이상 인구의 유출이 심해지고 있다 (표 3-18).

[표 3-18] 전라북도의 연령별 인구이동

(단위:명)

연도별	1995년			2000년		
연령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0-9세	16,404	11,730	+4,674	15,828	15,677	+151
10-19세	7,165	8,925	-1,760	7,659	9,951	-2,292
20-29세	25,278	41,749	-16,471	21,542	37,466	-15,924
30-39세	18,561	14,975	+3,586	18,053	19,859	-1,806
40-49세	5,488	5,095	+393	8,258	8,546	-288
50-59세	3,101	3,221	-120	4,079	4,205	-126
60세이상	5,833	6,250	-417	7,155	8,460	-1,305
합 계	81,830	91,945	-10,115	82,574	104,164	-21,590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

전남은 10세 미만의 인구가 전입초과에서 전출초과로 변했으며, 10대와 20대의 전출 초과가 주춤해진 반면, 30대 이상 인구의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다(표 3-19). 이와 같이 10대와 20대의 전출이 주춤한데 비해서 30대 이상 인구의 유출이 심한 현상이 전북과 전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는 20대 인구가 전출초과에서 전입초과로 바뀌었으며, 전 연령대에서 전입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표 3-20). 이와 같이 호남지역 내에서도 이러한 지역차가 뚜렷하게 나타나

[표 3-19] 전라남도의 연령별 인구이동

(단위:명)

연도별	1995년			2000년		
연령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0-9세	22,204	17,992	+4,212	24,257	26,763	-2,506
10-19세	11,755	16,860	-5,105	14,030	18,815	-4,785
20-29세	38,639	63,681	-25,042	33,897	55,039	-21,142
30-39세	26,576	22,811	+3,765	26,480	29,695	-3,215
40-49세	10,766	9,013	+1,753	13,350	13,788	-438
50-59세	7,437	6,373	+1,064	7,148	7,124	+24
60세이상	10,189	10,000	+189	11,783	13,259	-1,476
합 계	127,566	146,730	-19,164	130,945	164,483	-33,538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

[표 3-20] 광주광역시의 연령별 인구이동

(단위:명)

연도별	1995년			2000년		
연령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0-9세	15,135	15,017	+118	18,434	17,641	+793
10-19세	9,846	8,878	+968	11,949	10,971	+978
20-29세	30,248	31,172	-924	30,782	29,125	+1,657
30-39세	18,550	19,022	-472	21,270	20,804	+466
40-49세	6,512	8,407	-1,895	9,449	9,859	-410
50-59세	3,680	5,142	-1,462	4,524	4,763	-239
60세이상	5,983	6,337	-354	7,823	7,768	+55
합 계	89,954	93,975	-4,021	102,574	102,588	-14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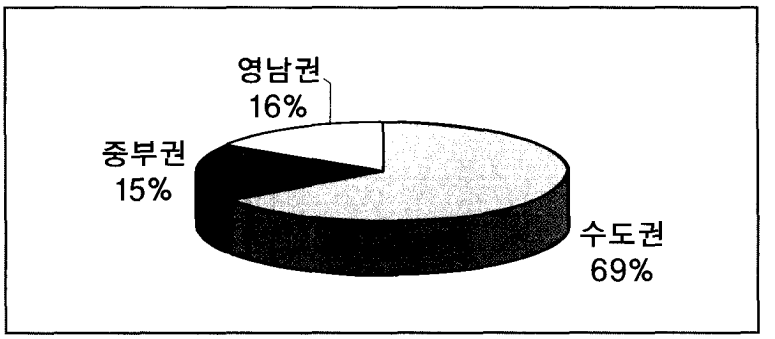
는 것은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 도시와 농촌간의 인구 이동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5년 사이에 전출인구 수는 전북이 113%, 전남이 112%가 증가하였고, 전입인구 수는 전북이 101%, 전남이 103%가 증가하여, 전출인구의 증가폭이 더 크다.

(3) 전입 인구의 특성

호남지역으로 전입된 인구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입되는 인구의 약 69%가 수도권에서 유입되었으며, 영남권은 약 16%, 중부권은 약 15%에 불과하다(그림 3-23, 표 3-21). 특히 호남지역 내의 시도별 이동이 전체 권역외 이동의 약 47%를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전남과 광주간의 인구이동 때문이다.

각 시도별 특성을 살펴보면(표 3-22), 전북은 전입 인구 82,574명(2000년) 중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비중이 가장 많아서 약 55.6%를 차지하는데, 특히 서울의 비중이 높다(27.1%). 다음으로는 전남과 광주의 호남권내에서의 인구 유입이 약 18.6%를 차지하고, 중부권인 충남과 대전에서의 인구 유입이 약 16.6%를 차지한다. 그러나 영남권에서의 유입은 10% 미만이다.

전남은 호남권 내에서 유입되는 비중이 약 4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대부분 광주시에서의 인구 유입이다. 그 다음은 수도권으로 약 35.7%를 차지하는데, 특히 이 중 서울이 약 17.5%를 차지한다. 그러나 중부권에서의 유입은 약 5.8%로 전북(16.6%)에 비해



〈그림 3-23〉 호남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출발지(2000년)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이동 통계연보

[표 3-21] 호남지역 전입인구의 출발지(2000년) - 전입지(권역별)

(단위:명)

출발지(지역별)	전북	전남	광주	합계
1.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45,902 (68.3%)	46,808 (67.9%)	22,764 (71.3%)	115,474 (68.7%)
2. 중부권 (강원, 충북, 충남, 대전)	13,714 (20.4%)	7,635 (11.1%)	4,245 (13.3%)	25,594 (15.2%)
3.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7,626 (11.3%)	14,517 (21.1%)	4,928 (15.4%)	27,071 (16.1%)
* 호남권 (제주, 전남, 광주, 전북)	15,332	62,255	70,637	148,224
합계 (호남권 제외)	82,574 (100%)	131,215 (100%)	102,574 (100%)	316,363 (100%)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이동 통계연보

[표 3-22] 호남지역 전입인구의 출발지(2000년) - 전입지(시도별)

(단위:명)

도착지 / 출발지	전북		전남		광주		합계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1. 서울	22,390	27.1	22,969	17.5	11,579	11.3	56,938	18.0
2. 부산	2,275	2.8	5,600	4.3	1,640	1.6	9,515	3.0
3. 대구	1,016	1.2	971	0.7	531	0.5	2,518	0.8
4. 인천	4,658	5.6	5,304	4.0	2,236	2.2	12,198	3.9
5. 광주	6,382	7.7	53,374	40.7	-	-	59,756	18.9
6. 대전	4,776	5.8	2,163	1.6	1,461	1.4	8,400	2.7
7. 울산	846	1.0	1,376	1.0	463	0.5	2,685	0.8
8. 경기	18,854	22.8	18,535	14.1	8,949	8.7	46,338	14.6
9. 강원	1,618	2.0	1,867	1.4	974	0.9	4,459	1.4
10. 충북	1,838	2.2	1,336	1.0	676	0.7	3,850	1.2
11. 충남	5,482	6.6	2,269	1.7	1,134	1.1	8,885	2.8
12. 전북	-	-	7,317	5.6	7,143	7.0	14,460	4.6
13. 전남	8,207	9.9	-	-	62,634	61.1	70,841	22.4
14. 경북	1,325	1.6	2,027	1.5	944	0.9	4,296	1.4
15. 경남	2,164	2.6	4,543	3.5	1,350	1.3	8,057	2.5
16. 제주	743	0.9	1,564	1.2	860	0.8	3,167	1.0
합계	82,574	100%	131,215	100%	102,574	100%	316,363	100%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이동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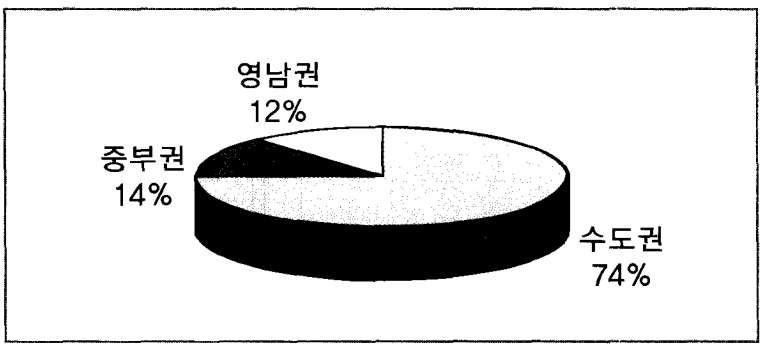
서 적은 편이다. 영남권에서의 유입은 약 11.1%이다.

광주는 전남에서 유입되는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약 68.9%), 다음이 수도권으로 약 22.2%를 차지한다. 그 외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는 중부권 약 4.1%, 영남권 약 4.8%로 미미하다. 전북과 전남의 인구 전입은 수도권, 특히 서울의 의존도가 높은데 비해서, 광주시의 인구 전입은 농촌 지역인 전남에서 도시 지역인 광주로의 인구이동 결과이다.

이와 같이 호남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 출발지의 특성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의 인구유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북이 지리적 근접지역인 충남과 대전 등 중부권에서의 인구 유입 비율이 높은데 비해서, 광주와 전남은 상대적으로 영남권에서의 인구 유입비중이 높다. 전체적으로 전입인구의 약 69%가 수도권에서 이동하며, 이 중 약 34%가 서울에서 이동한다.

(4) 전출 인구의 특성

호남지역에서 전출된 인구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출 인구의 약 74%가 수도권으로 전출되었으며, 중부권이 약 14%, 영남권이 약 12%이다(그림 3-24, 표 3-23). 수도권에의 의존율은 전입(약 69%)보다 전출(약 74%)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 호남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시도별 이동 인구수는 전체 전출인구수의 약 40%를 차지하는데, 전남과 광주간 인구이동이다.



〈그림 3-24〉 호남지역 에서 전출한 인구의 도착지(2000년)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이동 통계연보

[표 3-23] 호남지역 전출인구의 도착지(2000년) - 전출지(권역별)

(단위:명)

출발지(권역별)	전북	전남	광주	합계
1.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45,902 (68.3%)	46,808 (67.9%)	22,764 (71.3%)	115,474 (68.7%)
2. 중부권 (강원, 충북, 충남, 대전)	13,714 (20.4%)	7,635 (11.1%)	4,245 (13.3%)	25,594 (15.2%)
3.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7,626 (11.3%)	14,517 (21.1%)	4,928 (15.4%)	27,071 (16.1%)
* 호남권 (제주, 전남, 광주, 전북)	15,332	62,255	70,637	148,224
합계 (호남권 제외)	82,574 (100%)	131,215 (100%)	102,574 (100%)	316,363 (100%)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이동 통계연보

[표 3-24] 호남지역 전출인구의 도착지(2000년) - 전출지(시도별)

(단위:명)

도착지 / 출발지	전북		전남		광주		합계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1. 서울	32,637	31.3	33,517	20.4	17,894	17.4	84,048	22.6
2. 부산	2,285	2.2	5,466	3.3	1,319	1.3	9,070	2.4
3. 대구	1,074	1.0	1,063	0.6	528	0.5	2,665	0.7
4. 인천	5,587	5.4	6,859	4.2	2,736	2.7	15,182	4.1
5. 광주	7,143	6.9	62,634	38.1	-	-	69,777	18.8
6. 대전	6,427	6.2	2,785	1.7	1,640	1.6	10,852	2.9
7. 울산	838	0.8	1,349	0.8	471	0.5	2,658	0.7
8. 경기	26,700	25.6	26,998	16.4	12,520	12.2	66,218	17.8
9. 강원	1,640	1.6	2,130	1.3	964	0.9	4,734	1.3
10. 충북	1,990	1.9	1,945	1.2	742	0.7	4,677	1.3
11. 충남	5,990	5.8	2,883	1.8	1,252	1.2	10,125	2.7
12. 전북	-	-	8,207	5.0	6,382	6.2	14,589	3.9
13. 전남	7,317	7.0	-	-	53,374	52.0	60,691	16.3
14. 경북	1,630	1.6	2,634	1.6	670	0.7	4,934	1.3
15. 경남	2,142	2.1	4,533	2.8	1,325	1.3	8,000	2.2
16. 제주	764	0.7	1,480	0.9	771	0.8	3,015	0.8
합계	104,164	100%	164,483	100%	102,588	100%	371,235	100%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이동 통계연보.

각 시도별 특성을 살펴보면(표 3-24), 전북은 전출 인구 104,164명(2000년) 중 수도권으로 이동한 비중이 약 62.3%를 차지하는데, 이중 서울의 비중이 약 31.3%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충남과 대전 등의 중부권으로의 전출이 약 15.4%를 차지한다. 영남권으로의 전출은 약 7.7%로 미미하다.

전남은 전출 인구 164,483명 중 호남권 내로의 인구 유출이 약 4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 중 약 38.1%가 광주로 이동하였다. 다음이 수도권으로 약 41.0%가 이동하였는데, 이중 서울의 비중이 약 20.4%를 차지한다. 그러나 중부권과 영남권으로의 전출은 각각 10% 미만으로 미미하다.

광주는 전출 인구 102,588명 중 호남권 내로의 인구유출이 약 59.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 중 약 52%가 전남으로의 인구 유출이다. 다음으로는 수도권으로 약 32.3%가 이동하였는데, 이 중 서울의 비중이 약 17.4%로 가장 높다.

이와 같이 호남지역에서 전출된 인구의 전출지는, 수도권 특히 서울로의 인구 전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북이 지리적 근접지역인 중부권으로의 전출인구가 많은데 비해서, 광주와 전남은 영남권으로의 전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체적으로 전출인구의 약 74%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며,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의 약 51%가 서울로 이동했다.

[표 3-25] 호남 지역의 권역별 인구이동 수지(= 전입 - 전출, 2000년)

권역별 \ 시도별	전북	전남	광주	합계
1.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9,022	-20,566	-10,386	-49,974 (90.8%)
2. 중부권 (강원, 충북, 충남, 대전)	-2,333	-2,108	-353	-4,794 (8.7%)
3.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343	-528	+615	-256 (0.5%)
* 호남권 (제주, 전남, 광주, 전북)	+108	-10,066	+10,110	+152
합계 (호남권 제외)	-21,698	-23,202	-10,124	-55,024 (100%)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이동 통계연보

권역외 이동을 통해서 인구유출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인구수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약 90.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표 3-25). 중부권 및 영남권에서도 인구 유출현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그 비중은 약 9.2%로 낮다. 호남지역 자체 내 시도간의 인구이동에서는 전남의 인구 유출과 광주의 인구 유입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호남 지역의 인구 이동은 호남 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과 호남 지역 자체 내에서 농촌 지역인 전남에서 도시 지역인 광주로의 인구이동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2) 권역내 이동

권역내 이동은 호남지역의 3개 광역단체(전북, 전남, 광주) 내에서의 인구이동을 의미한다.

(1) 전라북도

전라북도의 권역외 이동에서는 14개 시군이 전부 전출 초과를 보이지만, 전라북도 내 이동에서는 전주시, 정읍시, 장수군이 전입 초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라북도 내 이동과 권역외 이동을 합한 총이동에서는 전주시와 정읍시가 전입초과를 보이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전출 초과를 보인다. 즉, 전주시와 정읍시는 타시도로의 전출초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내에서의 전입인구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표 3-26).

전주시는 최근 30년 동안 호남지역 41개 시군 중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도시인데, 이와 같은 인구성장은 전라북도 내에서의 인구 유입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전주시는 다른 시도로의 인구 이동이 4,279명의 전출 초과를 나타내지만, 전라북도 내 다른 시군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8,020명으로 전체적으로는 3,741명의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다. 전주시로의 전입자 중 전라북도 내에서의 전입이 약 60.9%, 타시도에서의 전입이 약 39.1%를 차지한다. 그리고 전출자는 전라북도 내로의 전출이 약 50.0%, 타시도로의 전출이 약 50.0%를 차지한다(그림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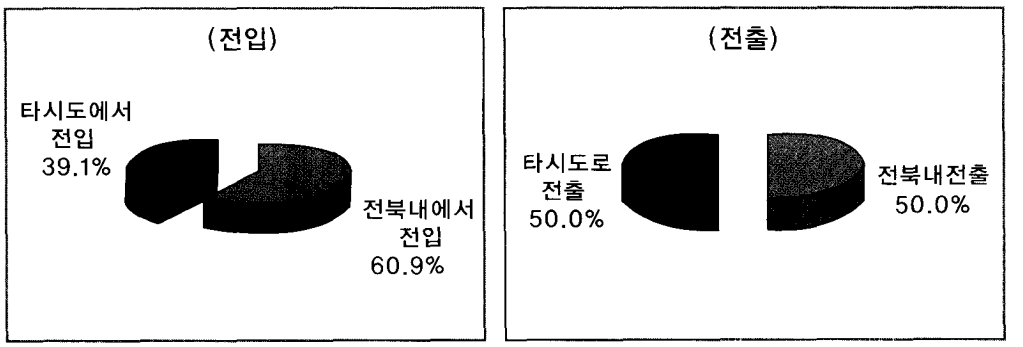
전주시 인구 증가의 주요 요인인 전라북도 내 인구의 전주 유입을 살펴보면(표 3-27), 전

[표 3-26] 전라북도의 인구이동(2000년)

(단위:명)

시군별	총이동			전라북도 내 이동			시도간 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전출)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1 전주시	56,240	52,499	+3,741	34,273	26,253	+8,020	21,967	26,246	-4,279
2 익산시	24,032	27,555	-3,523	10,556	10,991	-435	13,476	16,564	-3,088
3 군산시	15,542	19,913	-4,371	5,550	6,797	-1,247	9,992	13,116	-3,124
4 정읍시	18,924	18,529	+395	7,948	7,125	+823	10,976	11,404	-428
5 김제시	9,651	12,395	-2,744	5,730	6,997	-1,267	3,921	5,398	-1,477
6 남원시	8,232	9,569	-1,337	3,206	3,476	-270	5,026	6,093	-1,067
7 완주군	10,820	12,675	-1,855	7,810	8,853	-1,043	3,010	3,822	-812
8 부안군	5,018	7,678	-2,660	2,259	3,431	-1,172	2,759	4,247	-1,488
9 고창군	5,345	7,119	-1,774	1,795	2,209	-414	3,550	4,910	-1,360
10 임실군	3,281	4,870	-1,589	2,159	3,112	-953	1,122	1,758	-636
11 순창군	2,393	3,440	-1,047	891	1,144	-253	1,502	2,296	-794
12 진안군	3,769	6,072	-2,303	2,516	3,936	-1,420	1,253	2,136	-883
13 장수군	5,597	5,637	-40	3,136	2,965	+171	2,461	2,672	-211
14 무주군	2,098	4,581	-2,483	539	1,079	-540	1,559	3,502	-1,943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이동 통계연보.



〈그림 3-25〉 전주시 전입 · 전출 인구의 지역구조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이동 통계연보

입인구 34,273명(2000년) 중 전주의 근접 지역인 완주군(20.1%), 익산시(13.3%), 정읍시(10.9%), 김제시(9.9%)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중 정읍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주시와

[표 3-27]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로의 인구유입(2000년)

(단위:명)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34,273	2,483	4,573	3,735	2,204	3,399	6,872	3,008	664	2,010	2,397	538	853	1,537
(비율%)	(7.2)	(13.3)	(10.9)	(6.4)	(9.9)	(20.1)	(8.8)	(1.9)	(5.9)	(7.0)	(1.6)	(2.5)	(4.5)

자료: 통계청, 2000, 인구이동 통계연보.

[표 3-28] 전주시에서 전라북도로의 인구유출(2000년)

(단위:명)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26,253	1,533	3,209	3,787	1,810	2,433	5,712	2,005	276	2,011	1,534	402	563	978
(비율%)	(5.8)	(12.2)	(14.4)	(6.9)	(9.3)	(21.8)	(7.6)	(1.1)	(7.7)	(5.8)	(1.5)	(2.1)	(3.7)

자료: 통계청, 2000, 인구이동 통계연보.

행정구역을 접하는 지역이다.

반면 전주시에서 전라북도 내로 이동한 인구 26,253명 중 완주군(21.8%), 정읍시(14.4%), 익산시(12.2%), 김제시(9.3%)로 인구 유입 지역과 유출 지역이 일치하고 있으며, 특히 전주시와 완주군, 익산시, 정읍시 사이의 인구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표 3-28). 전주시와 인구이동이 가장 활발한 완주군의 경우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역인데, 완주군에서 전라북도 내로 이동한 8,853명 중 약 78%가 전주로 이동했으며, 전라북도 내에서 완주군으로 전입한 7,810명 중 약 73%가 전주에서 유입되었다.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완주군의 위치상의 특성이 이러한 활발한 인구교류를 가져왔다.

(2)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전북과 같이 권역외 이동에서는 22개 시군이 전부 전출 초과를 보인다. 그러나 전라남도 자체내 이동에서는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곡성군, 화순군, 영암군, 장성군의 7개 시군이 전입 초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라남도 내 이동과 권역외 이동을 합한 총이동에

서는 순천시만 전입초과이고, 나머지 21개 시군 지역 모두 전출 초과를 보인다. 즉, 순천시는 타시도로의 전출 초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내에서의 전입 초과 인구수가 더 많아서 인구증가가 나타나고 있다(표 3-29).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이동에서 인구가 증가한 순천시는, 다른 시도로의 인구 이동이 2,168명의 전출 초과를 보이지만, 전라남도 내 다른 시군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2,386명으로 전체적으로는 218명의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다. 순천시로의 전입자 중 전라남도

[표 3-29] 전라남도의 인구이동(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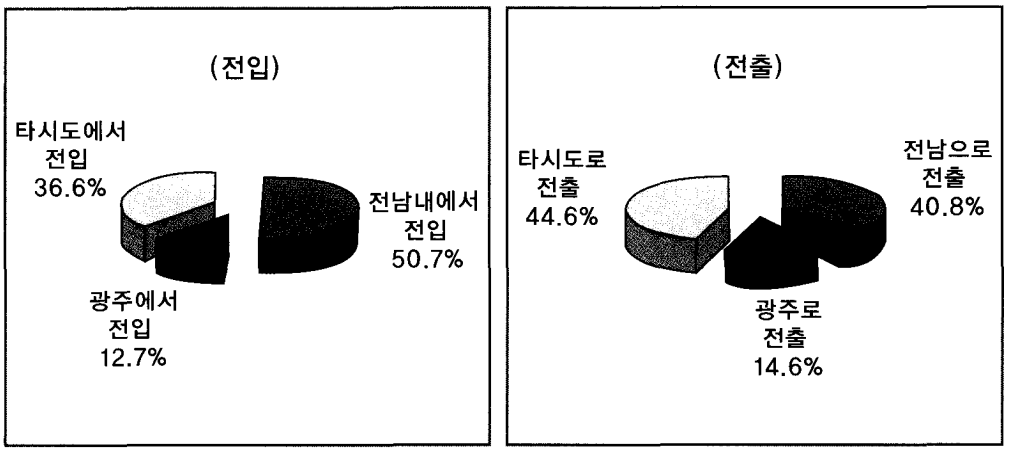
(단위:명)

시군별	총이동			전라남도 내 이동			시도간 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전출)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1 목포시	21,646	25,010	-3,364	11,268	10,474	+794	10,378	14,536	-4,158
2 여수시	15,807	21,257	-5,450	5,092	6,465	-1,373	10,715	14,792	-4,077
3 순천시	23,270	23,052	+218	11,787	9,401	+2,386	11,483	13,651	-2,168
4 나주시	10,348	12,181	-1,833	2,273	1,982	+291	8,075	10,199	-2,124
5 광양시	10,469	12,403	-1,934	4,662	5,157	-495	5,807	7,246	-1,439
6 담양군	4,925	6,359	-1,434	672	807	-135	4,253	5,552	-1,299
7 곡성군	8,616	8,947	-331	1,407	1,282	+125	7,209	7,665	-456
8 구례군	5,738	6,352	-614	1,373	1,460	-87	4,365	4,892	-527
9 고흥군	9,380	10,584	-1,204	2,988	3,025	-37	6,392	7,559	-1,167
10 보성군	4,749	6,251	-1,502	1,677	1,935	-258	3,072	4,316	-1,244
11 화순군	10,269	10,349	-80	1,783	1,542	+241	8,486	8,807	-321
12 장흥군	3,613	5,610	-1,997	953	1,236	-283	2,660	4,374	-1,714
13 강진군	3,564	5,366	-1,802	1,135	1,424	-289	2,429	3,942	-1,513
14 해남군	9,999	11,650	-1,651	3,119	3,276	-157	6,880	8,374	-1,494
15 영암군	7,402	8,449	-1,047	3,277	2,869	+408	4,125	5,580	-1,455
16 무안군	7,664	8,672	-1,008	3,614	3,766	-152	4,050	4,906	-856
17 함평군	4,230	5,638	-1,408	919	1,076	-157	3,311	4,562	-1,251
18 영광군	6,372	8,543	-2,171	1,041	1,108	-67	5,331	7,435	-2,104
19 장성군	12,844	13,404	-560	1,107	982	+125	11,737	12,422	-685
20 완도군	7,611	9,346	-1,735	1,592	1,747	-155	6,019	7,599	-1,580
21 진도군	2,958	4,009	-1,051	987	1,219	-232	1,971	2,790	-819
22 신안군	4,720	6,300	-1,580	2,523	3,016	-493	2,197	3,284	-1,087

자료: 통계청, 2000, 인구이동 통계연보.

내에서의 전입이 약 50.7%, 타시도에서의 전입이 약 49.3%를 차지한다. 순천시에서 전출자 중 전라남도 내로의 전출이 약 40.8%, 타시도로의 전출이 약 59.2%를 차지한다(그림 3-26).

순천시 인구 증가의 주요 요인인 전라남도 내 인구의 순천시 유입을 살펴보면(표 3-30), 전입인구 11,787명(2000) 중 순천의 근접 지역인 광양시(27.7%)와 여수시(27.6%), 고흥군(11.9%)에서의 유입인구의 약 67%를 차지한다. 반면 순천시에서 전라남도 내로 유출되는 인구 9,401명 중 광양시(27.5%), 여수시(22.9%), 고흥군(13.2%)으로 전출된 인구가 약 64%를 차지한다(표 3-31). 인구 유입 지역과 유출 지역이 일치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그림 3-26〉 순천시 전입 · 전출 인구의 지역구조

자료: 통계청, 2000, 인구이동 통계연보.

[표 3-30] 전라남도에서 순천시로의 인구유입(2000년)

(단위:명)

순천시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11,787	296	3,250	107	3,260	66	410	818	1,397	973	202	153
(비율%)	(2.5)	(27.6)	(0.9)	(27.7)	(0.6)	(3.5)	(6.9)	(11.9)	(8.3)	(1.7)	(1.3)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광주시
82	183	60	43	49	86	83	195	37	37	2,946
(0.7)	(1.6)	(0.5)	(0.4)	(0.4)	(0.7)	(0.7)	(1.7)	(0.3)	(0.3)	

자료: 통계청, 2000, 인구이동 통계연보.

공통점은 지리적 으로 근접해 있다는 점이다.

호남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가장 심했던 신안군은, 전라남도와의 인구 이동과 타시도와의

[표 3-31] 순천시에서 전라남도로의 인구유출(2000년)

(단위:명)

순천시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9,401	264	2,149	136	2,586	65	432	728	1,244	717	202	90
(비율%)	(2.8)	(22.9)	(1.4)	(27.5)	(0.7)	(4.6)	(7.7)	(13.2)	(7.6)	(2.1)	(1.0)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광주시
43	159	105	44	32	91	91	151	25	47	3,366
(0.5)	(1.7)	(1.1)	(0.5)	(0.3)	(1.0)	(1.0)	(1.6)	(0.3)	(0.5)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이동 통계연보.

인구에서 모두 전출 초과를 나타낸다. 전라남도에서의 전입이 약 53.5%, 타시도에서의 전입이 약 46.5%를 차지하며, 전출은 전라남도로의 전출이 약 47.9%, 타시도로의 전출이 약 52.1%를 차지한다.

전라남도에서 신안군으로 도내 이동한 인구 2,523명(2000년) 중 약 80.1%가 근접지역인 목포시에서 유입되었으며, 시도간 이동에서 유입된 인구 2,197명 중 약 25.2%가 광주시에서 유입되었다(표 3-32). 그리고 신안군에서 전라남도로 이동한 인구 3,016명 중의 약 82.4%가 목포시로 이동하였으며, 다른 시도로 전출한 인구 3,284명 중 약 20.3%가 광주

[표 3-32] 전라남도에서 신안군으로의 인구유입(2000년)

(단위:명)

신안군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2,523	2,020	24	47	36	8	11	2	4	18	2	10
(비율%)	(80.1)	(1.0)	(1.9)	(1.4)	(0.3)	(0.4)	(0.1)	(0.2)	(0.7)	(0.1)	(0.4)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광주시
10	25	66	72	81	14	13	6	25	29	554
(0.4)	(1.0)	(2.6)	(2.9)	(3.2)	(0.6)	(0.5)	(0.2)	(1.0)	(1.1)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이동 통계연보.

로 이동하였다(표 3-33). 특히 신안군은 전남지역 내에서 목포시와의 인구 교류 의존도가 크다(그림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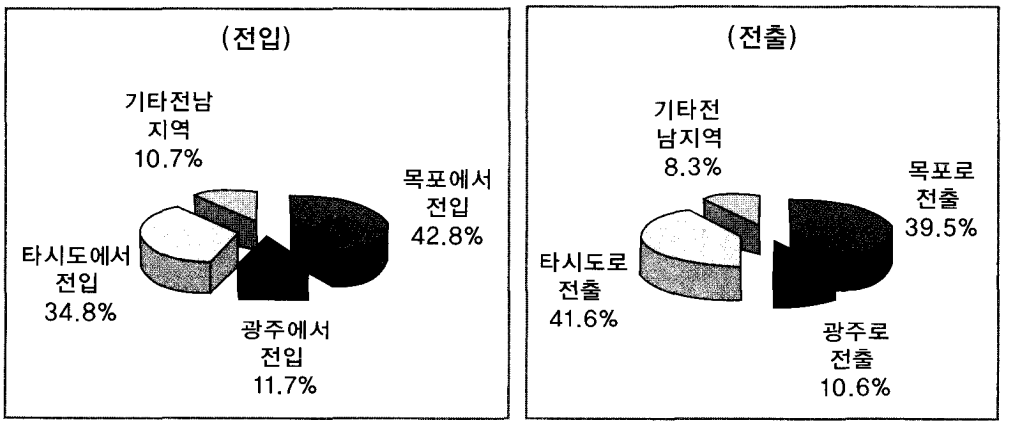
[표 3-33] 신안군에서 전라남도로의 인구유출(2000년)

(단위:명)

신안군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3,016	2,486	16	37	34	12	9	1	1	14	1	25
(비율%)	(82.4)	(0.5)	(1.2)	(1.1)	(0.4)	(0.3)	(0.0)	(0.0)	(0.5)	(0.0)	(0.8)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광주시
18	22	45	81	114	14	26	4	27	29	666
(0.6)	(0.7)	(1.5)	(2.7)	(3.8)	(0.5)	(0.9)	(0.1)	(0.9)	(1.0)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이동 통계연보.



〈그림 3-27〉 신안군 전입 · 전출 인구의 지역구조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이동 통계연보.

(3) 광주광역시

광주시는 권역외 이동에서 서구와 광산구가 전입 초과를 보이지만, 동구와 남구 그리고 서구의 3개구는 전출 초과를 보이고 있다(표 3-34). 광주시내 이동 역시 서구와 광산구가 전입 초과를, 나머지 3개구는 전출 초과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 내 이동과 권역외 이동을

합한 총이동에서도 서구와 광산구가 전입 초과를 보인다. 이 중 서구는 총 인구 유입 중 광주 시내에서의 유입이 약 82%를 차지하고, 다른 시도에서의 인구 유입은 약 18%를 차지하여, 광주시내 자체 내의 인구 유입이 서구 인구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반면 광산구는 광주 시내에서의 유입이 약 9%를 차지하고, 다른 시도에서의 인구 유입이 약 91%를 차지하여, 서구와는 다른 인구증가 요인을 가진다.

[표 3-34] 광주시의 인구이동(2000년)

(단위:명)

구별	총이동			광주시내 이동			시도간 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전출)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1 동구	20,118	25,052	-4,934	11,077	14,735	-3,658	9,041	10,317	-1,276
2 서구	56,080	38,782	+17,298	33,752	19,559	+14,193	22,328	19,223	+3,105
3 남구	32,355	39,681	-7,326	16,292	22,288	-5,996	16,063	17,393	-1,330
4 북구	63,333	69,833	-6,500	26,736	31,402	-4,666	36,597	38,431	-1,834
5 광산구	37,030	35,582	+1,448	18,485	18,358	+127	18,545	17,224	+1,321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이동 통계연보.

[표 3-35] 다른 구에서 서구로의 인구유입(2000년)

(단위:명)

서 구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남
33,752 (비율)	3,470 (10.3%)	10,898 (32.3%)	11,913 (35.3%)	7,471 (22.1%)	13,525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이동 통계연보.

인구의 전출이 많은 동구와 남구, 북구는 유출인구의 약 76%가 광주 시내의 서구로 이동하고 있다. 서구로 전입한 33,752명 중 남구와 북구에서의 이동 인구가 약 68%를 차지하여, 전남이나 타시도에서 이동한 인구보다 비중이 높다(표 3-35). 그리고 타시도에서 광주광역시로 이동한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인데(약 61%), 이 중 약 22%가 서구로 이동했다. 서구에서 광주시내 다른 구로 이동한 인구 19,559명 중 북구로 이동한 인구의 비중이 약 36.1%로 가장 높다(표 3-36). 특히 북구는 전남을 포함한 타시도에서 전입

[표 3-36] 서구에서 다른 구로의 인구유출(2000년)

(단위:명)

서 구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남
19,559	1,800	5,234	7,067	5,458	9,835
(비율)	(9.2%)	(26.8%)	(36.1%)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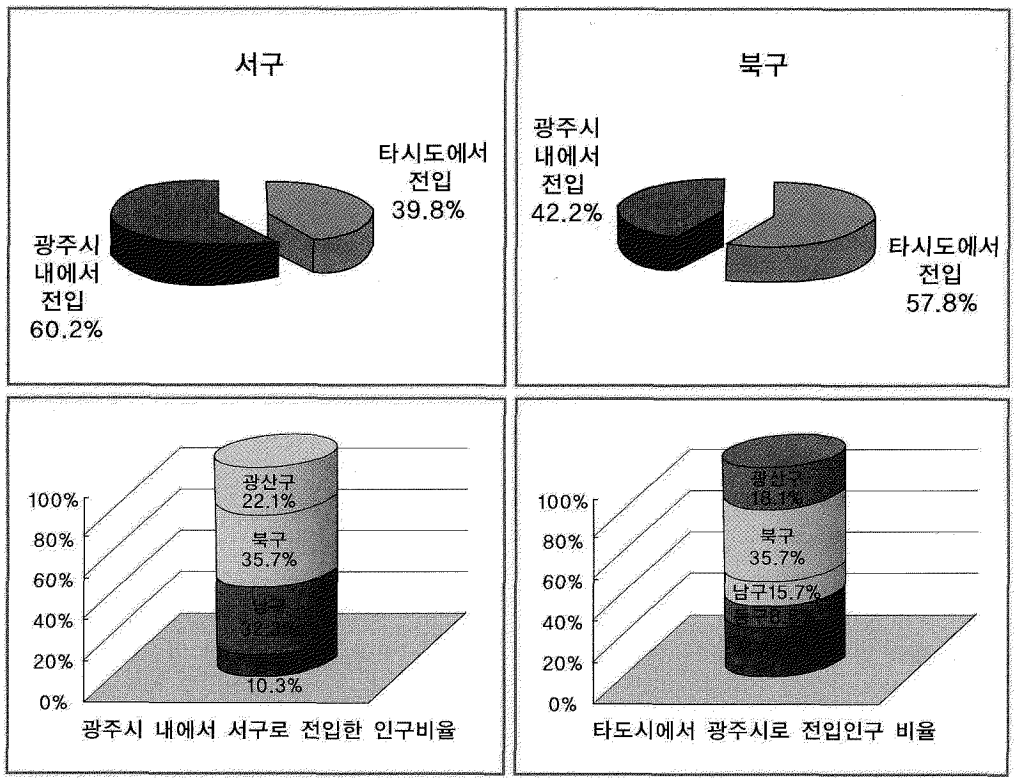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이동 통계연보.

[표 3-37] 타시도 인구의 광주시 전입(2000년)

(단위:명)

서 구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합계
22,328	9,041	16,063	36,597	18,545	102,574
(21.8%)	(8.8%)	(15.7%)	(35.7%)	(18.1%)	(100%)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이동 통계연보.



〈그림 3-28〉 광주광역시 서구와 북구의 인구전입 특성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이동 통계연보

한 인구가 가장 많이 이동한 지역이다(표 3-37). 광주광역시 인구이동의 특징은 광주시 외에서 전입한 인구는 북구로 전입하고, 광주시내 자체의 인구는 서구로 이동하고 있다(그림 3-28).

3. 인구 문제

1) 구조적 문제 : 인구의 절대 수 감소

호남지역 인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1966년을 기점으로 계속되고 있는 인구의 절대수 감소이다. 1966년 호남지역 인구는 약 657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약 23%를 차지했으나, 2000년에는 약 524만 명으로 감소하여 전국 인구의 약 11%로 인구의 절대수와 전국대비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호남지역 인구의 감소 원인은 출생률 저하와 이촌향도에 의한 도시 지역으로의 사회적 인구이동에 있다. 호남지역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전국 평균인 8.2%(2000년)에 비해서, 전북이 5.2%, 전남이 3.6%로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호남지역 인구의 급격한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화에 따른 이촌향도에 있다.

호남지역의 인구수는 1949년의 남한인구의 약 25.2%를 차지하여 전체인구의 1/4에 달하였고, 1966년에는 인구 절대수에서 최고에 도달했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하여 상대적인 비중은 감소되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그에 따른 이촌향도에 의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으로, 호남지역의 41개 시군구 중 31개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했다. 인구가 증가한 10개 시군구도 호남지역 내 도시지역으로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과 함께 자체 내에서도 이촌향도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호남지역 인구의 사회적 이동은 1990년대 이후 절대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전북의 경우 2000년도에 전입보다 전출이 21,590명이 많았고, 전남 역시 전출인구가 33,538명이 더 많았다. 이러한 전출 인구수는 자연적 인구 증가수를 상회하여, 전체 인구수는 전북 11,040명, 전남 25,877명의 감소로 나타났다. 단 도시 지역인 광주광역시는 호남지역의 전체 인구수 감소 경향과는 달리 계속적인 인구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호

남 지역 전체 인구수의 절대적 감소는 농촌지역의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촌향도 현상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남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 원인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과 함께(전체 이동의 약 41.0%), 근접한 도시 지역인 광주광역시로의 인구 이동(전체 이동의 약 38.1%)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

호남 지역에서 전출하는 인구의 목적지는 수도권이 약 74.1%, 중부권이 약 13.6%, 영남권이 약 12.2%를 차지하며, 특히 서울로의 이동 비율이 가장 높다(약 22.6%). 전북은 지리적 근접성이 있는 중부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수도권 다음이지만, 전남과 광주는 중부권보다는 영남권과의 인구교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호남지역으로 이동해오는 인구의 출발지 역시 수도권이 가장 높아 약 68.7%, 영남권이 약 16.1%, 중부권이 약 15.1%를 차지하며,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의 비중이 가장 높다(약 18.0%).

결과적으로 호남지역 인구의 감소는 수도권 특히 서울로의 인구 유출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자연증가율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호남지역 자체 내에서도 이촌향도 현상에 따라 농촌 지역인 전남에서 도시 지역인 광주광역시로의 인구 유입과 전북에서 전주시로의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에 의한 인구의 절대수 감소와 호남 지역 내에서의 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편중이라는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2) 경제적 문제 : 연령별 구조의 문제

인구수의 감소는 생산과 소비의 감소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활력을 상실하게 하며, 특히 15-64세 사이의 경제활동 인구의 지역외 유출은 지역경제의 쇠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호남지역의 인구 구조에서 경제적 측면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20대의 인구유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지역외로 유출되는 인구 중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호남 지역 전체 인구 유출의 약 70.2%를 차지한다. 단 광주의 경우에는 도시의 특성으로 오히려 20대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 구조에서 경제활동 연령인 15-64세 인구의 비중이 전국 평균이 약 71.7%인데 비

하여, 전북은 약 68.5%, 전남은 약 66.6%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 분포에서도 0-4세 인구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져 사회적 감소 뿐 아니라 자연적 증가율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 분포에서도 전국적으로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35-39세의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데 비해서, 전북과 전남은 아직 경제활동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인 15-19세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2000년).

또한 연령 중위수가 전북 33.5세, 전남 35.9세로 전국 평균인 32.0세 보다 높게 나타나 인구의 노령화를 보여주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 비중은 전국 평균이 약 7.3%인데 비해서, 전북은 11.2%, 전남은 13.6%로 높게 나타나, 인구의 노령화 지수가 전국 평균이 11.4인데 비하여, 전북은 13.2, 전남은 13.1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호남 지역 인구의 경제적인 문제는 절대수 감소에 따른 생산과 소비의 감소, 취업이 이루어지는 20대 인구의 급격한 지역외 유출과 출생율 저하, 경제활동 연령의 비중 감소,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문제점이다.

그러나 호남지역 내에서도 중심도시인 광주와 전주의 급격한 인구 증가는 수도권과 호남지역간의 문제보다도,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 지역에서의 일자리 부족은 취업 시기에 해당하는 20대 인구의 지역외 유출로 이어지고, 결혼 적령기인 20대 인구의 급격한 유출은 이 지역 인구의 자연증가율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20대 인구가 지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경제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

3) 사회적 문제 : 노령화, 여성화, 부양비율 증가

인구의 절대수 감소, 경제활동인구의 급격한 감소, 출생율 저하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인구의 노령화, 그로인한 부양비율의 증가 그리고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여성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인구의 노령화 문제는 노령화의 지수를 통해 볼 수 있는데, 노령화 지수의 전국 평균이 35.0인데 비해서 전북은 55.4, 전남은 68.5로 기형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

나 도시지역인 광주는 24.4로서 전국 평균보다 낮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도 전국 평균이 약 7.3%인데 비해서 전북은 약 11.2%, 전남은 약 13.6%를 차지한다. 노령화 지수의 하나의 변수인 0-14세 인구수에서는 전국 평균이 약 20.9%인데 비해서 전북 20.2%, 전남 19.8%로 큰 차이는 없어, 호남 지역의 노령화 지수가 높은 것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부양인구비는 전국 평균이 39.5인데 비해서, 전북은 45.9, 전남은 50.2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부양인구비에서 중요변수인 15-64세 인구의 비중 저하와 특히 20대인구의 급격한 사회적 유출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성비에서는 전국평균이 100.79인데 비해서, 전북은 98.19, 전남은 98.0으로 여초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비의 차이는 0-14세 인구에서 전국 평균 성비가 111.79인데 비해서, 전북은 108.00, 전남은 108.64, 광주가 108.88로서 출생인구수에서 남자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적다. 여기에다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의 성비에서 전국 평균이 61.76인데 비해서, 전북은 61.60, 전남은 59.31, 광주는 58.87로 낮고,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리고 광주의 경우 다른 인구 특성에서는 도시적 성격이 나타나는데, 성비에서는 농촌지역인 전북 및 전남과 같은 성향을 보인다.

65세 이상 인구에서 전국 평균은 남자 약 5.6%, 여자 약 9.1%를 차지하는데, 전북은 남자 8.6%, 여자 13.8%, 전남은 남자 10.2%, 여자 16.9%로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 이러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 증가는 노령화 지수 상승, 부양인구비 증가, 여성화에 영향을 미쳐서, 사회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킨다.

호남지역 인구의 사회적 문제는 20대 인구의 급격한 역외 유출로 생산연령층의 감소와 자연증가율의 감소로, 인구의 노령화와 부양인구비의 증가 등 부정적인 요인들이 동시에 대두되고 있다.

빈 면



제4장
전라지방 - 취락의 발달과 구조

이현욱 (전남대학교)

빈 면

제4장 취락의 발달과 구조

1. 촌락의 구조와 변화

촌락은 정착생활과 더불어 발달하여 인간의 농업방식에 따라 그 입지와 규모가 결정되었다. 촌락은 우리 조상의 삶이 그대로 전해지는 우리의 문화유산으로서 농촌과 어촌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인구의 감소와 노년층의 증가는 도시 중심의 정주체계로의 변화에서 농촌 특히 촌락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요소인데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호남지방의 촌락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인구의 절대적 감소를 경험하였으나, 사회 · 문화 · 경제적으로 다른 지역의 촌락보다는 전통적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 촌락의 형성

(1) 촌락의 입지와 분포

촌락은 오랜 세월에 걸쳐 그 지역의 자연조건과 사람들의 가치관 · 생활양식 그리고 사회제도 등이 어우러져 빚어낸 결과물로 고유한 지역성과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촌락의 입지조건은 일반적으로 크게 자연조건과 인문조건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연조건은 지질 · 지형 · 기후 · 식생 등으로, 인문조건은 경제 · 교통 · 정치 · 사회조건과 문화적 전통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호남지방의 촌락은 고려말 이후 산지산록 중심의 한전(旱田)에서 조선초기 이후 평지와 저습지의 수전(水田)으로 전환되면서 농경지가 확대되어 하천 상류의 곡저평지에서 중 · 하류의 충적지로 농경지의 개간과 정착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16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수전농업과 이앙법의 발달로 농지개간이 활발해지고, 둑 · 제방과 저수지의 축조로 농경지역이 평야 · 저지대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촌락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새롭게

성장하는 마을들의 입지조건은 주변의 지리적 조건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곡저평지 부근에서 평야 저지대로 이동하여 16세기에 이르면 낮은 구릉상이나 평지 촌락을 이루게 되었으며, 이러한 평지 촌락의 형성경향은 18 · 19세기에 이르면 더욱 활발해진다.

큰 강 연안의 넓은 들은 수해가 빈번해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충적지 또는 범람원의 넓은 평야지대에서는 고도가 다소 높은 하천변의 자연제방에 촌락이 입지했을 뿐 그 밖의 곳은 저습하여 대부분 황무지나 다름없었다. 자연제방에는 열촌이 아니라 괴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침수가 빈번한 저습지의 가옥은 일반적으로 집터를 돋운 것이 특징이다. 만경평야 · 김제평야 등 호남지방의 넓은 평야지대의 촌락 중에는 일제강점기에 하천의 제방이 축조되고 관개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형성된 것이 많다. 이러한 촌락은 간척촌과 마찬가지로 논만 있고 밭이 없으며, 멀리서 상수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식수가 좋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호남지역의 촌락의 입지와 분포는 농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물의 이용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호남지방의 촌락의 입지와 분포는 하천수계를 중심으로 5개 지역, 즉 전북지역은 금강수계와 동진강과 만경강 수계, 전남은 영산강, 섬진강과 탐진강 수계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라북도의 동북부지역으로 금강의 상류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백두대간의 서쪽과 금남호남정맥의 북쪽, 금남정맥의 동쪽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전북지방에서는 가장 높고 험준한 지세를 보이는 지역으로 무주, 진안, 장수의 침식분지를 중심으로 촌락이 형성되어 있다.

둘째, 전북의 서북부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으로 해안평지, 자유곡류천 유역의 범람원, 충적하곡, 구릉지대, 산지사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넓은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다.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에는 넓은 간석지가 발달하여 간척사업에 의해 육지화되어 농업지대로 이용되고 있다. 이들 지역의 하류에 해당하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전북에서 개척의 역사, 즉 촌락의 역사가 늦은 지역으로 내륙 쪽에서 점차로 하천 유역 저습지로 수방대책과 함께 개척되어 갔으므로 내륙의 기존 취락을 모촌(母村)으로 한 촌락들의 분포가 많다.

셋째, 영산강 유역은 호남정맥의 서쪽지역으로 범람원, 충적단구, 구릉지가 발달되어 있

으며, 하구 일대에는 간석지가 넓게 분포되었다. 범람원은 영산강 본류와 여러 지류를 따라 발달하였으나 수해의 피해가 심하게 나타난 곳이다. 범람원은 조선시대부터 논으로 이용되었고, 구릉지의 개간지는 밭이나 과수원으로, 간석지는 간척되어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영산강 유역은 호남지방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광주, 나주, 화순, 영암, 목포 등의 큰 취락이 일찍이 형성되었다.

넷째, 섬진강 유역으로 백두대간, 금남호남정맥과 호남정맥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마이산을 분수계로 금강과 나뉘어 임실, 순창, 남원 등의 전라북도 동남부의 큰 취락을 형성하고, 전라남도에서는 보성강과 섬진강을 중심으로 보성, 곡성 등의 큰 취락이 형성되었다.

다섯째, 탐진강 유역으로 호남지방에서 가장 유역면적이 좁은 지역으로 장흥과 강진을 중심으로 촌락이 형성되어 있다. 위의 다섯 하천 유역에 포함되지 못한 지역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침식분지에서 취락을 형성하고 있다.

호남지역은 5대 하천의 유역에 포함되지 못한 지역을 제외하곤 모두 큰 하천을 중심으로 취락을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의 농업활동이 벼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물이 중요한 촌락입지 요인을 이루고 있다. 호남지역은 소백산맥이 통과하는 동부지역을 제외하곤 저산성 구릉지, 충적지와 침식분지로 이루어져 농업활동에 유리하여 촌락이 형성하기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물론 범람원과 하천의 하류지역에서 홍수에 의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지만 촌락의 입지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여 입지하였다.

호남지방의 동부를 통과하는 소백산맥의 촌락들은 조선후기에 피병(避兵) · 피세(避世)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이들 지역 촌락은 벼농사에 의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져 평야지대의 농촌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2) 촌락의 형태

호남지방의 촌락은 자연발생적인 촌락과 간척사업을 통한 계획적 촌락의 두 가지 형태로 발달하였다. 호남지방의 촌락은 자연발생적 촌락으로 대부분 벼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촌락이기 때문에 집촌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고 집촌 중에서도 괴촌(塊村)이 많다. 계획적 촌락은 간척지 촌락이 대표적이다. 1930년대 초에 간척사업에 의해 조성된 김제의 광활면의

경우 원래 6가구씩으로 편성하여 직선상의 농로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했다.

호남지방은 해안선이 길어서 어촌이 많다. 그러나 순수한 어촌보다는 이른바 반농반어촌이 많다. 순수한 어촌은 대개 포구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지형적 제약 때문에 가옥의 밀집도가 매우 높은 집촌이 대부분이다.

산촌(散村)은 가옥들이 집단을 이루지 않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흩어져 있는 형태의 촌락을 가리킨다. 산촌은 밭농사를 주로 하는 산간지대와 구릉지대에 발달되어 있으며 과수원 지대에도 분포한다. 호남지방의 경우 나주의 과수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산촌이 일부 분포한다.

2) 촌락의 입지별 유형

(1) 산지의 촌락

산촌지역은 산림의 점유비율이 현저히 높고, 사회 · 경제 · 문화적 수준이 낮은 인구 과소지역으로서 임야율 70% 이상, 경지율 27% 이하, 인구밀도 1.44인/ha 이하인 읍 · 면 지역을 의미하는데, 행정구역상 498개 읍 · 면, 5,116개 법정리 중에서 2,034개 리가 산촌마을로 지정되어 있다.

호남지방의 산지촌은 덕유산과 지리산을 잇는 백두대간과 장수군 장안산에서 진안군 마이산으로 이어지는 금남호남정맥, 마이산에서 부소산으로 이어지는 금남정맥, 마이산에서 광양 백운산으로 이어지는 호남정맥을 따라 발달하였다. 특히 지리산과 덕유산의 산록을 따라 산지촌이 발달하였다.

소백산맥 줄기의 산지촌은 조선후기 이래 전쟁과 사회적 혼란 등의 정치 · 사회적 조건이 이주원인이 되었다. 특히 지리산지 주민들 중 대다수가 이를 피해 입산한 이들이므로 피병(避兵) · 피세(避世)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촌락의 터로 삼은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나라 산지의 농경지 개간은 밭이 위주이나 지리산지에서는 밭은 물론 일찍부터 평지에 비해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논을 조성해 왔으며, 전체 농경지 중에서 밭보다는 논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리산지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다우지역이며, 동시에

집중호우가 가장 빈번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특별한 대비없이 경사지에 조성된 밭은 토사붕괴로 매몰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 논을 이용한 벼농사이다. 경사지에서는 농경지를 개간할 경우 그 성패의 관건은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경사면의 계단화이다.

호남지방의 산지촌은 고도가 높고 험준한 산지를 배경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농지의 면적이 넓지 않아 농산물의 생산이 많지 않은 편이다. 이들 산지촌은 다우지역이어서 토사의 유출이 많아 밭농사보다는 논농사가 더 활성화되어 밭작물이나 과수재배가 발달하지 않았다.

(2) 평야의 촌락

호남지방의 평야는 하천 연변의 충적지, 오랜 침식을 받아 이루어진 침식저지, 서남해안의 간척지로 나눌 수 있다. 하천의 퇴적물이 쌓여서 이루어진 충적지는 한국 평야의 중심을 이루며, 경제적 이용가치도 가장 크다. 충적지는 상류부에 선상지, 중 · 하류부에 범람원, 하구에 삼각주의 형태로 발달한다. 그러나 호남지방에서 선상지와 삼각주의 발달은 미약하고 충적지의 대부분은 범람원이다.

범람원은 대부분 하천의 중 · 하류를 따라 형성되어 있으며, 하류의 넓은 범람원에서는 자연제방과 배후습지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제방은 지면이 다소 높고 사질토양으로 이루어져 일찍이 취락이 입지하고 농경지로 이용되어 왔으며, 자연제방 뒤의 배후습지는 상습적인 침수지역으로 대부분 논으로 개간되었다.

침식저지는 충적지의 주변부이거나 충적지들 사이에 낮은 분수령을 이루며 분포한다. 충적지보다 약간 높고 다소 기복도 있지만 산지나 구릉지보다는 평야의 경관을 닮았다. 침식저지는 호남지방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하천의 중 · 상류에 발달한 분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호남지방의 평야는 하천을 따라 형성된 좁은 충적지와 이보다는 5~10m 더 높은 침식저지의 무수한 모자이크로 이루어져 있다. 충적지의 대부분은 논으로 이용되고 있고, 침식저지는 주로, 밭, 과수원, 목장 등으로 이용된다.

호남지방의 하천 상류의 촌락은 개간된 농토인근의 산록주변을 따라 괴촌을 이루며, 농토개간과 더불어 자연발생한 자연부락이 대부분이다. 이 촌락들은 모두 농촌으로 농경지와 더불어 발달하였다. 하천 중·하류의 넓은 충적지에 이르면, 촌락의 입지패턴이 상류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하천변의 넓은 충적지를 개간하여 촌락과 농경지를 형성하였는데 이들 촌락들은 거리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경지 가운데에 괴촌형태의 촌락을 발전시켰다.

(3) 간척지의 촌락

호남지방의 서해안으로 발달한 하천의 하구와 연안에 광활한 간석지가 발달한다. 하천유역에서 생활해 온 인간의 유구한 역사에서 상류 산간계곡을 정착의 기원인 요람지로 하여 점진적으로 중·하류의 하안 충적지로, 그 후 다시 하구 연안의 간석지로 개간의 지향 방향이 전개되어 개척첨단은 현재 하구언 일대에 형성되어 있다.

하구연안의 넓은 간석지에 방조제를 축조하고 새로운 개간지를 획득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개척주체의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간척사업에 참여하는 개척주체는 대규모 자본, 기술,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역할수행능력을 보유한 자라야만 가능하다. 투자하여 얻어진 토지에 대해서는 개척주체의 개간계획과 의도에 의하여 대단위 영농단지가 조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식민지시대에 수행된 간척사업에서는 영농의 편의, 노동력의 통솔, 관리, 생산성의 제고 등 농장 측의 이익이 우선으로 취락입지가 결정되고 있다. 간척지에서의 촌락들은 농장의 의도에 따라 농장의 중앙에 입지하고, 영농의 편의, 관리의 편의 등으로 열촌의 형태로 간척지의 관개수로변을 따라 입지가 유도되고 있다. 지하수를 구하기 힘든 간척지의 여건에서는 수로를 관류하는 농업용수가 식수로도 개간초기에는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광복이후 정부에 의해서 간척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촌락의 입지가 간척지의 중앙입지가 기피되고, 간석지 주변에 있던 기존의 촌락에 새로운 촌락을 덧붙여 주거공간을 조성하였다.

(4) 해안의 촌락

호남지방은 서해안과 남해안으로 둘러있어 해안의 촌락이 발달하였다. 대부분의 해안의 촌락은 어업과 농업을 겸하는 반농반어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서해안 지역은 간석지가 발달하여 군산을 제외하곤 규모가 큰 어항이 발달하지 못하였으나 남해안은 간석지가 적은 관계로 목포, 여수 등의 큰 어항이 발달하였다.

호남지방의 해안은 어패류의 양식업이 매우 발달하였다. 간석지나 얕은 바다에서 해산물을 기르는 양식업은 부문에 따라서는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였다. 김, 미역, 굴, 바지락, 고막, 홍합 등의 양식이 서남해안을 따라 발달하였다.

호남 서해안은 해안선의 출입이 심하고 조차가 커서 사빈의 발달이 빈약하다. 변산반도처럼 바다로 돌출해 있어서 외해로부터 큰 파랑이 직접 와 닿는 해안과 일부 섬에 비교적 깨끗한 사빈이 형성되어 있을 뿐이어서 호남 서해안에서 해수욕장의 발달은 다른 지역의 해안보다 미약한 편이다. 호남 남해안 또한 출입이 심하고 섬들이 파랑을 가로막아 서해안보다도 사빈의 발달이 빈약하다.

호남의 서남해안에 산재해 있는 갯벌 등의 자연자원은 보전이 곧 지역주민의 편익이 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므로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의미 있는 여행인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자연환경 보전전략이자 지역활성화 전략으로 활용하여 어촌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 서남해안을 잇는 77번 국도를 이용하여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을 개발을 하고 있다.

3) 촌락의 변화

농촌은 도시화, 공업화, 시장경제화 등에 의하여 마을의 고립성 해체와 개방성의 증대로 대도시 주변 농촌의 도시화와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에 의한 농촌인구의 감소로 소농적 가족경제의 해체를 가져왔고, 농업의 상업화와 자본화가 가속화되고, 전통가치의 붕괴와 근대

지향으로 마을의 공동체의 붕괴와 새로운 지역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촌인구의 구성과 농업의 경작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고, 농산물시장 개방 등은 농업의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농촌에서 일률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농촌에 대한 도시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그러한 영향력을 수용하는 농민의 의지에 따라 농촌의 성격은 다양하게 분화되어진다. 대도시 주변지역의 농촌의 경우는 농업을 하는 농민의 정주공간으로서 동질성을 강하게 가지던 농촌이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는 다양하게 분화된 정주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러한 농촌의 변화는 호남지방에서는 광주와 전주 등의 대도시 주변의 일부 농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 밖의 농촌에서는 다양하게 분화된 정주공간으로 바뀌기보다는 농업을 하는 동질성은 남아 있지만 인구와 감소와 사회적 결합의 약화로 인한 농촌의 해체를 고민하게 하고 있다.

(1) 농촌의 인구규모변화

한국의 농가인구는 1967년을 정점으로 하여 절대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경제발전론을 신봉하는 대다수의 학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농가인구의 감소는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경제개발전략은 농촌 지역의 인구와 자본이 지속적으로 도시 비농업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의 틀을 만들었고, 농업정책에서도 농업 경영규모의 확대와 효율화를 위해 농가 인구의 감소와 이들의 농촌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을 촉진시켜 왔다.

농촌 거주인구의 감소는 1967년부터 시작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에도 그 감소의 폭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북의 농가수는 1985년에 206,894가구에서 2002년 122,919가구로 40.6% 감소하였고, 농가인구수는 940,770명에서 333,577명으로 64.5%, 농가당 인구수는 4.5명에서 2.7명으로 감소하였다. 전남의 농가수는 1985년에 336,539가구에서 2002년에 208,190가구로 38.1% 감소하였고, 농가인구수는 1,462,919명에서 522,290명으로 64.3%로, 호당 인구수는 4.3명에서 2.5명으로 감소하였다.

어촌 거주인구도 마찬가지로 전북의 어가수는 1985년에 6,655가구에서 2002년에 3,943가구로 40.8%가 감소하였고, 어업인구수는 32,164명에서 11,152명으로 65.3%가 감소하였다. 어가당 인구수는 4.8명에서 2.8명으로 41.7%가 감소하였다. 전남의 어가수는 1985

년에 53,276가구에서 2002년 23,281가구로 56.3%가 감소하였고, 어업인구수는 263,035명에서 66,111명으로 무려 196천명 이상이 감소하여 74.9%라는 엄청난 규모의 어업인구가 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였다.

호남지방을 비롯한 한국에서 농가 인구의 이동은 생산성 높은 젊은 인구를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농가 인구의 노령화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젊은 인구의 선택적 이농은 농가 인구의 노령화만 초래한 것이 아니다. 젊은 자녀들이 이농한 농가는 노부부 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되었고, 자녀에 의해 농가가 승계되지 못하면 소멸될 위기에 처해있다.

호남지방의 농촌은 수도권의 농촌지역과는 달리 도시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구는 거의 없고, 자연감소와 사회적 감소로 인한 인구감소로 향후 지속가능한 농촌 유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2) 농촌 공간구조의 변화

농촌공간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사회 · 문화적으로 서구사상의 도입 등으로 농촌의 전통생활양식과 더불어 공간구조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마을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종교공간의 변화를 보면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시작과 더불어 마을단위에서 행해진 산신제, 당산제, 용왕제, 대동제 등의 공동 의식들이 1980년대 중반까지 어느 정도 약화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으나, 1990년을 전후로 대부분이 소멸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공간은 방치 내지 폐쇄되고 있다. 이러한 마을공동체 신앙의식의 쇠퇴는 주민들의 의식 · 가치관의 변화가 근본 이유이기는 하지만 기술적 변화가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토속적인 신앙의 쇠퇴는 역으로 마을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을회의 등의 공동모임을 위한 마을회관은 노인정으로 대체되었다. 이 변화는 마을 주민들의 연령구성이 노력화 되고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은 것이다. 이러한 기능변화와 함께 공간의 구조도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게 온돌방과 난방시설, 주방, 화장실을 갖추고

남자와 여자 방을 따로 만드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인구감소가 덜한 마을에서는 마을 공동체 의식의 약화로 당산제를 지내던 당산나무 아래나 마을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 장소에 정자를 새로 만들어 마을의 쉼터로 정비한 반면 인구감소가 심한 마을에서는 과거에 있던 주민들의 쉼터를 오히려 방치하고 있다.

마을 내의 중요한 공동생활공간이었던 가게는 규모가 큰 마을을 제외하고는 모두 없어졌다. 가게가 없어진 요인은 인구감소로 인한 마을 내의 구매력 저하, 외부와의 교통 편리, 소비패턴 변화 등이 크게 작용하여 농촌의 자연부락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농촌의 공동이용공간으로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주차공간으로, 주민에 의한 자동차 소유대수의 증가와 마을을 출입하는 외부차량의 증가,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의 운행으로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3) 호남지역 농촌의 성격변화

호남지역의 농촌사회의 성격의 변화는 1980년대 중반까지와 그 이후의 변화과정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 호남지방의 농촌지역은 인구감소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농촌사회의 성격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농촌의 성격은 그 이전과 비교해보면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다. 논농사와 밭농사를 겸하는 일반적 또는 전통적 유형의 농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농촌의 성격을 구분해 본다면 벼농사와 결합한 전통적 유형의 농촌과 원예농업과 결합한 농촌으로 양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농촌의 성격 구분은 대도시와의 접근성과 더불어 그 지역의 농민들의 혁신의 수용태도에 따라 나뉜다고 할 수 있다. 대도시에 근접한 지역에서는 대도시에서 원예작물의 수요가 증가함으로 교통의 접근성의 유리함으로 인해 원예작물 즉 비닐하우스에 의한 작물 재배가 성행하게 되었고, 그 재배기술의 수용이 빨리 일어남으로써 다른 지역과는 다른 농업방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수용은 호남지방에서는 전남의 경우 나주, 화순, 담양 등 광주를 둘러싼 군에서 먼저 발생하였고, 전북의 경우도 전주를 중심으로 한 인접 군에서 발생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도시민들의 원예작물과 특용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촌지역에서도 이에 대응하면서 농업경영에서 변화

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도 주로 대도시 주변의 농촌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원예작물 재배는 기존에 선도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에서 그 재배기술에 대한 접근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농촌지역의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지역은 평야지를 넓게 가지고 있는 도시주변지역에 해당하는데 1970년대 주로 이루어진 지역에서 재배영역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중심도시와 가까운 지역 즉 전북의 경우 전주, 익산, 군산, 김제 등과 광주광역시 주변의 농촌지역의 경우 도로교통과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도시의 통근권에 속하게 되고, 특히 도시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주변 농촌지역으로 비농업인구의 유입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도시주변의 농촌사회의 성격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런 지역에서는 비농업인구를 위한 비농업적 토지전환이 발생하고, 주택은 도시형 주택의 건축이 이루어져 농촌의 주택경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호남지역의 농촌은 농업의 기반이 강하고 대도시의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 약하기 때문에 농촌의 성격도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대도시 주변의 극히 일부 지역의 농촌만이 도시형 농촌의 형태가 나타나고, 나머지 지역은 일반형 농촌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원예농업이나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상업적 농업지역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현재 농촌사회집단 변화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마을 단위에서 운영되는 사회 집단이 인구의 감소로 최소한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고, 사회 집단 구성원의 공간적 분포가 인근 부락과 면, 군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하나의 사회집단이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로 기능이 확장되고 있고, 농업의 상업화 경향에 따라 전문화된 이익집단이 결성되기 시작한 점을 들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확대와 WTO체제에서 농산물 개방과 자유무역협정은 호남지역의 농촌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값싼 외국 농산물의 도입과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산물에 대한 관세화가 어려워져 미곡생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호남지방의 농촌은 가격에서 외국농산물과 경쟁할 수 없어 농업을 포기해야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농촌에서 경지의 규모화를 통한 영농법인의 설립을 통해 이 파고를 헤쳐 나가려고 하지만 그러한 시도가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의 값싼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유기농법을 이용한 친환경농업이 일부에

서 시도되고 있는데 이는 극히 일부의 선구적 농민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이고 대다수의 고령화되고 영세한 호남의 농민들 입장에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농업활동이다.

호남지역의 농촌은 대도시에 얼마나 계층적으로 포섭되느냐와 그 지역내의 농업활동에 대한 혁신역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농촌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대도시에 인접한 지역은 대도시의 영향을 받아 도시형 농촌지역이나 도농혼재형의 교외화지역으로 편입될 것이고, 농업의 혁신혁량이 있는 지역은 그 역량을 바탕으로 현재의 농업위기를 극복하여 새로운 농촌의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다. 위의 두 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은 전통적인 논농사와 밭농사가 결합한 전통적인 농업형태를 고수하다가 농촌의 고령화된 노인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 쇠퇴의 길을 걷다가 마을이 소멸되는 과정을 겪을 것이다.

2. 도시화와 도시공간의 변화

1) 도시의 입지와 발달

전라지역은 행정구역상 광주광역시와 전라 남 · 북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전통적으로 호남지역이라 불렸다. 반도의 서남부에 위치하여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1960년대 이후 박차를 가하게 된 경제개발계획에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함에 따라 다른 시 · 도 지역에 비해 도시화 · 산업화가 늦어지면서 교육과 취업을 위한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대부분의 도시들이 정체 내지는 쇠퇴를 경험하고 있다.

경제개발과정에서 소외된 데에는 서남부에 치우쳐 있는 이 지역의 입지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남북한 대립관계와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국과의 외교 및 무역 단절로 말미암아 오랜 역사 속에서 중요하게 역할하였던 서해안 해상루트가 완전 차단 된 것이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가까운 일본과의 밀접한 경제 및 외교관계 속에서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동남부지역은 빠르게 도시화 ·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된 반면 서남부에 치우쳐 있던 전라지역은 이들 지역에 노동력과 식량을 공급하는 농업기지로써 오랫동안 남아 있게 됨으로써 산업화를 수반한 도시화가 지체되었다.

이 지역 최대의 도시는 광주광역시이며, 전북의 중심 도시인 전주가 그 뒤를 잇는다. 다음

계층의 지역중심도시들로는 익산 · 여수 · 군산 · 순천 · 목포 · 광양 · 정읍 · 김제 · 나주 · 남원시 등으로 12개의 행정시가 입지해 있는데 이 행정시들은 목포만 제외하고 모두 도농통합시이다. 다음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읍 규모의 중심지들은 전남에 26개, 전북에 9개 있어서 총 35개 입지하고 있다. 결국 전라지역에서 읍 이상의 중심지들은 현재 모두 47개이다. 이들은 기능의 양과 질에 있어서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농촌지역을 배후지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읍급 도시들이 인구유출과 노령화 등으로 그 기능의 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다.

(1) 전 산업시대의 도시의 입지와 분포

어떤 지역의 기능과 특성은 시대를 반영하게 되므로, 시대를 구분하여 도시들의 입지와 성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지역 도시발달에 있어 성장동력의 차이에 따라 크게 3구분하여 이 지역의 도시 입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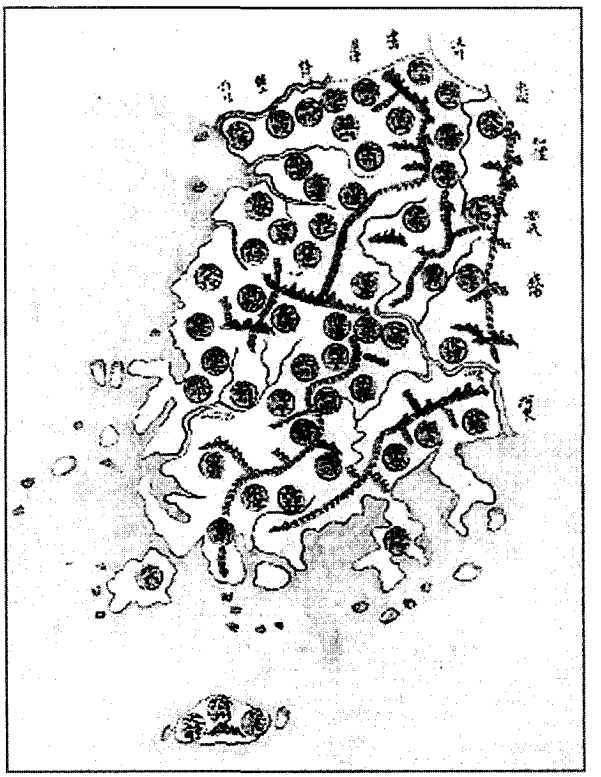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도시의 입지와 분포는 지형 · 하천 · 역사성 · 교통망 · 다른 지역과의 관계적 위치 · 지역개발 정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지역의 도시 분포 역시 위의 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자연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전 산업 시대의 경우 지형적 요인이 도시의 입지 결정에 크게 작용하였다. 즉 도시 입지에 좋은 지형적 위치라 하면 대체로 피신에 유리하고, 좋은 음료수의 공급이 확보되고, 홍수를 피할 수 있고, 방어에 유리한 곳 등이 그 선정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 산업시대의 도시에서는 어떤 입지조건보다도 방어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였다. 대체로 지방행정의 중심지로서 행정 및 군사적 기능이 우세하였기 때문이다. 사회구조적으로 상공업이 천시된 상황에서 도시 발전의 원동력은 토지생산성이 높은 지역이거나 방어적 기능이 우세한 곳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가항 하천에 면한 도읍은 토지생산물의 집산지로서 조창과 조운의 주요 입지지점이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도시의 어떤 기능보다도 군사 · 행정 기능이 중시되어 9주 5소경 중 이 지역에 무주(武州, 광주)와 완산주(完山州, 전주) 등 2개 주와 남원경(南原京, 남원)이 있었는데 이 도읍들의 지형적 특성은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지형인데다 산지와 평야가 이어지는

변환점에 입지하므로써 방어적 기능 외에도 다른 지역과의 연결도도 높은 좋은 입지였다 할 수 있다. 이같이 산지와 평지가 만나는 지점은 비교적 고도가 높아 수해의 위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산지의 특성과 평지의 특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양쪽의 생산품들이 집산하는 교류의 기능도 활발하여 많은 인구가 모여 살 수 있는 곳이다. 또 장보고가 지금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동방무역의 패권을 장악케 되는데 당시 완도는 해상 무역의 중계지로서 완연한 상업도시였을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전국의 8목(牧) 중 전주와 나주에 목을 두어 중시했으며, 당시 강남도(江南道)라 불리던 전북과 해양도(海陽道)라 불리던 전남, 양도(兩道)를 합하여 전라도라 명명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때 두 중심도읍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따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무주(武州, 광주)보다 나주가 전남지역의 군사 행정의 중심지로 부상한 것이 흥미롭다. 나



〈그림 4-1〉 조선시대 전라지역의 주요도읍

자료 : 김정호의 청구도

주는 역사적으로 고려 태조 왕건과 인연이 깊은 고을이기도 했지만, 비옥하고 너른 나주평야의 중심취락인데다 당시 수운(水運)이 가능했던 영산강에 인접해 있어서 육로와 해로를 연결하는 주요 결절로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평야 도시이다. 높은 생산성과 결절성이 나주의 입지를 광주보다 높게 평가한 이유였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들어 지방행정제도가 정비되면서 오늘날 읍급 이상 도시들의 지방행정중심으로서의 지위가 이때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주부(府), 나주 · 광주목(牧), 남원 · 장흥 · 담양 · 순천도호부(都護府) 등은 지방행정의 중심지로서 정치 · 행정적 기능뿐만 아니라 군사적 · 상업적 기능까지도 갖춘 주요 지방도시였다. 남원 · 장흥 · 담양 · 순천 등은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에 형성된 취락들로 서부 평야지역들과의 격리성이 높은 지역들로서 지방행정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이들 도읍이외의 작은 중심지들의 입지를 보면, 평야부 중심지로는 익산 · 함열 · 삼례 · 김제 · 부안 · 봉동 · 영암 · 함평 · 무안 · 장성 등이고, 산지의 분지에 형성된 중심지로는 정읍 · 무주 · 장수 · 진안 · 임실 · 순창 · 고창 · 영광 · 보성 · 강진 · 구례 · 곡성 · 광양 · 화순 등을 들 수 있다(그림 4-1).

(2) 일제 강점기의 도시입지와 발달

근대적인 도시가 비로소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해외 문호개방 및 신문물의 유입과 더불어서이다. 즉 도로 · 철도 · 항만의 부설, 전기 통신의 보급, 근대적 상업의 발달 등이 도시발달에 크게 공헌했다.

갑오경장 시기인 1896년에 종전의 23부제(府制)를 폐지하고 13도제(道制)가 채택되었다. 과거의 전라도를 다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로 분할하고 이 군들의 행정중심지인 곳들은 군청소재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면서 도읍의 모습을 가진 것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기왕에 지방중심도시로 성장해 온 군(郡) 중심지들로서 점차로 도읍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전라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군사적 · 행정적 중심지가 도시발달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 후 이들 군의 중심지가 누차에 걸친 행정구역 개편으로 부 · 읍이나 시 · 읍으로 승격되어 도내의 도읍 분포를 결정하게 되었다.

한일합방(1910) 이후 지방행정제도의 개편이 단행되면서 오늘날 도시제의 모체가 되는 부

와 읍의 행정구역제가 실시되었다. 전국에 13도 12부(府), 317군으로 되었는데, 전라도(호남지역)에서는 이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부제(府制) 실시에 따라서 1910년 10월 1일부터 목포가 목포부로, 옥구군 일원이 군산부로 승격되어 도내에서는 근대적인 부제에 따른 부로 목포부와 군산부가 광주나 전주보다 먼저 승격되었다.

목포가 일찍 부(府)로 승격되고 1932년에는 인구 6만으로 전국 6대 도시의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897년의 개항으로 군사 행정 및 외국인의 거류와 무역을 전담할 수 있었고, 영산강 하구에 위치하여 나주평야의 비옥한 곡창지대에서 생산된 쌀의 집산지로서, 또 일본으로의 적출항으로서 그 입지조건이 유리했던 데 기인한다.

오랜 역사를 두고 발전되어 온 전주보다 군산이 먼저 부로 승격된 것은 금강 하구에 위치하여 대일 미곡수출항으로서 1899년 개항된 이래 급격하게 일본인 인구가 증가하고, 축항과 시가지 조성에 따른 근대적 항만 도시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목포와 군산은 개항이후 일본인들의 한국 침탈 전진기지로서 그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하면서 크게 발전한 경우이다. 두 도시 모두 미곡적출항 기능에 맞추어 정미업과 양조업이 발달하기도 했다. 이는 그동안 오랜 역사를 두고 발전되어 온 군사적 · 행정적 지방중심지 중심의 도읍발달에서 일본인들의 경제적 · 교통적 필요에 의해 근대적인 교통도시, 항만도시 또는 산업도시들이 출현하고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신 부제(府制)의 실시에 따라 이 지역 내에서 한일합방 이후 도읍으로 성장한 지역들은 과거의 오랜 지방중심지(전주, 남원, 부안, 나주, 담양, 순천)이거나, 근대 교통시설의 설치로 교통로의 교차점이 되거나 (익산), 문호로서의 항만시설이 갖추어진 곳(군산, 목포, 여수)이거나, 미곡반출에 편리한 농산물 집산지(김제, 정읍) 등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었다.

익산은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에 펼쳐진 드넓은 호남평야를 배후지로 하고 호남선 · 전라선 · 군산선이 교차하는 철도교통의 요지로 이용되면서 급격하게 팽창되었다. 김제 · 정읍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미곡의 원활한 반출을 위해 각종 창고와 도정시설이 집중하고 호남선 철도가 통과하면서 크게 성장했는데, 이는 일본인들에 의해서 변경된 산업구조와 경제체제 및 교통망 조직의 개편에 의해 영향받은 경우이다.

이같이 일본 식민지시대 동안 우리나라의 도시는 오랜 동안의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형성

된 전 산업적 도시에서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상공업에 의한 산업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각 지방의 도시는 식민지 정책 방향의 변화와 보유 자원, 교통적 위치에 따라서 그 성장의 유형을 달리하고 있다. 초기에는 그들의 발판이 되는 항구도시가 먼저 성장하기 시작했고 전반기의 식량기지화시대는 삼남을 비롯한 주요 평야지대의 중심도시와 쌀의 적출항의 성장이 컸다.

1945년 광복 당시 전국의 21부 107읍 중 전남은 2부(목포, 광주)12읍(여수, 순천, 송정, 벌교, 나주, 영산포, 장흥, 장성, 강진, 완도, 보성, 담양), 전북은 2부(군산, 전주) 6읍(익산, 정읍, 남원, 김제, 신태인읍, 부안)의 분포를 보였다. 당시의 도시규모를 보면 전주와 광주가 5만 이하, 군산과 남원이 1만 이하, 담양 · 순천 · 강진 · 병영 · 목포 · 영광 · 여수 등은 5천인 이하의 규모였다.

(3) 산업화 이후 도시입지와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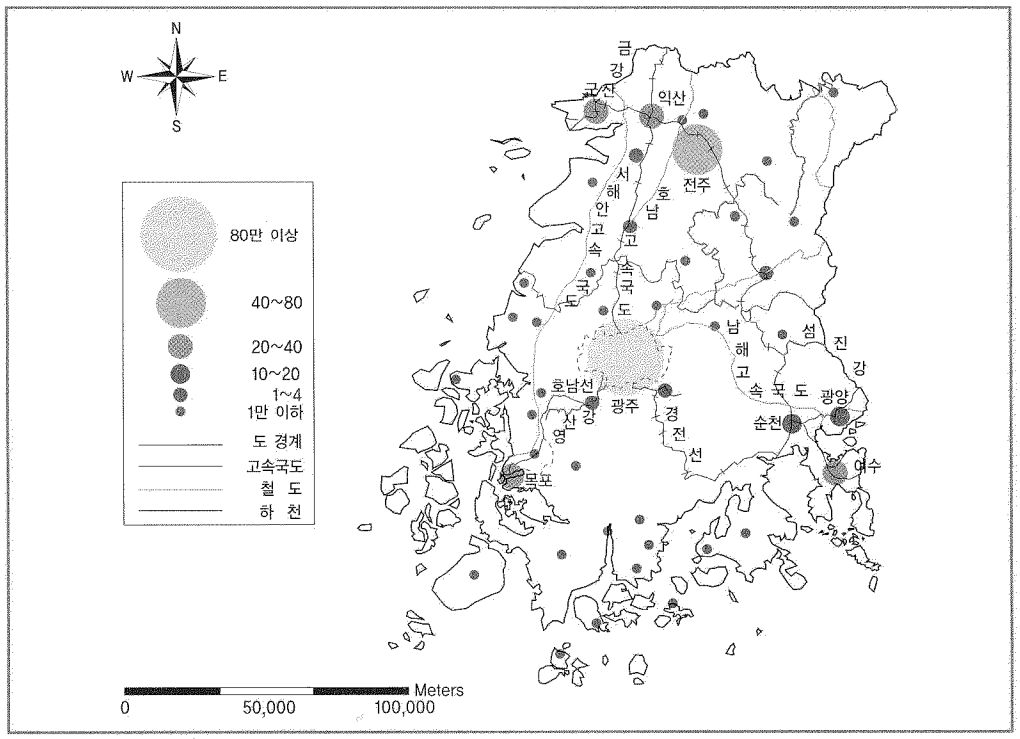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되면서 도시성장이 가파르게 이루어졌다. 드디어 1970년에 50%의 도시화율을 보여 인구의 반이 도시에 거주하게 되었고, 30년이 지난 2000년 현재 도시화율이 87.8%에 이르렀다.

이러한 급격한 도시화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현재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했다. 일제의 식민지 경험과 광복 후의 혼란, 6.25동란 등으로 말미암아 국가 재정이 태부족인 상황에서 경제개발은 기존의 사회간접자본을 기반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남동임해 지역을 잇는 경부축 상의 도시발달만을 가속화시켰다. 산업화 과정에서 이러한 불균형 개발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산업간, 도 · 농간,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그 소외의 중심에 전라지역이 있다 할 수 있다.

더욱이 전라도는 농공병진정책의 추진으로 다른 시도에 비하여 산업화가 느리고 따라서 도시화율도 크게 뒤지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나타난 도시 및 그 체계가 거의 변화없이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며, 도청소재지인 광주와 전주만이 그 행정기능적 특성 때문에 도시화가 비교적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인구 순위별 도시인구의 추이를 보면 전라도 도시들의

순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육성 결과 석유화학과 제철공업 등의 비중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이들을 제외한 이 지역의 공업구조 특색은 음식료품, 비금속, 섬유업 등 경공업 또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동남권지역이 전자 · 기계 · 섬유 · 신발 등 수출형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반하여 이 지역의 업종은 대부분 내수형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수형 산업 중에서도 소재산업 인 석유화학, 제 1차 금속을 제외하고는 그 시장이 대부분 이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등 공업구조가 취약하다보니 인구흡인력도 약하여 도시화가 활발하지 못하였다. 1980년대 후반 광양만에 자본집약적인 대규모의 제철공장이 입지하고 연관공업의 지속적인 입주에 따라 광양시가 급부상한 것이 이 지역의 도시체계에 약간의 변화를 가져 온 정도이다.



〈그림 4-2〉 전라지역 도시들의 입지 패턴

2) 도시화와 도시분포패턴

(1) 전라지역의 도시화

도시화는 특정장소에 인구가 집중함으로써 야기되는 도시의 출현과 성장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서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의 인구비중이 커져 가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민의 생활양식 면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의식구조가 도시적으로 변모하는 과정도 포함한다.

한 지역에서 도시화의 정도를 간단히 측정하는 지표인 도시화율은 전국인구에 대한 도시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전라권의 도시화를 그래프를 통해 전국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전라권의 전체 인구는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3). 1970년대만 해도 전국대비 전라권의 인구는 20%를 넘는 비중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에 속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30년이 지난 2000년에는 반감된 11%를 보이고 있어서 그동안 인구유출이 많았음을 읽을 수 있다(그림 4-4).

전라권의 도시인구는 1970년 30.8%로 당시 전국의 도시화추세 5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70년대에는 20%에 달하였던 전국도시화율과의 격차가 2000년에는 약 12%정도로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국 도시인구 대비 전라권 도시인구의 비중은 70년대 12.6%에서 2000년대 6.5%로 반감한 사실은 수도권 및 타 지역의 활발한 도시화에 반해 이 지역의 도시화는 오히려 쇠퇴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것은 전라지역의 전체 인구가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도시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과대 평가된 것이지 실제로 도시화가 활발히 진행되어 나타난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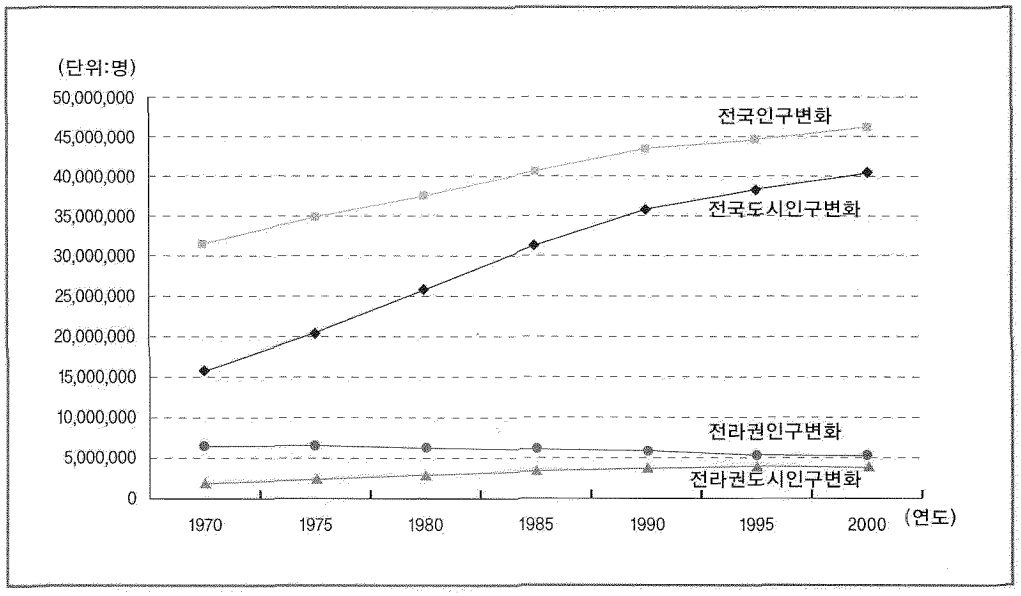
이것을 각 도시별로 30년 동안에 걸친 인구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전라 지역의 도시화 특성을 더 극명하게 볼 수 있다(표 4-1). 시급 도시들은 인구가 성장한 반면 읍급 도시들은 대부분 인구가 크게 감소했다.

시급 도시들 중에서도 인구가 300% 이상 크게 증가하여 급성장형으로 분류된 광양의 경우 1990년대 들어 제철공장이 입지하면서 필요인력들이 단기간내에 대거 전입했고 이로써 동광양시라는 도시가 급조되어 기존의 광양읍을 압도하는 발전을 보이다가 1995년 도농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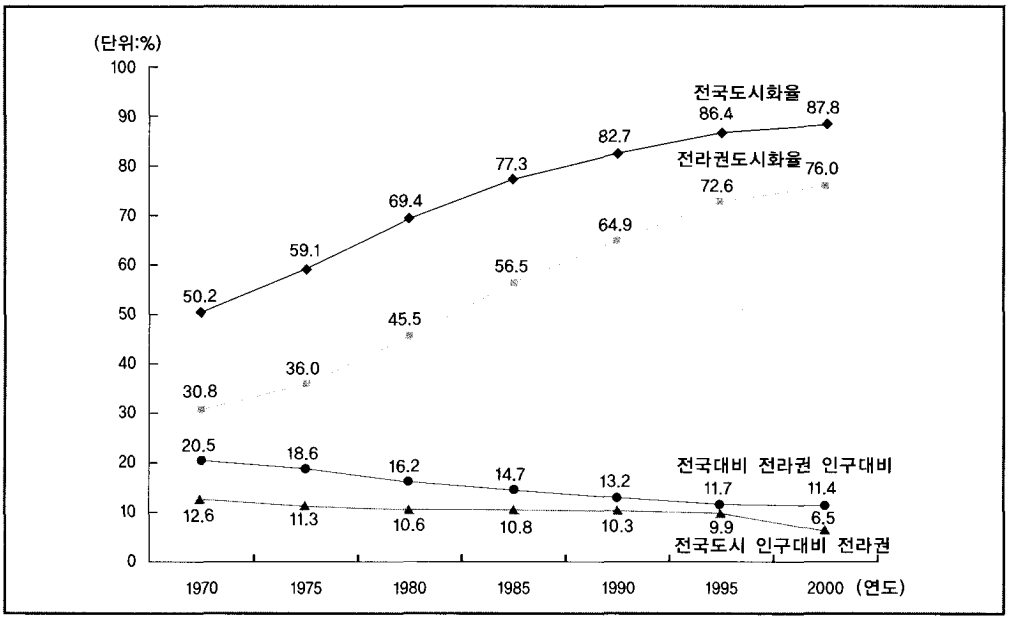
합시로써 광양읍과 통합되면서 높은 인구증가를 보인 것으로 1970년에 워낙 작은 소읍 상태였기 때문에 도시화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광양시의 사례는 대규모의 산업 유치가 그 지역을 짧은 시간에 어떻게 빨리 도시화시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예라 할 것이다. 또한 광양시의 급격한 도시화는 일찍부터 도시화되어 주거 및 교육환경이 좋은 인접한 순천시의 도시화를 가속화시켰다.

2위의 성장률을 보인 익산시는 교통 결절로서의 중요성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호남선 · 전라선 · 군산선이 교차하는 주요 결절로서 뿐만 아니라 호남고속도로와도 인접 삼례에서 쉽게 연결되어 철도와 도로교통이 매우 편리한 입지이다. 더욱이 1973년 이리수출자유지역 지정은 단순한 교통중심지가 아닌 그 이점을 십분 활용한 공업도시로의 도약의 계기가 되었다. 이리공단의 원료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군산 외항의 건설, 전주~이리~군산간의 도로망 확충으로 3개의 시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작동될 정도이다. 호남선이 복선화됨에 따라 익산의 결절성은 더욱 높아졌다. 반면 전주나 군산의 도시화는 익산보다 도시화의 역사가 훨씬 길고 화려했지만 현재는 도시화 추세가 많이 약화되었다.

3위의 성장률을 보인 광주시는 이 지역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어느 정도 유지해 왔다고



〈그림 4-3〉 전국 · 전라권의 인구 및 도시인구의 변화



〈그림 4-4〉 전라권의 도시화와 도시화율

자료 : 통계청,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총조사인구총괄

보여진다. 전남의 약간 북쪽에 치우쳐 있어 전북의 정읍 · 고창 · 순창 · 남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통근 · 통학권을 확보하고 있는데다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입지 상의 이점 때문에 행정과 교육, 소비의 중심으로서 80년대까지는 지역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 그러나 교통발달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의 경제력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이제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입지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여 이 지역 유출 인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므로써 도시화가 점차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의 성장률을 보인 전주, 여수, 순천 군산 등은 30년 동안에 100%이상의 인구증가를 보여 성장형 도시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전주와 순천의 성장동력은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지방행정 및 교육의 중심지로서 관성적인 성격이 짙다고 하겠다. 이들 도시들에도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정책적 육성결과 공단이 조성되고 공업의 비중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경공업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또 대부분 내수형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장도 대부분 이 지역에 한정되는 등 공업구조가 취약하다 하겠다. 여수의 경우 1990년까지 큰 변화가 없다가 2000년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은 1998년 여천시와의 통합 때문이다.

[표 4-1] 전라지역 도시인구의 변화 (도농통합시는 면부인구를 제외함)

(단위: 만명)

시읍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1970~2000 성장율(%)	비고
광주광역시	50.2	72.7	113.9	135.1	169	성장형
전주시	26.2	36.7	51.7	61.6	135	성장형
여수시	11.4	16.1	17.3	26.8	136	성장형
익산시	8.7	14.5	20.3	25.3	192	성장형
목포시	17.8	22.2	24.3	25.0	41	저성장형
군산시	11.2	16.5	21.8	22.5	101	성장형
순천시	9.1	11.4	16.7	20.2	122	성장형
광양시	2.8	2.4	4.8	11.2	306	급성장형
정읍시	5.0	6.6	8.7	8.1	64	느린성장형
남원시	4.7	5.7	6.3	6.1	30	저성장형
나주시	3.0	3.1	5.5	4.8	62	느린성장형
김제시	3.5	3.6	5.5	4.8	36	저성장형
화순읍	2.4	2.2	2.4	4.2	80	느린성장형
해남읍	2.5	2.6	2.8	2.7	9	정체형
영광읍	2.2	2.0	2.3	2.1	-5	쇠퇴형
부안읍	2.7	2.5	2.6	2.1	-21	쇠퇴형
완도읍	2.1	2.3	2.2	2.1	-2	쇠퇴형
고창읍	2.3	2.1	2.0	2.0	-14	쇠퇴형
삼례읍	2.3	2.1	1.8	1.9	-20	쇠퇴형
벌교읍	4.2	3.4	2.9	1.7	-60	쇠퇴형
강진읍	2.4	2.2	2.2	1.6	-31	쇠퇴형
담양읍	1.4	1.5	2.1	1.6	15	정체형
장흥읍	2.9	3.1	2.0	1.6	-45	쇠퇴형
장성읍	2.9	3.1	2.0	1.6	-48	쇠퇴형
구례읍	2.1	1.9	1.6	1.2	-40	쇠퇴형
보성읍	2.1	1.8	1.5	1.0	-51	쇠퇴형
함평읍	2.3	1.9	1.3	0.9	-59	쇠퇴형

자료 : http://www.nso.go.kr/, 총조사인구총괄

1970년대 조성되었던 여천 중화학공단이 1986년 여천시로 승격되어 독자적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1998년 두 도시가 통합되면서 성장한 것처럼 보인 것이다.

군산시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정미업 · 양조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이 발달하면서부터 전라

북도 제 1의 상공업 도시가 되었으며, 군산외항 건설과 군산임해공업단지 조성으로 크게 발달하였다. 군산항은 1979년 외항이 완공되어 도내 총수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항으로, 한 · 중 교역증대 전망과 서해안시대의 개막으로 광역산업기지 조성, 군산신항 건설,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등 앞으로 전개될 대륙진출의 전초기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호남선의 주요 역인 익산(益山)과 군산선으로 연결되며, 호남고속도로의 개통과 전주~군산간 도로 확장으로 서울과 전주로 연결되는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전주 · 익산 · 군산 사이를 연결하는 직행버스가 수시로 운행되어 이들 지역은 동일생활권을 형성하여 연합도시화하고 있다.

목포시는 저성장형 도시로 분류되기는 했지만 이 지역의 대표적인 정체 도시이다. 19세기 말에는 일본의 필요에 의해 일찍이 개항되고 호남지역에서 최초의 부(府)가 되는 등 발전을 거듭하여 1930년대에는 전국 6위의 도시로 부상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성장동력을 잃어버린 채 인구증가가 미미하다. 수심이 얕아서 대형 선박들이 접안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항구로서의 활성화가 의문시 되기도 했지만(,2004 11월 신외항이 완공됨에 따라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국내 1호 민자항만인 신외항은 대중국 화물량 급증에 대비한 서남권 중추 항만시설로 3만t급 선박 3척이 동시에 입항할 수 있으며, 항만 10만평 배후단지 18만평의 첨단 물류시스템을 갖춘 종합항만시설단지이다. 자동차 · 석재 · 원목 · 컨테이너 등 화물유치 활동이 결실을 맺으면서 항만운영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다~)서남해안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섬들과의 연락 중심으로서, 또 서해안 시대의 도래와 함께 앞으로 크게 성장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 더욱이 광주에서 목포로의 도청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2005년 이후의 도시화가 주목된다.

읍급 도시들은 화순과 해남, 담양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전라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촌지역으로서 대부분의 농촌이 그러하듯이 UR체제에의 적응이 어렵고 또 교육이나 취업을 위해 꾸준히 인구가 유출되면서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이러한 도시 성장의 부진은 원래부터 높은 인구압과 전통적 농업의 저생산성 때문에 농촌경제가 계속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여 가속화되던 농촌 인구의 이출을 전라지역 내의 도시들에서 흡수하지 못함에 따라 이 지역 전체의 절대적인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었다. 이것은

이 지역 도시들의 산업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데 높은 1차 산업 비중과 낮은 2차 산업 비중,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3차 산업이 그것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산업화 수준과 영세한 경영규모, 부가가치가 크고 파급효과나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산업의 결여 등이 이 지역의 경제성장과 도시 성장의 한계로 작용하므로써 인구흡인력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전라지역은 한국의 다른 지역보다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저개발지역으로 존속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다가올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예상되는 농업경제의 파탄과 함께 공업의 상대적 미발달이 이 지역 도시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도시화 정책은 농촌이출인구를 둔화시키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유치로 고용을 증대시켜 이출인구의 수용기반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도시의 분포패턴과 성장축의 변화

전라지역의 도시들은 대부분 과거 역사적 중심지였던 도시들이 큰 변화없이 지역중심지로서 역할하며 성장해 왔다. 즉 전 산업시대 도시입지로서 자연환경이 중시되던 때의 도시 분포패턴이나, 최근의 교통발달과 산업화시대의 도시 분포패턴에 그다지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중심 도시가 크게 성장하고 도읍의 갯수가 증가하기는 했으나 전체의 분포패턴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그림 4-5,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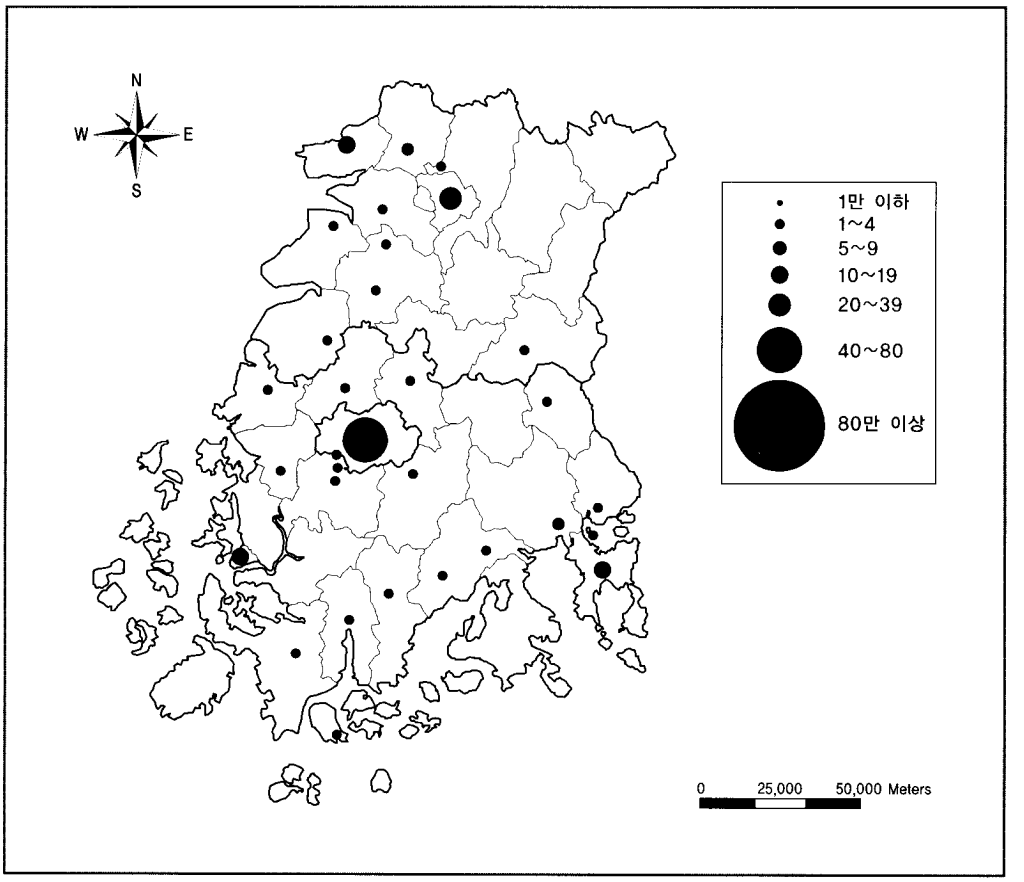
이 지역의 도시들은 서부의 영산강 유역과 만경·동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평야부와 남부의 반도와 해안에 형성된 좁은 평야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많은 인구가 모여 살아야 하는 도시의 특성상 지형과 하천 등 자연환경의 영향이 커서 소백산맥의 여맥이 남아 있는 중부 및 동부는 도시 발달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랜 역사적 중심지인 남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도시가 서부의 평야지대와 동남해안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곳에 인구의 2/3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전라지역 도시들의 공간적 분포패턴을 요약하면 과거 전산업시대에는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정중심지의 분포패턴으로서 전주와 광주·나주를 연결하는 1자형의 패턴을 보였다. 소백산맥의 여맥이 이 지역을 남북으로 나누는 지형적 특성과 그에 따른

오랜 역사적 통치체계 등이 두 지역을 각기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결과라 보여진다. 그 외에는 지역에 산재하는 소하천이나 좁은 해안평야를 중심으로 소 도읍들이 분포하고 있었다.

철도교통이 발달하면서부터는 호남선의 주요 요지인 익산 · 정읍 · 나주 · 목포 등이 급속 성장하는데 이러한 도시발달은 전주와 광주를 잇는 1자형을 강화시켰으며, 최근 서해안고속국도의 연결은 이 추세를 더욱 공고히 했다. 또한 전라선이 개통됨에 따라 익산 · 전주 · 임실 · 남원 · 순천 · 여수 등의 도시들이 성장하게 되었고 이로써 익산을 정점으로 하는 ∧형상의 분포패턴을 이루었다.

이러한 ∧형상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확충된 도로교통망과 자동차교통의 발달로 고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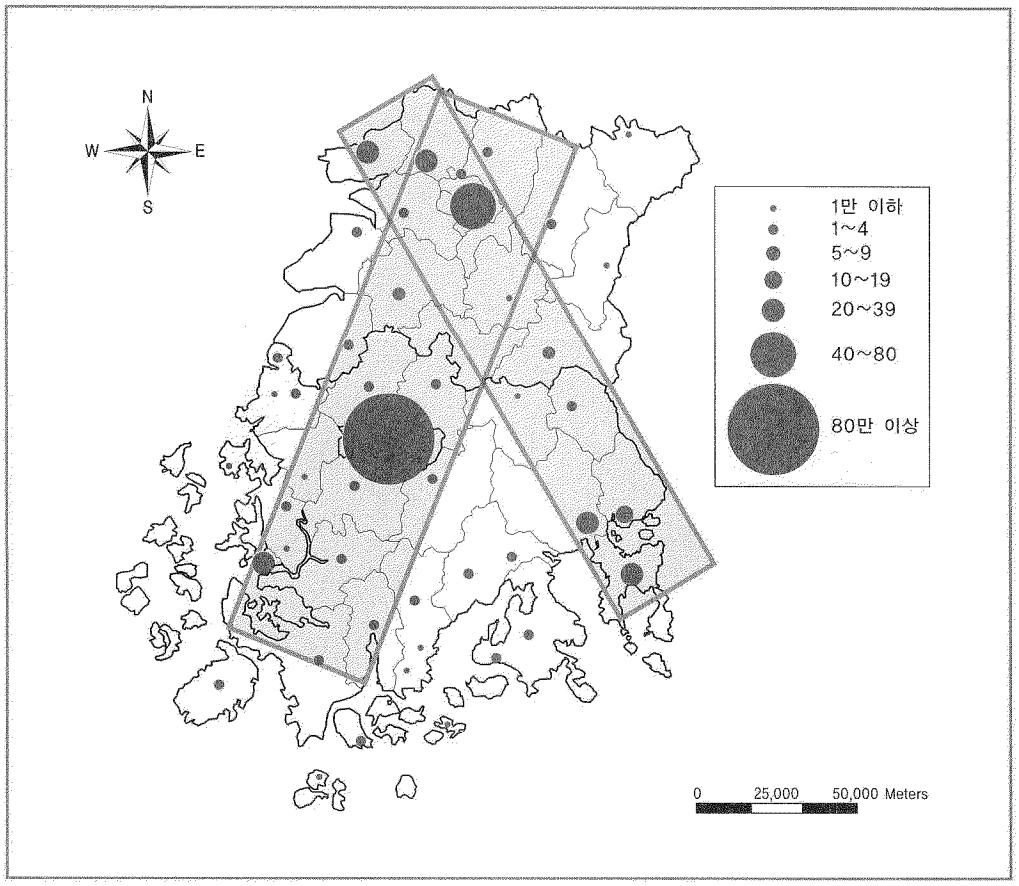


〈그림 4-5〉 전라지역 도시의 규모별 공간적 분포 패턴(1970)

자료 : 통계청, http://www.nso.go.kr/, 총조사인구총괄(1970)

되고 있다. 더욱이 국토공간에 획기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등장한 호남고속철 역시 기존의 호남선 철도 노선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은 더욱 고착화되리라 예상된다. 동남부의 끝에 있는 여수 · 순천 · 광양은 임해공단의 개발에 따라 대규모 중화학공업과 제철공업이 입지 한 결과 급성장하고 있는 곳으로써 ∧형상의 한쪽 끝을 공고히 하고 있다.

전라지역 도시들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교통상의 요지에 비교적 규모가 큰 도시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교통망의 발달이 도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광주는 도로교통의 요지로서 호남고속국도와 남해고속국도를 연결해 줄뿐만 아니라 보성 · 벌교를 잇고 경



〈그림 4-6〉 전라지역 도시들의 분포패턴과 성장축(2000년)

자료 : 통계청 http://www.nso.go.kr/총조사인구총괄

전선과도 연결되는 광주선 철도의 기점이기도 하다. 호남선 철도가 익산 · 김제 · 정읍 · 목포 · 나주를 연결하고 있으며, 익산 · 전주 · 임실 · 남원 · 순천 · 여수 등은 전라선 철도의 주요 요지이다.

전체적인 분포양상 속에서 Urban Shadow현상을 유추할 수 있다. 즉 광주라는 대도시 인근에서는 비교적 큰 규모의 도시를 볼 수 없고, 일정거리를 벗어난 곳에서만이 중간규모급의 도시들이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 도시체계와 도시권

(1) 도시인구의 변화와 도시순위

도시화로 인하여 시 · 읍의 개수가 1970년대에 30개였던데 반해 1990년에는 무려 52개에 이르렀고, 도농복합시 체제의 2000년에는 47개로 축소되었다. 광주의 인구는 1970년 50만에서 2000년 135만에 달하여 이 지역의 중심도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990년 이후 그 성장추세는 상당히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의 높은 증가는 1986년 인접 송정시와 광산군과의 통합에 의한 영향 때문이다(표 4-2).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도시는 익산과 광양이고 많이 하락한 도시는 목포라 할 수 있다. 도시의 성장과 하락을 가르는 주요 요인은 공업단지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여수는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00년 3위 도시로 성장했는데 이는 중화학 공단 조성으로 성장하고 있던 인접 여천시와 통합시로 출범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읍급 규모의 경우 1970년대에는 대부분의 읍이 2만 이상의 인구를 보이지만 2000년이 되면 읍임에도 불구하고 1만의 인구도 확보하지 못하는 곳이 무려 13곳에 달하고 장흥군 대덕읍의 경우 인구가 5000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라지역의 심각한 인구유출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전라지역의 경우 현재 47개읍이 행정상으로 도시에 속하나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농업을 기반으로 발전하였으므로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비옥한 농업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공업화 시기에 오히려 소외되어 다른 지

[표 4-2] 전라지역 도시순위의 변화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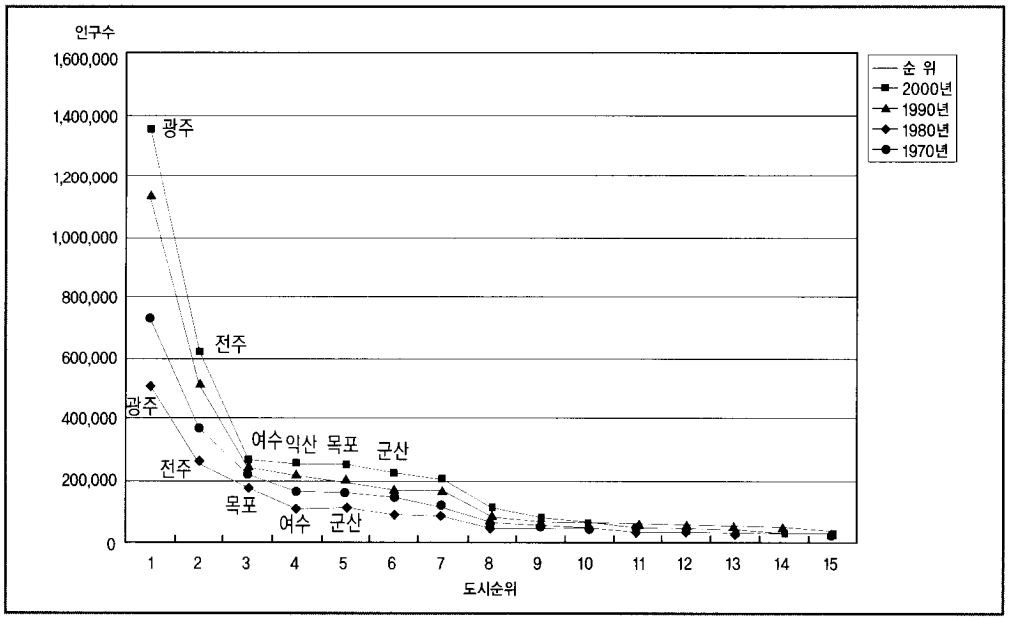
순위	2000년		1990년		1980년		1970년	
1	광주광역시	1,350,948	광주광역시	1,138,717	광주광역시	727,259	광주광역시	501,967
2	전주시	615,804	전주시	516,965	전주시	367,037	전주시	262,300
3	여수시 ▲	267,629	목포시	243,035	목포시	221,754	목포시	177,669
4	익산시 ▲	252,744	군산시	218,112	군산시 ▲	165,046	여수시	113,580
5	목포시 ▽	250,336	이리시 ▲	203,186	여수시 ▽	160,906	군산시	112,034
6	군산시 ▽	224,831	여수시 ▽	173,135	이리시 ▲	145,112	순천시	90,820
7	순천시	201,776	순천시	167,162	순천시 ▽	114,177	이리시	86,465
8	광양시 ▲	111,782	정주시	86,869	정주읍	65,874	정주읍	49,508
9	정읍시 ▽	80,964	동광양시 *	64,675	남원읍	57,450	남원읍	46,470
10	남원시	60,589	여천시 *	63,797	송정읍 ▲	50,771	벌교읍	42,308
11	나주시	47,930	남원시 ▽	63,146	김제읍 ▲	36,427	송정읍	37,721
12	김제시	47,621	나주시 ▲	55,266	벌교읍 ▽	33,898	김제읍	34,926
13	화순읍 ▲	42,368	김제시 ▽	55,116	도양읍 *	31,674	나주읍	29,597
14	해남읍	26,995	광양읍 ▲▲	47,492	나주읍 ▽	31,149	장흥읍	28,964
15	영광읍 ▲	21,118	벌교읍 ▽	29,200	장흥읍 ▽	30,874	영산포읍	27,971
16	부안읍 ▽	21,008	해남읍 ▲	28,333	영산포읍 ▽	26,187	광양읍	27,540
17	완도읍 ▲	20,543	부안읍 ▲	25,462	해남읍 ▲	26,064	부안읍	26,473
18	고창읍 ▲▲	19,828	화순읍 ▲▲	23,839	부안읍 ▽	25,200	장성읍	25,691
19	삼례읍 ▲▲	18,667	영광읍 ▲▲	22,874	광양읍 ▽	24,313	해남읍	24,720
20	벌교읍 ▽▽	16,884	도양읍 ▽▽	22,281	장성읍 ▽	24,110	강진읍	23,850
21	강진읍 ▽	16,391	강진읍 ▲	22,119	완도읍 ▲▲	23,103	화순읍	23,595
22	담양읍	16,022	완도읍 ▽	21,555	화순읍 ▽	22,405	삼례읍	23,195
23	장흥읍	16,021	담양읍 ▲▲	20,541	강진읍 ▽	22,207	고창읍	23,001
24	봉동읍 ▲▲	14,261	장흥읍 ▽▽	20,472	삼례읍 ▽	21,267	함평읍	22,792
25	도양읍 ▽▽	13,900	고창읍	19,614	고창읍 ▽	20,945	영광읍	22,151
26	고흥읍 ▲▲	13,800	장성읍 ▽▽	19,227	영광읍 ▽	20,155	신태인읍	21,995
27	장성읍 ▽	13,286	삼례읍 ▽	18,050	구례읍 ▲	18,845	보성읍	21,291
28	홍농읍 ▲▲	12,462	돌산읍 *	16,724	함평읍 ▽▽	18,732	완도읍	20,924
29	구례읍 ▽	12,213	구례읍 ▽	16,463	보성읍 ▽	17,761	구례읍	20,541
30	무안읍 ▲▲	11,895	신태인읍 ▲	15,850	봉동읍 *	17,719	담양읍	13,984
31	진안읍 ▲	11,774	보성읍 ▽	15,453	신태인읍▽▽	17,299		
32	진도읍 ▲	10,573	일로읍 *	14,958	진안읍 *	16,745		
33	보성읍 ▽	10,392	고흥읍	14,622	고흥읍 *	16,573		
34	영암읍 ▲	10,101	봉동읍 ▽▽	13,905	무주읍 *	15,814		
35	순창읍 ▲	9,740	함평읍 ▲▲	13,378	담양읍 ▽▽	15,268		
36	곡성읍 ▲	9,718	진도읍 ▲	12,761	영암읍 *	14,752		
37	함평읍 ▽	9,289	진안읍 ▽▽	12,577	순창읍 *	14,703		
38	무주읍	9,251	홍농읍 *	12,076	곡성읍 *	14,654		
39	일로읍 ▽▽	8,679	순창읍 ▽	11,975	진도읍 *	14,600		
40	관산읍 ▲	7,418	영암읍 ▽▽	11,761	장수읍 *	13,164		
41	장수읍 ▲▲	6,460	무주읍 ▽▽	11,477	임실읍 *	13,023		
42	노화읍 ▲▲	6,281	곡성읍 ▽▽	11,406	무안읍 *	12,751		
43	백수읍 ▲	6,197	지도읍 *	11,222	함열읍 *	11,369		
44	임실읍 ▲	5,841	관산읍 *	11,019				
45	금일읍 ▲	5,304	함열읍 ▽	10,869				
46	지도읍 ▽	5,288	무안읍 ▽▽	10,615				
47	대덕읍 *	4,687	승주읍 *	10,193				
48			백수읍 *	10,068				
49			노화읍 *	9,424				
50			임실읍 ▽▽	8,677				
51			장수읍 ▽▽	8,664				
52			금일읍 *	8,389				

자료 : 통계청, 총조사인구 총괄, 통합시의 면부 인구를 제외함
주 : ▲ 순위증가 ▲▲ 4순위 이상 증가 ▽ 순위감소 ▽▽ 4순위 이상 감소 * 신설시읍

역에 비해 발달이 더욱 늦어졌고, 지역 중심지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시급 도시와 읍급 도시 간의 격차도 크다.

도시란 소비 뿐만 아니라 지역 특수성에 맞는 생산기능도 강화되어 경제력을 창조하고 그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활동을 만족시킬 수 있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만이 인구를 유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라지역 도시의 경우 소수의 대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도시기능, 취업구조면에서 생산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에 도시발달이 정체 내지는 침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림 4-7〉은 전라지역 도시들의 도시순위규모분포이다. 30년 동안에 도시 간 규모의 차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15위권 내에서의 변화가 크다. 1, 2위인 광주와 전주 간 격차는 위로 평행이동 하면서 비교적 균등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2위와 3위의 성장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 중소규모 도시의 경우 뚜렷한 성장동력이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보여진다. 3위에서 7위에 걸쳐 있는 목포 · 군산 · 익산 · 여수 · 순천 등 5개 도시는 순위는 바뀌지만 70년 대에 비해 거의 규모의 차를



〈그림 4-7〉 전라권 도시순위 그래프 변화

자료 : 통계청,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총조사인구총괄

보이지 않으면서 성장하고 있다. 이는 중화학 공단이 유치된 여수와 교통의 요지로서의 익산의 비교적 빠른 성장에 비해 성장동력이 미미한 목포 · 군산 등 서해안 항구 도시들의 정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0위권 도시부터는 10년 전의 도시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감소를 보이며 14위권부터는 1970년대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이 지역 인구유출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2) 도시의 기능분류

도시는 그 곳에 거주하는 주민과 주변 배후지 지역의 주민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각 도시가 제공하는 기능들의 많고 적음을 전국 수준이나 일정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도시를 유형화 할 수 있다.

도시기능을 통한 다양한 도시 분류기법이 고안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넬슨(Nelson, 1955)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원 자료는 전라지역 44개 시 · 읍들에 대해 2001년 기준 산업대분류별 산업종사자수 자료를 이용하였다. 산업별로 그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평균비율과 그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각 도시의 산업별 비중의 편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이는 전라지역 전체 도시들의 산업 비중 평균에 대해 그 도시의 그 산업 비중이 평균치로부터 얼마나 더 벗어났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그 벗어난 정도의 척도로 표준편차를 사용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어떤 기능의 비중이 평균치에서 표준편차의 2배 이상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한 도시의 특정 산업 비중이 2 이상 나오는 경우 해당 산업은 그 도시에서 고도로 특화되어 있다고 판정할 수 있다.

각 도시별로 17개 산업으로 분류된 고용자료를 가지고 각 도시마다 산업별 고용비율(%)을 계산하고 그 고용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표 4-3]이다.

산업별 고용비율의 평균치를 보면 농림업, 어업, 광업, 전기 · 가스 · 수도사업의 비율은 1% 미만이며, 도 · 소매업이 약 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은 16%, 음식 · 숙박업은 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준편차는 제조업과 공공행정 · 국방부문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도시간 제조업과 공공행정 · 국방부문 비중이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3] 전라지역 산업별 고용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44개 읍급이상 도시, 2001)

산 업	평 균(M)	표준편차(SD)	M + 1SD	M + 2SD
농업 · 임업	0.22	1.25	1.47	2.72
어 업	0.37	1.45	1.82	3.72
광 업	0.13	4.87	5.00	9.87
제조업	16.17	9.64	25.81	35.45
전기 · 가스 · 수도업	0.57	5.05	5.62	10.67
건설업	5.75	4.08	9.83	13.91
도 · 소매업	18.94	4.07	23.01	27.08
음식 · 숙박업	12.39	2.45	14.84	17.29
운수 · 창고 · 통신업	7.04	2.07	9.11	11.18
금융 · 보험업	5.36	2.29	7.65	9.94
부동산서비스업	2.02	0.79	2.81	3.60
사업서비스업	3.39	3.42	6.81	10.23
공공행정 · 국방	5.34	6.31	11.65	17.96
교육서비스업	8.87	2.41	11.28	13.69
보건 · 사회사업	4.35	1.96	6.31	8.27
오락 · 문화서비스업	2.34	0.86	3.20	4.06
기타서비스업	6.67	2.44	9.11	11.55

자료 : 광주 · 전남 · 전북 통계연보, 2002 ; 각 군 통계연보, 2002

표준편차가 아주 적은 부동산서비스업 경우는 도시간 편차가 가장 적은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산업의 고용 비율이 M+1SD 이상의 수치를 보이면 그 산업은 해당 도시의 특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M+1SD 이내 범위의 수치를 보이는 도시들은 다수의 기능들이 두루 분포하는 '복합기능도시' 라 할 수 있다.

[표 4-4]는 전라지역의 44개 읍급 이상도시에 대해서 각 도시별로 특화된 산업들을 M+1SD 이상, M+2SD 이상, M+3SD 이상의 3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이다. 예를 들어 장수 · 장흥 · 관산 등은 농림업으로 매우 특화되어 있으며, 바다를 끼고 있는 벌교와 여수는 어업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홍농은 전력산업과 건설업에서, 전라남도청 이전으로 신도시 건설이 한창인 무안은 부동산업과 건설업이 특화산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전라지역의 도시들을 분류해 보면 [표 4-5]와 같다. 도시는 크게 복합도시와 특화도시로 나눌 수 있다. 복합도시는 특화 기능이 하나도 없는 도시를 말

[표 4-4] 산업별 특화정도에 따른 도시분류

산 업	M+1SD이상	M+2SD이상	M+3SD이상
농업 · 임업	고흥, 영암, 진도	지도, 영암	관산, 장흥, 장수
어 업	관산	여수	벌교
광 업	노화		지도
제조업	광양, 일로, 익산, 김제	금일	
전기 · 가스 · 수도업			홍농
건설업	무안	화순, 무주	홍농
도 · 소매업	구례,도양,해남,영광,부안		
음식 · 숙박업	목포,도양,관산,완도,지도		
운수 · 창고 · 통신업	장성,임실	벌교	
금융 · 보험업	목포,곡성,장흥,강진,장수, 부안,해남,백수,진도	고흥	
부동산서비스업	무안		
사업서비스업		화순	홍농
공공행정 · 국방	담양,구례,고흥,장흥,해남,순창, 영암,무안,함평,장성,진도,진안	보성,일로,무주,임실	곡성,장수
교육서비스업	대덕		백수
보건 · 사회사업	고흥,도양,장흥,강진,해남,영암	담양,영광	
오락 · 문화서비스업	목포		
기타서비스업	영암,장수	대덕	함평

자료 : 광주 · 전남 · 전북 통계연보, 2002 ; 각 군 통계연보, 2002

하는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광주, 전주, 군산, 순천, 남원, 정읍, 나주 등 7개의 도시가 해당되었다. 모두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랜 도시들이다.

특화도시는 특화된 기능을 가진 도시를 말하며, 특화된 기능의 수에 따라 단일 특화도시와 복합 특화도시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나타난 단일 특화도시들의 유형은 어업도시, 광업도시, 공업도시, 관광도시, 행정도시 등이 나타났다. 농업으로 특화된 도시도 있었지만 해당 도시에서 다른 특화기능의 비중에 비해 미약하기 때문에 특화기능의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어업도시는 여수로 나타났는데 도시 전체 고용자의 4.53%가 종사하고 있었다. 벌교는 어업의 비중이 8.4%로 여수보다 더 특화되어 있지만 운수 · 창고업(11.3%)에서도 높은 특화를 보여 복합 어업도시로 분류되었다. 광업도시로는 다량의 납석이 채굴되고 있는 완

[표 4-5] 전라지역 도시의 기능별 분류

유 형		도 시
복 합 도 시		광주,전주,군산,순천,남원,정읍,나주
단일 특화 지역	어업도시	여수
	광업도시	노화
	공업도시	광양,익산,김제,금일
	관광도시	완도
	행정도시	보성,진안,순창
복합 특화 도시	복합어업도시	벌교
	복합광업도시	지도
	복합공업도시	일로
	복합전력도시	홍농
	복합건설도시	화순,무안
	복합관광도시	목포,도양,관산,부안,구례,해남,영광
	복합교육도시	백수,대덕
	복합행정도시	담양,곡성,고흥,장흥,강진,영암,함평,장성,진도,장수,무주,임실
	복합전문서비스도시	영광

도군 노화읍이 해당되었는데 약 7.9%의 비중을 보였다. 신안군 지도읍의 경우 전체 고용자의 29%가 고령토 채굴에 종사하고 있어 광업부문에서 가장 높은 특화를 보였는데 농업에서도 3.8%로 높은 비중을 보여서 복합광업도시로 분류했다.

공업도시로는 대규모 제철공업이 입지해 있는 광양(32.8%), 수출자유지역이 있는 익산(28.6%), 양조 · 도자기 산업이 발달한 김제(26.1%), 바다를 끼고 해산물 가공산업이 발달해 있는 완도군 금일(46.1%)읍이 해당된다. 복합공업도시로 분류된 무안군 일로읍은 농공단지의 활성화로 26%의 고용 비중을 보였으며, 지역 중심으로서 행정기능의 비중(19.7%)도 높게 나타났다.

음식 · 숙박업이나 도 · 소매업의 비중이 평균 이상으로 높다는 것은 자체 주민 외에 외부인들의 유출입이 빈번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관광산업의 발달로 유추할 수 있다. 관광도시로 분류된 완도는 음식 · 숙박업(16.4%)이 특화기능으로 나타나 그 지역특성과 관련하여 관광도시로 분류하였다. 복합관광도시로 분류된 목포는 음식 · 숙박업(15.7%)과 오락문화사업(3.2%)의 비중이 높았으며, 고흥군 도양읍은 도 · 소매업(25.6%)과 음식 · 숙박업

(15.8%), 오락문화사업(7.6%) 비중이 높았다. 관산은 음식 · 숙박업(15.1%)과 농업(4.3%)비중이, 부안은 도 · 소매업(25%)과 음식 · 숙박업(13.4%) 비중이, 구례는 도 · 소매업(23.6%)과 공공행정부문(13.2%)이, 해남도 도 · 소매업(24.6%)과 공공행정부문(12.6%)이 높아서 복합관광도시로 분류하였다.

영광군 홍농읍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으로 전기 · 가스 · 수도사업(34%)과 건설업(22.4%), 사업서비스업(20%)에 특화되어 있어 복합전력도시로 분류하였다. 화순은 건설업(17.3%)과 사업서비스업(11.6%)이 특화되어 있었고, 무안은 건설업(10.2%)과 부동산서비스업(2.8%)이 특화기능으로 나타나 복합건설도시로 분류하였다. 화순은 광주 도심과 짧은 시간에 접근이 용이하고 지가가 낮아서 최근 서민층에 광주의 베드타운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며, 무안은 전라남도청의 이전과 관련하여 건설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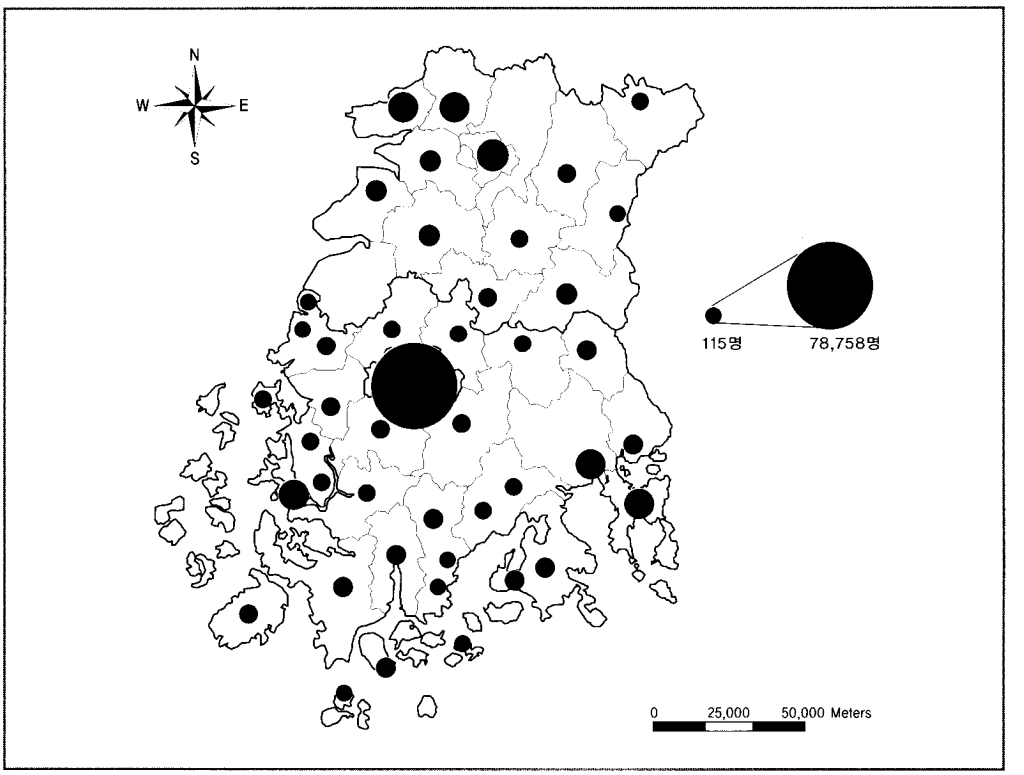
영광 백수읍은 교육서비스업(18.7%)과 금융 · 보험업(8.5%)의 비중이 높았고, 장흥군 대덕읍은 교육서비스업(11.9%)과 기타 개인서비스업(11.6%)으로 특화되어 있어서 복합교육도시로 분류하였다. 공공행정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는 행정도시로 분류하였는데 도시에 따라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과 금융보험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지형적으로 비교적 고립되어 오랫동안 행정중심지로 역할 했던 곳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영광은 도 · 소매업(23.6%)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9.7%)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종합병원과 정신과 전문의료기관의 입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복합전문서비스도시로 분류하였다.

(3) 중심지체계

중심지체계로서의 도시체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은 인구나 중심지 기능의 도시별 규모를 지도화하여 속성들의 양적 차이로 파악하는 방법과 구체적인 유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 연관성 정도를 가지고 중심성의 위계를 계측하는 방법이 있다. 전라지역의 중심지체계는 인구수로 미루어 볼 때 광주와 전주를 중심으로 군산 · 익산 · 목포 · 여수 · 순천이 차하위 중심지를 이루고 있는 양상이다. 중심성 기능을 통하여 그 체계를 확인해 보면 약간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다. 대표적 중심성 기능으로 도소매업 · 금융보험업 · 음식숙박업 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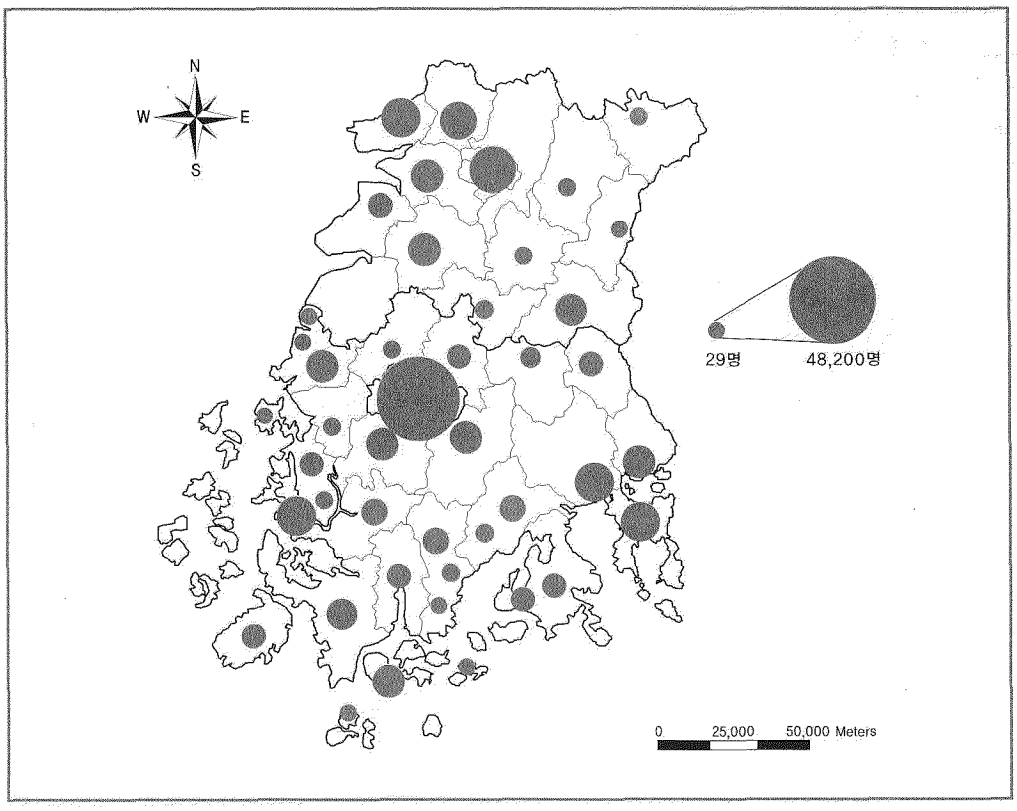
자수를 선정하였다(그림 4-8, 4-9, 4-10). 역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주는 3개의 중심성 기능의 분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60만 규모의 전주는 3개의 중심성 기능 모두 인구 2,30만 규모의 도시들에 비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

도소매업과 음식 · 숙박업 분포의 경우(그림 4-8, 4-9), 광주를 무게중심으로 하여 북부의 전주 · 익산 · 군산, 서남부의 목포, 동남부의 순천 · 여수가 삼각형의 꼭지점 부분으로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각 변에 해당되는 김제 · 부안 · 정읍 · 영광 · 함평 · 무안, 해남 · 강진 · 장흥 · 보성 · 벌교, 임실 · 남원 · 구례 · 광양 등이 높게 나타난다. 도소매업이나 음식 · 숙박업의 경우 도시 자체의 수요도 있지만 외지인의 유출입이 많을 때도 활성화될 수 있는 기능으로서 관광산업이 발달된 경우 인구수에 비해 중심성 기능이 높게 나타나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림 4-8〉 전라지역 도소매업 종사자수 분포

자료 : 시 · 군 통계연보,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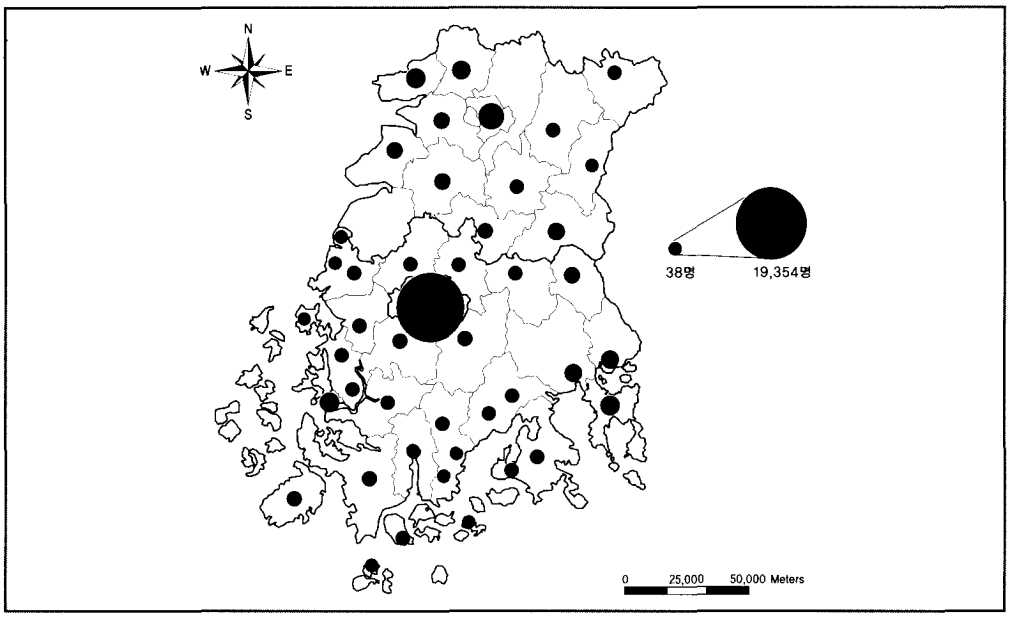


〈그림 4-9〉전라지역 음식숙박업 종사자수 분포

자료 : 시·군 통계연보,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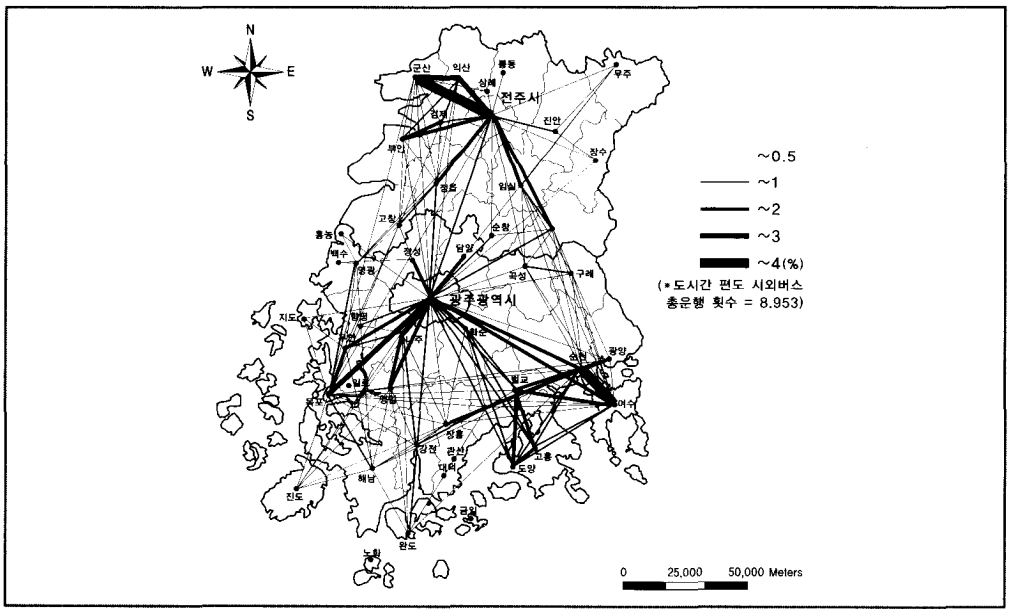
금융보험업의 경우 광주를 제외하고는 인구규모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도시경제활동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이 기능은 다른 기능에 비해 대도시로의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지방으로 갈수록 자금의 흐름이 미약하여 나타나는 결과이다(그림4-10).

버스통행량 O-D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라지역 내의 대체적인 중심성을 살펴보면 〈그림 4-11〉과 같다. 역시 광주와 전주가 도청소재지로서 남과 북의 최대 결절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두 개의 큰 결절 간의 유동은 그렇게 많지 않아 두 결절이 각기 독자적인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전주와 전남 간의 결합보다는 광주와 전북 간의 결합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0〉 전라지역 금융보험종사자수 분포

자료 : 시 · 군 통계연보, 2002



〈그림 4-11〉 전라지역의 버스 유동

자료 : 건설교통부, 2003, 시외버스 운행계통

4) 도시내부구조의 변화

(1) 광주시 신시가지의 성장과 공간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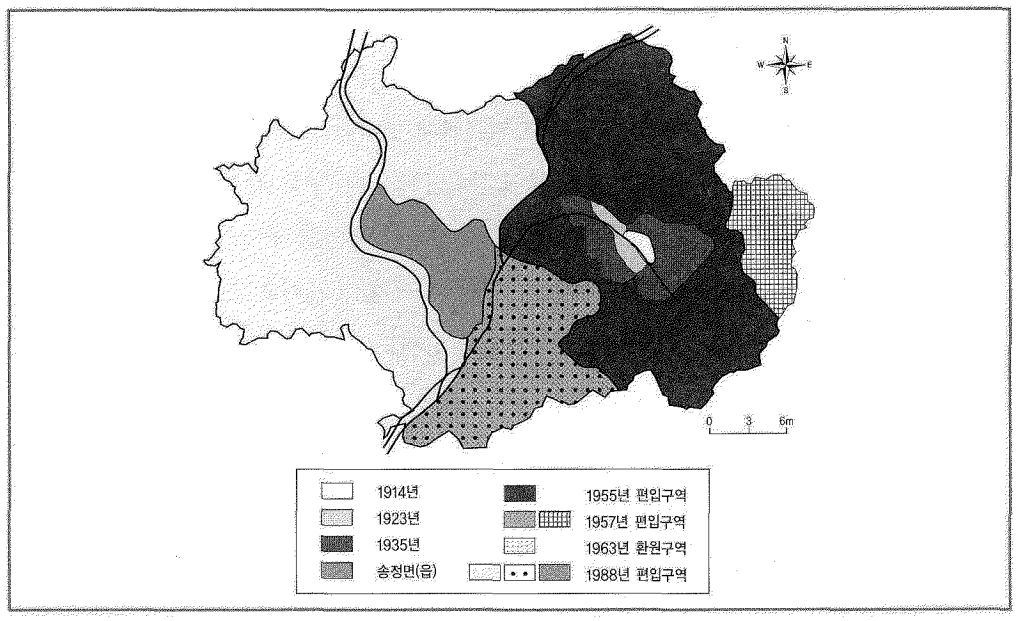
광주광역시는 7대 광역시 중 가장 위기에 처한 도시라 할 수 있다. 도시 외연부에서의 급속한 택지 개발과 신시가지 조성으로 인구가 대거 이동함에 따라 도심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광역시로서는 취약한 산업구조와 그에 따른 빈약한 재정이 큰 문제로 제기되곤 하지만, 그래도 전남의 비교적 중앙에 위치하여 행정 및 교육기능을 중심으로 전남 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심도시로 기능해 왔다. 앞으로 행정기능을 잃게 되면 그 영향력이 상당히 위축되리라 생각된다. 도시가 일정규모에 이르면 국가정책이나 행정적인 도움이 없이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ratchet effect조차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새로운 기능의 발굴과 발전 방향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행정구역의 변화

1914년 2㎢의 광주군 광주면에서 시작된 행정구역은 광주읍(1930년)시대에 19㎢로 확장되어 광주부로 승격되었으며, 1949년 광주시로 명칭이 바뀌었다. 1955년과 57년 2차례에 걸쳐 인접 광산군과 담양군 일부지역이 편입됨으로써 279㎢로 크게 넓혀졌다. 1963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서창 · 대촌출장소 지역이 다시 광산군에 환원되어 215㎢로 축소되었다. 1963년 동구 · 서구 · 북구 등 3구 72동을 관할구역으로 부산 · 대구 · 인천에 이어 네 번째 직할시가 되었다. 1988년 송정시와 광산군 전역이 광산구로 편입되어 현재 총 면적은 501㎢에 달하고 있다. 1995년 행정구역 조정없이 광역시로 되었고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해 온 서구가 서구 · 남구로 분구되어 현재 5구 90동(2004)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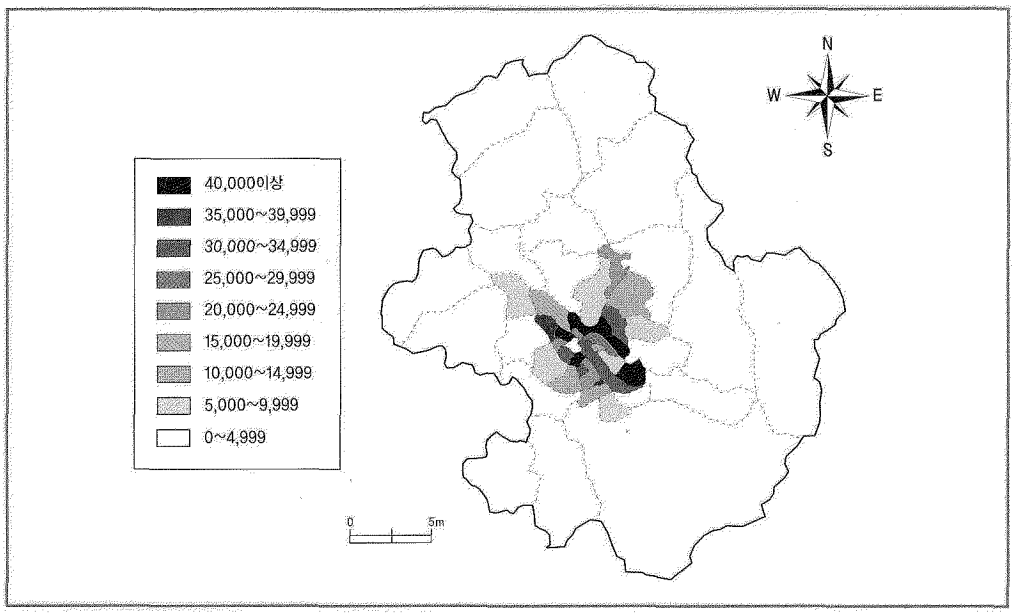
인구분포 및 인구수의 변화

광주는 1935년 부(府)로의 승격과 함께 도시기능이 확대되면서 전남의 중심도시가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몇 차례의 행정구역 변경을 거치면서 1945년 83,000명이었던 인



〈그림 4-12〉 광주의 행정구역변화

자료 : 광주광역시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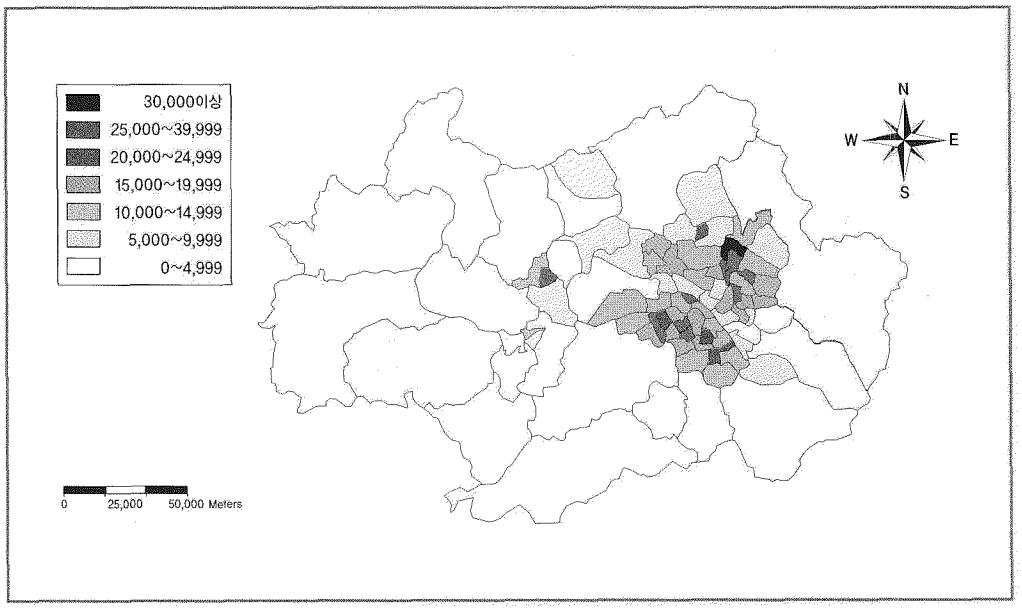
〈그림 4-13〉 광주광역시의 인구밀도 분포(1970년)

자료 : 광주광역시 통계연보, 1970

구가 60년 후인 2003년 139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인구분포는 곧 도시 공간구조를 암시한다. 동별 인구밀도를 통하여 분포 양상을 유추해 보면, 1970년의 경우(그림 4-13), 도심부 상업지역에 연접한(도심에서 반경 1㎞내외) 오래된 주거지역에서 높은 인구밀도를 보인다.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를 끼고 있어서 많은 노선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시외지역으로의 연결이 용이한 곳이다. 2002년이 되면서 도심부의 인구밀도는 감소하고 주변부의 인구밀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심 상업지구에 연접해 있던 4만인/㎢이상의 고밀도지역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도심부의 주거기능이 상업지구에 잠식되고 노후된 주택과 좁은 도로망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주거환경, 외곽지역에서의 교통개선, 아파트 선호의 증가 등이 인구의 외부지향을 촉진시키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할 것이다.

시가화 구역이 외연부로 많이 확대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인구밀도는 낮아지고 있다. 3만인 이상의 고밀도 지역도 나타나지 않으며, 도심부에서의 저밀도는 인접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구의 외부지향 이동과 도심부의 심각한 공동화를 읽을수 있다(그림 4-14).



〈그림 4-14〉 광주광역시의 인구밀도 분포(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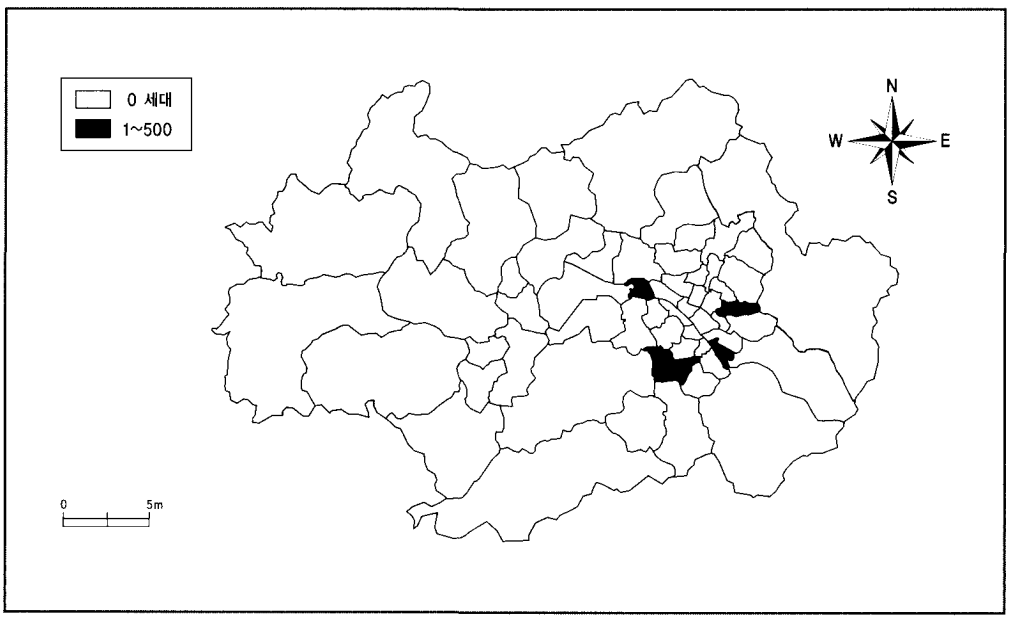
자료 : 광주광역시 통계연보(2002년)

아파트의 공간확산

위와 같은 인구분포는 고밀도주거의 대량공급, 즉 아파트의 공간확산에 기인한다. 1999년 말 현재 광주시의 주택보급율은 95%에 달하고 있으며 총 주택수의 66%가 아파트이다. 1986년만 해도 전국 주요 6대 도시에서 광주의 아파트 비율이 가장 낮았으나 1992년에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의 확산은 크게 3시기, 즉 확산 초기라 할 수 있는 70년대, 완만한 확산 추세를 보인 80년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인 90년대로 구분할 수 있다.

1970년대 초 학동과 광천동에 공공부문의 건설로 2개 단지에 최초의 아파트가 준공되었다. 70년대 전반기에 건축된 아파트는 4개 단지 총 484세대에 불과했다(그림4-15). 이 아파트들은 주로 시가지가 끝나는 지역에 건축되어 주거지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후반기에는 25개 단지 3811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되었는데 동구에 25%, 서구에 38%, 북구에 37%가 건설되었다. 특히 광주 최초의 대규모 단지인 운암동 주공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아파트의 시 외곽 건설이 시작되었다. 70년대 동안 건설된 아파트는 29개 단지 4,295호로 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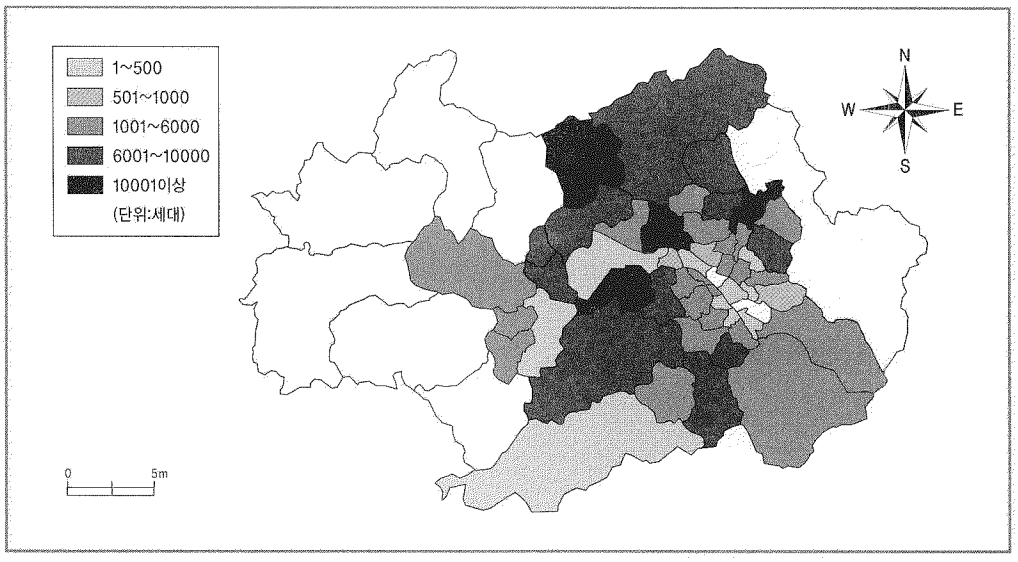
〈그림 4-15〉 광주광역시 아파트의 공간확산(1970-1974)

자료 : 광주광역시 통계연보

아파트의 2%를 차지하며, 이는 아파트의 확산이 이제야 시작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소형 평형이 주류를 이루었고 아파트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은 상태여서 미분양이 많았다. 1986년 직할시로 승격되고, 80년대 후반 국가경제의 전반적 상승과 주택 200만호 건설정책과 맞물려서 아파트 건설이 빠른 속도로 광주 전역에 확대되어 갔다. 80년대에 건설된 아파트는 38,554호로 총 아파트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89년말 호당 평균규모는 22.6평이다.

80년대 전반기는 넓은 범위에 걸쳐 아파트가 확산되어 나갔으며, 특히 북구의 운암동과 서구의 화정동에 건설된 대규모 주공아파트 단지의 조성이 전체의 50%를 점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후반기에는 200만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시 외곽에서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에 의해 진행된 대규모 택지개발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아파트 건설 붐 및 투기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때 도심부인 동구는 약 22%의 인구감소 현상을 보였다. 광산구의 하남신시가지, 북구의 문흥 · 우산지구, 서구의 화정 · 염주지구, 봉선지구 등이 쾌적한 주거환경지구로 부상했다.

90년대는 200만호 주택건설의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로 153,774호가 준공되어 총 아파트의 78%를 점하고 있다. 전반기는 80년대 후반 시작된 택지개발지구의 조성이 완료되면서



〈그림 4-16〉 광주광역시 아파트의 공간 확산(1970-1998)

자료 : 광주광역시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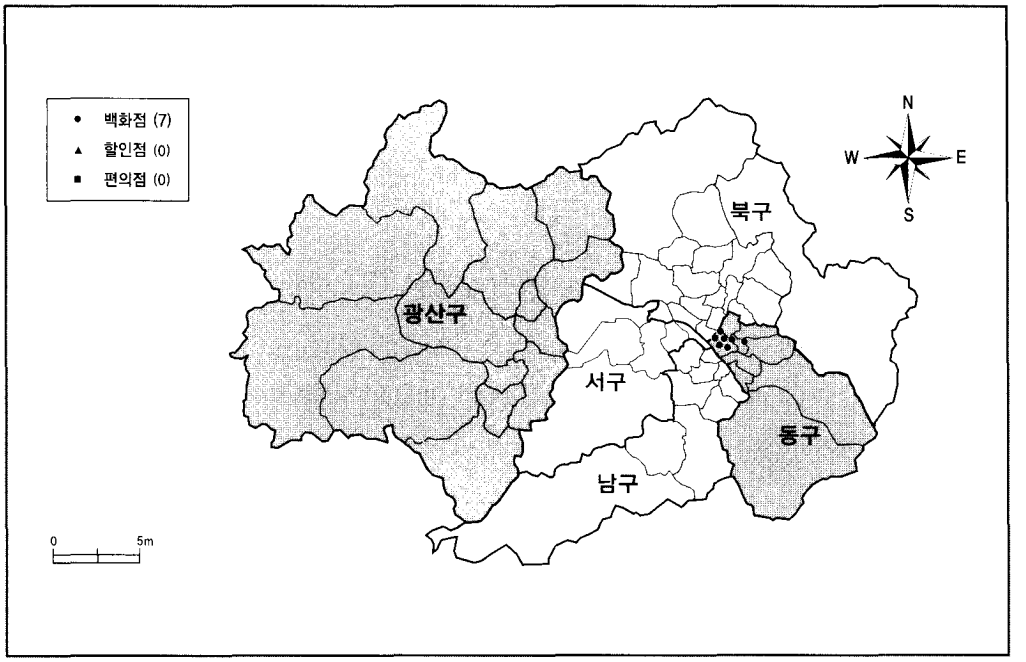
총 73,472호가 준공되었다. 후반기에는 8개 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아파트가 건축되었다. 특히 첨단 산업단지, 상무지구, 일곡지구, 풍암지구 등은 광주시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넓은 면적이 택지로 개발되었다. 대규모 단지의 조성으로 급격한 인구증가를 보였던 지역들도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인구증가는 둔화된다(그림 4-16).

도심으로부터의 거리대별로 건설된 아파트의 확산과정을 보는 것도 흥미롭다. 도심에서 2.5㎞이내의 동심원지구에 건설된 아파트의 총수는 11,176호로서 전체의 6%를 차지하고 있다. 2.5㎞~5㎞범위에서 전체의 44%가 집중되어 있으며,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전반 대규모 단지의 개발이 많았던 지역이다. 5㎞~7.5㎞지대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건설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7.5㎞이상의 지대는 80년대 이전에는 전혀 아파트 건설이 없었던 지역이지만 90년대 이후 아파트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

상업공간의 변화

아파트 문화의 선호와 함께 급속하게 진행된 주거공간의 외부지향은 새로운 업태의 등장과 맞물려 상업공간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야기시켰다. 1990년대 초반까지도 중심상권은 충장로와 금남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도심에서 거의 1㎞의 범위에 행정 업무 상업 기능이 집중되어 있었다. 대인시장 양동시장 등 재래상권과 충장로와 금남로를 중심으로 한 근대적 소매상권으로 대표되던 중심상권은 광역화 및 부도심권 개발에 따라 '백화점 및 할인점 전국시대'에 들어섰다. 백화점은 1차 순환도로 내에, 할인점은 2차 순환도로 내에 위치하여 상권을 구획하고 있다(그림 4-17).

쾌적성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패턴이 정착되어 가면서 대형 유통업체는 크게 성장하는 반면 중소형 유통업체는 침체하거나 도산, 업종 변경이 이어지고 있다. 농수산물, 혼수용품, 제수용품 등 2천평 규모의 최대 재래시장인 대인시장과 의류 재래시장인 양동시장, 충장로 · 금남로의 전문상가 및 지하상가는 주차시설과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으며 해결이 용이치 않은 도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더욱이 대규모 백화점 및 할인점들의 대부분이 서울에 기반을 둔 것이라서 수익의 대부분이 유출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 할 것이다(그림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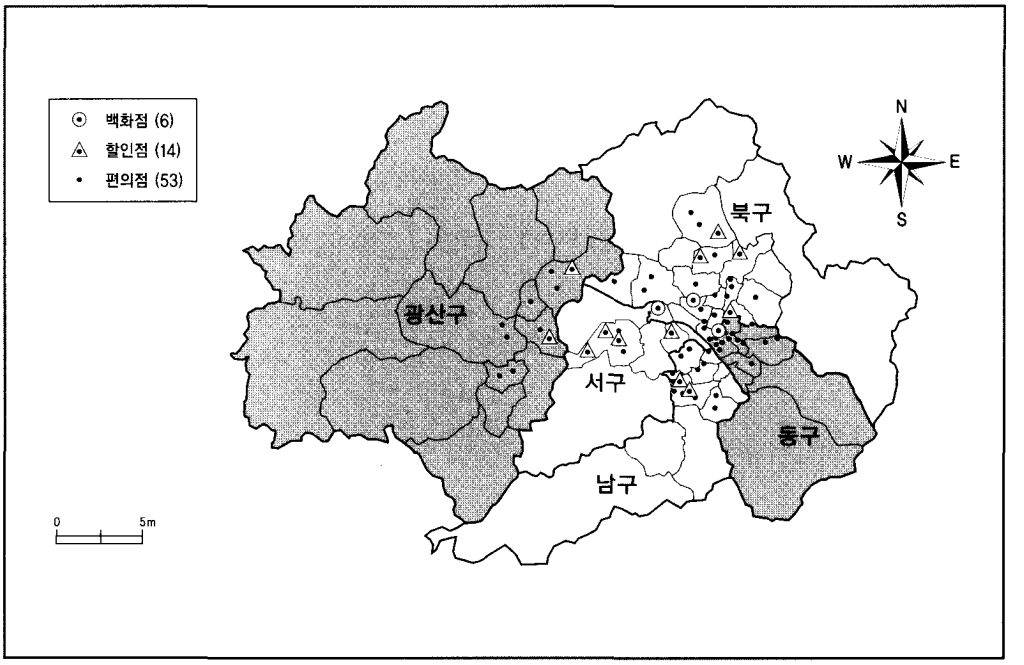


〈그림 4-17〉 광주광역시 소매업 공간 분포 (1990)

자료 : 광주광역시 통계연보

도심부 상권의 위축은 광범한 주거공간의 확산과 이에 대응한 부심권 상업지역의 역할 증대, 셔틀버스를 동원한 대형 유통업체의 구매력 흡수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로 말미암은 영세한 부지규모 및 노후화한 건물 등 급변하고 있는 상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과 교통 체증의 심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광주 상권의 가장 큰 문제는 상업지역 및 상업시설의 공급과잉이라 생각된다. 시장규모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 조성된 신시가지인 상무지구와 첨단과학단지의 대규모 상업용지 공급 등 다른 도시에 비해 상업용지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통의 발달과 자가용의 보급으로 상대적으로 좁아진 광주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와 지구내 수요를 겨냥한 소형 슈퍼마켓은 유지되는 반면 중간 규모의 상권은 급속하게 쇠퇴하는 양상이다. 1996년 이후 건축자재, 의류, 장난감, 전자제품, 가구, 문구, 꽃 등 특화된 업종으로 점포가 집적된 전문 빌딩의 등장은 새로운 상업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8〉 광주광역시 소매업 공간 분포(2000)

자료 : 광주광역시 통계연보

공간구조의 변화

광주의 도시 공간구조는 충장로 · 금남로 중심의 단핵구조에서 다핵구조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토지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지가자료를 이용하여 CBD를 제외한 3개의 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최고지가(CBD, 1400만/m^2, 1999)의 27%를 보이는 서구의 광천동, 25%를 보이는 북구의 풍향동과 남구의 주월동은 1차 순환도로 상에 위치하며 시외지역으로 통하는 국도와 연결되는 주요 결절지역이다. 부심의 빠른 성장은 곧 도심부의 쇠퇴를 의미한다. 전문 상가지역이었던 도심부는 거의 10대, 20대들의 구매 및 놀이공간으로 변화했다. 더욱이 도심부의 핵심 행정기능인 도청의 이전은 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도심부의 상권을 크게 위축시키리라 예상되고 있다. 지하철 건설을 통한 역세권 개발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도심부의 활성화는 도시 전체의 활력과도 관련이 있다. 산업화가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문화 예술의 도시를 표방하지만 변변한 사적지 하나 없는 도심부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활

성화 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주말에 여가를 즐기기 위해 도시를 빠져나가는 행렬이 오히려 도심을 들르는 행렬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광주시민 대다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원화 사업이 필요하다. 도심부의 공동화와 더불어 발생되는 폐교의 부지, 공장의 구용지들이 특색있는 공원으로 조성된다면 비록 시 재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시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주시 신시가지의 성장과 공간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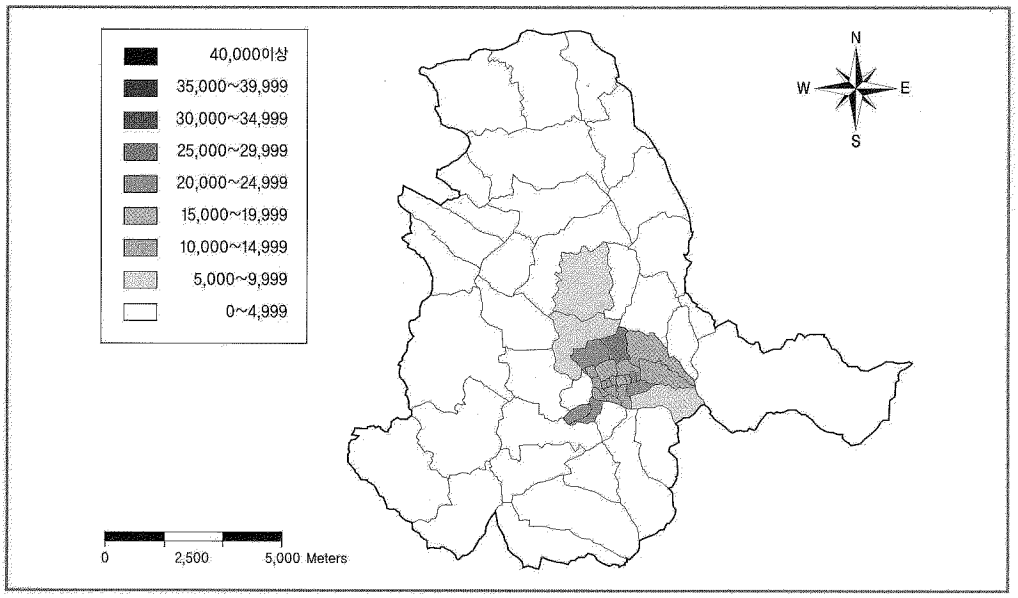
전주는 천년 이상된 고도(古都)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도시이다. 전북의 도청소재지로서 행정, 문화, 교육의 중심도시로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산업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소비도시적 면모가 강한 탓에 1970년대 이후 국내 다른 도시들의 비약적인 발전에 비하면 그 발전 속도가 크게 둔화되어 1980년대 들어서도 인구 50만이 못되어 전국 인구순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전주시의 근대 도시로의 성장과 도시화에 작용하고 있는 요소는 전주역의 이전과 신시가지의 조성, 시가지 내 가로망의 정비, 공단의 조성과 확장 등 일련의 도시 개발 정책의 시행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분포의 변화

전주시의 인구는 1960년 188,000명에서 83년 40만, 89년 50만, 2002년 현재 626,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1980년 이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1.5%내외로 저조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는 더욱 낮아져서 0.5% 미만을 보이고 있다.

동별 인구밀도 분포를 통하여 도시 내 인구의 분포 상황과 도시 공간구조를 유추할 수 있다. 1970년 전주의 총 인구는 26만 여명에 불과하였고, 시역(市域)은 106㎢로 2004년 현재의 1/2에 불과하였다. 동부와 서부, 남부에 흩어져 있는 크고 작은 산지와 도시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는 전주천의 영향을 받아 도시 발달이 전주천의 동안(東岸)에 남북으로 길게 발달하는 양상을 보였다. 도심부는 반경 500m 정도로 인구밀도는 1만 내지 2만을 보인다. 이 도심부를 둘러싸고 인구밀집의 주거지구가 나타나며, 이 지구를 벗어나면 인구밀도도 점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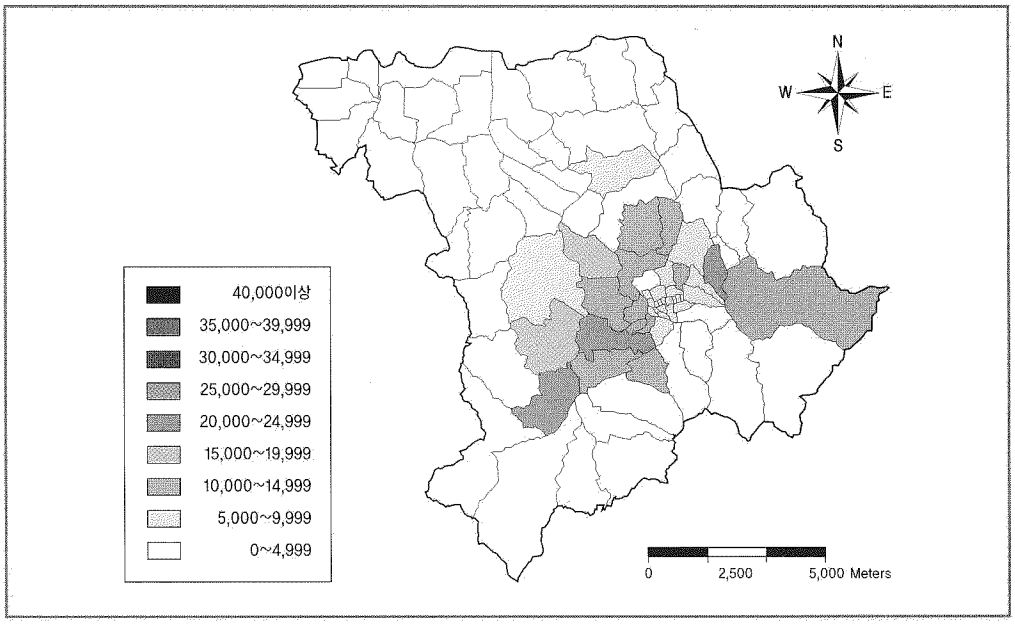


〈그림 4-19〉 전주시 인구밀도 분포(1970년)

자료 : 전주시 통계연보, 1970

낮아진다(그림 4-19).

30여 년이 지난 2004년의 상황은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4-20). 총 인구는 62만 여명에 이르고 시역도 인접 완주군과 김제군의 일부를 합병하여 206㎢에 이른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구가 넓게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인구의 고밀도 지구는 오히려 도심부를 벗어난 곳에서 볼 수 있다. 30여 년 전의 고밀도 분포 지구였던 도심부와 인접지역의 인구밀도는 크게 감소한 반면,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주변 지역에서 고밀도 분포 양상을 읽을 수 있다. 이는 1970년대 후반 전주에 건설되기 시작한 고밀도 주거지구인 아파트의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아파트 건설을 위해선 비교적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기존의 도심 부근에서는 그러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지가도 비싸기 때문에 주변지역에서 부지를 확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의 역사가 오랜 도시들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재개발이라는 큰 수술을 거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급변하는 시대에 걸맞는 상업 및 주거환경의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새롭게 개발되는 주변부로의 인구유출을 막을 수 없고 결국 도심부의 공동화로 이어지게 된다.



〈그림 4-20〉 전주시 인구밀도 분포(2004년)

자료 : 전주시 통계연보, 2004

가로망정비와 도시화

1933년 전주 최초의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때 형성된 가로는 차량통행이 목적이 아닌 보행위주였기 때문에 도로의 폭은 대부분 2차선 정도로 아주 좁았다. 그 상태가 몇 개의 도로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이어져 러시아워는 물론이고 항상 도심체증이 심하였다. 또한 남북방향의 전주천을 따라 시가지화하면서 남북방향의 도로망이 근간을 이루게 되어 동서간 연결은 자연 위축되는 양상이었다. 이러한 도로망 체계로 시가지도 남북방향으로 길게 확장되었다.

시역이 확장되면서 기존의 전주역사(驛舍)와 철도 부지가 시의 도심지를 지나는 결과가 되어, 전주역과 철도부지를 동전주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오랫동안 모색해 오다가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 후 78년에 철도부지 이전 공사가 착공되어 81년에 준공됨으로써 동전주 일대에 백제로가 개통되고 금암동, 우아동 일대에 신시가지 개발이 이루어졌다. 과거의 철도부지는 팔달로와 병행해서 기린로를 개설하였고 이는 시가지 확대와 교통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1980년 제 61회 전국 체전이 전주에서 열리는 것을 계기로 시가지 정비사업이 진행되어 동서관통로와 천변로 등 새로운 가로가 준공되었는데, 이는 전주의 도시화에 크게 작용하였다. 즉 도시 내부의 가로망 정비뿐만 아니라 업무지구의 확대를 가져왔고, 발전축을 북쪽으로 유도하려는 의지도 반영되었다.

특히 동서관통로는 전주의 교통 흐름과 자본 · 인구의 흐름을 획기적으로 바꾸기에 충분하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동서를 빠르게 연결해 줌으로써 새로이 편입되는 행정구역의 연결을 용이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남북축과 함께 동서축도 형성됨으로써 도시의 균등한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에는 동서관통로가 인접 완주군까지 확장되어 도로 주변의 도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신시가지 조성

전주는 1970년대 후반부터 비교적 넓은 부지 확보가 용이한 시가화 구역의 끝부분에서 아파트 건설이 소규모로 시작되었다. 1980년대까지의 아파트 건설은 상업지구의 계획까지 포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거 외의 다른 기능은 대부분 도심에 의존하는 그런 양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는 상업지구의 계획까지도 포함되어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조성과 함께 신시가지구가 조성되었다. 도심부 동부에 위치한 아중지구와 북서부에 위치하는 서신지구가 그곳이다. 이 두 신시가지는 과거의 아파트 단지와는 차별화한 쾌적한 환경의 아파트 문화를 일구면서 인구의 급속한 집중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대형 백화점과 할인점이 입지하여 인접 주민은 물론이고 전주 전역으로부터 소비자를 끌어들이면서 도심 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공간구조의 변화

1970년 전주의 중심기능은 직경 500m 내외의 좁은 지역에 밀집해 있었으며, 과거의 주거지가 도심화함에 따라 기능적 분화도 뚜렷하지 않은 채 도심기능과 주거기능이 혼재하는 단핵구조를 보였다. 인구가 도심을 중심으로 밀집 분포하였으며, 전주천은 서부로의 연속

적인 시가지화에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현재 시역의 확장과 인구증가, 철로역의 이전과 가로망의 정비, 고밀도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확산과 신시가지의 조성 등으로 도시의 주요 기능이 분산되면서 다핵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제 전주천은 도시화의 서부 경계선이 아닌 명실공히 도시 관통의 하천이 되었으며 이제 삼천천이 시가화 구역의 서부 경계선으로 등장하고 있다.

도시를 관통하는 전주천과 산재하는 구릉성 산지들로 말미암아 시가화가 군데군데 단절되기도 하지만, 전주천의 서부지역과 시역의 북부에서 아파트의 대량 공급과 공단의 조성 등으로 도시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전주시의 공간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점차 도심부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제5장
전라지방 - 산업구조의 개편과 지역경제의 변화

백영기 (전북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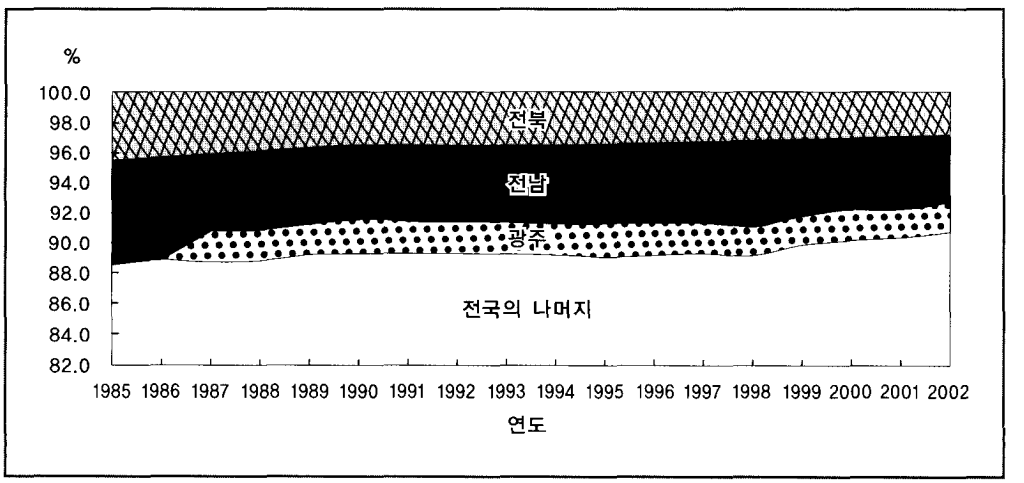
빈 면

제5장 산업구조의 개편과 지역경제의 변화

1. 산업구조의 변화

1) 산업별 지역총생산

1985년부터 최근까지 호남지역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생산 측면에서 조사하였다(그림 5-1). 이 기간 동안에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전북), 전라남도(전남)를 포함하는 호남지역의 총생산 비중은 전국의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점차로 감소하여 2000년 이후에는 거의 10% 남짓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호남지역 총생산액의 비중이 인구비중과 비교해 낮은 것은 이 지역에는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 부문이 국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제조업 외 부문이 상대적으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여 년 동안에 호남지역의 생산 비중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이 기간 동안 광주시와 전남의 전국대비 생산액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전북의



〈그림 5-1〉 전국대비 지역 내 총생산 비중의 변화 (1985-2002년)

자료 : 통계청, http://www.stat.go.kr

[표 5-1] 전국대비 산업별 지역총생산 (1990-2000년)

(단위: 백만원, %)

	전국				광주			
	1990		2000		1990		2000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농림어업	19,729,648	8.7	24,331,553	5.4	183,120	3.4	305,281	3.3
광업	1,137,714	0.5	846,057	0.2	3,823	0.1	200	0.0
제조업	76,077,824	33.4	174,399,573	38.7	1,728,245	32.0	2,795,473	30.1
전기가스수도사업	4,411,885	1.9	12,694,461	2.8	40,346	0.7	128,165	1.4
건설업	29,971,462	13.1	39,178,983	8.7	960,861	17.8	958,281	10.3
도 · 소매업	24,504,311	10.7	41,907,113	9.3	830,969	15.4	1,439,250	15.5
음식숙박업	6,930,759	3.0	9,684,799	2.2	184,655	3.4	285,824	3.1
운수창고	13,244,384	5.8	23,178,090	5.1	388,030	7.2	437,644	4.7
통신업	4,181,199	1.8	14,503,680	3.2	85,324	1.6	443,512	4.8
금융보험	11,899,495	5.2	32,993,459	7.3	220,421	4.1	734,640	7.9
부동산사업서비스	26,850,591	11.8	56,444,702	12.5	501,824	9.3	1,181,857	12.7
사회 및 개인서비스	9,112,914	4.0	20,054,295	4.5	271,190	5.0	590,702	6.4
합계	228,052,186	100.0	450,216,765	100.0	5,398,808	100.0	9,300,829	100.0

	전리북도				전라남도			
	1990		2000		1990		2000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농림어업	1,949,845	24.6	2,271,681	16.8	3,072,879	27.4	3,860,968	18.1
광업	30,292	0.4	49,066	0.4	121,591	1.1	82,927	0.4
제조업	2,297,579	28.9	3,873,498	28.6	3,004,235	26.8	7,113,905	33.4
전기가스수도사업	75,800	1.0	253,365	1.9	510,357	4.5	1,522,903	7.2
건설업	1,112,111	14.0	1,852,121	13.7	1,659,728	14.8	2,246,529	10.6
도 · 소매업	649,920	8.2	1,207,509	8.9	691,935	6.2	1,279,100	6.0
음식숙박업	303,959	3.8	396,313	2.9	420,042	3.7	628,574	3.0
운수창고	352,333	4.4	611,514	4.5	457,638	4.1	1,373,355	6.5
통신업	124,958	1.6	407,496	3.0	148,423	1.3	421,751	2.0
금융보험	270,947	3.4	839,405	6.2	209,887	1.9	973,007	4.6
부동산사업서비스	483,729	6.1	1,194,087	8.8	690,405	6.1	1,233,148	5.8
사회 및 개인서비스	289,754	3.6	594,410	4.4	241,056	2.1	543,043	2.6
합계	7,941,227	100.0	13,550,465	100.0	11,228,176	100.0	21,279,210	100.0

자료 : 통계청, 1990, 2000, 시도별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통계청, http://www.stat.go.kr
주 : 금액은 1995년 기준년가격

생산액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당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북의 총생산액 비중은 1985년 4%를 넘었지만 2002년에는 3%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호남지역 총생산 비중이 취약한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산업별 지역 내 생산액의 구성 변화를 지역별로 전국의 산업별 구성과 비교하였다(표 5-1). 1990년부터 10년 동안 전국의 총생산은 1995년 가격 기준으로 1990년 약 228조원에서 2000년에는 약 450조원으로 거의 2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같은 기간 동안에 지역 내의 어느 지역도 총생산 금액이 2배 가량 증가한 곳이 없다. 다만 전남의 총생산이 전국 평균에 가장 근접한 성장을 기록하였다. 국내총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역시 제조업으로 1990년에는 33.4%이었으며 2000년에는 38.7%로 증가하였다. 호남에서도 제조업은 가장 중요한 생산활동으로 전체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국의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 1990년에 광주시만이 32%의 제조업 비중을 갖고 있었지만 이것도 2000년에는 30.1%로 약간 감소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전북의 제조업은 28.9%에서 28.6%로 정체하고 있으며, 전남의 제조업은 26.8%에서 33.4%로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제조업 성장의 부진함이 호남지역 총생산의 전국대비 비중을 감소시키는데 일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 이외의 부문에서의 변화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비중이 증가한 부문은 전기가스수도사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국적 비중이 감소한 부문은 건설업, 농림어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광업 등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의 산업화가 성숙되면서 선진 경제구조로 탈바꿈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것이다. 호남에서 제조업 이외 부문에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전북과 전남의 농림어업 부문이 급속히 쇠퇴하고, 전북은 도·소매업과 운수창고 부문이 약간 증가하고, 전남은 전기가스수도사업과 운수창고 부문이 크게 증가하였다. 광주에서는 통신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 부문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특징은 호남지역 역시 산업구조 변화의 전국적 추세를 따르면서 선진 경제구조로 탈바꿈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2) 경제활동 인구의 변화

1990년부터 2003년까지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 가운데 취업자수를 조사하였다(표 5-2). [표 5-2]에서 2000년 자료보다 2003년 자료를 이용한 것은 1997년 국내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던 IMF 위기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극심한 실업률을 겪었기 때문에 2000년보다는 2003년 자료가 보다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 전국의 취업자수는 1808.5만명에서 2003년에는 2213.9만명으로 22.4% 증가하였고,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비율인 23.6%보다 약간 작은 수치이다. 호남의 경제활동 인구는 1990년 239.2만명에서 2003년 245.6만명으로 13년 동안에 약 6만명(2.7%)이 증가하였고, 취업자수는 불과 2.7만명(1.5%)이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처럼 경제활동 인구와 고용에서의 낮은 성장은 수도권 이외의 대부분 지역이 겪고 있는 최근의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 내의 경제활동 인구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광주와 전북의 취업자수는 증가하였지만, 전남의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광주시의 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한 반면에 전남 경제활동인구의 절대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전남의 일부 지역이 광주시로 편입되었고, 전남 인구의 상당수가 대도시인 광주시로 전입하면서 야기된 현상이라 간주된다. 지역 전체의 실업률은 전국에 비해 낮지만, 광주시의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앞서고 있음은 주목된다.

[표 5-2] 경제활동인구 변화 (1990-2003년)

(단위: 천명, %)

	경제활동인구									
	총계		취업자		실업자		참가율		실업률	
	1990	2003	1990	2003	1990	2003	1990	200	1990	2003
광주	416	618	403	591	13	27	52.6	57.4	3.1	4.4
전북	813	858	802	837	10	21	55.2	58.8	1.2	2.4
전남	1,163	980	1,152	958	10	22	65.3	65.2	0.9	2.2
소계	2,392	2,456	2,357	2,386	33	70	-	-	1.4	2.9
전국	18,539	22,916	18,085	22,139	454	777	60.0	61.4	2.4	3.4

자료 : 통계청, 1990, 2003,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www.stat.go.kr

[표 5-3] 경제활동의 변화 (1993-2002년)

(단위: 개, 명, %)

	1993				2002			
	사업체수	구성비	종사자수	구성비	사업체수	구성비	종사자수	구성비
광주	62,723	2.7	281,795	2.3	93,161	3.0	416,398	2.9
전북	94,295	4.1	423,090	3.5	119,443	3.8	478,066	3.3
전남	104,035	4.5	423,014	3.5	128,517	4.1	495,961	3.4
소계	261,053	11.3	1,127,899	9.2	341,121	10.9	1,390,425	9.5
전국	2,304,250	100.0	12,245,073	100.0	3,131,963	100.0	14,608,322	100.0

자료 : 통계청, 1993,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1990년 초반부터 최근까지 호남의 경제 변화를 전체 산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변화를 통해 조사하였다(표 5-3). 1993년에 호남지역의 사업체수는 전국에서 11.3% 이었으나 2002년에는 10.9%로 약간 감소하였지만, 고용 측면에서는 그 비중은 1993년 9.2%에서 2002년에는 9.5%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고용비중이 사업체수에서의 비중보다 항상 낮은 것은 그만큼 타 지역에 비해 호남지역 내에 소규모 사업체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지역 내의 변화를 보면, 광주시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에서 그 비중이 증가하였고, 전북과 전남 각각의 비중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 감소하였다. 이는 광주에 비해 이들 두 지역의 경제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3) 산업별 및 직업별 취업자

전국적으로 산업별 취업자수의 분포를 보면 제조업, 부동산사업서비스, 도·소매업, 농림어업 등이 각기 10% 이상을 구성한다. 전국적으로 고용 규모가 큰 이들 산업은 호남에서도 각기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용 산업이지만, 이들 각각이 전체 고용에 기여하는 정도는 전국의 것과 완전히 다르다. 전국 고용에서 제조업은 2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이지만 호남에서는 농림어업이 총산업의 32.4%로 최대의 고용 비중을 차지하고, 제조업은 11.7%로 전국 제조업 비중인 21.3%의 절반을 겨우 상회한다. 이러한 결과는 전북과 전남의 농림어업 비중이 예외적으로 높고, 상대적으로 제조업은 이 두 지역에서 아주 취약

[표 5-4] 산업별 취업자수 (2000년)

(단위: 명, %)

산업별	광주		전북		전남		호남		전국
	종업원수	%	종업원수	%	종업원수	%	종업원수	%	%
농림어업	20,501	4.4	245,968	32.2	432,564	46.8	699,033	32.4	13.1
광업	571	0.1	1,072	0.1	2,000	0.2	3,643	0.2	0.1
제조업	73,695	15.7	99,739	13.1	79,450	8.6	252,884	11.7	21.3
전기가스수도사업	3,137	0.7	2,386	0.3	6,503	0.7	12,026	0.6	0.5
건설업	47,460	10.1	49,804	6.5	50,482	5.5	147,746	6.9	7.3
도 · 소매업	90,096	19.2	92,312	12.1	93,797	10.1	276,205	12.8	15.7
음식숙박업	37,394	8.0	47,550	6.2	51,121	5.5	136,065	6.3	7.5
운수창고	24,315	5.2	31,106	4.1	31,432	3.4	86,853	4.0	4.8
통신업	8,485	1.8	6,951	0.9	5,392	0.6	20,828	1.0	1.2
금융보험	23,060	4.9	25,518	3.3	24,297	2.6	72,875	3.4	3.7
부동산사업서비스	24,258	5.2	20,971	2.7	18,410	2.0	63,639	3.0	6.2
사회 및 개인서비스	90,992	19.4	139,612	18.3	92,995	10.1	323,599	15.0	18.6
기타	24,175	5.2	287	0.0	36,133	3.9	60,595	2.8	0.1
합계	468,139	100.0	763,276	100	924,576	100	2,155,991	100.0	100.0

자료 : 통계청, 2000, 경제활동인구연보.

한 고용구조를 보이기 때문이다.

1, 2차 산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수를 보면 역시 대도시인 광주에서는 69%가 이 부문에 해당되지만, 농촌 지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남지역은 전국 평균(57.8%)에 훨씬 못 미치는 38.2%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의 부동산 사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 부문의 고용 비중은 이 부문의 전국 비중에 훨씬 못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북 지역도 역시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47.6%가 서비스업에 취업하고 있으며, 오늘날 서비스 경제를 주도하는 대표적 부문에 속하는 통신업, 금융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등이 전국에 비해 열악함을 보이고 있다.

2000년에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10개의 직업 각각에 대한 2002년도 취업자수를 호남과 전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표 5-5). 전국 자료에 의하면 판매종사자와 사무종사자의 비율이 총취업자의 13.4%에 이르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서비스직, 기능직, 기계조작 · 조립직, 단순직이 따르고 있다. 10개의 직업 가운데 고위임직원 · 관리직이 가장 비중이 낮아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의사결정과 밀접히 연

[표 5-5] 직업별 취업자수 (2002년)

(단위: 천명, %)

	합계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전국	22,052	555	1,605	2,115	2,949	2,841	2,951	1,668	2,665	2,400	2,302
구성비	100.0	2.5	7.3	9.6	13.4	12.9	13.4	7.6	12.1	10.9	10.4
광주	611	12	50	58	83	86	94	27	68	70	63
구성비	100.0	2.0	8.2	9.5	13.6	14.1	15.4	4.4	11.1	11.5	10.3
전북	795	8	50	47	82	100	110	160	81	85	72
구성비	100.0	1.0	6.3	5.9	10.3	12.6	13.8	20.1	10.2	10.7	9.1
전남	983	14	32	44	73	111	134	322	93	83	77
구성비	100.0	1.4	3.3	4.5	7.4	11.3	13.6	32.8	9.5	8.4	7.8

자료 : 통계청, 2002, 경제활동인구연보.

관되는 이 직업 형태는 5차 산업이라 일컬어지면서 최근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적 기능으로 주목 받는 업종이다. 호남 내의 어느 지역도 이 유형의 직업비중이 전국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국 평균과 비슷하게 판매직, 서비스직, 사무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기계조작 · 조립직, 기능직이 각각 11.5%, 11.1%를 차지한다. 대도시 발달이 미약하고 농촌지역이 상당히 분포되어 있는 전북과 전남에서는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율이 20.1%와 3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문직 종사자들은 각각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전남은 전북에 비해 농림어업 종사자가 월등히 많고, 기능직과 서비스직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와 같이 사무직업 비중의 낮은 수준은 광주시가 분리된 이후 상대적으로 대도시 발달이 극히 취약한 전남지역의 성격을 분명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2. 지역경제의 특성

1)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2000년 이후 호남지역의 산업구조가 전국의 추세와 유사한지, 아니면 다른지를 살피기 위해 좀더 세분된 산업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조사하였다. [표 5-6]에서는 2002년 현재 전국에서 가장 큰 고용 비중을 갖고 있는 산업을 선두로 순서적으로 배열하고, 광주, 전북, 전남 지역에서 이들 산업의 비중을 비교하였다. 이 표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큰 고용 수준을 갖는 산업은 제조업이고, 이어서 도 ·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이 세 산업이 전체 고용의 절반을 넘고 있다. 호남에서는 광주, 전북, 전남 지역 모두에서 도 · 소매업이 제일 큰 고용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 많은 일자리를

[표 5-6] 전국대비 산업별 종사자수 (2002년)

(단위: 명, %)

	전국	구성비	광주	구성비	전북	구성비	전남	구성비
제조업	3,392,865	23.2	62,615	15.0	86,076	18.0	89,019	17.9
도매 및 소매업	2,615,733	17.9	82,320	19.8	88,044	18.4	89,680	18.1
숙박 및 음식점업	1,730,334	11.8	51,163	12.3	60,331	12.6	66,198	13.3
교육 서비스업	1,049,909	7.2	36,939	8.9	46,657	9.8	44,533	9.0
운수업	864,336	5.9	25,018	6.0	27,584	5.8	27,740	5.6
사업서비스업	857,183	5.9	21,250	5.1	12,289	2.6	13,986	2.8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772,969	5.3	25,322	6.1	31,976	6.7	34,191	6.9
건설업	700,262	4.8	31,276	7.5	23,603	4.9	23,946	4.8
금융 및 보험업	632,618	4.3	19,818	4.8	21,742	4.5	22,411	4.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28,627	3.6	17,790	4.3	22,776	4.8	20,117	4.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01,618	3.4	14,605	3.5	25,381	5.3	28,211	5.7
부동산 및 임대업	364,519	2.5	10,421	2.5	8,677	1.8	6,585	1.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32,326	2.3	10,375	2.5	11,094	2.3	10,478	2.1
통신업	150,776	1.0	5,721	1.4	6,660	1.4	5,552	1.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59,280	0.4	1,407	0.3	2,230	0.5	4,047	0.8
농업 및 임업	25,374	0.2	256	0.1	2,170	0.5	2,990	0.6
광업	20,405	0.1	102	0.0	735	0.2	3,686	0.7
어업	9,188	0.1	0	0.0	41	0.0	2,591	0.5
합계	14,608,322	100.0	416,398	100.0	478,066	100.0	495,961	100.0

자료 : 통계청,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제공하고 있지만, 이 세 산업의 합이 전체 고용의 절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국에서 4번째로 중요한 고용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 서비스업 부문은 호남에서도 같은 순위의 중요도를 갖지만,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국의 고용구조와 호남 각 지역의 고용구조가 뚜렷하게 다른 점은 사업서비스, 개인서비스, 공공행정, 건설업 등에서 발견된다. 대체로 사업서비스 산업은 호남지역에서는 약세를 보이지만,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 공공행정, 건설업 등이 전국에 비해 높은 고용 비중을 보인다는 점이다.

같은 방법으로 [표 5-7]에서는 사업체수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는 산업을 차례로 비교하였

[표 5-7] 전국대비 산업별 사업체수 (2002년)

(단위: 개, %)

	전국	구성비	광주	구성비	전북	구성비	전남	구성비
도매 및 소매업	898,874	28.7	26,887	28.9	36,364	30.4	40,234	31.3
숙박 및 음식점업	635,497	20.3	18,033	19.4	23,338	19.5	28,143	21.9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336,137	10.7	11,196	12.0	15,796	13.2	16,625	12.9
제조업	333,921	10.7	7,514	8.1	9,842	8.2	10,677	8.3
운수업	308,353	9.8	9,608	10.3	10,650	8.9	8,625	6.7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	117,511	3.8	4,257	4.6	4,612	3.9	4,509	3.5
교육 서비스업	113,009	3.6	4,078	4.4	5,310	4.4	4,960	3.9
부동산 및 임대업	102,303	3.3	2,563	2.8	2,554	2.1	2,040	1.6
사업서비스업	79,641	2.5	2,685	2.9	2,143	1.8	1,856	1.4
건설업	78,582	2.5	2,614	2.8	2,977	2.5	3,291	2.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6,053	2.1	1,916	2.1	2,797	2.3	2,622	2.0
금융 및 보험업	36,197	1.2	1,236	1.3	1,476	1.2	1,691	1.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024	0.4	256	0.3	817	0.7	1,174	0.9
통신업	8,106	0.3	276	0.3	405	0.3	516	0.4
광업	1,942	0.1	10	0.0	86	0.1	1,019	0.8
농업 및 임업	1,865	0.1	8	0.0	163	0.1	259	0.2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486	0.0	24	0.0	97	0.1	171	0.1
어업	462	0.0	0	0.0	16	0.0	105	0.1
합계	3,131,963	100.0	93,161	100.0	119,443	100.0	128,517	100.0

자료 : 통계청,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다. 가장 많은 사업체수를 보이는 산업은 도 · 소매업이고, 제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 이어 4번째 순위에 있다. 사업체수에서 전국순위 보다 낮은 호남지역의 산업은 대체로 제조업, 부동산 및 임대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 사업서비스업 등이었다. 반면에 호남지역에서 전국의 순위보다 높은 비중의 사업체수를 갖는 산업으로는 운수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이 포함

[표 5-8] 산업별 설립유형별 사업체수 (2002년)

(단위: 개)

	광주				전북				전남			
	단독 사업체	공장 지사	본사 본점	합계	단독 사업체	공장 지사	본사 본점	합계	단독 사업체	공장 지사	본사 본점	합계
농업 및 임업	8	0	0	8	154	9	0	163	248	6	3	259
어업	0	0	0	0	16	0	0	16	105	0	0	105
광업	8	1	1	10	82	4	0	86	1,009	9	1	1019
제조업	7,298	166	50	7,514	9,516	271	55	9,842	10,386	222	69	10,677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3	1	0	24	95	1	1	97	170	1	0	171
건설업	2,116	383	115	2,614	2,859	69	49	2,977	3,095	102	94	3,291
도매 및 소매업	25,748	1,063	76	26,887	35,569	765	30	36,364	39,515	661	58	40,234
숙박 및 음식점업	17,947	82	4	18,033	23,255	80	3	23,338	28,100	40	3	28,143
운수업	9,481	108	19	9,608	10,502	131	17	10,650	8,369	207	49	8,625
통신업	214	59	3	276	348	56	1	405	428	86	2	516
금융 및 보험업	611	616	9	1,236	883	589	4	1,476	1,123	566	2	1691
부동산 및 임대업	2,377	172	14	2,563	2,399	152	3	2,554	1,932	101	7	2,040
사업서비스업	2,425	229	31	2,685	2,047	84	12	2,143	1,727	111	18	1,85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56	0	0	256	817	0	0	817	1,174	0	0	1174
교육 서비스업	3,994	84	0	4,078	5,220	89	1	5,310	4,898	61	1	4,96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912	4	0	1,916	2,796	1	0	2,797	2,622	0	0	2,62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4,239	15	3	4,257	4,589	23	0	4,612	4,490	18	1	4,509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1,114	74	8	11,196	15,737	56	3	15,796	16,540	74	11	16,625
합계	89,771	3,057	333	88,654	116,884	2,380	179	119,443	125,931	2,265	319	128,517

자료 : 통계청,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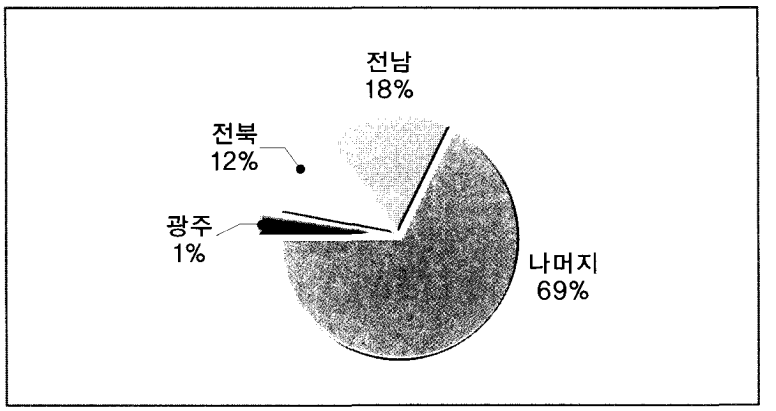
되었다. 제조업을 비롯하여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등이 호남에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각 산업의 구성비율이 전국의 평균과 비교하여 낮다는 점은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종사자수와 사업체수의 비중 순위에서의 차이는 평균 사업체의 크기 차이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종사자수에서 첫 번째 그룹에 있는 제조업이 사업체수에서는 네 번째 등급에 있는 것은 이 부문의 사업체들이 다른 부문의 사업체들보다 평균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도 · 소매업이 사업체수에서 최고인 것은 일반적으로 이 부문의 업체가 소규모라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표 5-8]은 사업체를 설립유형에 따라 단독사업체, 분공장 · 지사, 본사 · 본점으로 구분하여 지역경제의 자족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전남은 총사업체수가 128,517 개로 세 지역 가운데 가장 많으며, 이것은 단독사업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단독사업체는 소규모이며, 상당수가 영세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독사업체가 98%에 이르는 전남과 전북의 지역경제가 취약할 수 있다고 본다. 지역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본사 · 본점의 경우에 광주가 333개로 가장 많으며, 분공장 · 지사도 3,057개로 이곳에 가장 많이 설립되어 있다. 산업별로 사업체수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 지역 모두에서 사업체 규모가 적은 도 · 소매업이 가장 많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제조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단지 전남 지역의 제조업은 운수업보다 더 많은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산업별로 본사 · 본점이 많은 부문은 제조업, 건설업, 도 · 소매업이었고, 분공장 지사는 금융 및 보험업, 도 · 소매업이 압도적이었다.

2) 주요 산업별 특성

(1) 농림어업

호남지역은 농업에 적합한 넓은 평야를 갖은 지역으로 전국 농경지의 31% 정도를 차지하는 대표적 농업지역이다(그림 5-2). 지역 내에서 전남이 2000년에 332,351 ha로 가장 넓은 경지면적을 보유하며, 전북은 217,487 ha의 경지면적을 갖고 있다. 전국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농경지 면적이 감소되면서, 호남지역 역시 지난 10년 동안 전체적으로 농



〈그림 5-2〉 전국대비 농경지 면적 (2000년)

자료 : 통계청, 2000, 농업총조사보고서

[표 5-9] 농경지 면적의 변화 (1990-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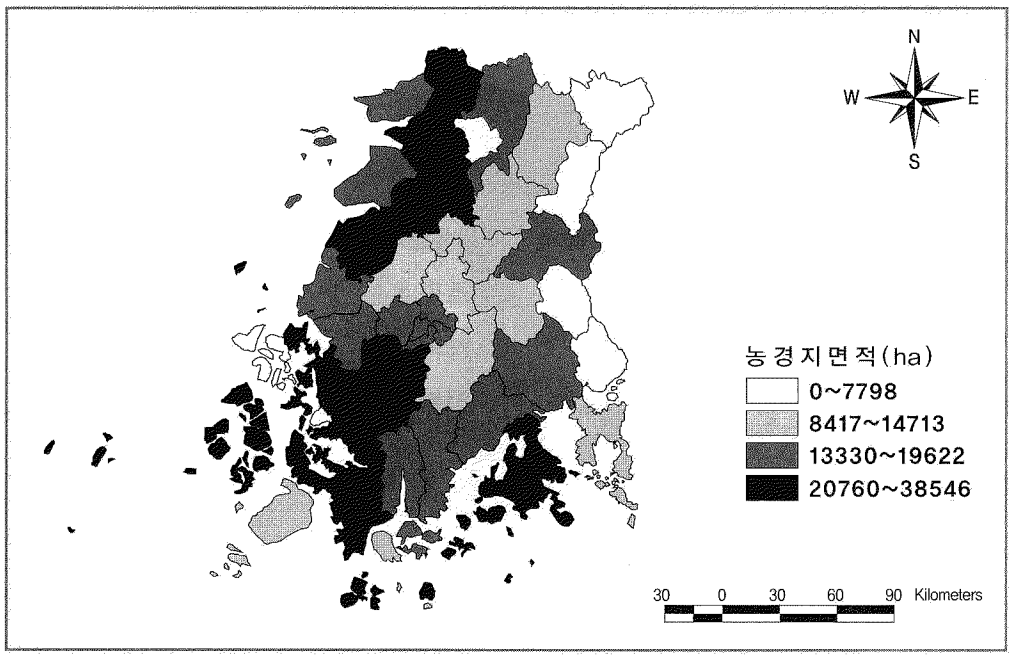
(단위: Ha, %)

	소계			논			밭		
	1990	2000	변화율	1990	2000	변화율	1990	2000	변화율
전국	2,108,812	1,888,765	-10.4	1,345,280	1,149,041	-14.6	763,532	739,724	-3.1
광주	17,922	14,081	-21.4	13,296	10,428	-21.6	4,626	3,653	-21.0
전북	240,610	217,487	-9.6	186,499	163,746	-12.2	54,111	53,741	-0.7
전남	330,741	332,351	0.5	215,323	222,326	3.3	115,418	110,025	-4.7

자료 : 통계청, 1990, 2000, 농업총조사보고서.

경지 면적이 상당히 줄어 들었다(표 5-9). 다만 전남지역의 논 면적이 예외적으로 증가되면서, 이 기간 동안에 전남은 오히려 경지면적이 증가되었다. 광주광역시는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도시외곽으로 인구가 확산되면서 경지면적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시 · 군별 경지면적을 비교해 보면, 최상위 그룹에는 전북에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고창군이 포함되고, 전남에서는 나주시, 영암군, 무안군, 해남군, 장흥군이 있다(그림 5-3). 가장 좁은 경지면적을 갖고 있는 그룹으로 전주시와 동부산간지역의 무주군, 장수군, 구례군, 광양시가 있다. 광주시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큰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도시가 성장하면서 주변의 농촌지역을 편입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농경지가 도시적 토지이용으로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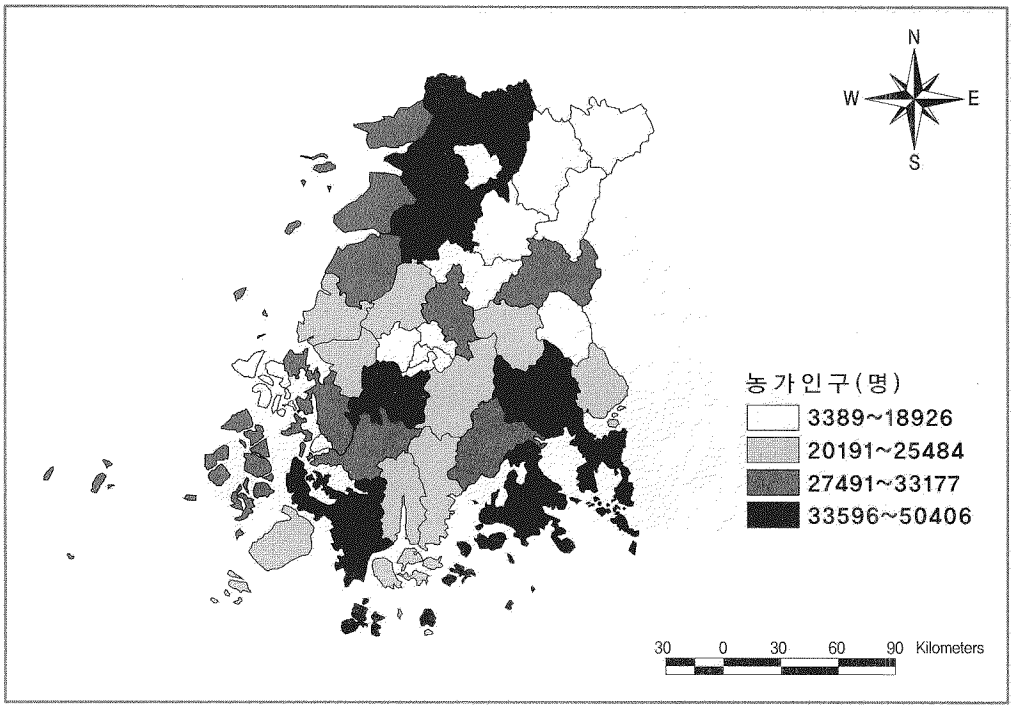


〈그림 5-3〉 시 · 군별 농경지면적 (2000년)

자료: 광주광역시, http://www.gwangju.go.kr/; 전라북도, http://stat.provin.jeonbuk.kr/; 전라남도, http://www.jeonnam.go.kr/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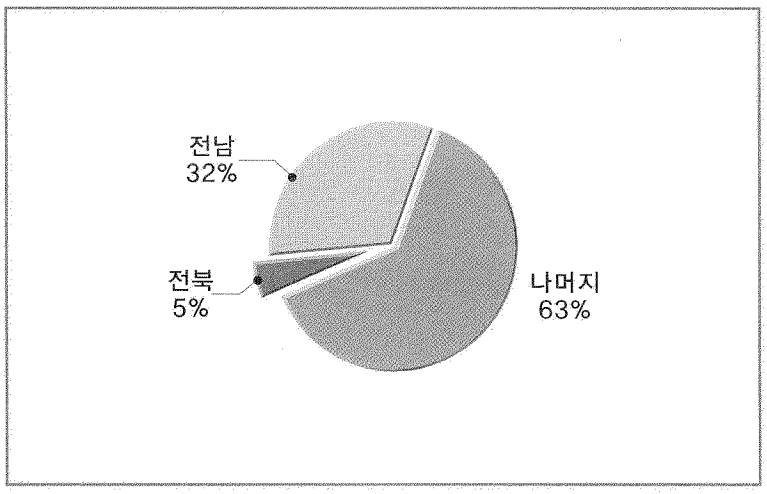
농업활동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척도로 농가인구를 뽑을 수 있다. 가장 큰 규모의 농가인구 수를 갖고 있는 시 · 군으로는 전북의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이 있고, 전남의 나주시,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해남군이 있다(그림 5-4). 일부 시 지역의 농가인구가 많은 것은 도 · 농 통합에 따라 발생된 현상이다. 한편, 가장 적은 규모의 농가인구는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구례군, 광주시에서 발견된다.

서해와 남해가 접하고 있는 호남은 수산업 발달에 유리한 지역으로 어업종사자수가 전남 32%, 전북 5%로 전국 어업인구의 37%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그림 5-5). 최근 연안어장이 남획과 공해로 인해 쇠퇴하고, 원양어업의 발달에 따른 수산업 대형화 추세로 전국의 어업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이 지역 역시 어업인구가 줄어들고 있다(표 5-10). 호남지역 전체로는 어업가구, 어가인구, 어업종사가구원 등 모두에서 전국 평균치보다도 더욱 심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쇠퇴를 주도하는 것은 전남으로 지난 10년 동안에 어가인구는 절반 이상이 감소하였다.



〈그림 5-4〉 시 · 군별 농가인구 (2000년)

자료 : 광주광역시, http://www.gwangju.go.kr/; 전라북도, http://stat.provin.jeonbuk.kr/;
전라남도, http://www.jeonnam.go.kr/statistics/



〈그림 5-5〉 전국대비 어업인구 (2000년)

자료 : 통계청, 2000, 어업총조사보고서

[표 5-10] 수산업 인구의 변화 (1990-2000년)

(단위: 개, 명, %)

	어업가구			어가인구			어업종사가구원		
	1990	2000	증가율	1990	2000	증가율	1990	2000	증가율
전북	5,623	4,275	-24.0	23,478	13,170	-43.9	10,263	7,557	-26.4
전남	45,566	26,936	-40.9	186,198	80,247	-56.9	91,110	51,605	-43.4
소계	51,189	31,211	-39.0	209,676	93,417	-55.4	101,373	59,162	-41.6
전국	121,525	81,571	-32.9	496,089	251,349	-49.3	211,753	139,837	-34.0

자료 : 통계청, 1990, 2000, 어업총조사보고서.

(2) 광업

호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광물로는 금, 은, 납석, 규석, 고령토, 석회석, 석탄, 장석, 활석, 사금, 규사, 명반석 등이 있다(표 5-11). 지역 내의 생산지를 보면 전남이 전북보다 다양한 광물 종류를 생산하고 있다. 이곳에서 가장 큰 생산량을 보이는 광물은 규석으로

[표 5-11] 호남지역의 주요 광물 생산 현황 (2002년)

(단위: M/T, %)

종류	생산량(M/T)	주요산지
금	347,460	완도(64.3), 해남(25.9), 나주(7.2), 진도(2.2), 신안(0.3)
은	402,893	화순(64.7), 강진(34.8), 해남(0.4), 순천(0.1)
납석	215,474	신안(31.5), 영암(24.6), 순천(17.5), 진도(9.3), 함평(5.1), 완도(4.6), 해남(3.8), 담양(2.2), 장성(0.6), 무안(0.5), 화순(0.4)
규석	553,500	장성(80.1), 무주(18.8), 화순(0.9), 장수(0.2)
고령토	325,506	화순(83.6), 김제(6.6), 광주(6.0), 고창(2.2), 정읍(1.1), 익산(0.5), 군산(0.1)
석회석	160,272	순천(54.9), 무주(44.1), 진안(0.7), 남원(0.3)
석탄	248,585	진도(65.8), 신안(26.4), 영광(7.8)
장석	4,312	남원(74.0), 해남(26.0)
활석	1,100	장수(100)
사금	2,800	김제(100)
규사	168	해남(100)
명반석	6,755	해남(100)

자료 : 전라북도, 2002, 전북통계연보; 전라남도, 2002, 전남통계연보.
주 : ( )안의 숫자는 생산량의 구성비율(%)로서 100은 이곳에서 모두 생산된다는 것이다.

[표 5-12] 광업의 현황 (1993-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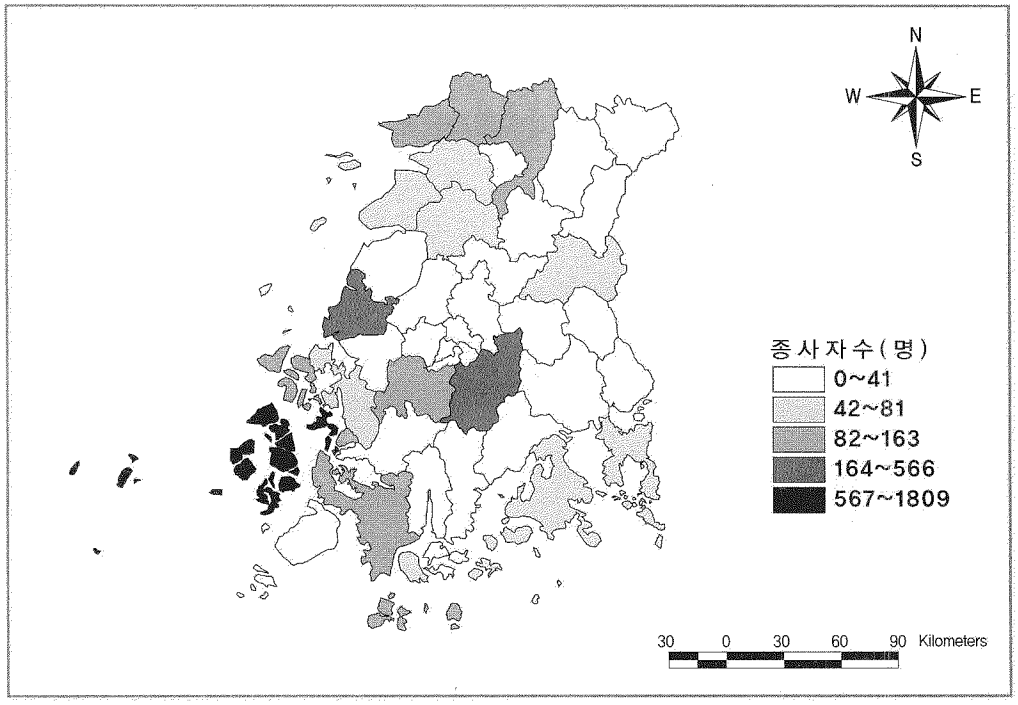
(단위: 개, 명, 백만원)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1993	2002	증감	1993	2002	증감	1993	2002	증감
광주	5	5	0	141	51	-90	19,611	8,253	-11,358
전북	106	56	-50	1,568	702	-866	72,476	75,321	2,845
전남	573	76	-497	6,376	1,585	-4,791	137,207	152,660	15,453
소계	684	137	-547	8,085	2,338	-5,747	229,294	236,234	6,940
전국	1,641	669	-972	45,481	16,399	-29,082	1,844,088	1,951,241	107,153

자료 : 통계청, 1993, 2002,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553,500M/T가 생산되며, 장성이 주요 산지이다. 금의 주요 산지는 완도, 해남이고, 사금은 김제에서 전량이 생산된다. 화순군에서는 은과 고령토가 가장 많이 생산된다.

전국적으로 광업은 쇠퇴하는 산업이며, 호남지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지난 10년간의



〈그림 5-6〉 광업 종사자수의 분포 (2002년)

자료 : 통계청,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광업 현황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표 5-12]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호남의 광업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서 크게 감소하였지만, 생산액에서는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전남의 광업은 급격한 쇠퇴를 겪어, 전국 사업체수 감소량의 절반 가량이 이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호남 종사자수 감소의 80% 이상이 여기서 발생하였다. 지역 내에서 광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시·군 지역은 신안군, 화순군, 영광군 이며, 목포시, 나주시, 해남군과 전북의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도 상대적으로 많은 광업 종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그림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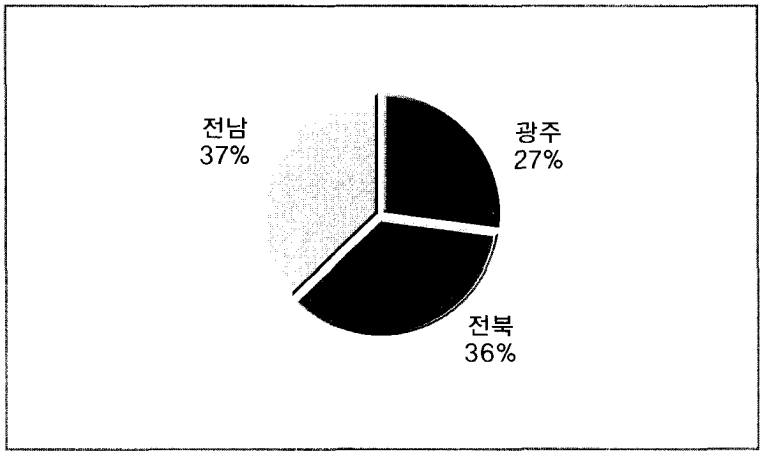
(3) 제조업

앞서 언급하였듯이 호남은 전통적으로 농업이 발달하고 공업활동이 취약한 지역이다. 최근의 제조업 활동과 인구 수준을 비교하여 보아도 이 지역의 공업발달이 미진함을 쉽게 알 수 있다. 2000년 현재 호남지역 인구가 523만 명으로 전국의 10%가 넘고 있지만, 제조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2002년 시점에서 각각 6,737개와 190,953명으로 전국의 6.1%와 7.1%에 불과하며, 단지 생산액이 10%에 이르고 있다(표 5-13). 이러한 제조업의 취약성은 지난 1993년부터 2002년 동안의 제조업 현황 변화를 조사하여도 확인된다. 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제조업 사업체수는 21,491개가 증가하여 연평균 2.7%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호남은 연평균 2.4%에 증가에 불과하고 이마저 광주시 제조업의 급속한 발달(7.3%)이 크게 기여하였다. 전북과 전남의 제조업 사업체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0.8%, 1.3%로

[표 5-13] 제조업의 변화 (1993-2002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1993	2002		연평균 증가율	1993	2002		연평균 증가율	1993	2002		연평균 증가율
		개	%			명	%			백만원	%	
광주	1,098	1,818	1.6	7.3	46,734	51,004	1.9	1.0	4,550,992	10,893,666	1.7	15.5
전북	2,147	2,302	2.1	0.8	74,453	69,795	2.6	-0.7	5,770,347	16,445,416	2.6	20.6
전남	2,342	2,617	2.4	1.3	73,646	70,154	2.6	-0.5	12,024,913	36,257,611	5.7	22.4
소계	5,587	6,737	6.1	2.3	194,833	190,953	7.1	-0.2	22,346,252	63,596,693	10.0	20.5
전국	88,865	110,356	100.0	2.7	2,885,414	2,695,911	100.0	-0.7	255,931,886	634,199,359	100.0	16.4

자료 : 통계청, 1993, 2002,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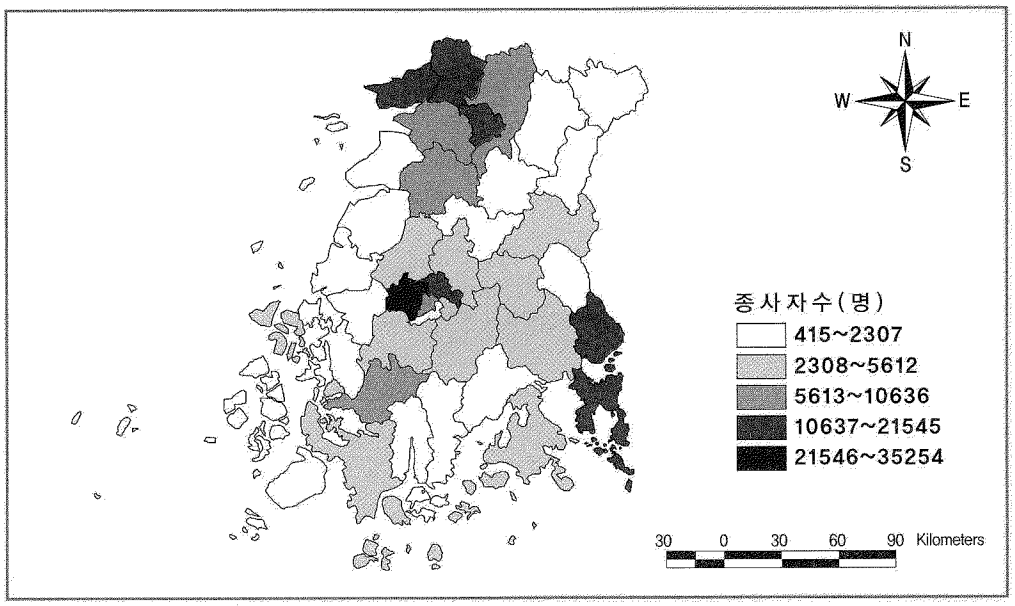
〈그림 5-7〉 지역 내의 제조업 분포 (2002년)

자료 : 통계청, 2002,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전국 증가율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사업체수와 생산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종사자수는 전국적으로 189,503명이 감소하였고, 호남도 전체적으로 3,880명이 감소하였다. 광주시 제조업 종사자수는 이 기간 동안에 4,270명이 증가하여 전북과 전남의 종사자수 감소 폭을 크게 완화 시켰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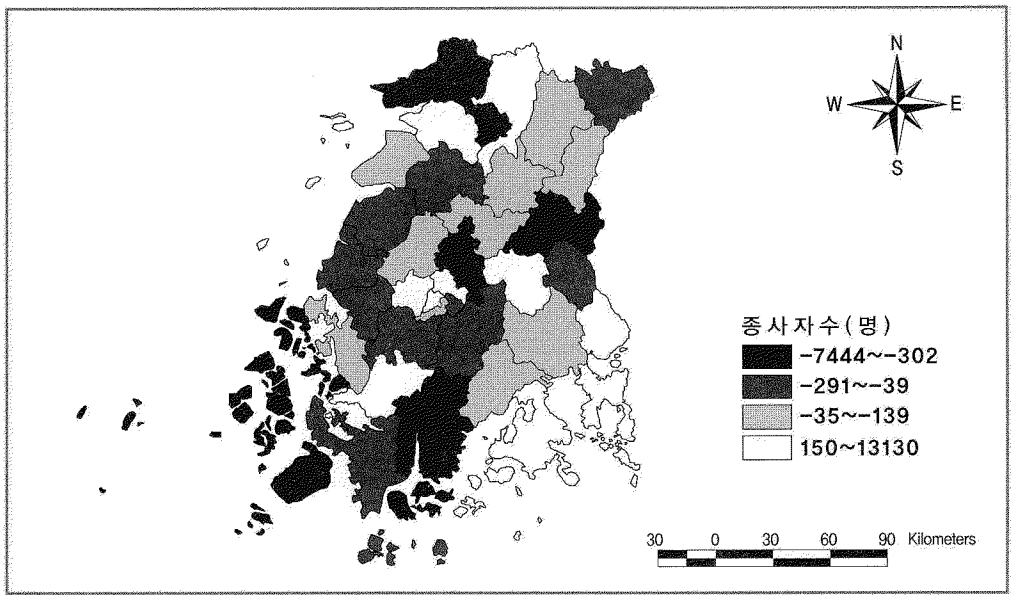
제조업의 지역별 분포를 종사자수 기준으로 보면 전남, 전북, 광주가 각각 37%, 36%, 27%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지만(그림 5-7), 각 지역 내의 분포는 고르지 못하였다. 2002년 제조업 종사자 규모에 따른 시 · 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시 광산구로 35,254명이 고용되어 있고, 이어서 광주시 북구, 전남에 광양시, 여수시, 전북에 익산시, 군산시, 전주시 각각에서 만 명 이상이 제조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그림 5-8). 제조업 활동이 미약한 곳은 서해안의 시 · 군과 전북 동부 산간의 군 지역, 전남 남해안의 군 지역 이었다.

제조업의 공간적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1996년부터 2002년 사이의 제조업 공간 분포의 변화를 조사하였다(그림 5-9). 이 기간 동안 가장 큰 감소를 경험한 시 · 군은 전북에서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남원시 등이었고, 전남에서는 목포시, 담양군, 완도군, 신안군, 강진군 등이 제조업 종사 인구의 감소를 겪었다. 이외의 다른 시 · 군은 적게나마 제조업 인구의 증가를 보였다.



〈그림 5-8〉 시·군별 제조업 종사자수 (2002년)

자료 : 통계청,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그림 5-9〉 시·군별 제조업 종사자수의 변화 (1996-2002년)

자료 : 통계청, 광주광역시, http://www.gwangju.go.kr/;
전라북도, http://stat.provin.jeonbuk.kr/; 전라남도, http://www.jeonnam.go.kr/statistics/.

제조업 고용구조의 성격은 제조업 내의 각 부문에서의 사업체수와 종업원수를 전국의 값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표 5-14, 5-15). 호남지역 전체 제조업 내에서 음 · 식료품업이 사

[표 5-14] 제조업 업종별 사업체수 (2002년)

(단위: 개, %)

제조업 중분류	광주		전북		전남		소계		전국	
	사업체수	구성비	사업체수	구성비	사업체수	구성비	사업체수	구성비	사업체수	구성비
음 · 식료품	143	7.9	420	18.2	1,121	42.8	1,684	25.0	7,550	6.8
담배	1	0.1	2	0.1		0.0	3	0.0	14	0.0
섬유제품	52	2.9	127	5.5	74	2.8	253	3.8	9,728	8.8
봉제의복및모피제품	61	3.4	247	10.7	12	0.5	320	4.7	9,509	8.6
가죽, 가방 및 신발	8	0.4	4	0.2	4	0.2	16	0.2	2,489	2.3
목재 및 나무제품	34	1.9	132	5.7	98	3.7	264	3.9	2,089	1.9
펄프,종이및종이제품	39	2.1	92	4.0	55	2.1	186	2.8	2,913	2.6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99	5.4	62	2.7	38	1.5	199	3.0	5,772	5.2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1	0.1	2	0.1	4	0.2	7	0.1	109	0.1
화학물 및 화학제품	31	1.7	127	5.5	123	4.7	281	4.2	3,620	3.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61	8.9	131	5.7	144	5.5	436	6.5	8,036	7.3
비금속광물제품	34	1.9	271	11.8	310	11.8	615	9.1	3,900	3.5
제 1차 금속산업	43	2.4	22	1.0	39	1.5	104	1.5	2,478	2.2
조립금속제품	290	16.0	147	6.4	200	7.6	637	9.5	12,674	11.5
기타 기계 및 장비	359	19.7	135	5.9	106	4.1	600	8.9	14,364	13.0
컴퓨터및사무용기기			5	0.2			5	0.1	770	0.7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60	8.8	56	2.4	40	1.5	256	3.8	5,769	5.2
영상,음향및통신장비	35	1.9	31	1.3	7	0.3	73	1.1	4,722	4.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42	2.3	20	0.9	14	0.5	76	1.1	2,679	2.4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1	5.6	136	5.9	17	0.6	254	3.8	3,534	3.2
기타 운송장비	2	0.1	9	0.4	131	5.0	142	2.1	1,205	1.1
가구 및 기타	99	5.4	111	4.8	60	2.3	270	4.0	5,998	5.4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23	1.3	14	0.6	20	0.8	57	0.8	434	0.4
합계	1818	100.0	2,303	100.0	2,617	100.0	6738.0	100.0	110,356	100.0

자료 : 통계청, 2002,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으로 그 비중은 전국 비중에 비해 아주 높다. 이러한 음 · 식료품업의 특화는 농업이 발달된 이 지역에서 당연한 결과일지

[표 5-15] 전국대비 호남지역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수 (2002년)

(단위: 명, %)

제조업 중분류	광주		전북		전남		소계		전국	
	종사자수	구성비	종사자수	구성비	종사자수	구성비	종사자수	구성비	종사자수	구성비
음 · 식료품	2,740	5.4	11,425	16.4	15,362	21.9	29,527	18.4	182,570	6.8
담배		0.0		0.0					3,140	0.1
섬유제품	2,386	4.7	5,193	7.4	2,147	3.1	9,726	6.1	201,822	7.5
봉제의복및모피제품	1,060	2.1	5,676	8.1	186	0.3	6,922	4.3	146,006	5.4
가죽, 가방 및 신발	55	0.1	90	0.1	124	0.2	269	0.2	43,568	1.6
목재 및 나무제품	363	0.7	1,675	2.4	963	1.4	3,001	1.9	27,526	1.0
펄프,종이및종이제품	575	1.1	3,385	4.8	1,025	1.5	4,985	3.1	59,889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1,929	3.8	1,027	1.5	400	0.6	3,356	2.1	100,163	3.7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 연료	0.0		0.0	1,278	1.8	1,278	0.8	10,121	0.4	
화학물및화학제품	272	0.5	5,923	8.5	10,766	15.3	16,961	10.6	136,995	5.1
고무및플라스틱제품	6,396	12.5	2,217	3.2	3,930	5.6	12,543	7.8	176,673	6.6
비금속광물제품	691	1.4	5,788	8.3	6,851	9.8	13,330	8.3	86,420	3.2
제 1차 금속산업	1,057	2.1	2,379	3.4	8,565	12.2	12,001	7.5	104,405	3.9
조립금속제품	3,876	7.6	2,520	3.6	3,404	4.9	9,800	6.1	198,744	7.4
기타 기계 및 장비	9,904	19.4	3,090	4.4	2,546	3.6	15,540	9.7	289,388	10.7
컴퓨터및사무용기기			187	0.3			187	0.1	42,049	1.6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3,786	7.4	1,359	1.9	782	1.1	5,927	3.7	144,229	5.3
영상,음향및통신장비	5,405	10.6	4,427	6.3	748	1.1	10,580	6.6	286,942	10.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515	1.0	501	0.7	397	0.6	1,413	0.9	47,533	1.8
자동차 및 트레일러	8,112	15.9	10,120	14.5	306	0.4	18,538	11.6	212,051	7.9
기타 운송장비		0.0	96	0.1	9,463	13.5	9,559	6.0	102,296	3.8
가구 및 기타	1,083	2.1	2,109	3.0	653	0.9	3,845	2.4	87,921	3.3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308	0.6	159	0.2	258	0.4	725	0.5	5,460	0.2
합계	51,004	100.0	69,812	100.0	70,154	100.0	160,486	100.0	2,695,911	100.0

자료 : 통계청, 2002,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모른다. 다만 전남에서 이 업종은 전남의 총사업체수의 42.8%를 차지하고, 전남의 제조업 총종사자수의 21.9%를 점하고 있어 전남 제조업 구조를 극히 편중되게 만들고 있다.

사업체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비금속광물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등이 전국 비중의 2배를 능가하여 이 지역의 특화 업종임을 보여 준다. 이외에도 사업체수에서 전국 비중을 능가하는 업종으로는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화학물 및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등이다. 특히 전북은 목재 및 나무제품과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화학물 및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업종에서 타지역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기타기계 및 장비, 조립금속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기타 전기기계 등으로 전북과 전남의 제조업 구조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를 보인다.

종사자수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는 업종은 음 · 식료품을 선두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화학물 및 화학제품, 비금속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 1차 금속산업 등이 순서적으로 나타나며, 이들 여섯 개 업종의 종사자수가 호남 제조업 총종사자의 65%에 이르고 있다(표 5-15). 이외에도 전국 비중을 능가하는 업종으로는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기타 운송장비,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등이 있다. 특히 전국 비중을 아주 능가하는 특화된 업종으로는 화학물 및 화학제품,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비금속광물제품, 제 1차 금속제품,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등이 있다. 광주시는 음 · 식료품 종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북, 전남과는 달리 기타 기계 및 장비 업종에 광주 총제조업의 19.4%를 차지하는 9,904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업이 광주의 제조업 고용 부분에서 주요한 업종이다. 전북에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음 · 식료품에 이어 가장 큰 고용 부문이다. 전남에서는 화학물 및 화학제품, 기타 운송장비, 제 1차 금속산업에서 가장 많은 종사자들이 일하고 있다.

제조업 업종별로 생산액을 살펴보면 생산성 측면에서의 업종 차이를 볼 수 있다(표 5-16). 생산액 구성에서 가장 높은 비중은 화학물 및 화학제품으로 전체 생산액의 24.1%를 차지하며, 이어서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가 14.5%, 제 1차 금속산업 부문이 13.1%로 이 세 업종의 합이 호남 제조업 총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부문의 종사자는 전체 고용의 0.8%에 불과하지만, 이 부문의 생산액은

14.5%에 이른다는 것은 이 부문의 높은 자본집약도를 짐작하게 한다. 지역별로 생산액을 보면, 광주시에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이

[표 5-16] 전국대비 제조업 업종별 생산액 (2002년)

(단위: 십억원, %)

제조업 중분류	광주		전북		전남		소계		전국	
	생산액	구성비	생산액	구성비	생산액	구성비	생산액	구성비	생산액	구성비
음 · 식료품	763.9	7.0	3,318	20.1	2,115	5.8	6,197	9.9	42,877	6.8
담배	-	-0	-	-	0	0.0	0	0.0	3,413	0.5
섬유제품	269.7	2.5	715	4.3	185	0.5	1,169	1.9	24,931	3.9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39.3	0.4	263	1.6	5	0.0	307	0.5	12,356	1.9
가죽, 가방 및 신발	1.1	0.0	9	0.1	3	0.0	14	0.0	5,643	0.9
목재 및 나무제품	47.5	0.4	355	2.2	84	0.2	487	0.8	3,696	0.6
펄프,종이및종이제품	104.2	1.0	1,213	7.4	257	0.7	1,574	2.5	14,217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113.7	1.0	46	0.3	17	0.0	177	0.3	12,235	1.9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 연료	0.0	0.0	0	0.0	9,090	25.1	9,090	14.5	34,892	5.5
화학물 및 화학제품	26.6	0.2	2,659	16.1	12,477	34.4	15,163	24.1	61,210	9.7
고무및플라스틱제품	1,166.7	10.7	303	1.8	787	2.2	2,256	3.6	27,221	4.3
비금속광물제품	103.3	0.9	1,276	7.7	1,505	4.2	2,884	4.6	20,607	3.2
제 1차 금속산업	361.0	3.3	865	5.2	6,986	19.3	8,212	13.1	49,947	7.9
조립금속제품	423.6	3.9	224	1.4	404	1.1	1,051	1.7	23,614	3.7
기타 기계 및 장비	2,653.0	24.4	375	2.3	305	0.8	3,334	5.3	49,506	7.8
컴퓨터및사무용기기	-	-	13	0.1	0	0.0	13	0.0	23,038	3.6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605.7	5.6	212	1.3	78	0.2	896	1.4	24,247	3.8
영상,음향및통신장비	705.6	6.5	557	3.4	270	0.7	1,532	2.4	89,770	14.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6.1	0.2	33	0.2	36	0.1	94	0.2	5,342	0.8
자동차 및 트레일러	2,740.2	25.2	3,558	21.6	216	0.6	6,515	10.4	70,415	11.1
기타 운송장비	0.0	0.0	18	0.1	1,377	3.8	1,395	2.2	24,418	3.9
가구 및 기타	123.7	1.1	264	1.6	45	0.1	433	0.7	9,666	1.5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51.7	0.5	14	0.1	17	0.0	83	0.1	937	0.1
합계	10,893.7	94.8	16,502	98.7	36,258	100.0	62,875	100.0	634,199	100.0

자료 : 통계청, 2002,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광주시 전체 생산액의 절반을 훨씬 상회한다. 전북에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음 · 식료품, 화학물 및 화학제품 등이 각기 15% 이상의 생산 비중을 차지한다. 전남에서는 화학물 및 화학제품,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두 업종의 합이 전남 제조업 총생산액의 60%에 이르고 있다.

(4) 상업 및 서비스업

상 업

상업은 경제활동의 주요 성분으로 서비스 산업에서 가장 높은 고용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약 30%가 도 · 소매업에서 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 · 소매업 활동은 도시지역, 특히 대도시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대형할인점과 같은 소매업 대형화가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호남의 도 · 소매업에서도 쉽게 발견되고 있다. [표 5-17]은 IMF 경제 위기 직전인 1997년부터 2002년 사이에 도 · 소매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건물연면적에서의 변화를 조사한 것이다. 이 기간동안 도 · 소매업 사업체수는 전국적으로 약간 감소(-0.9%) 하였지만, 대도시인 광주를 제외한 전북(-7.5%)과 전남(-8.0%)은 크게 감소하였다. 종사자수에서는 광주는 물론 전북과 전남도 증가하지만 광주시를 제외한 이 두 지역의 증가율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광주시의 종사자수는 82,320명으로 전북 88,044명, 전남 89,680명에 거의 육박하여, 현재의 증가율이 계속된다면 조만간 광주시에서 도 · 소매업에 활동하

[표 5-17] 전국대비 도 · 소매업의 변화 (1997-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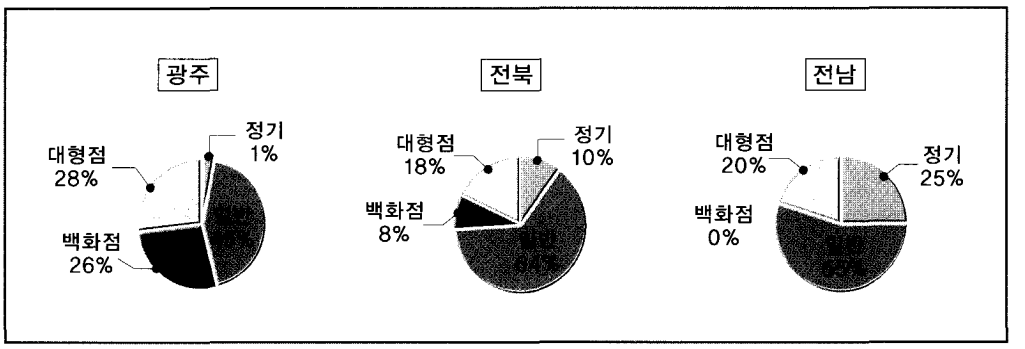
(단위: 개, 명, ㎡, %)

	사업체수			종사자수			건물연면적		
	1997	2002	증가율	1997	2002	증가율	1997	2002	증가율
광주	26,538	26,887	1.3	72,327	82,320	13.8	2,087,221	2,620,576	25.6
전북	39,312	36,364	-7.5	85,767	88,044	2.7	2,855,658	2,777,508	-2.7
전남	43,729	40,234	-8.0	88,214	89,680	1.7	2,965,323	3,089,189	4.2
소계	109,579	103,485	-5.6	246,308	260,044	5.6	7,908,202	8,487,273	7.3
전국	906,926	898,874	-0.9	2,341,284	2,615,733	11.7	74,659,183	80,931,675	8.4

자료 : 통계청, 1997, 2002, 도 · 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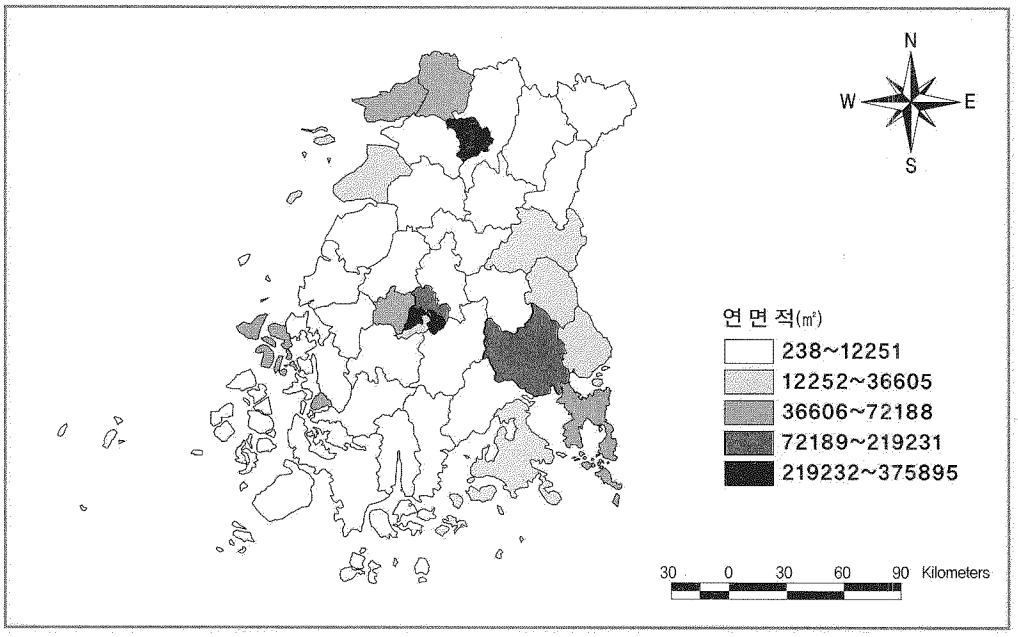
는 종사자가 가장 많아 질 것이다. 건물연면적에서도 대도시인 광주는 전국 증가율 8.4%를 크게 웃도는 25.6%에 이르지만, 전남은 4.2% 증가하고, 전북은 오히려 2.7% 줄어들었다.

최근 자동차 보급의 확대,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유통업체의 참여와 이에 따른 경쟁의 심화, 대형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소매기업의 대형화,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율에 따른 소비행태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바뀌면서 소매업 활동의 형태와 입지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소매 환경의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소매업 대형화에 따른 대형할인점과 같은 새로운 소매업 유형이 대도시 지역에서 출현 성장하면서 하위계층의 중소도시 지역에서는 이들이 쉽게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최하위 계층의 농촌지역에서는 과거 중요한 소매기능을 담당하였던 정기시장이 점차로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소매업 공간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 내의 소매업 분포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의 연면적을 조사 비교하였다(그림 5-10). 여기서 구분된 소매업 유형은 상설시장인 일반시장, 오일장과 같은 정기시장, 할인점과 같은 대형점, 그리고 고차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백화점 등 네 가지로 구분되었다. 〈그림 5-10〉에 따르면 대도시인 광주는 대형점과 백화점이 전체 소매업 면적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여 고차의 기능이 발달하고 있음을 보인다. 한편, 농촌지역이 많은 전북과 전남은 여전히 정기시장이 소매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직도 여전히 재래시장이 이 지역에서 주도적인 소매업 활동의 장소가 되고 있다. 또한 전남에서는 백화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은 교통의 발달로 전남지역의 소비자들이 고차의 재화를 구매하기 위해 가까운 광주까지 기꺼이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광주 백화점



〈그림 5-10〉 지역 내 소매업 구조 (2002년)

자료 : 통계청, 광주광역시, 2002, 광주통계연보; 전라북도, 2002, 전북통계연보 ; 전라남도, 2002, 전남통계연보.



〈그림 5-11〉 시 · 군별 소매업 활동의 분포 (2002년)

자료 : 통계청,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의 시장지역이 전남의 전지역에 이르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소매업의 시 · 군별 분포를 소매업 활동에 이용되는 건물연면적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소매업 공간구조가 도시의 공간구조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11). 광주의 서구와 동구, 전주시가 가장 큰 소매업 활동 면적을 보유하며, 이어서 광주 북구, 순천시, 여수시, 익산시, 군산시, 목포시 순으로 소매업 면적이 분포되어 있다. 전북 남원시와 부안군, 전남의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지역이 다음으로 높은 소매업 활동 면적을 갖고 있음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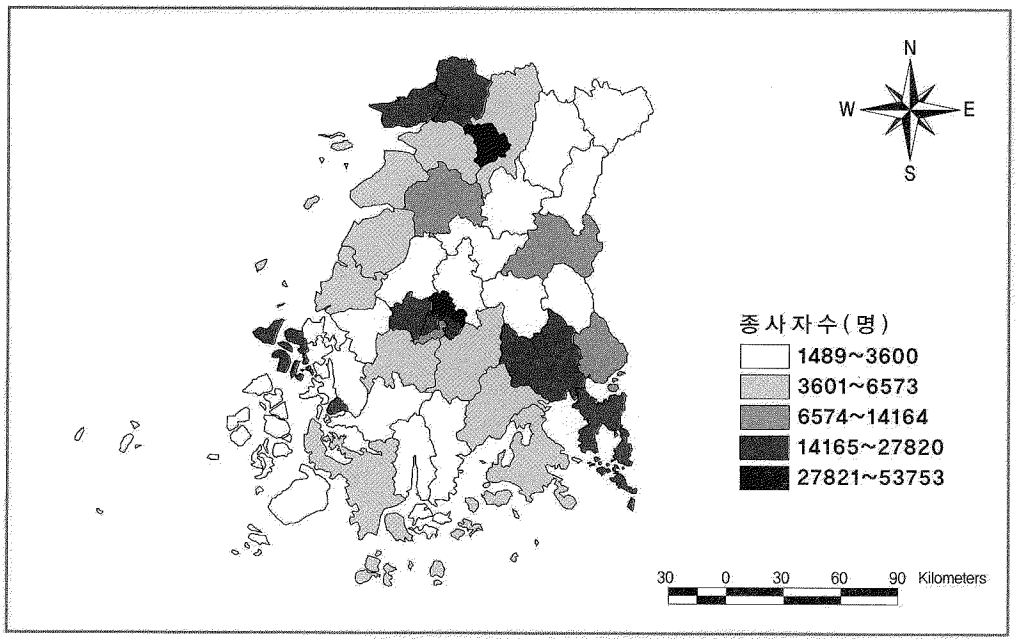
도 · 소매업과 더불어 전통적으로 상업활동을 대표하는 숙박 · 음식점업도 인구가 집중된 도시지역에서 발달한다. 1997년부터 2002년 사이에 호남의 숙박 · 음식점업의 변화를 보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서 전국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단지 건물연면적에서 전국의 증가율 17.4%보다 훨씬 높은 27.7% 성장을 보이고 있다(표 5-18). 광주는 숙박 · 음식점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전북은 사업체수의 증가율은 낮

[표 5-18] 전국대비 숙박 · 음식점업의 변화 (1997-2002년)

(단위: 개, 명, ㎡, %)

	사업체수			종사자수			건물연면적		
	1997	2002	증가율	1997	2002	증가율	1997	2002	증가율
광주	16,164	18,033	11.6	37,668	51,163	35.8	1,664,883	2,042,839	22.7
전북	22,749	23,338	2.6	53,817	60,331	12.1	2,608,510	3,403,937	30.5
전남	27,008	28,143	4.2	58,807	66,198	12.6	3,105,114	3,976,038	28.0
소계	65,921	69,514	5.5	150,292	177,692	18.2	7,378,507	9,422,814	27.7
전국	585,409	635,497	8.6	1,406,785	1,730,334	23.0	76,121,271	89,389,351	17.4

자료 : 통계청, 시 · 군 통계연보



〈그림 5-12〉 시 · 군별 상업 종사자의 분포 (2002년)

자료: 통계청,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지만 건물연면적에서 호남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도 · 소매업과 숙박 · 음식점업 종사자를 합한 상업 인구의 시 · 군별 분포를 보면 상업활동이 도시지역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지역에 최대로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12). 2002년 광주 북구와 전주시에 가장 큰 고용 규모가 분포하고, 이어서 광주

시내의 동구, 서구, 광산구, 전북의 익산시, 군산시, 전남의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등에 이들 상업활동이 집중되어 있다.

서비스업

전통적으로 서비스 산업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인구와 제조업 추세를 따르는 수동적인 부문으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지식과 정보가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면서 경제발전 과정에서 이것들을 적절히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다양한 서비스 유형 가운데 생산자 서비스로 분류되는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등은 생산활동의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업종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Daniels, 1991). 한편, 생산자 서비스 이외에도 소득 증대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요구와 인구 노령화에 따른 보건과 같은 서비스의 수요 증가 등도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서비스 산업의 성장은 선진 시장경제로 갈수록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들 선진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체 고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국가에서 서비스 산업의 생산액은 국내총생산의 절반을 훨씬 상회하면서 경제의 축이 공업에서 서비스로 탈바꿈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에 전국의 서비스업 종사자는 전체 고용에서 약 57.8% 이고, 국내총생산의 44.1%에 이르고 있다. 호남 경제에서도 서비스 산업은 가장 큰 고용 부문으로서 2000년 서비스 산업에서의 고용은 전체 고용에서 48.3%를 차지하고, 지역총생산에서는 38.1%에 이르고 있다.

호남의 서비스 산업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해 생산자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우선 생산자 서비스는 서비스 부문 안에서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업과 사업서비스업을 포함하였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호남지역의 생산자 서비스업의 증가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에서 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표 5-19). 이처럼 생산활동에 중요한 생산자 서비스업 발달의 열악함은 이 지역 생산활동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이 기간 동안 전북과 전남의 생산자 서비스는 사업체수에서 각각 9.5%와 8.2% 감소하였고 종사자수에서 10.5%와 0.2% 증가하였지만 전국 평균치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단지 광주만이 사업체수에서 약간 증가를 보이고, 종사자수에서는 전국 평균치를 초월

[표 5-19] 전국대비 생산자 서비스업의 변화 (1997-2002년)

(단위: 개, 명, ㎡, %)

	사업체수			종사자수			건물연면적		
	1997	2002	증가율	1997	2002	증가율	1997	2002	증가율
광주	4,765	5,174	8.6	22,450	31,211	39.0	332,350	619,638	86.4
전북	5,129	4,643	-9.5	18,484	20,431	10.5	281,207	347,391	23.5
전남	4,211	3,867	-8.2	20,145	20,179	0.2	276,425	302,419	9.4
소계	14,105	13,684	-3.0	61,079	71,821	17.6	889,982	1,269,448	42.6
전국	147,106	180,076	22.4	836,583	1,159,197	38.6	14,653,568	17,279,434	17.9

자료 : 통계청, 1997, 2002,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한 증가율을 보였다. 생산자 서비스에 이용되는 건물연면적은 광주에서 크게 증가하여 호남 지역 전체의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데 기여하였다. 호남의 생산자서비스업에서 종사자수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생산자 서비스업체의 평균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즉, 전국의 생산자 서비스 사업체의 평균 규모에 비해 열악한 이 지역의 사업체들이 점차로 전국 평균 규모에 이르고 있음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생산자 서비스의 시·군별 분포를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 의해 조사한 결과, 두 지도의 분포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였다(그림 5-13, 5-14). 생산자 서비스는 기대하였던 대로 광주 북구와 동구, 전주시에 집중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전남의 목포, 광주 서구, 순천시, 여수시, 전북의 군산시와 익산시 등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생산자 서비스의 발달이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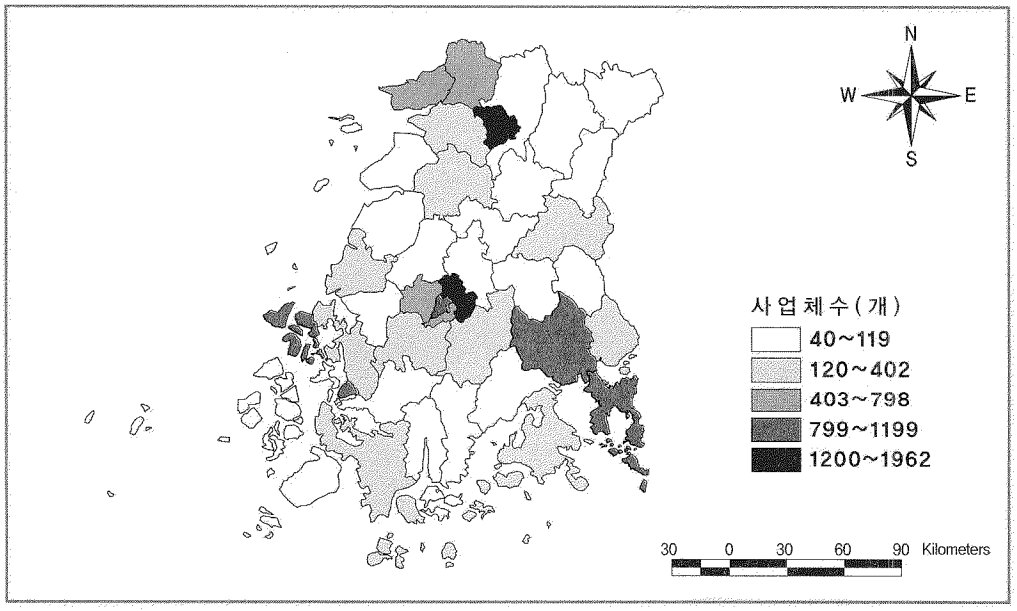
인구 추세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소비자 서비스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 교육,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을 포함하였다. 호남의 소비자 서비스업은 전국 추세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표 5-20). 이 지역의 소비자 서비스업은 사업체수, 종사자수, 건물연면적 모두에서 전국 평균치를 약간 밑도는 증가율을 보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물연면적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광주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서 가장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전북과 전남의 소비자 서비스업은 사업체수, 종사자수, 건물연면적 모두에서 증가하지만, 전남의 건물 연면적의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표 5-20] 전국대비 소비자 서비스업의 변화 (1997-2002년)

(단위: 개, 명, ㎡, %)

	사업체수			종사자수			건물연면적		
	1997	2002	증가율	1997	2002	증가율	1997	2002	증가율
광주	13,320	15,429	15.8	39,009	48,181	23.5	2,282,175	2,777,276	21.7
전북	17,305	18,656	7.8	48,220	55,701	15.5	3,010,056	3,677,896	22.2
전남	17,869	19,010	6.4	47,414	54,585	15.1	3,346,809	4,793,752	43.2
소계	48,494	53,095	9.5	134,643	158,467	17.7	8,639,040	11,248,924	30.2
전국	388,246	444,806	14.6	1,160,280	1,428,359	23.1	71,947,003	94,813,000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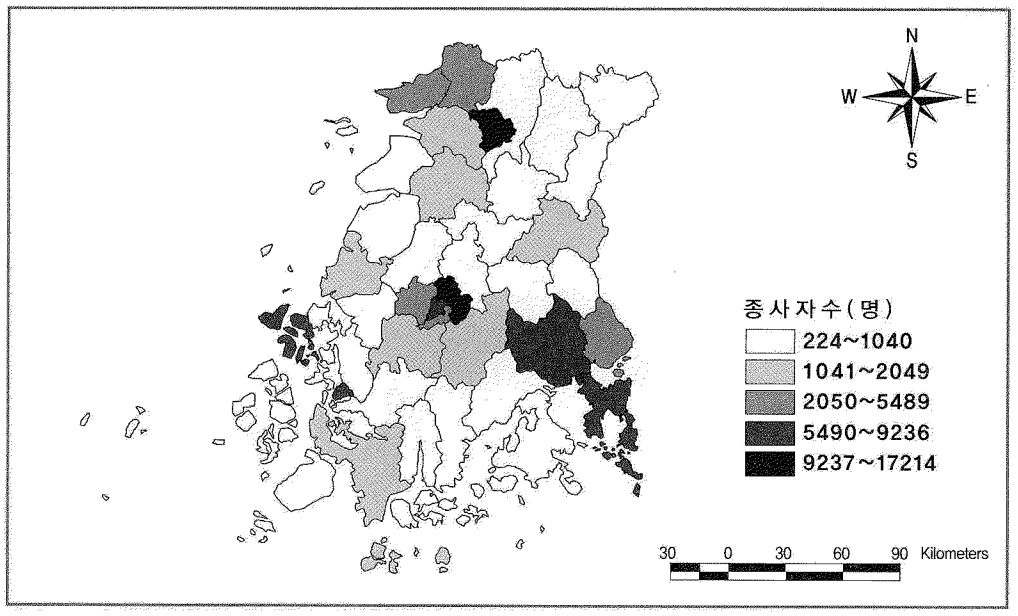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1997, 2002,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그림 5-13〉 시·군별 생산자서비스 업체의 분포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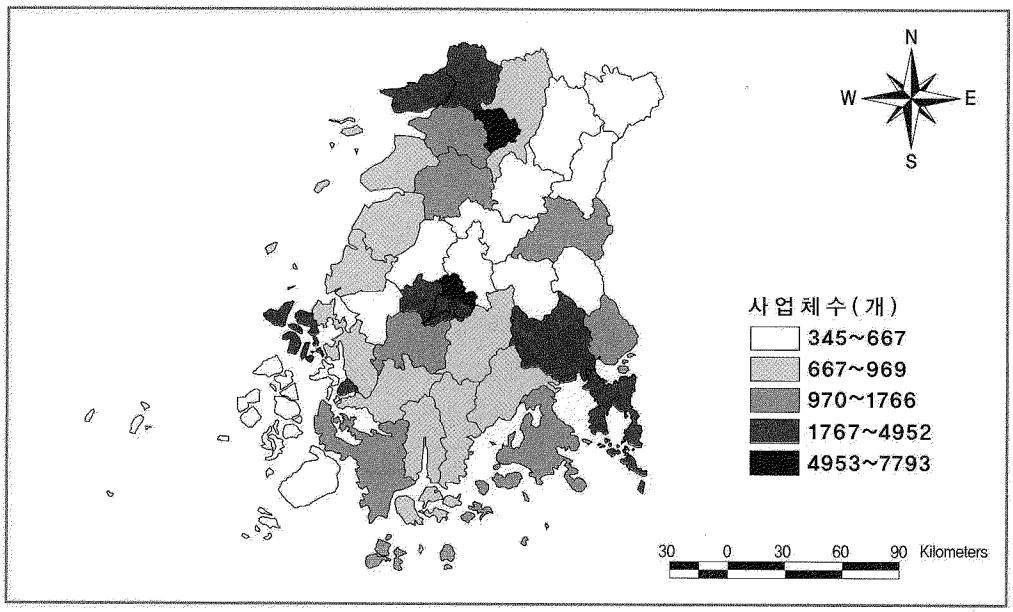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필자조사.

소비자 서비스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 대한 시·군별 분포를 보이는 〈그림 5-15〉와 〈그림 5-16〉의 두 지도의 분포 패턴도 생산자 서비스의 경우처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소비자 서비스 역시 광주와 전주시를 중심으로 도시지역에 발달하고 있지만, 생산자 서비스의 분포에 비해 호남 전지역에 고르게 분포되고 있다. 단지 인구가 희박한 군지역에 소비자 서비스의 활동이 미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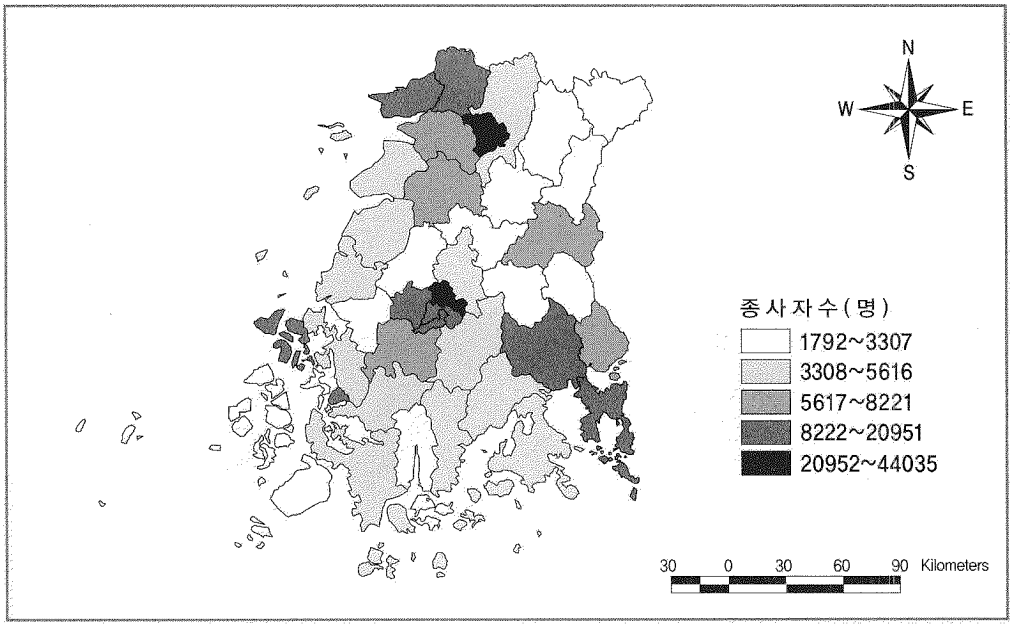
〈그림 5-14〉 시 · 군별 생산자서비스 종사자의 분포 (2002년)

자료 : 통계청,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필자조사.



〈그림 5-15〉 시 · 군별 소비자서비스 업체의 분포 (2002년)

자료 : 통계청,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필자조사.



〈그림 5-16〉 시 · 군별 소비자서비스 종사자의 분포 (2002년)

자료 : 통계청,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필자조사.

3. 신산업의 발달

1) 산업단지의 발달

전통적으로 농업 경제가 중심이었던 호남지역에 대단위 산업단지 개발이 시작된 것은 70년 초부터라 볼 수 있다. 비록 전주지방산업단지와 여수국가산업단지가 60년대 말에 지정되어 개발되기 시작했지만, 단지 조성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생산활동이 시작한 것은 70년대부터 이다. 1973년 호남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서울지역과의 연결망이 개선되면서 전북에 이리수출자유지역과 이리지방산업단지가 지정 개발되었고, 전남에는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증설되었다. 이때부터 호남에도 공업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 산업단지가 생산활동을 시작한 것은 70년대 후반 여수국가산업단지가 대규모로 건설되고, 광주와 군산에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백영

기, 2003; 이정록, 2002). 하지만 70년대 후반까지 호남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은 수도권과 영남권에 비해 극히 열악하였고, 결과적으로 국토발달의 심각한 불균형에 따른 균형적 발전정책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서 80년대 이르러 다양한 유형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이 지역에서 조성되었다. 또한, 1980년대에 농촌지역에서는 농공단지의 개발이 행정의 실적주의와 지역주민들의 경쟁의식을 토대로 각 행정구역마다 한 개 이상의 단지들이 조성되게 되었다. 90년대 들어와서도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4년 현재 호남에는 국가산업단지 10개, 지방산업단지 24개, 농공단지 73개가 입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조성이 완료되었다. 이들 산업단지 수를 지역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전국의 산업단지 수와 비교하면, 국가산업단지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지방산업단지는 다른 유형에 비해 그 비중이 극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21). 산업단지 조성 면적 규모로 보면, 단지 유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국가산업단지의 비중이 전국의 39.5%로 비교적 높은 반면,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전국 비중은 각기 27.6%, 2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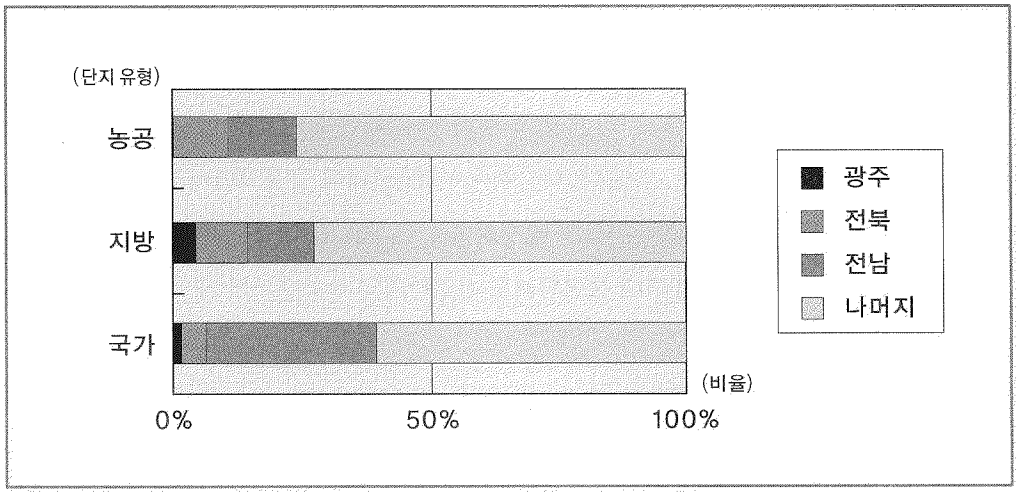
〈표 5-21〉 전국대비 산업단지 현황 (2004년)

(단위: 개, 천, ㎡, %)

	단지수						면적					
	광주	전북	전남	소계	(%)	전국	광주	전북	전남	소계	(%)	전국
국가	2	3	5	10	(28.6)	35	3,664	21,438	138,392	163,494	(39.5)	414,126
지방	5	10	9	24	(13.6)	176	9,361	20,240	28,390	57,991	(27.6)	210,395
농공	1	37	35	73	(22.9)	319	324	4,537	6,237	11,098	(24.0)	46,160
합계	8	50	49	107	(20.2)	530	13,349	46,215	173,019	232,583	(34.7)	670,681

자료 : 산업자원부, 2004,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 지역 국가산업단지의 면적 비중이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전남의 광양과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규모가 예외적으로 크기 때문이다(그림 5-17). 지방산업단지의 면적 규모도 전남이 가장 크며 전북과 광주 순으로 이어지며, 농공단지의 면적은 전남과 전북 두 지역이 거의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림 5-17〉 전국대비 산업단지 면적 (2004년)

2) 산업단지의 현황

산업단지의 유형별로 사업체수, 종업원수, 생산액, 수출액 등을 전국의 산업단지 규모와 비교하여 이 지역 산업단지의 실태를 조사하였다(표 5-22, 5-23). 이들 표에 따르면 사업체수, 종업원수, 생산액, 수출액 등에서 호남 산업단지의 전국에서의 비중은 면적 비중에 훨씬 못 미쳐 효율성이 극히 낮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는 사업체수, 종업원수가 면적 규모에 비해 극히 낮아 이제 겨우 조성되고 있는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사업체수에 비해 고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이 곳 국가산업단지 내에 비교적 규모가 큰 공장이 가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업체수와 종업원수에서 지방산업단지의 전국 비중은 각각 17.6%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생산액과 수출액에서의 전국 비중이 약간 높게 나타나서 비교적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농공단지는 사업체수의 전국 비중이 높은 반면, 종업원수, 생산액, 수출액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아 비교적 소규모의 생산조직이 이 곳에 입지하고 있음을 보인다.

호남의 산업단지의 발달이 면적 규모에 비해 내실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2004년 이들 단지 내의 공장 휴 · 폐업율을 파악하여 좀더 알 수 있다(그림 5-18). 세 단지 유형 모두 전국

[표 5-22] 전국대비 산업단지의 사업체 및 고용 현황 (2004년)

(단위: 개, 명)

	사업체수						종업원수					
	광주	전북	전남	소계	(%)	전국	광주	전북	전남	소계	(%)	전국
국가	150	202	273	625	(3.6)	17,604	6,481	9,840	26,290	42,611	(7.1)	601,374
지방	1,084	450	147	1,681	(17.6)	9,534	29,407	26,151	10,356	65,914	(17.6)	374,826
농공	40	394	605	1,039	(27.2)	3,826	1,400	9,531	12,469	23,400	(20.9)	112,162
소계	1,274	1,046	1,025	3,345	(10.8)	30,964	37,288	45,522	49,115	131,925	(12.1)	1,088,362

자료 : 산업자원부, 2004,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한국산업단지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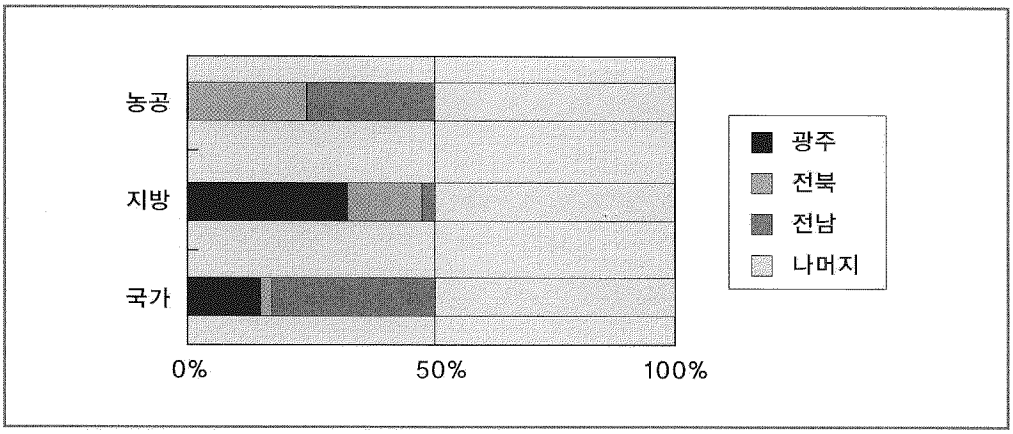
[표 5-23] 전국대비 산업단지의 생산액 및 수출액 현황 (2004년)

(단위: 억원, 백만불)

	생산액						수출액					
	광주	전북	전남	소계	(%)	전국	광주	전북	전남	소계	(%)	전국
국가	14,321	15,820	181,535	211,676	(16.4)	1,286,834	947	788	5,387	7,122	(12.4)	57,402
지방	33,709	49,432	18,671	101,812	(20.8)	488,368	1,009	1,789	722	3,520	(18.6)	18,914
농공	988	8,630	8,228	17,846	(16.0)	111,234	8	228	233	469	(19.0)	2,474
소계	49,018	73,882	208,434	331,334	(17.6)	1,886,436	1,964	2,805	6,342	11,111	(14.1)	78,790

자료 : 산업자원부, 2004,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한국산업단지공단.

에서의 휴·폐업율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특히 광주의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에서의 휴·폐업율은 이례적으로 높으며, 전남의 지방산업단지도 극히 불안정한 상황에 있음을 보인다. 이 지역 농공단지의 가동율은 면적 비중에 비해 절반에 이루고 있고 가장 부실한 실태임이 파악되었다. 산업단지가 호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산업단지 유형별 고용규모와 사업체수에 의한 특징을 전체 제조업과 비교하였다(표 5-24). 이 비교조사는 개별 산업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수집되기 시작한 1993년과 최근 2002년의 자료에 기초하였다. 1993년 호남의 산업단지는 사업체수에서는 전체 제조업체수의 35.1%를 차지하지만 고용면에서는 56.4%로 제조업 내에서 산업단지의 중요성이 확실하게 보인다. 단지 유형별로는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종사자들이 전체 고용의 20%를 약간 상회하고, 국가산업단지의 고용은 15.3%에 이르고 있다. 2002년에는 사업체수와 고용 면 모두에서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 전체 산업단지의 비중이 사업체수에서는 49.2%, 고용 면에서는 65%로 증가하였다. 이는 새로운 투자가 계획 입지인 이들 산업단지



〈그림 5-18〉 전국대비 산업단지 휴 · 폐업율(2004년)

자료 : 산업자원부, 2004,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한국산업단지공단.

[표 5-24] 산업단지의 변화 (1993-2002년)

(단위: 개, 명, %)

단지유형	1993					2002				
	사업체수	%	종업원수	%	사업체 평균규모	사업체수	%	종업원수	%	사업체 평균규모
국가	266	5.9	22,602	15.3	85.0	601	12.2	35,343	25.3	58.8
지방	451	10.0	30,445	20.6	67.5	616	12.5	34,242	24.5	55.6
농공	857	19.1	30,432	20.5	35.5	1,201	24.4	21,380	15.3	17.8
소계	1,574	35.1	83,479	56.4	53.0	2,418	49.2	90,965	65.0	37.6
총제조업	4,489	100.0	148,099	100.0	33.0	4,919	100.0	139,949	100.0	28.5

자료 : 전라북도, 2002, 전북통계연보; 전라남도, 2002, 전남통계연보.
주 : 광주 산업단지에 대한 1993년 자료 미비로 광주의 산업단지는 제외하였음.

를 선호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사업체 평균 규모에서 농공단지를 제외한 산업단지 내의 사업체 규모가 전체 평균 규모보다 훨씬 커서 산업단지 내의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는 점을 보인다. 이것은 대단위 산업단지 내의 대규모 공장들이나 업체들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업체의 평균 규모가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포스트포디즘에서 주장하는 생산의 유연성이 조직변화에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공간적 특징

호남에 조성되었거나 될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시 · 군 · 구별 현황을 보여 주는 것이 [표 5-25] 이다. 이 표에 의하면 생산 단지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전북 군산시(6곳), 광주의 광산구(5곳), 전남의 여수시(5곳), 영암군(5곳)으로, 이들 각 시 · 군은 대단위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를 적어도 3개 이상을 갖고 있다. 이들 지역을 포함하여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분포를 보면, 주요 산업단지가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집중되어 발

[표 5-25]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 (2004년)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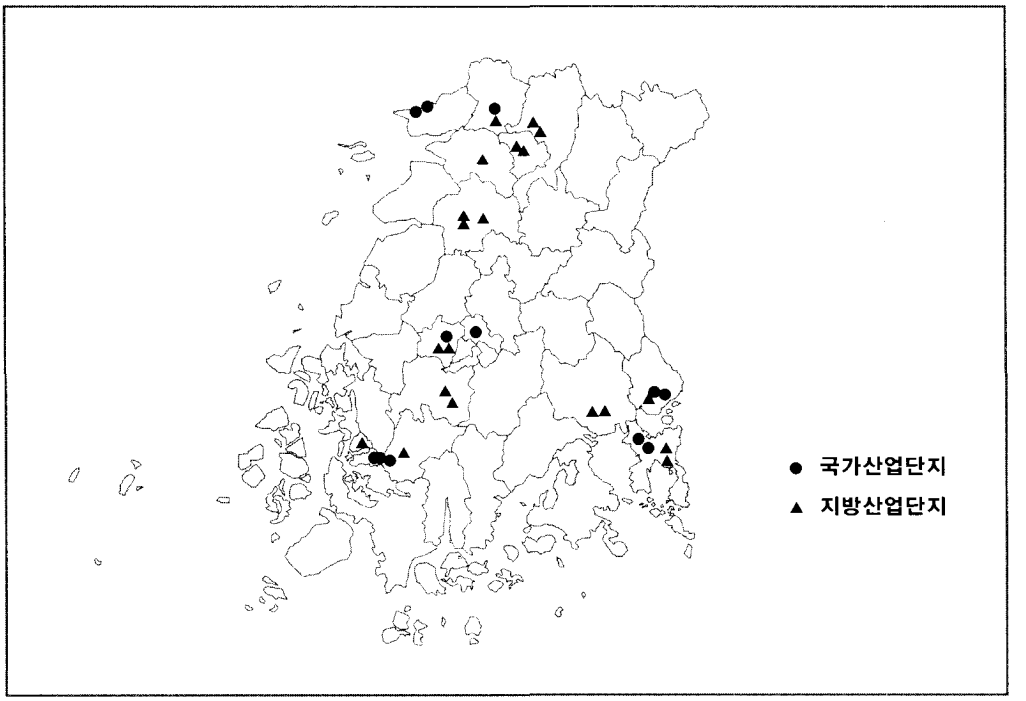
지역	계	국가산단	지방산단	농공단지	지역	계	국가산단	지방산단	농공단지
광주	8	2	5	1	전남	49	5	9	35
동구					목포시	2		1	1
서구					여수시	5	1	3	1
남구	1		1		순천시	3		2	1
북구	2	1	1		나주시	5		2	3
광산구	5	1	3	1	광양시	2	2		
전북	50	3	10	37	강진군	1			1
전주시	2		2		고흥군	1			1
군산시	6	2	1	3	곡성군	3			3
익산시	5	1	1	3	구례군	1			1
정읍시	8		3	5	담양군	2			2
남원시	5			5	무안군	3			3
김제시	7		1	6	보성군	2			2
완주군	3		2	1	영광군	1			1
진안군	2			2	영암군	5	2	1	2
무주군	1			1	완도군	2			2
장수군	2			2	장성군	2			2
임실군	3			3	장흥군	1			1
순창군	2			2	진도군	1			1
고창군	2			2	함평군	2			2
부안군	2			2	해남군	1			1
					화순군	4			4

자료 : 산업자원부, 2004, 한국산업단지공단, http://kicox.or.kr/
주 : 이 표에는 현재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포함하였다.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19). 광주시, 전북은 군산시 주변의 익산시와 전주시, 여수시 주변의 광양시와 순천시, 영암군과 목포시 등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네 지역이 호남의 생산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곳이다.

생산활동을 주도하는 대단위 산업단지 내의 주요 업종을 조사하여, 이 지역 생산활동의 현황과 미래를 조망하고자 하였다(표 5-26). 광주시 지역에서 광산구는 조립금속, 석유화학, 비금속, 음·식료품이 주요 업종이고, 북구를 중심으로는 전기전자, 기계, 음·식료품 업종이 성장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군산시에 자동차, 비금속, 1차금속, 음·식료품, 화학제품 등이 주요 업종으로 성장하고 있고, 특히 군산국가산업단지에는 GM대우를 중심으로 많은 협력업체들이 주변에 입지하고 있다. 익산시에는 섬유와 보석가공이 수출자유지역의 주요 업종이고, 자동차 부문이 지방산업단지를 대표하고 있다. 전주시에는 섬유, 기타기계, 펄프 화학제품 등이 주



〈그림 5-19〉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의 분포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http://www.esandan.net/;필자조사

요 업종이지만 이 가운데 섬유와 펄프는 최근 쇠퇴하는 부문이다. 전주시에 인접한 완주군의 전주 제 3산업단지에는 자동차, 화학제품, 조립금속 등이 주요 업종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남 여수시에서는 석유화학과 자원비축, 음 · 식료품, 조립금속 등이 대표적 업종이고, 광양시에는 1차금속, 비금속, 조립금속 등이 대표되는 업종이다. 목포시와 영암군 지역에는 선박건조, 기계, 운송장비, 비금속, 석유화학, 음 · 식료품 등이 주요 업종이다.

〈표 5-26〉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의 주요 업종

시 · 도명	산업단지명	대표 업종	주요 업종
광주	광주첨단과학	전기전자	기계
	본촌 지방	음 · 식료품	조립금속, 전기전자
	소촌 지방	조립금속	
	평동 지방	조립금속	비금속, 음 · 식료품
	하남 지방	조립금속	석유화학전북
전북	군산 국가	자동차	
	익산 수출	섬유, 기타기계	기타 전기기계
	전주 제1지방	섬유	펄프, 화학제품
	전주 제2 지방	기타 기계	펄프, 화학제품, 기타 전기기계
	전주 제3 지방	자동차	화학제품, 조립금속
	군산 지방	비금속, 1차금속	음 · 식료품, 화학제품
	익산 제2 지방	자동차	섬유, 화학제품, 조립금속, 전자통신
	정읍 제1 지방	의료, 목재	음 · 식료품
	정읍 제2 지방	기타기계, 음 · 식료품	섬유, 조립금속
	정읍 제3 지방	펄프, 기타기계	자동차, 화학제품 전남
전남	광양제철 국가	1차금속, 비금속	
	대불 국가	기계, 운송장비	비금속, 석유화학, 음 · 식료품
	삼일자원비축 국가	자원비축	
	여수 국가	석유화학	
	초남 지방	1차금속, 조립금속	
	나주 문평 지방	석유화학	섬유의복
	순천 지방	1차금속, 조립금속	
	여수 오천 지방	음 · 식료품	
	영암 삼호 지방	선박건조	
	율촌 지방	조립금속	

자료 : 전라북도, 2002, 전북통계연보; 전라남도, 2002, 전남통계연보; 한국산업단지공단, http://www.esandan.net/; 필자 정리.
주 : 대표업종은 단지 전체의 종업원 수 가운데1/4 이상인 업종, 주요업종은 단지 전체의 종업원 수 가운데10% 이상인 업종

빈 면



제6장
전라지방 – 교통·통신체계의 발달

이상석 (순천대학교)

빈 면

제6장 교통 · 통신체계의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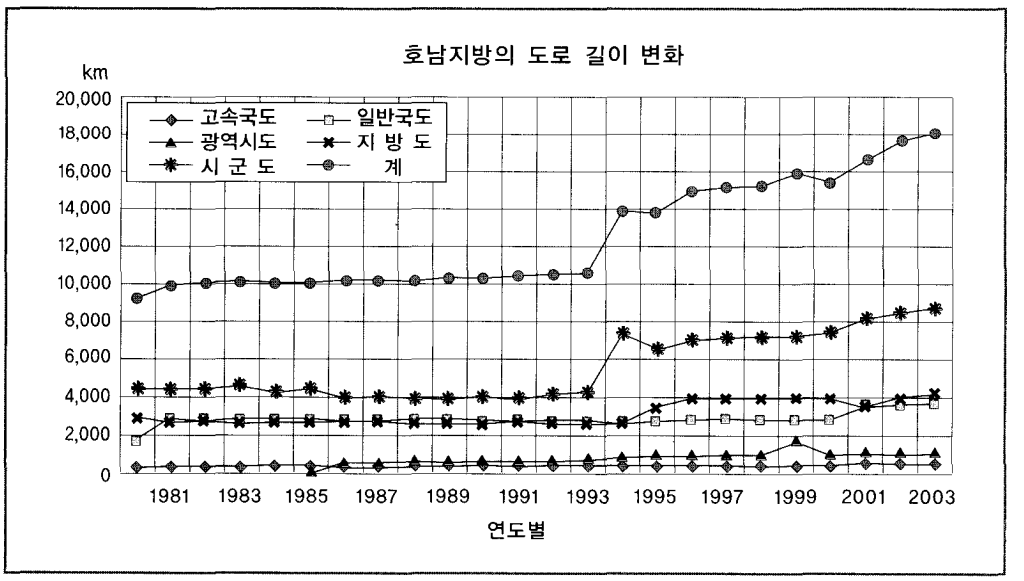
1. 교통

1) 육상교통로의 확충과 교통유동

(1) 자동차교통

도로망의 발달

최근 들어 첨단 신기술을 응용한 각종 고속 교통수단이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로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 여러 지역간을 상호 연결함으로써 인적 · 물적 교류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통로로서 역할을 꾸준히 담당해왔다.



〈그림 6-1〉 호남지방 도로 길이의 변화(1980~2003)

자료 : http://kosis.ns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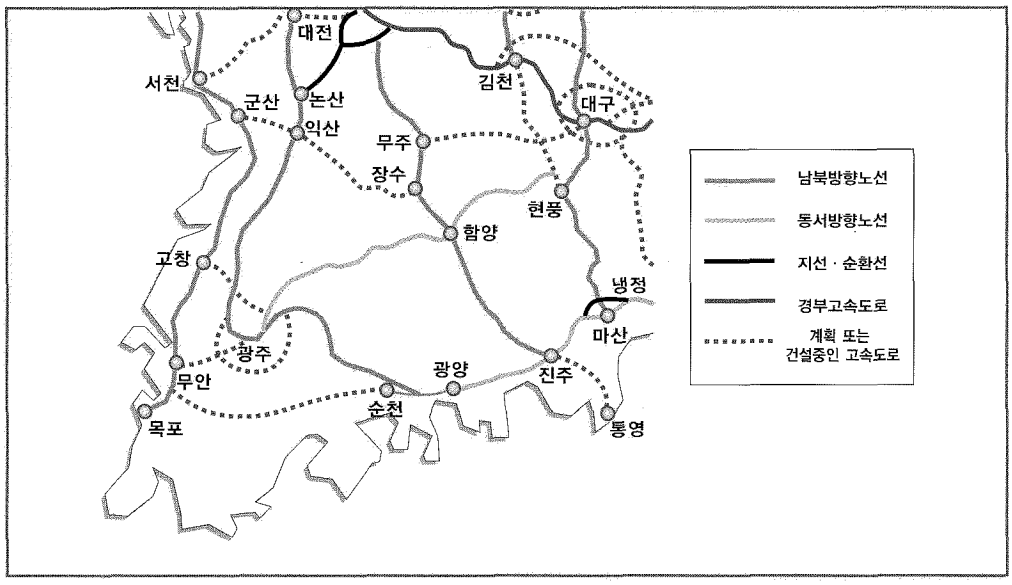
도로관리 체계상 도로는 크게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03년 현재 전국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의 총연장은 약 97,253㎞에 이르며 이 가운데 호남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의 길이는 그 18.4%에 해당하는 약 17,908㎞이다. 이 기간 중 거의 2배 수준까지 도로건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율에 있어서는 전국 평균치(107.1%)보다 훨씬 낮은 95.5%의 증가에 그쳐 지역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1980년대

[표 6-1] 도로 길이의 변화 추이(1980~2003)

연도	전 국						호남지방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군도	계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군도	계
1980	1,224.6	8,231.9	7,938.8	11,020.7	18,534.9	46,950.9	239.6	1,653.2	-	2,870.2	4,403.2	9,166.1
1981	1,245.2	12,247.0	9,403.1	10,013.2	17,428.0	50,336.4	239.2	2,719.5	-	2,569.7	4,331.2	9,859.7
1982	1,245.2	12,231.1	9,481.6	10,005.3	20,972.4	53,935.6	239.2	2,723.4	-	2,560.1	4,399.8	9,922.5
1983	1,245.2	12,229.2	9,591.7	10,041.2	21,492.3	54,599.6	239.3	2,728.4	-	2,536.7	4,537.3	10,041.6
1984	1,420.9	12,244.4	9,758.8	10,078.8	17,500.7	51,003.7	313.5	2,730.7	-	2,572.6	4,262.2	9,879.0
1985	1,415.4	12,241.2	10,017.8	10,166.8	18,422.9	52,264.1	313.5	2,735.3	0.0	2,570.9	4,362.5	9,982.2
1986	1,415.4	12,258.5	10,724.1	10,313.3	18,942.4	53,653.7	313.5	2,732.8	527.4	2,560.9	3,946.1	10,080.7
1987	1,539.0	12,253.1	11,077.7	10,328.2	19,490.7	54,688.7	314.0	2,730.0	540.0	2,560.0	3,962.0	10,106.0
1988	1,550.4	12,255.0	11,180.3	10,576.6	20,216.1	55,778.4	314.0	2,734.0	647.0	2,513.0	3,878.0	10,086.0
1989	1,550.8	12,190.2	12,385.9	10,557.7	19,796.0	56,480.5	314.0	2,732.0	660.0	2,525.0	3,900.0	10,131.0
1990	1,550.7	12,160.7	12,298.3	10,671.5	20,033.5	56,714.7	314.0	2,715.0	669.0	2,530.0	3,947.0	10,175.0
1991	1,597.4	12,114.2	12,717.4	10,642.8	21,016.4	58,088.2	313.4	2,806.5	715.4	2,545.7	3,844.6	10,382.3
1992	1,599.7	12,078.5	13,082.0	10,688.7	21,397.7	58,846.7	313.4	2,710.9	730.2	2,555.7	4,121.0	10,431.4
1993	1,602.4	12,057.1	13,336.4	10,656.3	23,643.7	61,295.8	313.4	2,704.2	750.1	2,556.0	4,261.8	10,585.5
1994	1,650.1	12,045.7	13,701.1	10,655.4	35,780.8	73,833.1	316.8	2,699.3	847.7	2,556.0	7,313.0	13,732.9
1995	1,824.5	12,052.8	14,081.5	13,854.4	32,424.2	74,237.4	318.2	2,697.6	974.2	3,379.1	6,410.5	13,779.6
1996	1,885.6	12,464.1	14,856.9	17,146.9	35,988.9	82,342.4	316.7	2,787.6	925.5	3,897.8	7,011.2	14,938.9
1997	1,889.1	12,458.9	17,243.3	17,089.0	36,288.1	84,968.4	317.1	2,794.2	950.2	3,909.3	7,098.9	15,069.6
1998	1,996.3	12,447.4	17,670.0	17,155.3	37,720.7	86,989.7	351.0	2,790.2	986.1	3,909.3	7,101.0	15,137.5
1999	2,040.5	12,418.0	17,891.7	17,144.8	38,039.3	87,534.3	344.3	2,786.2	1,692.7	3,903.0	7,164.1	15,890.3
2000	2,131.2	12,413.5	17,838.9	17,151.0	39,240.5	88,775.0	344.2	2,784.2	1,062.0	3,903.0	7,374.1	15,467.6
2001	2,636.6	14,253.7	17,809.8	15,704.1	40,992.2	91,396.4	506.1	3,527.9	1,092.2	3,436.2	8,092.9	16,655.4
2002	2,778.1	14,232.3	18,223.9	17,083.5	43,719.4	96,037.1	506.1	3,530.6	1,092.2	3,982.3	8,468.9	17,580.0
2003	2,778.1	14,234.6	17,130.2	17,485.3	45,624.7	97,252.8	505.0	3,530.2	1,095.9	4,194.8	8,582.1	17,907.8

자료 : http://kosis.nso.go.kr

에 비해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그런대로 도로 확충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증가는 국도확충보다는 주로 시군도와 지방도 확충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다소 조잡하긴 하나 지역 내의 교통망 발달정도를 어느 정도 파악해볼 수 있는 지표의 하나로서 전체 도로의 길이를 그 지역의 면적으로 나눈 값인 도로밀도는 1980년과 2003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0.47㎞/㎢에서 0.98㎞/㎢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호남권의 경우는 0.45㎞/㎢에서 0.87㎞/㎢로 증가하여 그 증가율이 훨씬 낮다.



〈그림 6-2〉 호남지방의 고속도로망

자료 : http://www.himan.co.kr

도로체계상으로 보아 2003년 현재 광주광역시와 전남 · 북을 포함하는 호남지방에 건설되어 있는 고속도로의 총 길이는 505㎞이며 일반국도는 3,530㎞, 지방도 4,195㎞, 광역시도는 1,096㎞, 그리고 시군도가 8,582㎞에 이른다. 〈그림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남지방을 연결해주는 남북 방향 고속도로로는 서해안선, 호남선, 대전 · 통영선이 있고 동서방향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에는 88선과 남해선이 있다. 비록 아직은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긴 하지만 지역 내의 동-서, 남-북 방향을 연결하기 위한 고속도로 노선으로는 고창~

장성간 17.2㎞, 장성~담양간 27.3㎞를 비롯하여 익산~장수간 61㎞, 목포~장흥간 39.3㎞, 무안~광주간 41.6㎞ 등의 신설노선이 4차로 폭으로 건설 · 계획 중에 있으며 88선의 고서~담양간 17㎞는 2006년 말까지 현재의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할 계획이다. 나들목 기준의 고속도로 길이는 전국에 분포하는 전체 고속도로 길이의 16.9%에 해당하는 약 470㎞에 이른다(표 6-2).

[표 6-2] 호남지방 경유 고속도로의 노선 및 구간거리

노선번호	노 선 명	노선별 구간		구간거리(㎞)		차로 수
		전체 구간	나들목 구간	전체 구간	호남 구간	
10	남해선	순천~부산	서순천~진월	169.3	28.6	4-8
12	88 선	고서~대구	고서~지리산	183.0	77.8	2
15	서해안선	무안~서울	무안~군산	340.6	145.8	4-6
20	익산포항선	익산~포항	장수I~장수J	2.6	2.6	4
25	호남선	순천~논산	순천~익산	195.1	184.7	4
35	중부 · 대전통영선	통영~하남	장수~무주	285.8	30.5	4-8
호남지방 경유 고속도로(나들목 기준)				470		
전국 고속도로				2,778		

자료 : 한국도로공사(www.freeway.co.kr), '2004 고속도로구간거리표'

고속도로 중에서 호남지방을 중부권 및 수도권과 연결해주는 호남고속도로는, 1914년 개통된 호남선 철도와 더불어 21세기에 이르기 까지 꾸준히 한반도 남서부의 동맥으로서 역할해왔다. 이 고속도로는 정부의 간선도로망 구성계획에 따라 경부고속도로에 이어 1차, 2차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되었다. 1970년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된 대전~전주 구간은 순수 국내자본으로 건설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며, 4차로를 전제한 2차로로 건설되었었다. 2차 공사구간인 전주~순천 구간 역시 4차로 확장을 전제한 2차로 고속도로로 건설되었으며 1972년 1월 착공하여 1973년 12월에 완공되었다. 이 구간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재 남해고속도로의 순천~부산 구간 건설공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한편, 1970년대 이후 산업화의 급진전과 인적 · 물적 자원의 지역간 이동 필요성 증대에 따라 호남고속도로의 교통이 혼잡을 겪게 되어 1980년대에 접어들어 4차로 확장공사가 시

[표 6-3] 1980년대 및 1990년대의 호남지방 고속도로 건설 관련 약사

(단위 : 대/인)

시기별	약 사 내 용
1980년대	80.11. 3 88선 계획 발표 81.10.26 88선 옥포~담양간(175.3km) 착공 83. 5. 6 호남선 논산~광주간(122.2km) 4차선 확장공사 착공 84. 5. 4 호남선 논산~전주간(31km) 4차선 확장공사 착공 84. 5. 7 호남선 장성~서광주간(20.7km) 4차선 확장공사 착공 84. 5.14 호남선 태인~입암간(23.5km) 4차선 확장공사 착공 84. 5.16 호남선 전주~태인간(27.5km) 입암~장성간(19.5km) 4차선 확장공사 착공 84. 6.27 88선 옥포~담양간(175.3km) 개통 86. 6.30 호남선 논산~전주간(31km) 4차선 확장개통 86. 9.11 호남선 확장공사 준공기념각 건립(여산 하 휴게소) 호남선 전주~광주간(91.2km) 4차선 확장개통 호남선 회덕~광주간(170.7km) 전구간 4차선 확장 준공식 87. 3.23 호남선 광주~고서간(9.9km) 4차선 확장공사 착공 89. 6. 1 호남선 광주~고서간(9.9km) 4차선 확장개통 89.10.13 남해선 진주~광양간(50.5km) 4차선 확장공사 착공
1980년대	90.12.21 서해안선 목포IC(본선 연장 1.5km) 건설공사 착공 91. 2.27 서해안선 건설공사 기공식 91.10. 9 남해선 하동~동광양간(7.5km) 연결로 건설 착공 91.10.21 남해선 광양~순천간(8.5km) 4차선 확장공사 착공 92. 4.17 대전-통영선(161km) 건설공사 기공식 92.11. 9 호남선 고서~순천간(71.4km) 4차선 확장공사 착공 92.11.13 남해선 진주~광양간(50.5km) 4차선 확장개통 93.12.16 남해선 광양~순천간(8.1km) 4차선 확장개통 93.12.28 서해안선 무안~목포간(9.2km) 건설공사 착공 94.10.21 서해안선 무안~몽탄간(12.5km) 건설공사 착공 96. 4.26 호남선 서전주 IC 건설공사 착공 96.11. 8 호남선 고서~순천간(71.4km) 4차로 확장개통 96.11.15 대전-통영선 대전~금산,죽천~장계,서상~함양간(62.3km) 건설공사 착공 97. 4.17 대전-통영선 무주~죽천간(14km) 건설공사 착공 97. 5. 2 대전-통영선 장계~서상간(5.7km 육십령 구간) 건설공사 착공 98. 4.30 서해안선 군산~무안간(114.3km) 건설공사 착공 98. 8.25 서해안선 무안~목포간(23.2km) 개통 98.10.30 서해안선 서천~군산간(22.7km) 개통

자료 : http://www.freeway.co.kr

작되었다. 1983년 4월에 서대전~논산 구간 확장공사가 시작된 이래 1985년 8월에는 이 구간의 개통을 보았다. 이후 1985년 9월에는 회덕~서대전 구간이, 1986년 6월 논산~전주 구간이, 9월에는 전주~광주 구간이 개통됨으로써 3년 4개월에 걸친 1차 확장공사가 마무리되었다. 2차 확장공사는 88고속도로를 통해 광주로 유입되는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광주~고서 구간의 공사를 시작으로 1989년 6월에 개통되었다. 그리고 잔여구간인 고서~순천 구간 확장공사가 1992년 11월 착공되어 1996년 11월 개통을 보았다.

호남고속도로의 시점인 순천으로부터 남해안을 따라 동쪽 방향으로 이어지는 남해고속도로는 한반도 동남부의 여러 산업단지들과 한반도 서부 호남지방을 연결해주는 동서 통로에 해당한다. 부산과 순천을 잇는 총연장 약 170㎞의 이 고속도로는, 지난 1972년 1월~1973년 11월 사이 호남고속도로 전주~순천 구간과 함께 건설되었다. 이 고속도로는 호남의 곡창지대와 광양 · 여수의 중화학 · 철강공업지대, 이리 · 마산 수출자유지역, 거제 · 삼천포의 대단위 조선소, 창원의 기계공업단지, 낙동강 하구 주변의 대규모 산업단지 및 항만 · 물류시설을 동서 방향으로 연결해줌으로써 동남해안 및 남해안에 대규모 연관 산업단지들이 집적되는 원동력을 제공하였다. [표 6-3]은 1980년대 및 1990년대에 진행되었던 호남지방의 고속도로 건설사업 관련 일정을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다.

1980년 초반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1987년에 구체적 검토가 시작되었던 서해안고속도로는 전남 무안군 삼향면에서 경기도 광명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341㎞에 달하는 4~6차로의 고속도로인데, 1988년 9월에 기본조사가 실시되고 이듬해인 1989년 12월 인천~안산간 실시설계와 안산~목포간 기본설계가 동시 착수되었다. 전체 구간을 동시 건설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하여 1990년 12월 인천~안산 구간 공사를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구간별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1년 12월 21일에야 전 구간의 개통을 보았다. 이 고속도로는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서해안 축을 개발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중국과의 교류증대 등에 대비한 항만 및 공단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되었다.

한편, 광주와 전주를 비롯한 호남의 지역 거점도시와 역내의 여러 중소도시는 물론이고 역외의 다른 지방 거점도시들을 연결해주는 일반국도 노선으로는 1번(목포~신의주), 13번(완도~금산), 15번(고흥~담양), 17번(여수~용인), 19번(남해~홍천), 21번(남원~이천), 23번(강진~천안), 27번(고흥~군산), 29번(보성~서산), 59번(광양~양양) 등 10개의 남북방향

노선과 2번(신안~부산), 4번(군산~경주), 18번(진도~구례), 22번(정읍~순천), 24번(신안~울산), 26번(군산~대구), 30번(부안~대구) 등 7개의 동서방향 노선, 그리고 남해안과 서해안을 따라 섬과 반도를 연결하는 77번 도로가 지역 내부 상호간 및 한반도의 타 지역을 연결해준다(표 6-4).

[표 6-4] 호남의 일반국도 노선별 현황 및 1일 평균 교통량

(단위: ㎞, 대/일, %)

노선	구 간	총연장	지역 내의 경유지	통행량	승용차	버스	화물차
1	목포~신의주	497	무안-나주-광주-정읍-삼례	23,073	68.7	3.6	27.7
2	신안~부산	482	목포-강진-장흥-보성-순천-광양	16,746	65.6	3.2	31.2
4	군산~경주	351	군산-(장항)	15,838	67.2	2.8	30.0
13	완도~금산	315	해남-영암-나주-순창-장수	7,872	62.1	4.4	33.5
15	고흥~담양	153	벌교-화순-광주	4,879	57.8	5.5	36.7
17	여수~용인	407	순천-구례-남원-전주-완주	15,890	64.1	3.5	32.4
18	진도~구례	235	해남-장흥-보성-주암	3,372	62.6	4.0	33.4
19	남해~홍천	460	구례-남원-장수	5,348	61.5	4.1	34.4
21	남원~이천	339	순창-정읍-김제-군산	15,578	71.2	3.2	25.6
22	정읍~순천	184	영광-광주-화순-승주	8,577	68.5	4.0	27.5
23	강진~천안	369	장흥-나주-함평-영광-부안-익산	8,498	59.4	2.8	37.8
24	신안~울산	388	함평-장성-순창-남원-운봉	5,455	63.3	2.9	33.8
26	군산~대구	174	김제-전주-진안	9,807	63.1	4.2	32.7
27	고흥~군산	170	벌교-주암-순창-전주-익산	7,599	69.1	2.4	28.5
29	보성~서산	310	화순-담양-정읍-부안	7,848	67.7	2.7	29.6
30	부안~대구	316	정읍-임실-진안-무주	5,182	62.5	3.5	34.0
59	광양~양양	416	광양-(하동)	2,442	60.7	3.6	35.7
77	부산~인천	652	여수-고흥-완도-목포-홍농-부안	3,337	59.3	3.3	37.4
계		6,218	18개 노선	9,916	64.6	3.5	31.9
전 국		14,234	(56개 노선)	11,434	66.5	3.3	30.2

자료 : 건설교통부, 2003 도로교통량통계연보 제1권, pp.31-39.
http://www.moct.go.kr

자동차 교통량의 분포

각 노선별로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2002년도 호남지방의 고속도로 1일 평균 교통량은 대략 3만4천대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통행량이 가장 많은 노선은 남해선으로 일 평균 통행

량이 5만대를 상회한다. 서해안선이 개통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남선의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으나, 신설 서해안선 고속도로와 대전-통영선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호남선을 이용하던 교통수요가 호남선을 사이에 두고 동서 방향에 위치한 2개의 신설 고속도로로 분산됨으로써 고속도로 통행량이 상당 부분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호남선의 1일 평균 통행량은 약 3만4천대로 줄어들고, 서해안선은 약 3만 3천대, 대전-통영선은 3만 8천대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하여 비록 동서간 교류확대를 위해 일찍이 건설되었으나 아직까지도 2차로 고속도로로 남아있어 고속도로로서 지역결합의 잠재력이 미약한 88선의 1일 평균 통행량은 1만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통행차량의 차종별 구성비를 보면, 남해선과 대전-통영선의 경우 화물차의 통행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데 이는 이들 두 고속도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업지대를 연결해주는 산업도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기 때문이다(표 6-5).

[표 6-5] 호남지방 경유 고속도로별 1일 평균 교통량

(단위 : 대/일)

고속도로 노선명	평균통행량	구성비(%)		
		승용차	버스	화물차
남해선	50,613	52.4	9.7	37.9
88선	8,402	56.2	11.1	32.7
서해안선	32,938	58.3	10.7	31.0
익산포항선	4,941	39.7	10.7	49.6
호남선	33,746	57.4	12.5	30.1
중부 · 대전통영선	38,045	51.3	10.9	37.8
호남지방 경유 고속도로	34,224	53.4	10.8	35.8
전국 고속도로	46,120	56.2	10.4	33.4

자료 : 건설교통부, 2003 도로교통량통계연보 제1권, pp.31-39.
http://www.moct.go.kr

일반국도의 경우, 호남지방을 시 · 종점으로 하거나 경유하는 18개 일반국도 노선의 1일 평균 통행량은 약 1만대 수준으로 전국의 일반국도 평균 통행량보다 다소 적은 편이다(표 6-4). 이들 18개 노선 중 비교적 통행량이 많은 노선은 목포에서 나주-광주-정읍-삼례를 거쳐 논산으로 남북방향을 잇는 1번 국도와 신안에서 출발하여 목포-강진-장흥-보성-순

천-광양을 거쳐서 하동으로 이어지는 2번 국도, 군산에서 시작하여 장항을 거쳐 경주까지 이어지는 4번 국도, 여수에서 순천-구례-남원-전주-완주를 거쳐 금산으로 이어지는 17번 국도, 그리고 남원에서 출발하여 순창-정읍-김제-군산을 거쳐 서천으로 이어지는 21번 국도 등이다.

이들 노선과는 대조적으로 광양에서 하동으로 이어지는 59번 국도, 부산을 출발하여 해안을 따라 여수-고흥-완도-목포-홍농-부안을 경유해서 서천으로 이어지는 77번 국도, 진도에서 해남-장흥-보성-주암을 거쳐 구례에 이르는 18번 국도, 고흥에서 벌교-화순-광주를 거쳐 담양에 이르는 15번 국도의 경우는 1일 통행량이 5천대 미만에 불과한 비교적 한적한 도로이다.

[표 6-6] 호남지방 지방도의 1일 평균 교통량

구분	연장(㎞)	포장율(%)	통행량(대/일)	승용차(%)	버스(%)	화물차(%)
전 북	1,901(266)	75.7(96.6)	5,315	51.2	16.0	32.8
전 남	2,293(334)	69.3(69.5)	3,395	49.8	13.0	37.2
호 남	4,194(600)	72.2(81.5)	4,355	50.5	14.5	35.0
전 국	17,485(3 '696)	77.8(80.3)	4,383	55.3	12.4	32.3

자료 : 건설교통부, 2003 도로교통량통계연보 제1권, pp.31-39.
http://www.road.re.kr
주 : ( )안은 국가지원 지방도임

일반국도의 통행 차량별 차종 구성에 있어서는, 각 노선이 연결하는 양쪽 지역의 산업기반 특성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고속국도의 그것에 비해서 버스와 화물차의 통행 비율이 낮은 반면 승용차의 통행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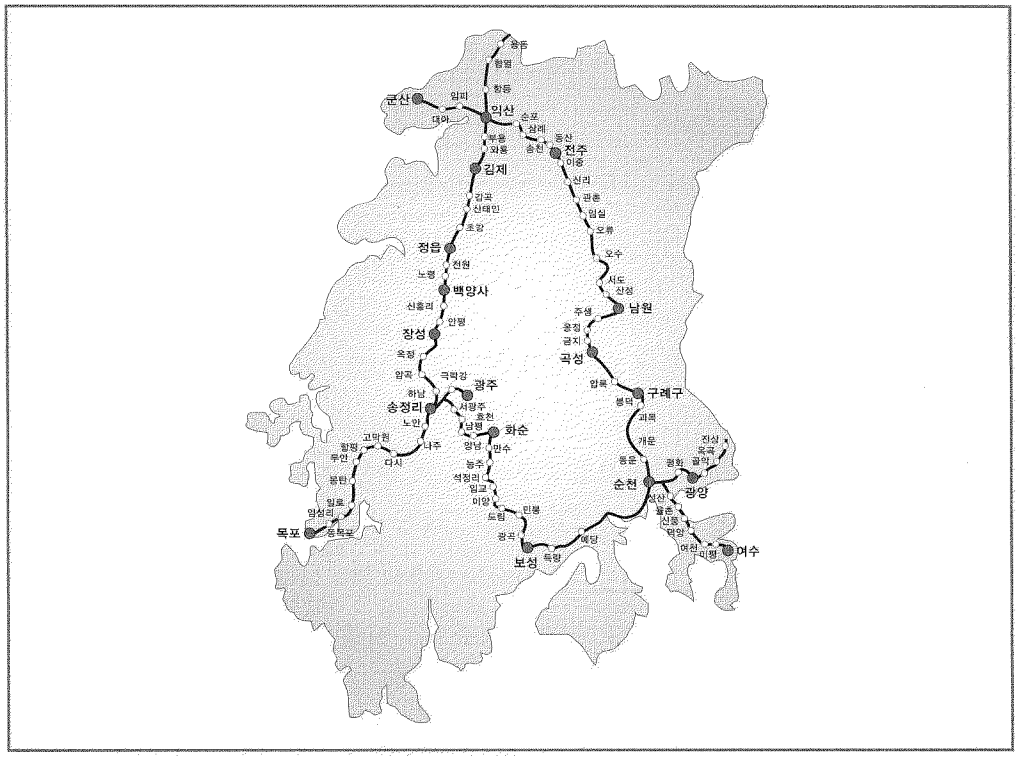
호남지방의 지방도 총연장은 4,194㎞(국가지원 지방도 600㎞ 포함)로 17,485㎞에 달하는 전국 지방도의 24%를 차지한다. 이들 지방도의 포장율은 전국의 평균치보다 낮으나 1일 평균 통행량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보아 전국 평균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통행차량의 차종별 구성에서는 전남지역의 경우 화물차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을 보인다(표 6-6).

(2) 철도교통

철도망의 발달

국민소득과 여가시간의 증가 결과 과거에 비해 월등히 삶의 질이 개선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도 안전한 교통수단으로서 자동차 보유 및 그 이용이 보편화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는 여전히 지역간의 물적 교류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여객수송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철도망 관리는 각 지역사무소를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북 지역에 건설되어 있는 철도노선을 총괄하는 관할기관은 철도청 순천지역사무소이며, 〈그림 6-3〉과 [표 6-7]은 순천지역사무소에서 관할하는 철도 노선의 개요를 소개한 것



〈그림 6-3〉 호남지방의 주요 철도 노선도

자료 : http://www.korail.go.kr/2003/html/info/info090.htm

이다.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철도노선 길이는 6,845.3㎞에 달하는데 열차를 운행하거나 발착시키기 위한 선로인 본선이 71.5%(4,894.1㎞), 그리고 측선이 28.5%(1,951.2㎞)에 이른다. 순천지역사무소는 본선의 19.6%(960.5㎞), 측선의 14.6%(284.0㎞), 전체 노선의 18.2%(1,244.5㎞)를 관할하고 있다. 전체 선로길이를 기준으로 볼 때, 호남지방에 위치하는 호남선은 경부선과 중앙선에 이어 세 번째로 길며 이어서 경전선, 전라선이 각각 네 번째, 다섯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노선 구간으로 보아 호남지방에 위치하는 철도는 용동역~목포역 사이의 호남선을 비롯하여 익산역~여수역에 이르는 전라선, 그리고 송정역~진상역 사이의 경전선 등의 3개의 간선철도와 군산선(군산~옥구), 광양제철선(광양~태금), 옥구선(군산~옥구), 광주선(광주선 분기~광주), 여천선(덕양~적량), 광양항선(황길~광양항) 등 6개의 지선철도, 그리고 북전주선(동산~북전주)과 송정선(호남선 북송정~경전선 북송정) 등 2개의 연결철도가 있다(표 6-7). 총 11개나 되는 이들 철도의 구간거리 총연장은 622.5㎞이며, 총 110개의 역이 구간 구간마다 사이에 입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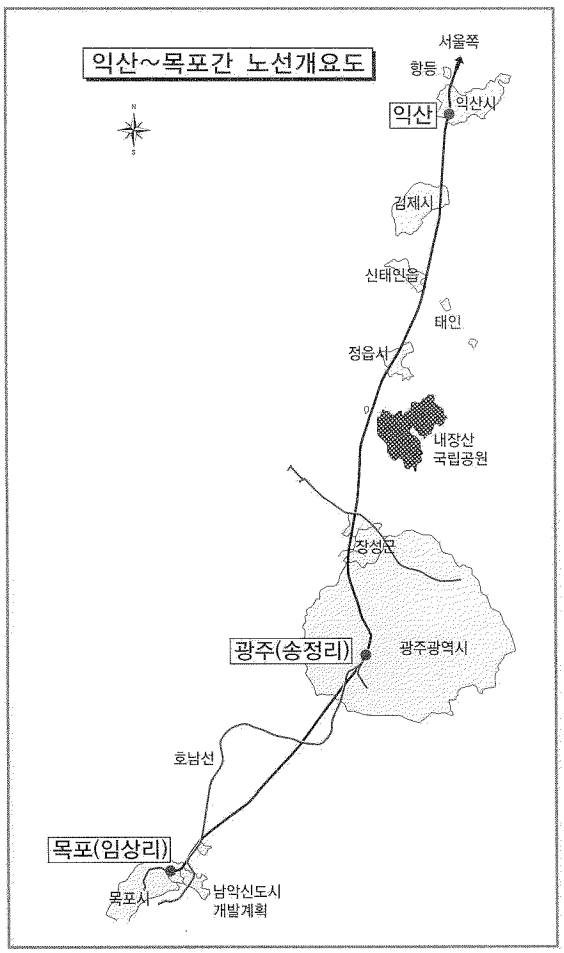
[표 6-7] 호남지방의 철도 노선(순천지역사무소 관할)

노 선	관할 구간	구간거리 (㎞)	역수*	전체 노선(거리/역수*)
호 남 선	강경~목포	191.9	34	대전~목포(252.6/46)
전 라 선	익산~여수	194.0	36	
경 전 선	하동~송정리	155.2	25	삼랑진~송정리(300.6/50)
북전주선	동산~북전주	1.7	1	
군 산 선	익산~군산	23.1	5	
옥 구 선	군산~옥구	11.6	1	
송 정 선	북송정:호남선~경전선	1.0	-	
광 주 선	광주선 분기~광주	11.9	2	
광양제철선	광양~태금	19.0	3	
광양항선	황길~광양항	2.7	1	
여 천 선	덕양~적량	10.4	2	
계		622.5	110	(828.6/147)
전국		3,129.0	631	

자료 : 철도청, 「2002 철도통계연보」, 2003. 7.
주 : * 보통역, 운전간이역, 배치간이역, 무배치간이역, 신호소, 신호장, 조차장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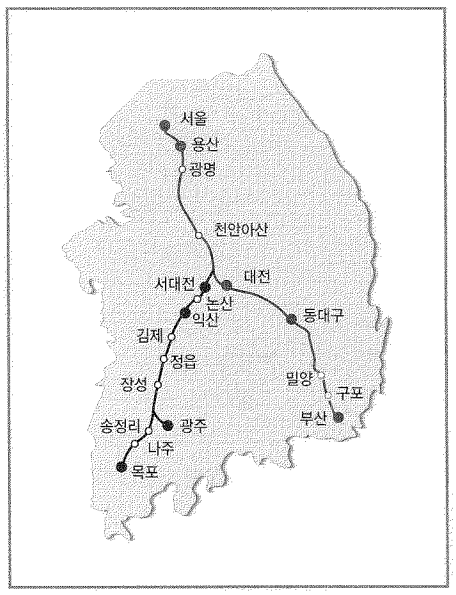
호남선 철도는, 1896년 프랑스의 한 회사가 서울-목포간의 경목선 철도 부설권을 우리나라 정부에게 요청함으로써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사실 호남지방은 비옥한 평야를 갖춘 곡창일 뿐 아니라 긴 해안선을 따라 풍부한 수산자원을 갖춘 지역이었기에 정치 · 군사적 목적 보다는 경제적 동기에서 일찍부터 철도 부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있었다. 결국 프랑스의 부설권 허가 요청을 계기로 일본과 영국 등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던 열강들이 앞 다투어 호남선 철도 부설권 쟁탈전을 벌였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1898년 6월 농상공부의 제의로 정부 각의에서 호남선관설안을 결의하고 고종 황제의 제가를 받아 주한 외국공사들에게 통보함으로써 호남선 부설이 본격화되었다.

1904년 5월 호남선 부설을 위한 호남철도주식회사가 설립되었으나 일제의 침략으로 부설계획이 실행되지 못하고 말았다. 이후 우리나라를 강점합병하고 난 일본이 1910년부터 철도 부설권을



〈그림 6-4〉 호남선 KTX 익산-목포 구간도

자료 : http://my.netian.com/~ianhan/403.htm



〈그림 6-5〉 호남선 및 경부선 KTX 노선도

자료 : http://ktx.korail.go.kr

독점하고, 호남지역의 농산물 수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911년 호남선 부설공사를 착공했다.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었던 본선 공사는 일제 강점하인 1911년 7월 대전~연산간 39.9㎞ 개통을 시발로 연산~강경(1911.11), 강경~이리(1912.3), 이리~김제(1912.10), 김제~정읍(1912.12), 나주~학교(1913.7), 학교~목포(1913.5), 송정리~나주(1913.10), 정읍~송정리(1914.1) 구간이 차례로 개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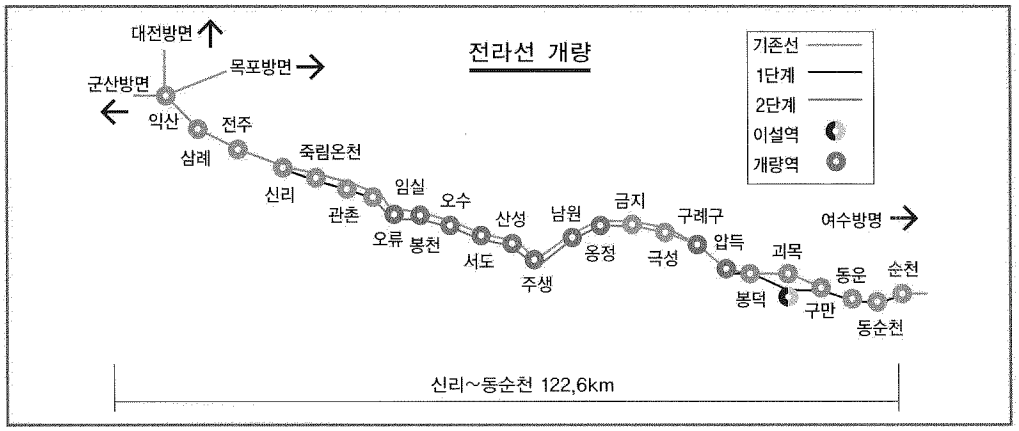
개통 당시 총연장 293.0㎞의 호남선 철도는 광복이후 수송 물동량 및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계속적인 복선화 요청이 제기되었고 1960년대 후반부터 복선화 공사가 시작되었다. 1968년 1월 시작된 복선화 공사는 두계~개태사간 9.4㎞를 시작으로 대전~이리간 88.6㎞, 이리~정주간 43.4㎞, 정주~장성간 32.4㎞, 장성~송정리간 21.9㎞, 송정리~임성리간 63.3㎞을 차례로 준공했고 2003년 12월, 임성리~목포간 7.4㎞를 마지막으로 개통하였다.

이와 더불어 1980년대 말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던 경부선 고속철도 건설계획이 구체화되면서 1999년말 호남선 철도의 전철화 계획이 수립되고 비록 대전 이남은 전철화된 철도 구간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2004년 4월 1일, 호남선 고속철도의 개통을 보았다. 호남선 전철화사업은 우리나라 철도의 간선인 대전~목포간을 전철화하여 경부선과 호남선간 연계수송체계를 구축하고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시기에 맞추어 서울~목포간 고속열차를 직결운행 함으로써 철도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목표하에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새마을호를 기준하여 4시간 42분 걸리던 서울~목포간 이동시간이 KTX를 이용할 경우 2시간 58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호남선 KTX 노선에는 총 13개 역이 위치하는데 이 가운데 호남지방에 자리한 역은 익산, 김제, 정읍, 장성, 송정리, 광주, 나주, 목포 등 8개 역이다.

전라선 철도의 경우는 1913년 1월 전북철도주식회사가 부설 면허를 받아 전주에 본사를 두고 1914년 5월 토목공사에 착수한 이래 11월 12일 철도부설을 완료함으로써 동월 17일부터 여객운송을 개시하였다. 전라선은 우리나라에서 사설 철도로는 부산초기전기선과 더불어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철도중 하나이며 1927년에 이르러 국철에서 이 노선을 매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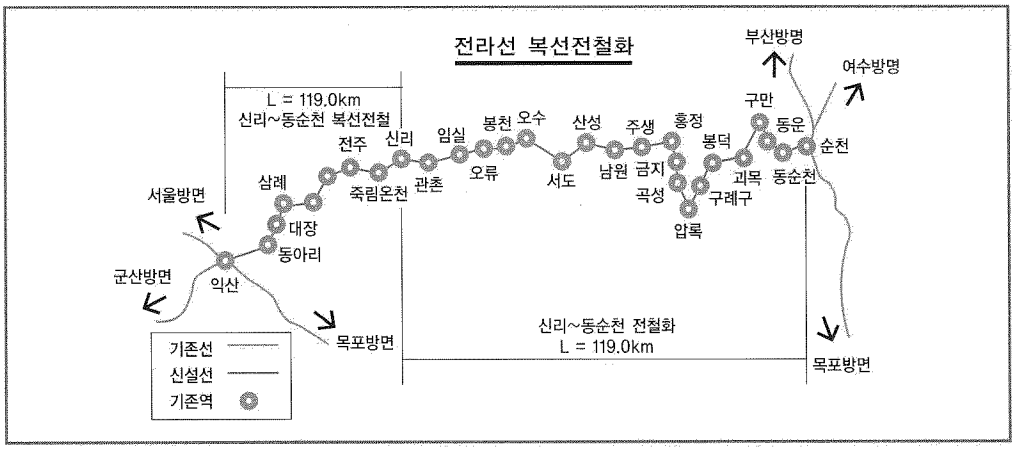
전라선은 부설 당시 협궤선 철도였으나 국철에서 매수한 후 광궤선으로 개량했다. 1929년

9월 광궤선을 준공하면서 철도 역사들도 전면 신 · 개축했는데, 개축한 건축물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은 근대식의 익산역사 건물과는 대조적으로 전주역사를 한옥양식으로 세웠다는 점이다. 또한 본선 중 순천~여수간 40㎞(광궤도)는 1936년 9월 남조선공사선이었던 것을 국철에서 인수한 후 대대적인 증설과 보강공사를 시행하였고, 전주~순천간 약 133㎞는 국철에서 전술한 전북철도와 남조선철도 등 2개 사철을 매수하면서 공사에 착수하여 1937년



〈그림 6-6〉 전라선 개량사업

자료 : http://www1.krnetwork.or.kr



〈그림 6-7〉 전라선 복선 · 전철화 계획

자료 : http://www1.krnetwork.or.kr/business/mainBusi_railConstruct_0203_04.asp

3월에야 익산~여수간의 전라선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결국 전라선은 3단계로 나뉘어 개통된 셈이다.

최근 1988년 시작된 전라선 1, 2단계 개량사업이 완료되어 열차 운행시간이 단축되고 광양제철 및 연관단지와 여수산업단지의 화물 수송능력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999년 5월, 전라선 1단계 개량사업(신리~임실 64.3㎞)에 이어 5년여 만인 2004년 8월 5일 2단계 사업(임실~금지간 58.3㎞)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전라선 51개 여객열차(새마을호 6, 무궁화호 28, 통근 17)의 운행시간이 평균 30여분씩 단축되었으며 전라선 이용 주민들이 익산역에서 KTX로 갈아탈 때 걸리는 연계환승시간도 10~15분 이내로 단축되었다. 특히 화물의 경우 열차마다 최소 6량 이상의 화물열차를 추가할 수 있게 되어서, 종전 하루 25회 275량을 18회 312량으로 조정하였다. 즉 운행횟수는 줄어든 반면 운송능력은 크게 늘어났

[표 6-8] 호남지방의 철도 건설 과정(1950년대 이후)

선별	구간	연장(㎞)	착공~준공	비고
옥구선	군산~옥구	11.8	52. 5.20~53. 3. 9	
경전선	순천~광양	9.1	64. 4.29~67. 2.21	
	광양~유수	61.4	64. 4.29~68. 2. 7	
목포항선	목포~목포항	1.2	65.10.18~65.12.31	
광주공단인입선	광주~공단	2.5	67. 4.24~68.12.30	
전주공단인입선	전주~공단	1.9	67. 7.22~68. 9.10	
여천선	덕양~적량	10.2	68. 4.23~69. 3.30	
	덕양~적량	5.9	75. 2. 5~75.12.29	철도 이설
7비 인입선	적량~공장	3.0	74. 2. 3~76.11. 9	
전라선	동산~신리	17.0	78. 3.23~81. 5.25	
	신리~동순천	64.3	89.11.18~99. 5.17	개량(5.3㎞ 단축)
광양제철선	광양~태금	19.0	85. 7. 1~87. 9.22	
호남복선	함열~익산	16.0	68. 1. 4~71. 4.15	
	논산~함열	21.2	77. 3. 7~77.12.31	
	익산~정읍	43.4	81. 2. 4~85.11.15	단선→복선(0.5㎞단축)
	정주~장성	32.4	85. 4.12~87.12. 4	
	장성~송정리	21.9	82. 3.25~88. 9. 6	
	송정리~임성리	63.3	95. 9.20~01.12.17	단선→복선(3.7㎞단축)

자료 : 철도청, 「2002 철도통계연보」, 2003. 7.

다. 결과적으로 광양제철 및 연관산업단지, 여수산업단지, 광양컨테이너부두에서 발생하는 철강제품 및 유류 등의 화물 반출 · 입 수요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전라선 개량공사를 통해서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 수송능력이 크게 개선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선 1, 2단계 개량사업에는 총 1조 80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단계 사업은 선형 개량 및 부분 복선화를 목표로 했다. 한편 2008년, 익산~순천간 154.2km 구간의 전철화를 목표로 전라선 복선 · 전철화 사업(익산~신리간 35.2km 복선 전철화; 신리~순천간 119.0km 전철화)이 계획중이다(그림 6-7).

경전선을, 1928년 설립되어 일본 동경에 본사를 두고 광주에 영업소를 두었던 남조선철도회사가 1929년 송정리~순천~여수를 잇는 160㎞의 철도공사에 착수함으로써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 공사는 1930년 12월 하순에 완공되어 순천과 여수 사이에 첫 열차가 운행되었다. 초기에는 송정리~여수간을 송려선으로 부르다가 그 후 순천~여수간을 전라선에 편입시키고, 송정리에서 순천에 이르는 119.7㎞를 경전서부선으로 개칭했다. 현재는 송정리~삼랑진에 이르는 300.6㎞를 경전선이라 하는데, 이 노선은 1905년에 개통되었던 마산선(삼랑진~마산), 1923년 개통된 진주선(진주~마산), 1930년 개통된 광주선(송정리~순천), 그리고 1967년 개통된 경전선(진주~순천)을 통합한 철도이다.

사실상 경전선은 우리나라 가장 남단에 위치하여 동서지역을 연결하고 있는 유일의 철도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커다란 관심을 끌지 못했다. 더군다나 남해고속도로의 건설 이후 경전선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고 그 역할마저 축소되었는데, 경전선이 통과하는 여러 도시들의 기능적 변화로 경전선의 기능 역시 바뀌어야 한다. 경전선은 건설 후 초기단계에서 협궤를 표준궤로 개량하는 등 많은 시설 개량이 추진되었으나 인력에 의존한 건설로 인해 시설수준이 낮고, 곡선 반경이 대부분 R=600m 이하이면서 단선이기 때문에 영호남간의 간선 철도망으로서 기능 발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전선을 개량하고 남해안 축 철도망을 확충함으로써 영호남의 교류촉진, 철도수송의 효율성 증대, 남해안 일대 공업 단지 연결 및 관광자원 개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국 해안선 순환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중에 있다.

군산선 철도는 호남선 부설 당시 군산지역 공사라는 이름으로 함께 계획되어 호남선과 동시에 착공되었다. 대전~목포간 호남선 부설공사와 함께 착공된 이 군산선 부설사업은 익

산 정차장을 분기점으로 군산항에 이르는 철길을 개설하려는 것이었는데, 당시 군산 일원의 일본인 거류민단이 서울 · 인천 · 목포 등지의 거류민단과 연합하여 소위 호남철도기성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군산선 철도 부설운동을 추진했었다. 그들은 호남선 철도 부설공사에 필요한 각종 중량급 자재를 운송 보급하는 데 있어 당시 신설해오던 철도 및 지반이 약한 도로의 부적합성을 제기하면서 군산항을 통한 단거리 해운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호남선 철도 부설공사 보다 군산선 철도 부설이 선행되도록 유도했었다.

결국, 호남선 철도 부설의 본 공사에 앞서 건설 자재를 운송하기 위한 운송로로써 군산항에 이르는 인입선인 군산선이 부설된 것이었다. 이 철도는 1911년 6월 착공되어 호남선 주공사구간의 익산~강경간 개통일과 같은 1912년 3월에 개통을 보았다. 사실상 일본인 거류민단의 전폭적 지원에 힘입어 부설된 군산선 철도는 개통후 일제가 금강하류 및 만경평야에서 생산되는 쌀을 일본으로 수탈해가는 운송로로써 악용되는 비운을 겪기도 했다.

그밖에 군산~옥구간의 옥구선, 동산~북전주간의 북전주선, 그리고 광양제철소(태금)~광양간의 광양제철선, 황길~광양컨테이너부두간의 광양항선, 덕양~적량간의 여천선 등은 모두 대규모 산업단지를 연결해주는 화물 전용의 산업단지 인입선으로 사용되고 있다.

호남지방의 철도노선별 이용과 관련하여 연간 여객수송 규모를 비교해보면, 호남선 철도가 여객수송 분담율에 있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객이

[표 6-9] 호남지방의 주요 철도노선별 여객 발착규모(2002년)

(단위: 천명, %)

구분	하 행				상 행				합계 [%]**
	승 차	강 차	계	통과여객	승 차	강 차	계	통과여객	상행성+하행선
호남선	1,497	5,263	6,760	8,245	5,081	1,475	6,556	8,021	13,316[49.8]
전라선	544	2,460	3,004	2,503	2,426	575	3,001	2,462	6,005 [22.5]
군산선	120	197	316	197	214	130	344	214	660 [2.5]
광주선	0.2	1,085	1,085	1,085	1,018	0	1,018	1,018	2,103 [7.9]
경전선	748	1,599	2,348	2,837	1,576	727	2,303	2,871	4,651 [17.4]
계 (%)*	2,909 (25.7)	10,603 (18.7)	13,512 (12.3)	14,866 (18.8)	10,316 (18.2)	2,907 (5.5)	13,223 (12.0)	14,587 (18.6)	26,735 (12.2)
전국	53,411	56,726	110,136	79,077	56,524	53,209	109,733	78,594	219,869 (100)

자료 : 철도청, 「2002 철도통계연보」, 2003. 7.
주 : * 전국 철도노선에서 호남권 철도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임
** 호남권 철도노선에서 각 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임

동의 방향을 상 · 하행으로 구분한 [표 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남선은 호남지방 철도여객 수송의 약 50%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전라선이 22.5%를 담당하고 경전선은 17.4%에 불과하여 한반도의 동서간 보다는 남북간의 인적 교류가 더 활발함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호남지방과 수도권간의 여객이동에 있어서는 하행선의 경우 강차인원이 훨씬 많고 상행선의 경우 승차인원이 훨씬 많아 인적 교류의 방향이 비대칭적으로 수도권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6-10] 호남지방의 주요 철도노선별 화물 발착규모 (천톤)

구분	하 행			상 행			합계 [%]
	발송	도착	계	발송	도착	계	
호남선	71	628	699	193	651	844	1,543 [14.6]
전라선	107	169	276	413	325	738	1,014 [10.2]
군산선	-	131	131	188	0.1	188	319 [3.2]
북전주선	-	971	971	442	-	442	1,413 [14.2]
여천선	-	108	108	1,853	-	1,853	1,961 [19.7]
광양제철선	0.06	1,035	1,035	1,389	-	1,389	2,424 [24.4]
경전선	263	622	885	185	204	389	1,274 [12.8]
계	441 (6.4)	3,664 (11.0)	4,106 (10.2)	4,665 (11.6)	1,180 (8.6)	5,845 (10.9)	9,951(10.6)
전국	6,822	33,229	40,050	40,098	13,662	53,760	93,810

자료 : 철도청, 「2002 철도통계연보」, 2003. 7.

여객수송의 경우 호남선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은데 반해서 화물수송의 경우는 광양제철선의 수송 분담비중이 가장 높다. 여천선이나 북전주선과 같은 화물전용 노선의 수송 분담비중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6-10). 수송화물 품목별로 각 노선의 화물수송량을 살펴보면[표 6-11], 전라선의 비중이 가장 높아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광양제철선 및 여천선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노선별 주요 수송품목을 살펴보면 전라선의 경우 시멘트와 컨테이너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며, 광양제철선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및 잡화의 비중이 크다.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여천선에서는 유류 및 비료 수송량이 많으며, 컨테이너 역시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호남지방 철도 전체로 볼 때, 가장 수송량이 많

[표 6-11] 호남지방 철도노선의 수송 화물

(단위: 천ton · 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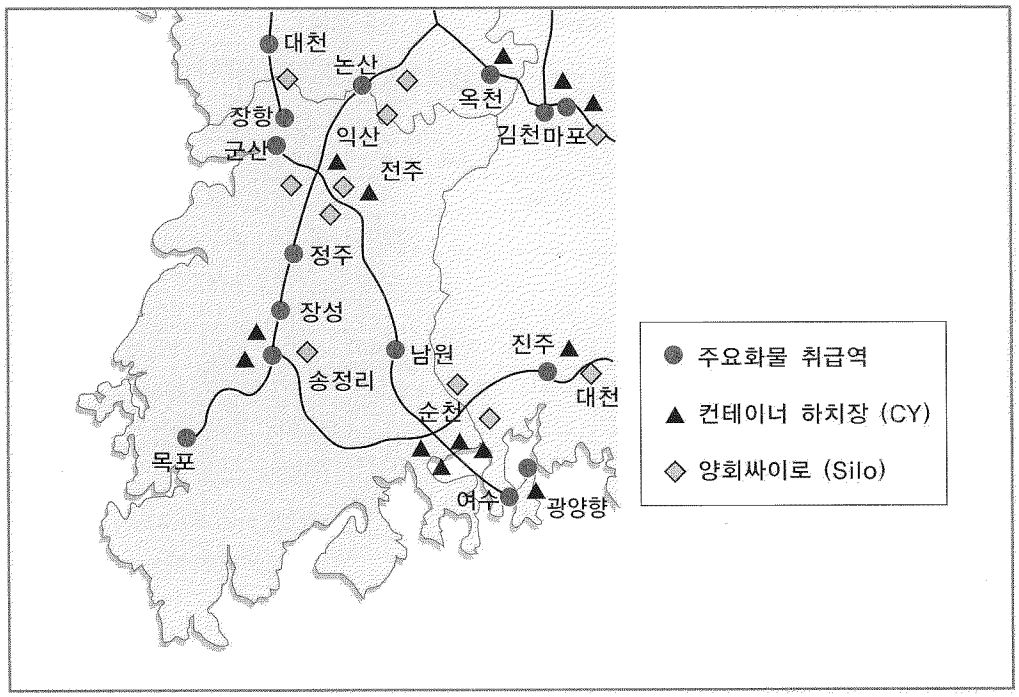
구분	호남선	전라선	군산선	북전주선	여천선	광양제철선	경전선	계	전 국
양 곡	1,719	-	-	-	-	-	-	1,719 (0.0)	2,583,171 (0.0)
시멘트	-	64,9967	-	-	-	648	-	650,615 (28.5)	3,882,357,855 (36.0)
비 료	-	28	-	-	113,569	-	-	113,597 (5.0)	157,327,852 (1.5)
무연탄	10,225	-	-	-	-	-	85,840	96,065 (4.2)	1,276,674,115 (11.8)
광 석	-	-	-	-	-	-	4,802	4,802 (0.2)	600,819,699 (5.6)
유 류	-	-	-	-	176,543	-	-	176,543 (7.7)	641,989,919 (6.0)
건설장비	-	-	58	-	-	-	9,719	9,777 (0.4)	104,105,957 (1.0)
잡 화	874	4	23,482	66,642	24,418	238,832	3,585	357,837 (15.7)	1,076,002,671 (10.0)
컨테이너	15,339	46,2466	26,920	34,772	80,933	225,038	-	845,468 (37.0)	2,834,305,972 (26.3)
기 타	7,332	4,349	1,453	-	8,109	36	6,523	27,802 (1.2)	207,670,037 (1.9)
계 (%)	35,489 (1.6)	1,116,814 (48.9)	51,913 (2.3)	101,414 (4.4)	403,572 (17.7)	464,55 (20.3)	110,469 (4.8)	2,284,225 (100)	10,783,837,248 (100)

자료 : 철도청, 「2002 철도통계연보」, 2003. 7.

은 화물은 컨테이너이며 다음은 시멘트, 잡화 등의 순이다.

철도를 이용한 화물 수송은 주로 대외 연결이 편리한 결절역의 물류기지를 중심으로 수송되어 지는데, 〈그림 6-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남지방에 분포하는 철도화물 물류기지로는 시멘트 물류기지가 북전주선의 북전주역, 광주선의 극락강역, 광양제철선의 태금역, 그리고 경전선의 골약역과 호남선의 부용역에 자리하고 있다. 여천선의 적량역에는 석유화학산단에서 가공된 비료 및 유류 화물기지가 위치하며, 전남 화순역은 석탄 물류기지와 근접해 있다. 수송규모에 있어서 시멘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전라선의 동익산역, 율촌역, 미평역, 여천선의 홍국사역, 광양제철선의 태금역,그리고 경전선의 송정리역 등지에 물류기지가 위치하고 있다.

호남지방에 입지하고 있는 3개의 장거리 철도 노선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역들의 화물 발착규모를 상호 비교해보면, 화물 발송지의 경우 여수역이 약 56%를 기록함으로써 거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며 나머지 역들은 모두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화물 도착지의 경우는 전주역의 비중이 비교적 크며, 순천역과 송정리역 및 영산포역이 모두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표 6-12).



〈그림 6-8〉 호남권의 철도 물류기지

자료 : http://logis.korail.go.kr/guide/transstation.jsp

[표 6-12] 호남지방 주요 역의 철도화물 발착규모

(단위: 톤, %)

O \ D	익 산	송정리	영산포	목 포	군 산	전 주	남 원	순 천	여 수	광 주	화 순	계 (%)
익 산	5,129	13,738	-	807	-	32	1,113	31,809	-	483	29	53,140 (2.4)
송정리	25,837	2,715	-	1,769	1,356	300	7,463	31,312	283	282	1,127	72,444 (3.3)
영산포	-	-	-	61	-	-	-	-	-	-	-	61 (0.0)
목 포	671	116,625	2,018	29,882	682	51	118	1,085	-	1,768	2,367	155,267 (7.0)
군 산	46	-	-	-	46	434	-	44,942	-	-	-	45,468 (2.0)
전 주	1,047	14,274	-	-	138	53	128	85,608	105,432	-	-	206,680 (9.3)
남 원	1,172	-	-	60	-	10,484	83,355	13,475	13,371	-	1,281	123,198 (5.5)
순 천	60,437	1807	-	2,038	16,668	90,812	363	491	798	585	32	174,031 (7.8)
여 수	56,680	117,560	256,757	45,991	5,140	602,192	32,191	54,710	1,415	58,010	15,002	1,245,648 (56.1)
광 주	1,059	194	-	812	-	-	-	219	-	204	40	2,528 (0.1)
화 순	2,661	12,210	400	2,150	23,226	4,947	-	53,474	11,198	23,338	7,954	141,558 (6.4)
계 (%)	154,739 (7.0)	279,123 (12.6)	259,175 (11.7)	83,570 (3.8)	47,256 (2.1)	709,305 (32.0)	124,731 (5.6)	317,125 (14.3)	132,497 (6.0)	84,670 (3.8)	27,832 (1.3)	2,220,023(100)

자료 : 철도청, 「2002 철도통계연보」, 2003. 7.

2) 수상 및 항공교통

(1) 수운 및 해운

영산강 수운

근대적인 육상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들의 생활권이 특정 수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특히 하천을 이용한 내륙수운이 가능한 경우 그 강이나 하천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뚜렸했었다. 역사적으로 보아 현재의 전남 · 북을 포함하는 호남지방의 내륙 교통수단으로 수운이 가능한 하천에는 영산강과 금강이 있었다.

호남지방은 한반도의 서남해안을 끼고 있는 평야지역으로, 근대적 교통수단이 도입되기 이미 오래 전부터 해안지역과 내륙간의 왕래가 빈번했었고 대규모의 물자수송이 요구될 경우 주로 하천이나 강의 수운을 이용했었다. 영산강의 경우, 강 하구에 위치하는 목포와 내륙지방에서 거둔 조세를 보관하기 위해 창(倉)을 설치해두었던 영산포 사이에 범선 및 기선이 운항되었다.

목포항의 개항 직전까지도 목포와 광주 · 나주 · 영산포 등 내륙지방의 연결은 육상 교통수단보다는 주로 영산강을 오르내리는 배편에 의존했었다. 물론, 1904년 무렵까지는 원동기선이나 증기선이 운항되지 않아 고기잡이 배나 통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목포에서 영산포까지는 적어도 18시간 이상 걸렸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곳에 진출해있던 일본인들은 자국인들의 왕래를 편리하게 하고자 1904년 10월 소형 범선 2척을 마련하여 목포와 영산포 양쪽에서 상호 발착하도록 했다. 그 후 1905년에는 평안도 방면에서 10톤급 원동기선인 평남환(平南丸)을 가져와 범선을 대체시켰고, 1906년 9월에는 약간 큰 원동기선인 정복환(正福丸)을 각각 들여왔고, 이 무렵에 기념환(紀念丸)이 목포~영산포간 정기항로를 열었다. 이렇게 3척이 운항되다가 1907년 7월에 이르러서 2척은 다른 항로로 옮겨지고 기념환만이 운항되었다.

영산강 유역이 점차 발전되어 감에 따라 목포~영산포간 항로도 활기를 띄게 되었고, 영산

강 수운은 점차 유망한 사업이 되어 50여척 이상의 범선이 왕래할 정도까지 되었다. 1909년 5월 목포항운합명회사가 이를 인수했을 무렵에는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게 되어 그 바람에 1909년 8월에는 부산 방면에서 금강환(錦江丸)을 들여와 이 노선에 취항시켰다. 조선우선회사가 창립되던 1912년 4월까지 이러한 활기가 지속되었으나, 1912년 목포~광주간의 자동차 운행 개시, 이듬해인 1913년 나주 및 송정리의 호남선 개통 등으로 여객이 현저히 감소함으로써 폐지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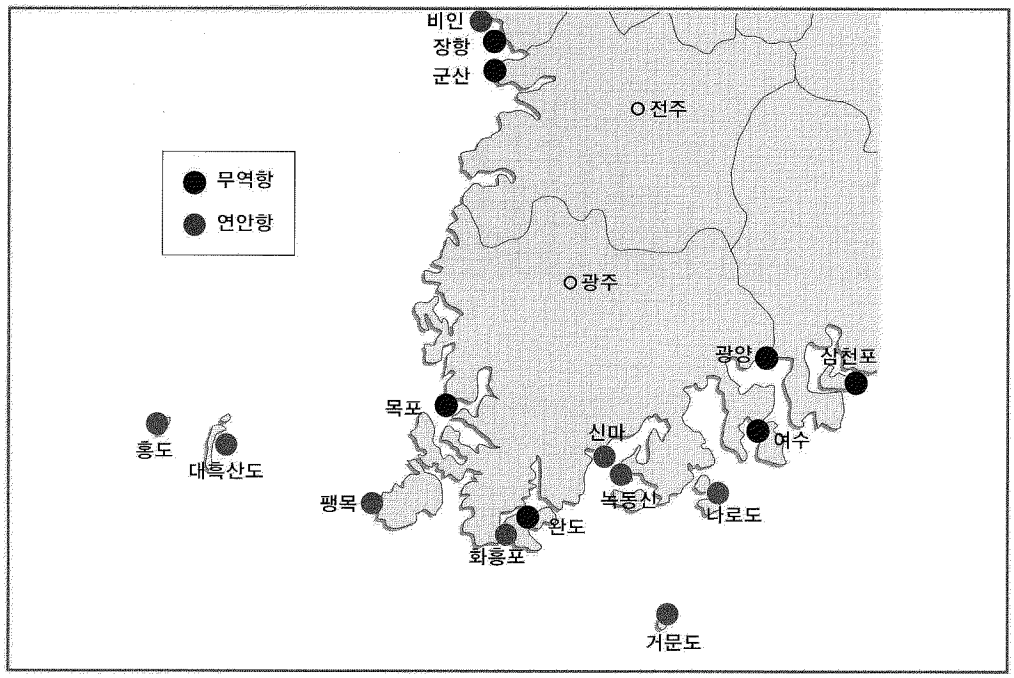
그 후 10여 년간은 다시 통선과 어선의 시대로 돌아갔으며, 1925년 5월에 이르러서야 일본인들이 다시 원동기선인 영포환(榮浦丸)을 취항시켰으며, 1929년 이것이 다시 영산포 소재의 목영운수주식회사의 소유로 바뀌었다. 이처럼 목포~영산포간의 평수항로가 잠시 쇠퇴했다가 다시 재개된 것은, 평수항로의 취항이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했었고 철도나 자동차가 오지나 벽지까지 연결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영산포의 경우 농산물의 집산지로서, 수송의 적환지점일 뿐 아니라 이 지역경제의 결절 지점으로서 목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급성장하게 되었다. 결국 영산포는 1937년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이때가 영산포의 전성기였다. 물론 뱃길이 열려 있었고 또한 열린 정도가 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항만과 해운

호남지방은 한반도의 서해안 및 남해안과 면하고 있어서 다수의 항구와 포구가 발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항만관리체계상 항만은 크게 지정항만과 어항으로 구분되며, 지정항만은 다시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그리고 어항은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으로 나뉜다. 무역항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할하며, 연안항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건설하되 시 · 도지사가 운영을 책임진다. 또한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그리고 지방어항은 시 · 도지사가 관리하게 된다. 이들 전남 · 북에 위치하는 무역항, 연안항, 어항은 모두 군산, 목포, 여수 등 3개의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하에 소속되어 있다.

2003년 현재 전국적으로 28개의 무역항과 23개의 연안항이 있다. 이 가운데 호남지방에 위치하는 무역항은 군산, 목포, 완도, 여수, 광양 등 5개소이며, 연안항은 홍도, 대흑산도, 팽목, 화흥포, 거문도, 녹동신항, 신마, 나로도 등 8개소이다. [표 6-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남지방에 위치하는 5개 무역항 가운데 광양항은 30만톤 규모의 선박 3척이 동시 하

역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최대 DWT를 갖추고 있으며 이들 5개 무역항의 하역능력 비중은 전국 전체 무역항의 23.5%를 차지한다.



〈그림 6-9〉 호남지방의 지정항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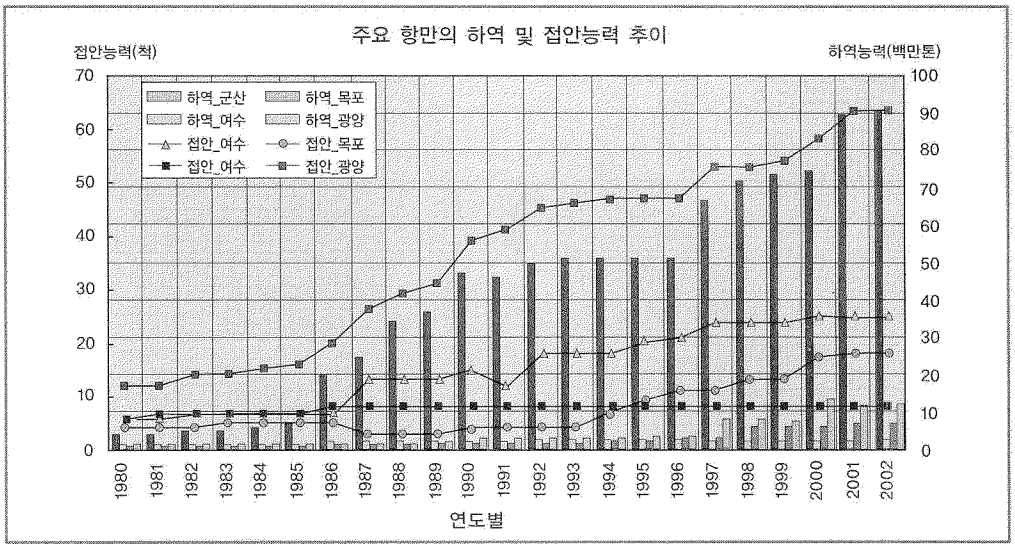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 「2003 해양수산통계연보」, 2003. 7

[표 6-13] 호남지방 무역항의 시설규모

(단위: m, ㎡, 척, 1천톤)

구 분		안벽	방파제	잔교	물양장	야적장	예선	접안능력	하역능력	최대 DWT
호남지방	군 산	3,829	2,385	3	1,239	695,671	5	25	12,645	2만×13척
	목 포	3,230	0	21	3,330	184,614	1	18	7,011	3만×2척
	완 도	620	300	4	2,182	28,450	0	4	817	2만×1척
	여 수	1,089	2,016	8	2,334	57,526	22	8	3,016	6천×3척
	광 양	13,590	0	0	504	848,366	0	63	90,769	30만×3척
	계	22,358	4,701	36	9,589	1,814,627	28	118	114,258	-
	전국대비%	20.8	8.8	29.3	17.7	17.4	19.3	18.9	23.5	
전국 계		107,280	53,362	123	54,119	10,440,446	145	624	486,510	30만×3척

자료 : 해양수산부, 「2003 해양수산통계연보」, 2003. 7.
주 : DWT(Dead Weight Tonnage) - 재화중량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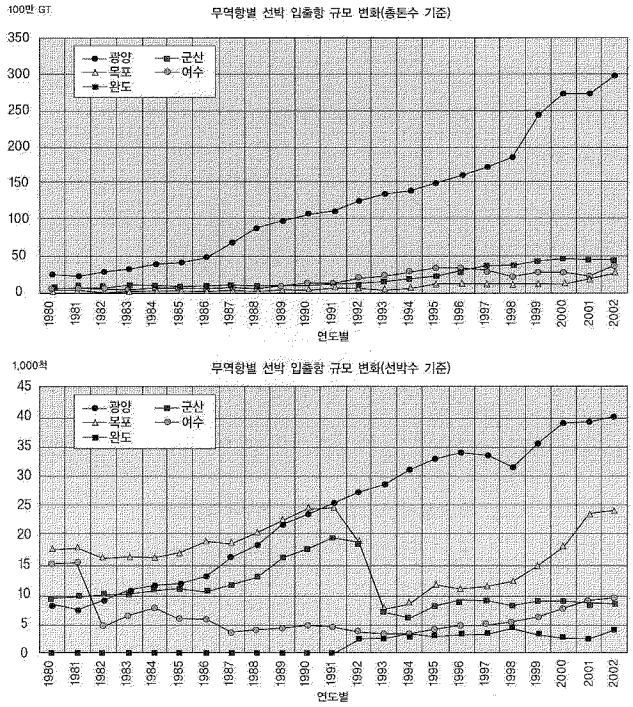
〈그림 6-10〉 호남지방 무역항의 하역 및 접안 능력 변화추이 (1980~2002)

자료 : http://kosis.nso.go.kr/

〈그림 6-10〉은 군산, 목포, 광양, 여수 등 4개 무역항의 하역능력 및 접안능력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데, 여수항의 해상화물 처리능력은 거의 증가하지 않은 반면 광양항의 처리능력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는 양항체제를 전제로 한 광양 컨테이너부두의 시설규모 확장에 따른 결과이다.

이들 각 무역항의 선박 출입항 규모 변화의 추이에서〈그림 6-11〉, 총 톤수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완도항은 거의 정체된 상태이고 여수, 목포, 군산항의 물동량은 거의 정체된 상태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 이에 비해서 광양항의 경우는 단계별 건설사업이 마무리되는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중후반에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한편 출입항 선박수에 있어서는, 광양항의 경우 출입항 선박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보이는 반면 군산항과 목포항의 출입 선박수는 1990년대 초에 현저하게 줄어든다. 다만 중반 이후 출입항 선박이 다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긴 하나 군산의 회복세가 목포의 회복세에 비해 둔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호남지방의 무역항 중 군산항은 1899년 개항 이래 1960년대의 경제개발과정에서 낮은 우선순위 때문에 그 개발이 부진했으나 80년대 후반 군산산업단지와 군산 · 장항 광역국가산



〈그림 6-11〉 호남지방 무역항의 선박 입출항 규모 변화(1980~2002)

자료:http://kosis.nso.go.kr/

업단지의 조성이 시작되면서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군장 신항만개발계획이 수립되어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군산항은 대중국 교역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그리고 군장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전북지역은 물론이고 충남 · 북 일부에 걸친 항만수요에 대처하는 서해 중부권의 관문항 기능이 강하다. 군산항은 자동차 전용부두와 시멘트 · 유류 · 규사 하역을 위한 시설이 갖추었으며, 군산-홍콩간의 정기 컨테이너선도 운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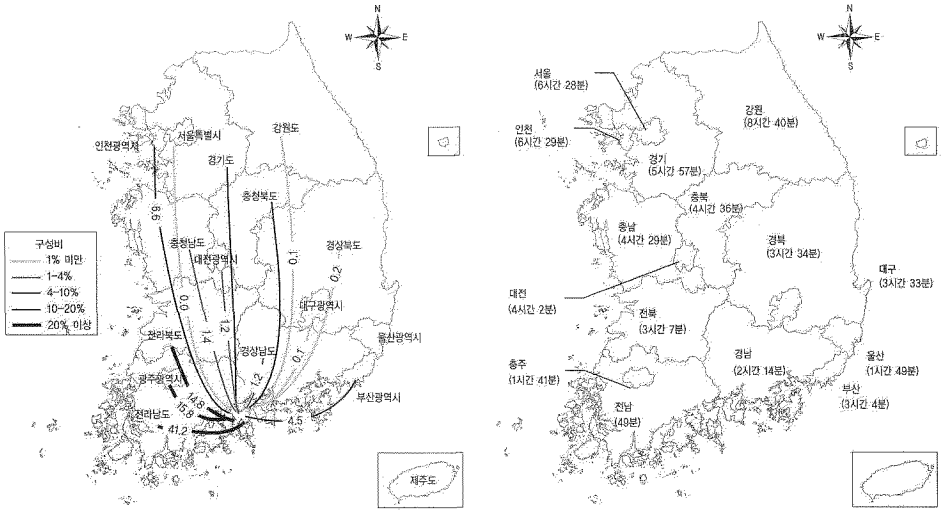
목포항의 경우는 한반도 서남단의 거점 관문항으로서 1897년 개항된 이래 어항 이전과 조선단지 조성, 연안화물 취급을 위한 북항 개발, 대불산단 지원항 기능 및 신외항 건설 등 국제 규모의 무역항으로 발전하고 있다. 목포항의 주요 수출입화물은 양곡, 목재를 비롯하여 화공생산품과 철강 등이며, 연안화물은 주로 모래, 석유정제품, 철강류 및 시멘트 등이다.

광양항은 원래 여천 · 승주 · 광양 · 하동 · 남해 등 5개의 군으로 둘러싸인 동서 약 25㎞, 남북 약 10㎞의 만이었다. 이곳은 1982년 9월부터 1991년 1월까지 3단계에 걸쳐 광양제철



〈그림 6-12〉 광양 컨테이너 부두

자료: http://www.portgy.com/



〈그림 6-13〉 광양항 수출입 컨테이너의 광역시도별 비율 및 시간거리(2001년)

자료 : 신승식,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의 내륙 기종점 분석 및 시사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2.7

소의 조강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19선석의 부두가 건설되었으며, 그 후 부산항과 광양항을 우리나라의 중핵항만으로 개발한다는 양항체제 구축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장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광양항 컨테이너 터미널은 1단계 터미널과 2단계 터미널로 구분되는데,

1998년 7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1단계 터미널은 5만 톤급 4개 선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벽길이는 1,400m, 수심 15m로 연간 120만 TEU의 화물 처리능력을 갖추었다 2002년 4월 개장된 2-1단계 터미널은 5만 톤급 2선석과 2만 톤급 2선석 등 총 4선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벽 길이는 1,150m, 연간 화물 처리능력은 81.4만 TEU이다. 2-2단계 터미널은 5만 톤급 2선석과 2만 톤급 2선석의 총 4개 선석으로 구성되며 안벽길이는 1,150m이다 (그림 6-12).

컨테이너 화물 수송의 경우, 우리나라의 28개 무역항 가운데 광양항과 부산항이 전체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일반화물의 경우 상위 10개 항만이 전체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정부의 양항체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광양항이 전국항으로서 기능을 다

[표 6-14] 호남지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실적(2002년)

(단위: 1,000TEU, 1,000RT)

구분			광양	군산	목포	여수	완도	호남 (%)		전국
외항	입항	계	367	11	-	-	-	378	10.4	3,645
		화물	2,944	42	-	-	-	2,986	5.1	59,067
	출항	계	396	13	-	-	-	409	11.0	3,710
		화물	8,384	193	-	-	-	8,577	12.2	70,208
	소계	계	763	24	-	-	-	787	10.7	7,356
		화물	11,328	235	-	-	-	11,563	8.9	129,275
환적	입항	계	159	0	-	-	-	159	7.3	2,164
		화물	3,376	1	-	-	-	3,377	8.4	40,382
	출항	계	156	0	-	-	-	156	7.6	2,041
		화물	3,229	4	-	-	-	3,233	12.9	25,035
	소계	계	314	0	-	-	-	314	7.5	4,205
		화물	6,605	5	-	-	-	6,610	10.1	65,417
연안	입항	계	20	-	10	-	14	44	26.2	168
		화물	125	-	99	-	193	417	22.4	1,860
	출항	계	28	-	12	0.1	1	41.1	25.5	161
		화물	238	-	128	0.2	14	380.2	36.3	1,046
	소계	계	48	-	22	0.1	15	85.1	25.4	329
		화물	363	-	227	0.2	207	797.2	27.4	2,906
합계		계	1,126	24	22	0.1	15	1,187.1	10.0	11,890
		화물	18,296	241	227	0.2	207	18,971.2	9.6	197,598
		%	9.26	0.12	0.11	0.00	0.10	9.60		100.0

자료: http://www.kmi.re.kr/data_center/html/data_center_main.asp

하지 못하는데, 광양항에서 반출 · 입된 컨테이너의 호남권(광주 및 전남 · 북) 유발 비율이 70%를 넘어서며 수도권의 비율은 겨우 1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충남 · 북의 중부권이 차지하는 비율도 겨우 7% 수준에 미치는 정도이다(그림 6-13). 수도권과 중부권으로부터 광양항 및 부산항까지 컨테이너 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해보면, 수도권으로부터 광양항에 이르는 운송시간이 부산항으로의 운송시간보다 약 3시간 정도 절약되며, 중부권으로부터는 약 1시간 15분가량 절약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광양항이 전국항으로 성장하려면 내륙지방의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유치전략이 도입되어야 한다.

2002년 1년 동안 전국에서 유발된 컨테이너 화물의 약 10% 정도가 광양, 군산, 목포, 여수, 완도 등 호남권의 5개 무역항에서 처리되었으며, 호남지방에서 처리된 컨테이너 화물의 96.4%는 광양항에서 처리되었다(표 6-14).

한편 이들 무역항은 연안여객항으로서의 기능도 겸하는데, 2002년 현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관리하에 들어있는 정기항로 3개, 목포청 산하의 정기항로 26개, 여수청 관리하의 정기항로 11개 등 총 40개의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있다.

[표 6-15] 전남 · 북의 여객선 정기항로 현황

구 분	취 항 상 황	정기항로
군산청	등록선박 총 228척(35,121 G/T) 취항선박 6척(943 G/T) 취항거리 182마일 수송인원 309,633명	격포~홍도, 위도 군산~비안도
목포청	등록선박 총 532척(88,809G/T) 취항선박 43척(22,176G/T) 취항거리 731마일 수송인원 3,355,111명	갈두~산양, 이목 / 생일~약산, 마량, 회진 / 마량~도장 목포~가산, 도초, 상태동, 상태서, 서거차, 신월, 안좌, 암태, 외달, 제주, 홍도 완도~상정, 생일, 제주, 청산 / 율목~팽목 증도~송도 / 진리~점암 / 화흥포~청별 / 계마~안마
여수청	등록선박 총 532척(129,162G/T) 취항선박 17척(7,651G/T) 취항거리 451마일, 수송인원 692,190명	녹동~거문, 사동, 제주, 신지 돌산~사도 여수~거문, 둔병, 송림, 연도, 제주, 함구미

자료 : 해양수산부, 「2003해양수산통계연보」, 2003.7.
주 : 낙도보조항로는 제외

(2) 항공교통

지리적으로 보아, 호남의 중심도시인 광주는 수도권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한반도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객의 항공수송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비록 최근 개통된 KTX가 호남지방의 일부 항공여객 수요를 잠식하긴 했지만, 호남의 대외 접근에 있어 항공 교통은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2002년말 현재, 호남지방에 위치하는 공항시설로는 국제선을 부정기적으로 취항시키는 광주공항을 비롯하여 여수공항, 목포공항, 군산공항이 있다. 호남의 관문공항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공항은 광주 시가의 남서쪽에 위치하여 활주로와 유도로, 주기장을 각각 1개씩 갖추고 있다. 광주공항은 1948년 11월 16일 광주시 학동에 비행장을 개설하여 이듬해부터 민항기를 운항하다가, 1964년 1월초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공항시설을 확장해왔다. 한국공항공단에서 1990년부터 인수하여 운영중인 광주공항은 1995년부터 광주~서울~방콕 노선과 광주~부산~오사카 노선의 국제 정기노선을 취항시켰다가 1998년부터 이를 중단하고, 그 대신 광주~상해간에 국제선 직항로를 개설하였다. 2004년 현재 광주~상해의 국제선에는 대한항공과 중국동방항공사에서 주 8편씩 정기선을 개설하여 운항하고 있으며, 국내선으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광주~제주 노선과 광주~김포 노선에 매일 30여 편을 편성하여 운항하고 있다.

여수공항은 1971년 5월 활주로와 계류장을 완공하고 그 이듬해부터 서울~여수간에 대한

[표 6-16] 호남권 공항별 시설규모 현황(2002)

(단위: m, ㎡)

구분		활주로	계류장	주차장	여객청사	화물청사	부지면적
광주	국제	2,835×45	44,300	31,192	10,182	288	116,564
	국내					2,765	
여수	국내	1,550×30	13,590	5,500	1,517		396,748
	(확장)	2,100×45	41,868	25,548	13,351		
목포	국내	1,600×30	9,600	4,815	1,584		112,255
군산	국내	2,740×45 2,455×23	13,758	11,171	2,852		94,488

자료 : 한국교통산업연구원, 「2003 한국교통산업연감」, p.771.

항공이 취항하였다. 1975년 운항중이던 정기노선을 일시 휴항했으나, 1977년부터 다시 운항을 재개하는 동시에 여수~제주간 노선을 추가 신설하였다. 1986년 9월 여객청사를 확장하고 1992년 말부터는 서울~여수간에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을 새로 시작했다. 여수공항은 국내공항으로, 서울 및 제주 노선에 매일 왕복 24편을 편성·운항하고 있다. 여수공항은, 경남 서부에 위치한 사천공항과 더불어, 광양만권의 신산업지대 및 컨테이너항 관련 배후공항으로서 역내의 항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목표하에 여수공항의 확장공사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계획으로 대대적으로 시행중이다. 이 공사가 끝나면, A-300의 중형기 취항이 가능해지며 여객처리능력도 연간 43만명에서 250만명 수준으로 증가된다.

목포공항은 1992년 7월 개항하여 대한항공이 목포~서울간 운항을 시작했고, 그해 말부터는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하였다. 대한항공은 1993년 초 다시 부산 노선을 개설하였고, 1994년 10월부터는 부산노선을 신설 취항시켰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대체 교통수단의 등장과 항공여객의 급격한 감소로 현재는 아시아나항공이 김포노선에만 매일 왕복 2편을 운항한다.

군산공항은 전북지역의 유일한 공항으로 1970년부터 서울 노선에 항공기를 취항시켜 오다가 1974년 일시 취항을 중단했었다. 군산공항의 민항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1992년부터 다시 대한항공의 운항이 재개되었으며, 1996년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했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은 2001년 10월에 운항을 중단하였고, 현재는 대한항공

[표 6-17] 호남권 국내공항의 수송 실적(2003.1~2003.12)

공항	운 항 (편수)			여 객 (명)			화 물 (톤)		
	도착	출발	계	도착	출발	계	도착	출발	계
광주	8,058	8,054	16,112	1,038,574	1,042,457	2,081,031	14,662	18,317	32,979
여수	3,534	3,534	7,068	246,867	263,663	510,530	815	1,567	2,382
목포	918	918	1,836	57,799	59,862	117,661	227	253	481
군산	694	694	1,388	74,688	75,947	150,635	663	1,475	2,138
호남	13,204	13,200	26,404	1,417,928	1,441,929	2,859,857	16,368	22	37,980
(%)	7.6	7.6	7.6	6.3	6.4	6.3	3.6	4.7	4.2
전국	172,903	172,972	345,875	22,555,552	22,591,340	45,146,892	451,330	456,925	908,254

자료 : http://kac.airport.co.kr/kor/airnat/airstat/act_airport_view.jsp

[표 6-18] 무안국제공항의 계획 시설규모

계획 시설	규 모	처 리 능 력
활 주 로	2,800×45m	140,000회/년
평행유도로	2,800×23m	
계 류 장	90,692㎡	9대 동시주기(B747-4, A300-3, B737-2)
여객터미널	29,106㎡	국내:20,000㎡(605만명/년), 국제:9,106㎡(47만명/년)
화물터미널	3,112㎡	8만톤/년
관 제 탑	1,792㎡	지하1층, 지상9층, H=40m
부대건물	9190㎡	동력동 외 7동
항행안전시설	ILS, ALS 등	CAT-1등급, 시정 550m까지 운항가능
고가차도	L=390m, B=23m	입 · 출구 구분
진입도로	L=1.3㎞	4차로
주 차 장	66,990㎡	2,095대 동시주차

자료 : 목포시, 「무안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2002.10, p.13.

만이 제주노선에 매일 왕복 4편의 항공기를 취항시키고 있다.

[표 6-19]는 이들 4개 공항에서 2003년 1년 동안에 처리된 여객 및 화물운송 규모를 보여준 것이다. 운항편수에 있어서 호남권의 4개 공항은 전국 공항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여객수송에서는 6.3%를 그리고 화물수송에서는 4.2%를 차지한다. 호남의 인구가 전국 인구의 11.0%를 차지하므로(2003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인구비례로 볼 때 이같은 수치는 항공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의미한다.

한편, 전남도청의 이전과 관련하여 무안군 망운면 일대에 부지면적 256만 3천㎡에 달하는 무안국제공항이 건설중에 있다. 무안공항을 개발하는 목적은 시설과 입지여건이 열악한 목포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 2000년대 호남권 항공수요에 대비한 지역거점공항을 개발하여 서해안시대 항공교통 및 물류중심기지로 기능하는 동시에,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간 항공교통망 구축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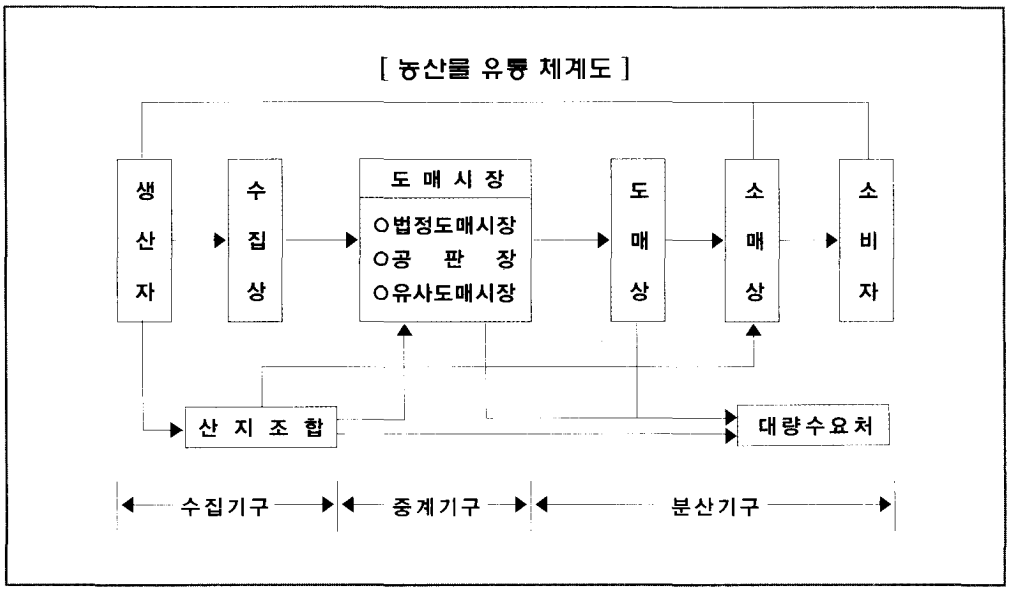
2. 유통활동

1) 상품의 지역적 유통

(1) 농축산물

농축산물은 농민과 상인간의 상호 의존적 틀 안에서 유통된다. 기본적으로 상인의 역할은 농민의 생산 활동에서 파생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해관계 측면에서 어느 정도 상충적 입장에 놓인 당사자들, 즉 농민과 소비자와 그 중간의 상인들의 요구를 조화롭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과제가 따른다.

농축산물의 유통은 농업 및 농축산물 자체가 지니는, 본질적 특성에서 파생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우선, 유통 및 거래조건이 공산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농축산물은 일반적으로 그 상품적 가치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우며, 계절성이 뚜렷하고 부패 · 변질되기 쉬운 특성이 있다. 또 같은 품종의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생산량과 품질이 천차만별이다. 농축산물에 수반되는 이러한 상품적 특성 때문에 농축산물의 유통은 공산품에 비해 손실이 크고 저장이나 수송 등의 유통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며 포장개선, 표준 · 규격화 등 상품성을 제고시키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광범하게 분산된 다수의 농가에서 소규모로 생산된 농산물을 다수의 소비자에게 신속하



〈그림 6-14〉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의 일반적 과정

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수집 · 배분 과정이 필연적이다. 따라서 농축산물 유통은 유통경로가 매우 복잡하고 다수의 중간상인이 개입하게 되어 높은 유통비용이 발생한다.

한편 농축산물은 생산 및 공급의 시간적 측면에서 상당히 불안정하다. 산물의 생산이 계절적이고 기상조건 등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인위적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생산 및 공급이 매우 불안정하다. 더군다나 생산물을 보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수확 시기에 일제히 대량 출하되는 것을 제어하기 어렵다. 또한 소비를 위한 수요는 연중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생산 및 공급은 비탄력적이어서 수요에 즉각 부응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수급 불안정 및 가격 변동의 파동이 증폭되기 쉽다.

그리고 공산품에 비해서 현대화된 유통시설이 충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생산자 단체의 결속력도 약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기능이 비교적 미흡하고 시설도 부족하여 사실상 유통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 또한 도매시장의 운영체계가 정상적으로 정착되지 못하여 산지 시장과 소매시장을 원활하게 연결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농축산물 유통 과정에서 생산자 또는 생산자 조직의 역할은 매우 미흡하고, 산지 유통시설도 미흡하여 출하 조절능력이 거의 없는 것이다.

[표 6-19] 농축산물 판매방법(2003년)

판매경로	호남지역								전국 계	
	광 주		전 남		전 북		계			
	농가수	%	농가수	%	농가수	%	농가수	%	농가수	%
도매시장	1,255	12.4	9,259	4.6	3,663	3.0	14,177	4.2	82,817	6.5
산지공판장	552	5.4	4,316	2.1	2,134	1.8	7,002	2.1	37,314	3.0
농협,농업법인	1,999	19.7	50,457	24.8	31,458	26.1	83,914	25.1	255,321	20.2
정부수매	3,081	30.4	55,809	27.4	31,905	26.5	90,795	27.2	246,030	19.5
수 집 상	923	9.1	41,841	20.6	24,085	20.0	66,849	20.0	275,879	21.8
개인소비자	304	3.0	10,439	5.1	7,961	6.6	18,704	5.6	105,430	8.3
대형유통업체	14	0.1	901	0.4	914	0.8	1,829	0.5	8,259	0.7
대량수요처	9	0.1	748	0.4	1,012	0.8	1,769	0.5	11,631	0.9
재래시장	302	3.0	5,095	2.5	1,792	1.5	7,189	2.2	32,150	2.5
기타(판매없음)	1,700	16.8	24,627	12.1	15,615	13.0	41,942	12.6	209,600	16.6
계	10,139	100	203,492	100	120,539	100	334,170	100	1,264,431	100

자료 : http://kosis.nso.go.kr/

〈그림 6-14〉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농산물 유통의 일반적 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생산자인 농민은 수집상을 통해서 도매시장으로 농산물을 출하하거나, 산지조합을 통해서 계통 출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농민이 직접 공판장이나 도매시장에 가져가 거래를 하기도 한다. 소매상이나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 일반적 과정에 비추어, 생산자가 누구와 거래하는지를 중심으로 호남의 농축산물 유통과정을 살펴보자.

몇 가지 판매방법별 농가수 구성비를 기준으로 농축산물 거래방법을 살펴보면[표 6-19], 비록 이것이 미맥 중심의 답작을 위주로 하는 호남지역의 영농체계 및 우리나라의 곡물 수

[표 6-20] 농축산물 판매방법별 구성비 변화(2002~2003)

지역	연도	도매시장	산지공판장	농협, 농업법인	정부수매	수집상	개인소비자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재래시장	기타
광주	2002	14.9	5.1	16.9	33.9	7.8	3.5	0.2	-	3.4	14.2
	2003	12.4	5.4	19.7	30.4	9.1	3.0	0.1	0.1	3.0	16.8
전남	2002	3.1	2.5	23.2	34.9	18.8	3.8	0.3	0.3	3.4	9.7
	2003	4.6	2.1	24.8	27.4	20.6	5.1	0.4	0.4	2.5	12.1
전북	2002	3.0	1.9	19.6	30.6	26.5	4.9	0.3	1.0	1.9	10.3
	2003	3.0	1.8	26.1	26.5	20.0	6.6	0.8	0.8	1.5	13.0
호남	2002	3.4	2.4	21.7	33.3	21.2	4.2	0.3	0.5	2.9	10.1
	2003	4.2	2.1	25.1	27.2	20.0	5.6	0.5	0.5	2.2	12.6
전국	2002	5.9	3.3	20.1	22.7	22.6	6.7	0.6	1.0	3.4	13.7
	2003	6.5	3.0	20.2	19.5	21.8	8.3	0.7	0.9	2.5	16.6

자료 : http://kosis.nso.go.kr/에서 작성

[표 6-21] 호남의 농산물 도매시장의 분포

구 분	합 계	공 영 도매시장	일반 법정 도매시장						민 영 도매시장
			소계	청과	수산	축산	양곡	약용	
전국 계	49	30	16	5	3	6	1	1	3
광 주	2	1	1	-	-	1	-	-	-
전 북	4	3	-	-	-	-	-	-	1
전 남	3	1	2	2	-	-	-	-	-
호남 계	9	5	3	2	0	1	0	0	1

자료 : http://www.kamis.co.kr/jsp/wms/wms.jsp?menuid=134

매정책에 의한 결과이긴 하나 '정부수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농협 · 농업법인'과 '수집상'을 통한 판매방법이 그 뒤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국 평균치에서는 비록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판매방법별 순위에 있어서 '수집상'을 통한 거래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서 '농협 · 농업법인', '정부수매'의 순서를 기록하고 있다.

전술했듯이, 최근 농업과 관련한 국내외 생산 및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농산물의 판매방법 역시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다. 비록 좀더 장기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표 6-20]에서 이러한 변화의 조짐을 볼 수 있다. 비록 1년의 기간이긴 하지만 2002~2003년 사이에 '도매시장'이나 '농협 · 농업법인', '대형유통업체' 및 '개인소비자'와 거래 비율은 증가한 반면, '정부수매'의 방법은 크게 감소했고 '수집상'을 통한 거래도 약간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곧 농산물 생산자들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화되어 있는 유통기구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졌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되거나 소매상과 직거래되는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농산물은 도매시장이라는 중계 기구를 거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된다. 도매시장은 그 관리운영체계에 따라 공영 도매시장, 일반 법정 도매시장, 민영 도매시장 등으로 구분되는데 2003년 현재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49개의 도매시장 중 9개가 호남에 입지하고 있다(표 6-21).

이 중 공영 도매시장은 광주광역시,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순천시 등 5개소에 입지하고 있으며, 일반 법정 도매시장은 광주의 축산물 도매시장을 비롯하여 목포와 여수의 청과도매시장 등 3개의 도시에 분포한다. 그리고 민영 도매시장으로 군산의 청과물 도매시장 1개소가 있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하는 공영 도매시장인 각화농산물 도매시장은 1991년 초에 개장했으며, 4개의 도매시장 법인이 입주하여 최근 서구 풍암지구에 새로운 도매시장이 들어서기 전까지 광주시의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다. 전남 순천시에 위치한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은 비교적 최근인 2001년 4월에 개장했는데, 기후적으로 온화한 전남 남동부의 원교농업지대에서 생산되는 시설채소 및 원예작물 등을 대도시로 수집 · 반출하는 관문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전북 정읍에 입지하고 있는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은 2000년 3월에 개장한 청과류 도매시장이며, 전주와 익산에 입지하는 도매시장은 각각 1993년, 1998년에 개장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표 6-22)

[표 6-22] 호남에 입지한 도매시장

구분	시 장 명 (개장일)	소 재 지	도매시장법인	시설현황(㎡)			
				대지	건물 면적	경매장	주차장
공영	광주시 농산물 도매시장 (1991. 2. 27)	북구 각화동 437-3	광주청과 광주중앙청과 호남청과 광주원협(공)	56,206	35,329	25,956	5,170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1993. 10. 29)	덕진구 송천동2가 92-36	전주청과 전주원협(공) 전주수산 수협전주(공)	59,578	26,754	15,234	9,540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1998. 1. 5)	목천동 916-4	이리청과 익산원협(공) 이리수산	105,782	38,059	22,638	10,540
	정읍시 농산물 도매시장 (2000. 3. 10)	농소동 45-15	정일청과 정읍원협(공)	70,917	13,886	5,914	26,222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2001. 4. 18)	해룡면 월전리 9-1	남도청과 순천원협(공)	74,461	26,872	12,183	2,699
일반 법정	광주시 축산 도매시장 (1971. 10. 26)	북구 양산동 409-5	삼호축산	22,737	6,241	214	1,650
	목포시 상동 도매시장 (1997. 5. 26)	상동 860	목포농수산	10,000	3,510	2,476	4,505
	여수시 농산물 도매시장 (1972. 10. 15)	충무동 614-1	여수중앙청과	1,557	1,204	991	105
민영	군산시 민영도매시장 (2000. 8. 14)	군산시 구암동134	군산청과물	9,724	2,505	1,706	990

자료 : http://www.kamis.co.kr/jsp/wms/wms.jsp?menuid=151
주 : 2004년 1월 현재의 자료임

(2) 수산물

어업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0년 현재 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의 총 어가수는 81,571 가구이며, 호남지방 어가의 비중은 그 38.3%에 달한다. 상품형태별 판매방식을 기준으로 이들 어가의 비중을 보면[표 6-23], 전국 평균에 비해서 활어나 선어 형태의 판매

[표 6-23] 수산물 상품형태 및 판매방법별 어가수: 해수면 어업 (2000년)

구분		계	상품형태별				수산물 판매방법							
			활어	선어	가공품	기타	수협·농협	도매시장	수집상	음식점	가공공장	양식장	자기매장	기타
어가수	전북	4,275	1,184	494	354	2,243	1,176	307	2,402	129	81	30	30	120
	전남	26,936	8,628	2,223	4,525	11,541	10,741	3,473	7,906	412	1,557	157	400	2,271
	호남	31,211	9,812	2,717	4,879	13,784	11,917	3,780	10,308	541	1,638	187	430	2,391
	전국	81,571	32,128	9,579	6,896	32,703	38,118	6,875	23,459	2,055	2,447	852	1,485	6,015
구성비	전북	100	27.7	11.6	8.3	52.5	27.5	7.2	56.2	3.0	1.9	0.7	0.7	2.8
	전남	100	32.0	8.3	16.8	42.8	39.9	12.9	29.4	1.5	5.8	0.6	1.5	8.4
	호남	100	31.4	8.7	15.6	44.2	38.2	12.1	33.0	1.7	5.2	0.6	1.4	7.7
	전국	100	39.4	11.7	8.5	40.1	46.7	8.4	28.8	2.5	3.0	1.0	1.8	7.4

자료: http://kosis.nso.go.kr/에서 작성

비율이 더 낮고 가공품 형태로 판매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치의 약 2배에 가깝다. 다만 전북의 경우 전남에 비해 가공품보다는 선어 형태로 판매하는 어가의 비율이 더 높다.

수산물 판매방법에 있어서는 전국 평균치의 경우 수협을 통한 계통출하의 비중이 단연코 높은데 반해서 호남지방의 경우에는 수협 · 농협을 통한 거래나 수집상을 통한 출하의 비중이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특이한 점은, 전북지역의 경우 수집상을 통한 판매 비중이 56.2%나 되고 오히려 수협 · 농협을 통한 판매는 27.5%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전남의 경우, 이들의 비율은 각각 약 30%와 40%로 오히려 수협 · 농협을 통한 판매가 더 많다. 이처럼 전북과 전남의 판매방법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두 지역의 어업형태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즉, 해안선의 출입이 매우 많고 또한 양식장 개발에 유리한 연안환경을 갖추고 있는 전남의 경우 양식어업에 보다 많은 어가가 참여하는 반면, 자연환경에서 상대

[표 6-24] 경영주 어업종사분야별 어가수(2000년)

구분	어가수		양식어업		어선어업		나잠어업		기타어업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전북	4,275	100	545	12.7	1,998	46.7	2	0.0	1,730	40.5
전남	26,936	100	12,519	46.5	10,659	39.6	112	0.4	3,646	13.5
호남	31,211	100	13,064	41.9	12,657	40.1	114	0.4	5,376	17.2
전국	81,571	100	22,225	27.2	41,527	50.9	6,054	7.4	11,765	14.4

자료 : http://kosis.nso.go.kr/에서 작성

[표 6-25] 수산물 상품형태 및 판매방법별 어가수 : 내수면 어업 (2000년)

구분		계	판매유무		상품형태별				수산물 판매처					
			없음	있음	활어	선어	가공품	기타	도매시장	수집상	음식점	양식장	자기매장	기타
어가수	광주	8	2	6	3	1	0	2	2	0	3	0	0	1
	전북	487	16	471	346	11	15	99	73	245	59	11	26	57
	전남	602	18	584	320	15	22	227	90	325	53	7	24	85
	호남	1,089	34	1,055	666	26	37	326	163	570	112	18	50	142
구성비	전국	3,799	103	3,696	2,387	107	150	1,052	595	1,703	611	77	296	414
	광주	100	25.0	75.0	37.5	12.5	-	25.0	25.0	-	37.5	-	-	12.5
	전북	100	3.3	96.7	71.0	2.3	3.1	20.3	15.0	50.3	12.1	2.3	5.3	11.7
	전남	100	3.0	97.0	53.2	2.5	3.7	37.7	15.0	54.0	8.8	1.2	4.0	14.1
	호남	100	3.1	96.9	61.2	2.4	3.4	29.9	15.0	52.3	10.3	1.7	4.6	13.0
	전국	100	2.7	97.3	62.8	2.8	3.9	27.7	15.7	44.8	16.1	2.0	7.8	10.9

자료 : http://kosis.nso.go.kr/에서 작성

적으로 양식에 불리한 전북지역의 경우 거의 절반에 달하는 어가가 어선어업에 종사하고 있다(표 6-24).

한편 해수면 어업의 경우와 달리, 내수면 어업에 있어서는 전남과 전북이 그다지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판매처 면에서 보아 모두 수집상을 통해 판매하는 어가가 절반을 넘는다는 공통점이다. 이는 전국 평균치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이다(표 6-25).

2) 유통기관의 지역적 분포

(1) 유통 및 물류시설의 분포

2003년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화물터미널은 총 28개소이며 이중 4개소가 복합화물터미널이다. 최상위 계층의 물류거점에 해당하는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는 경기도 의왕시와 군포시를 비롯하여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2개가 입지하고 있다. 이들 4개 터미널의 부지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화물터미널 부지면적의 69.3%에 해당하는 720,110평이나 된다.

[표 6-26] 호남지방의 화물 터미널

구분	시 도	터미널명	위 치	규 모(평)		공용 개시일
				부 지	건축연면적	
합계	전 국	28개소		1,039,697	259,741	
복합	전 국	4개소		720,110	179,552	
일반	전 국	24개소		319,587	80,189	
	광 주	광주화물터미널	북구 각화동	10,799	875	'86. 3
	전 북	익산종합화물터미널	익산시 부송동	7,272	1,414	'89. 3
	전 남 (2)	여천트럭화물터미널 여천화물터미널	여수시 월하동 〃	6,2457 3,36	1,433 652	'95. 2 '99. 5
	소계	4개소		24,316	3,722	

자료 : 건설교통부(http://www.moct.go.kr/)

나머지 24개의 화물터미널은 전국 각지에 걸쳐 분산되어 분포하는데, 호남지방에는 광주광역시 각화동의 광주화물터미널과 익산시 부송동의 익산종합화물터미널, 그리고 여수시에 위치하고 있는 여천트럭화물터미널 및 여천화물터미널 등 4개가 위치하고 있다(표 6-26).

한편 화물수송과 관련하여, 최근 중앙정부는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간 연계운송이 가능한 곳을 구심점으로 삼아 화물을 대량으로 모아 한꺼번에 운송함으로써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전국의 주요 물류거점에 내륙화물기지라 부르는

[표 6-27] 내륙화물기지 건설계획

(단위 : 10억원)

구분		사업명	위치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1 단 계	수도권	의왕ICD 군포복합터미널	경기의왕 경기군포	23만평 11만평 2,477	2,808 '95. 4~'98.12	'94.11~'96.12
	부산권	양산ICD 양산복합터미널	경남양산 〃	29만평 10만평 2,608	2,418 〃	'94.11~'99.12 〃
2 단 계	호남권	ICD 복합터미널	전남장성 〃	16만평	3,054	'99 ~ 2010
	중부권	ICD 복합터미널	충남연기 충북청원	21만평	3,529	사업자 모집 중
	영남권	ICD 복합터미널	경북칠곡	25만평	기본조사 설계 중	

자료 : 건설교통부(http://www.moct.go.kr/)

대규모 화물터미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화물의 수송수요는 급증하는데 반해 물류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기업의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다품종 소량 다빈도 화물을 집적화하여 대량으로 수송하는 연계수송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국 5대 물류거점에 내륙화물기지(복합화물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기지)의 건설을 추진중인데, 호남권의 내륙화물기지 건설 예정지는 전남 장성군 서상면 용흥리 일원이다. 이 곳은 남북축인 호남고속도로와 1호 국도, 호남선 철도를 비롯하여 동서축인 24호선 국도와 고창-장성간 고속도로가 만나는 결절에 해당한다.

[표 6-28] 일반시장의 변화(1998년/2001년)

구분		1998년		2001년	
		시장수(개소)	연면적(㎡)	시장수(개소)	연면적(㎡)
호남	광주	41	373,932	33	287,737
	전남	42	195,919	46	222,216
	전북	30	319,626	30	316,323
	계 (%)	113 (7.6)	889,477 (6.1)	109 (7.3)	826,276 (5.1)
전국		1,496	14,646,201	1486	16,147,907

자료 : 통계청, 시군구 100대 지표, 2002.12

[표 6-29] 대형 할인매장의 분포

행정구역별	개소	구·시·군별
광주광역시	43	광산구(6), 남구(4), 동구(14), 북구(13), 서구(6)
전라남도	87	강진군(1), 고흥군(1), 곡성군(2), 광양시(7), 구례군(1), 나주시(4), 목포시(14), 보성군(2), 순천시(19), 신안군(2), 여수시(20), 영광군(1), 영암군(2), 완도군(5), 장성군(1), 장흥군(2), 진도군(1), 함평군(1), 화순군(1),
전라북도	84	고창군(1), 군산시(14), 김제시(2), 남원시(16), 무주군(1), 순창군(1), 완주군(3), 익산시(9), 임실군(1), 전주시 덕진구(12), 전주시 완산구(21), 정읍시(2), 진안군(1),
계	214	

자료 : 건설교통부(http://www.moct.go.kr/)

[표 6-30] 공영도매시장의 품목별 거래 물량의 금액

(단위 : 톤, 백만원)

시장별	청 과		수 산		축 산		합 계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전국 계	5,491,165	5,608,956	242,446	607,782	86,064	420,361	5,820,222	6,639,054
광주각화	316,404	325,470	-	-	-	-	316,404	325,470
전 주	80,099	79,678	3,597	11,594	-	-	83,696	91,272
익 산	65,977	52,846	1,064	2,644	-	-	67,041	55,490
정 읍	26,126	21,908	-	-	-	-	26,126	21,908
순 천	55,793	55,602	-	-	-	-	55,793	55,602
소계	544,399	535,504	4,661	14,238	-	-	549,060	549,742

자료 : http://www.kamis.co.kr에서 정리(2003년의 자료임)

[표 6-31] 도매시장별 거래 물량과 금액

구분	지 역	시 장 명	법인(공판장)명	물 량	금 액
일반법정 도매시장	전국 계	17개소	17개	410,546	914,860
	광 주	광주시 축산도매시장	삼호축산	11,450	25,762
	전 남	목포시 상동도매시장	목포농수산	37,016	28,764
		여수시 농산물도매시장	여수중앙청과	10,044	6,874
민 영 도매시장	전국 계	3개소	3개	25,485	31,324
	전 북	군산시 민영농산물도매시장	군산청과물	9,534	10,352

자료 : http://www.kamis.co.kr에서 정리(2003년의 자료임)

도시나 지역간 물류가 아니라 도시 내부의 유통을 위한 시설로서 광주 · 전남 · 전북을 망라한 3개 시도의 시장은 총 109개소에 그 연면적은 826,276㎡에 달한다. 이를 전국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면 각각 7.3%, 5.1%에 해당한다. 3년 전인 1998년의 그것에 비하면, 시장의 개소수와 연면적의 비율 모두 약간씩 줄어든 셈이다.

한편, [표 6-29]는 오늘날 유통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 할인매장의 시군별 분포를 적은 것이다. 호남지방에 총 214개의 대형 할인매장이 입지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에 43개소, 전라남도에 87개소, 전라북도에 84개소의 할인매장이 들어서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농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이 지역에 분포하는 도매시장은 모두 9개소이며, 농산물산지 유통업체로는 광주광역시에 입지한 E-마트(상무점, 동광주점), 롯데마트

(상무점, 첨단점), 빅마트(북부점, 주월점, 첨단점), 해태마트(광주점), 홈플러스(동광주점)와 전남지역에 입지한 E-마트(목포점, 여수점), 까루푸(순천점), 대한통운마트(목포점), 롯데마트(목포점), 킴스클럽(순천점), 그리고 전북에 입지한 E-마트(군산점, 남원점, 전주점), 굿마트(전주점), 대한통운마트(전주점), 롯데마트(익산점) 등이 있다. [표 6-30]과 [표 6-31]은 이 지역의 9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진 거래 물량과 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2) 정기시의 분포

조선 후기에는 대부분의 지방 장시가 5일마다 열렸으며, 장시가 지역 주민들 뿐 아니라 조정과 지방수령까지도 자생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임을 인식하였다. 지방 장시는 적어도 5일에 한 번 상인과 일반 민간인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장소가 되었으며,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수공업자의 공산품이 이곳에서 교환되고, 산간이나 평야지대의 각종 곡물, 해안과 내륙의 산물 등이 서로 교역되는 장소였다.

결국 지방장시는 물화교역, 상품생산, 정보수집 및 교환 · 홍보, 오락과 유희, 민간인들의 회합 및 모임을 도모해주는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당시는 교통 및 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봇짐을 지고서 전국 각지의 장날을 편력하는 보부상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또한 이러한 장터는 단순한 시장거래 이상의 복합적 의미를 지녔었다. 당시 장날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오늘날 말하는 '시장'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하여 이웃마을 가기가 용이하지 못했던 시대에는 시장이 이 마을 사람들과 저 마을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소였으므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 주는 가교역할을 하면서 마을 사이에 인간관계를 형성시켜 놓았다

광주와 전남 · 전북에서는 총 179개의 장이 돌아가면서 개시된다. 이들 중에서 1일 · 6일 열리는 시장이 40개소이며 2일 · 7일 개시장이 30개, 3일 · 8일에 개시되는 장이 44개, 4일 · 9일 장이 34개소, 5일 · 0일 장이 31개소이다.

[표 6-32] 호남지방의 5일장과 개시일

소재지	장터이름	장날	특산물	소재지	장터이름	장날	특산물
강진군(8)	마량장	3,8	해산물		조성장	3,8	농수산물
	성전장	1,6	해산물		득량장	1,6	농수산물
	신전장	2,7	해산물		회령장	4,9	농수산물
	용천장	2,7	잡화		보성장	2,7	농수산물
	칠량장	1,6	해산물	순천시(8)	과목장	4,9	고추
	강진장	4,9	꿀		장촌장	2,7	곡물
	병영장	3,8	해산물		주암장	3,8	곡물
	도암장	5,0	해산물		용림장	1,6	곡물
고흥군(6)	도양장	3,8	산지부산물		쌍암장	1,6	산나물
	도화장	3,8	산지부산물		낙안장	2,7	곡물
	과역장	5,0	곡물		송광장	1,6	산나물
	대서장	2,7	곡물		별양장	3,8	해산물
	고흥장	4,9	곡물	신안군(1)	지도장	3,8	잡화
	동강장	1,6	곡물	여수시(2)	서정장	4,9	농축산물
곡성군(5)	곡성장	3,8	농산물		덕양장	3,8	축산물
	석곡장	5,0	농산물	영광군(5)	백수장	4,9	농축수산물
	옥과장	4,9	농산물		법성장	5,0	농축수산물
	입면장	2,7	농산물		염산장	3,8	농축수산물
	죽곡장	1,6	농산물		포천장	2,7	농축수산물
광산군(2)	비아장	1,6	의류		영광장	1,6	우시장
	송정장	3,8	의류	영암군(6)	구림장	2,7	수박
광양시(3)	광양장	1,6	곡물		신북장	3,8	수박
	섬거장	3,8	곡물		영암장	5,0	참깨
	옥곡장	4,9	배추		금정장	1,6	수박
구례군(5)	구례장	3,8	곡물		시종장	2,7	수박
	구례우시장	3,8	축산물		독천장	4,9	우시장
	광의장	1,6	곡물	완도군(5)	고금장	2,7	곡물
	산동장	2,7	곡물		금일장	3,8	곡물
	토지장	5,0	곡물		노화장	2,7	곡물
나주시(8)	공산장	1,6	잡화		완도장	5,0	김
	남평장	1,6	곡물		군외장	3,8	곡물
	다시장	3,8	잡화	장성군(4)	약수장	3,8	곡물
	문평장	1,6	잡화		사가장	1,6	곡물
	동강장	3,8	잡화		사창장	5,0	곡물
	봉황장	4,9	잡화		황룡장	4,9	곡물
	반남장	4,9	잡화	장흥군(8)	관산장	3,8	곡물
	세지장	2,7	잡화		용산장	1,6	곡물
담양군(3)	담양장	2,7	농산물		장평장	1,6	곡물
	창평장	5,0	농산물		회진장	1,6	곡물
	대치장	3,8	농산물		유치장	4,9	곡물
무안군(6)	망운장	1,6	해물		장흥장	2,7	곡물
	몽탄장	3,8	산지부산물		안양장	5,0	곡물
	일로장	1,6	해산물		대덕장	5,0	곡물
	청계장	3,8	해산물	진도군(3)	의신장	1,6	고추
	무안장	4,9	양파		진도장	2,7	고추.
	해제장	5,0	해산물		임해장	4,9	고추
보성군(7)	복내장	4,9	농수산물	함평군(7)	신광장	5,0	곡물
	예당장	5,0	농수산물		학교장	5,0	곡물
	벌교장	4,9	농수산물		나산장	4,9	곡물

(다음 쪽으로 이어짐)

(앞 쪽에서 이어짐)

소재지	장터이름	장날	특산물	소재지	장터이름	장날	특산물
	손불장	1,6	곡물		무풍장	3,8	고추
	함평장	2,7	곡물	부안군(2)	부안장	4,9	쌀
	해보장	3,8	곡물		줄포장	1,6	해산물
	월야장	1,6	돗자리	순창군(5)	구림장	3,8	산나물
해남군(13)	옥천장	3,8	산지부산물		쌍치장	4,9	고사리
	금송장	4,9	산지부산물		동계장	2,7	밤
	남리장	3,8	산지부산물		순창장	1,6	고추
	남창장	2,7	산지부산물		북흥장	3,8	약초
	둔주포장	5,0	산지부산물	완주군(4)	삼례장	3,8	채소
	우수영장	4,9	산지부산물		운주장	1,6	의류.
	월송장	4,9	산지부산물		고산장	4,9	곶감
	해남장	1,6	해산물		봉동장	5,0	채소
	일평장	3,8	산지부산물	익산시(4)	금마장	2,7	고추
	좌일장	3,8	산지부산물		황등장	5,0	고추
	중앙장	2,7	산지부산물		여산장	1,6	마늘
	화산장	5,0	해산물		와리장	2,7	참깨
	화원장	5,0	산지부산물	임실군(5)	강진장	2,7	고추
화순군(8)	이서장	5,0	고추		관촌장	5,0	고추
	화순장	3,8	수박		신평장	3,8	고추
	중장터장	4,9	약초		임실장	1,6	고추
	동복장	2,7	감		운암장	4,9	고추
	사평장	5,0	배	장수군(4)	번암장	1,6	약초
	이양장	4,9	채소		신서장	2,7	곡물
	능주장	5,0	복숭아		장수장	5,0	곱돌그릇
	춘양장	3,8	채소		장계장	3,8	곡물
고창군(6)	대산장	2,7	수박	정읍시(5)	신태인장	3,8	농산물
	무장장	5,0	마늘		고부장	1,6	곡물.
	상하장	1,6	마늘		산외장	1,6	곡물..
	흥덕장	4,9	양파		태인장	5,0	곡물
	해리장	4,9	고추		칠보장	4,9	곡물
	고창장	3,8	수박	진안군(10)	진안장	1,6	곡물
군산시(1)	지경장	1,6	고추		용담장	3,8	곡물
김제시(3)	김제장	2,7	의류		주천장	5,0	곡물
	김포장	1,6	고추		정천장	5,0	곡물
	원평장	4,9	고추		안천장	4,9	곡물
남원시(3)	남원장	4,9	곡물		동향장	3,8	곡물
	운봉장	1,6	곡물		마령장	3,8	곡물
	인월장	3,8	산채		성수장	2,7	곡물
무주군(4)	안수장	5,0	곡물		백운장	5,0	곡물
	무주장	1,6	고추		부귀장	4,9	곡물..
	설천장	2,7	고추	총 179개소			

자료 : http://cp0308.culturecontent.com/cmarket/cmarket01.asp
http://www.yfa.or.kr/
http://www.minsokjang.com/

3. 정보통신

산업 분류체계상으로 정보통신 산업은 크게 정보통신 서비스와 정보통신 기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서비스로 나뉜다. 정보통신 서비스는 다시 기간통신 서비스, 부가통신 서비스, 별정통신 서비스, 방송 서비스로 세분되며, 정보통신 기기 부문은 통신기기, 정보기기, 방송기기 그리고 부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방송산업은 현재 정보통신산업 분류체계 내에서 방송기기 부문과 방송서비스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방송기기 분야는 크게 지상파방송 송수신기, 유선방송 · 위성방송 송수신기, 방송국용 기기, 그리고 방송기기 부분품 등의 범주로 나누며, 방송서비스는 지상파 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기타방송으로 나누어져 있다.

1) 매스컴의 지역적 분포

1980년대 초반의 정치적 혼란기를 지나서, 노동운동 및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분출되었던 시기인 1980년대 중반 이후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대중적 언론 매체의 잠재적 영향력은 보다 강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인터넷에 기반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매스컴이 등장 · 일반화 되었다는 점이다. 1980~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그다지 보편화되지 못했던 인터넷 통신용 물리망이 국가 주도의 강력한 IT산업 진흥정책에 힘입어 90년대 이후 급속하게 확대 · 보급되었고, 상대적으로 컴퓨터 사용 환경에 익숙한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과 집단적 의사 표현 및 수렴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활자 중심의 전통적 신문이나 잡지 등에 비하여 이들 온라인 매체들은 매스컴으로서 그 기본적 역할을 더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1) 신문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그 내용 및 형식특성에 따라 종합일간신문, 경제신문, 외국어신문, 스포츠신문, 특수신문, 인터넷신문, 생활정보지 등으로 대별된다. 2003년 11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등록된 총 131종의 일간신문 가운데(특수 23개, 외국어 7개 포함), 광주지역에는 광주일보, 전남일보, 무등일보, 전남매일, 호남신문(광남일보), 광주타임스, 호남매일, 호남일보, 광주매일, 대한일보 등 10개 종합일간신문이 분포하였고, 전남에는 전광일보와 목포일보 등 2개사가, 그리고 전북에는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매일, 전주일보, 전라일보, 새전북신문, 매일전북, 전북중앙신문, 전주매일, 전민일보 등 10개사가 분포했다.

호남권에서 지령이 가장 오래된 신문은 전주에서 발간되는 전북일보이며, 다음으로 광주에서 발간되는 광주일보의 지령이 오래되었다. 전북일보는 1950년 10월 15일 창간하여 제1

[표 6-33] 호남지방의 주요 종합일간신문사

신문사명	창간일자	지역별 판매비율(%)	지령	발행면수
광남일보	95.12.12	광주 48, 전남북 49, 서울 3	2,608호(2004.7.31)	96/주
광주매일	91.11. 1	(광주/전남/서울)	3,520호(2004. 8.6)	96/주
광주일보	52. 2.10	광주 45, 지방54, 서울 1	16,910호(2004.8.12)	148/주
광주타임스	98. 5.10	광주 40, 전남 45, 기타 5	1,902호(2004.8.10)	16/일
전남도민일보	98. 9.10	(서울/경기/광주/전남 · 북)	1,345호(2004.8. 6)	12-16/일
전남매일	89. 6.29	전남 45, 광주 44, 서울 · 기타 11	4,409호(2004.8.27)	80/주
전남일보	89. 1. 7	지방 95, 중앙 5	4,793호(2004.8.27)	116/주
무등일보	88.10.10	광주 45, 전남북?기타 55	4,742호(2004.8. 2)	116/주
호남매일	00.11.25	광주 38, 전남 60, 서울 · 기타 2	1,010호(2004.8.10)	84/주
대한일보	02.11.12	(광주/전남)	-	-
새전북신문	00.10.25	전북 95, 서울 · 기타 5	1,149호(2004.7.26)	16/일
전라일보	94. 6. 8	(전북/서울)	3,103호(2004.8.13)	120/주
전민일보	03. 5.12	(전북/서울)	321호(2004.8.10)	16/일
전북도민일보	88.11.22	전북 95, 기타 5	4,797호(2004.7.31)	96/주
전북일보	50.10.15	지방 90, 중앙 10	16,942호(2004.7.30)	120/주
전북중앙신문	02.10. 7	(전북/서울)	565호(2004.8.11)	124/주

자료 : http://www.kpf.or.kr/

[표 6-34] 호남지역의 인터넷 신문과 주소

인터넷 신문명	웹 주소	인터넷 신문명	웹 주소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새전북신문	www.sjbnews.com
전남일보	www.jinilbo.com	전북중앙신문	news.jjn.co.kr
무등일보	honam.co.kr	디지털김제시대	www.gjtimes.co.kr
전남매일	www.jndn.com	해남신문	www.hnews.co.kr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강진신문	www.gjon.com
광주타임스	www.kjtimes.co.kr	목포투데이	mokpotoday.com
호남매일	www.homae.co.kr	iGunsan	www.igunsan.co.kr
광주매일	www.kjdaily.com	참소리	www.cham-sori.net
대한일보	www.dhilbo.co.kr	진안신문	jinannews.co.kr
광주인터넷뉴스	www.gjinews.com	나주투데이	www.najutoday.com
전북일보	www.jeonbukilbo.co.kr	인터넷녹두신문	www.inp.or.kr
전북도민신문	www.domin.co.kr	뉴스통	www.newstong.com
전라일보	www.jeollailbo.com		

자료 : http://www.newspaper.co.kr

호를 타블로이드판 2면으로 발행했다. 약 6년이 지나서 4면으로 지면을 늘렸고, 1962년 9월부터는 6면으로 발행하기 시작했다. 1973년 6월에는 전북 도내의 전북일보, 전북매일신문, 호남일보 등 3개 신문사를 전북신문으로 통합하였다가 정확히 10년 뒤에 신문제호를 다시 전북일보로 바꾸었다. 1995년 1월 3일부터는 16면에서 20면으로 증면 발행과 동시에 주 1회는 24면 발행을 시작했다. 1998년 2월 5일부터 20면에서 다시 16면으로 감면함과 동시에 전면 가로쓰기를 시작했으며, 1999년 1월부터는 조간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16면과 20면 사이를 오가다가 2004년 3월 29일 다시 20면에서 16면으로 감면하여 발행하고 있다. 전북일보는 자매지인 전북연감을 발행하며, 신문판매방법은 가판 5%를 제외한 나머지 95%를 배달에 의존하고, 지방과 중앙의 판매비율은 90:10이다.

한편, 광주 · 전남에서 가장 오랜 지령을 기록하고 있는 신문인 광주일보는 1952년 2월 10일 광주시 금남로 2가에서 전남일보라는 제호하에 타블로이드 2면으로 처음 발행되었다. 1958년 5월부터는 지방지 최초로 4면 발행을 시작했으며, 1962년 12월 10일 현 광주일보 사옥 자리로 이전했다. 1980년의 국내 언론사 통폐합과정에서 한국신문협회의 결의에 따라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신문이 통합되고(11.7), 12월 1일에 광주일보가 8면으로 창간되었다.

이후, 1982년 3월 20일 현 전일빌딩으로 사옥을 이전하고, 설비를 확장해오다가 1990년 6월부터는 CTS 전산제작을 시작했다. 1993년 1월부터는 주 144면을 발행하고 2년 뒤에는 주 160면 발행을 시작했다. 1997년 12월 말에는 송하동 공장을 준공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주 148면으로 증면하면서 조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신문의 지역별 판매비율을 보면 광주 45%, 지방 54%, 서울 1%의 구성이며, 판매방법은 가판 1%, 우송 1%를 제외한 나머지 98%가 배달에 의한 판매이다.

호남권에서는 종합일간신문을 제외한 경제신문이나 외국어신문, 스포츠신문, 특수신문 등은 발간되지 않고 있으며 이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으로는 광주의 광주인터넷뉴스를 비롯한 10개의 인터넷 신문, 그리고 전 · 남북의 15개 등 총 25개에 달하는 인터넷 신문이 지역관련 뉴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그밖에 호남지역에서 발행되는 주요 생활정보신문으로 사랑방, 교차로, 벼룩시장이 있다. 사랑방의 경우 광주, 군산, 목포, 익산, 순천 등 5개 도시에서 발행되어 배포되고 있으며, 교차로는 광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해남, 그리고 남원, 익산, 군산, 정읍, 전주 등 12개 지역에서 발행 · 보급되고 있다. 벼룩시장은 그 발행 · 보급지역이 광주, 순천, 여수, 군산, 익산 등 5개 도시로 한정되어 있다.

(2) 방송

최근 정보통신산업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다. 다시말해서 이들 두 영역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실제로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달로 방송을 통한 쌍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해졌으며 통신을 통해서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보도와 논평 전달 등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물리적 네트워크 뿐 아니라 서비스 및 산업 등 모든 부문에서 심화되고 있다.

초고속망 사업과 인터넷 보급 확대로 통신망이 광대역화되고 CATV 및 위성방송 등 방송망의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통신망을 통한 방송과 방송망을 통한 통신 등 네트워크의 통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방송, VOD, 통신위성방송 등은 통신망을 통한 방송서비스이며, CATV망 또는 디지털방송망을 통한 부가통신서비스 및 FM방송을 통한 무선호출서비스는 방송망을 통한 통신서비스에 해당한다. 이렇게 새로 출현하는 융합서비스들

은 모든 정보형태의 제공과 한정된 쌍방향성 등 방송과 통신의 특징을 동시에 갖는다.

또한 디지털 시대로 이행하면서 가전제품과 PC · 통신기기 등의 구분은 물론 통신망과 방송망의 구분도 없어지는 디지털 융합(Digital Convergence)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발전되어 온 여러 기술이 하나로 통합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방송서비스는 크게 지상파방송과 유선방송, 위성방송 및 기타방송으로 분류된다.

지상파방송은 무선전파를 이용하여 지상의 무선국을 통해 영상 또는 음성 · 음향을 내보내는 방송을 말하며 라디오방송과 TV방송으로 구분된다. 국내에서 라디오방송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전국규모의 KBS, MBC, EBS, SBS와 8개의 지역방송사업자가 있으며, TV방송 사업자로는 KBS, MBC, EBS, SBS와 12개의 기타사업자가 있다.

유선방송은 방송시설이나 중계 · 송출시설 등을 갖추고 유선 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영상 · 음향 · 음성 등을 가입자에게 송신하는 방송서비스를 말한다. 유선방송은 종합유선방송(SO)과 프로그램공급자(PP)을 포함하는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 그리고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 기간통신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분배 또는 전송선로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종합유선방송에 전달하는 전송 · 분배로 분류된다.

종합유선방송은 전국적으로 53개의 1차 업체와 24개의 2차업체가 있으며, 종합유선방송 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 공급업체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종합유선방송을 송출한다. 프로그램 공급업체는 주로 종합유선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 · 구입 · 편집하여 종합유

[표 6-35] 방송서비스 분류체계 및 호남지방 분포 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지상파방송	라디오방송 (20)	
	TV방송 (13)	
유선방송	종합유선방송	종합유선방송국(SO) (12)
		프로그램공급자(PP) (1)
	중계유선방송(43)	
	유선방송 전송 · 분배	
위성방송		
유사방송(전광판방송, 인터넷방송, 데이터방송, 기타방송) (13)		

자료 : 한국방송연구원, 「2003 인터넷방송연감」
http://www.kpf.or.kr/db/orgainfo_media.html

선방송국에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LG홈쇼핑, 바둑TV, KMTV, SDN, M NET, YTN 등이 대표적 업체에 해당한다. 중계유선방송은 유선 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을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서비스 방송국을 말하며 국내에 약 840개 업체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계유선방송은 라디오의 경우 1950년대 후반에 등장한 라디오 방송의 보급 및 난청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TV의 경우는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지상파 TV의 난시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위성방송은 적도상공 약 36,000㎞ 궤도를 선회하는 방송위성을 이용해 TV 방송이나 PCM(Pulse Code Modulation) 방송 등의 각종 방송을 하는 것으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스포츠 중계시의 위성중계방송과는 다르다. 최근 국내에서 위성방송은 KBS나 교육방송, OUN 등에서 시험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성방송은 일반 공중에 의해 방송이 직접 수신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인공위성에 탑재된 우주국에 의해 신호를 전송 또는 재송신하는 방송방식이다.

데이터방송은 음성과 영상 방송이 아닌 부호와 데이터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을 말한다. 데이터방송은 방송전파에 디지털 신호를 실어서 전송하면 수신장치가 자동으로 부호 및 데이터를 해독·처리해 그 결과를 수신자가 직접 받아보거나 또는 그 정보에 의해 다른 기계장치 등이 제어되는 특성을 가진 뉴미디어이다. 한편, 전광판방송은 옥외 전광판을 이용한 방송서비스를 말하며 주로 조선일보, 한국경제,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 언론사들이 운영하고 있다. 방송산업에서 정의한 전광판 방송사업은 전광판을 이용한 동영상·정지화상·자막 등의 광고서비스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전광판을 이용하여 뉴스 등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끝으로 인터넷방송은 웹(Web)에 의한 방송을 의미한다. 웹방송은 Real Audio, VDOLive 기술을 이용하여 송신자가 소리와 동영상을 실시간, 혹은 On-Demand로 제공받는 서비스이다. 기존의 방송사 및 인터넷 전용 독립방송사 등이 TV 및 라디오 방송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On-Demand로 제공한다. 인터넷 방송은 방송과 통신이 하나로 접합된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그 정의와 분류가 명확하지 않지만, 향후 방송과 통신의 분류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36] 호남지방의 지상파 방송사

방송국		개국일	종사자수 (2002. 3)	호출부호	주파수(단위:Hz)
KBS	광주방송총국	1942. 3.21	166	HLKH	1R-747K/90.5M, 2R-1224K, 음악FM-93.2M, 1TV-CH11, 2TV-CH25
	순천방송국	1976. 7. 1	34	HLKZ	1R-485K, 2R-576K
	여수방송국	1957.10. 1	44	HLCY	AM-630K:10KW, 표준FM-95.7M
	목포방송국	1942.11. 1	41	HLKN	1R-1467K, 음악FM-98.3M, 1TV-CH27, 2TV-CH29
	전주방송총국	1938.10. 1	124	HLKF	AM-567K, FM-100.7M, 1TV-CH7, 2TV-CH13
KBS	남원방송국	1952.10.25	32	HLKL	1R-1260K, 표준FM-88.3M
	군산방송국	1980.12. 1	26	HLAS	2R-675K
	광주문화방송	1964. 6.13	162	HLCN	AM-819K, FM-91.5M, 표준FM-93.9M, TV-CH9
	목포문화방송	1968. 8.17	83	HLAM	AM-1386K, FM-102.3M, 표준FM-89.1M, TV-CH7
	여수문화방송	1970. 8.27	89	HLAT	AM-1080K, 표준FM-100.7M, FM-98.3M,
	전주문화방송	1965. 2.20	127	HLCX	AM-855K, FM-99.1M, 표준FM-101.7M, TV-CH10/CH14
지역 민방	광주방송 (KBC)	1995. 5.14	121	HLDH	CH37(UHF)
	전주방송 (JTV)	1997. 1.15	110	HLDQ	TV-569M(CH30+10K offset) FM-90.1M
특수 방송	CBS광주방송	1961. 8. 1	23	HLCL	AM-999K, 표준FM-103.1M, 표준FM-102.1M
	CBS전북방송	1961.11. 1	20	HLCM	AM -1314K, FM-103.7M
	불교광주방송	1995. 3. 1	15	HLDB	FM-89.7M
	광주교통방송	1997.12.20	31	HLDM-FM	FM-97.3M
	목포극동방송	2001. 4. 2	9	HLKW	FM-100.5M
	원음방송	1998.11.30	56	HLDV	FM-97.9M
	광주평화방송	1996. 6. 2	25	HLDL	FM-99.9M(광주), FM-99.5(여수)

자료 : 데이코산업연구소, 「한국방송통신연감」, 2003.
한국언론재단, 「한국신문방송연감 2002/2003」, 2002.

지상파방송

호남지방에 분포하는 지상파 방송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상파 공영 방송사인 한국방송(KBS) 광주방송총국과 목포방송국, 순천방송국, 여수방송국이 광주 · 전남지역에 위치하고 전북지방의 전주방송총국, 군산방송국, 남원방송국 등 총 7개의 지방국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문화방송(MBC)의 계열 자회사로는 광주문화방송과 목포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등 4개 방송이 분포하고 있다. 순전히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민영방송으로는 광주방송(KBC), 전주방송(JTV)이 각각 광주와 전주에 입지하고 있다. 교육, 종교, 교통 등 특수방송으로는 목포극동방송을 비롯하여 기독교의 CBS광주방송, CBS전북방송, 천주교의 광주평화방송, 불교의 불교광주방송, 그리고 지방교통방송인 광주교통방송과 전주교통방송이 운영중에 있다. KBS 광주방송총국은 1942년 3월 출력 50W의 광주방송국으로 개국하였으나 1970년 4월에야 비로소 청사를 갖추었다. 1971년 4월에 비아송신소를 준공하고 1973년 3월에 한국방송공사 광주방송국으로 기구를 개편했다. 1975년 10월과 12월에는 각각 영광과 고흥에 방송중계소를 개소했고, 1976년 7월에는 순천방송국을 개국했으며 1978년 7월부터는 TV로컬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했다. 1979년 12월에는 노고단중계소를 준공하고 1981년 2월부터는 제3TV 교육라디오 방송이 시작되었으며 3월에는 제2TV 방송이, 그리고 6월에는 광주 FM 방송이 시작되었다. 1983년 8월부터는 FM PCM 방식의 전국동시방송을 시작했으며 1984년 7월에 들어 노고단중계소를 남원방송국으로 이관했다. 1988년 말에는 도단위의 TV 4원방송을 개시했으며, 1989년 말 장흥중계소 신청사를 준공하였다. 1995년 12월 표준 FM에 RDS를 설치하는 한편으로 사랑의 소리 방송을 개국했다.

1997년 9월 1일에는 제2회 광주비엔날레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었다. 1998년 8월에는 상무 신도심에서 신청사 기공식을 거행하고 2000년 10월에 이를 완공함으로써 구 도심 인근에 위치하던 사옥을 신도심 지역으로 이전했다. 2001년 12월에는 제2R FM을 개국함과 동시에 제2R AM(1224KHz)를 3R 사랑의 소리 방송으로 전환하였다.

KBS 목포방송국은 광주방송국보다 약 7개월 후인 1942년 11월에 목포시 양동 소재 미국 선교사 사택에서 조선방송협회 목포방송소로 개소했다. 1950년 한국동란 당시 청사가 파손되어 해군 함정에서 방송했던 적도 있으며, 1967년 2월에는 출력 120kw의 영암송신소 준공을 보았다. 1982년 11월에는 강진, 해남, 완도, 무안지역에 TVR 11개소를 준공하였으며

1987년 11월에는 TV 및 FM 방송을 개국하고 2001년 11월에 이르러 해남 대둔산 표준 FM을 개국하였다.

KBS 순천방송국은 1965년 11월, 여수방송국 순천중계소로 개소한 뒤 1976년 7월에 비로소 순천방송국으로 개국하였다. 같은 해의 12월에는 고흥, 녹동 TVR을 개소하고 1980년 11월에는 도화, 포두 TVR을 개소했으며, 1981년 말에는 송광, 봉래, 남양, 풍양 TVR을 개소하고, 1982년 말에는 쌍암, 외서 TVR을, 그리고 1984년 말에는 순천, 별량 TVR을 개소했다. 1985년 말, 현재 순천시 석현동에 위치하는 신사옥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1987년 6월 이 신사옥으로 이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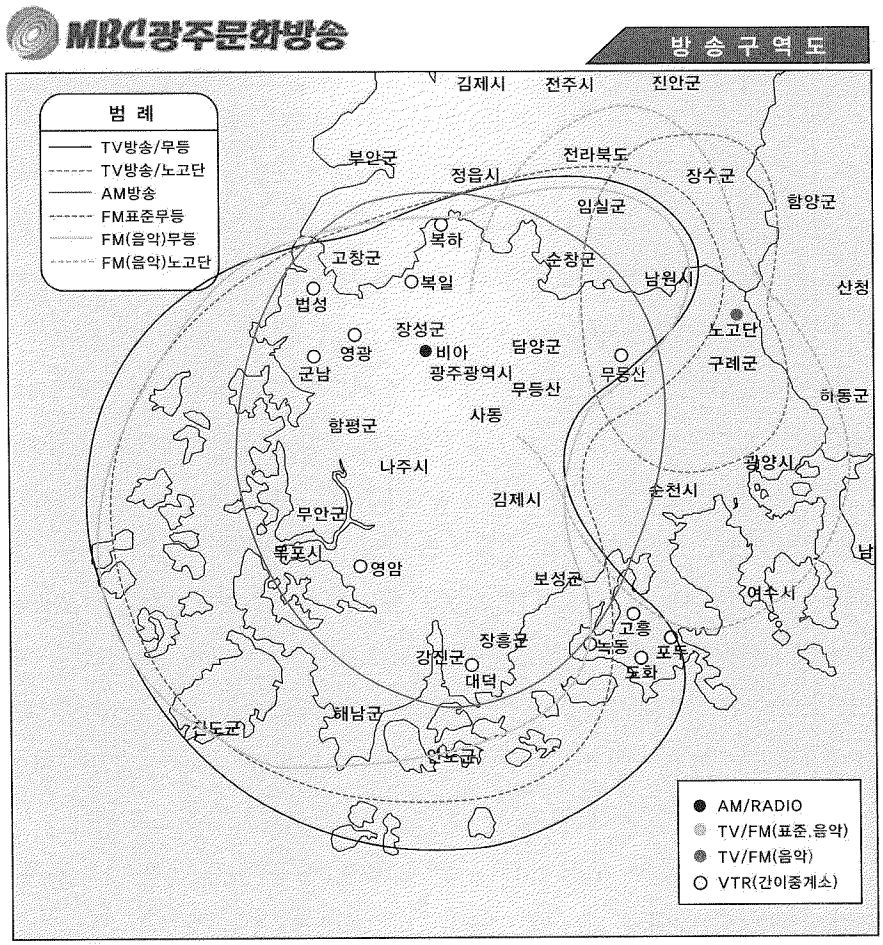
KBS 여수방송국은 1957년 10월 1일 이동방송차량으로 개국하여 1964년 9월 사옥을 마련하였다. 1965년 11월 순천중계소와 1968년 4월 신월송신소를 개소한 이래 1971년 4월 망운산 중계소를 개소했고 1975년 12월말에는 고흥중계소를 개소했다가 1976년 7월 순천중계소를 순천방송국으로 승격하여 분리시켰다. 1978년 2월 표준 FM 방송을 시작하여, 1981년 2월에는 교육TV와 교육 FM 방송을 개시했다. 1984년 1월에는 제2TV 방송을 개시하고 1989년 12월 연건평 1,370평의 여수방송국 신청사가 완공되었다. 1994년 8월부터는 제1TV 로컬방송을 시작했고 1999년 9월부터는 표준FM 로컬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KBS 전주방송총국은 1938년 10월 1일 개국하여 전북 전지역과 충남 일부지역에 걸쳐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개국 당시에는 조선방송협회 산하 이리방송국으로 설립되었다가, 1947년 5월 전주연주소를 설치하고 약 3년 후인 1950년 4월 전주로 이전과 동시에 전주방송국으로 재개국했다. 1969년의 장수중계소 완공 및 1977년의 백산송신소 준공 이후 1981년 2월부터는 교육FM방송 및 교육TV방송을 시작했으며 1983년 7월에는 FM음악방송 PCM회선을 개통했다. 1986년 12월 전주방송총국으로 승격하여 1993년 9월에는 미륵산의 송신소를 모악산으로 이설하는 동시에 그 출력을 크게 증강했다. 2002년 10월 들어서는 2R FM 방송을 시작하고 12월 하순에 이르러 모악산 송신소 자동화 시설을 준공하였다. 전주방송총국 산하의 송 · 중계소로는 장수 · 무주 중계소와 모악산 송신소가 있다.

KBS 남원방송국은 1952년 10월 25일 출력 500W로 개국하여 1975년 말에 출력 10KW의 남원송신소를 개소하였다. 1984년 7월에는 노고단중계소의 관할권을 인수하여 남원송신소와 함께 이를 KTA에 이관했다. 1987년 3월, KBS 제2TV 중계시설을 설치완료했으며,

2000년 10월 5일부터 표준FM 로컬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했다. 2002년 3월에는 전주총국과의 TVR 관할구역 조정을 통해서 번암TVR을 인수하는 대신 임실 · 강진 · 복흥 TVR을 넘겨주었다. 남원방송국의 방송커버구역은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 곡성군, 담양군, 구례군 등 전북 동남부 및 전남 동북부의 산악지대에 해당한다.

KBS 군산방송국은 1980년 12월 1일 개국한 이래, 1995년 12월부터 TV방송을 개시하였고 2002년 10월 10일에 제2R FM을 개국하였다. 방송커버구역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부안군, 완주군, 임실군, 고창군 등 전북 서부 해안지방과 충남 일부지역



〈그림 6-15〉 광주문화방송의 방송구역

자료 : www.kjmbc.co.kr/index.asp

[표 6-37] 호남지방 지상파 방송사 방송커버구역

방송사		관할 송신 · 중계소	커버구역
KBS	광주방송총국	비아 · 무등산 송신소, 장흥/보성/구례/영광 중계소	제1R - 광주 목포 정주 나주시 화순 영암 신안 무안 나주 함평 영광 장성 담양 순창 부안 고창 장흥 보성 구례 곡성군 일원, 진도 해남 강진 고흥 승주 남원 완주 정읍 김제 익산 옥구 서천 예산 임실군 일부, 표준FM - 광주 목포 나주시 장성 담양 영광 함평 무안 영암 나주 보성군 일원, 고창 정읍 순창 화순 곡성 승주 고흥 장흥 강진 해남 진도 신안군 일부, TV - 광주 나주시 함평 나주군 일원, 목포시 영광 장성 강진 해남 담양 무안 영암 화순 순창 고창 보성 장흥 신안 구례 완도군 일부
	목포방송국	양을산/영암송신소	제1R -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신안군, 음악 및 교육 FM -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신안군, 1TV -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신안군, 2TV -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신안군, 교육TV -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신안군
	순천방송국	순천송신소,고흥중계소	순천 광양 구례 벌교
	여수방송국	신월(AM)/망운산송신소(TV,FM)	제1R - 전남 여수 · 순천 · 광양시 일원, 전남 장흥 · 보성 · 고흥군 일부 경남 남해군, 삼천포시 일원, 경남 통영 · 사천시, 고성 · 하동군 일부 FM - 전남 여수 · 순천시 일원, 전남 광양시, 보성 · 고흥군 일부 경남 남해군, 삼천포시 일원, 경남 통영 · 사천시, 고성 · 하동군 일부 1TV - 전남 여수 · 순천 · 광양시 일원, 전남 보성 · 고흥군 일부 경남 남해군 일원, 경남 진주 · 삼천포 · 하동 · 진양군 일부
	전주방송총국	장수/무주중계소, 모악산 송신소	전북 전지역, 충남 일부지역
	남원방송국	남원송신소, 노고단중계소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 곡성군 담양군 구례군
	군산방송국	대아중계소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부안군 완주군 임실군 고창군, 충남 서산군 부여군 논산군 일원
MBC	광주문화방송	무등산/비아송신소, 노고단중계소	광주 · 전남 일원, 전북 일부
	목포문화방송	삼호/양을산/대둔산송신소, 진도/장흥/군동/도초/완도/무안/화원/청계/계곡/의신중계소	AM - 목포시 무안군 진도군 신안군 일원, 나주시 영암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나주군 일부, FM · 표준FM - 목포시, 무안군 진도군 신안군 해남군 일원, 강진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나주군 나주시 일부, TV - 목포시 일원, 8개군 일부
	여수문화방송	구봉산송신소, 천황산중계소, 여수(남산)/광양/쌍봉/벌교/쌍암 TVR	AM -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일원, 경남 충무시 삼천포시 남해군 통영시 일부 보성군 강진군 장흥군 완도군 진도군 경남 진주시 하동군 고성군 거제군 일부, FM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일원, 고흥군 보성군 경남 남해군 하동군 일부, TV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일원, 광양시 고흥군 경남 남해군 일부
	전주문화방송	모악/삼례송신소, 교룡/노고단중계소, 남원연주소, 운간/순창/임실/연장/진안/고창/무주/적상/삼공/장수간이TV중계소	AM - 전주 군산 이리 정주 부안 김제 옥구 익산 서천군 일원, 정읍 보령 부여 논산 진안 장수 고창 완주 임실 순창 영광군 일부, FM - 전주 이리 군산 정주 완주 익산 김제 부안 논산 일원, 대전시 서천 부여 청양 금산 진안 임실 정읍 고창 공주 일부, 표준FM - 전라북도 전역, TV - 전주 군산 이리 정주 김제 익산 남원 일원, 완주 정읍 고창 부안 논산 부여 진안 임실 무주 장수 순창 곡성 구례 서천 일부

(서산, 논산, 부여)을 대상으로 한다.

문화방송 계열사 중에서는 광주광역시에 입지하고 있는 광주MBC의 방송구역이 가장 넓어 무등산 · 비아송신소와 노고단중계소를 거점으로 광주 · 전남 일원 및 전북 일부지역을 커버한다. 광주문화방송은 1964년 6월 13일 라디오방송을 처음 개국한 이래 1971년 8월에는 TV 방송을 개국했고 1980년 12월말부터 컬러TV 방송을 시작했다. 1988년 10월, 서구 월산동에 새로 준공된 신사옥으로 이전한 후 2000년 3월부터는 FM 스테레오 방송을 시작했고 2004년 7월, 디지털TV를 개국하였다.

한편 산악의 지형적 영향으로 광주권으로부터 방송전파를 수신하기 어려운 전남 동부권의 경우 여수문화방송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여수MBC는 1970년 8월에 남해방송주식회사로 개국한 이후 1년여 뒤에 여수문화방송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1984년 8월 30일 TV중계소를 개소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남산, 쌍봉, 벌교, 광양, 쌍암 등 5곳에 TVR을 개소하였으며, 2002년 8월부터는 난시청 해소를 위한 유선방송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전북의 전주문화방송은 1965년 2월 20일 개국한 이래 1969년 8월 TV방송 허가를 취득했으며, 1971년 4월 23일 정규방송을 시작했다. 1992년 1월에는 남원 표준FM중계소와 남원 TV중계소 허가를 취득했다가, 11월에 남원방송국을 개국하게 되었다. 1995년 11월에 신사옥을 준공하여 이전하고 2001년 4월에는 표준FM 방송국을 개국하는 한편 2003년 9월에는 디지털TV 송출실을 완공하였다.

한편, 이 지역에 위치하는 2개의 순수민영방송중 광주방송(KBC)은 광주광역시 및 전남 일원을 방송구역으로 커버하는데 1995년 4월 TV 전파를 발사하기 시작하여 1998년 2월에는 FM라디오를 개국하였다. 또 전주방송(JTV)은 1997년 9월 개국한 이래 1998년에 남원 TVR을 준공하고 2001년 8월부터는 FM라디오를 개국했으며, 2003년 6월에는 디지털TV 허가를 취득하였다.

케이블TV 방송

초기 케이블 TV의 설립은 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난시청 해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본격적인 방송영역 확장차원에서 종합 케이블TV 사업이 가능한 여건이 형성되었던 것은 1995년에 이르러서였다. 1995년 3월 11개분야 21개 채널이 본격적으로

[표 6-38] 호남지방의 케이블TV 방송사(2004.7월 현재)

지역	케이블TV 방송사	소재지	설립	송출커버지역	종사자수
광주	한국케이블TV 광주중앙방송	동구	2001. 6.14	광주시 동구, 북구	116명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북구	1994. 2.25	광주시 동구, 북구	28명
	하나로 WEBnTV	서구	1994. 3. 4	광주시 서구, 남구, 광산구	69명
	한국케이블TV광주서부방송	서구	2001. 6.14	광주시 서구, 남구, 광산구	40명
전남	한국케이블TV서남방송	목포	1994. 3. 2	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해남, 진도, 완도, 강진, 장흥	53명
	한국케이블TV전남동부방송	순천	1997. 7.15	순천, 여수, 광양, 고흥	41명
	한국케이블TV전남방송	나주	1997. 8. 4	나주, 화순, 영광, 함평, 장성, 담양, 곡성, 구례, 보성	33명
	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목포	2001. 6. 1	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해남, 강진, 장흥, 완도, 진도	59명
	하나방송	담양	2003. 1.29	구례, 곡성, 나주, 담양, 보성, 영광, 장성, 함평, 화순	-
전북	한국케이블TV금강방송	익산	1997. 7.22	익산, 군산	25명
	한국케이블TV전북방송	정읍	1997.10.10	정읍, 남원, 김제, 임실, 부안, 순청, 고창	53명
	한빛전주방송	전주	1994. 2.19	전주, 완주, 무주, 진안, 장수	28명
	온케이블TV	전주	1994. 2.19	전주, 완주, 무주, 진안, 장수	29명

자료 : 한국언론재단, 「한국신문방송연감 2002/2003」.
www.kpf.or.kr
www.kcta.or.kr/com/com_01.asp

[표 6-39] 전남북 지역의 중계유선방송사(2003년 말 현재)

전남 (36)	진남(여수 학), 거금(고흥 금산), 거문(여수 삼산), 고금(완도 고금), 국제(순천 승주), 군내(여수 돌산), 금일(완도 금일), 남도(고흥 동강), 남면(여수 남), 노화(완도 노화), 녹동(고흥 봉양), 다압(광양 다압), 동광양(광양 중), 동부(여수 공화), 동일(고흥 동일), 문화(순천 황전), 북일(해남 북일), 서남(장흥 장흥), 소안(완도 소안), 신안(신안 도초), 안좌(신안 안좌), 압해(신안 압해), 영암월출(영암 학산), 옥곡(광양 옥곡), 임자(신안 임자), 조도(진도 조도), 주암(순천 주암), 중앙(고흥 봉래), 중앙(여수 공화), 진상(광양 진상), 진월(광양 진월), 청산(완도 청산), 해룡(순천 해룡), 현대(완도 약산), 화동(여수 화양), 흑산(신안 흑산)
전북 (7)	광명(진안 마령), 대산(고창 대산), 동부(순창 동계), 부안위도(부안 위도), 산서(장수 산서), 연일(정읍 북), 인월(남원 인월)

자료 : www.koreacatv.co.kr/main.asp

운용되기 시작한 케이블TV의 구성은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와 종합유선방송국(SO), 전송망사업자(NO)로 다시 나뉜다.

2001년 5월말 현재 지역별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수는 광주지역 5개사(가입자 155,022명), 전남지역 106개사(가입자 277,518명), 전북지역 52개사(가입자 197,516명)로, 총 163개 사업자로부터 약 63만여명의 가입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을 주 사업영역으로 출발했던 중계유선방송사업은 다채널 방송으로서의 종합유선방송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001년에 이루어진 중계유선방송의 SO 전환 승인을 전제로 하는 동일 방송권역 내에서의 복수 SO 허용으로 케이블TV와 중계유선 사업자간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나아가 중계유선사업자들의 법인 통합작업도 진행되어 왔는데, 이러한 SO와 중계유선사업자의 본격적인 경쟁체제 구축 움직임에서 특히 중계유선사업자들은 단순한 신호통합을 초월하여 자본이나 법인통합의 형식으로 사업구역을 광역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호남지방에 입지하고 있는 유선 케이블TV 방송사업자로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동구 · 북구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한국케이블TV광주중앙방송과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그리고 서구 · 남구 · 광산구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하나로 WEBnTV와 한국케이블TV광주서부방송 등 각 2개사가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한국케이블TV 계열의 4개 방송사가 각각 목포, 순천, 나주에 위치하며 2003년 설립된 하나방송이 담양 중심의 전남 중북부권 일원을 방송구역으로 시험방송중에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는, 익산과 군산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한국케이블TV 금강방송과 정읍 · 남원 · 김제 일원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한국케이블TV 전북방송, 그리고 전주를 중심으로 동부 고원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한빛전주방송, 온케이블TV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인터넷 방송

1997년 처음으로 등장한 국내 인터넷 방송국은 폭발적 증가세를 나타내어 2000년 8월에는 7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 중에 인터넷 방송을 애청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인터넷 방송의 열풍은 실로 대단하다. 사실, 국내에서 인터넷방송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기존의 지상파 방송국이 인터

넷을 통해 시나리오를 공개한다든지, 뉴스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터이다. 1995년, KBS가 처음으로 이런 방법에 의한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했고, 그후 MBC, SBS, EBS가 가세하였다. 이들은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여 TV 프로그램 실시간 방송이나 VOD 서비스, 라디오방송 등의 영역까지 넓혀나갔고 여기에 케이블 TV, 지역민방 등의 메이저급 방송국들이 참여하면서 그 영향력이 확산되었다.

초기부터 기존 방송국 위주로 인터넷방송이 시작된 것은 컨텐츠가 생명인 인터넷방송 시장에서 공중파 방송국들이 동영상 컨텐츠를 다수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중파 방송사들이 제공했던 초기의 인터넷 서비스를 엄밀한 의미에서 '인터넷방송' 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들은 인터넷 사용자를 위해 별도의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 ·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사 프로그램들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부가서비스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내 상황에서 1996년 12월 (주)컴퓨터출판이 가수 양희은의 송년 콘서트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함으로써 독립 인터넷방송 출현의 기폭제가 되었다. 그후 몇몇 교육 · 종교적인 내용의 컨텐츠가 단발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다가 1997년 7월 최초의 전문 인터넷 방송국이라 할 수 있는 메가미디어의 M2station이 개국하였다. 애니메이션과 문화예술, 공연, 엔터테인먼트에 중점을 두었던 M2station은 자금사정과 IMF의 영향으로 곧 폐업했지만 전문 인터넷방송국을 구축하여 그 확산에 기폭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후, 정보통신 뉴스로 시작한 Qnet을 비롯하여 종교적 컨셉의 C3tv, 동영상 뉴스를 제공하는 씨네스프리스 등의 인터넷방송국이 개국하였고 인터넷 방송이 유망한 웹 비즈니스로 주목받으면서 독립 혹은 개인 인터넷방송국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한편 다양한 편성주기 및 컨텐츠를 특징으로 하는 700여 개의 인터넷방송국을 획일화된 특정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한다면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방송국, 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방송국, 독립 인터넷방송국, 그리고 기업 · 학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방송사업자는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데 있어 제작시설이나 컨텐츠에 있어 절대우위에 있기 때문에 가장 활발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지상파방송국인 KBS, MBC, SBS의 인터넷방송과 지역방송국이나 케이블방송국의 인터넷방송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표 6-40] 호남지방의 KBS 및 MBC 인터넷방송국

구분	지역	방송국	웹 주소	주요 서비스
KBS	광주	광주총국	gwangju.kbs.co.kr	지역 뉴스,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
	전남	목포국 (무안,신안,영암,해남)	mokpo.kbs.co.kr	1R-AM(1467k), 음악FM(98.3M),뉴스
		순천국(광양)	suncheon.kbs.co.kr	1R AM, 2R FM(102.7M), 뉴스
		여수국(거문도)	yeosu.kbs.co.kr	AM(630k), FM(93.7M), 1TV, 뉴스
	전북	전주총국(무주)	jeonju.kbs.co.kr	AM(567k), FM(100.7M), 1TV, 뉴스
		남원국(순창,장수)	namwon.kbs.co.kr	FM(88.3M), 뉴스
		군산국 (익산, 고군산군도)	gunsan.kbs.co.kr	3R AM(675k), FM(92.9M), 지역뉴스
MBC	광주	광주 MBC	www.kjmbc.co.kr	TV/라디오 V/AOD, 문화 · 생활정보
	전남	목포 MBC	www.mokpombc.co.kr	TV, 라디오, 지역 · 생활정보
		여수 MBC	www.ysmbc.co.kr	TV, 라디오(AM, FM), 관광 · 생활정보
	전북	전주 MBC	www.chonjumbc.co.kr	TV VOD, 라디오(AM,FM), 지역정보

자료 : koreanet.kbs.co.kr 및 KBS, MBC 지역방송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들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운영되며 지상파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그렇듯이 특정 장르의 컨텐츠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종합편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주요 지상파방송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국으로 KBS의 크레지오(www.crezio.com)는 1999년 11월 25일 개국하였으며 KBS와 한국통신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뉴스, 음악, 드라마, 게임, 생활문화 등 6개 채널 30여개에 달하는 인터넷방송용 자체 컨텐츠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있다. MBC에서 운영하는 iMBC(www.imbc.com)는 2000년 3월 11일에 개국하여 NETOP 매거진을 비롯한 4개 채널 17개의 자체 컨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SBS의 경우 1999년 8월 21일 개국하여 드라마/영화, 음악/오락, 문화/정보, 스포츠/특집 등 4개 채널 18개 자체 컨텐츠 프로그램을 서비스한다.

중앙 및 각 KBS지역국에서 운영하는 전국 각지의 인터넷방송국들은 KBSKOREA.net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지상파 방송국이 위치하고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방송 커버구역을 기준으로 계층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각 지역의 KBS 인터넷방송국들은 중앙 KBS의 1TV, 2TV 등 2개의 TV채널과 한국문화 전문의 독립형 인터넷방송국인 KBS KOREA, 그리고 국제 위성방송인 KBS WORLD 및 데이터서비스 위주의 멀티미디어 방송

인 DMB 채널을 기본적으로 연결한 상태이다. 라디오방송의 경우 1FM, 2FM, 1R, 2R, 3R, 사회교육방송, 그리고 영어로 방송되는 국제방송(RKI) 등의 채널을 공유한다. 따라서 이들 4개의 TV 채널과 7개의 라디오 채널을 공유하는 상태에서 각 지역방송별 인터넷방송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추가하여 편성하는 수준에 있다.

문화방송의 경우 중앙MBC와 지방MBC간의 온라인 방송에 의한 연계강도가 KBS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호남지방에 소재하는 4개의 지방 MBC 방송사들은 공통적으로 지상파방송용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아카이브 형식으로 저장해두었다가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순수한 인터넷방송 전용 프로그램을 방송하지는 않는다.

그밖에 호남지방에 입지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역민방 사업자의 인터넷 방송국으로는 광주방송(KBC)과 전주방송(JTV)의 인터넷 방송국이 있다. 광주방송의 인터넷방송국(kbc.kisc.net)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생중계하며 KBS 영상자료에 대한 VOD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주방송의 인터넷방송국(www.jtv.co.kr)은 동영상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Net Plus라는 전통문화예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정보통신체계

(1) 정보화 기반

인터넷 망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인터넷은 초고속 통신망을 근간으로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여 2002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선정한 세계 1위의 초고속 통신망 이용국가로 인정받았다. 사실 인터넷 산업은 그 활동영역이 물리공간과 가상공간을 동시에 포괄하며 지식이나 아이디어의 독창성 및 참신성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산업과는 상당한 차이를 지닌다. 이른바 IT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터넷 관련 산업은 인터넷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생산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의 제공 및 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산업들을 말하며, 다시 인터넷 기반산업, 인터넷 지원산업, 인터넷 활용산업

으로 나누기도 한다.

위의 인터넷 기반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의 하나가 바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기간망을 통한 백본 서비스와 가입자망을 통한 가입자 접속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통신의 실질적 기초를 이룬다. 기간망은 자신에게 연결되어 있는 소형회선들

[표 6-41] 인터넷 망의 구분

망 구분		해당 네트워크의 명칭/유형
기 간 망 (백본망)	교환노드	한국전산원(KIX), KT-IX, 데이콤(Dacom-IX), KINX
	상 용 망	코넷(KORNET), 보라넷(BORANet),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IDC) 신비로(Shinbiro), 하나넷(Hananet), 두루넷(Thrunet), 기타 ISP
	비영리망	초고속국가망(PUBNet), 초고속선도망(KOREN), 연구망, 에듀넷, 기타
가입자망	유 선 망	xDSL/FTTH, 전용선, 케이블모뎀(HFC망), 다이얼업/ISDN, 기타
	무 선 망	이동통신, 무선랜, 위성통신, BWLL/WLL

[표 6-42] 호남지방의 주요 인터넷 서비스 망

구 분	망 이름		ATM교환기	기가비트 라우터	대형 라우터 · ADSL 집중국
상용망	KORNET		전주,북광주 (혜화,구로)	북광주 전주	서광주,나주,장흥,영암,해남,하당, 북순천,곡성,동여수,광양,장성,군 산,익산,정읍,김제,남원,고창,부안
	BORANet		전주,광주 (대전)	논산,이리,군산,정주, 남원.장성,목포,나주, 여수,광양,순천	-
	Hananet		광주 (서울)	광주	-
	Shinbiro		(분당)	광주	전주, 목포, 여수
	Thrunet		(대전)	전주, 광주	-
	GNGIDC		(대전)	광주	전주, 여수, 순천
	SKSppedNet		-	(대전)	광주,전주
비영리망	초고속 국가망	KT	초고속국가망	광주,서광주,전주	호남권의 공공기관
		데이콤	(용산, 대전)	전주,광주	목포
	연구망	초고속 선도망	광주 (대전)	-	전남대,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기 초과학지원연구원, 제주도

자료 : 한국전산원, 「2004 한국인터넷백서」, 2004.4에서 정리

로부터 데이터를 모아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대규모 전송회선으로서, 지역적 차원에서는 근거리통신망에서 광역통신망으로 연결하기 위한, 하나 또는 여러 회선의 모음을 뜻한다.

기간(백본)망을 구축하고 있는 ISP 사업자를 중심으로 볼 때, 호남지방을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해주는 인터넷 망은 앞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KT가 전국 90여개 지역에 구축한 코넷을 비롯해서, 자체 보유 광선로를 활용하여 전국 71개 지점에 노드를 구축하고 있는 데이콤의 보라넷, 전국적으로 200여개의 노드를 구축하고 '사이버플랫폼(Cyber Platform)' 지향의 인터넷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하나로통신의 하나넷, 1개의 망 센터와 전국에 걸쳐 14개의 주노드 및 5개의 부노드를 두고 있는 온세통신의 신비로, 광 · 동축 혼합망(HFC)과 케이블모뎀 방식으로 서울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원주 · 인천 지역의 데이터센터를 연결하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루넷, 서울 · 분당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등 전국 7개 주요도시에 IP POP을 설치하고 전국 63개 전송노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GNGIDC), 전국 규모의 광통신망을 구축하여 음성 · 화상전화 · VOD 서비스 등 각종 통신서비스와 유 · 무선 종합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SK텔레콤의 SKSpeedNet, 서울과 6대광역시의 지하철 공동관로에 자체 광통신망을 구축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부산 · 대구 · 대전 · 광주간 백본망을 구성한 드림라인의 DreamX, 전국에 시설된 전주 및 철탑을 이용하여 대규모 광통신망을 구축한 파워콤 등의 상용망이 있다.

또한 전국 각지의 공공기관을 상호 연결해주는 비영리 기간망에 해당하는 초고속국가망으로는 KT의 PUBNet과 데이콤의 PUBNetPLUS가 대표적인데, KT의 경우 ATM 교환망을 기반으로 광주 · 전주를 포함한 전국 11개의 대도시에 총 18개의 노드(광주 · 서광주 · 전주 · 북전주 포함)를 구축하고 있다. 데이콤에서 구축하고 있는 PUBNetPLUS는 광주 · 전주 · 목포 등 전국 26개 지역의 ATM 교환망을 기반으로 중계망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에듀넷(EDUNET)은 전국 16개 시 · 도교육청을 연계하여 교수학습자료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 및 온라인 교육종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ATM 교환망을 통해 노드화된 광주 · 인천 · 대전 · 대구 · 부산 등 5개 광역시를 2~4Mbps로 연결해준다.

그 밖에 비영리 연구망으로서, 초고속 정보통신 장비 및 응용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환

경 제공을 목적으로 대학 · 연구소 · 산업체 등에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초고속선도망(KOREN)과, 국내대학 및 연구기관과 기업연구소를 포함하여 200여 기관이 가입하고 있는 초고속연구망(KREONET)이 구축되어 있다.

인터넷 이용 환경

최근 들어 통신 · 정보교환 · 방송 ·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용되고 있는 인터넷 활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터넷 주소자원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소자원이란, 인터넷상에서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 또는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부호 · 문자 · 숫자 등 일체의 정보체계 및 이와 관련되는 정보 · 설비 · 기술 · 인력 및 자금 등의 자원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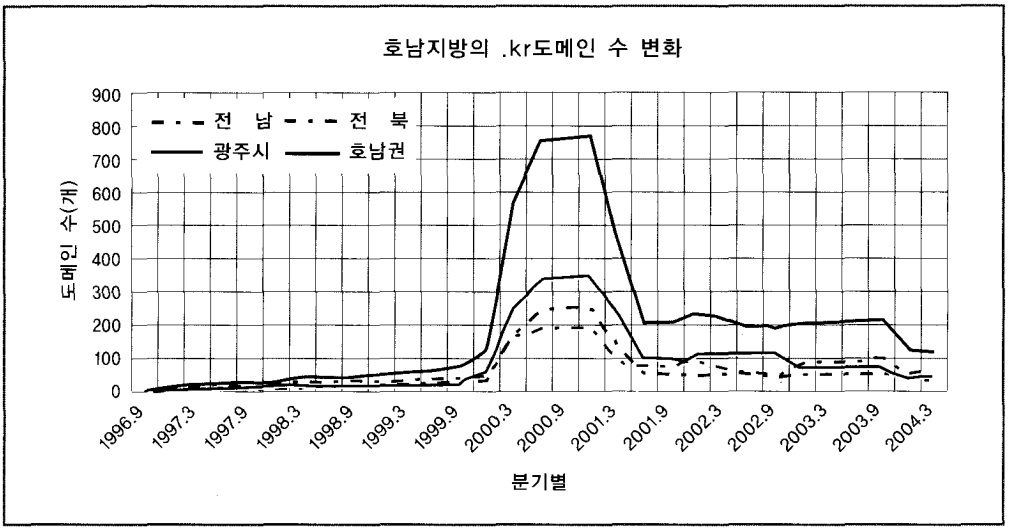
이들 주소자원 중에서 우선 가장 친숙한 IP 주소는 인터넷상에서 각 사용자의 위치를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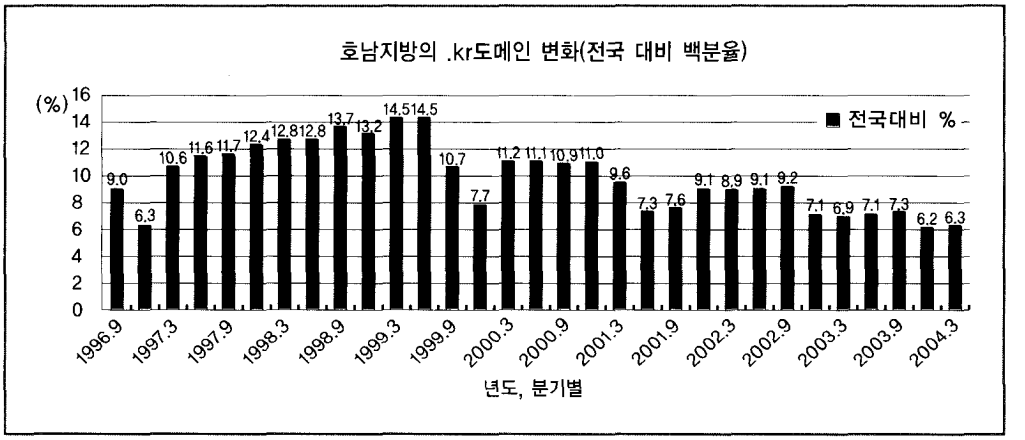
제4장

[표 6-43] 호남지방의 .kr 도메인 수 변화(1996.9~2004.3)

시기별	전북	전남	광주	호남계	전국대비%	시기별	전북	전남	광주	호남계	전국대비%
1996. 9	1	4	1	6	9.0	2000. 9	250	184	337	771	10.9
1996.12	2	4	1	7	6.3	2000.12	249	186	341	776	11.0
1997. 3	5	6	6	17	10.6	2001. 3	132	78	217	427	9.6
1997. 6	8	8	7	23	11.6	2001. 6	54	66	87	207	7.3
1997. 9	8	10	7	25	11.7	2001. 9	53	65	87	205	7.6
1997.12	9	14	7	30	12.4	2001.12	47	103	84	234	9.1
1998. 3	10	18	7	35	12.8	2002. 3	51	104	64	219	8.9
1998. 6	12	18	7	37	12.8	2002. 6	50	101	47	198	9.1
1998. 9	14	21	9	44	13.7	2002. 9	41	101	44	186	9.2
1998.12	18	23	10	51	13.2	2002.12	57	66	80	203	7.1
1999. 3	19	30	12	61	14.5	2003. 3	52	66	81	199	6.9
1999. 6	22	30	13	65	14.5	2003. 6	57	67	85	209	7.1
1999. 9	30	32	13	75	10.7	2003. 9	56	65	89	210	7.3
1999.12	33	39	55	127	7.7	2003.12	34	42	52	128	6.2
2000. 3	173	156	240	569	11.2	2004. 3	33	40	48	121	6.3
2000. 6	244	180	332	756	11.1						

자료 : 한국인터넷정보센터(http://isis.nic.or.kr)





〈그림 6-16〉 호남지방의 지역. kr 도메인 수 비율변화 (1996.9~2004.3)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4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2004. 8

별하기 위한 고유 아이디에 해당한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IP 주소는 32비트로 구성된 'IPv4' 체계이며, 주소 부족 등 기존 주소 체계의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IPv6' 주소 체계는 128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넷 이용을 위한 기초자원으로, IP 주소 이외에도 인터넷상의 독립 네트워크(Autonomous System)에 대해 부여하는 AS 번호가 있다.

IP 주소와 더불어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 망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도메인 주소 역시 정보통신 인프라로서 중요한 공공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1단계 도메인 또는 최상위 도메인은 크게 일반도메인(예:com, net, biz 등)과 국가도메인(예:kr, jp, fr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1996년 9월~2004년 3월 사이 우리나라의 국가 도메인 kr의 2단계 도메인인 호남지방의 지역 도메인 수 및 비율 변화를 보면 아래 [표 6-43] 및 〈그림 6-16〉과 같다.

도메인 수의 절대적 변화를 시기별로 비교해 보면, IMF 체제하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1999년 하반기부터 지역 도메인 수가 계속 급증했으나 2001년 전반기에 이르러 갑자기 급감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호남지방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걸쳐 나타났던 일반적 현상이다. IMF를 겪으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국가적 · 정책적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IT 관련 기업들의 창업이 급증했다가 이른바 벤처에 대한 '버블경제'가 와해되면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 IT 기업들이 대거 몰락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이용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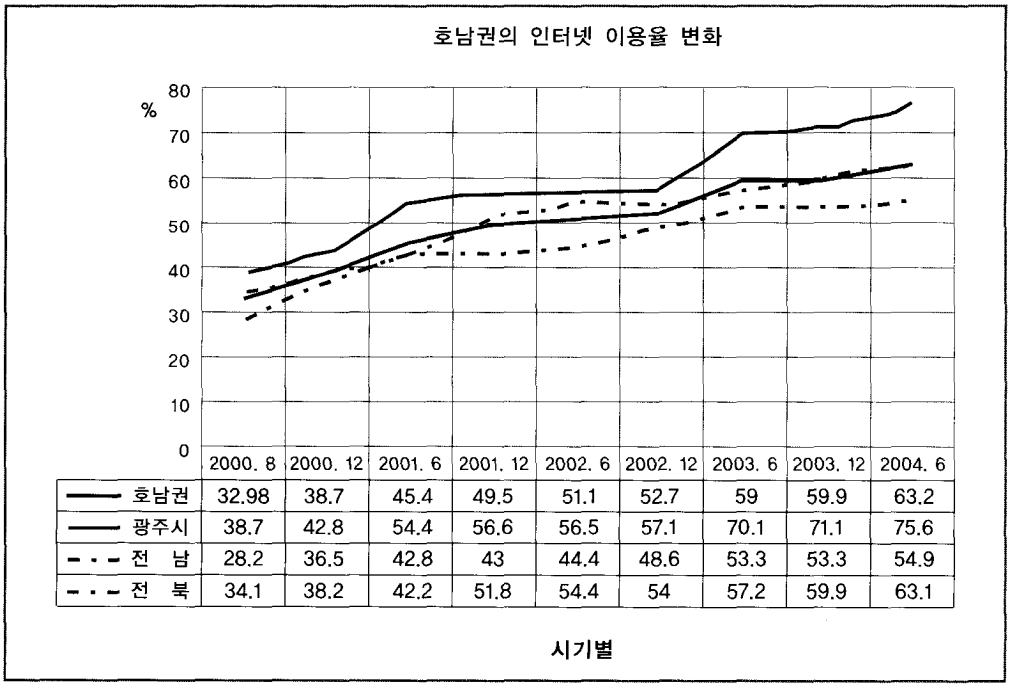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 '인터넷'이라는 IT 인프라의 출현과 함께 정보통신 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았다. 국내 인터넷 관련 산업의 성장과정은 대개 3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단계는 1995~2000년의 '태동 및 양적 성장기'이다. IMF 경제위기와 함께 위기극복의 대안으로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양산되면서 양적 성장을 경험했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하고 단지 벤처라는 이름만으로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기현상을 경험하면서 거품론과 위기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2000~2001년의 2년 동안, '진화와 구조조정기'라는 둘째 단계를 거치면서 대다수의 벤처기업들이 투자 감소로 인한 자금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업영역의 축소와 인력감축 등 자구노력이 전개되면서 기업간 인수합병 및 해외진출이 두드러지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2년부터는 본격적인 '유료화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혹독한 조정기를 견디어내고 수익모델을 성공적으로 발굴해낸 기업들이 아바타와 같은 온라인 캐릭터와 교육 · 엔터테인먼트 · 게임 등 컨텐츠,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수익성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광주를 비롯한 전남북의 인터넷 이용은 우리나라의 타 지역과 비교해볼 때, 거의 비슷한

추세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시도별 인터넷 이용율을 비교해보면, 광주광역시는 2004년 6월 기준으로 울산광역시에 이어 전국 2위의 인터넷 이용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대전 등 대도시급보다 높은 수치이지만, 전남 · 북의 인터넷 이용율은 각각 54.9%와 63.1%에 불과하여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용자들의 인터넷 접속은 82개(2002년 현재)의 ISP 사업자들이 전국적으로 구축해놓은 상용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KT, 데이콤을 비롯하여 하나로통신 등이 그 대표적 ISP 사업자에 해당한다. 백본망을 비롯한 이들 상용망은 주로 광케이블로 연결되고 있으나, 일반 인터넷 수용 가구의 집안까지 이들 광케이블이 직접 연결되지 못한 까닭에 이른바 가입자망이라고 부르는, 즉 컴퓨터로부터 물리적인 인터넷 연결 네트워크상의 일정 노드까지는 기존의 전화선이나 케이블TV선 등 또 다른 방법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연결방법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일반 사용자들의 인터넷 접속방법은 xDSL 방식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ADSL 방식의 서비스는 기존의 구리 전화



	2000. 8	2000. 12	2001. 6	2001. 12	2002. 6	2002. 12	2003. 6	2003. 12	2004. 6
호남권	32.98	38.7	45.4	49.5	51.1	52.7	59	59.9	63.2
광주시	38.7	42.8	54.4	56.6	56.5	57.1	70.1	71.1	75.6
전 남	28.2	36.5	42.8	43	44.4	48.6	53.3	53.3	54.9
전 북	34.1	38.2	42.2	51.8	54.4	54	57.2	59.9	63.1

〈그림 6-17〉 호남지방의 인터넷 이용율 변화(2000.8~2004.6)

[표 6-44] 인터넷 이용 특성

(단위 : %)

지역범위	접속방법					email 이용율	인터넷 쇼핑경험	인터넷 연결율
	xDSL	케이블모뎀	ISDN	전화모뎀	기 타			
전 국	84.0	11.6	1.1	2.4	0.9	86.6	45.3	70.3
광 주	95.9	3.2	0.5	0.5	0.0	86.9	39.6	74.9
전 남	96.9	1.2	0.0	0.0	1.9	85.1	52.4	46.0
전 북	91.8	7.3	0.0	0.9	0.0	86.6	47.2	58.0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4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2004.8.

선을 통해서 고속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수단인데 대도시의 전화국을 중심으로 반경 3~4㎞ 거리까지가 적정 연결거리이다.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입자가 급증하다가 최근에는 VDSL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VDSL은 특성상 짧은 구리선 거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FTTC, FTTH로의 망 진화를 추진하여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 위주로 망이 구성되어 서비스된다.

하나로통신이나 두루넷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들은 케이블모뎀을 통해서 인터넷과 연결하게 된다. HFC망이라 부르는 이 방식은 광분배점까지만 광케이블을 연결하고 그 후에는 동축케이블을 사용해서 가입자 선로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즉 광과 동축이 혼합된 형태의 망으로, 기존의 ISDN이나 ADSL 방식보다 기술적으로 더 진화된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xDSL, 케이블모뎀, ISDN, 전화모뎀 등의 방식 이외에도 기업 · 기관을 비롯하여 PC방 등 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요구되는 가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메트로이더넷 방식의 연결도 있으며, 이상의 유선망 방식이 아닌 무선망 방식의 연결 서비스(이동통신, 무선랜, 위성통신 등)도 제공되고 있다.

인터넷 활용에 관한 그밖의 지표로서 email 이용율은 전국적으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쇼핑경험은 각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일반화하여 말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긴 하지만, 지리적 위치 때문에 물품구매가 비교적 편리한 도시지역에 비해서 농어촌지역의 인터넷 쇼핑 경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한 물리망 접속 가능성에 있어서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이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정보화 격차가 심한 상태에 있다.

[표 6-45] 호남지방의 전화 가입자 수 변동추이(1981~2002)

연도별	가입자 수			전년대비 증감비율 (%)		
	광주	전남	전북	광주	전남	전북
1981	82,855	-	137,657	-	-	22.7
1982	109,946	281,816	169,662	32.7	-	23.2
1983	130,579	335,624	189,256	18.8	19.1	11.5
1984	143,861	387,422	221,731	10.2	15.4	17.2
1985	158,435	440,680	271,878	10.1	13.7	22.6
1986	178,885	335,068	311,089	12.9	- 24.0	14.4
1987	194,731	409,171	357,269	8.9	22.1	14.8
1988	252,555	485,804	428,277	29.7	18.7	19.9
1989	290,217	562,456	487,183	14.9	15.8	13.8
1990	332,168	624,775	547,635	14.5	11.1	12.4
1991	377,434	667,524	591,319	13.6	6.8	8.0
1992	411,416	300,090	623,069	9.0	- 55.0	5.4
1993	441,034	728,022	658,656	7.2	142.6	5.7
1994	470,823	756,277	689,835	6.8	3.9	4.7
1995	493,937	753,962	730,309	4.9	-3.1	5.9
1996	517,708	822,169	765,323	4.8	9.0	4.8
1997	562,555	874,003	792,644	8.7	6.3	3.6
1998	542,011	884,087	793,909	- 3.7	1.2	0.2
1999	553,330	891,843	805,199	2.1	0.9	1.4
2000	577,590	902,050	817,884	4.4	1.1	1.6
2001	624,178	914,115	836,137	8.1	1.3	2.2
2002	717,199	898,842	799,963	14.9	- 1.7	-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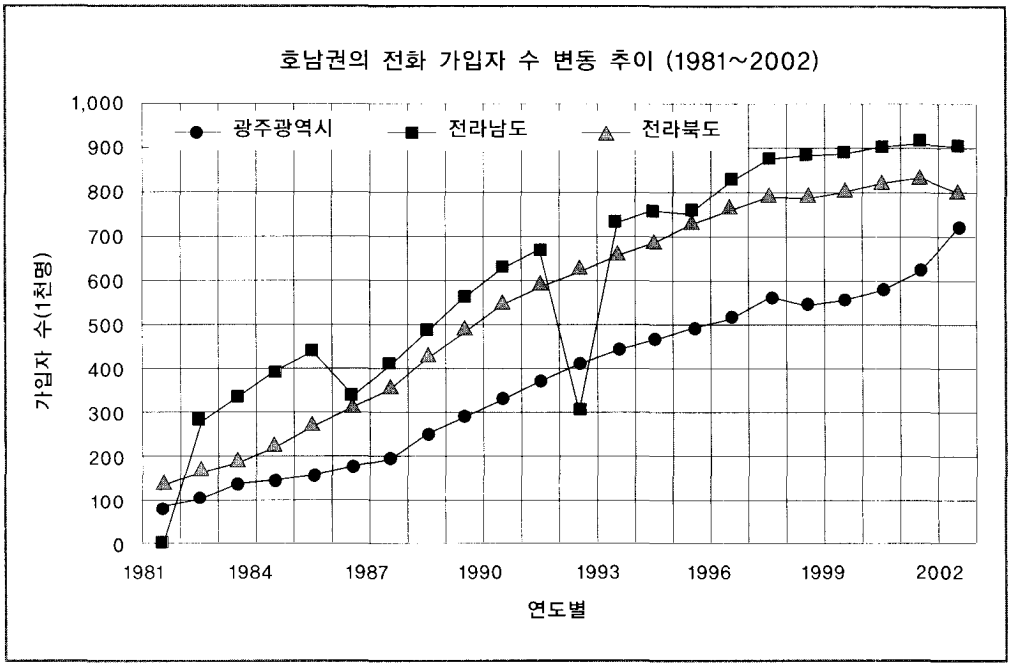
자료 : http://www.jeonnam.go.kr/statistics/
http://stat.provin.jeonbuk.kr/
http://www.metro.gwangju.kr/

(2) 통신서비스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통신 서비스의 주요 유형은 전화, 전용회선, 초고속망 등을 통한 유선통신 서비스와 셀룰러 및 PCS, 무선호출, 주파수 공용통신, 무선 데이터통신 등의 무선통신 서비스로 나누어볼 수 있다. 비록 인터넷을 이용한 전화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머지않은 미래에 새로운 패턴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

지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선통신 서비스는 전화 서비스이다.

2002년 현재, 호남지방의 전화서비스 가입자 수는 우리나라의 전체 전화 통신서비스 가입자 수(33,107,344명) 가운데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지역별로 몇 차례의 일시적 감소를 보이기도 했으나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전체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난다. 비록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다소 다르지만, 전남 · 북지역의 경우 2002



〈그림 6-18〉 호남권의 전화가입자 변동 추이(1981~2002)

[표 6-46] 호남권의 이동전화 보유 대수

(2000년 현재; 괄호안은 전국에 대한 구성비)

	이동전화 가입자 수	인구(1천명)	1천명당 대수
전 국	21,227,882	48,067	441.6
광주광역시	647,146(3.05%)	1,375(2.86%)	470.7
전 남	654,961(3.09%)	2,135(4.44%)	306.8
전 북	716,428(3.37%)	2,007(4.18%)	357.0
호남권 계	2,018,535(9.51%)	5,517(11.48%)	365.9

자료 : 통계청, 「시 · 군 · 구 100대지표」, 2002.12.

년 이후 오히려 전화서비스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감소세를 어떤 한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당해지역 거주 인구의 전반적 감소 및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유 · 무선통신서비스 사용인구의 증가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이동전화, 주파수공용통신, 무선데이터통신, 무선호출, 기타 등의 무선통신 서비스에서 가장 보편적인 서비스는 셀룰러 및 PCS같은 이동전화 서비스이다. 2000년 현재, 광주광역시 및 전남 · 북의 이동전화(셀룰러+PCS) 가입자 수는 약 200만 명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전체 가입자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입자 수는 호남지역의 인구 비례로 볼 때, 전국 평균치보다 다소 낮은 비율이다.

4. 에너지 수급 체계

1) 에너지 자원

(1) 석탄

호남지방의 석탄 산지로는 화순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의 호남탄전이 있다. 매년 약간씩 줄어들고 있긴 하나, 2003년 현재 호남탄전의 무연탄 매장량은 59,389,000M/T으로 우리나라 전체 매장량의 6.5%를 차지하고 있다(표 6-47). 이 가운데 가채매장량은 총 매장량의

[표 6-47] 호남탄전의 무연탄 매장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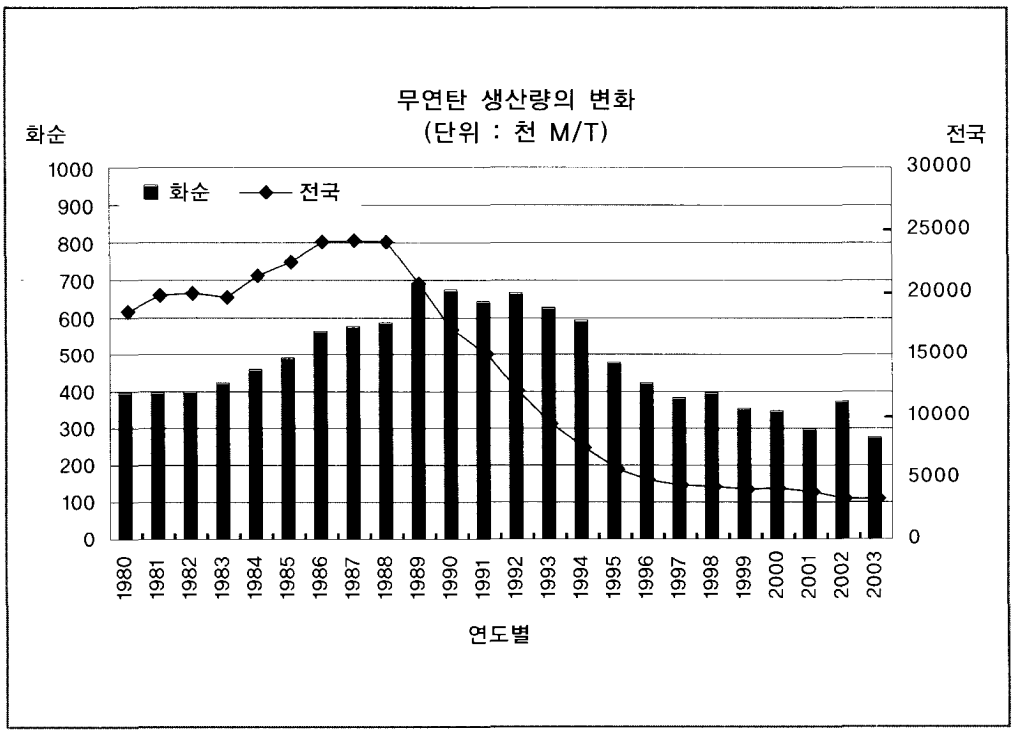
(단위: 천 M/T)

시기별	총 매장량	점유율(%)	가채매장량		
			계	가채량	잠재가채량
2002 전국	907,409	100	340,287	201,675	138,612
호남탄전	59,389	6.5	34,012	18,771	15,241
2003 전국	867,856	100	308,059	178,958	129,101
호남탄전	59,389	6.8	34,012	18,771	15,241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http://www.keei.re.kr

57.3%에 해당하는 약 3천 400만 M/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림 6-19〉는 우리나라의 무연탄 총생산량과 화순탄광의 무연탄 생산량 변화를 그래프화한 것이다.

무연탄 소비량의 변화에 있어서는[표 6-48], 매년 무연탄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호남지방만의 고유한 추세인 것은 아니며 전국적 현상이다. 즉 생활수준 향상으로 난방 등에 있어서 고급 에너지로 석탄 사용을 대체해가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전국대비 구성비를 보면, 대략 1990년대 중반까지는 호남권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다가 그 이후 다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 6-19〉 화순탄광의 석탄 생산량 추이(1980~2003)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http://www.keei.re.kr

[표 6-48] 호남탄전의 무연탄 매장량

(단위: 천 M/T)

연도별	전국	호 남				
		계(%)		광주	전남	전북
1980	18,037	1,629	9.0	-	627	1,002
1981	18,543	1,726	9.3	-	691	1,035
1982	17,887	1,674	9.4	-	681	993
1983	18,985	1,848	9.7	-	708	1,140
1984	21,418	2,134	10.0	-	822	1,312
1985	23,657	2,442	10.3	-	957	1,485
1986	24,712	2,592	10.5	813	1,020	759
1987	24,103	2,609	10.8	818	1,045	746
1988	23,616	2,478	10.5	776	996	706
1989	20,749	2,353	11.3	781	936	636
1990	19,217	2,433	12.7	790	925	718
1991	15,184	2,008	13.2	664	767	577
1992	11,189	1,441	12.9	500	528	413
1993	7,837	1,092	13.9	370	418	304
1994	4,684	701	15.0	218	281	202
1995	3,005	431	14.3	110	184	137
1996	1,961	301	15.3	88	116	97
1997	1,389	213	15.3	63	79	71
1998	1,229	192	15.6	56	71	65
1999	1,117	170	15.2	49	67	54
2000	1,192	161	13.5	48	60	53
2001	1,230	148	12.0	51	54	43
2002	1,175	128	10.9	46	44	38
2003	1,191	121	10.2	44	44	33

자료 : http://www.keei.re.kr/keei/esdb/e_c1_3.html
주 : 전남:'85년까지 광주시분 포함

[표 6-49] 연탄공장 현황(2002년 1월 기준)

구분	업체수(개)		시 설 (대, 개/h)					
	회 사	공 장	소탄(3.6Kg)					
			윤전기	생산능력				
광 주	2	1	21	75,600	-	-	10,241	114
전 북	4	4	27	97,200	1	1,500	38,896	205
전 남	6	5	19	98,400	-	-	21,034	105
계	12	10	67	271,200	1	1,500	70,171	424
%	18.2	16.7	20.3	28.8	2.9	2.5	23.7	22.5
전국	66	60	330	941,200	35	59,786	296,240	1,885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http://www.keei.re.kr/)

무연탄을 연료화하기 위한 기본 시설인 연탄공장은 전국적으로 60여 개밖에 분포하지 않으며, 이들 가운데 10개 공장만이 호남권에 입지하고 있다. 이들 10개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1시간당 소탄 27만 여개, 4.5kg 이상의 중탄 1,500개에 불과하다.

[표 6-50] 석유제품 소비 규모

(단위: 1,000bbl)

구분		합계(%)		휘발유	등유	경유	경질중유	중유	B-C유	항공유	LPG	납사	기타
2001년	광 주	8509.5	1.1	1420.9	1283.5	2651.6	.1	-	508.4	56.9	2562.1	-	26
	전 북	23561.8	3.2	2368.5	3431.9	7405.2	30.8	-	6317.1	331.8	3363.1	15.3	297.9
	전 남	128152.1	17.2	2032.1	2922.1	11420.9	258	39.8	9506.1	1.8	3532.4	95456.2	2,982.8
	소 계	160,223.4	21.5	5,821.5	7,637.5	21,477.7	288.9	39.8	16,331.6	390.5	9,457.6	95,471.5	3,306.7
	전 국	743666.5	100	62706.9	61706.8	132168	2714.5	1509.7	123848.2	20073	84376.6	233292.6	21,270.2
2002년	광 주	8438.3	1.1	1369.6	1243.7	2956	0	-	451.8	-	2359.6	-	57.5
	전 북	22560.1	3.0	2181.8	2597.2	7077.1	185.8	1	6399	237.5	3312	34.6	534.2
	전 남	138544.9	18.2	2148.2	2903.7	12242.9	356.1	39.5	7974.2	6.2	4551.7	103263.4	5,059.1
	소 계	169,543.3	22.3	5,699.6	6,744.6	22,276	541.9	40.5	14,825	243.7	10,223.3	103,298	5,650.8
	전 국	762941.3	100	60484.5	52874.4	145366	2692.4	1767.8	111361.5	20577.9	88605.9	252416.6	26,794.4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http://www.keei.re.kr/keei/esdb/e_c1_1.html)
주 : 기타 = 용재, 아스팔트, 윤활유, 파라핀왁스, 석유코크, 기타제품 포함

(2) 석유제품

에너지 자원으로서 석유제품의 소비량 변화를 살펴보면[표 6-50], 자동차나 선박 등의 교통수단의 연료로 사용 가능한 석유제품 사용량이 타 석유제품의 소비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테면 경유를 비롯해서 B-C유, LPG의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휘발유와 등유의 사용량 비중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한편 호남권이 우리나라 전체 석유제품 사용량 중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는, 2001년에 21.5%였던 것이 2003년에는 22.3%로 증가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본다면 여수산단에 집중되어 있는 석유화학 산업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의 사용량도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3) 도시가스

[표 6-51] 호남권에 서비스하는 도시가스 기업의 판매상황

구분	공급업체	공급지역	수요가 수 (가구)	'03공급량 (천㎥)	보급률 (%)	가정용 비율(%)	정압기 개수
광주	해양도시가스(주)	광주광역시 전역 전남 화순군 일부	310,574	363,569	61.6	60.8	484
전남	전남전남도시가스(주)	전남 순천시 · 광양시,곡성군 · 구례군	74,677	139,464	53.3	32.2	100
	대화도시가스(주)	전남 여수시 전역	39,936	48,237	40.4	65.0	87
	목포도시가스(주)	전남 목포시, 무안군 · 영암군 전역	41,766	36,190	28.2	77.7	110
전북	전북전북도시가스(주)	전북:전주시 전역, 김제시 · 완주군 일부	137,464	177,888	58.7	61.6	256
	군산도시가스(주)	전북 군산시 전역	42,004	60,236	45.9	46.4	119
	익산도시가스(주)	전북 익산 · 정읍시 전역	50,600	69,753	45.4	51.9	86
계	7개 업체		697,021	895,337	54.2	55.7	1,242

자료 : http://www.citygas.or.kr/main.jsp

도시가스는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고급 난방용 에너지이다. 각 시도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민간기업이 있어 이들 각각은 특정한 범위의 구역에 대해 독점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이들이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모두 액화천연가스(LNG)이며,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각 기업별 가스공급용 배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 [표 6-51]은 호남권에 서비스하는 이들 기업의 도시가스 판매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인데, 광주의 해양도시가스(주)를 비롯하여 전남 · 대화 · 목포 등 전남의 3개 기업, 그리고 전북의 가스공급 회사인 전북도시가스(주) 및 군산 · 옥구 등 총 7개의 도시가스 공급기업들이 있다.

공급구역의 범위로 볼 때, 광주광역시 전역과 전남 화순군 일부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도시가스(주)가 가장 많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며, 규모도 가장 크다. 지역내의 도시

[표 6-52] 발전소별 설비규모 변화

(단위: 1,000kW)

연도	총계(전국)	호남계	수력(소수력)								기력					내연력				복화	원자력				
			섬진강	보성강	무주양수	무주	광천(소)	대아(소)	부안(소)	계	군산	호남#1,2	여수#1	여수#2	계	흑산도	가문도	위도	계	군산	영광#1,2	영광#3	영광#4	영광#5,6	계
1987	18,939.8	3,372.9	34.8	3.1	-	-	-	-	-	37.9	75	560	200	300	1,135	-	-	-	-	300	950	950	-	-	1,900
1988	19,868.2	3,372.9	34.8	3.1	-	-	-	-	-	37.9	75	560	200	300	1,135	-	-	-	-	300	950	950	-	-	1,900
1989	20,869.1	3,372.9	34.8	3.1	-	-	-	-	-	37.9	75	560	200	300	1,135	-	-	-	-	300	950	950	-	-	1,900
1990	20,869.1	3,372.9	34.8	3.1	-	-	-	-	-	37.9	75	560	200	300	1,135	-	-	-	-	300	950	950	-	-	1,900
1991	20,892.0	3,374.3	34.8	4.5	-	-	-	-	-	39.3	75	560	200	300	1,135	-	-	-	-	300	950	950	-	-	1,900
1992	24,120.1	3,378.1	34.8	4.5	-	-	0.5	-	-	39.8	75	560	200	300	1,135	1.5	1.8	-	3.3	300	1,900	-	-	-	1,900
1993	27,653.6	3,381.5	34.8	4.5	-	-	0.5	2	-	41.8	75	560	200	300	1,135	1.5	1.8	1.4	4.7	300	1,900	-	-	-	1,900
1994	28,749.6	3,383.0	34.8	4.5	-	-	0.5	3	-	42.8	75	560	200	300	1,135	2.0	1.8	1.4	5.2	300	1,900	-	-	-	1,900
1995	32,183.9	4,983.0	34.8	4.5	-	600	0.5	3	-	642.8	75	560	200	300	1,135	2.0	1.8	1.4	5.2	300	1,900	1,000	-	-	2,900
1996	35,715.4	5,984.5	34.8	4.5	-	600	0.5	3	-	642.8	75	560	200	300	1,135	3.5	1.8	1.4	6.7	300	1,900	1,000	1,000	-	3,900
1997	41,041.8	5,985.0	34.8	4.5	-	600	0.5	3	-	642.8	75	560	200	300	1,135	3.5	2.3	1.4	7.2	300	1,900	1,000	1,000	-	3,900
1998	43,405.8	5,616.2	34.8	4.5	-	600	0.5	3	0.2	643.0	66	500	200	300	1,066	3.5	2.3	1.4	7.2	-	1,900	1,000	1,000	-	3,900
1999	46,977.7	5,616.2	34.8	4.5	-	600	0.5	3	0.2	643.0	66	500	200	300	1,066	3.5	2.3	1.4	7.2	-	1,900	1,000	1,000	-	3,900
2000	48,450.7	5,616.2	34.8	4.5	-	600	0.5	3	0.2	643.0	66	500	200	300	1,066	3.5	2.3	1.4	7.2	-	1,900	1,000	1,000	-	3,900
2001	50,858.7	5,616.2	34.8	4.5	-	600	0.5	3	0.2	643.0	66	500	200	300	1,066	3.5	2.3	1.4	7.2	-	1,900	1,000	1,000	-	3,900
2002	53,800.8	7,616.4	34.8	4.5	-	600	0.5	3	0.2	643.0	66	500	200	300	1,066	3.5	2.5	1.4	7.4	-	1,900	1,000	1,000	2,000	5,900
2003	56,052.7	7,618.8	34.8	4.5	0.4	600	0.5	3	0.2	643.4	66	500	200	300	1,066	3.5	2.5	3.4	9.4	-	1,900	1,000	1,000	2,000	5,900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http://www.keei.re.kr/keei/esdb/e_c1_1.html)
http : //www.kepco.co.kr/kepco_main/1/1/down/2004/3-3.Genertiong_facilities_by_plants.pdf

별 도시가스 보급율을 비교한다면, 목포시와 여수지역의 보급률이 낮은 편이고 광주시의 보급률은 여타 지역에 비하여 매우 높은 편이다.

2) 전력공급체계

(1) 발전설비

전국적으로 건설되어 있는 모든 발전소로부터 생산가능한 전력량은 그 설비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약 50 기가와트(GW)를 조금 넘는다. 이들 중 호남권에 소재하는 발전소로부터 생산해낼 수 있는 규모는 약 13.6% 쯤이다

호남권에 입지한 발전소의 유형별로 발전량의 비율을 보면 7개의 수력발전소(소수력 포함)가 643.4 메가와트(MW)로 8.4%를 구성하며, 5개의 기력발전소가 1,066MW(14.0%)를 차지한다. 또 3개의 내연기관 발전소의 생산전력량도 9.4MW(0.1%), 그리고 6개의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5,900MW로 77.4%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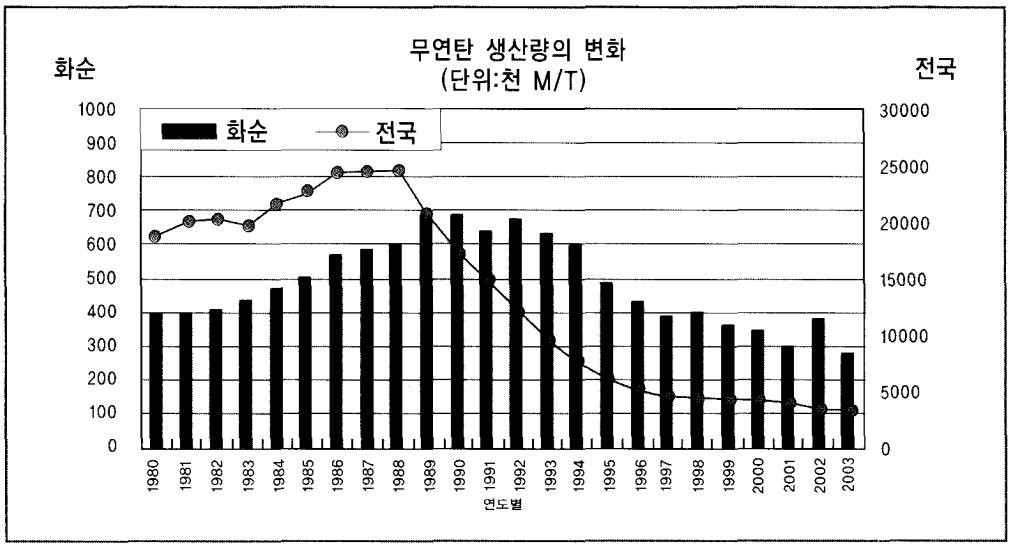
(2) 전기에너지 소비구조

전기에너지의 사용량을 그 용도에 따라 민수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추적해 보면, 1993년에 비해 2003년의 산업용 판매량 비율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단순용도별 판매량 구성비를 본다면, 전국의 평균 추세에 비해 90년대 중후반에 호남권의 산업화가 국내 타 권역에 비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온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산업별 사용량의 비중에 있어서는〈그림 6-20〉 구성비 기준의 전국 평균치는 농 · 어업:광 · 제조업:서비스업의 비중이 2:61:37이다. 이에 비해서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1:45:54로 서비스업 부문의 전력사용량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남은 7:72:21의 비율로 광 ·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며, 전북은 4:65:31로써 전국의 평균과 상대적으로 근사한 패턴을 보인다

1993~2003의 10년간에 걸친 따른 산업별 전력 소비량의 구성비 변화에서는, 전국적으로

광 · 제조업부문 구성비가 9.0%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부문 구성비는 11.5% 증가했다. 이에 비하여 광주광역시의 경우 2차산업 부문의 구성비가 10.0%나 감소하고 3차 산업 부문의 구성비는 무려 15.7%나 증가했다. 전북의 경우는 2차 부문이 각각 7.8% 감소한 반면에 3차부문에서 13.2%나 증가했다. 그러나 전남의 경우에는 2차부문의 감소가 3.2% 3차부문의 증가가 4.4%에 지나지 않았다.



〈그림 6-20〉 각 지역의 산업별 전력판매량 백분율(2003년)

자료 :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

[표 6-53] 용도별 판매 전력량 추이 (1993~2003)

(단위:GWh)

구 분	1993		1995	1997	1999	2001	광주광역시	
	판매량	%					판매량	%
전국	127,734	(100.0)	163,270	200,784	214,215	257,731	293,599	(100.0)
민수용	27,896	21.8	33,412	39,360	42,447	48,636	55,807	19.0
산업용	99,837	78.2	129,858	161,424	171,768	209,095	237,792	81.0
농업 · 어업	2,220	1.7	3,370	4,176	4,572	5,985	5,944	2.0
광 · 제조업	74,304	58.2	93,066	112,207	116,287	129,806	144,443	49.2
서비스업	23,313	18.3	33,422	45,041	50,909	73,304	87,405	29.8
광주광역시	2,101	(1.6)	2,783	3,448	3,766	4,639	5,337	(1.8)
민수용	747	35.6	893	1,092	1,168	1,391	1,616	30.3
산업용	1,354	64.4	1,890	2,356	2,598	3,249	3,721	69.7
농업 · 어업	19	0.9	27	31	30	34	30	0.6
광 · 제조업	863	41.1	1,072	1,201	1,256	1,482	1,658	31.1
서비스업	471	22.4	792	1,124	1,313	1,733	2,033	38.1
전라북도	4,981	(3.9)	6,881	8,734	9,428	11,248	12,412	(4.2)
민수용	1,125	22.6	1,303	1,536	1,648	1,8856	2,119	17.1
산업용	3,856	77.4	5,578	7,199	7,781	9,362	10,293	82.9
농업 · 어업	158	3.2	260	312	342	455	405	3.3
광 · 제조업	3,069	61.6	4,320	5,514	5,759	6,232	6,683	53.8
서비스업	629	12.6	998	1,374	1,679	2,675	3,205	25.8
전라남도	6,032	(4.7)	7,719	11,494	13,160	15,654	16,671	(5.7)
민수용	1,117	18.5	1,283	1,473	1,585	1,816	2,045	12.3
산업용	4,916	81.5	6,436	10,021	11,575	13,838	14,626	87.7
농업 · 어업	272	4.5	450	636	692	1,058	1,093	6.6
광 · 제조업	3,956	65.6	4,902	7,976	9,185	10,048	10,395	62.4
서비스업	687	11.4	1,084	1,409	1,698	2,732	3,138	18.8

자료 :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
주 : ( ) 안의 %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임.

빈 면



제7장
전라지방 - 관광 및 여가활동

이정록 (전남대학교)

빈 면

제7장 관광 및 여가활동

1. 관광지 및 관광자원의 현황

1)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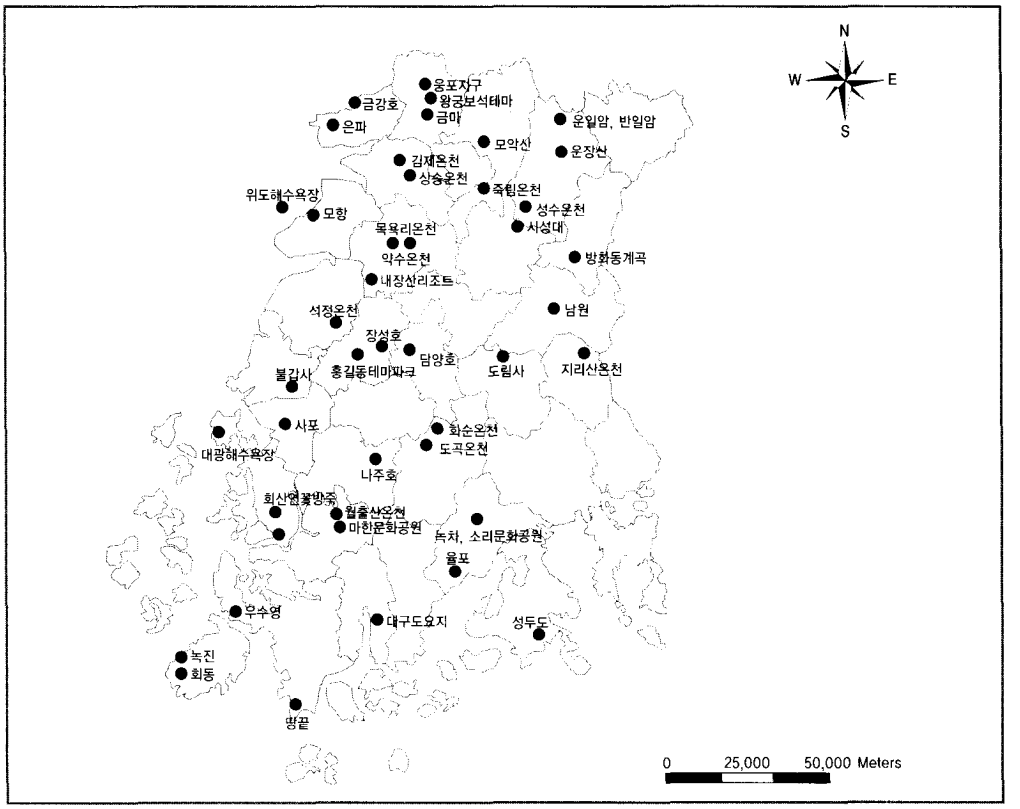
(1) 관광지의 현황

관광자원은 관광지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로서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충족시켜 줄뿐만 아니라 관광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그 분포와 입지, 특성 등은 관광지리학의 주요 연구과제로 다루어져 왔다. 체계적인 관광자원 조사와 목록화는 지역의 관광계획과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되며, 관광지역 연구 및 관광권 개발에 기초가 된다.

관광지는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하며 개발제한요소가 적어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관광정책상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 · 배치한 공간을 의미한다. 관광객을 위한 편익시설에는 관광활동에 필수적인 진입도로, 주차장, 상 · 하수도, 식음료대,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관리사무소, 관광지 안내도 등 기반시설과 야영장,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력단련장, 샤워 · 탈의장, 물품보관소 등이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관광지를 확대 · 개발함으로써 국민이 자유롭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관광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관광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국민관광지의 개발을 위한 각종의 지원사업을 펼쳤다. 그리고 1994년부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관광지의 개발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관광자원성이 풍부하고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관광객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개발한 관광지의 경우, 전국에 216개소(2004년 6월말 현재)가 지정되어 있다(그림 7-1).



〈그림 7-1〉 호남권의 주요 국 · 도립공원과 관광지의 분포

자료 : 문화관광부, 2003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서

[표 7-1] 호남권에 지정된 관광지의 현황(2003년 6월말 현재)

시 · 도	지정개소	관 광 지 명
전 남	22	담양호, 장성호, 영산호, 화순온천, 우수영, 땅끝, 성기동, 회동, 녹진, 지리산온천, 도곡온천, 도림사, 대광해수욕장, 율포해수욕장, 성두도, 나주호, 지석강, 월출산온천, 대구도요지, 사포, 보성 녹차 · 소리문화공원
전 북	20	남원, 은파, 사선대, 방화동계곡, 금마, 운일암 · 반일암, 석정온천, 금강호, 위도 해수욕장, 성수온천, 모악산, 김제온천, 상송온천, 익산 웅포지구, 죽림온천, 내장산리조트, 약수온천, 정읍 목욕리온천, 모항, 왕궁보석테마
합 계	42	

자료 : 문화관광부, 2003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광주를 포함한 전남·북지역에 지정된 관광지는 45개소로서 전국의 20.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지역(25개소)과 전북지역(20개소)에 지정된 관광지는 다른 시·도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즉, 강원도(38개소), 경북(29개소), 충남(24개소)에 비해 적은 실정이다. 호남권에 지정된 관광지의 분포는 [표 7-1]에 제시된 것과 같다.

관광지의 개발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전남북지역의 관광지 개발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이 있는 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내에서 신규로 조성된 관광지의 시기(1991-1997)와 국고 투자액을 지표로 분석하였다. [표 7-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국고투자)을 받아 1981년부터 개발된 신규 관광지는 개발시기와 투자액에 있어서 지역별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 강원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관광지 개발은 주로 1980년대에 집중하였고, 특히 전남북지역의 관광지 개발은 다른

[표 7-2] 전국 관광지의 개발시기와 투자규모*의 추이(1981년~1997년)

(단위: 백만원)

구 분		1981~1985년	1986~1990년	1991~1993년	1994~1997년	계
광주·전남	개소	4	9	2	2	17
	국비	1,634	4,966	1,253	700	8,553
부산·경남	개소	3	6	2	4	15
	국비	2,196	4,620	1,001	2,168	9,985
대구·경북	개소	7	7	2	1	17
	국비	2,938	5,027	735	525	9,225
인천·경기	개소	12	5	-	1	18
	국비	5,140	4,073	-	376	9,589
대전·충남	개소	4	3	2	3	12
	국비	1,687	2,039	3,749	1,800	9,275
강 원	개소	4	4	4	4	16
	국비	1,484	2,181	1,840	1,701	7,206
충 북	개소	3	5	-	2	10
	국비	957	2,842	-	1,322	5,121
전 북	개소	5	4	2	3	14
	국비	2,037	2,351	1,431	1,580	7,399
제 주	개소	2	1	1	3	7
	국비	744	462	219	1,150	2,575

* 1997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전국 신규관광지 중에서 국비투자액만 분석함
자료 : 문화체육부, 1997, 1997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재작성함

지역보다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다.

전남북지역의 신규 관광지 개발은 1981년 이후 시작되었고, 1986년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관광지 개발이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관광지의 개발시기는 주요 대도시와 인접한 경기, 경남 등지에 비해 시간적 지연(time-lag)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1981년부터 1997년까지 국고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관광지의 수는 전남지역 17개소, 전북지역 14개소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지만, 국고 지원액의 규모는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2) 관광단지의 현황

관광단지란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을 말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단지는 전국에 10개 단지가 있다. 2004년 6월 현재 제주 중문, 경주 보문, 원주 월송, 평창 봉평 관광단지는 일부시설을 완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김천온천관광단지는 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있다. 해남화원, 경주감포 관광단지는 토지매입 및 일부 기반시설 공사 중에 있으며, 인천 용유 · 무의와 안동 문화 관광단지는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관광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회간접자본시설로 규정하여 민자를 적극 유치케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 주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전남 · 북 지역에 유일하게 지정된 관광단지는 해남화원관광단지이다. 해남 화원관광단지는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남해안의 해상관광자원을 활용한 대단위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한 · 중 수교에 따른 서해안시대의 개발에 대비한 국제적 수준의 거점 관광단지로 조성할 방침으로 2011년 개발완료를 목표로 한국관광공사가 개발 중이다(표 7-3).

해남화원관광단지 개발계획의 과정을 살펴보면, 1991년 1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2년 10월에 관광단지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1994년 6월 조성계획이 승인되어 2004년 6월말 현재 토지매입(99%)이 완료되어 기반조성공사(16km)가 시행중에 있고, 골프장(27홀) 건설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표 7-3] 호남권 관광단지 현황(2003년 6월 현재)

단지명	위치	개발면적 (㎢)	투자규모 (억원)	개발기간	2002까지 개발실적 (억원)	'03년도 투자계획 (억원)	개발주체
해남 화원	전남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화봉리 일원	5.084	10,516	'91~2004	707	112	한국관광공사

자료 : 문화관광부, 2003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전남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 화봉리 일대의 약 5.084㎢ 규모의 해남 화원관광단지는 낮은 구릉지와 굴곡이 심한 리아시스식 해안 및 서다도해의 풍부한 관광자원 등 자연조건이 매우 양호하여 주변의 해안경관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지 내에는 마리나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해양위락시설, 관광호텔, 콘도, 가족호텔, 골프장, 민속촌, 휴양병원, 기업휴양촌, 상가 및 공공지원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1994년 조성계획 수립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소득수준의 향상 및 선진국형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상승된 관광행태 및 의식수준에 대응하고자 조성계획의 일부를 미래지향적이며 선진적인 관광시설로 변경하고자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해남화원관광단지는 전남지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남의 서남해안 관광개발사업인 일명 '전남 J-프로젝트'의 거점지역으로서 향후 전남지역 서남해안의 해안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지역이다.

2) 자연적 관광지 및 관광자원의 분포

(1) 국립공원의 분포와 특징

국립공원이란 국내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자연의 명승지, 유서깊은 사적, 희귀한 동식물을 보호 · 개발하여 국민의 보건(保健), 휴양(休養), 교화(敎化)를 위하여 국가가 설정한

[표 7-4] 호남권 국립공원의 지정현황

(단위: ㎢)

연번	공원명	위 치	지정년월일	면적㎢	비 고
1	지 리 산	전남 · 북, 경남	1967.12.29	471.75	
2	한려해상	전남, 경남	1968.12.31	545.63	해상 395.48
3	내 장 산	전남 · 북	1971.11.17	81.72	
4	덕 유 산	전북, 경남	1975. 2. 1	231.65	
5	다도해상	전남	1981.12.23	2,321.51	해상 1,986.68
6	변산반도	전북	1988. 6.11	154.72	해상 9.20
7	월 출 산	전남	1988. 6.11	56.10	

자료 : 환경부

자연공원을 말하는 것으로, 1872년 미국이 옐로우 스톤(Yellow Stone)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것이 세계 최초이다. 우리나라는 1967년 12월 지리산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이래 1988년 6월 도립공원이던 전북의 변산반도, 전남의 월출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 · 지정함으로써 2004년 현재 20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다.

[표 7-4]에 나타난 것과 같이, 호남지역에는 7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의 국립공원 지정면적에서 전남 · 북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59.9%인 3,863.08㎢에 이르고 있다. 전남 · 북지역에서 지정된 국립공원에서 내륙의 산악경관을 자원으로 하는 국립공원은 전국 최초로 지정된 지리산국립공원을 비롯하여 내장산 · 덕유산 · 월출산 등이 있고, 해안경관 중심의 국립공원에는 다도해, 변산반도, 한려해상 등이 있다. 특히 지정면적의 규모와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전남 · 북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국립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주요 배경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2)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의 분포

도립공원은 도민의 휴양이나 보건, 레크리에이션 및 야생동식물의 번식 · 보호 · 보존을 목적으로 도내 자연경승이 제일 아름답고 유휴하기 좋은 경관지로 도립공원위원회와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지정 · 고시하는 공

[표 7-5] 호남권 도립공원 현황(2003년 6월 현재)

(단위: ㎢)

연번	공원명	위치(시군별 면적)	지정일자	면적
1	모악산	전북(김제 28.22 완주 14 전주 3.13)	1971.12. 2	42.22
2	대둔산	전북(완주 38.1)	1977. 3.23	38.1
3	마이산	전북(진안 16.9)	1979.10.16	16.9
4	선운산	전북(고창 43.7)	1979.12.17	43.7
5	무등산	광주(27.03) 전남(담양 0.8 화순 2.4)	1972. 5.22	30.23
6	조계산	전남(승주 27.38)	1979.12.26	27.38
7	두륜산	전남(해남 34.64)	1979.12.26	34.39
8	팔영산	전남(고흥 9.88)	1998. 7.30	9.88
9	천관산	전남(장흥 8)	1998.10.13	8

자료 : 환경부

원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도립공원은 1970년 6월에 지정된 금오산도립공원을 비롯하여 2004년 현재 22개소가 있다. 전체 면적은 747.86㎢로 전국토의 0.75%를 점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남 · 북 지역에 지정된 도립공원은 9개소이며(표 7-5), 이는 전국의 40.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250.8㎢로서 전국 전체의 33.8%를 차지한다. 9개의 도립공원 중에서 모악산도립공원이 가장 빠른 1971년에 지정되었고, 무등산도립공원이 이듬해인 1972년에 지정되었다. 지정된 도립공원은 대부분 내륙의 산악경관과 주요 사찰이 주요 관광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군립공원은 특정 군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수려한 자연적 자원과 여건을 보유하고 있는 범위를 선정하여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군립공원은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군수가 지정한다. 군립공원은 1981년 1월 7일 전북 순창군의 강천산(剛泉山)을 시초로 2004년 현재 3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전체면

[표 7-6] 호남권 군립공원 현황(2003년 6월 현재)

연번	공원명	위 치	지정일자	면적㎢
1	강천산	전북 순창군 팔덕면	1981.1.7	15.694
2	장안산	전북 장수군 장수읍	1986.8.18	6.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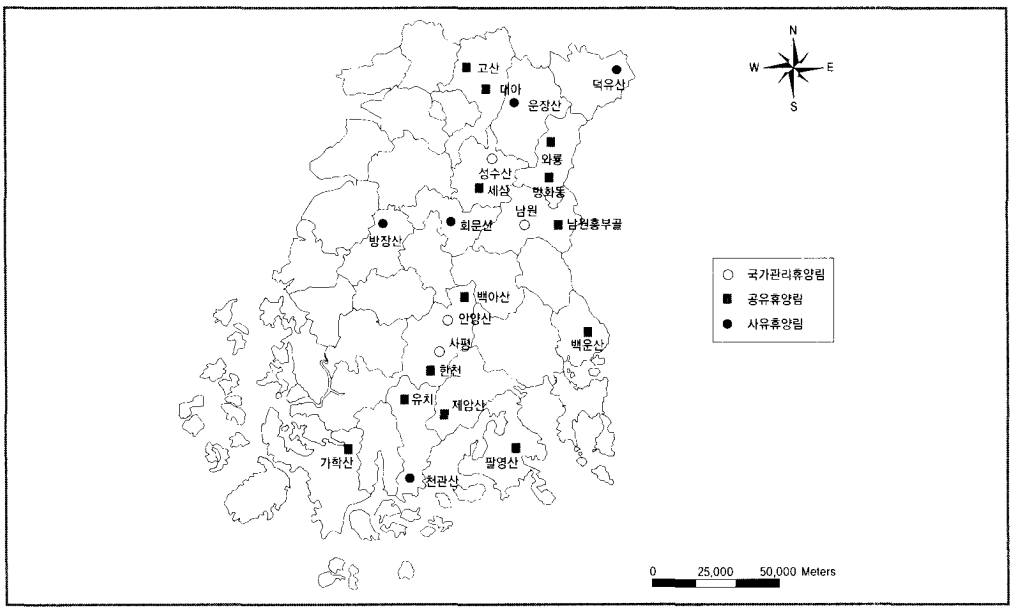
자료 : 환경부

적은 429.02㎢이고 전국토의 0.43%를 차지한다. 호남권에서는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고, 전북지역의 강천산(순창군)과 장안산(장수군)이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표 7-6).

(3) 자연휴양림의 분포와 특징

도시화 · 산업화에 따라 증가하는 산림 휴양수요에 대처하고 산림의 소득경영 일환으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며 신비로운 자연의 혜택을 누리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아울러 자연의 고마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산림사업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연휴양림은 경관이 수려하고 다수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자연생태계 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조성하고 있으며 1988년에 3개소를 시작으로 2003년까지 92개소를 조성하였고 2007년까지 총 14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연휴양시설은 기본시설로서 숲속의 집, 진입로, 주차장, 산책로, 잔디밭, 야영장, 광장, 벤치, 운동시설, 급수대, 오물처리장,



〈그림 7-2〉 호남권의 휴양림 분포자료:

숲속수련장 등이 있으며 특수시설로서 임산물판매장, 낚시터, 수렵장, 산지과수원, 조수사육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연휴양림의 소유별로 보면 국유림 29개소, 공유림 47개소, 사유림이 16개소 등 92개소 117,472㏊가 조성되어 있으며, 호남권에는 22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있다(표 7-7).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지역에는 11개소(전국의 12.0%), 전북지역에는 11개소(12.0%)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7-2). 한편 호남권에서 지정면적별로 보면, 전북의

[표 7-7] 호남권 자연휴양림 개소별 조성현황(2002년말 현재)

(단위: ㎢)

기관별	조성년도	휴양림명	위치	면적(ha)	소유구분	비고
합계			21개소	7,109		
국유휴양림			5개소	4,499		
서 부	1992년	덕유산	전북.무주.무풍.삼거	744	국유림	
	1992년	회문산	전북.순창.구림.안정	290	국유림	
	1993년	천관산	전남.장흥.관산.부평	833	국유림	
	1998년	운장산	전북.진안.정천.갈용	1,958	국유림	
	1998년	방장산	전남.장성.북이.죽청	674	국유림	
공유휴양림			12개소	2,043		
전 북	1989년	대아	완주.동상.대아	150	도유림	
	1991년	와룡	장수.천천.와룡	104	국.군유림	
	1993년	세심	임실.삼계.죽계	101	군유림	
	1995년	고산	완주.고산.오산	673	군유림	
	1998년	남원흥부골	남원.동.인월	100	군유림	
전 남	1990년	백아산	화순.북.노치	100	국유림	
	1991년	유치	장흥.유치.신유	100	국유림	
	1992년	제암산	보성.웅치.대산	160	국유림	
	1993년	팔영산	고흥.영남.우천	187	도유림	
	1994년	백운산	광양.옥룡.추산	120	국유림(교)	
	1995년	가학산	해남.계곡.가학	100	군유림	
	1997년	한천	화순.한천.오음	148	〃	
사유휴양림			4개소	567		
전 북	1996년	성수산	임실.성수.성수	425	박중자	
	1992년	남원	남원.갈치	32	신용호	
전 남	1992년	안양산	화순.이서.안심	68	진재량	
	1993년	사평	화순.남.사수	42	염판형	

자료 : 산림청

운장산 자연휴양림이 1,958ha로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적은 면적의 휴양림은 사유 휴양림에 해당하는 전남의 사평휴양림이다.

호남권에 지정된 자연휴양림의 조성 연도별 특성을 보면, 주로 1992년 이후에 조성되었다. 전북 완주군의 대아휴양림이 최초인 1989년에 지정되었고, 1990년의 전남 화순군의 백아산휴양림, 1991년의 전남 장흥군의 유치휴양림, 전북 장수군의 와룡휴양림 등이 비교적 일찍 조성된 경우이다.

3) 사회 · 문화적 관광지 및 관광자원

(1) 주요 문화재의 분포와 특징

전국 주요 문화재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정부가 문화재를 보존 ·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 관리하는 지정문화재는 전국에 총 2,835개(2004년 현재)가 있는데 광주 · 전남은 295개(전국의 10.4%)를 보유하고 있고, 전북은 169개로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 · 전남지역은 비교적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서울, 부산 · 경남, 대구 · 경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다른 시 · 도에 비해 국가지정 문화재의 분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8).

한편, 시 · 도가 지정한 문화재의 분포를 보면, 전국적으로 대구 · 경북지역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광주 · 전남지역 또한 526개소로 전국의 12.8%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은 경남, 경북, 전남, 충남, 경기지역에 이어 6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재 자료 또한 광

[표 7-8] 전국의 주요 문화재 지정현황(2003년)

(단위:개소)

구 분	광주 전남	전북	서울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인천 경기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제주	기타
국가지정	290	167	636	242	566	323	196	113	137	50	47
시도지정	525	339	233	712	654	450	412	224	319	92	-
문화재자료	225	148	13	349	455	127	338	109	38	2	-

자료 : 문화체육부, 2004, 2003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주 · 전남지역에는 237개소, 전북지역에는 149개소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포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따라서 문화재 자료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남권에 분포하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7-9]와 같이 국가지정 문화재중에서 보물과 사적, 천연기념물, 중요 민속자료 등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시도가 지정하는 문화재의 분포에서는 유형문화재와 기념물이 비교적 많다.

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적 관광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찰이다. 호남지역에 분포하는 주요 사찰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의 무등산자락에 위치한 증심사를 비롯하여 화엄사(구례), 백양사(장성), 연곡사(구례), 천은사(구례), 무위사(강진), 흥국사(여천), 대흥사(해남), 능가사(고흥), 불회사(나주), 불갑사(영광), 보림사(장흥), 도림사(곡성), 태안사(곡성), 도갑사(영암), 송광사(승주) 등이 전남지역에 분포하는 주요 사찰이다. 그리고 전북지역에는 송광사(완주), 미륵사지(익산), 금산사(김제), 내장사(정읍), 선운사(고창), 위봉사(완주), 내소사(부안), 실상사(남원) 등의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사찰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사찰은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는 주요 관광지로 기능하고 있다.

[표 7-9] 호남권의 문화재 현황(2004년 8월 현재)

(단위:개소)

구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사적	사적 명승	명승	천연 기념물	중요 무형 문화재	(보유자)	중요 민속 자료	소계
광주	2	6	2	0	0	0	1	3	3	14
전남	17	132	36	3	3	44	13	24	33	281
전북	7	89	31	0	1	26	2	10	13	169

구분	지방문화재					기타		합계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소계	문화재 자료	소계	
광주	26	14	26	7	73	26	26	113
전남	203	27	188	35	453	211	211	945
전북	183	22	101	34	340	149	149	658

자료 : 문화체육부, 2004, 2003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분포와 특징

고인돌의 천국인 전북 고창군과 전남 화순군

호남권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문화유산 중에는 고인돌유적지와 판소리가 있고, 전남 강진군 대구면의 강진청자 도요지와 전남 해남군의 공룡화석지 등이 세계문화유산의 잠정목록으로 등록되어 있다(표 7-10).

고인돌은 선사시대 돌무덤의 일종으로 영어로는 돌멘(Dolmen)이라고 한다. 고인돌은 거석기념물의 하나이며 피라미드(Pyramid), 오벨리스크(Obelisk) 등 이집트나 아프리카 대륙의 각종 석조물과 영국의 스톤헨지, 프랑스 카르낙의 열석(列石) 등이 모두 거석문화의 산물이다. 고창군과 화순군의 고인돌 유적은 2000년 12월에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전라북도 고창군 죽림리와 도산리 일대에 매산마을을 중심으로 동서로 약 1,764m 범위에 442가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인돌 군집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10톤 미만에서 300톤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으며 탁자식, 바둑판식, 지상석곽형 등 다양한 형식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일대의 계곡을 따라 약 10km에 걸쳐 500여의 고인돌이 군집을 이루어 집중분포하고 있으며 최근에 발견되어 보존상태가 좋다. 또한 고인돌의 축조과정을 보여주는 채석장이 발견되어 당시의 석재를 다루는 기술, 축조와 운반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전남 화순군의 고인돌 유적지에서는 매년 가을에 고인돌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표 7-10]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현황

	문화유산	기록유산	무형걸작
등록	고창 · 화순 고인돌유적(2000.12.2)	-	판소리(2003.11.7)
잠정목록	강진 대구면 도요지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	-	-

자료 : 문화체육부, 2004, 2003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서

세계무형유산으로 등록된 판소리

호남지역에서 세계무형유산으로 등록된 것이 바로 판소리이다. 판소리는 호남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주된 전승지역은 전라도 · 충청도의 서부지역과 경기도 남부지역에 이르는 넓은 지역이므로, 판소리는 지역적 특성과 전승 계보에 따른 유파가 생겼다. 전라도 동북지역의 소리를 동편제(東便制)라 하고, 전라도 서남지역의 소리를 서편제 (西便制), 경기도와 충청도의 소리를 중고제(中高制)라 한다.

판소리의 동편제는 섬진강 동쪽지역인 운봉 · 구례 · 순창 · 흥덕 등지에 전승되는 소리제로, 순조 때의 명창인 송흥록의 소리를 중심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소리제이다. 동편제 소리는 비교적 우조(羽調)를 많이 쓰고 발성을 무겁게 하고 악절의 끝을 짧게 끊고, 굵고 웅장한 시김새를 구사한다. 반면 서편제는 보성 · 광주 · 나주 등 전라도 서남지역에 전승되는 소리제로, 철종 때의 명창인 박유전(朴裕全)의 소리를 중심으로 전해오는 소리제이다. 서편제 소리는 비교적 계면조(界面調)를 많이 쓰고 발성을 가볍게 하며, 악절의 끝을 길게 늘이고, 정교한 시김새를 구사한다. 판소리는 그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2003년 11월 7일 유네스코 제2차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으로 선정되었다.

세계무형유산으로 등록된 판소리의 본고장은 호남지역이다. 그래서 판소리와 관련된 관광지가 매우 많다. 전북의 고창군에는 고창판소리박물관이 있다. 판소리의 이론가이자 개작자, 후원가였던 동리 신재효 및 진채선, 김소희 등 다수의 명창을 기념하고 판소리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동리 신재효선생의 고택 자리에 설립된 박물관이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매년 '전주대사습놀이' 가 개최되어 판소리와 관련된 문화행사로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전남의 보성과 광주, 함평 등지에서는 서편제와 관련된 명창대회 또는 판소리 경연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세계유산으로 잠정등록된 문화자원

세계문화유산으로 잠정등록된 자원에는 전남 강진군의 청자도요지와 남해안 일대의 공룡화석지 등이 있다.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일대에는 고려시대 청자와 도기를 구웠던 183개의 가마터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 중 보존상태가 좋은 98개의 가마터를 사적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남쪽은 바다와 인접해 있어 해로를 통한 수송이 발달했

으며, 북쪽에는 크고 작은 산이 있어 땔감이 풍부했다. 또한 도자기의 원료인 고령토와 규석이 산출되어 도자기 생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대구면 용운리의 가마터는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중엽에 성립된 초기 청자가마터로서 청자의 기원과 초기청자의 특징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이 가마터에서는 중국의 월주요(越州窯)와, 요주요(耀州窯), 여요(汝窯)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조각들이 발견된다. 또한 계율리 · 사당리 · 수동리 등지의 가마터에서는 11세기에서 14세기 무렵의 고려청자 유적이 많이 발견된다. 대구면 일대의 도요지는 고려시대 전 시기의 가마터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구조에 있어서도 각 시기의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는 매년 '청자문화제' 라는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또한 남해안 일대의 공룡화석지는 매우 넓은 규모이면서 보존상태가 완벽한 공룡알 화석산지이며, 세계최대 규모의 익룡발자국화석과 가장 오래된 물갈퀴 발자국 등이 특징적이다. 또한 이곳은 중생대 백악기 세계 최대 규모의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이며 매우 다양한 공룡화석이 산출되고 있어 학술적 ·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러한 지역으로는 전남 해남군과 화순군 그리고 여수시의 5개 섬(사도, 추도, 낭도, 적금도, 목도) 등이 해당된다. 이들 공룡화석지는 최근 생태관광지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3) 관광특구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일정구역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여 관광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1993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법령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곳을 말한다. 관광특구는 제주도, 경주시, 설악산 등 5곳이 1994년 8월에 처음으로 지정된 이래, 최근까지 전국에 2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현재 전남 · 북지역에는 3개의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운영중에 있다.

전남 · 북지역에 지정된 관광특구에는 전북 무주군의 무주구천동지구, 정읍시의 내장산지구 그리고 전남 구례군의 구례지구 등이 있다(표 7-11). 무주구천동관광특구는 덕유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무주리조트와 수려한 자연경관이 특구의 주요 관광자원이다. 1997년 지정

[표 7-11] 호남권 관광특구 지정 현황

시 · 도	특구명	지정지역	면적(㎢)	지정 시기	비고
전북	무주구천동	전북 무주군 설천면	7.61	1997.1.18	무주리조트
전북	정읍내장산	전북 정읍시	3.50	1997.1.18	내장산 집단 시설지구
전남	구례	전남 구례군 일원	78.02	1997.1.18	지리산온천, 화엄사등

자료: 문화체육부, 2004, 2003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된 무주구천동 관광특구의 면적은 7.61㎢이며, 무주리조트를 중심으로 4계절형 관광객이 유입하는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전북의 정읍내장산 관광특구 또한 1997년에 지정되었으며, 지정면적은 3.50㎢이다. 특구내의 주요 관광지 및 관광자원으로는 내장산 국립공원, 내장사, 가을단풍 등이다.

전남의 구례군 구례 관광특구도 1997년에 지정되었다. 구례군 산동면 · 광의면 · 마산면 · 토지면 일대의 78.02㎢의 면적으로 구성된 구례특구는 우리나라 제1호의 국립공원인 지리산국립공원, 국내 10대 사찰중의 하나인 화엄사를 비롯한 연곡사와 천은사, 1995년 7월에 개장한 지리산온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하천인 섬진강 등의 다양한 자연적 · 사회문화적 관광지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4) 생태관광지 및 관광자원

오늘날 산업공해와 지나친 개발로 인해 푸르고 깨끗한 자연공간이 해마다 부족해짐에 따라 현대 도시인들은 갯벌, 탐조, 동굴, 반딧불 등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즐기고자 하는 체험관광이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생태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환경친화적인 관광개발을 통해 생태관광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를 포함한 전남 · 북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 및 관광자원으로는 갯벌해안, 공룡화석지, 철새도래지 등이 있다.

갯벌관련 생태관광지

생태관광과 관련한 대표적인 체험관광이 바로 갯벌체험관광이다.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많은 갯벌이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넓은 갯벌을 활용하여 '체험'이 가능한 곳도 매우 많다. 우리나라의 해안 중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갯벌로는 낙동강, 남해도, 광양만, 해남 황산, 목포 압해도, 무안군 매안일대, 함평만, 만경강 · 동진강 일대, 경기도 평택 홍원리, 영종도 남부, 근간하구, 천수만, 아산만, 남양만, 영종도, 강화도 북부지역 등이다. 전남 · 북의 해안에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갯벌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다. 전북 김제의 심포갯벌, 전북 고창의 하전마을, 곰소만 해안일대, 전남 신안군의 압해도, 영광군의 두우리 마을, 함평군의 석두마을 그리고 영등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는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의 '신비의 바닷길' 등이 대표적인 갯벌관련 생태관광지이다.

전북 부안과 고창군 사이의 줄포만과 주변해안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고 튼튼한 갯벌이 발달해 있다.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는 갯벌 체험장소로 유명하다. 하전마을의 갯벌은 우리나라에서 바지락조개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다. 갯벌은 그야말로 바지락조개를 따는 밭이나 다름없다. 또한 김제군 진봉면 심포리의 해안에는 넓은 갯벌이 발달해 있고,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갯벌체험마을로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심포마을 근처에는 망해사가 있으며, 인근의 광활면은 김제평야로 유명한 지역이다.

전북의 곰소만은 변산반도 아래에 깊게 패여진 내만으로, 우묵한 지형 때문에 물살이 느려져 가는 세립질의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갯벌로 이루어져 있다. 갯벌의 넓이가 약 80여㎢로 광대하며, 염생식물 군락 중 칠면조 군락이 4~5km폭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제방뚝을 중심으로 나문재, 해홍나물, 퉁퉁마디, 갯개미취, 가는갯능쟁이가 대상 분포를 이루고 있어 장관이다. 곰소만의 갯벌은 광활한 넓은 면적을 이루고 있어 갯벌에 서식하는 게류들이 다량 서식하고 있으며, 이들은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어 자연학습장으로 가치가 있다. 특히 곰소만 인근에는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선운산 도립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시설과 숙박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훌륭한 생태관광지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전남 신안군의 압해도는 우리나라 섬 가운데 가장 풍성한 갯벌을 두르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예부터 낙지, 짱뚱어, 숭어, 농어 같은 어류가 많이 어획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낙지는 다른 곳의 낙지에 비해 색깔과 맛이 전혀 다르다. 이곳의 낙지는 '뻘낙지'라고 해서 색깔이 갯벌을 닮은 것이 특징이다.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마을 일대의 해안에는 넓은 갯벌이 발달해 있다.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한 두우리 갯벌은 체험관광이 가능한 유명한 장소이다. 특히 이곳은 진흙과 모래가 적절히 섞여 물빠진 갯벌위로 차를 몰고 질주할 수 있을 만큼 바닥이 단단하며, 바닷물이 빠진 뻘밭에서는 백합과 고동 등을 쉽게 잡을 수 있다. 인근에는 불교 · 원불교의 성지가 있어 테마관광 코스로 인기가 많다. 또한 진도군 고군면의 해안일대에서는 매년 봄 · 가을에 회동리에서 모도리 사이의 약2.8km의 바다가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해저에 형성된 바닷길이 해면위로 일정 시간 드러나, 마치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 기간에 영등축제가 개최되는 회동리 일대는 생태관광지중의 하나이다.

탐조관련 생태관광지 및 관광자원

최근 청소년 · 가족단위 등 일반 관광객을 중심으로 새의 관찰을 통해 이를 즐기고자 하는 탐조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다. 호남지역에서는 전남의 순천만, 군산의 금강철새도래지, 그리고 임실군의 백로 서식지 등이 유명한 탐조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고, 이들 철새도래지는 생태관광과 관련하여 잠재력이 매우 높은 관광자원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의 순천만의 갈대밭과 조류서식지는 학술적 가치와 심미적 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전국적인 생태관광지로 등장하고 있다. 순천만은 갯벌과 염습지, 갈대가 함께 분포하는 지역으로 생태학적인 면에서 볼 때, 전국에서 가장 완벽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순천만 입구에는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고밀도의 갈대밭이 약 15만평 정도 자연적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이곳의 갈대밭은 약 30년 동안의 안정기를 거쳐서 최근에는 완전한 극상을 이루고 있다. 순천만의 갈대밭은 우리나라의 갈대밭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 해당한다. 특히 15만평의 갈대밭이 제공하는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은 순천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관광자원이다. 갈대밭은 조류의 자연적 서식지로 기능하고 있다. 순천 만에는 국제적으로 희귀한 물새를 비롯하여 11종의 천연기념물을 포함하여 약 200여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생태적인 보고이다. 이러한 조건을 보유한 순천만에는 매년 많은 생태관련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매년 가을에는 '순천만 갈대제'가 개최되고 있다.

전북의 군산 '금강철새도래지' 또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탐조관광지이다. 이곳에는 철새 및 조류에 관한 전시공간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360도 회전식의 조망센터가 설치되어 금강일대의 철새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특히 2004년도 겨울에는 세계철새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며, 아울러 금강철새조망대 주변에는 금강하구둑, 채만식문학관, 군산온천과 오성산, 고군산군도, 새만금방조제등이 있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강호는 갈대밭과 먹이가 풍부해 매년 여름과 겨울철이면 가창오리등 30만마리 이상 각종 철새가 날아오고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희귀조들도 정기적으로 이곳을 찾고 있다.

전북의 임실군 임실읍은 백로 서식지로 유명하다. 임실읍 성가부락 뒷산에 해마다 백로 천여마리가 날아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이 백로들은 매년 경칩 때가 되면 떼지어 이곳에 날아들어 서식하다가 백로때 남쪽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때 5천여평 되는 소나무 숲에 둥지를 틀고 내려앉은 모습이 마치 선경(仙境)을 방불케 하고 있다. 각양각지에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까지도 이 장관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찾아오기도 한다. 이곳에 백로들이 날아들기 시작한 것은 구한말, 이 지방의 거부 진재황이 여기에 별장을 짓고 백송 42주와 느티나무를 심어 숲을 이루면서부터이다. 지금은 별장은 없어지고 부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10여년 전만해도 4천수에 달하던 백로가 해마다 그 수가 줄어 근래에는 5백여 마리에 이르는 철새의 도래지가 되었다.

2. 지역의 관광산업 현황과 특징

1) 관광호텔 및 숙박업의 현황과 특징

우리나라의 관광숙박업은 관광호텔업, 국민호텔업, 해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관광호텔은 197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관광호텔의 분포는 지역별로 커다란 차이를 있으며, 전체 관광호텔의 112개(전체의 20.8%)가 서울에 분포하고 있다. 광주 · 전남 · 북지역(2004년 5월말 현재)에 위치한 업체는 54개로 전국의 10.0%이고, 객실 수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의 5.7%로 매우 빈약한 수준이다.

관광호텔업의 지역별 특징을 살펴보면(표 7-12), 광주에는 18개(객실수 기준 1,047실), 전북은 12개(객실수 기준 981실), 전남은 24개(객실수 기준 1,237실)로 전남지역이 광주 및

[표 7-12] 호남권 관광호텔업 등록현황(2003년 5월 현재)

(단위:개소)

구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미정		합계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광주	-	-	2	167	8	538	3	128	1	36	4	178	18	1047
전북	1	118	2	277	5	390	4	203	1	63	-	-	13	1051
전남	-	-	-	-	8	533	6	271	5	187	3	132	22	1123
계	1	118	4	446	21	1,461	13	602	7	286	7	310	53	3,221

자료 : 문화관광부, 2004, 2003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주 : 등급미정은 신규등록업체로서 현재일 기준 등급심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업체

전북보다 업체와 객실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호남권에는 특급이상의 호텔이 매우 적은데, 광주 · 전남 · 북지역에는 6개의 특급호텔(620실)이 있다. 이는 전국의 5.5%(객실수 기준 2.1%)로 비중이 매우 낮다. 특히 전북을 제외하면 광주와 전남에서는 특1급 호텔이 전무한 상태이다.

그리고 광주 · 전남 · 전북지역의 관광숙박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관광호텔 중에서 특1급에 해당하는 호텔이 1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며, 일반호텔의 경우 객실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어 호텔업체의 영세성을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호텔과 휴양 · 콘도미니엄업의 발달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호남권은 수려한 서남해안의 해상경관과 다수의 내륙형 국 · 도립공원이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중요한 하부구조인 숙박시설이 영세하여 숙박관광객을 견인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7-13] 호남권의 관광호텔 객실이용율(2002년)

(단위:%)

구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계	
	전체	외국인	전체	외국인	전체	외국인	전체	외국인	전체	외국인	전체	외국인
광주	-	-	56	11	43	6	44	5	35	4	46	7
전북	40	8	47	20	41	6	29	2	-	-	40	10
전남	-	-	-	-	50	10	40	9	45	8	46	9
평균	40.0	8.0	51.5	15.5	44.7	7.3	37.7	5.3	40.0	6.0	44.0	8.7

자료 : 문화관광부, 2004, 2003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표 7-14] 호남권 숙박업의 추이(2001~2002)

(단위: 개)

구 분	2001년 12월말 현재		2002년 12월말 현재	
합 계	4,347		4,455	
시·도	광주	969	광주	1,012
	전북	1,588	전북	1,618
	전남	1,790	전남	1,825

자료 : 문화체육부, 2004, 2003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한편, 관광호텔의 객실이용율을 분석해 보면(표 7-13), 전체적인 이용율은 34.3%이고, 외국인의 이용율은 6.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의 이용율이 40.0%, 전북의 이용율이 35.0%이고, 전남의 이용율은 28.0%로서, 광주·전북에 비해 전남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호텔이용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북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전남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보다 특2등급 이상 고급호텔의 이용율이 높은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전남지역 관광호텔 객실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는 1등급 이하 호텔들의 시설 개·보수 및 서비스의 증대가 요구된다 하겠다.

일반 관광객의 이용이 가능한 중저가형의 일반 숙박업 현황을 살펴보면(표 7-14), 2002년에 4,455개에서 2003년 4,563개로 숙박업의 업체수는 증가하였으나, 전북지역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남 1,911개, 전북 1,607개, 그리고 광주 1,045개로 나타났다.

2) 가족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의 현황과 특징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은 다수 국민으로 하여금 여가활동을 향유케 하였으며 이는 가족단위 관광의 증가를 가져왔다. 정부는 증가된 가족단위의 관광수요에 부응하여 국민복지차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건전한 가족관광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가족호텔내에 취사장, 운동·오락시설 및 위생설비를 겸비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족호텔업의 등록상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16개소가 위치해 있으며, 전남·북에는 [표 7-15]와 같이 3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즉, 전북 무주군의 무주리조트와 남원시의

[표 7-15] 호남권 가족호텔업 등록현황(2003년 5월 현재)

구분	호텔명	위치	등록일	객실수	비고
전북	무주리조트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43-15	1990.12.10	1,392	
	남원국민호텔	남원시 신촌동 437	1989. 5. 4	43	휴업
전남	한화리조트/지리산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32-3	1997.10.18	57	
	흑산비치호텔	신안군 흑산면 진리 31	2000.12.27	53	
계	4개소			1,449	

자료 : 문화체육부, 2004, 2003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남원가족호텔을 비롯하여 지리산국립공원인 전남 구례의 한화리조트가 그것이다.

특히 무주리조트는 덕유산국립공원에 속한 무주구천동내에 위치한 종합휴양지로 스키장 등 동계스포츠 시설을 위주로 한 대단위 레저 · 오락 시설 단지이다. 1997년에는 이곳에서 동계 유니버시아드가 개최되었고, 골프장을 비롯하여 키드랜드 · 워터파크 등의 놀이시설과 호텔, 콘도미니엄 등의 숙박시설, 컨벤션 센터, 한방 요양원, 휘트니스 센터 등의 다양한 부대시설이 있다. 주변 덕유산국립공원 내에 구천동관광단지, 자연휴양림, 적상산성, 안국사, 호국사 등의 관광지도 분포하고 있다.

한편,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2004년 7월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49개 업체에 108개 콘도와 24,381실이 등록되어 있다. 휴양콘도미니엄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이용계층이 확대되어 국민들의 주요 관광숙박시설이 되었다. 또한, 공급자들은 초기에 투자재원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관심있는 사업이 되어 왔다. 정부는 휴양콘도미니엄을 건전한 국민관광시설로 유도하고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여 건전한 가족단위 관광숙박시설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전남 · 북지역에 등록된 휴양콘도미니엄 업체(2004년 7월말 현재)는 전북 7개소, 전남 3개소 등 10개의 업체가 등록하고 있고, 객실규모는 약 1,567실이다(표 7-16). 전북지역에는 남원시의 지리산레저텔(294실)을 비롯하여 한국콘도, 일성지리산콘도, 지리산중앙하이츠 등 주로 지리산과 덕유산국립공원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는 구례군의 지

[표 7-16]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현황(2004년 6월 현재)

시·도	콘도명	위치	객실수
전북	한국	남원시(남원단지)	156
	지리산레저텔	남원시 신촌동	294
	지리산중앙하이츠	남원시 산곡동	153
	지리산토비스	남원시 산내면	60
	일성지리산	남원시 산내면	167
	무주일성콘도	무주군 무풍면	121
	무주토비스	무주군 무풍면	106
	7개소		1,057
전남	지리산송원리조트	구례군 산동면	211
	금호화순리조트	화순군 북면	220
	땅끝비치관광콘도	해남군 송지면	80
	3개소		511
합계	10개소		1,568

자료 : 문화체육부, 2004, 2003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리산온천을 비롯하여 화순군과 해남군 등지에 분포하며, 주로 온천관광지에 위치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여행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현황과 특징

여행업은 관광산업발전의 동맥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여행업의 종류에는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 그리고 국내여행업의 3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광주 · 전남 · 북지

[표 7-17] 여행업 등록현황(2003년 6월 현재)

(단위:개소)

구분	소계	일반	국외	국내
광주	257	9	123	125
전북	326	3	144	179
전남	335	3	125	207
계	918	15	392	511

자료 : 문화체육부, 2004, 2003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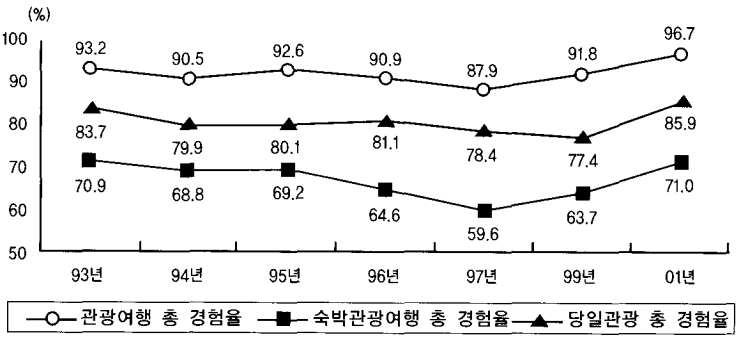
역에 있는 여행업체의 등록현황을 보면(표 7-17), 광주 217개, 전남 314개, 전북 316개 등이며, 이중에서 일반여행업은 14개, 국외여행업 362개, 국내여행업 471개이다. 등록 여행업체수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전년 918개보다 71개 감소한 847개로 나타났다.

한편, 호남권에 위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에는 종합휴양업에 해당하는 전북 무주군의 무주리조트, 전문휴양업인 전북 부안군의 부안상록해수욕장, 전남 화순의 금호화순리조트 등이 있다. 국제회의업은 광주에 광주전시컨벤션센터(GEXCO)가 2005년 7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카지노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3. 관광객의 현황과 관광환경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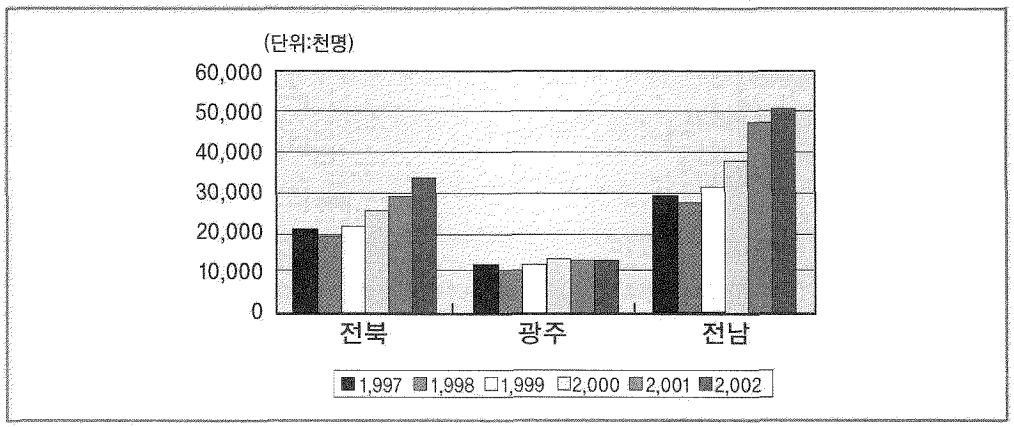
1) 방문관광객의 수요변화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만 13세 이상의 인구 약 96.7%가 2001년 한해동안 1회 이상의 숙박관광여행이나 당일관광여행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3%의 국민은 여행을 한번도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여행 경험률은 1999년의 관광여행 경험률(91.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관광활동 참여율 및 참가회(일)수의 증가, 관광 목적지의 다변화로 인하여 광주 · 전남 · 전북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그림 7-3).



〈그림 7-3〉 국민의 관광여행 경험률(1993~2001년)

자료 : 문화체육부, 2003, 2004년도 관광 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서



〈그림 7-4〉 호남권 방문 관광객수의 변화 추이(1997~2002)

자료 : 문화체육부, 2003, 2004년도 관광 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서

광주 · 전남 · 전북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역시 199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7-4〉에 나타난 것과 같이, 광주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1997년 이후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않고 약 1만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전남지역의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광주와 전북지역에 비해 관광객의 증가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 전북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지만 전남지역보다는 증가율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호남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변화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 7-18), 전북 · 광주 · 전남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은 1997년 약 59,019만명이 방문하였으나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세지역 모두 소폭 하락하였다가 1999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 2002년에는 약 9,500여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8] 전북 · 광주 · 전남지역 방문관광객 수의 변화(1997~2002)

(단위:천명)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전북	19,938	18,816	20,977	24,747	27,838	32,514
광주	11,026	9,480	11,240	12,732	11,808	11,745
전남	28,055	26,114	30,348	38,244	46,689	50,754
총계	59,019	54,410	62,565	75,723	86,335	95,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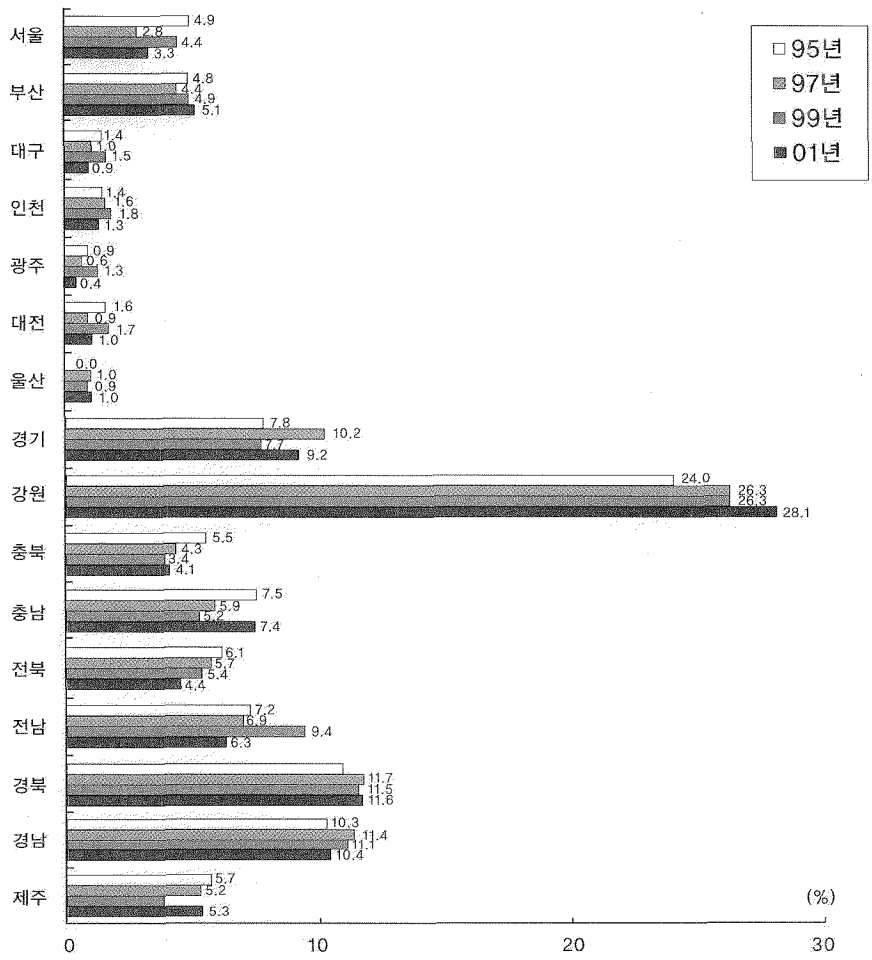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부, 2003, 2004년도 관광 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서

전남지역은 1997년 2,805만명에서 2000년 3,824만명으로 그리고 2002년에는 5,075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북지역 또한 1997년 약 1,993만명에서 2000년 2,474만명으로 그리고 2002년에는 3,251만명으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광주지역의 관광객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즉, 1997년 1,102만명에서 2000년 1,273만명 그리고 2002년 1,174만명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광주지역은 2000년 이후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1년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영향과 관광객들의 관광성향이 내륙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보다는 해양형의 관광지를 선호하여 대부분의 관광객 목적지가 광주가 아닌 전남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숙박관광객의 수요변화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 우리나라의 만 13세이상의 국민들 중 71.0%가 숙박관광여행을 1회 이상 한 것으로 조사되어 1999년(63.7%)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숙박관광객의 숙박목적지는 지역별로 커다란 차이가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중에서 숙박관광지로 가장 선호하는 곳은 강원지역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28.1%가 강원지역을 방문하여 숙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경북(11.6%), 경남(10.4%), 경기(9.2%), 충남(7.4%), 전남(6.3%), 제주(5.3%), 전북(4.4%) 등의 순으로 나타나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남·북지역을 방문하는 숙박관광객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7-5).

숙박관광객의 지역별 방문율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결과, 1995년 이후 강원, 부산, 경기 지역은 숙박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광주·전남·전북지역은 1995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남을 제외하면 1999년 이후 숙박관광객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호남지역을 방문하는 평균비율(2001년)은 3.7%로서 지역의 관광자원성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강원지역의 방문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50세 이상의 경우 전남과 전북지역의 방문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호남권 관광지에 대한 선호도는 계절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로 봄과 가을을 선호하였다.



〈그림 7-5〉 숙박관광여행의 목적지 추이(1995~2001)

자료 : 문화체육부, 2003, 2004년도 관광 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서

4. 관광문화축제의 공간적 분포와 특징

1) 관광문화축제의 현황

오늘날 우리나라의 시 · 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이벤트의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약 1,000여개를 상회하고 있다. 축제와 이벤트는 1979년에 90여건에 불과했지만, 1999년

500여건으로 지난 20년 동안 약 6배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고 있는 크고 작은 이벤트와 축제까지 포함하면 현재 약 1,000여개의 축제가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문화관광축제는 외부 관광객의 유치를 통해 지역의 관광과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들 축제는 지역주민에게는 지역문화를 보존하고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동시에 관광객에게 지역의 문화와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는 효과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자체들이 축제의 이벤트 전략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이후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비용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는 관광부문에 관심을 가졌다. 그 결과, 대규모 관광지 개발보다는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축제의 이벤트화에 치중하였다. 축제가 가진 지역의 마케팅 효과, 지역주민의 화합 등의 효과 때문에 축제의 이벤트 전략은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지자체 장들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요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배경이 지역축제를 양산시킨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1998년 민선 2기가 출범하면서 지역축제의 관광이벤트 전략은 더욱 확대되었다.

한편 축제의 속성과 지역내부의 정치 · 사회적 배경과 함께 1995년부터 실시한 중앙정부의 문화관광축제의 육성정책 또한 지역축제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정부의 축제 지원정책으로 인해 일부 경쟁력을 가진 지역축제들은 새롭게 이벤트 요소를 수용하여 문화관광축제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역의 전통 · 역사와 관련된 지역축제가 관광상품성을 부가한 새로운 유형의 이벤트형 문화축제로 전환되고 있고, 동시에 새로운 문화관광축제가 많이 신설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자체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축제들은 전통적인 축제의 형식과 내용에 이벤트 요소를 추가하여 새롭게 관광이벤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의 우수한 문화관광축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전남 · 북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문화관광축제는 117개로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다(표 7-19).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는 10개, 전남은 58개, 전북은 49개의 축제를 보유하고 있다. 축제가 최초로 개최된 시기별로 구분해서 보면, 전남 · 북지역 축제의 40.2%에 해당하는 47개의 축제가 1996년부터 1999년 사이에 최초로 개최된 축제이고, 1980년 이전에 신설된 축제는 28개(전체의 29.3%),

[표 7-19] 관광문화축제의 최초 개최년도

(단위: 개)

구분	1980년이전	1981-1990년	1991-1995년	1996-1999년	2000년이후	합계
광주 · 전남	12	7	8	33	8	68
전 북	16	4	8	14	7	49
합 계(A)	28	11	16	47	15	117
전 국(B)	114	113	120	257	88	691
A/B(%)	15.8	9.7	13.3	18.3	17.0	16.7

자료 : 필자의 조사에 의함

1991~1995년에 신설된 축제는 16개(13.7%), 2000년 이후 15개, 1981~1990년 11개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남 · 북지역에서 매년 열리는 축제의 53%가 1996년 이후에 만들어진 축제개최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시 · 도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역축제가 지역의 홍보와 지역관광의 진흥,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의 장소마케팅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개최되고, 일부 축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함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1995년부터 지역축제 중에서 관광상품성이 우수한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97년 정부가 지원하는 우수한 문화관광축제가 10여개에 불과했지만 2003년에는 30개로 증가하였다.

전남 · 북지역에는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우수축제가 많이 있다. 2001년에는 영암군의 왕인문화축제, 남원시의 춘향제, 진도군의 진도영등축제, 강진군의 청자문화제, 무안군의 연꽃축제, 무주군의 반딧불축제, 김제시의 지평선축제, 광주시의 김치대축제, 익산시의 보석문화축제 등 9개의 축제가 문화관광부가 평가한 우수한 지역축제로 선정되었다. 2001년에 선정된 30개의 우수한 지역축제 중에서 전남 · 북이 9개를 차지한 것은 전남 · 북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가 관광상품성이 큰 축제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2003년에는 영암군의 왕인문화축제, 진도군의 영등축제, 함평군의 나비축제, 남원의 춘향제, 광주시의 김치대축제, 강진군의 청자문화제, 무주군의 반딧불축제, 김제시의 지평선축제 등과 정읍시의 민속투우축제 등의 9개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2004년에는 [표 7-20]에 제시된 것과 같이, 9개의 축제가 선정되었다.

[표 7-20] 호남권의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 문화관광축제(2004년)

시·도	축제명	기간	주요 행사내용
전남	진도영등축제	5.5~5.7	영등살놀이(뗏목놀이, 용왕제, 바닷길영합회, 뽕할머니씻김), 남도들노래, 진도씻김굿, 다시래기, 개메기체험 등
	함평나비축제	5.1~5.9	남도노동요, 호남가 경창대회, 기산제 재연, 나비생태관 운영, 나비사랑 체험마당, 친환경농업체험장 등
전북	춘향제 (남원시)	5.4~5.8	춘향제향, 국악대전, 전국시조경창대회, 춘향그네뛰기, 창극춘향전, 남원도예전, 국악대향연 등
광주	광주김치대축제	10.19~10.24	김치담그기 체험코너, 자연체험학습장, 민속놀이마당 등
전남	강진청자문화제	7.31~8.6	청자파편모자이크만들기, 청자함께만들기, 청자학술세미나 등
전북	김제지평선축제	10.7~10.10	벽골제사, 쌍용놀이, 만경들노래시연, 세계농촌민속체험, 농촌에서의 하루 등
전남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순천)	10.19~10.24	선릉제, 남도 들노래, 북춤, 마당극, 풍물놀이, 다도 시연, 부침개·부꾸미·과채즙 경연, 남도음식전시, 국악공연 등
전남	보성다향제	5.5~5.9	다산제, 철쭉제례, 향토농악, 보성소리공연, 차잎따기, 차 만들기, 차사랑 연등달기, 녹차팩 건강미용체험, 다향의 밤, 차인의 밤 등
전북	전국민속투우축제 (정읍시)	5.5~5.8	정읍사 국악단 공연, 소싸움·돼지싸움, 가축품평회, 승용마 시승식, 축산기자재 전시 등

자료 : 문화체육부, 2004, 2003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 관광문화축제의 분포와 특징

전남·북지역에서 현재 매년 개최되고 있는 축제의 분포를 보면 개최시기에 따라 지역별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전남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문화관광축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축제들은 1990년대에 만들어졌다. 전라남도에서는 개최되는 축제는 58개(2002년 현재)이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여수시와 목포시에서 가장 많은 5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그리고 광양시와 장흥군, 함평군에서 각각 4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순

천 · 구례 · 영암 · 곡성 · 장성 · 해남 등지에서는 3개의 축제가 열리고 있다. 반면에 무안 · 담양 · 신안 · 완도군에서는 1개의 축제만 열리고 있다(표 7-21).

광주 · 전남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된 문화관광축제는 매년 9월과 10월에 걸쳐 개최되고 있는 목포예술제이다. 1961년 목표예술제는 한국예총 목포지부가 주최하는 예술가들의 한마당 축제에서 시작되어 오늘날에는 학생들의 음악 · 연극 · 무용경연대회, 미술대회, 주부가요제 등이 열리는 종합예술제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여수의 진남제(1967년), 구례의 지리산남악제(1969년) 등이 1960년대부터 개최되어 전남지역에서는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진 축제에 속한다. 1970년대에는 영광옥당문화제(1974년), 고흥유자축제(1975년), 보성다향제(1975년), 피아골단풍제(1977년), 진도영등축제(1978년), 영보풍향제(1979년) 등 6개 축제가 처음으로 열렸다. 특히 영보 풍향제는 영암지역의 항일투쟁 정신과 고유한 전통문화를 전승시키고 지역주민의 화합의 목적으로 1978년부터 5월 5일을 '영보의 날'로 정하였고, 지금까지 '풍향제'라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에서는 광산주민한마음축제(광주 광산구), 태봉대축제(광주 북구) 등이 개최되었다. 1980년대에는 광주 2개, 전남 6개, 그리고 1990년대에는 광주 · 전남에서 41개의 축제가 각각 새롭게 탄생되었고, 1999년 이후에는 6개의 축제만 새롭게 개최되었다. 현재 전남지역의 시 · 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부분의 축제는 1990년대에 주로 만들어졌고, 특히 1995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전남지역에서 현재 열리고 있는 축제의 최초 개최시기에 나타난 특징을 보면, 1961년부터 우량 이벤트의 속성을 가진 축제가 개최되었지만, 전체의 60.3%에 해당하는 41개 축제는 1990년대에 주로 만들어졌다. 연도별로는 1996년과 1998년 각각 9개(전체의 13.2%)가 개최되었고, 2001년에 4개의 축제가 개최되었다. 전체적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축제가 활발하게 개최되기 시작하였으며, 1996년부터 1999년까지 4년 동안에는 33개의 축제가 새롭게 열렸다(표 7-21).

현재 전북지역에서는 49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33개의 축제가 1980년 이후에 개최되었다. 1980년 이전에 개최된 축제로는 [표 7-22]에 제시된 것과 같이, 풍어제(군산), 군산종합예술제(군산), 전주대사습놀이(전주), 춘향제(남원), 삼동굿놀이(남원), 지리산단풍제(남원), 풍남제(전주), 동학혁명기념제(정읍), 모양성제(고창), 동백연축제(고창), 위도띠배놀이(부안), 고추장축제(순창), 삼인문화제(순창), 군민의날(완주), 논개대축제(장수), 마

[표 7-21] 광주 · 전남지역 문화관광축제의 최초 개최년도별 현황

연 도	축 제 명	빈도(%)
1980년 이전	광산주민한마음축제(광주), 태봉대축제(광주), 서창동만드리축제(광주), 목포예술제(목포), 진남제(여수), 고흥유자축제(고흥), 지리산남악제(구례), 피아골단풍제(구례), 다향제(보성), 옥당문화제(영광), 영보풍향제(영암), 진도영등축제(진도)	29 (42.6%)
1981~1990년	고싸움놀이(광주), 장승문화제(광주), 백운산약수제(광양), 난영가요제(목포), 팔마문화제(순천), 영취산진달래축제(여수), 흥양문화제(고흥),법성단오제(영광), 목포가요제(목포)	
1991-1995년	김치대축제(광주), 임방울국악제(광주), 광산구민의날(광주),제암산철쭉제(장흥), 왕인문화축제(영암), 낙안민속문화축제(순천), 낙안음식문화축제(순천), 나주배축제(나주)	
1996년	매화축제(광양), 개나리꽃축제(목포), 도자기축제(목포), 남해안생선요리축제(여수), 장보고축제(완도), 백양단풍축제(장성) 고천암갈대축제(해남), 땅끝여름축제(해남), 운주대축제(화순)	33 (48.5%)
1997년	향일암일출제(여수), 강진청자문화제(강진), 백련축제(무안), 무화과축제(영암), 천관산억세제(장흥), 땅끝해맞이축제(해남)	
1998년	전어축제(광양), 검은모래눈뜨는날(여수), 섬진강변축제(곡성), 보성소리축제(보성), 신안게르마늄갯벌축제(신안), 남도민요경창대회(진도), 춘란대축제(함평), 자미축제(광주), 촛불의밤(광주)	
1999년	숯불구이축제(광양), 산수유축제(구례), 대나무축제(담양), 홍길동축제(장성), 갯장어음식축제(장흥), 나비축제(함평), 허수아비솟대장승제(함평), 전통가무악대전(장흥)	
2000년	영산포홍어젓갈축제(나주), 꽃무릇축제(함평)	6 (8.8%)
2001년	심청축제(곡성), 잠자리축제(곡성), 고인돌축제(화순), 녹동바다불꽃축제(고흥)	

자료 : 필자의 조사에 의함

이문화제(진안) 등이며, 남원춘향제가 가장 오래된 축제이다. 지역별로 보면, 남원시가 7개로 가장 많고, 군산시(6개), 전주시(6개), 완주군(6개), 고창군(5개) 등의 순이다. 최초로 개최된 연도별 특징을 보면, 1980년이전에 16개가 개설되었고, 1996~1999년에 14개, 1991~1995년 8개, 2000년 이후 7개, 1981~1990년 11개 등으로 1990년대에 전체의 44.9%인 22개 축제가 새롭게 개최되었다.

전남 · 북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는 주로 1990년대 중반이후 신설되었다. 이러한 결

[표 7-22]전북지역 문화관광축제의 최초 개최년도별 현황

연 도	축 제 명	빈도(%)
1980년 이전	풍어제(군산), 군산종합예술제(군산), 전주대사습놀이(전주), 춘향제(남원), 삼동굿놀이(남원), 지리산단풍제(남원), 풍남제(전주), 동학혁명기념제(정읍), 모양성제(고창), 동백연축제(고창), 위도띠배놀이(부안), 고추장축제(순창), 삼인문화제(순창), 군민의날(완주), 논개대축제(장수), 마이문화제(진안)	28 (57.1%)
1981-1990년	오수의견축제(임실), 황산대첩축제(남원), 고로쇠약수제(남원), 정읍사문화제(정읍)	
1991-1995년	수박축제((고창), 오성문화제(군산), 흥부제(남원), 완산골연꽃축제(전주), 추령장승축제(순창), 수박축제(완주), 지리산철쭉제(남원), 종이문화제(전주)	
1996년	마이산벚꽃제(진안), 대둔산축제(완주), 딸기축제(완주), 벚꽃문화축제(군산),민속투우제(정읍), 수산물축제(고창),	14 (28.6%)
1997년	해풍고추축제(고창), 반딧불축제(무주),	
1998년	벚꽃축제(완주), 돌문화축제(익산),	
1999년	지평선축제(김제), 보석문화축제(익산), 해넘이축제(부안), 소충사천축제(임실),	
2000년	세계소리축제(전주), 국제영화제(전주), 회문산해원제(순창), 포도대축제(완주)	7(14.3%)
2001년	아동극축제(군산), 해산물축제(군산), 매창문화제(부안)	

자료 : 필자의 조사에 의함

과는 지역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취임한 민선 제1 · 2기 단체장들은 지역주민의 화합 도모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기존 축제의 이벤트화 또는 새로운 축제의 개발에 치중함에 따라 많은 지역축제가 양산되었다.

한편, 개최시기의 계절별 분포를 보면(표 7-23), 가을 46개(39.3%), 봄 41개(35.0%), 여름 22개(18.8%), 겨울 6(5.1%)의 순으로 나타나 가을과 봄에 축제가 집중적으로 개최되었다. 그리고 봄철에는 꽃이나 식물 등 자연환경과 관련된 축제가 많이 개최되고 있고, 여름에는 바다와 수변을 활용한 축제가 많다. 가을철에는 추수와 관련한 주민화합축제와 문화 · 예술관련 축제가 많이 열리며, 겨울은 기후적인 조건 때문에 일출과 일몰관련 축제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축제가 가을과 봄철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축제개최에 적합한 기후조건과 관련이 깊다. 그리고 전남 · 북지역의 많은 시 · 군이 서해안과 남해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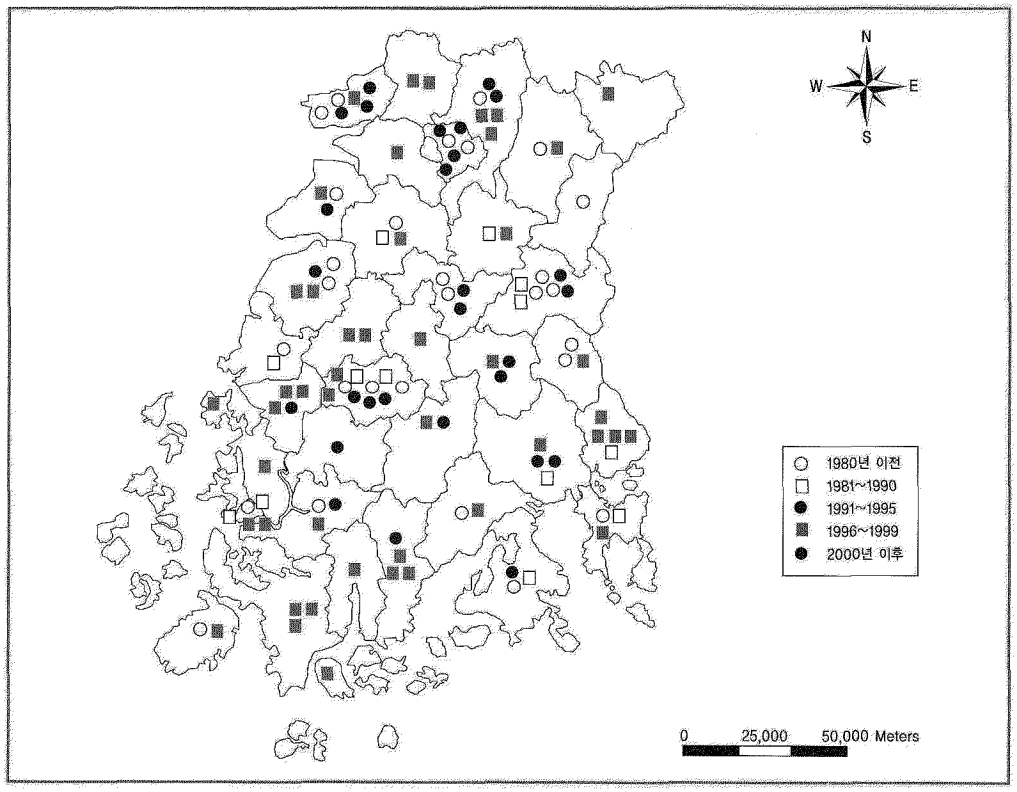
접해 있지만 여름철에 해안과 도서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표 7-23] 관광문화축제의 개최월별 분포

(단위: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광주 전남	2	1	4	7	13	1	6	3	6	20	4	1
전북	-	1	2	10	9	1	4	7	2	14	-	1
합계	2	2	6	17	22	2	10	10	8	34	4	2

자료 : 필자의 조사에 의함



〈그림 7-6〉 호남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시기별 분포자료

자료 : 필자의 조사에 의함

3) 축제목적 및 주제에 의한 분류

축제와 이벤트를 개최하는 목적은 다양하며, 내용과 프로그램도 개최목적에 따라 복잡하게 구성된다. 따라서 개최목적에 따라 축제를 구분하는 것은 축제의 속성과 개최지역의 특성, 개최효과의 분석 등에 유용하다. 축제와 이벤트는 내용과 특성,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고 학자들의 접근방법에 따라 복잡하다. 우량 이벤트는 일반적으로 목적 · 내용 · 특성에 따라 종교이벤트, 축제와 역사적 사건 등과 관련된 문화적 이벤트, 전시회 · 박람회 등의 상업적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 정치적 이벤트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우량 이벤트에는 문화적 이벤트가 많다. 개최목적에 따른 축제의 구분은 축제를 개최하는 지역의 여러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지역축제는 개최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문화관광부에서는 지역축제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즉, 해당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시 ·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하는 주민화합형 축제, 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입의 증대를 통한 지역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관광형 축제, 관광산업을 제외한 농림축산업 · 어업 · 상업 등의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개최하는 산업형 축제 그리고 환경보호를 비롯하여 역사적 인물이나 사실을 추모하거나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형 축제 등이다.

전남 · 북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를 개최목적에 의해 분류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많이 원용되고 있는 4개의 지표, 즉 주민화합형, 관광형, 산업형, 특수목적형 등으로 구분해 보면, 주민화합형이 45개(38.5%)로 가장 많고, 관광형 37개(31.6%), 산업형 19개(16.2%), 특수목적형 16개(13.7%)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7-24). 시기별로 보면, 1980년 이전에 개최된 대부분의 축제는 주민화합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1995년 이후에는 관광형 · 산업형 · 특수목적형의 축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개최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1995년 이후에 신설된 축제중에서는 다른 유형의 축제보다 관광형과 산업형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관광형이 22개, 전북은 6개이고, 산업형은 광주 · 전남 7개, 전북 6개 등으로 새롭게 개최된 대부분의 축제는 외부의 관광객을 유인하고 지역특산물의 마케팅을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밝혀졌다.

축제의 핵심은 주제이다. 축제의 주제는 외부의 관광객에게 축제의 이미지와 상징성을 알

[표 7-24] 관광문화축제의 최초 개최년도

(단위:개)

구 분		1980년이전	1981-1990년	1991-1995년	1996-1999년	2000년이후	합계
주민화합형	광주전남	8	4	5	2	-	19
	전 북	12	3	3	3	5	26
관광형	광주전남	2	1	1	17	5	26
	전 북	1	1	3	6	-	11
산업형	광주전남	-	-	3	6	1	10
	전 북	1	-	2	3	3	9
특수목적형	광주전남	2	1	3	6	1	13
	전 북	1	1	-	1	-	3

자료 : 필자의 조사에 의함

리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축제의 주제는 축제의 내용을 구성하고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주제별로 축제를 분류하는 작업은 매우 필요하다. 그렇지만 축제는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주제별 축제의 유형구분은 쉽지 않다. 전남·북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주제별로 유형화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지역전통, 역사인물, 자연특성, 생태환경, 예술, 산업경제 등의 6개 주제로 분류하였다.

축제주제별 분포지역의 특징을 보면(표 7-25), 지역전통이 41개로 전체의 35.0%를 차지하고 있고, 자연특성 31개(26.5%), 산업경제 22개(18.8%), 예술 15개(12.8%), 역사인물 14개(12.0%), 생태환경 9개(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축제는 지역전통을 주제로 한 축제가 초기에 많이 개최되었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 특성과 산업경제, 생태환경 등의 축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개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역의 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축제주제가 변화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7-25] 확산단계에 따른 축제주제의 구분

(단위:개)

주제 구분	지역전통	역사인물	자연특성	생태환경	예술	산업경제
광주광역시	8	-	-	-	1	1
전라남도	15	7	20	8	11	13
전라북도	18	7	11	1	3	8
합 계	41	14	31	9	15	22

자료 : 필자의 조사에 의함

4) 주요 문화관광축제의 특성

(1) 함평군의 함평나비축제

함평군은 1999년부터 매년 5월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약 1주일 정도 개최되는 친환경 · 생태축제이다. 함평군의 경우, 외부의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가 없고, 관광자원의 가치성이 낮아 관광이벤트의 개최가 쉽지 않았다. 또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개최된 역사 · 문화축제도 없었다. 왜냐하면 1999년 제1회 '함평나비축제'가 개최되기 이전에는 함평지역에 대한 독특한 지역적 이미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호남가의 첫마당에 나오는 '함평천지', 그리고 1970년대에 발생한 농민운동인 함평 고구마 사건이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에 해당한다. 함평군이 뚜렷한 지역적 이미지를 확립하지 못한 배경에는 함평지역이 가진 자연적 · 사회적 환경과 관련이 있다. 함평지역은 저평한 나주평야의 중간에 위치하여 해발고도가 높은 산이 없고 유명한 사찰도 없다. 그리고 나주평야의 주변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라는 단순한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전남의 다른 시 · 군에 비해 함평군에서는 새로운 축제의 발굴과 개최가 늦어졌다.

함평군에서 새로운 지역축제의 개최를 통한 지역마케팅 전략이 구체화된 것은 제2기 민선 지자체장이 취임한 1998년 이후였다.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시 · 군에서 개최된 축제는 지역의 자연적 · 사회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유형과 지역의 자원과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개최한 유형으로 대별된다. 그러나 전자의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후자의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 1999년부터 시작된 나비축제는 후자에 속한다. 전술한 것과 같이, 함평군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산과 사찰, 관광지가 없다. 그래서 지역이 보유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축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주제의 발굴이 절실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인위적으로 개발된 축제가 바로 1999년부터 시작된 나비축제이다.

'함평으로 나비보러 오세요'라는 주제로 제1회 나비축제가 1999년 5월에 개최된 이후, 지금까지 5회의 축제가 개최되었다. 5회의 축제가 개최되는 동안 축제의 대주제는 변경되지 않았지만, 부제는 약간 변경되었으며, 최근에는 나비와 인간의 만남을 강조한 생태축제로

[표 7-26] 나비축제의 개최 일시와 부제

구 분	개최 일시	축제의 부제
제1회	1999. 5. 5~5. 8	-
제2회	2000. 5. 5~5. 8	새천년을 함평나비와 함께
제3회	2001. 5. 5~5. 8	한국 방문의 해를 함평나비와 함께
제4회	2002. 5. 4~5. 12	나비와 꽃, 천연염색의 만남!
제5회	2003. 5. 3~5. 11	자연과 인간, 문화예술의 만남!

자료 : 이정록, 2003

그 개념이 전환되고 있다(표 7-26).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회에 걸쳐 나비축제를 치르면서 약 533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2003년 '디자인경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들어 농촌의 '어메니티(amenity, 쾌적성)'를 상품화하는 방안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함평나비축제 또한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나비축제는 바로 친환경을 앞세운 축제로서 이 축제를 통해 자연환경의 중요성과 동시에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농촌을 모르고 자라난 어린이들에게는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으로, 어른들에게는 자신들이 자란 농촌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켜 자연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함평나비축제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농산품을 개발함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지역 축제를 넘어 친환경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배양하자는 뜻으로 마련되었다.

축제의 성공은 관민이 함께 이루어 낸 결과이다. 축제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지역 내 전 공무원과 각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단이 행사에 참여해 안내 및 홍보와 각종 봉사 활동에 나서서 축제 행사를 외부 이벤트 업체에 대행하지 않고, 관민으로 구성된 축제 위원회가 행사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여 예산의 낭비도 줄이고, 지역 축제에 온 군민이 참여해 지역 정체성에 대한 의미도 다지고 있다. 특히 축제 행사를 대비해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꽃밭 조성과 관리, 쉼터 조성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축제 현장을 공원화하는 등 그 동안 단순히 노력 동원에만 그쳤던 공공근로사업을 생산적인 공공근

로산업으로 바꿨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함평나비축제는 종합적인 생태축제로서, 자운영 · 유채꽃을 비롯한 각종의 꽃이 만발한 1,000만 평의 대자연 사이로 수만 마리의 나비가 날아 어우러지는 감동이 나비축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축제 기간에는 종합 생태체험 마당, 친환경 농업관, 애완동물 전시 마당, 자연학습장, 문화예술 한마당의 행사가 함께 치러진다. 종합 생태체험 행사는 나비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나비관과 수련을 전시한 수생식물 학습관, 창포물에 머리감기 체험 및 누에 일대기 학습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함평군은 나비 축제와 관련하여 '나르다' 라는 고유 브랜드를 자체 개발해 패션 · 가방 · 소품 등의 상품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 외에도 로열티 수입, 입장료, 향토 음식과 농산물 판매 등으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2) 진도영등축제

진도영등축제는 진도군 고군면 회동에서 매년 개최되는 축제로 문화관광부의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관광성이 높은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전라남도의 최남단 도서인 진도군의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 2.8㎞의 바다에서 매년 음력 3월 초나 보름에 열리는 축제가 바로 영등축제이다. 이때가 되면 이곳의 바다는 조차가 가장 커지며 약 40m 폭으로 길이 생긴다.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의 약 2.8㎞가 조수간만의 차이로 수심이 낮아질 때 바닷길이 드러나는 현상이지만 40여m의 폭으로 똑같은 너비의 길이 바닷속에 만들어진다는데 신비로움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을 '신비의 바닷길' 이라고 부르고 있다. 영등축제가 개최되면 신비의 바닷길을 구경하기 위해 국내외 관광객 약50여만명이 몰려와 바닷길이 완전히 드러나 있는 약 1시간의 기적을 구경한다. 신비의 바닷길은 당시 주한프랑스대사였던 피에르랑디가 1975년 영등제에 참석하여 이러한 자연적 광경을 목격하고, 프랑스 신문에 '한국판 모세의 기적' 을 소개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1977년부터 진도군에서는 영등제를 진도군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켰다. 또한 1996년에는 일본의 인기가수 덴도요시미씨가 신비의 바닷길을 주제로 한

"진도이야기(珍島物語)" 노래를 불러 히트를 하면서 일본 관광객이 급증하기도 했다.

바다가 육지로 연결되는 '신비의 바닷길' 은 고군면 회동리에서는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적인 연례행사였다. 이곳에서는 이 현상을 '영등살'이라고 부르는데, 영등축제의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한다. 원래 영등살은 용이 승천한 곳이라는 뜻으로 조선 초기 뽕할머니의 전설이 담겨 있다. 옛날 회동리(回洞里)는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호랑이가 많아서 호동(虎洞)이라 불렸다. 제주도로 유배가던 손동지라는 사람이 풍랑을 만나 이곳에 한동안 머물렀는데, 마을이 호랑이의 피해가 극심하자 뗏목을 만들어 사람들을 모도로 이주시켰다. 그러나 뽕할머니는 섬에 남았다. 뽕할머니는 가족들이 보고 싶어 매일 용왕님께 기도를 올렸다. 마침내 어느 날 꿈에 용왕님이 나타나 '내일 아침에 바닷가에 나가면 무지개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타고 건너가라'고 일러주었다. 다음날 무지개처럼 바닷길이 열리자, 마을 사람들이 회동으로 건너가 뽕할머니를 찾아냈다. 그러나 뽕할머니는 '나의 기도로 바닷길이 열려 너희들을 만났으니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이후 사람들은 바닷길이 열린 것은 뽕할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믿었으며, 용이 승천하였다고 해서 영등살이라고 했다. 그후 자식이 없는 사람, 사랑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진도군에서는 이날 국내외 관광객들을 맞아 진도 고유의 민속예술인 강강술래, 씻김굿, 들노래, 다시래기 등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와 만가, 북놀어 등 전라남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선보이고 다양한 이벤트로 볼거리를 제공해 해마다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회동리에는 뽕할머니사당과 전망대 · 회동공연장이 있고, 뽕할머니동상과 뽕할머니가족상이 바닷길 양쪽에 세워져 있다.

(3) 무주 반딧불축제

무주 반딧불축제는 작은 발광곤충에 불과한 반딧불이를 통하여 그 동안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소외되어 버린 지구환경을 복원, 보존하고자 하는 무주의 노력과 몸부림을 하나 축제로 승화시켜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하고자 마련한 축제이다.

덕유산국립공원과 무주구천동, 그리고 무주리조트 등 다양한 관광지 및 관광자원을 보유한 무주군에서는 지역의 청정환경을 소재로 장소마케팅을 위한 목적으로 축제를 개발하였다. 특히 무주군은 반딧불과 그 먹이 다슬기 서식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청정지역으로 천연기념물인 반딧불을 소재로 한 축제를 개최하여 환경과 문화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축제로 육성하고 있다. 하늘(대기), 땅(토양), 물(수질)이 조화로워야 살아갈 수 있는 반딧불이라는 곤충이 청정환경의 척도로 인식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을 받으면서 무주군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생태환경 및 관광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1997년 제1회 축제를 시작으로, 제2회 축제에서는 전국 축제로의 그 명성과 인지도를 획득했으며, 2000년 제4회 반딧불 축제는 '새천년 밀레니엄 축제'로 선정되었고, 제5회 축제는 국가로부터 '상반기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축제의 세계화를 도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제6회(2002년) 무주반딧불축제부터 정부지정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되었다. 제8회 무주반딧불축제는 "자연주의가 좋다. 반딧불이와 함께"를 주제로 2004년 8월 20일부터 9일간 개최되었다.

[표 7-27] 관광권역별 개발방향

구 분	시·도 관광권역의 개발방향
광주광역시	· 역사문화적 상징성이 뛰어난 도시공간의 관광자원화 · 남도 문화예술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한 관광자원화 · 서남권 관광 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관광시설기반 확충 · 비엔날레, 김치축제 등 고유 관광자원의 지속 개발
전라남도	· 다도해 해양자원의 관광개발 추진 · 남도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추진 · 갯벌, 습지, 공룡화석지 등을 활용한 생태관광자원화 추진 · 숙박, 안내체계, 관광교통 등 관광시설기반 확충
전라북도	· 개성있는 역사문화·예술자원의 관광자원화 · 농산어촌 자연 및 생활문화 체험 관광자원의 개발 · 산악, 해양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 관광개발 추진 · 지역협력을 통한 지·덕 문화관광권의 개발 추진

자료: 문화체육부, 2004, 2003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5. 지역별 관광개발계획 및 주요 관광지

1) 호남권 관광개발의 특징

문화관광부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광개발을 위해국제관광의 여건변화, 국민관광의 질적 · 양적 성숙 등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제2차관광개발기본계획(2002-2011년)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국을 7대권 24개소권으로 구분하여 권역의 특성에 적합한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호남지역의 경우, 광주는 서남권 문화예술 · 관광도시로 육성, 전남은 다도해의 해양 · 문화 · 관광지역으로 육성, 전북은 전라 전통문화 예술관광지역으로 육성 등이 개발계획의 핵심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7-25]에 제시했던 것과 같이, 권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광주시 관광개발의 특징과 개발계획

(1) 광주시 관광개발의 특징과 문제점

광주시는 예향의 본고장답게 '맛'과 '멋'이 어우러진 남도의 중심도시이다. 예로부터 '빛고을'로 통하는 광주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불리우며 남도문화를 이끌어왔다. 맛깔스런 남도음식은 빼어난 맛과 넉넉한 인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1980년 5 · 18민주화운동 당시 중심지역이였던 충장로와 금남로는 도심관광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광주는 무등산도립공원과 가사문화권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문화적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광주시 관광개발계획의 기본방향은 예향 · 미향 · 의향으로서의 기능성 제고와 함께 자연적 · 사회문화적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도시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광주시의 주요한 관광자원중의 하나는 예향이라는 도시의 문화적 유산이다. 광주에서는 무등산 산자락을 타고 꽃피운 찬란한 가사문학이 '예향'의 대표적 상징이다. 송강 정철의 '성산별곡' 으로 유명한 식영정과 면앙정, 환벽당, 조선시대의 대표적 민간정원인 소쇄원, 한국화의 대가인 의재 허백련, 국창 임방울과 서정시인 박용철, 최근 세계적인 미술

축제로 자리잡고 있는 광주비엔날레 등이 그것이다. 또한 미향으로서 지난 1994년부터 해마다 10월이면 한국 대표음식인 김치를 테마로 한 '김치대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5 · 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향으로서의 도시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광주시는 무등산을 비롯한 자연적 관광자원과 가사문화권, 5 · 18국립묘지 및 5 · 18관련 사회 · 문화유적, 도심부의 충장로와 금남로, 광주비엔날레, 광주김치대축제 등의 사회문화적 관광자원이 있다. 그러나 광주시의 관광개발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광주시 관광개발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광주관광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민간자본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해 단순히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토지확보가 용이한 도시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지역이 그린벨트에 해당하여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개발계획의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사업이 주류를 이루어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고, 따라서 개발계획이 예정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문화수도 계획과 연계하여 문화경제의 활성화를 꾀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는 아시아문화전당, 컨벤션센터 및 문화관광 거점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 및 기능들이 지역 경제파급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계요소들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컨벤션센터와 연계되는 복합문화소비시설, 고급 숙박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다. 효율적인 관광안내 · 홍보 체계의 확립, 합리적인 관광루트의 설정, 지역특성이 반영된 관광상품의 개발 등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에 속한다.

(2) 광주시 관광개발계획의 기본방향

광주시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나타난 특징은 문화수도의 건설, 도시관광의 활성화, 자연적 · 사회문화적 관광자원의 활용, 관광활성화를 위한 각종의 지원체제의 정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문화수도의 조성과 남도관광을 주도하는 관광거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도문화의 거점으로서 기능성 제고, 광주와 연계한 남도문화 홍보 및 공동마케팅 개발, 전남지역의 민속체험 프로그램과 연계 등을 시도

하고 있다.

둘째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광주권, 근교권, 전남권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형 관광루트를 개발하는 것이다. 즉,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될 도심부에서 인근의 나주 · 함평 · 보성 · 화순 · 장성 등과 연계하는 광역루트, 목포의 해양관광과 연계전략 등이다. 셋째는 역사적 유적을 살린 도시관광의 추진이다. 5 · 18공원, 전남도청광장, 광주일고 학생운동기념탑, 5 · 18묘역, 전남대 5 · 18광장 등의 역사적 유적을 정비하고, 이를 관광명소화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넷째는 세계적인 문화축제 육성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시민참여와 체류

[표 7-28] 광주 및 광역권 관광루트 설정계획

구 분	주요 관광루트
도심관광루트	· 5.18광장(도청)→금남로→예술의 거리→충장로→학생독립운동공원→문예회관→비엔날레관→민속박물관→광주박물관→중외공원→전남대학교→우치패밀리랜드→문화공원→광주공원→사직공원→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 구상무대→육군통합병원→농성동공단입구→광주공원→금남로→도청주변→구MBC →구공용터미널→광주시청→광주역→전남대학교→광주교도소→망월동 5.18 묘역
무등산권루트	· 잣고개→충장사→도요지→풍암정→충효동→광주호→환벽당→취가정→독수정→소쇄원→지실마을→식영정→망월동 5.18묘지 · 잣고개→무진고성→운암서원 유허비→충민사→4수원지→김삿갓시비→청풍농관광농원→경렬사→5.18묘지 · 증심각→연진회→석실분→제1수원지→삼애산장→차밭→증심사→의제묘→춘설헌→무등산 · 비엔날레 전시장→식영정→소쇄원→충장사→전남도청→예술의 거리→춘설원→연진미술원
광역루트(1일)	· 가사문화권 탐방코스: 비엔날레→중외공원→5.18묘지→가사문화권→ 충장사→무등산장(원효사)→충만사→광주시내 · 남도예술탐방 관광코스 : 비엔날레→중외공원→ 송강정→면앙정→ 가사문화권(식영정, 환벽당, 소쇄원)→화순온천→광주비엔날레→유달산 조각공원→목포향토문화관→국립해양유물전시관→남농기념관→ 광주 · 도예문화 관광코스 : 국립광주박물관→충효동 도예지→강진 도예지→무위사→영암왕인박사유적지→도갑사→나주 반남대고분→광주

자료 : 문화체육부, 2003, 2004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서

형 관광을 위한 잠재적 자원의 축제상품화, 광주시의 5대 축제(광주비엔날레, 임방울국악제, 국제영화제, 세계민속예술축제, 광주김치축제)에 대한 집중 육성이 주요 전략이다. 다섯째는 온라인 마케팅을 관광홍보를 추진하는 것이다. 숙박, 음식, 교통, 공연 등 관광서비스의 예약기능과 관광정보 제공, 기념품 판매 등 원스톱 토탈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전략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향이 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관광개발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또한 광주시 관광개발계획에서는 시티투어의 활성화를 위한 도심관광루트와 광역적 관광루트를 설정하여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다(표 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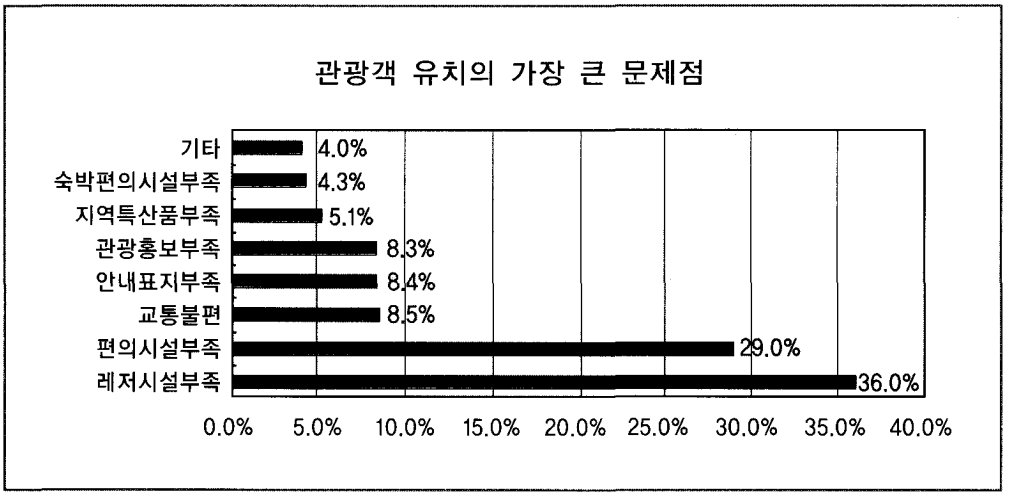
3) 전라남도의 관광개발 특징과 개발계획

(1) 전남의 관광개발계획 특징과 문제점

전남은 우리나라의 서남단에 위치하며, 태백산맥에서 분기된 소백산맥을 경계로 서남측은 1,967개의 유·무인도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해상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지리산·월출산 등의 국립공원과 조계산·두륜산·무등산 등의 도립공원 그리고 땅끝을 비롯한 다수의 국민 관광지와 이 충무공유적지 등 많은 자연·문화적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의 보고이다.

그러나 전남의 관광산업이 갖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면,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관광의 중요한 하부구조인 숙박시설의 영세성을 들 수 있다. 전남은 총 22개 호텔이 있으며, 객실수(1,123실)를 기준으로 볼 때 전국의 약 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며, 다른 지역에 비해 일반호텔, 국민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의 발달이 매우 적어 대규모 관광객 수용에 불리하다. 특히 전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광관련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전남관광의 가장 큰 문제점은 레저시설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7-7〉과 같이, 전남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가장 큰 어려운점은 관광레저시설과 편의시설의 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둘째는 여행업체의 영세성 및 차별화의 부족이다. 여행업체는 2003년 6월 현재 335개 여행업체가 영업중에 있지만, 전국의 약 4%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여행업체의 영세성으로



〈그림 7-7〉 전남지역 관광객 유치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자료 : 전라남도, 2001, 전남비전21: 제3차 전라남도종합개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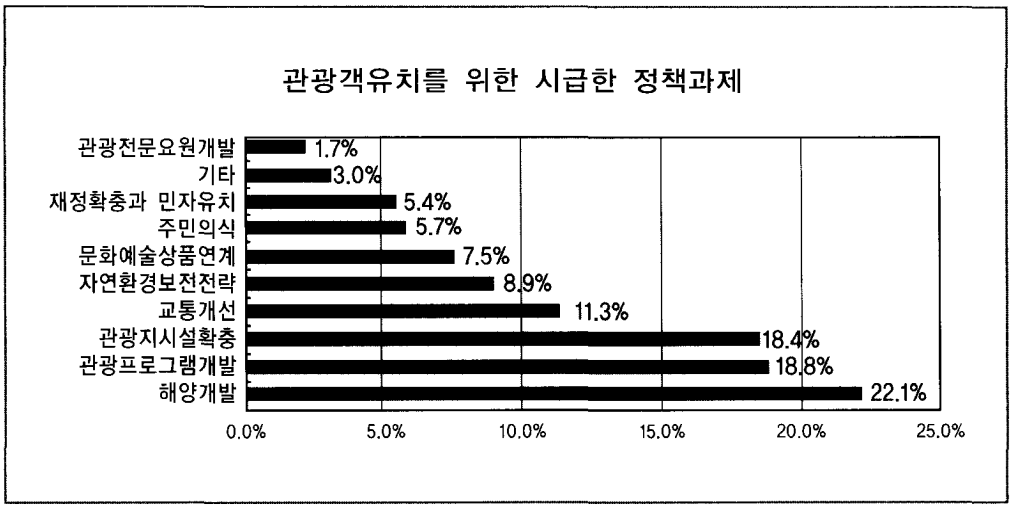
국내관광객의 해외송출에만 관심이 있고, 외국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인바운드(inbound) 업체가 많지 않다. 셋째는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문화관광 시설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지역민이나 외국인을 포함한 여행자의 관광 레크레이션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 편의시설 부족하고, 관광객 이용시설업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업, 관광유람선업, 외국인 전용 기념품판매업 등과 국제회의업, 카지노업도 전무한 실정이다. 넷째로 수도권과 동남권 등 주요 관광시장과의 지리적 원격성으로 인해 관광객의 접근이 불리한 점이다. 전남북지역은 우리나라 관광수요의 최대 공급지인 서울, 인천, 부산 등 대도시권과 멀리 떨어져 있다. 또한 외국과의 여객수송 직항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접근성이 불리하여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 유입에 불리하다.

그렇지만, 전라남도는 7천여km의 해안선과 2천여개의 도서, 해양과 내륙관광자원의 조화, 다양하고 고유한 남도의 전통문화,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의한 수도권과의 접근성개선, 개발잠재력이 높은 많은 관광자원 등의 장점도 있다. 또한 서울, 목포, 부산의 거점식 L자축 개발에 따른 중앙정부의 서남권에 대한 개발의지 고조, 세계화 · 국제화에 따른 국제관광객수의 증가, 주5일 근무제의 시행과 여가패턴의 전환에 따른 모험관광 · 체험관광 · 교육관광 · 생태관광의 등장 등으로 인해 전남지역의 관광여건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2) 전라남도 관광개발계획의 기본방향

전라남도는 서남해안의 해안자원과 고유한 전통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전술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역의 관광산업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1세기 전남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해양자원개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관광지의 시설확충, 교통환경의 개선 등으로 평가되어, 이들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개발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8).

전라남도는 풍부한 관광자원과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3차 전라남도개발계획(2001-2020)」을 통해 관광전남을 조성하기 위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전라남도는 농 · 산 · 어촌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적인 휴양지로서 꿈이 있는 공간의 창출, 전남을 방문한 국내 · 외 관광객에게 잊혀지지 않는 추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광이미지 창출, 그리고 관광상품, 관광루트의 다양화 · 다변화 등을 관광개발의 주요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그림 7-8〉 전남관광의 진흥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과제

자료 : 전라남도, 2001, 전남비전21 : 제3차 전라남도종합개발계획

[표 7-29] 전라남도 관광개발의 주요 계획과제

주요 개발전략	세부적인 실천과제
생태관광의 활성화	· 농촌경관의 보존과 개발, 농촌체험 교육공간의 마련 · 해양자원 개발, 해안생태공원조성,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 산촌자원개발, 산촌마을 및 삼림도시조성
문화관광의 활성화	· 이벤트의 통합 및 연계개발, 독특한 관광상품 및 해설체계의 개발 · 역사적 문화유적자원의 조사 및 개발, 성씨별 문화유산의 홍보 및 안내 · 해양관광 루트의 개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루트의 개발 · 산악 및 삼림자원 관광루트개발
관광산업의 육성	· 이벤트의 통합 및 연계개발, 독특한 관광상품 및 해설체계의 개발 · 역사적 문화유적자원의 조사 및 개발, 성씨별 문화유산의 홍보 및 안내 · 해양관광 루트의 개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루트의 개발 · 산악 및 삼림자원 관광루트개발
전남관광의 국제화	· 서남해안에 국제관광거점의 마련을 국가테마파크 조성 · 관과정보의 공유화를 위한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광홍보사업 추진 · 한중일 국제 해양관광 유람선 운항

자료 : 전라남도, 2001, 제3차 전라남도종합개발계획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라남도는 수려한 자연환경의 보전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관광개발을 추진, 지역 문화와 전통이 조화된 관광개발 및 관광상품화 유도, 여가 생활의 다양화에 대응한 전문화 · 개성화된 관광자원의 발굴, 해상관광자원을 이용한 시설 및 거점 중심의 신해상 관광벨트의 구축, 관광과 레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동적인 생활 관광시설의 확충, 역사문화자원과 청정해안을 연계한 세계적인 해양 · 문화관광지 개발 등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전라남도에서는 전술한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4가지의 개발전략을 수립하였는데, 첫째는 생태관광의 활성화, 둘째는 문화관광, 셋째는 고유한 지역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육성, 넷째는 관광의 국제화 등이다(표 7-29).

4) 전라북도 관광개발의 특징과 개발계획

(1) 전라북도 관광개발의 특징과 문제점

전라북도에는 지리산국립공원, 내장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변산반도국립공원, 대둔산도립공원, 모악산도립공원, 마이산도립공원, 선운산도립공원, 강천산군립공원, 장안산군립공원 등의 자연적 관광자원과 무주리조트 등의 관광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백제문화권과 마백문화권 ,조선문화의 발원지로서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고유 음식의 전주 비빔밥과 순창 고추장은 관광객의 선호도가 높은 관광상품이다.

그리고 전라북도에는 자연공원, 관광지, 관광특구, 관광농원, 온천 및 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내장산 · 덕유산 · 지리산 · 변산반도 등 4개의 국립공원은 관광객의 유인력이 매우 높다. 최근에는 남원춘향제, 무주반딧불축제, 익산보석축제 등은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한 지역축제로 평가받고 있고,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는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지역 또한 전국의 관광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지 높지 않은데, 전북관광의 문제점은 크게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대규모의 배후관광시장 부재 및 거점관광시설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전북지역은 춘향, 고인돌 등 세계적인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지역특성적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특성있는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이 가능하나 관광객 및 관광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인근의 배후시장 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유인할만한 대표적인 관광거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기인한다. 또한 체류형의 종합적인 휴양지가 타 지역보다 적어 통과형 관광객이 대부분이다.

둘째는 관광자원간 연계개발 및 관광상품화가 취약하다. 관광지 및 관광자원과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과의 연계성이 취약하며, 특히 해외관광객의 수요증대에 대비하여 공항, 항만 등 국제적인 여객수송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자연경관자원, 역사문화자원, 특산품, 축제 등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관광루트 개발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예술 및 특산품의 관광상품화와 캐릭터 개발 등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전략이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는 관광개발에 필요한 재원부족, 전문인력 · 예산이 취약하다. 현재 1개소의 관광지개발이 완료되려면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10여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는 1~2개소 주요 관광지에 집중투자하게 되면 형평성 시비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원을 고루 분산시키게 되고, 이는 다시 관광지개발의 장기화와 더불어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지출이라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전북지역은 타 지역보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흡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아 관광자원개발에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고 이로 인하여 민간자본의 유치 또한 어려운 형편이다. 그리고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의 부족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가 어렵고,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관광객 편의시설업도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관광산업을 선도해 나갈 인력 및 예산이나 관광홍보체계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2) 전라북도 관광개발계획의 기본방향

전라북도는 서해안고속도로와 고속철도(KTX)의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관광여건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전라북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은 관광권의 설정과 테마관광루트의 개발, 상징적인 관광거점시설의 조성과 관광지 개발, 관광산업의 지식기반 강화와 소프트 경쟁력의 강화 등이다.

이러한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첫째, 5대 관광권을 설정하여 장기적인 개발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지역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특성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지역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역사 · 문화관광권, 도시형 위락관광권, 산악체험휴양관광권, 서해안체험관광권, 전통문화관광권 등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개발방향을 수립하였다(표 7-30).

둘째, 관광자원간 연계를 통한 광역관광루트의 개발이다. 관광자원간 연계를 통하여 테마 및 복합적 연계관광루트를 형성하고 공동의 마케팅, 시설의 연계이용, 관광안내정보체계 구축, 접근로 및 자전거도로 확충 등 지역관광자원의 잠재력 개발과 관광산업의 육성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테마관광루트와 복합기능 관광루트의 개발을 추진중에 있다. 테마관광루트는 관광지 및 관광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해안해양체험, 산악체험, 생

[표 7-30] 전라북도의 5대 관광권 및 권역별 관광기능

관광권	관광개발방향	핵심자원	해당지역
역사 · 문화 관광권	· 역사문화관광기능 및 음식, 숙박 등 관광 배후도시 기능수행 · 백제문화권과 완산(조선)문화권 중심의 역사문화관광 기능 · 주요테마: 역사문화자원과 전원휴양자원의 연계개발	전주, 미륵사지 원불교, 왕궁리 보석테마파크	전주 익산 완주 임실
도시형 위락관광권	· 국제교역 및 업무기반을 토대로 한 도시형 산업 · 위락 · 휴양관광 · 주요테마: 도시형 산업관광과 주변지역 위락관광	군장레저타운 컨벤션센터, 그린랜드 모악산도립공원	군산 김제
산악체험 휴양관광권	· 산악경관과 레포츠시설을 활용한 산악체험관광과 청정경관자원을 활용한 생태?휴양관광 · 주요테마: 산악체험, 레포츠관광과 기체험관광 연계개발	무주리조트, 마이산 장수 국제승마장 논개사당	무주 진안 장수
서해안해양체험관광권	· 해양휴양 및 어촌관광 기능수행 · 고인돌, 동학혁명유적지 등 지역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체험 관광 · 주요테마: 해양휴양 및 역사문화관광	변산반도국립공원 내장산국립공원 고인돌군 동학혁명기념관	부안 고창 정읍
전통문화 예술관광권	· 전통문화체험 관광기능 수행 · 지역생태영농 및 특산물을 연계한 그린투어리즘의 메카 육성 · 주요테마: 전통문화예술과 그린투어리즘	춘향테마파크 지리산국립공원 국립자연사박물관 강천산 군립고원	남원 순창

자료 : 전라북도, 2001, 제3차전라북도종합개발계획

태체험, 향토역사 · 문화체험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복합기능 관광루트는 해안-내륙경관연계형, 해안-내륙문화연계형, 그리고 문화-산악체험연계형 등의 3개 루트로 계획하였다(표 7-31).

셋째는 상징적인 관광거점시설의 조성이다. 즉, 권역별로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복합적인 위락 · 여가공간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의 관광객 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을 견인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관광거점시설로서 춘향테마파크와 왕궁보석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전북의 동부지역에 해당하는 산악체험 · 휴양권에서는 장수군의 국제승마장, 무주군의 반딧불이 축제와 국제산악자전거대회, 진안군의 곤충 및 기체험 관련시설의 정비와 확충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넷째, 관광산업의 지식기반강화와 소프트경쟁력 강화를 위한다양한 전략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즉, 이벤트 및 지역축제의 연계와 상품화 방안, 지역특산물의 관광상품화 · 브랜드화, 관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관광인력의 교육과 훈련, 관광서비스의 품질인증제도, 종합관광안내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표 7-31] 전라북도의 관광루트 설정과 개발방향

구분		관광거점 연계루트	개발방향
테마 관광루트	서해안해양체험 관광루트	군산~(새만금)~김제~부안~고창~(전남)	해수욕장, 마리나 등 해양휴양관광기능
	산악체험 관광루트	무주~진안~장수~남원(지리산)	산악자전거, 스키 등 산악레포츠 휴양기능
	생태체험 관광루트	무주 · 진안 · 장수~순창~정읍~부안~김제~새만금	주말농원, 갯벌, 탐조 그린투어리즘 체험기능
	향토역사 · 문화체험 관광루트	익산~전주~임실~남원~정읍~고창	백제문화, 판소리 등 문화예술체험 관광기능
복합기능 관광루트	해안-내륙경관 연계 관광루트	변산반도~내장산~강천산~지리산	해양자원과 산악자원간 연계관광
	해안-내륙문화 연계 관광루트	(군산)~새만금~전주~남원	해양자원과 문화예술자원 연계관광
	문화-산악체험 연계 관광루트	고창~정읍~전주~진안~무주	문화예술 및 산악자원간 연계관광

자료 : 전라북도, 2001, 제3차 전라북도 종합 개발 계획

빈 면



제8장
전라지방 – 정치적 성향과 지역주의

이강원 (전북대학교)

빈 면

제8장 정치적 성향과 지역주의

1. 정치적 성향의 변화

호남은 우리나라의 '지역감정' 및 지역주의를 논의함에 있어서 제외될 수 없는 독특한 위치에 놓여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인사에서도 차별받았다는 점에서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충청이나 강원 지역과 달리 '저항적 지역주의'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호남의 '저항적 지역주의'를 전승되어오는 '지역기질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적어도 1945년 이후 현재까지 호남이 보여 온 정치적 성향을 살펴볼 때, '본래적으로 반역적'이라거나 '바람 앞의 버들가지 같은' 등의 수식어를 달고 있는 지역적 기질에 대한 평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한 지역의 정치적 성향이 공식적인 정치과정에 의해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지역적 사안에 대한 찬반, 지역운동, 비공식적인 정치적 행위 등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자료 역시 충분하지 않다. 선거와 같은 공식적인 정치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전국적 성향과 특정지역의 성향을 비교하여 그 지역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호남은 적어도 일정한 시기에 걸쳐서 전국적인 정치적 성향과는 차별적인 측면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1) 1945년~1961년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제헌국회의원 선거 결과[표 8-1]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승만 계열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반면, 호남에서는 김성수 계열의 한국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였다. 이 선거에서 이승만 계열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와 김성수 계열의 한국민주당이 대립적인 활동을 한 것이 아니었고, 전국과 호남 모두에서 상당수의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 결과를 두고 호남이 독특한 정치적

[표 8-1] 호남 제헌국회의원 당선자의 정당별 분포(1948년 5월 10일)

정당 / 지역	대한독립 촉성회	한국 민주당	대동 청년단	조선민족 청년단	기타	무소속
전국	55	29	12	6	13	85
전북	6	4	2	2	1	8
전남	5	11	1	1	1	9
호남	11	15	3	3	2	17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성향을 나타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48년 7월 20일 국회에서 실시된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과 이시영이 당선되어 조각에 착수하면서, 한국민주당은 이승만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승만이 5·10 총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제헌의회에서 의장 및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표명했던 한국민주당은 호남 출신 김성수를 국무총리로 임명시켜 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원내 제1세력인 한국민주당과 이승만은 대립적인 관계에 놓이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갈등을 계기로 이승만은 이후 자유당을 창당하였고, 제1공화국 전기간을 통하여 자유당과 한국민주당의 지속적인 대결이 진행되었다.

당시 호남 출신 김성수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는 하였지만, 한국민주당을 호남을 대변하는 지역정당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이승만이 한국민주당에 대해 '친일분자가 속해 있는 당, 미군정 관리가 속해 있는 당' 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한국민주당 소속 당선자의 분포에 있어서 호남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정도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제 2대 국회의원선거는 이승만계 여당과 구한국민주당계 야당의 보수대결이면서, 한편으로는 대한국민당, 민주국민당 등의 보수세력과 사회당 등의 혁신세력 간의 대결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투표결과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인 대한국민당, 국민회, 대한청년당, 일민구락부, 대한노농총연맹 등은 야당세력인 민주국민당, 사회당, 무소속 등에 의해 참패를 당하였다. 당시는 1950년 4월 28일 실시된 토지개혁으로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강했던 상황이었다. 호남에서 여당 계열은 13석 확보에 그쳤으며, 야당은 39석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여당계열이 57석, 야당이 153석을 얻은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8-2).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1952년 7월 4일 '발췌개헌'의 통과로 8월 5일 대통령 직접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결과[표 8-3]에 따르면, 호남에서 자유당의 이승만, 무소속의 조봉암, 이시영, 신흥우 등의 득표율이 전국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2] 호남 제 2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정당별 분포(1950년 5월 30일)

정당 / 지역	대한국민당	민주국민당	국민회	대한청년당	대한노농총연맹	사회당	일민구락부	기타	무소속
전국	24	24	14	10	3	2	3	4	126
전북	2	3	0	0	1	0	0	1	15
전남	2	9	3	3	1	0	0	0	12
호남	4	12	3	3	2	0	0	1	27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표 8-3] 제 2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 지역별 득표율(%) 상황(1952년 8월 5일)

지 역	자유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이승만	조봉암	이시영	신흥우
전국	72.0	11.0	10.5	3.0
전북	63.0	14.7	13.0	5.0
전남	71.0	8.6	14.2	2.6
호남	67.7	11.0	13.7	3.5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표 8-4] 호남 제 3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정당별 분포(1954년 5월 20일)

정당 / 지역	자유당	민주국민당	국민회	대한국민당	제헌국회의원동지회	무소속
전국	114	15	3	3	1	67
전북	10	2	0	0	0	10
전남	15	3	0	0	0	12
호남	15	5	0	0	0	22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제3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표 8-4]에 따르면, 자유당에 대한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56.2%에 달한 반면, 호남에서는 35.7%에 지나지 않았다. 호남에서는 여전히 무소속이 강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 선거에서 자유당은 이승만에 대해서는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헌법개정안을 내놓았고, 관권선거와 야권 후보들에 대한 탄압이 심각하였으며, 무소속에 대한 회유와 협박이 특히 심하였다(전라북도, 1997, 229 - 300).

이 선거를 통하여 호남에서는 훗날 정계에서 '거물급'으로 지칭되는 이철승(전주, 무소속, 32세)과 유진산(금산, 무소속, 48세)이 당선되었다. 유진산은 본래 전북에 속한 금산군을 지역구로 하였지만, 1963년 1월 1일 금산군이 충남에 편입되면서, '충청도 정치인'이 되었다.

제 3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여당인 자유당은 원내 안정세력을 확보하는 데 일단 성공하였으며, 점차 무소속 세력을 포섭하여 개헌선을 확보하였고, 대통령중심제, 국무총리제 폐지,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장기집권 야욕을 강렬하게 드러낸 것이어서 국회 내에서 심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1954년 11월 29일 소위 '사사오입' 개헌이 단행되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1956년 5월 15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는 이승만, 신익희, 조봉암이 출마하였다. 신익희와 조봉암 사이에 논의되던 야권 단일화는 결렬되었으며, 신익희는 5월 5일 호남지방 유세를 앞두고 이리시(현 익산시)의 열차 내에서 사망하였다.

이 선거 결과[표 8-5]를 살펴보면, 우선 무효표의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신익희에 대한 추모표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전북에서 이러한 추모표는 19.4%에 이르는 것

[표 8-5] 제 3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 지역별 득표율(%) 상황(1956년 5월 15일)

지 역	자유당	무소속	민주당
	이승만	조봉암	신익희
전국	55.7	23.9	0
전북	48.5	32.1	0
전남	57.7	22.3	0
호남	54.0	26.3	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으로 추정된다(전라북도, 1990, 102). 이승만에 대한 전북의 지지율이 약간 낮은 것을 제외한다면, 이 선거 역시 이전의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호남의 특이한 성향을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선거는 한국 선거사상 '여촌야도'의 성향을 보여준 최초의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1958년 5월 2일 실시된 제4대 민의원 총선거 결과[표 8-6]는 자유당이 126석, 민주당이 79석, 무소속이 27석으로 나타나 마치 양당제의 확립과 같은 인상을 주었으며, '여촌야도' 현상이 심화되었다.

자유당은 전체 의석 수 중에서 54.1%, 호남 의석 수 중에서는 51.8%를 차지하였다. 민주당은 전체 의석 수 중에서 33.9%, 호남 의석 수 중에서는 35.7%를 차지하였다. 전국 평균에 비해 호남의 자유당 지지는 낮았으며, 민주당 지지는 약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호남의 정치적 성향이 다른 지역과 상이한 특징을 보인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는 자유당의 이승만과 민주당의 조병옥이 출마하였으나, 조병옥이 사망하여 실질적 선거 내용은 자유당의 이기붕과 민주당의 장면 등이 대결한 부통령선거였다. 부통령 선거에서 82.5%의 득표율로 이기붕이 당선되었다. 이 선거는 자유당에 의한 각종 탈법이 자행되어 훗날 '3.15 부정선거'라는 독특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대통령선거 결과[표 8-7]는 호남의 이승만에 대한 지지율이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상대후보의 사망에 의한 사실상의 단독후보였다는

[표 8-6] 호남 제 4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정당별 분포(1958년 5월 2일)

지역 \ 정당	자유당	민주당	통일당	무소속
전국	126	79	1	27
전북	10	11	0	3
전남	19	9	1	3
호남	29	20	1	6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표 8-7] 제 4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 지역별 득표율(%) 상황(1960년 3월 15일)

지 역	자유당 민주당	이승만 조병옥
전국	88.7	0
전북	89.0	0
전남	92.8	0
호남	91.2	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점, 자유당에 의해 유래 없는 불법이 자행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호남의 정치적 성향의 특성을 나타내는 의미있는 통계치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선거를 전후하여 전국적으로 시위와 소요가 발생하였는 바, 특히 전북에 연고를 지니고 있는 김주열이 마산경찰당국에 의해 살해되고, 그 시신이 발견됨으로서, 사태가 악화되었다. 먼저 부산과 마산의 학생들이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고, 그 시신이 남원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계기로 호남 지역의 자유당 규탄 시위가 격화되었다. 이후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과 제1공화국은 종말을 맞게 되었다.

1960년 4월 26일 제4대 국회는 이승만의 하야 요구를 결의하고, 내각책임제 헌법개정과 국회해산 및 총선거 실시에 의한 새로운 정부 수립의 방향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실시된 7 · 29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치의 구심점이 다시 국회로 집중됨에 따라, 해방 후 최초의 선거 때처럼 선거가 과열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선거 결과는 '독재와 싸운 정당 마음 놓고 찍어주자' 는 슬로건을 내세운 민주당 후보들의 압도적인 당선, 많은 무소속 입후보자들의

[표 8-8] 호남 제 5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정당별 분포(1960년 7월 29일)

정당 / 지역	민주당	사회대중당	자유당	기타	무소속
전국	175	4	2	3	49
전북	18	1	0	0	5
전남	29	0	0	1	2
호남	47	1	0	1	7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출마와 선전, 그리고 혁신계열의 기대치 이하의 득표와 당선으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호남에서의 선거 결과 역시 전국적인 상황과 큰 차이를 보였다고는 볼 수 없다(표 8-8).

2) 1961년~1980년

4 · 19를 통하여 성립된 제2공화국은 박정희가 주도한 5 · 16 군사쿠데타에 의해 중단되었으며, 1962년 12월 12일에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하여 제3공화국의 헌법이 통과되었다. 헌법에 의해 1963년 10월 15에 실시된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정희가 윤보선을 15만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호남에서는 박정희가 49.3%, 윤보선이 34.6%의 득표율을 보였는데, 이는 각각이 전국적으로 얻은 42.6% 및 41.2%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표 8-9). 이에 대해서는 '여촌야도(與村野都)' 등의 투표성향에 근거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 것이며, 상당 부분 부정선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설득력을 얻었다. 예를 들어, 전남 목포에서는 당시 현직 경찰관이던 나 모 경사가 경찰조직이 선거에 개입하였다고 폭로하여, 내무부장관과 치안국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제 6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 1개월 후에 실시되었다. 호남에서의 당선 상황은 민주공화당 19명, 민정당 7명, 민주당 1명, 자유민주당 3명 등으로 민주공화당이 우세하였다[표 8-10]. 제6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나라 선거 사상 처음으로 선거구를 지역구와 전국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후보등록에 있어서 정당공천을 의무화하여 무소속 후보자의 출

[표 8-9] 제 5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자별 · 지역별 득표율 상황(1963년 10월 15일)

(단위 : %)

지 역	민주공화당	민정당
	박정희	윤보선
전국	42.6	41.2
전북	44.1	37.1
전남	52.5	33.0
호남	49.3	34.6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마를 법적으로 규제하였다. 따라서 이전과 같은 무소속 후보자의 난립은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를 정당청치 혹은 양당정치의 발전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일종의 정치활동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선거제도를 통하여 호남의 지역구 의석수는 이전의 56석에서 30석으로 대폭 줄었으며, 특히 1963년 법률 제1172호에 의하여 금산군이 충남에 편입되면서, 호남, 특히 전북은 도세의 약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 선거의 결과를 놓고 볼 때, 호남의 투표성향이 전국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1967년 5월 3일 실시된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 호남은 해방 이후 역대 선거와는 다른 투표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까지의 역대 선거의 결과를 놓고 볼 때 호남의 그것과 전국의 그것 사이에는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박정희와 윤보선의 대결로 압축된 이 선거에서 전국적으로는 박정희가 116만여표를 더 얻어 당선되었지만, 호남에서는 박정희의 패배로 나타났다(표 8-11).

[표 8-10] 호남 제 6대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의 정당별 분포(1964년 11월 26일)

정당 / 지역	민주공화당	민정당	민주당	자유민주당	국민의 당
전국	88	27	8	6	2
전북	7	4	0	0	0
전남	12	3	1	3	0
호남	19	7	1	3	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표 8-11] 제 6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자별 · 지역별 득표율(%) 상황(1967년 5월 3일)

지 역	민주공화당	신민당
	박정희	윤보선
전국	48.8	38.9
전북	39.7	45.8
전남	42.0	43.9
호남	41.1	44.6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특히, 제5대 대통령선거시 전북에서는 전주, 이리, 군산, 장수에서만 박정희가 패배하였고 다른 지역에서는 승리하였지만,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익산, 무주, 부안, 김제 등 4개 지구에서만 윤보선을 약간 앞섰을 뿐, 나머지 7개 지구에서는 패배하였다. 전남에서는 26개 시·군 개표구 중 여수, 곡성, 여천, 장흥, 영암, 영광, 완도, 진도 등 8개 지구에서만 윤보선을 앞섰을 뿐, 나머지 지구에서는 패배하였다.

제 6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1967년은 1962년에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마무리된 시점으로서, 이러한 선거결과는 공업과 수출을 위주로 하는 정책 하에서 농촌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호남의 소외감이 표출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로, 전북의 인구는 1966년 252만명으로 절정을 이룬 뒤, 매년 감소를 거듭하여 왔으며, 감소의 시작 시점이 바로 이 선거가 실시된 1967년이었다. 1967년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된 해이며, 이후에도 박정희의 경제개발 노선에 큰 변화는 없었다.

뒤이어 실시된 제 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 6대 대통령선거와는 다르게 공화당이 압승하였다. 전북에서는 야당이 단 1석도 차지하지 못하였고, 전남에서도 야당으로서는 신민당이 2석, 대중당이 1석을 차지하였을 뿐이었다(표 8-12). 이는 박정희의 당선으로 집권여당이 된 공화당의 후보자를 통하여 지역개발 공약을 관철시키려는 민심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7대 국회의원 선거가 호남에서 보여준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통적인 야당도시로 알려진 전주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이후 전주 및 전북 지역이 호남에 속해 있으면서도, 호남 전반과 차별적인 정치적 성향을

[표 8-12] 호남 제 7대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의 정당별 분포(1967년 6월 8일)

정당 / 지역	민주공화당	신민당	대중당
전국	130	27	1
전북	11	0	0
전남	16	2	1
호남	27	2	1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보이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전국구 국회의원의 경우 호남 출신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는 점이다. 예로, 전국구 공화당 27명, 신민당 17명 중 전북 출신은 2명에 불과하였다. 셋째, 김대중의 부상이다. 그는 목포 선거구에서 공화당의 김병삼과 대결하였다. 당시 대통령 박정희는 목포에 와서 직접 지원유세를 하였고, 이례적으로 목포 현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역개발을 약속하기까지 하였으나, 결과는 김대중의 당선으로 나타났다.

제 7대 국회의원선거의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투표성향이나 결과에 있어서 호남이 전국의 그것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1969년 10월 17일 3선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였다. 전국적으로 65.1%의 찬성을 얻었으며, 전북이 63%의 찬성율을 보인 반면, 전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70.7%의 찬성율을 보였다.

3선 개헌안의 통과에 따라 1971년 4월 27일 실시된 제7대 대통령선거는 이후 한국정치에 있어서 '호남'이라는 변수와 '지역감정'이라는 변수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출발점이 된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여당인 공화당은 이미 3선개헌으로 현직 대통령인 박정희의 재출마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선거전에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에 새로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신민당은 전면적인 체제개편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당수에 유진산이 선출되었다. 한편 대통령 후보 선출에는 새로운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는 야당의 중진으로 성장한 김영삼 의원이 당직 배분이나 대통령후보 선정과정에서 실력자로 인정받던 원로들을 제치고 '40대 기수론'을 제창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김대중, 이철승 의원이 호응하고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나설 것임을 밝히면서,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는 세 사람 중 한명으로 압축되었다.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속에서 결국 김대중 의원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당시 선거전에서 여당의 박정희 후보는 60년대 말의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개발과 성장의 전국민 균점혜택'과 '조국통일의 전진기지 확보'를 강조하였다. 한편 야당의 김대중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이 종신대통령을 기도하고 있다면서 '총통제' 음모를 제기하고, 일인독재를 청산할 것을 주장하였다.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비정치적인 남북교류의 재개', '4대국 보장안', '향토예비군 폐지', '노 · 사 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 선거에서 공화당은 여야의 후보가 영남과 호남으로 나뉘어진 것을 기화로 지역차별적

인 선거전략을 수립하였는데, 이후 이것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작용을 하였다. 선거가 실시된 1971년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종결되는 해였으며, 호남의 낙후와 소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공화당이 이러한 선거전략을 채택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실직적인 지역적 격차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결과 박정희 후보는 김대중 후보를 94만여표 차이로 앞서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차는 여당이나 야당 모두에서 매우 근소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호남에서의 선거결과[표 8-13]는 전국의 그것과 상이하게 나타났다. 총 유효득표 중 김대중 후보가 58.6% 박정희 후보가 32.8%를 차지하여, 김대중 후보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는 개표구 모두에서, 전남에서는 곡성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김대중 후보가 압승을 거두었다.

이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자원동원 방식이 나타났으며, '지역감정'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전의 선거에서는 주로 씨족이나 학교 동창, 마을이나 면단위의 이웃을 동원하는 형태에 그친 반면, 이 선거 이후 '전라도', '경상도', '영남', '호남'이라는 경계 짓기를 통한 자원동원이 이루어졌고, 상당한 효과를 지니게 되었다. 이 선거 이후 호남은 김대중을 지역의 낙후와 소외된 현실이 투사된 상징으로서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이는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1997년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2004년 현재에도 그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제 7대 대통령선거 1개월 뒤에 실시된 제 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다수의석을 차지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신민당의 약진이 있었으며, 당시의 분위기로는 여야 모두에게 공화당의 참패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서울에서는 19개 의석 중 18개를, 부산에서는 8개 의석

[표 8-13] 제 7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자별 · 지역별 득표율(%) 상황(1971년 4월 27일)

지 역	민주공화당	신민당
	박정희	김대중
전국	51.1	43.5
전북	33.9	58.8
전남	32.1	58.5
호남	32.8	58.6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표 8-14] 호남 제 8대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의 정당별 분포(1971년 5월 25일)

지역 \ 정당	민주공화당	신민당	국민당	민중당
전국	86	65	1	1
전북	6	6	0	0
전남	13	7	0	0
호남	19	13	0	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중 6개를, 대구에서는 5개 의석 모두를, 광주에서는 2개 의석 모두를 신민당이 차지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제7대 대통령 선거의 연장선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호남에서의 선거결과 역시 전체 32석 중 19석을 공화당이, 13석을 신민당이 차지하여, 신민당의 약진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표 8-14).

1971년에 실시된 양대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활동을 금지시켰다. 이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10월 유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10월 유신'의 후속 조치를 통하여 헌법이 개정되었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와 중선거구제를 통한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실시되었다. 제4공화국이 출범된 것이다.

제4공화국 하에서 대통령선거는 1972년 12월 23일, 1978년 7월 6일, 1979년 12월 6일 등 3회 실시되었다. 그 중 1972년과 1978년의 선거는 박정희 후보 단독출마에 90% 이상의 지지율로 당선되는 속칭 '체육관 선거'로 진행되었다. 1979년의 선거는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최규하 권한대행이 대통령직을 계승하는 형식적인 선거였다. 따라서 제4공화국 하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이전의 선거에서와 같은 정치적 함의를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이 공포된 이후, 1973년 2월 27일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 선거[표 8-15], [표 8-16]에서 호남은 공화당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신민당을 비롯한 야당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전북에서는 신민당 및 무소속 의원 수가 공화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다.

1973년 8월 8일 김대중 납치사건 소식을 계기로 반유신운동이 더욱 거세게 일어났으며, 정부는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이를 가로막았다. 김대중 납치 사건은 1971년 대통령선거전을 통하여 호남 지역의 상징으로 부상한 그였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심각한 반유신운동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김영삼이 이끌고 있던 신민당은 1976년 5월 25일 전당대회에서 주류측과 비주류측의 대립으로 난투극을 벌였으며, 결국 9월 16일 양파의 합의로 열린 '합동전당대회'에서 이철승이 김영삼과의 당권 경쟁에서 승리하였다. 이로써 이철승은 정치활동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던 김대중을 대신하여 호남 일부에서 지역을 대변하는 주자로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

[표 8-15] 호남 제 9대 국회의원 선거 상황(1973년 2월 27일)

전남			전북		
선거구	당선자	소속정당	선거구	당선자	소속정당
광주	김록영	민주통일당	전주 · 완주	이철승	신민당
	박 철	민주공화당		유기정	민주공화당
목포 · 무안 · 신안	강기천	민주공화당	군산 · 이리 · 옥구 · 익산	채영철	민주공화당
	김경인	민주통일당		김현기	신민당
여수시 · 광양 · 여수군	박병효	신민당	정읍 · 김제	김택하	신민당
	김상영	민주공화당		장경순	민주공화당
순천 · 구례 · 승주	박삼철	민주공화당	고창 · 부안	이병옥	민주공화당
	강길만	무소속		진의종	신민당
광산 · 나주	임인채	민주공화당	임실 · 순창 · 남원	손주항	무소속
	김윤덕	신민당		양해준	신민당
담양 · 곡성 · 화순	문형태	민주공화당	진안 · 무주 · 장수	최성식	신민당
	고재청	신민당		김광수	무소속
고흥 · 보성	신형식	민주공화당			
	이중재	신민당			
장흥 · 강진 · 영암 · 완도	길전식	민주공화당			
	황호동	신민당			
해남 · 진도	임충식	민주공화당			
	박귀수	무소속			
함평 · 영광 · 장성	윤인식	민주공화당			
	이진연	신민당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표 8-16] 호남 제 9대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의 정당별 분포(1973년 2월 27일)

지역 \ 정당	민주공화당	신민당	민주통일당	무소속
전국	73	52	2	19
전북	4	6	0	2
전남	10	6	2	2
호남	14	12	2	4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였다. 이철승은 그의 지론인 '중도통합론'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유신체제라는 강력한 파시즘 하에서 그의 중도통합론은 유약한 것으로 보였으며, 박정희와의 밀실타협 등으로 인해, 종종 '사꾸라'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하였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역감정의 또 하나의 경계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유신체제에 저항하고 있던 야당 진영에서 김영삼과 이철승이라는 영남과 호남의 경계였다. 이미 1971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결정하면서 '이철승에게 속았다'고 생각한 김영삼 지지자들은 이철승의 중도도합론을 '사꾸라'로 비하하고, 김대중과 이철승을 호남과 동일시하면서, 은연중에 호남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을 쌓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감정의 골은 김영삼과 김대중이 주역으로 등장한 1990년대 여러 번의 선거 과정에서 현실화되었다.

1978년 12월 12일에 실시된 제10대 국회의원 선거는 실질적인 야당의 승리가 이루어졌다. 전국 지역구 의석 중 공화당이 68석, 신민당을 비롯한 야당이 86석을 차지하였다. 호남에서도 공화당이 15석, 신민당을 비롯한 야당이 17석을 차지하였으며, 전북에서는 6개 선거구 중 3개 선거구에서 야당이 1위로 당선되는 상황이 되었다(표 8-17), (표 8-18).

이 선거의 결과 역시 전국적 상황에 비추어 호남이 특이한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도정치의 전선이 영 · 호남이라는 지역을 축으로 전개된 것이라기보다는 유신과 반유신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표 8-17] 호남 제 10대 국회의원 선거 상황(1978년 12월 12일)

전남			전북		
선거구	당선자	소속정당	선거구	당선자	소속정당
광주	이필선	신민당	전주 · 완주	이철승	신민당
	김록영	민주공화당		유기정	민주공화당
목포 · 무안 · 신안	최영철	민주공화당	군산 · 이리 · 옥구 · 익산	김현기	신민당
	임종기	신민당		채영철	민주공화당
여수시 · 광양 · 여수군	이도선	민주공화당	정읍 · 김제	장경순	민주공화당
	박병효	신민당		김원기	신민당
순천 · 구례 · 승주	유경현	민주공화당	고창 · 부안	박용기	무소속
	허경만	신민당		이호종	민주공화당
광산 · 나주	김윤덕	신민당	임실 · 순창 · 남원	설인수	민주공화당
	한갑수	무소속		손주항	무소속
담양 · 곡성 · 화순	문형태	민주공화당	진안 · 무주 · 장수	김광수	민주공화당
	고재청	신민당		최성석	신민당
고흥 · 보성	신형식	민주공화당			
	김 수	무소속			
장흥 · 강진 · 영암 · 완도	길전식	민주공화당			
	윤재명	무소속			
해남 · 진도	김봉호	민주공화당			
	임영득	무소속			
함평 · 영광 · 장성	김재식	민주공화당			
	이진연	신민당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표 8-18] 호남 제 10대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의 정당별 분포(1978년 12월 12일)

정당 / 지역	민주공화당	신민당	민주통일당	무소속
전국	68	61	3	22
전북	6	4	0	2
전남	9	7	0	4
호남	15	11	0	6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3) 1980~현재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과 더불어 유신체제는 실질적인 막을 내렸다. 뒤이은 신군부의 등장과 쿠데타는 유신체제에 지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에 직면하여, 강압적인 정치일정을 진행하였다.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령의 확대를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격렬한 저항이 일어났다.

호남에서는 전주와 광주에서 시위가 격화되었다. 전주에서는 전북대학교에 재학중이던 이세종 군이 계엄군의 진압과정에서 희생되었다. 광주에서는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저항과 그에 대한 폭력적 진압이 도화선이 되어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모욕적인 이름으로는 '광주사태'로, 이후에 민주화의 진전과정에서 명예가 회복된 이름으로는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불리게 되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시 일원과 인근 전남 지역에서 일어났다. 초기에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인해 학생소요가 대중투쟁으로 확대되었으며(5월 18일~20일 오전), 다수의 사상자 발생으로 인해 무장투쟁으로 발전하였고(20일 오후~21일), 꼬뮨 형태의 민중자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22일~25일). 사태의 진전과정에서 협상으로부터 무장투쟁에 이르는 다양한 노선이 제기되었고, 새로운 시민 지도부의 구성과 질서회복 및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의한 폭력적인 진압이 이루어졌다(25일~27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권위주의적이고 폭압적인 군사정권에 대한 단순한 저항 이상의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 그 배경은 대략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경제적 배경이다. 해방 이후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은 광주 및 호남지역의 상대적 소외를 심화시키는 부문간·지역간 불균등발전을 가속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 및 호남지역은 1970년대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불경기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는 농촌의 피폐와 이농의 급증으로 이어졌으며,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도시 내에서도 빈민이 발생하고,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곤란을 겪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 야기하였다. 이러한 배경은 광주민주화운동 전기간을 통하여 저항의 발발과 확산에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둘째, 정치적 배경이다. 18년간 장기집권을 한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 국민들은

정치질서의 재편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특히 그동안 독재권력에 의해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해온 광주와 호남지역은 그러한 열망을 지역 출신으로 유신체제 하에서 탄압을 받아온 김대중에게 투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은 1980년 5월 김대중의 체포를 자신들의 정치적 열망이 좌절된 것으로 받아들인 지역민들의 정서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셋째, 지역의식이다. 흔히 '지역감정'으로 표현되는 지역민들의 정서는 기본적으로는 지역적 불균등발전이라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하며, 여기에 지배권력의 분할통치전략으로 의제화된 '반호남감정'과 이에 대응하는 '전라도 의식'에 대한 설명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립의식은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을 거치면서 독재권력에 의해 형성되고 구조화되었는데, 그로 인해 호남사람들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지역적 차별과 '반호남감정'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해야 했다. 그 결과 호남사람들은 계급·계층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항하는 지역의식을 내재화시켰고, 그러한 지역적 연대감이 특정한 정치적 계기를 만나면서 '반호남 감정'을 구조화시킨 독재권력의 타도라는 정치적 지향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지역의식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진행과정에서 한계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으며, 광주민주화운동이 지닌 보편적인 이념과 지향에도 불구하고 이후 한국사회의 정치 구조와 맞물려, 상당 기간 동안 이 운동이 특정 지역과 특정 정치인에 국한된 것으로 잘 못 이해되는 구실을 제공하기도 하였다(전라남도, 1993, 263~264).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미국에 대한 재평가, 일반 민주주의의 진전, 일반시민의 주인의식 고양 등이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쳐, 광주민주화운동은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의제의 중심에 있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진압된 이후, 1980년 8월 27일 제11대 대통령에 전두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하여 당선되었고, 1981년 2월 25일 제12대 대통령에도 전두환이 같은 방식을 통하여 당선되었다. 1981년 3월 25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결과[표 8-19], [표8-20] 호남에서는 민정당이 17석 민한당을 비롯한 야당이 19석을 차지하였다. 당시는 중선거구제로 각 선거구에서 2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해남·완도 선거구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민정당 후보가 1인씩 당선되었다.

[표 8-19] 호남 제 11대 국회의원 선거 상황(1981년 3월 25일)

전남			전북		
선거구	당선자	소속정당	선거구	당선자	소속정당
광주동 · 북구	심상우	민주정의당	전주 · 완주	임방현	민주정의당
	임재정	민주한국당		김태식	민주한국당
광주서구	지정도	민주한국당	군산 · 옥구	고판남	민주정의당
	박윤종	민주정의당		김길준	무소속
목포 · 무안 · 신안	최영철	민주정의당	이리 · 익산	문병량	민주정의당
	임종기	민주한국당		박병일	민주한국당
여수 · 광양 · 여천	신순범	안민당	김제 · 부안	조상래	민주정의당
	김재호	민주정의당		김진배	민주한국당
순천 · 구례 · 승주	허경만	민주한국당	정읍 · 고창	진의종	민주정의당
	유경현	민주정의당		김원기	민주한국당
나주 · 광산	나석호	민주정의당	남원 · 임실 · 순창	양창식	민주정의당
	이재근	민주한국당		이형배	민주한국당
담양 · 곡성 · 화순	정래혁	민주정의당	무주 · 진안 · 장수	황인성	민주정의당
	고재청	민주한국당		오상현	민주한국당
보성 · 고흥	이대순	민주정의당			
	유준상	민주한국당			
장흥 · 강진 · 영암 · 완도	김 식	민주정의당			
	유재희	민주한국당			
해남 · 완도	이성일	한국국민당			
	민병초	민주한국당			
영광 · 함평 · 장성	조기상	민주정의당			
	이원형	신정당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 전라남도(1993), 전라북도(1991)에서 재구성.

[표 8-20] 호남 제 11대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의 정당별 분포(1981년 3월 25일)

정당 / 지역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한국민주당	기타	무소속
전국	90	57	18	8	11
전북	7	6	0	0	1
전남	10	9	1	2	0
호남	17	15	1	2	1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1985년 2월 12일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표 8-21], [표 8-22] 호남에서는 민정당이 18석, 신민당을 비롯한 야당이 18석을 차지하였다. 전국적으로 민정당이 87석 야당이 97석을 차지한 것에 비추어보면, 당시 호남에서 야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전남의 2개 선거구, 전북의 3개 선거구에서 야당이 1위 당선자가 되었다는 점은 기록할 만하다.

[표 8-21] 호남 제 12대 국회의원 선거 상황(1985년 2월 12일)

전남			전북		
선거구	당선자	소속정당	선거구	당선자	소속정당
광주동 · 북구	신기하	신한민주당	전주 · 완주	이철승	신한민주당
	고귀남	민주정의당		임방현	민주정의당
광주서구	김녹영	신한민주당	군산 · 옥구	고 건	민주정의당
	이영일	민주정의당		김봉욱	민주한국당
목포 · 무안 · 신안	최영철	민주정의당	이리 · 익산	김득수	한국국민당
	임종기	민주한국당		조남조	민주정의당
여수 · 광양 · 여천	김재호	민주정의당	김제 · 부안	최락도	신한민주당
	신순범	신한민주당		조상래	민주정의당
순천 · 구례 · 승주	유경현	민주정의당	정읍 · 고창	전종천	민주정의당
	허경만	신한민주당		유갑종	신한민주당
금성 · 나주 · 광산	나석호	민주정의당	남원 · 임실 · 순창	양창식	민주정의당
	이재근	민주한국당		최용안	한국국민당
담양 · 곡성 · 화순	구용상	민주정의당	무주 · 진안 · 장수	전병우	민주정의당
	고재청	민주한국당		김광수	한국국민당
보성 · 고흥	이대순	민주정의당			
	유준상	민주한국당			
장흥 · 강진 · 영암 · 완도	김 식	민주정의당			
	이영권	민주한국당			
해남 · 완도	정시채	민주정의당			
	김봉호	민주한국당			
영광 · 함평 · 장성	조기상	민주정의당			
	이진연	민주한국당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 전라남도(1993), 전라북도(1991)에서 재구성.

[표 8-22] 호남 제 12대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의 정당별 분포(1985년 2월 12일)

정당 / 지역	민주정의당	신한민주당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기타	무소속
전국	87	50	26	15	2	4
전북	7	3	1	3	0	0
전남	11	4	7	0	0	0
호남	18	7	8	3	0	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그러나 이 선거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그해 2월 선거에 맞추어 김대중이 미국에서 귀국하여, 이른바 '동교동 캠프'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의 야당은 '동교동'(김대중 진영)과 '상도동'(김영삼 진영)으로 대별되었다. 이는 이후의 선거에서 호남과 영남으로 대별되는 지역감정의 또 다른 축이 생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이 선거를 마지막으로 전주 출신의 이철승이라는 정치인이 더 이상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였다. 셋째, 중선거구제 방식 하에서 자연적 · 역사적 공동체와는 무관하게 인접행정구역을 한군데로 묶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후보자들이 선거구 내의 출신지역 연고지 중심으로 지연에 의한 투표를 부추기는 바람에 선거는 동일 선거구 내의 군과 군의 대결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중선구제를 실시한 유신체제 이래 계속돼온 현상이었다. 이 선거를 마지막으로 중선거구제는 더 이상 채택되지 않았다.

1985년 2월 12일 국회의원선거를 통하여 신민당이 제1야당으로 등장하면서, 제5공화국의 정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야당측이 제5공화국의 정통성문제와 개헌문제를 쟁점으로 부각시켰고, 재야세력과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 또한 가열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해 6월 민주화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뒤이어 개헌을 수용하는 6 · 29선언이 발표되었다. 1987년 10월 27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93.1%의 지지율로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이때, 김대중과 김종필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였으며, 정국은 민정당(노태우), 통일민주당(김영삼), 평화민주당(김대중), 신민주공화당(김종필)의 4파전 양상을 띠게 되었다. 문제는 이들 정당이 각각의 지역적 연고를 가지고 있어서, '지역감정'이 선거의 주요한 변수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1987년 12월 16일 실시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지역감정'은 현실화되었다. 신군부 쿠데타 주역의 한사람이자 집권당의 후보인 노태우는 대구 · 경북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보수우파 세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문제는 6월 항쟁을 통하여 분출한 민의가 정권의 교체를 요구한 데 반해, 야당 진영은 김영삼과 김대중이 후보단일화 요구를 묵살하고 각각 단독출마를 하였다는 점이다. 당시 후보단일화를 통하여 노태우 후보와 대결했을 경우 집권 가능성은 김영삼이 김대중에 비해 높게 나온다는 것이 일간지들의 관측이었다. 그러나 후보단일화는 무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 후보의 성향과 전력에 대한 논쟁으로 '빨갱이 김대중', '배신자 김대중'이라는 비방이 유포되었다. 문제는 호남이라는 지역의 특수성 속에서 동일한 비방이 김대중을 호남과 동일시하고 있었던 많은 지역민들에게 덧씌워졌다는 점이다. 5 · 18 광주민주화운동은 사상적으로 의심 받았으며, '바람 앞의 버들가지(風前細柳)'라는 이전의 지역기질론적 평가가 김대중 후보를 통하여 '전라도 사람들'에게 다시 투사되었다. 호남인들 역시 '지역'의 이름으로 반박에 나섰다. 예를 들어, 선거 전날 밤 서울에서 목포로 내려가는 호남선 열차가 서대전을 통과하자마자, 모든 객차는 '김대중!'을 연호하는 유세차량과 같았으며, 동시에 김영삼 후보에 대한 맹렬한 공격이 이어졌다. 당시 많은 박수를 받은 승객들의 연설 내용은 대부분 경상도를 비하하면서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지역대결 구도는 선거결과[표 8-23]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의 득표율은 각각 27.5%와 26.5%로 근소하게 나타났다. 반면 호남에서의

[표 8-23] 제 13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자별 · 지역별 득표율(%) 상황(1987년 12월 16일)

지 역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전국	35.9	27.5	26.5	7.9
전북	13.7	1.5	80.9	0.7
광주	4.8	0.5	93.4	0.2
전남	8.0	1.1	87.9	0.3
호남	9.6	1.2	86.2	0.5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차이는 매우 컸다. 호남에서 김대중 후보가 86.2%의 득표율을 보인 반면, 김영삼 후보는 1.2%에 그쳐, 9.6%의 득표율을 보인 노태우 후보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 선거를 통하여, 호남의 지역의식은 더욱 강하게 지역을 김대중과 동일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제 13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이러한 경향은 1988년 4월 26일 치러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표 8-24], [표 8-25]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호남의 37개 선거구 중 36개 선거구를 김대중이 이끄는 평화민중당이 차지하게 되었으며, 다른 당으로는 오직 신안군에서 한겨레당

[표 8-24] 호남 제 13대 국회의원 선거 상황(1988년 4월 26일)

광주 · 전남			전북		
선거구	당선자	소속정당	선거구	당선자	소속정당
광 주 동 구	신기하	평화민주당	전주갑	오 탄	평화민주당
광주서구갑	정상용	평화민주당	전주을	손주항	평화민주당
광주서구을	박종태	평화민주당	군산	채영석	평화민주당
광 주 북 구	정 웅	평화민주당	이리	이 협	평화민주당
광주광산구	조홍규	평화민주당	정읍시 · 정읍군	김원기	평화민주당
목 포	권노갑	평화민주당	남원시 · 남원군	조찬형	평화민주당
여 수	김충조	평화민주당	완주	김태식	평화민주당
순 천	허경만	평화민주당	옥구	김봉욱	평화민주당
나주시 · 나주군	이재근	평화민주당	익산	김득수	평화민주당
여천시 · 여천군	신순범	평화민주당	김제시 · 김제군	최락도	평화민주당
담양 · 장성	김길곤	평화민주당	부안	이희천	평화민주당
곡성 · 화순	홍기훈	평화민주당	고창	정균환	평화민주당
구례 · 승주	조순승	평화민주당	임실 · 순창	홍영기	평화민주당
광 양	이돈만	평화민주당	무주 · 진안 · 장수	이상욱	평화민주당
고 흥	박상천	평화민주당			
보 성	유준상	평화민주당			
장 흥	이영권	평화민주당			
강진 · 완도	김영진	평화민주당			
해남 · 진도	김봉호	평화민주당			
영 암	유인학	평화민주당			
무 안	박석무	평화민주당			
함평 · 영광	서경원	평화민주당			
신 안	박형오	한겨레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 전라북도(1991)에서 재구성.

[표 8-25] 호남 제 13대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의 정당별 분포(1988년 4월 26일)

정당 / 지역	민주정의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기타	무소속
전국	87	54	46	27	1	9
전북	0	14	0	0	0	0
광주	0	5	0	0	0	0
전남	0	17	0	0	1	0
호남	0	36	0	0	1	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의 박형오 후보가 당선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사실은 다른 어느 것보다 지역이라는 요인이 정치적 선호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은 선거 중반에 들어서면서 보다 노골적으로 유권자의 지역감정에 호소하거나 의도적으로 그것을 자극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더구나 지역대표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감정이 미친 결과는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지역에 기반한 선거로 등장한 것이 민주정의당 · 평화민주당 · 통일민주당 · 신민주공화당의 4당체제였다. 그 중에서도 13대 대통령선거에서 2위를 차지한 김영삼이 이끄는 통일민주당은 13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제3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내정치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야당 또한 공조현상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은 경재의식에서 반목이 잦았고, 이들과 신민주공화당 역시 긴장관계에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보수대연합으로 불리는 민주정의당 · 통일민주당 · 신민주공화당의 3당합당이 1990년 1월 22일 이루어졌으며, 민주자유당(민자당)이 탄생하게 되었다.

3당합당으로 기존의 4당체제는 여소야대의 양당체제로 전환되었다. 1991년 9월 야권에서도 평화민주당에서 이름을 바꾼 신민당과 3당합당에 반발한 통일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합세하여 민주당이 창당되었다. 특히 1992년 3월 24일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주영이 이끄는 통일국민당(국민당)이 출현하여 3당 구도를 형성하였다. 이 선거에서

[표 8-26] 호남 제 14대 국회의원 선거 상황(1992년 3월 24일)

광주 · 전남			전북		
선거구	당선자	소속정당	선거구	당선자	소속정당
광 주 동 구	신기하	민주당	전주덕진	오 탄	민주당
광주서구갑	정상용	민주당	전주완산	장영달	민주당
광주서구을	임복진	민주당	군산	채영석	민주당
광주북구갑	박광태	민주당	이리	이 협	민주당
광주북구을	이길재	민주당	정주 · 정읍	김원기	민주당
광주광산구	조홍규	민주당	남원시 · 남원군	양창식	민주자유당
목 포	권노갑	민주당	완주	김태식	민주당
여 수	김충조	민주당	옥구	강철선	민주당
순 천	허경만	민주당	익산	최재승	민주당
나주시 · 나주군	김장곤	민주당	김제	최락도	민주당
여천시 · 여천군	신순범	민주당	부안	이희천	민주당
담양 · 장성	박태영	민주당	고창	정균환	민주당
곡성 · 구례	황의성	민주당	임실 · 순창	홍영기	민주당
동광양시 · 광양군	김명규	민주당	무주·진안·장수	황인성	민주자유당
승 주	조순승	민주당			
고 흥	박상천	민주당			
보 성	유준상	민주당			
화 순	홍기훈	민주당			
장 흥	이영권	민주당			
강진 · 완도	김영진	민주당			
해남 · 진도	김봉호	민주당			
영 암	유인학	민주당			
무 안	박석무	민주당			
함평 · 영광	김인곤	민주당			
신 안	한화갑	민주당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호남은 전체 39석 중 전북의 2석을 제외한 37석을 김대중이 이끄는 민주당에 할애하였다 (표 8-27), (표 8-28). 이는 전국적인 추세와 완전히 다른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992년 12월 18일 제14대 대통령선거는 3당합당으로 보수대연합을 형성한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와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 그리고 통일국민당의 정주영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졌다. 이 선거 역시 1987년의 대선 이후 계속된 지역적 기반에 의한 선거의 연장선 속에서

[표 8-27] 호남 제 14대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의 정당별 분포(1992년 3월 24일)

정당 / 지역	민주자유당	민주당	통일국민당	기타	무소속
전국	115	76	24	1	21
전북	2	12	0	0	0
광주	0	6	0	0	0
전남	0	19	0	0	0
호남	2	37	0	0	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표 8-28] 제 14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자별 · 지역별 득표율(%) 상황(1992년 12월 18일)

지 역	민주자유당	민주당	국민당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전국	41.4	33.4	16.1
전북	5.6	88.0	3.2
광주	2.1	95.1	1.2
전남	4.2	91.1	2.1
호남	4.2	90.9	2.3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실시되었다.

선거결과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후보는 전국적으로 각각 42.4%, 33.4%, 16.1%의 지지율을 획득하였으나, 호남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90.9%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획득하였고, 김영삼 후보는 4.2%, 정주영 후보는 2.3%을 획득하였다(표 8-28). 이 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들은 후보를 내지 않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집중 공략하였고, 서로 자신의 지역기반이 없는 곳에서는 아예 선거운동 자체를 포기하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민심은 지역에 따라 양분되어 영남 번호판을 달고 호남에 온 차량에 주유를 거부하거나, 호남 번호판을 달고 영남에 간 차량에 주유를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 영남과 호남을 대표하는 프로야구 차량을 서로 훼손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선거에서 호남에 지역기반을 가지고 있던 김대중은 패배하였으며, 정계은퇴를 선언하

고 영국으로 떠났다. 그가 정계은퇴를 선언하던 날, 강력한 지역감정의 와중에서 선거를 치른 호남의 민심은 그의 은퇴선언을 지역적 상징의 상실로 받아들였다.

1995년 6월 27일에는 제1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를 실현한다는 대의명분이 있었지만, 가장 큰 요인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관권개입의 문제를 차단하려는 요구 때문이었다.

광주, 전남, 전북 모두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는 낮았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율 차이로 당선되었다(표 8-29). 이 선거에서 호남 3개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은 모두 자신을 김대중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하였고, 민자당 후보들마저 종종 김대중과 자신을 연결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표 8-29] 제 1회 지방선거 호남 광역자치단체장 득표율(%)(1995년 6월 27일)

광주		전남		전북	
민주당	민자당	민주당	민자당	민주당	민자당
송언종	김동환	허경만	전석홍	유종근	강현욱
88.0	10.1	67.2	24.2	65.2	31.9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선거결과[표 8-30]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호남지역 43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민자당과 자민련은 1석도 차지하지 못하였고, 무소속이 3명이었으며, 나머지 40석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였다. 무소속 당선자들 역시 선거과정에서 자신들을 김대중 및 민주당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표 8-30] 제 1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정당별 당선자 수 및 득표율(1995년 6월 27일)

	광주				전남				전북			
정당	민주당	민자당	자민련	기타	민주당	민자당	자민련	기타	민주당	민자당	자민련	기타
후보자수	5	5	0	4	24	14	1	47	14	12	2	28
당선자수	5	0	0	0	22	0	0	2	13	0	0	1
득표율(%)	83.0	12.0	0	5.0	50.5	13.9	0.3	35.3	54.7	23.6	0.9	20.9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하였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정계은퇴를 선언한 김대중의 정계복귀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상황은 그렇게 진전되었다.

김대중은 정계복귀를 시도하면서 정당으로 새정치국민회의를 출범시켰다. 1996년 4월 11일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호남은 전체 37석 중 군산시을구를 제외한 36석을 새정치국민회의에 할애하였다(표 8-31), (표 8-32). 이로써 새천년민주당은 제1야당이 되었고, 김대중은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표 8-31] 호남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 상황(1996년 4월 11일)

광주·전남			전북		
선거구	당선자	소속정당	선거구	당선자	소속정당
광주동구	신기하	새정치국민회의	전주덕진	정동영	새정치국민회의
광주서구	정동채	새정치국민회의	전주완산	장영달	새정치국민회의
광주남구	임복진	새정치국민회의	군산갑	채영석	새정치국민회의
광주북구갑	박광태	새정치국민회의	군산을	강현욱	신한국당
광주북구을	이길재	새정치국민회의	익산갑	최재승	새정치국민회의
광주광산구	조홍규	새정치국민회의	익산을	이 협	새정치국민회의
목포·신안갑	김홍일	새정치국민회의	완주	김태식	새정치국민회의
목포·신안을	한화갑	새정치국민회의	정읍	윤철상	새정치국민회의
여수	김충조	새정치국민회의	남원	조찬형	새정치국민회의
순천갑	김경재	새정치국민회의	김제	장성원	새정치국민회의
순천을	조순승	새정치국민회의	부안	김진배	새정치국민회의
나주	정호선	새정치국민회의	고창	정균환	새정치국민회의
여천시·여천군	김성곤	새정치국민회의	임실·순창	박정훈	새정치국민회의
광양	김명규	새정치국민회의	무주·진안·장수	정세균	새정치국민회의
담양·장성	국창근	새정치국민회의			
곡성·구례	양성철	새정치국민회의			
고흥	박상천	새정치국민회의			
보성·화순	박찬주	새정치국민회의			
장흥·영암	김옥두	새정치국민회의			
강진·완도	김영진	새정치국민회의			
해남·진도	김봉호	새정치국민회의			
무안	배종무	새정치국민회의			
함평·영광	김인곤	새정치국민회의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표 8-32] 호남 제 15대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의 정당별 분포(1996년 4월 11일)

정당 / 지역	신한국당	새정치 국민회의	자유 민주연합	통합민주당	무소속
전국	121	66	41	9	16
전북	1	13	0	0	0
광주	0	6	0	0	0
전남	0	17	0	0	0
호남	1	36	0	0	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대통령선거는 후보들의 지역적 구성이 호남과 영남을 축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전의 여러 선거와 달랐다.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광주 및 청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것이 지역적 연고로 작용하기에는 무리였다. 그는 호남 지역의 민심에는 서울과 영남을 대표하는 것으로, 역대 권력의 수혜자로 비추어졌다. 이에 더하여 한나라당 내에서 실시된 경선에 불복하여 이인제가 국민신당을 창당하여 후보로 나서고, 김종필이 김대중 지지를 선언하면서 충청권이 격전지로 부상하였다. 선거가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대결로 압축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지역적 기반이 강하게 가미된 보수와 혁신의 대결로 나타났다.

이 선거에서 김대중은 전국적으로 39.7%을 얻어, 38.2%를 얻은 이회창을 1.5%차이로 힘겹게 이겼지만, 호남에서는 92.9%의 지지율을 획득하였다(표 8-33). 당시 호남의 민심은 '이번이 마지막' 이라는 절박한 측면이 있었다. 이 선거를 통하여 호남민심은 1961년 5 · 16

[표 8-33] 제 15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자별 · 지역별 득표율(%) 상황

지 역	새정치국민회의	한나라당	국민신당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전국	39.7	38.2	18.9
전북	90.7	4.5	2.1
광주	96.3	1.7	0.7
전남	92.9	3.1	1.4
호남	92.9	3.3	1.5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으로 인한 박정희의 집권 이래, 적어도 1971년 제 7대 대통령선거에서의 김대중의 '석패' 이래의 '한을 풀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선거의 전국적 결과는 뚜렷한 동서분할 구도를 보여주고 있었고[표 8-34], 경제는 국제통화기금의 관리를 받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표 8-34] 제 15대 대통령선거시 주요 후보의 시도별 득표율

(단위 : %)

후보/정당 / 지역	이 회 창 (한나라당)	김 대 중 (국민회의+자민련)	이 인 제 (국민신당)
서울	40.9	44.9	12.8
부산	53.3	15.3	29.8
대구	72.7	12.5	13.1
인천	36.4	38.5	23.0
광주	1.7	97.3	0.7
대전	29.2	45.0	24.1
울산	51.3	15.4	26.7
경기	35.5	39.3	23.6
강원	43.2	23.8	30.9
충북	30.8	37.4	29.4
충남	23.5	48.3	26.1
전북	4.5	92.3	2.1
전남	3.2	94.7	1.4
경북	61.9	13.7	21.8
경남	55.1	11.0	31.3
제주	36.6	40.6	20.5
전국	38.7	40.3	19.2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

[표 8-35] 제 2회 지방선거 호남 광역자치단체장 득표율(%)(1998년 6월 4일)

광주		전남	전북
새정치국민회의	무소속	새정치국민회의	새정치국민회의
고재유	이승채	허경만(단독 입후보)	유종근(단독 입후보)
66.1	32.3	88.1	93.7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2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표 8-35]에서는 전남과 전북에서 새정치국민회의만이 후보를 내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으로 호남의 표심을 돌리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당과 후보들이 후보를 내지 않거나 입후보 하지 않은 결과였다. 호남의 민심도 후보의 정치적 식견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였고, 오로지 김대중 대통령의 '낙점'에 따라 움직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새로이 당선된 대통령의 정국주도권 장악 의지에 호남의 민심은 충실하게 따라주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표 8-36]에서도 한나라당이나 자민련은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41석 중 12석이 무소속에 할애되었다. 무소속 후보들 중 상당수는 새정치국민회의의 공천에 불복하여 출마한 것으로,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김대중 지지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표 8-36] 제 2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정당별 당선자 수 및 득표율(1998년 6월 4일)

	광주				전남				전북			
정당	국민회의	한나라당	자민련	기타	국민회의	한나라당	자민련	기타	국민회의	한나라당	자민련	기타
후보자수	5	1	1	1	22	0	1	21	14	0	1	21
당선자수	5	0	0	0	15	0	0	7	9	0	0	5
득표율(%)	91.7	0.8	2.7	4.8	56.3	0	2.4	41.2	56.0	0	1.2	42.8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김대중 대통령 집권 3년차인 2000년 4월 13일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표 8-37], [표 8-38]에서는 한나라당이 전국 지역구 112석을 얻음으로써 집권야당인 새천년민주당을 앞섰다. 그러나 호남에서는 지역구 총 29석 중 26석을 새천년민주당이 차지하였다. 나머지 3석은 무소속 후보가 차지하였지만, 그들의 정치적 성향은 새천년민주당, 더 정확하게는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것이었다. 호남은 여전히 대통령 김대중과 그의 당을 지지하고 있었다.

[표 8-37] 호남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 상황(2000년 4월 13일)

광주 · 전남			전북		
선거구	당선자	소속정당	선거구	당선자	소속정당
광 주 동 구	김경천	새천년민주당	전주덕진	정동영	새천년민주당
광 주 서 구	정동채	새천년민주당	전주완산	장영달	새천년민주당
광 주 남 구	강운태	새천년민주당	군산	강현욱	새천년민주당
광주북구갑	박광태	새천년민주당	익산	이 협	새천년민주당
광주북구을	김태홍	새천년민주당	정읍	김원기	새천년민주당
광주광산구	전갑길	새천년민주당	남원 · 순창	이강래	무소속
목 포	김홍일	새천년민주당	김제	장성원	새천년민주당
여 수	김충조	새천년민주당	완주 · 임실	김태식	새천년민주당
순 천	김경재	새천년민주당	무주 · 진안 · 장수	정세균	새천년민주당
나 주	배기운	새천년민주당	고창 · 부안	정균환	새천년민주당
광양 · 구례	정철기	새천년민주당			
담양 · 곡성 · 장성	김효석	새천년민주당			
고 흥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보성 · 화순	박주선	무소속			
장흥 · 영암	김옥두	새천년민주당			
강진 · 완도	천용택	새천년민주당			
해남 · 진도	이정일	무소속			
무안 · 신안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함평 · 영광	이낙연	새천년민주당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표 8-38] 호남 제 16대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의 정당별 분포(2000년 4월 13일)

정당 / 지역	한나라당	새천년 민주당	자유 민주연합	민주국민당	한국신당	무소속
전국	112	96	12	1	1	5
전북	0	9	0	0	0	1
광주	0	6	0	0	0	0
전남	0	11	0	0	0	2
호남	0	26	0	0	0	3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표 8-39] 제 3회 지방선거 호남 광역자치단체장 득표율(%)(2002년 6월 13일)

광주						전남					전북		
새천년민주당	무소속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무소속	새천년민주당	무소속	무소속	한나라당	무소속	새천년민주당	무소속	한나라당
박광태	정동년	이환희	박종현	정호선	정구선	박태영	송재구	송하성	황수연	안수원	강현욱	손주항	라경균
46.0	26.6	10.8	7.3	5.1	2.4	56.0	23.5	8.9	5.1	3.4	72.6	16.7	8.1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김대중 대통령 집권 5년차인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표 8-39]에서 광주, 전남, 전북은 모두 민주당의 당선자를 배출하였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전과 달리 여러 정당에서 입후보하였다는 점이며, 당선자의 득표율 역시 이전과 달리 상당히 낮아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표 8-40).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호남은 여전히 집권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었다.

200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는 호남에 있어서는 '포스트 김대중(post DJ) 선거'라는 점에서 이전과 달랐다.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한나라당의 이회창,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가 등장한 선거전에서, 전국적으로 노무현 후보가 48.5%, 이회창 후보가 46.2%, 권영길 후보가 3.9%의 지지율을 획득하여,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다.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득표율 차는 2.3%였다. 호남에서 선거결과는 노무현 후보에 대한 92.3%의 압도적인 지지로 나타났다(표 8-41).

크게 보아 이 선거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읽힐 수 있지만, 호남에서의 선거는 '누가 김

[표 8-40] 제 3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정당별 당선자 수 및 득표율(2002년 6월 13일)

	광 주				전 남				전 북			
정당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기타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기타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기타
후보자수	5	1	0	7	22	5	1	43	14	0	2	36
당선자수	4	0	0	1	16	0	0	6	9	0	0	5
득표율(%)	60.6	1.3	0	38.1	48.5	1.1	0.9	49.5	44.0	0	0.8	55.1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표 8-41] 제 16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자별 · 지역별 득표율(%) 상황

지 역	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노무현	이회창	권영길
전국	48.5	46.2	3.9
전북	90.7	6.1	1.4
광주	94.7	3.6	0.1
전남	92.2	4.6	1.1
호남	92.3	4.9	1.2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대중의 뒤를 이을 것인가' 라는 물음으로 압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거전에서 진보적 노선을 대표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호남에서의 득표율은 전국의 3.9%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2%에 불과하였다. 이는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박빙의 대결과 정몽준 의원의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철회 등이 작용한 측면이 있지만, 호남의 민심이 보수와 진보의 대결에서 항상 진보적 성향을 보여 왔다기보다는 김대중이라는 지역적 상징의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왔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의 산업적 기반의 존재여부로 물음을 되돌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다.

2004년 4월 15일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국민통합 21, 민주노동당 등의 대결이 이루어졌다. 전국적으로 지역구 129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의 승리로 종결되었으며, 호남에서 역시 총 31개 지역구 중 6개 지역구를 제외한 25개 지역구에서 열린우리당이 당선자를 냈다. 나머지 6개 지역구 중 5개는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무소속이 1석을 차지하였다. 새천년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는 모두 전남에서 당선되었고, 광주와 전북은 열린우리당이 지역구의 모든 의석을 차지하였다(표 8-42), (표 8-43).

'포스트 DJ' 상황에서 처음 실시된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새천년민주당과 그로부터 분당한 열린우리당의 후보를 대거 당선시키고, 다른 정당을 한 석도 당선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호남의 민심은 여전히 김대중이라는 지역의 정치적 상징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8-42] 호남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 상황(2004년 4월 15일)

광주 · 전남			전북		
선거구	당선자	소속정당	선거구	당선자	소속정당
광 주 동 구	양형일	열린우리당	전주완산갑	장영달	열린우리당
광주서구갑	염동연	열린우리당	전주완산을	이광철	열린우리당
광주서구을	정동채	열린우리당	전주덕진	채수찬	열린우리당
광주남구	지병문	열린우리당	군산	강봉균	열린우리당
광주북구갑	강기정	열린우리당	익산갑	한병도	열린우리당
광주북구을	김태홍	열린우리당	익산을	조배숙	열린우리당
광주광산구	김동철	열린우리당	정읍	김원기	열린우리당
목 포	이상열	새천년민주당	남원 · 순창	이강래	열린우리당
여 수 갑	김성곤	열린우리당	김제 · 완주	최규성	열린우리당
여 수 을	주승용	열린우리당	무주·진안·장수·임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순 천	서갑원	열린우리당	고창 · 부안	김춘진	열린우리당
나주 · 화순	최인기	무소속			
광양 · 구례	우윤근	열린우리당			
담양 · 곡성 · 장성	김효석	새천년민주당			
고흥 · 보성	신중식	열린우리당			
장흥 · 영암	유선호	열린우리당			
강진 · 완도	이영호	열린우리당			
해남 · 진도	이정일	새천년민주당			
무안 · 신안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함평 · 영광	이낙연	새천년민주당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표 8-43] 호남 제 17대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의 정당별 분포(2004년 4월 15일)

정당 / 지역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새천년 민주당	자유 민주연합	국민통합 21	민주 노동당	무소속
전국	129	100	5	4	1	2	2
전북	11	0	0	0	0	0	0
광주	7	0	0	0	0	0	0
전남	7	0	5	0	0	0	1
호남	25	0	5	0	0	0	1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자료실에서 재구성

2. 지역주의

1) 지역주의의 근원으로서 지역 기질론과 문제점

호남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가지 기질론적 평가가 있어왔다. 첫째, 삼국시대에 백제의 영역에 속해 있었고, 백제가 패망한 후 지역적으로 차별을 받았다는 점에서 호남의 저항적인 지역주의의 근원을 찾는 견해들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백제의 영역에 호남만이 속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호남이 백제의 근간이 아니었으며, 그 연원이 너무 멀리 소급되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지역주의나 지역감정을 설명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려시대의 훈요십조 중 풍수지리설에 입각하여 차령산맥과 공주강(금강) 이남의 지세가 배역적이라 하여 인재등용을 기피한 것이 호남에 대한 차별의 시작이자, 호남의 저항적인 지역주의의 근원이라는 설이 있다. 훈요십조의 진위야 어쨌든, 오늘날 차령산맥과 금강 이남에 호남만이 아닌 충청도의 상당부분이 속해 있다는 점에서, 그다지 타당한 설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고려시대의 지역별 반역 횟수는 경상도가 11회 전라도가 3회로서(남영신, 1992), 오히려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정여립 모반사건 등으로 조선시대에 호남에 대한 차별적 관리가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호남의 저항적인 지역주의의 연원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합리적인 설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조선시대에 호남에 대한 차별은 있었지만, 가장 크게 차별받았던 지역은 함경 · 평안 · 황해도 등의 북방지역이었으며, 호남지역이 정여립의 난 이후 차별을 받았다는 증거는 있으나, 이는 특정지역에 대한 차별이라기보다는 중앙의 지방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예를 들어, 영조 시기 이인좌의 난으로 대구에 '평영남비(平嶺南碑)'를 세우고 영남지역을 반역향으로 낙인찍어 이 지역 인재들의 출사를 금지시킨 일이 있다. 이 역시 중앙의 지방에 대한 차별적 관리이며, 정조 시기 이러한 차별적 관리가 해제되었던 적이 있다는 점에서 정여립의 난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조선 후기 최고의 인문지리서로 꼽히는 『택리지』에서 이중환이 팔도의 인심을 논한 것을 두고, 그 책의 권위를 빌어 전라도의 인심과 지역색을 규정하려는 주장들이 있다. 물

론 이중환은 전라도에 대해 복거총론에서 '오로지 간사함을 숭상하여 나쁜 데에 쉽게 움직인다' 하였고, 팔도총론에서는 '풍속이 음악과 여자, 재부와 사치를 숭상하고, 사람들이 약고 경박하며 바르지 못하고 아첨을 잘한다' 고 하였다. 그러나 이중환의 지역평가는 서민의 풍속과 사대부의 풍속을 구분하고 있고, 또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통일성이나 객관성을 부여하기 힘들다. 실제로 그가 각 지역의 인심을 서술한 복거총론 인심조를 보면, 평안도와 경상도 이외에 대해서는 지극히 부정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환의 지역기질론 평가가 훗날 지역감정의 동원 가능한 담론자료로서 기능한 측면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호남의 지역주의나 지역감정을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1959년 이진숙에 의한 연구가 있다. 그는 25개의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활용하여 팔도인의 성격을 구분하였다. 이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각 지역에 대해 일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사람은 깍쟁이 이고, 간사하고 사교적이며, 경우가 밝다. 경기도 사람은 온순하고 깍쟁이이다. 전라도 사람은 간사하다. 경상도 사람은 무뚝뚝하다. 충청도 사람은 온순하고 예의바르며 보수적이고 완고하다. 강원도 사람은 온순하고 우둔하고 단순하다."는 등의 평가가 일반적이었다는 것이다. 이진숙의 조사가 실시된 1959년은 아직까지 지역감정이라고 할 만한 현상이 나타나기 전으로 볼 수 있는데, 그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의 기질적 특성과 관련한 고정관념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호남 이외에도 각 지역에 대한 기질론적 평가가 전반적으로 결코 긍적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를 지역주의와 연관시키기는 어려우며, 각 지역민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정체성 문제와도 연결시키기 어렵다.

2) 호남 지역주의의 형성

(1) 서울로의 인구이동과 지역주의

호남 지역주의의 형성은 한국에서 '지역감정' 으로 불리는 '정치적 지역주의' 또는 '동원된 지역주의' 의 형성과 궤를 같이한다. 한국에서 지역주의가 처음 정치적으로 표출된 시기

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문제는 왜 이시기에 그러한 지역주의가 나타났는가일 것이다.

지역주의는 하나의 지역만으로는 발생하지 않으며, 여러 지역들이 각 지역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만 가능하다. 물론 그 장은 '중앙'이며, 지리적 범위로는 서울이다.

1949년 이후 호남이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여왔으며[표 8-44], 특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완료된 1966년 이후 호남은 절대인구의 감소를 경험하여왔다. 절대인구의 감소는 지역의 절대적·상대적 낙후를 반영하는 것이었고, 이는 호남의 인구가 대부분 서울로 이주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구이동은 연쇄이주의 형태를 띤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대부분 지역연고에 의한 것이었다. 지역적 연고는 서울살이에서 취업 및 고용시장을 개척하는 루트가 되는 등 상당한 도움으로 작용하였다. 이후 이러한 지역적 연고는 확대되어 향우회 조직 등으로 발전한다. 1971년 지역주의적 선거에서 김대중이라는 변수는 이러한 과정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울에 이주한 호남 사람들의 대부분은 서울 저소득층을 구성하게 된다. 1979년과 1981년의 조사[표 8-45]에 의하면, 서울 저소득층의 28.3%와 32.6%가 호남 출신인 것으로 나

[표 8-44] 지역별 인구구성비의 변화

(단위: %)

지역 / 연도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계
1949	7.7	13.0	5.7	15.7	31.4	25.2	1.3	100
1955	7.3	11.0	7.0	15.9	33.1	24.4	1.3	100
1962	11.8	10.5	6.1	15.7	31.8	23.0	1.1	100
1966	13.3	10.6	6.0	15.3	31.1	22.5	1.2	100
1970	17.6	10.7	5.9	13.8	30.4	20.5	1.1	100
1975	19.8	11.5	5.4	12.9	30.5	18.8	1.1	100
1980	22.3	13.2	4.8	11.7	30.6	16.2	1.2	100
1985	23.3	15.6	4.3	10.9	29.9	14.8	1.2	100
1990	24.4	18.3	3.7	10.4	28.9	13.2	1.1	100
1995	24.0	21.3	3.2	10.7	28.0	11.7	1.1	100

자료 :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해당연도, 한국통계연감

[표 8-45] 서울시 저소득층의 출신 지역별 분포

조사기관 지 역 별	서울시 조사 (1979)	KDI 조사 (1981)	조사기관 지 역 별	서울시 조사 (1979)	KDI 조사 (1981)
서 울	14.2	16.4	전 남	18.0	19.7
부 산	0.9	1.0	경 북	7.6	9.2
경 기	11.1	6.0	경 남	4.0	2.4
강 원	4.7	3.0	제 주	0.3	0.2
충 북	7.0	6.2	북 한	10.6	9.5
충 남	10.3	11.7	외 국	0.3	1.2
전 북	10.3	12.9	미 상	0.7	0.6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1981), 서울특별시(1979)

타났다. '서울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 으로서 호남 사람이 부각되었고, 호남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그러한 처지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문제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러한 현상을 지역의 기질에서 찾은 반면에 호남사람들은 그것이 지역적 차별에서 왔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2) '경제적 낙후론' 과 '정치적 차별론' 의 확산

호남의 경제적 낙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객관적 자료가 알려져 있다. 특히 본격적인 경제적 낙후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실시 이후라는 점 역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문제는 호남 사람들이 그에 대해 어느 정도 내면화시키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경제적 낙후에 대한 호남 사람들의 인식은 전남지역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8-46). 1992년 조사에서 83.4%가 전남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전북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1992년 실시된 전북인의 의식조사에서 71.2%가 지역감정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였고, 그 중 47.3%가 정치 · 경제 등의 간접적 피해라고 응답하였다.

경제적인 차별과 더불어, 정치적인 차별, 다시 말해서 정치적 충원 기회에서의 배제는 호남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 지역주의의 요소이다. 역대 정권별 장관과 고위

관료의 출신지역 분포[표 8-47]를 보면, 호남이 서울 · 경기와 영남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호남 사람들의 불만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8-46] 전남도민의 지역경제에 대한 인식

배경변수	응답비율(%)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낙후되어 있다	83.4
경제적 여건이 타지역과 비슷하다	6.7
타지역에 비해 생활조건이 낫다	9.9

출처 : 전라남도(1992, 341)

[표 8-47] 역대 정권별 장관과 고위관료의 출신지역 분포

대상지역 / 정권	장관						고위관료					
	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이북	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이북
이승만정권	42.5	12.6	19.0	4.0	7.1	14.8	33.2	16.0	18.8	6.2	6.5	19.3
장 면정권	22.0	16.0	21.0	21.0	-	20.0	16.3	16.3	25.5	16.3	1.0	24.6
박정희정권	15.2	16.3	29.8	15.3	7.0	16.4	14.1	13.9	30.1	13.2	7.7	21.0
전두환정권	24.6	13.2	33.0	14.1	4.7	10.4	19.4	12.3	41.2	12.6	5.4	9.1
노태우정권	17.3	12.4	45.8	12.0	4.5	7.9						
김영삼정권	17.6	18.0	40.9	15.1	1.5	6.8	20.8	14.7	41.2	14.7	2.0	6.6
합 계	23.2	14.8	31.6	13.6	4.1	12.7	20.8	14.6	31.4	12.6	4.5	16.1

출처 : 주승만 (2003, 43)

[표 8-48] 김대중 정부 출범 전(1998년 2월 24일)과 출범 후(2000년 2월말) 3급 이상 공무원의 출신지별 분포

지역		서울~경기	충청	영남	호남	기타
비율 (%)	출범전	20.7	16.8	36.9	20.0	5.6
	출범후	20.3	16.1	32.0	24.7	6.9

출처 : 신동아 2000년 4월호

이러한 정치적 충원 기회에서의 배제는 상대적으로 엘리트를 다수 배출한 광주고, 광주일고, 전주고, 남성고 등 출신을 중심으로 동문별 지역적 유대를 강화시켰으며, 훗날 이들의 지원은 김대중이 집권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집권 후 발표된 한 조사[표 8-48]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완만하게 시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호남의 지역적 선호도

지역주의 혹은 지역감정은 대상이 되는 지역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 호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1992년에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 8-49]를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전북 역시 유사한 패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사에서 전남도민은 호남지역에 대한 비호남 지역의 편견을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영남과 호남의 상호편견을 심각한 것으로 들고 있다. 반면에 호남사람이 영남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결국

[표 8-49] 전남도민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지역적 편견

배경변수	응답비율(%)
호남지역에 대한 비호남지역의 편견	42.2
영남과 호남간의 상호 편견	38.4
호남사람이 영남사람에 대해 갖는 편견	2.7
영남사람이 호남사람에 대해 갖는 편견	16.7

출처 : 전라남도(1992, 339)

[표 8-50] 전남도민이 느끼는 타지역 사람들의 전남도민에 대한 평가

배경변수	응답비율(%)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37.6
약간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47.6
타지역과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다	9.8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5.0

출처 : 전라남도(1992, 345)

이 조사의 결과는 호남 사람들이 지역주의나 지역감정의 문제를 호남과 영남의 문제가 아닌 전국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더불어 외부지역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85.2%를 차지하고 있는 것[표 8-50]으로 보아, 호남 사람들의 외부에 대해 상당히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러한 피해의식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느끼고 있음[표 8-51]을 알 수 있다.

[표 8-51] 전남도민이 느끼는 타지역 사람들의 전남도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원인

배경변수	응답비율(%)
신문 방송의 편향보도	8.9
정치적 산물	54.9
가난한 지역경제	21.1
전남인의 성격상의 문제점	6.2
편향된 교육	1.3
과격한 각종 시위	7.5

출처 : 전라남도 (1992, 346)

[표 8-52] 지역(민)간의 거부감

(단위: %)

평가지역 / 출신도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북	평균
서울	4.6	4.6	5.2	6.5	7.2	38.6	39.2	14.4	12.4	7.8	12.4	13.9
경기	7.7	3.4	3.9	5.2	5.2	39.9	40.8	9.4	9.9	8.6	15.9	13.6
강원	21.7	13.2	4.7	6.6	6.6	47.2	49.1	14.2	16.0	19.8	32.1	21.0
충북	12.0	7.2	10.4	4.0	5.6	48.8	50.4	13.6	15.2	19.2	40.0	20.0
충남	7.2	3.2	4.5	2.7	2.7	32.4	35.1	6.8	7.2	5.4	10.4	10.7
전북	14.7	9.6	11.9	7.3	7.3	2.8	9.0	31.6	31.1	14.7	32.8	15.7
전남	9.7	6.9	9.3	8.0	7.3	6.6	3.1	25.6	25.6	8.3	18.0	11.7
경북	13.8	10.1	9.8	9.8	9.8	53.2	55.4	3.4	5.8	16.8	31.2	19.9
경남	23.0	15.2	11.1	9.8	9.8	51.4	55.7	9.8	3.4	15.2	27.0.	21.0
제주	15.6	13.3	13.3	13.3	11.1	48.9	60.2	15.6	15.6	0.0	33.3	21.8
이북	10.3	10.3	3.4	6.9	6.9	37.9	37.9	17.2	13.8	10.3	3.4	14.4
합계	13.4	9.1	8.4	8.1	7.8	45.2	47.7	16.9	17.0	12.4	23.8	

출처 : 나간채 (1992, 85-86)

1988년에 실시된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한 조사[표 8-52]는 호남인에 대한 타지역인들의 거부감이 강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영·호남 주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거부감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거리감이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사가 수행된 시점이 지역감정이 정치적으로 강하게 동원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2002년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 및 2004년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지역주의적 요소 및 동서분할 구도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호남 지역주의의 미래

호남의 지역주의를 거론하지 않고서는 한국의 지역주의를 언급할 수 없다. 지역주의는 이데올로기인 이상 물적 토대를 지닌다. 따라서 호남의 지역주의는 한국의 특수한 정치경제적 과정을 물적 토대로하여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국면에서 보자면, 냉전과 그로 인해 봉쇄 상황이나 다름이 없었던 서해안 지역의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국가의 공간적 발전축이 서울과 일본을 향해 있던 영남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호남의 산업입지적 이점은 거의 없었고, 그에 따라 경제적 낙후는 가속화될 수 밖에 없었다. 공간적 발전축이 서울과 영남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정치적 엘리트의 충원 역시 이러한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호남의 정치적 성향은 때로 지역적 이익에 사로잡히는 부정적인 측면도 드러냈지만, 호남이 냉전 이후 진행된 경제개발 속에서 물적 토대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호남 지역주의 존재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 속에서 호남은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지역적 상징으로 받아들였고, 호남의 지역주의는 김대중이라는 인물의 틀 안에 갇히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1997년 그의 대통령 당선과 2002년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으로 호남의 지역주의는 김대중이라는 틀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 있다. 이미 2004년의 선거에서 어느 정도 암시되었듯이, 서서히 전북

으로부터, 광주로부터, 전남으로부터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대중이라는 규정력이 약화된 것으로 호남 지역주의의 소멸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전히 호남 사람들은 호남이 절대적 ·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정치적 차별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냉전 이후 고착된 국가발전의 공간적 축이라는 물적 토대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남의 지역주의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물적 토대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빈 면



제9장
전라지방 - 지역구조와 지역정책

전경숙 (전남대학교)

빈 면

제9장 지역구조와 지역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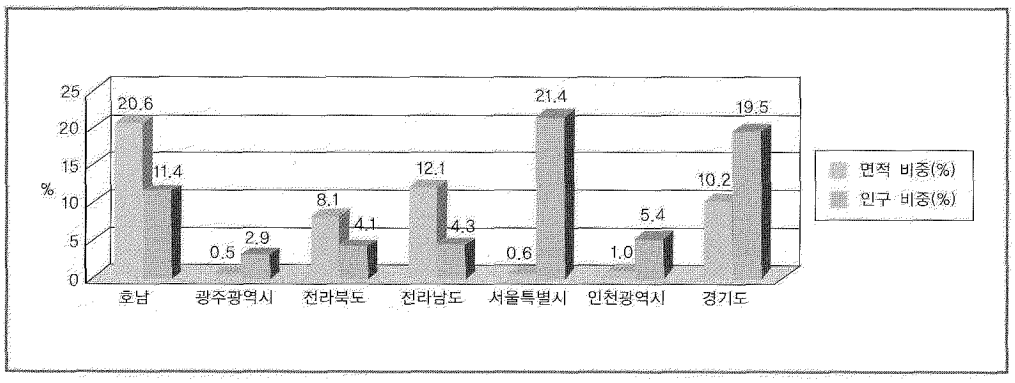
1. 지역구조

최근, 세계는 사회 · 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호남지역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의 상황은 국가 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지역 구조를 주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과 지역 문제를 인식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의 지속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한 지역정책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지역구조 개관

호남지역은 행정상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 전라남도를 포함하므로, 전국 7대 도시 · 9개 도 가운데 사회 · 경제적 측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2000년 현재 전 국토 면적(99,460.74㎢)에 대한 호남지역의 면적 비중은 20.6%이다(그림 9-1). 광주(501.44㎢)의 비중은 7대 도시 중 최하위로 0.5%, 전라북도(8,050.07㎢)와 전라남도(11,986.97㎢)는 9개 도 가운데 각각 7위와 3위의 비중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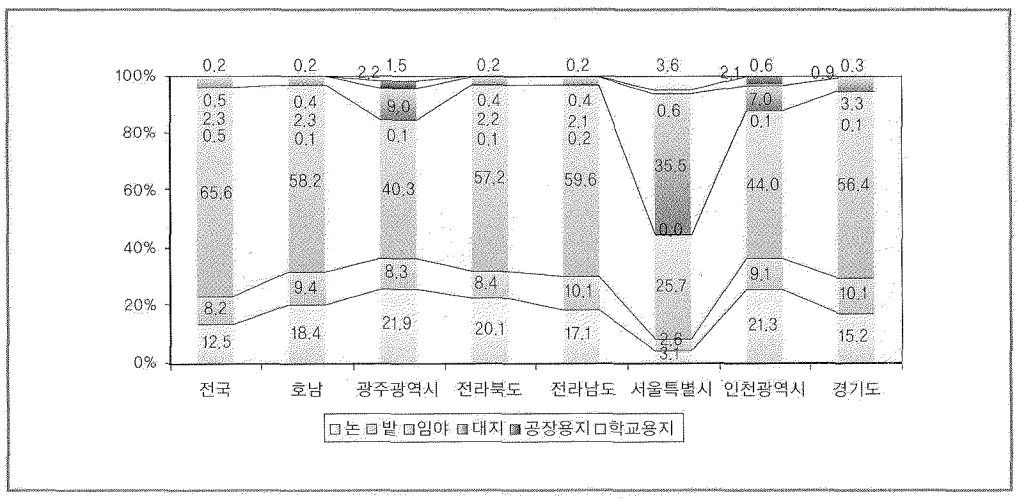


〈그림 9-1〉 호남의 면적, 인구 비중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2000), 총인구조사(2000)

인구 면에서 보면, 2000년 현재 전국 인구에 대한 호남지역의 인구 비중은 11.4%로 면적 비중에 비해 매우 낮다. 그 가운데 광주의 인구 비중은 2.9%이다. 전라남도는 강원도, 경상남도 다음으로 면적 비중에 비해 인구 비중이 낮다.

토지이용 상황을 보면, 호남의 경우 1999년 현재 논으로의 이용률이 18.4%로 전국에 비해 높다(그림 9-2). 그 중 광주는 21.9%로 7대 도시 뿐 아니라 9개 도까지 비교해 보아도 가장 비율이 높다.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9개 도 가운데 각각 2위와 3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를 전국 논 면적(12,428.89㎢)에 대한 비중으로 보면, 전라남도(2049.23㎢)가 16.5%로 9개 도 가운데 가장 높고 전라북도(1,629.19㎢)는 13.0%로 4위를 이루어 그 중요도는 더 높아진다. 이와 같이 호남의 경우, 논 면적 비중이 지역 면적 비중에 비해 매우 높은 논농사 중심지역이다. 밭으로의 이용률도 호남은 9.4%로 전국의 비중에 비해 높다. 그 중 전라남도가 제주도 다음으로 높고, 전라북도는 지역 면적 순위와 마찬가지로 7위이다. 전국 밭 면적에 대한 비중을 보더라도 23.7%로 논의 경우보다는 낮지만 지역 총 면적 비중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그 중 전라북도의 비중은 8.3%, 전라남도는 14.2%로 호남지역이 밭으로의 이용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논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임야 면적 비율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각각 57.2%, 59.6%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전국 임야 면적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라



〈그림 9-2〉 토지이용 상황(1999년)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2000)

남도의 경우 11.0%~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지만 전라북도는 7.1%에 그친다. 그 외에 많은 자본 투자를 요하는 과수 재배 면적 비율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타 도에 비해 현저히 낮고, 도시와 관련 있는 공장 용지, 대지 용지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학교용지 비율은 전국 평균 수준이다.

2) 인구구조

추계인구 자료를 기반으로 생산 연령층(15~64세)과 비생산 연령층인 연소층(0~14세) · 노년층(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2000년 현재 인구구조를 보기로 한다. 전국의 경우는 생산연령층, 연소층과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각각 71.7%, 21.1%, 7.2%로 노년층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U.N.의 정의에 의하면 노령인구구조에 해당된다(표 9-1).

호남지역의 경우, 대도시 광주도 생산연령층이 전국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71.5%이지만, 노년층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5.5%로, U.N.의 정의에 의하면 중년인구 구조에 해당된다. 노년층의 비율이 낮은 만큼 연소층의 비율이 높아서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생산 연령층의 비율이 각각 68.6%, 66.6%로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낮다. 인구 재생산 연령층의 비율이 낮은 만큼 연소층의 비율도 각각 20.4%, 20.0%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다. 노년층의 비율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각각 11.1%, 13.4%로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노년인구 지역이다.

이와 같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2000년 현재 연령별 인구 구조를 보면, 15~64세의 인구

[표 9-1] 인구구조(2000년)

지 역	인구수(명)	인구증가율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총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전국	47,008,111	0.7	21.1	71.7	7.2	39.5	10.1	34.3
광주광역시	1,382,426	1.2	23.0	71.5	5.5	39.9	7.7	23.8
전라북도	1,927,005	-0.2	20.4	68.6	11.1	45.9	16.1	54.2
전라남도	2,034,970	-0.7	20.0	66.6	13.4	50.1	20.1	67.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2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재생산 인구인 연소층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는 노년층의 상대적 증대로 이어져 인구 부양비 특히 노년부양비의 증대로 나타나서, 호남지역의 사회 · 경제 구조상 문제점을 초래하게 된다. 총 부양비를 보면 전국 평균이 39.5%인데 대도시 광주도 39.9%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각각 45.9%, 50.1%로 전국 평균보다 매우 높다. 연소 부양비는 전국 평균이 29.4%인데, 광주,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각각 32.2%, 29.7%, 30.0%로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는 인구 재 생산층에 의해 증가된 연소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연소 부양비가 높은 것이지만,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경우는 생산 연령층의 부족 현상에 따른 연소 부양비의 상승이다. 따라서 노년 부양비는 대도시 광주의 경우 7.7%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촌락지역인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각각 16.1%, 20.1%로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점을 예견할 수 있다. 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인 노령화 지수를 보면, 광주는 23.8%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지만,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각각 54.2%, 67%로 인구 구조상 경제적 생산성,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높은 노령화 지수는 연령별 인구구조로 볼 때, 수명 연장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출생률의 하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진 것이므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상과 같이 호남지역은 인구 감소와 함께 여성 초과현상, 높은 노년인구 부양비를 나타내는 인구구조상 생산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노년 인구부양비의 지역 내 다양성을 보면, 가장 낮은 전주시의 8.3%에서부터 산지가 많은 임실군의 무려 41.3%까지 그 폭이 매우 크다.

다음으로 동적인 인구 상황을 알 수 있는 출생, 사망에 대해 보기로 한다. 합계출산률은 2000년 현재 전국 평균이 1.5명인데 반해 전라남도는 9개 도 중 제주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인구 대체수준에는 못 미친다. 전라북도는 1.6명으로 5위에 해당된다. 특히 전라북도는 그 후 크게 떨어져 2002년에는 경상남도와 함께 1.3명으로 최하위의 경상북도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광주의 경우는 1999년까지는 합계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다가 2000년에는 그 수치가 증가하여 울산과 함께 1.6명으로 우리나라 7대 도시 가운데 현저히 높은 수치를 보여 전국 평균, 전라북도보다도 높다. 그러나 그 후 다시 낮아지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1.3명으로 낮아져서 전라북도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7대 도시 중 가장 높다. 다음으로 사망 인구에 대하여 보면, 2000년 1년 간 총 사망자 수는 총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가장 많고, 전라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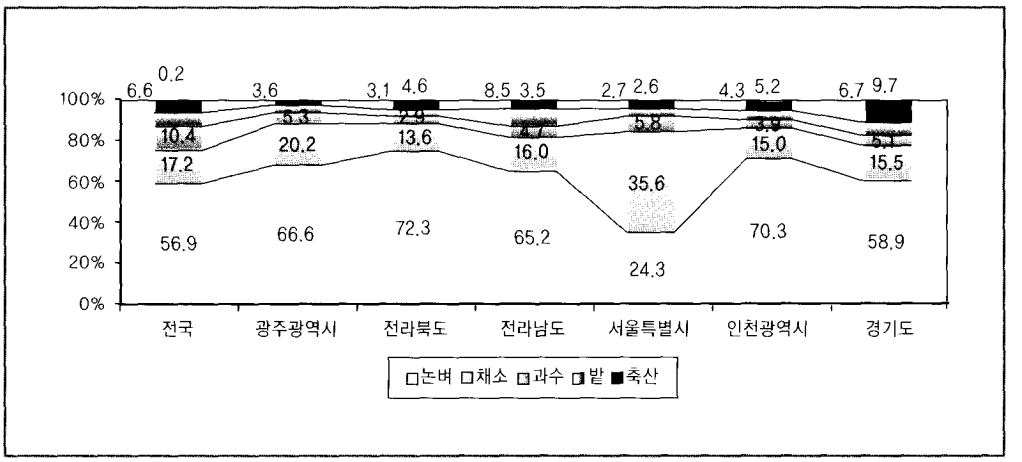
도와 전라북도는 각각 5위와 7위로 높은 사망 인구수를 보인다. 그러나 인구 1,000명당 사망률로 보면 고령자 비율이 높은 전라남도가 전국 16개 시 · 도 중 최고치를 나타내고, 전라북도는 4위이다.

인구의 또 다른 동태적 상황으로서의 인구이동을 보면, 2000년 현재 총 전입률은 광주가 22.1%,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각각 17.5%, 15.2%로 전라북도의 총 전입률이 높다. 총 전출률은 광주가 22.1%로 대전과 함께 7대 시 중 가장 높고,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각각 18.6%, 16.8%로 전북의 인구 이동률이 높다. 지역 인구의 사회적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시 · 도간 이동에 관해서 보면 광주의 경우 전입, 전출이 모두 7.5%로 7대 도시 중 가장 높아, 순 이동률이 0%이다. 광주는 대전과 함께 주변 촌락으로부터의 인구 흡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시 · 도간 전입인구의 61.1%가 인접한 전라남도로부터의 전입인구이고, 이어서 서울, 경기도, 전라북도로부터의 전입이 높게 나타난다. 전라남도의 전입 · 전출률은 각각 6.1%, 7.7%로 높고, 순 이동률이 -1.6%로 9개 도 중 가장 낮다. 이와 같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우리나라의 최대 인구 전출지역으로 인구감소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전라남도는 시 · 도 내 인구이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인접한 대도시 광주와의 이동량이 많기 때문이다. 총 전출인구의 54.2%가 같은 도내로의 전출이고, 시 · 도간 전출은 45.8%이다. 시 · 도간 전출 중 광주로의 전출이 가장 높고, 이어서 서울, 경기도로의 전출이고 인접한 전라북도로의 전출은 5%에 불과하다. 총 전입인구 중 도 내 전입인구가 59.8%, 시 · 도 간 전입인구는 40.2%로 전출인구보다 높은 사회적 감소를 보인다. 시 · 도간 이동 중 광주로부터의 전입인구가 40.8%로 가장 높고, 이어서 서울, 경기, 그리고 인접한 전라북도로부터의 전입은 5.6%에 불과하다. 이는 인구이동에 절대적 거리 변수보다는 인구흡인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라북도의 전입 · 전출률은 각각 4.1%, 5.2%로 매우 낮고, 순 이동률 -1.1로 9개 도 중 8위로 낮다. 시 · 도 내 인구이동률은 13.4%로 전라남도보다 높다. 총 전출인구 중 시 · 도 간 전출률이 28.0%로 전라남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데, 시 · 도간 전출인구 중 서울로의 전출률이 가장 높고, 경기도, 전라남도 순으로 나타난다. 호남이라는 문화적 변수, 충청권과의 지리적 접근성보다 수도권의 경제적 변수가 전라북도의 인구이동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전입인구 중 시 · 도간 전입인구는 23.6%로 전출과 마찬가지로 낮다. 총 전입인구 중 시 · 도간 전입인구는 서울로부터의 전입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서 경기도, 인접 전라남도, 광주로부터의 전입이다. 이

와 같이 전라북도는 도 내 인구이동 비율이 높은데 반해 시 · 도 간 전입인구율은 18.2%로 9개 도 중 최하위인 9위에 해당되며, 호남권 내에서의 인구이동 비율도 매우 낮다. 이는 다른 시 · 도에 비해 인구를 유인할만한 기반이 미약함을 시사하는 것이며, 또한 호남지역이라는 문화권, 충청도와의 지리적 인접성 보다는 수도권이라는 경제적 변수가 인구 이동에 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3) 경제구조

타 지역과 비교한 호남지역의 현재 위상과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구조의 기반인 경제적인 측면을 고찰한다. 지역 내 총생산의 경우, 광주는 2000년 현재 지역 내 총 생산액이 11,425,162백만 원으로 국내 총생산액의 2.2%를 차지한다. 전국 16개 시 · 도 중 15위, 7대 도시 중 최하위로, 서울, 경기도와 비교해 보면 생산보다는 소비 중심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각각 국내 총생산액의 3.2%와 4.9%를 생산하여, 인구규모 및 면적 비중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영역별로 보면 산업부문 생산은 광주가 전국 산업 생산의 2.2%로 낮은데, 이 역시 인구규모 및 면적 비중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각각 3.2%, 4.6%에 해당된다. 그러나 농 · 림 · 어업의 경우는 전라남도가 전국 16개 시 · 도 중 최고 비중으로 인구규모나 면적 비중에 비해 상당히 높고, 전라북도와 광주는 각각 10.1%, 1.2%이다. 이와 같이 호남의 지역 생산 기반은 1차 산업이다. 광주의 총 409,571가구 중 농가의 비율이 2.92%로 7대 도시 중 최고치이고, 전라북도도 총 604,082가구 중 농가 비율이 22.8% 수준으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돈다. 농업진흥지역이란 우량 농지로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토지 이용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을 지표로 하여 농업의 기반이 되는 우량 농지 수준을 알 수 있다. 전라북도는 2000년 현재 지역 면적의 16.0%(128,702.2㏊)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도내 16개 시 · 군 중에서는 6개 시 · 군이 도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전라남도의 경우는 지역 면적의 15.7%가 농업진흥지역이지만, 절대 면적으로 보면 188,381㏊로 전라북도보다 넓은 면적이 해당된다. 전라남도의 22개 시 · 군 중 63.6%인 14개 지역이 도 평균치 보다 높다. 우량 농지는 아니지만, 농업진흥구역의 농업용수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그림 9-3〉 영농형태(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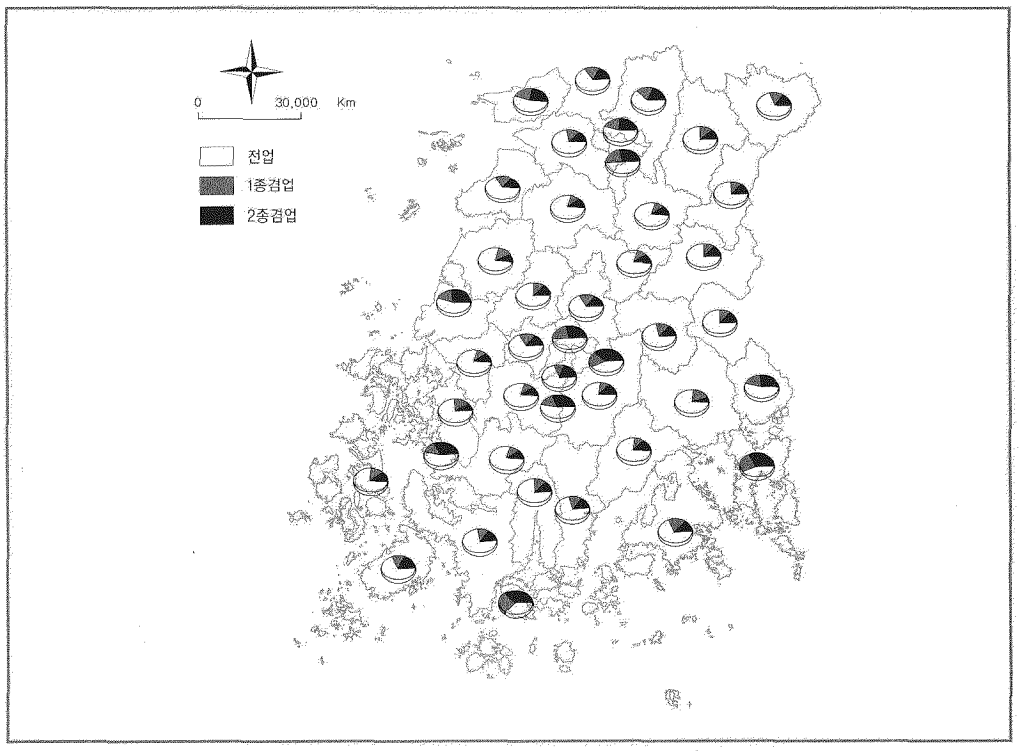
농업진흥지역 안에 지정한 농업 보호구역을 보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비율이 다른 시 · 도에 비해 높다. 이와 같이 호남지역은 우량농지와 농업환경 보호 면적이 넓은 농업중심 지역이다.

농가의 영농형태를 보면 2000년 현재 전국 총 농가 중 논벼 재배 가구의 비율이 57%인데, 광주 · 전라북도 · 전라남도의 비율이 각각 67%, 72%, 65%로 호남지역은 논벼 중심의 단순한 영농 형태를 나타낸다(그림 9-3). 채소 재배 가구는 전국 평균이 17%, 광주 · 전라북도 · 전라남도의 비율이 각각 20%, 14%, 16%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전국 평균보다도 낮다. 자본 투자율이 높은 반면 그 회수율이 늦은 과수 재배 가구 비율은 전국 평균이 10%인데 광주 · 전라북도 · 전라남도의 비율이 각각 5%, 3%, 5%로 역시 낮다. 일반 밭작물 재배 가구의 경우는 전국 평균이 7%인데 광주, 전라북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고, 전라남도는 평균보다 다소 높다. 축산 경영 가구 비율은 전국 평균이 5%인데, 광주와 전라남도는 평균보다도 낮고, 전라북도는 전국 평균 정도에 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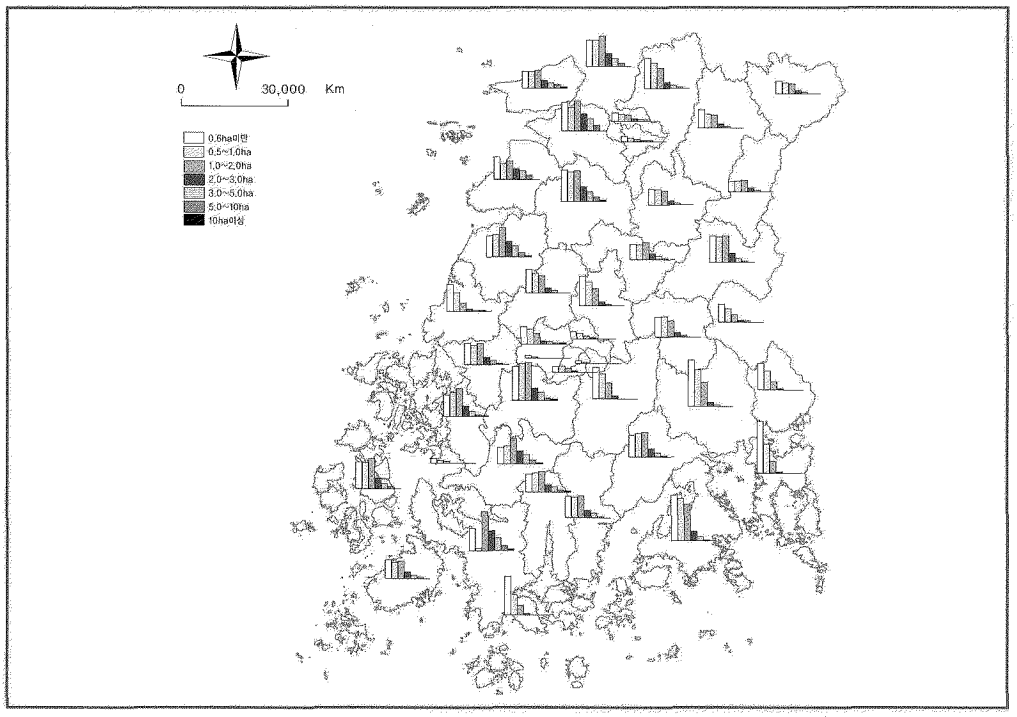
이와 같이 호남지역의 농업은 종사가구 비율은 높지만, 고소득 중심의 영농,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각화 영농이 부족하다. 호남지역 내에서의 구조를 보더라도 2000년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 도 평균 이상의 논벼 재배 지역이 군산, 순창, 익산, 남원, 김제 등 전체 지역의 1/3 정도로 논벼 중심의 단순한 영농 형태를 나타낸다. 상대적으로 평야가 좁아 과수의 재배 비율

도 높은 편이다. 전라남도의 경우는 순천, 담양, 곡성,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영광, 장성 등 절반이상의 지역에서 논벼 재배비율이 도 평균인 65%보다 높게 나타난다. 전라북도 평균인 72%보다 낮은 비율을 나타내는 지역은 순천, 해남, 장성의 3지역뿐이다. 이와 같이 호남지역이 논벼 중심의 단순영농형태를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도 전라남도의 영농형태가 보다 단순하다.

농가의 경영형태를 보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경우 2000년 현재 각각 전업 비율이 71%와 69%, 2종 겸업 비율은 13%와 15%이다. 경지면적 규모를 보면 0.5ha 미만의 영세농이 각각 27%, 32%로 가장 많고, 0.5~1ha과 1~2ha의 농가도 많은 편이다. 10ha 이상의 대농은 각각 0.4%, 0.3%로 전라북도의 경우가 전라남도에 비해 경영 규모가 큰 농가가 많은 편이다. 지역 내 구조를 보면, 전라북도 16개 시 · 군 지역 중 53.3%의 지역에서 평균 이상의 전업 비율이 나타나고, 도시적 성향이 강한 40%의 지역에서 평균 이상의 겸업 비중을 보인다(그림 9-4). 전



〈그림 9-4〉 경영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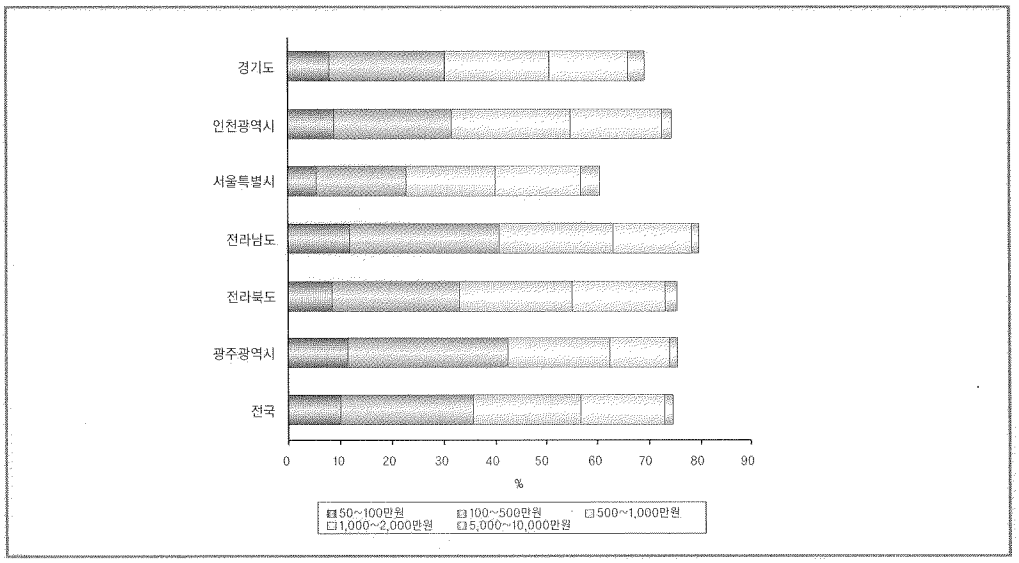


〈그림 9-5〉 경지면적별 농가분포(2000년)

라남도 22개 시 · 군의 63% 지역에서 겸업 비중이 전라남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 2종 겸업농가의 비율은 22개 시 · 군의 22.7%로, 4개 도시(목포, 여수, 순천, 광양) 및 광주 대도시 인접 지역인 담양군이 해당된다.

경지면적 규모별로 보면, 0.5ha미만의 농가 비율이 전라북도 평균 이상인 지역이 전주, 남원, 완주, 진안, 무주의 5개 시 · 군이다(그림 9-5). 이와 같이 영세하고 단순한 영농구조는 농가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농축산물의 연간 판매금액별 농가구조를 보면, 2000년 현재 전국 평균의 경우 100만원~500만원 농가가 가장 많고, 다음이 500~1,000만원, 1,000만~2,000만원 순이고, 5,000만~1억 원의 부농은 1.7%에 불과하다. 호남지역의 경우도 판매금액별 가구 비율 순위는 전국과 같지만, 광주와 전라남도의 경우 50~100만원의 소농이 전국 평균보다 많고, 1,000만~2,000만의 농가 비율은 각각 12%, 15%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그림 9-6). 5,000만~1억 원 이상의 부



〈그림 9-6〉 농축산물 연간 판매금액별 농가 비율(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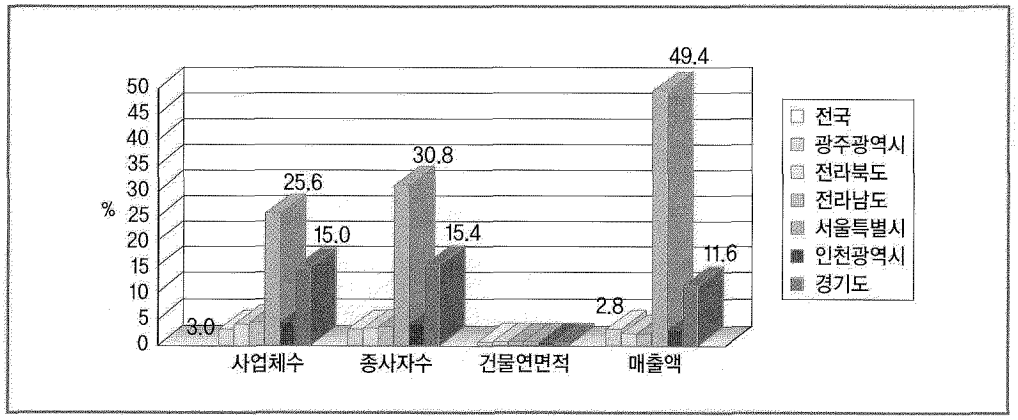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농 비율도 전라북도만이 전국 평균보다 높을 뿐 전반적으로 영세하다. 호남지역 내 구조를 보면, 100만원미만의 소액 농가는 전라북도의 35.7% 시 · 군이 해당되는데, 농/축산업이 주업이 아닌 도시지역이 포함되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전라남도는 전라북도보다 많은 40.9%의 지역(나주,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신안)이 100만원미만의 소액 농가이다. 부농이라 할 수 있는 5,000만 원 이상의 경우 전라북도는 도 내 42.9% 시 · 군(군산, 익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이 전라북도 평균치 이상이고, 전라남도는 도 내 31.8% 시 · 군(목포, 나주, 장흥, 강진, 해남, 영암, 영광)만이 전라남도 평균치 보다 높다.

호남지역의 영역별 생산구조를 보면, 2000년 현재 총생산에 대한 산업생산 비율은 전라남도가 가장 높고, 광주와 전라북도는 각각 91.2%, 90.1%이다. 이는 전라남도가 농업 중심의 지역이지만 영세농이 대부분으로 농업 생산액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산업 생산 중 제조업 생산 비중을 보더라도 전라남도가 가장 높고, 전라북도, 광주는 20%대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정부서비스생산 비중은 전라북도가 가장 높고 전라남도와 광주는 비슷한 수준이다. 광주는 소비성 도시로서 제조업 비중이 낮지만, 도 · 소매업, 금융 · 보험 ·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 비중이 촌락이 포함되는 전라북도나 전라남도보다 월등히 높다. 한편 생산기반이 약한 전라북도는

호남 3개 시 · 도 중 일반 공공행정과 사회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 전라남도는 교육 · 의료 · 보건 · 사회복지가 포함되는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서비스 생산 비중이 광주와 전라북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금융귀속서비스 영역의 비중은 광주, 전라북도, 전라남도로 3지역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낮다.

도매업은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는 경제활동이므로 입지하는 도시의 기능과 성격을 규정하는 주요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매업이 발달하게 된다. 소매업은 지역 유통의 최말단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인구,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에는 소매업의 대형화, 새로운 업태의 등장 등 가장 급속한



〈그림 9-7〉 도소매업 비중(2002년)

자료 : 통계청, KOSIS

변화를 보이는 경제 분야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주민과 밀접한 상호관계 하에 지역 경제를 형성하는 도 · 소매업 부문을 보면, 2000년 현재 서울이 사업체수, 종사자수, 건물연면적, 특히 매출액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다른 시 · 도의 비중은 저조하다(그림 9-7). 광주의 경우 사업체수, 종업원 수, 건물연면적, 매출액 모두 인구규모 비중보다 약간 높은 3% 대 수준이지만, 대도시라는 점에서 보면 미진한 수준이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사업체수 비중은 각각 4.0%, 4.4%로 광주보다 높지만, 종업원 수, 건물연면적은 3% 대이고, 매출액은 2% 수준에 불과하다. 이것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지역이 업체 수는 많지만, 매장면적이 좁고, 특히 매

출액이 저조한 영세구조 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도소매업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대형소매점의 판매 동향을 보면, 2000년을 100으로 한 불변지수로 볼 때 2000년 현재 전국의 경우 대형소매점 중 백화점 판매가 저조하다. 전라북도는 대형소매점 판매가 90.5로 서울보다 높고, 백화점은 좀 낮아 88.3이지만 광주보다는 높다. 전라남도는 대형판매점 판매가 78.7로 16개 시 · 도 중 15위로 미흡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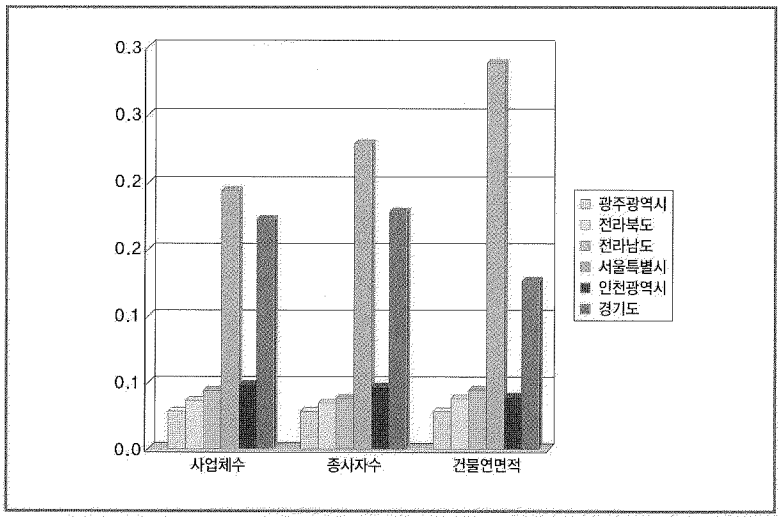
대형점은 최근의 급성장이 두드러지므로 2004년의 상황을 보면, 전국 판매가 2000년 89.1에서 118.6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전라북도(153.5), 그리고 2000년에 미진했던 전라남도(223.2)의 급성장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광주는 85.5로 2000년보다도 미약하고, 2000년(82.5)의 경우도 대형소매점 매출액 평균(86.4)에도 못 미치던 백화점은 2004년(64.9)에는 더욱 큰 폭으로 낮아진다. 백화점의 매출 수준은 시 · 도별 전체 상황을 보더라도 경제 수준이 비교적 높은 시 · 도를 중심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경제 수준이 낮은 시 · 도를 중심으로 성장한다. 전라북도도 2000년 88.3에서 171로 급성장한다. 지수가 아닌 매출액으로 보면, 2000년 현재 대형소매점의 전국 매출액은 1,919,937백만 원인데, 그 중 백화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55.4%, 대형할인점의 비중은 42%이다. 광주는 대형할인점보다는 백화점의 매출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전라북도는 백화점에 비해 대형 할인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특히 전라남도는 인근 대도시 광주의 영향으로 전라북도보다 대형소매점의 매출액 비중이 매우 낮다. 2004년의 매출액은 광주가 백화점, 대형 할인점 모두 매출액 비중이 낮아지는데, 특히 백화점은 실제 매출액도 낮아진다. 전라북도는 백화점 매출 비중이 커지는 한편, 대형 할인점의 경우는 매출액은 증가하지만, 타 지역의 매출액 상승과 함께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아진다.

[표 9-2] 대형소매점의 판매액(2004년 6월)

지 역	대형소매점 불변지수 2000년 = 100	백화점 불변지수 2000년 = 100	대형소매점 판매액 비중	백화점 판매액 비중	대형할인점 판매액 비중
전국	118.6	85	100	100	100
광주광역시	85.5	64.9	3.3	4.1	2.7
전라북도	153.5	171	2.1	2.0	2.2
전라남도	223.2		1.1		1.6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KOSIS

2000년에 특히 미진했던 전라남도도 대형소매점이 80%이상의 매출액 신장을 보이며 전국 매출액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에 비해 크게 증가된다. 그러나 인구규모 비중에 비하면 아직도 저조한 수준이다(표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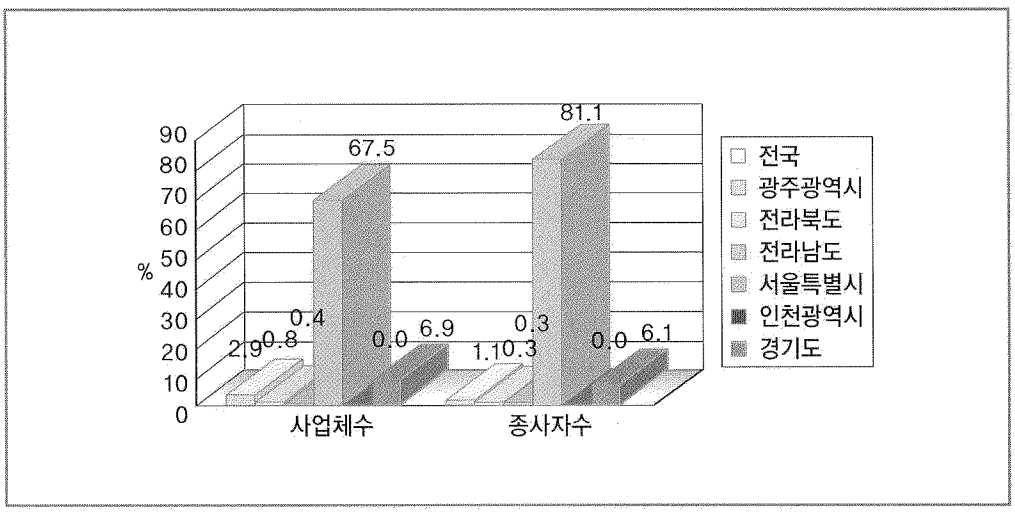
〈그림 9-8〉 음식 및 숙박업 비중(2002년)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KOSIS

일반적으로 도 · 소매업보다는 중심성이 낮은 음식 및 숙박업을 보면, 2000년 현재 사업체수의 경우, 서울의 비중(121,801개)이 도 · 소매업 비중보다 크게 낮아진다(그림 9-8). 호남지역의 경우는 광주(18,033개)와 전라북도(23,338개)의 비중이 도 · 소매업의 비중보다 다소 낮은데, 전라남도(28,143개)는 사업체 수 비중이 커서 도 · 소매업 비중과 같은 수준이다. 종사자 비중도 서울(392,784명)의 경우 도 · 소매업 비중보다 많이 낮아지고, 광주(51,163명)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전라북도(60,331명)와 전라남도(66,198명)는 도 · 소매업의 경우보다 그 비중이 커진다. 건물연면적은 서울의 경우 그 비중이 커지는데, 광주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고,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비중은 커진다. 매출액은 도 · 소매업의 경우보다는 낮지만 서울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비중은 도 · 소매업의 경우보다 높다. 특히 전라남도는 도 · 소매업과는 달리 전라북도보다도 매출액 비중이 높다.

부동산 및 임대업, 사회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가업,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서비스업을 보면 도소매, 숙박 및 음식업과 비슷한 구조적 특성을 나타낸다. 광주의 경우 사업체수, 종사자수, 건물 연면적, 매출액 비중 모두 3% 대로 매장 면적이 도 · 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보다 다소 높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영세성을 나타내며 사업체수(각 3.7%), 종사자수(각 2.9%), 매출액(각 2.4%) 모두 낮은 비중인데 건물 연면적은 전라북도보다도 전라남도가 월등히 높다.

지식,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와 함께 점차 산업 부문에서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컴퓨터 관련 고차산업을 알아보기로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리업,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본,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기타 컴퓨터 운영 관리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를 보면, 기존의 산업에 비해 아직은 미진하다. 전국 총 사업체 수가 9,442개, 종사자수도 146,858명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서울에의 입지 비중이 커 사업체 수 비중이 67.5%, 종사자수 비중은 81.1%(119, 161명)나 된다. 호남지역의 경우 광주는 사업체수 비중이 2.9%, 종사자수 비중은 1.1%이고, 전라북도(0.8%, 0.3%)와 전라남도(0.4%, 0.3%)의 비중은 1%에도 못 미치는 미약한 수준이다(그림 9-9).



〈그림 9-9〉 정보관련 고차 서비스 비중(2002년)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KOSIS

[표 9-3] 지방세 징수

지 역	1998년	2001년	2002년
광주광역시	2.6	2.2	2.1
전라북도	3.0	2.5	2.2
전라남도	2.8	2.6	2.4
서울특별시	28.8	29.8	29.9

자료 : 각 시도별 통계연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그 지역 주민이나 생산체에 부과징수하는 조세로 특별시와 광역시세, 도세, 시 · 군세, 구세가 포함된다. 재산 과세 가운데 특히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징수액을 보면 그 지역의 재정규모를 알 수 있다. 지방세 징수액은 1998년 현재 전국 총액이 17149712백만원으로 서울(28.8%, 4,944,434백만원), 경기도(20.5%, 3,520,301백만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0%대를 넘고, 기타 시 · 도는 10%이내의 비중을 차지한다(표 9-3).

광주의 비중은 2.6%이고, 전라북도가 3.0%, 전라남도의 비중은 2.8%로 인구 비중과 비교해 보면 특히 재정수입이 취약하다. 전라북도지역 내에서는 전주시의 부담액이 40.3%로 가장 많고, 이어서 군산과 익산이 10%대를 부담하고, 정읍이 크게 낮아져서 5.2%의 비율을 보인다. 기타 지역은 5% 미만으로 미흡하다. 전라남도는 목포, 순천, 여수, 광양이 10%대의 지방세를 부담했으며, 기타 지역은 5% 이하의 비율을 나타낸다. 전라북도는 전주시의 부담비율이 도 내 다른 시보다 월등히 높은데 반해, 전라남도는 광주광역시가 독립되어 있으므로 도 내 다른 도시의 비중은 큰 차이가 없다. 2002년에는 1998년에 비해 지방세 징수액이 45.7% 증가하는데, 서울과 경기도의 비중이 증가하고, 기타 시 · 도의 비중은 감소한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시 · 도간 비중의 순위에도 큰 변동이 없다. 호남지역의 경우도 지방세액은 증가하지만, 광주와 전라북도의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여 전국 시 · 도 순위도 각각 13위와 11위로 낮아진다. 전라남도의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8년에 비하면 낮아지지만, 상대적인 증가로 인해 1998년과 같은 10위 수준이다. 2002년의 경우도 호남지역의 지방세 징수액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인구 비중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호남지역 내에서도 전라북도의 경우는 1998년에 비해 전주의 지방세 부담비율이 낮아지고 대신 익산, 군산, 정읍의 비율이 증가한다.

기타 지역은 1998년과 마찬가지로 5%미만의 비율을 나타낸다. 전라남도 내 각 지역의 경우도 1998년과 비교하여 지방세 징수액은 증가하지만, 비율과 순위에 있어서는 큰 변동이 없다. 여수, 목포, 순천, 영암만이 전라남도 전체에 대한 비중이 증가한다. 기타 지역으로는 광양시가 9.8%로 5%이상이고, 나머지 지역은 5%미만으로 저조하다. 이상과 같이 호남지역의 재정원인 지방세를 전국과 비교해 보면, 면적과 인구 규모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지역 재정을 위한 생산 관련 기관의 유치 및 고부가가치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최종 소비지출을 보면 2000년 현재 호남 3개 시 · 도 지역 모두 교육, 기타 목적 부문에 대부분을 소비한다. 특히 광주는 교육 목적 소비 비율이 전라남도도 전라북도에 비해 높다. 이에 비해 전라북도의 경우는 사회복지 목적의 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정부의 목적별 최종 소비 지출을 보면, 2000년 현재 호남 3개 시 · 도 모두 교육,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목적 지출 순이다. 광주는 상대적으로 보건 비율이 높고,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농 · 림 · 어업 비중이 큰 지역인 만큼 농 · 림 · 어업 목적 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부각된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농 · 림 · 어업 목적보다 사회보장 및 복지 목적 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라남도는 특히 보건 목적 지출 비율이 매우 미약하다.

4) 주민의 생활환경 구조

(1) 주택

주택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요건인 의식주 중의 하나이다. 주택은 개인 소비의 고가 상품으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속되는 주택난에도 불구하고 산업 중심의 정책 우선으로 인해 주택문제가 계속 심화되어 왔다. 특히 주택 재고의 부족으로 주택 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주택의 수요 증가는 인구 증가는 물론 가구의 핵가족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주택상황을 보면 전국적으로도 1988년~1992년에 시행된 주택공급 200만호 계획이 성공하여 주택 수는 급증하는데, 유형별로는 1970년의 경우 단독주택이 95.3%, 다세대 및 연립주택

이 3.4%, 아파트는 0.8%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후 단독 주택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아파트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1980년의 7.0%에서 1985년에는 13.5%로 급증하고, 1990년에는 24%, 1995년에는 37.5%, 2000년 현재 절반 정도 수준에 이르는 47.7%로 급증한다. 이와 같은 아파트의 급증과 단독주택의 급감은 주택 재고 뿐 아니라, 새로이 공급되는 건설 주택의 비중에서 보다 확연히 나타난다. 2000년 현재 전국 433,488호 건설 주택 중에서 76.5%가 아파트, 13.1%가 다세대 주택, 8.0%가 단독주택, 2.4%의 연립주택 순이다. 신 주택 건설 비중은 서울에 22.4%나 집중되어 있다. 광주에 1.8%, 전라북도에 2.7%, 전라남도에 3.5%가 건설된다. 광주는 7,935호 건설 주택 중 아파트 건설 비율이 전국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88.8%이고, 단독주택 비율이 9.6%, 다세대 주택 비율이 1.6%로 전국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건설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단독 주택의 건설비율은 높고, 다세대주택 건설 비율은 낮다. 전라북도는 광주보다 많은 11,535호가 건설되는데, 아파트 건설 비율이 광주보다는 낮지만 전국 평균보다 높고, 단독주택 건설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높으며, 광주와 마찬가지로 다세대 주택의 건설비율이 낮다. 전라남도는 15,347호 건설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비율도 전국 수준보다 높다. 주택수, 가구 수와 관련 있는 주택 보급률은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의 79.5%에서 1985년에는 71.7%로 감소한다. 1988년부터 시행된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에 힘입어 1995년에는 86%, 2000년에는 96.2%로 급증한다. 2000년 현재 서울 · 대구 · 부산 등 대도시의 주택보급률은 90%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전라남도는 120% 이상의 최대 보급률을 보이고, 전라북도도 110%을 상회한다.

질적인 측면에서 주택 연건평별 자료를 보면, 2000년 현재 전국 평균의 경우 19평~29평의 주택 비율이 36.2%로 가장 높다. 이는 인구가 조밀한 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전라남도도 같은 순위로 19~29평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타 지역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다음으로 호남지역 중에서는 주택 연건평이 좁은 편이다. 광주와 전라북도의 경우도 19~29평 주택이 역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광주의 비율이 낮다. 방의 개수는 전국 평균 및 호남의 각 지역 모두 19~29평 주택, 14~19평 주택의 경우 방 4개 비율이 가장 높고, 9~14평 주택의 경우는 방 3개, 29~39평 주택은 방 5개의 비율이 높다.

(2) 교통

지역 경제, 주민 생활의 편리성이라는 측면에서 도로 상황을 보면, 1980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20년간 호남과 수도권의 경우 절대적 도로연장은 증가하지만 전국에 대한 비중이 감소한다(표 9-4). 그러나 수도권 중 인천과 경기도의 비중은 급증한다. 2000년 현재 전국 도로 총 연장은 88,775㎞이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전라북도의 도로연장(6,092.7㎞) 비중은 6.9%, 전라남도(8,200.5㎞)는 9.2%, 광주는 1,174.4㎞로 최하위 수준이다.

포장도로 규모로 보더라도 전라북도(4,317.5㎞)가 전국 포장도로의 6.4%, 전라남도(5,977.1㎞)가 8.9%(전국 16개 시·도 중 5위), 광주는 도로연장과 마찬가지로 최하위 수준이다. 도로 포장률은 전국 평균이 75.8%인데, 도로 연장이 짧은 대도시 광주의 경우 98.7%로 높지만,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 특히 전라북도는 도로연장도 짧고, 도로포장률도 낮으므로 도로연장은 긴 전라남도의 경우보다 주민 생활의 기반시설 측면에서 더욱 문제시 된다.

[표 9-4] 도로포장률의 변화

(단위: %)

지 역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광주	99.9	95.6	95.8	97.3	98.5	98.7
전라북도	67.0	65.7	66.6	68.0	69.0	70.9
전라남도	73.3	69.7	71.7	72.5	73.4	70.4
서울	85.4	87.3	87.5	87.6	87.7	89.4

자료 : 각 시도별 통계연감

(3) 상수도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47,977천 명 중 87.1%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표 9-5). 호남의 급수율은 광주 95.3%, 전라북도 74.4%, 전라남도 58.5%로 도시인 광주만이 전국 평균 이상의 급수율을 나타낸다. 특히 전라남도는 상수도 공급 수준이 급수율만이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저조한 실정이다. 시설용량을 보면 광주가 830(천t/일)으로 전국 26,980의 2.5%에 해당된

[표 9-5] 상수도 보급(2000년)

	총인구	급수인구	시설용량	급수량		1일1인당 급수량	급수율
	천명	천명	천톤/ 일	천톤/ 일	(%)	l	%
전 국	47,977	41,774	26,980	15,883	(100.0)	380	87.1
광주광역시	1,375	1,311	830	404	(2.5)	308	95.3
전라북도	2,007	1,494	1,182	727	(4.6)	487	74.4
전라남도	2,135	1,249	764	456	(2.9)	365	58.5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KOSIS

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각각 1,182, 764으로 각각 전국 총 시설 용량의 4.6%, 2.9%이다. 전라북도는 광주보다도 시설 용량이 크지만, 전라남도는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따라서 일인당 하루 급수양도 전국 평균이 380(t/일)인데 광주는 308으로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16개 시 · 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전라북도는 487으로 전국 1위 수준이고, 전라남도는 365으로, 전국 8위로 9개 도 중에서는 전라북도, 강원도에 이은 3위 수준이다. 2001년 말 현재 전라북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76.1%로써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나, 1일 1인당 급수양은 379 ℓ 로 전국 평균(361)에 비해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 상수도 보급률을 살펴보면 대도시에 비하여 촌락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전주시가 가장 높고,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은 20~40%의 수준으로 가뭄에 대비한 비상급수 등 대책이 요구된다. 2002년에는 전국적으로 급수인구, 시설용량, 급수양, 일인당 급수양이 증가한다. 호남지역도 전반적인 증가를 보이는데 광주의 경우는 시설용량은 변함이 없고, 총 급수양과 급수율의 증가는 있지만 대신 일인당 급수양은 오히려 감소하여 여전히 전국 16개 시 · 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전라북도는 시설 용량은 증가하지만, 총 급수양이 감소하고 급수율이 증가하였으므로 일인당 급수양이 감소하여 2000년의 전국 1위 수준에서 대구, 인천에 이은 3위 수준이다. 전라남도지역에서 상수도는 1907년 佐野라는 기사가 수도를 설계하면서 목포에서부터 시작된다. 처음에는 각국 조계지(租界地)로 한정되어 1일 1인당 83.5g씩 5,000명에게 공급하였다. 그 후 1917년에는 광주 상수도 공사를 착공하여 1920년 5월 광주 제1 수원지를 준공한다. 1930년에 목포에서 하수도 설치 공사를 하고 1933년에 목포 제5 수원지를 기공한다. 1962년에 목포시 상수도 공사를 시작하고, 1965년에는 석곡 수원지 터널을 준공하지만, 1967년에 석곡 수원지 고갈로 광주 계림동 등에 급수를 중

단한다. 특히 1968년 6월 25일에는 영산강 상류 고갈로 인해 전라남도지역은 식수난을 겪는다. 1979년에 광주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여수시 상수도 1단계사업, 목포 대동댐 수원지 확장공사를 실시한다. 1980년에는 나로도 상수도 확장공사를 착공하여 1981년에 완공하면서 상수도 공급량이 배 정도 증가된다. 1982년에는 동복 수원지 확장공사를 착공하여 1985년에 준공하게 되고, 1985년에는 주암 다목적댐 공사 착공으로 1990년부터 담수가 시작되고 1991년 준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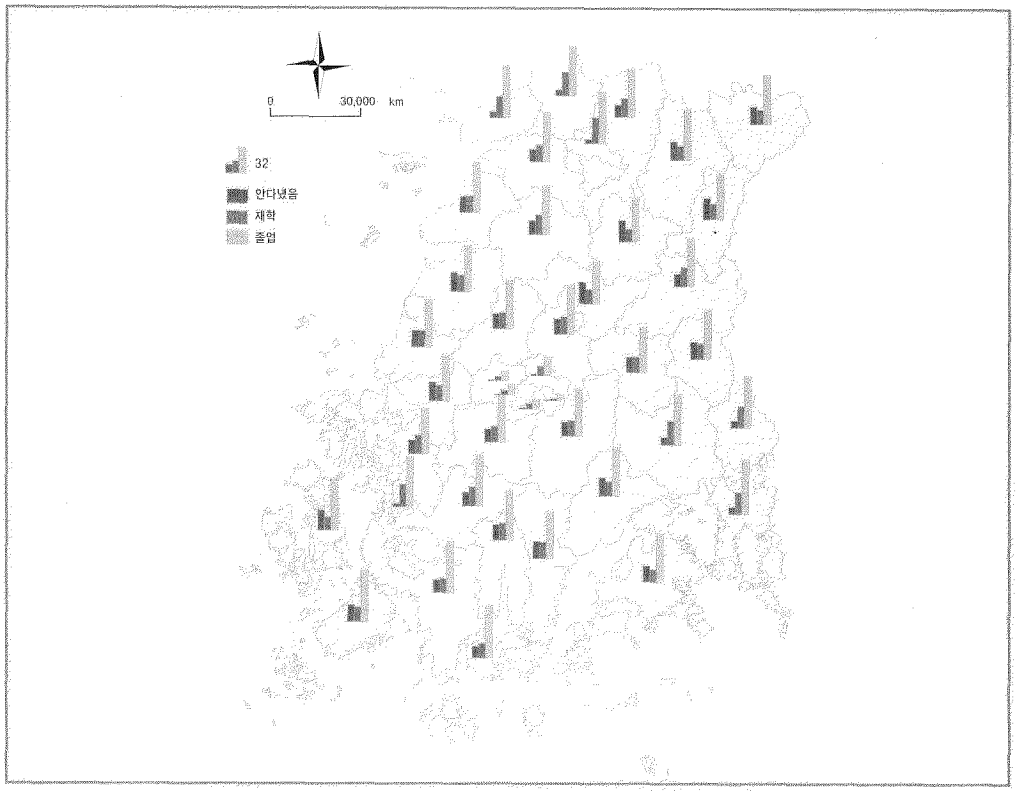
(4) 교육

주민의 교육 환경으로서 먼저 학교 및 취학 현황을 보기로 한다. 전체 인구에 대한 학생비율은 2003년 현재 전국 평균이 22.6%인데, 광주는 26.8%로 전국 16개 시 · 도 중에서 가장 높다. 전북은 23.8%로 9개 도 중 6위, 전남은 20.3%로 전국 16개 시 · 도 최하위이다. 만 명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이 632명인데, 광주는 876명으로 7대 도시 중 연구단지가 입지한 대전 다음으로 높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각각 762명과 489명으로 전국 9개 도 중 각각 5위와 7위로 낮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 취학률은 1994년의 98.3%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 현재 94.1%이다. 광주의 취학률은 85.2%로 전국 16개 시 · 도 중 최하위이고, 전라북도가 다음으로 낮은 85.5% 수준이다. 전라남도는 94.7%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학교별 2000년 현재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유치원의 경우는 전국 총 19,031개, 259,305학급에 11,923,964명이 재원하고 있어서, 유치원당 학생수는 64명, 학급당 학생수는 26.3명이다. 광주는 215개 유치원, 519 학급에 14,472명이 재원하고 있으므로 유치원당 68명, 학급당 27.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유치원의 양적 수준이 미흡한 편이다. 유년인구 비중이 낮은 전라북도는 530개 유치원, 1,050학급에 21,416명이 재원하고 있으므로 유치원당 40명, 학급당 20명으로 유치원의 양적 수준은 양호하다. 전라남도는 694개 유치원, 1,084학급에 24,704명이 재원하고 있어서 유치원 당 35.6명으로 전라북도보다는 유치원의 양적 수준은 양호하지만, 학급당 23명으로 전라북도보다 학급 수준이 다소 미흡하다. 이와 같이 유치원의 양적인 측면은 연소인구 비중이 낮은 촌락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양호하다. 초등학교는 2000년 현재 전국 5,267개, 112,437학급에 4,019,991명이 재학 중이므로 학교당 763명, 학급당 35.8명이 재학

하고 있다. 광주는 학교당 1,164명, 학급당 40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미흡한 수준이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학교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모두 전국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학생수 비율이 낮다. 전라남도의 경우 유치원에 비해 학교당, 학급당 학생수가 특히 적은 것은 1993년부터 광주시와의 진학 학군이 분리되면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광주시로 가족 전체가 이주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중학교는 2000년 현재 전국 2,731개교, 48,946학급에 1,860,539명이 재학 중이므로, 초등학교보다 학교당 학생수는 적지만 학급당 학생 수는 38명으로 많다. 광주는 학교당, 학급당 학생수가 모두 전국 평균 보다 많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상황은 초등학교와 큰 차이가 없이 학교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매우 적은 수준으로 촌락지역의 낮은 연소인구 현상을 그대로 나타낸다. 고등학교는 2000년 현재 전국 총 1,957학교, 48,544학급에 2,071,468명이 재학하고 있으므로 학교당 평균 1,059명, 학급당 43명이 재학 중이다. 광주는 학교당 1,185명, 학급당 43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서울의 학교당 1,624명, 학급당 45명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다. 광주와 비슷한 인구 규모의 대전은 학급당 학생수가 같지만 학교당 학생수는 1,302명으로 광주보다 학교의 규모가 크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학교당 학생수가 각각 716명, 661명으로 전국 평균의 67%와 62% 수준으로 학교당 학생수가 적다. 학급당 학생수도 전국 평균보다 적은 36명, 37명이다. 전문대학은 2000년 현재 전국 158개 학교에 913,273명이 재학 중이다. 광주에는 7개 전문학교에 전국 재학생의 4.6%인 41,572명이 재학 중이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는 각각 11개 전문대학에 전국 재학생의 각각 3.9%, 4.5%가 재학 중이다. 대학교는 전국 161개 중 광주에 7개, 전라북도에 8개, 전라남도에 10개 씩 소재하고 있다. 전국 재학생 1,665,398명 중 광주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비중은 전국의 4.1%, 전라북도의 재학생 비중은 5.9%, 전라남도의 재학생 비중은 2.8%이다. 전라북도의 높은 재학 비중은 수도권에 근접한 거리 관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국에 대한 인구비중과 비교해 볼 때 호남지역 중 광주는 전문대학 및 대학생의 비중이 매우 높고, 전라북도는 대학생의 비중이 특히 높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광주시와의 인접성 때문에 전문대학 이상의 재학생 비중이 낮다. 이와 같이 호남지역은 교육환경 수준이 다른 기능보다 양호한 편이다.

다음으로 지역 주민의 교육 정도를 알아보기로 한다(그림 9-10). 2000년 현재 6세 이상 전국 인구 42,168,811명 중에서, 10,887,484명이 재학 중인데 이는 취학 연령 인구의 24.8%에 해



〈그림 9-10〉 교육수준

당된다. 그 중 대학 이상 재학 인구가 7.0%나 된다. 졸업자는 62.1%로 대학 이상 졸업자는 16.7%, 무학자는 6.0%이다. 광주는 재학 인구가 30.5%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대학 이상 재학자도 10.2%로 높지만, 졸업자는 61.8%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하지만 대학 이상 졸업자가 20.8%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무학자도 4.9%로 교육 수준, 특히 고등교육 수준이 높다. 졸업자 비중이 낮은 것은 인구구조 상 재학생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학생과 졸업생 비중을 합계하면 92.3%로,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전라북도는 재학 인구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지만, 대학 이상 재학 인구는 전국 평균(7.0)보다 높다. 졸업자와 대학이상 졸업자는 전국 수준에 못 미치고, 무학자도 10.5%로 높은 수준이다. 전라남도의 경우는 총 재학생, 대학이상 재학생이 평균보다 낮다. 이는 연소연령층 비중이 낮은 전라남도의 인구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졸업자, 대학이상 졸업자도 평균보다 낮고, 이와 함께 무학자도

13.5%로 평균보다 현저히 높다. 이는 노년인구가 많은 인구 구조로도 그 요인 설명이 가능하다. 호남 지역 내에서의 다양성을 보면, 재학생 비율은 전주의 30.8%에서부터 시 지역 중 가장 낮은 김제의 21.5%, 그리고 최하위인 신안군의 14.4%까지 폭넓은 분포를 나타낸다. 졸업자의 비율은 완도의 63.3%, 광양, 군산, 여수, 해남 등이 60%대를 나타내고 순창이 52%로 가장 낮아 지역 간 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다. 무학자 비율이 낮은 그룹은 재학생 비중과 비슷한 지역 순위를 나타내어 전주, 목포 등 7 순위의 순천까지 10%이내의 낮은 비중을 보이고, 순창이 25.5%로 가장 높으며, 하위 5 순위인 김제(15.1)까지 10%대의 높은 비율을 보인다.

(5) 의료

의료기관의 분포를 보면 2000년 현재 총 42,082개소로 광주에는 전국의 2.8%,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는 각각 4.6%와 4.3%가 분포한다(표 9-6).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인구 비중에 비하면 전라북도만 다소 높고, 광주와 전라남도는 그 비중이 낮다.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 병상 수를 보면 전국 287,040개 중 광주 2.8%, 전라북도 4.9%, 전라남도 5.9%로 광주는 수적인 측면과 규모면에서 부족한 실정이다. 전라남도는 수적으로는 미진하지만, 규모면에서 양호하다. 의료기관을 구분해 보면, 병 · 의원의 경우, 전국 20,338개 병 · 의원 중, 광주에 3.2%, 전라북도에 4.3%, 전라남도에 3.6% 분포한다. 인구 비중과 비교해 보면, 전라남도만 낮고, 광주와 전라북도는 높다. 병상 수로 보면 광주가 열악하고 전라남도는 양호한데, 이는 전

[표 9-6] 의료기관별 병상 수(2000년)

지 역	총 병상수		병의원 병상수 합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 · 의원 합계		치과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한의 원	부속 의원
	개	%	개	%	개	개	개	개	%	개	개	개	개	개
전국	287,040	100	243,680	100	113,518	62,874	67,288	113	100	86	27	8,117	319	564
호남	38,953	13.6	30,295	12.4	13,507	8,638	8,150	34	30.1	34		1,383	124	29
광주광역시	7,971	2.8	6,991	2.9	3,726	1,371	1,894	10	8.8	10	-	460	102	4
전라북도	14,012	4.9	12,087	5.0	4,520	3,206	4,361	24	21.2	24	-	556	4	-
전라남도	16,970	5.9	11,217	4.6	5,261	4,061	1,895	-	-	-	-	367	18	8
수도권	115,831	40.4	103,241	42.4	51,697	19,497	32,047	67	59.3	40	27	3,480	93	300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KOSIS

라남도에 종합병원이 서울, 경기도, 부산 다음으로 많은 21개소나 분포하기 때문이다. 치과병 · 의원의 경우 전국 10,471개소 중 광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3.4%, 전라북도는 3.6%, 전라남도가 3.0%의 비중을 차지한다. 인구 비중과 비교해 보면, 광주는 치과 병 · 의원의 분포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그 비중이 낮다.

호남지역 내에서의 지역별 의료 수준을 보면 전라북도의 경우 전라북도 내 의료시설의 40.1%가 중심도시 전주에 집중되어 있다. 이어서 익산, 군산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기타 시 · 군 지역은 정읍을 제외하면 5% 미만이다. 병상수를 보더라도 전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36.2%이고, 다음으로 익산, 군산이 10%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남원, 완주, 김제, 정읍이 5%~10% 수준이다. 나머지 지역은 3% 이내의 비중을 보이는데, 그 중 1%이내의 비중이 많은 매우 열악한 의료 수준이다. 전라남도는 여수(16.5%), 목포, 순천이 1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뿐이고, 나주, 광양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은 5%미만으로 미진한 수준이다. 고흥군이 19.5%로 가장 높고, 목포, 순천, 여수 순으로 의료시설 분포와는 다른 순위 변동이 보인다. 이는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 1970년 대통령에 의해 설립된 국립 소록도 병원이 입지하기 때문이다. 반면 2003년 현재 유병률은 전국 평균이 20.8%인데, 전라남도는 25.1%로 전국 17개 시 · 도 중에서 충청남도 다음으로 높고, 2주간 평균 와병일수는 전국 평균이 0.8일인데 전라남도는 1.2일로 전국 17개 시 · 도 중에서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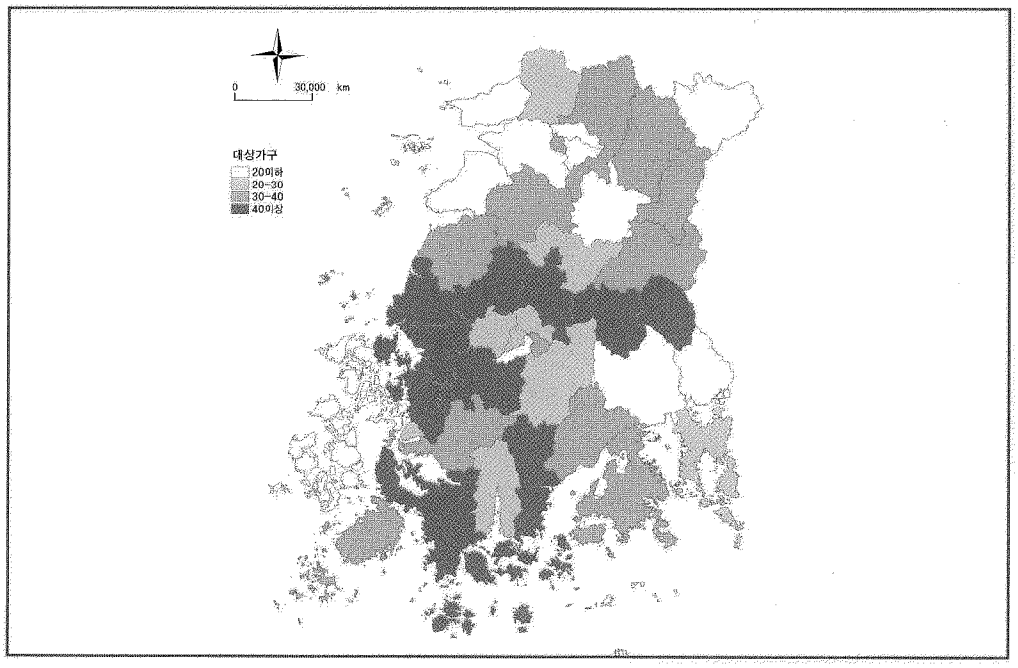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설문 조사 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 응답률은, 과거에 비해 보건의료 서비스가 변화 없다가 47.1%로 가장 높고, 좋아짐, 약간 좋아짐 순이다. 광주와 전라북도의 경우는 비중의 차이는 있어도 응답 순위는 전국과 큰 차이가 없고, 전라남도의 경우는 좋아짐이 47.7%로 가장 높고, 약간 좋아짐, 변화 없음 순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대도시 광주에 밀집되었던 보건의료시설이 최근에 전라남도로 분산 입지되면서 전라남도의 의료서비스가 양적, 질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전라남도 내에서도 도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촌락지역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6) 복지, 환경, 기타

의료 보호는 소득이 없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

재정에 의해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보호대상자의 비중은 지역의 저소득층에 관한 지표가 된다. 2000년 현재 광주가 시 인구의 3.3%, 전라북도가 광주 보다 다소 낮은 도 인구의 2.9%, 전라남도는 가장 높은 도 인구의 5.1%가 의료보호대상자 비율이다. 의료보호 대상 가구의 비율은 인구 비율보다 높아서 광주가 총 가구의 23.2%, 전라북도가 17.9%, 전라남도는 28.1%로, 특히 전라남도 주민의 생활수준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지역 내에서의 의료보호대상 가구 비율을 보면, 전라북도의 경우는 군산, 김제, 무주, 임실, 부안지역은 없고, 전주시가 17%, 그리고 나머지 9개 시·군 지역은 20~30% 수준이다. 전라남도는 순천시, 신안군이 의료보호 대상 가구가 없고, 광양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 지역은 20%대~50%대까지 다양하다. 역시 지역 내에서의 생활수준에서도 전라남도가 보다 열악하고 지역간의 편차도 크다(그림 9-11).

사회복지 시설은 무료양로원이 전국에 93개소 분포하는데, 그 중 15개소가 경기도, 다음으로 11개소가 전라북도에 분포한다. 전라남도에도 7개소나 분포하여 무료 양로원 수는 호남지역에의 분포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인구구조의 노령화수준에 비하면 매우 미진한 수준이다.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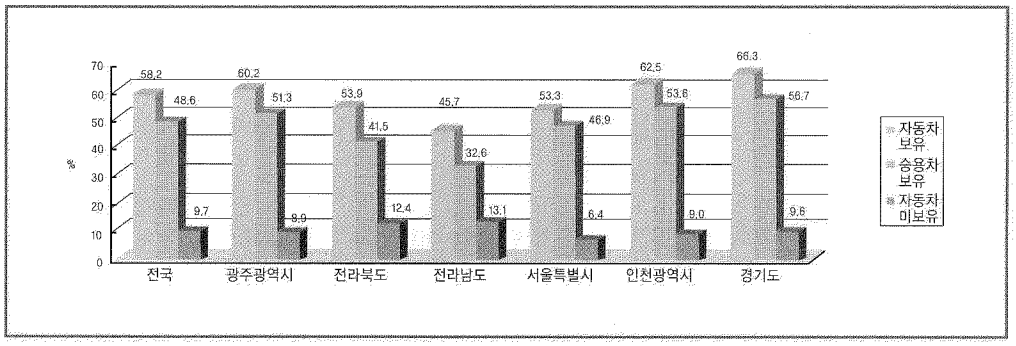
〈그림 9-11〉 의료보호대상 가구수

노인 요양소는 전국에 102개소 입지하고 있는데, 경기도, 경상북도에 이어, 전라남도와 서울(각 9개소), 전라북도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아동 양육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중 가장 많은 235개소가 분포하는데, 서울이 33개소로 가장 많고,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도 전국 수준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이 노년층 관련 복지시설은 전국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10세 이하 자녀의 양육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002년 현재 62.6%가 자녀의 부모가 양육하고 있다. 다음이 가족과 친인척, 학원, 보육시설 유치원, 집에 그대로, 파출부 기타 순이다. 자녀의 부모에 의한 양육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사회의 변화와 함께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문적인 보육시설의 일반화가 시급하다. 아동모자보호시설은 전국에 39개소만이 분포하는데, 전라북도에 4개소, 전라남도에 2개소가 분포한다. 최근 여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모자보호시설, 미혼모 보호시설, 보호지도소 같은 여성 복지 시설을 구분해 보면, 2000년 말 현재 광주의 경우 3개의 시설에 139명이 입주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는 10개 시설에 1년 간 309명이 입소하고 342명이 퇴소했으며 2000년 말 현재 360명이 이용 중이다. 전라남도는 4개의 시설에 2000년 말 현재 226명이 이용 중이다. 이는 시설 수 및 유형에 있어서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전국에 195개소 분포하는데,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각각 11개소(전국 대비 각각 5.6%)가 분포한다. 이상과 같이 사회 복지 시설은 호남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호남지역은 소득수준, 노년인구비 등을 고려해 볼 때 보다 복지에 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주민의 소득 정도에 관한 지표의 하나로서 자동차 보유 정도를 지표로 알아본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보유 가구 수는 8,334,133가구이다. 그 중 경기도의 비중이 21.2%, 서울의 비중이 19.7%이다. 광주의 비중은 3.0%로 6대 도시 중 5위이고,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비중은 각각 3.9%와 3.6%로 9개 도 중 5위와 6위에 해당된다. 이를 각 지역 가구 수에 대한 비율로 보면, 광주는 광주 총가구수의 60.2%, 전라북도는 53.9%로 절반이상의 가구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전라남도의 경우는 전라남도 총가구수의 절반에 못 미치는 45.7%로 전국 16개 시 · 군의 최하위 수준이다(그림 9-12). 자동차 중 승용차에 한해서 보면 승용차 보유 가구 비중도 경기도가 21.7%로 가장 크고, 다음이 서울로 20.8%이다. 광주는 자동차 보유 비중과 같은 3.0%이고,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각각 3.6%, 3.1%로 자동차 보유 비중 보다 낮



〈그림 9-12〉 자동차보유 가구수(2000년)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KOSIS

다. 이는 호남이 촌락 지역이므로 보다 소비적인 승용차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승용차 보유 상황을 각 지역별 가구 수에 대한 비율로 보면 광주가 51.3%로 7대 도시 중 5위이고,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41.5%와 32.6%(16위)로 16개 시 · 군 중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전라남도만이 30%대 비중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과 직결되는 자동차 보유 수준도 호남지역은 미진하다. 이는 노년인구층의 비중, 촌락적 산업활동과도 관계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주민은 문화 여가 생활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가구주 대상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2002년 현재 문화여가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70%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와 제주도의 경우가 향상되었다는 응답률이 82%로 가장 높다. 그 외에 대전, 경기도,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향상되었다는 응답률이 60%대인데 반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70%대로 긍정적인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기본적인 복지, 여가 시설이 불충분한 실정이므로 향후 지역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와 함께 복지 · 문화 측면에의 투자가 요구된다.

15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향후 증가되어야 할 공공시설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고 이어서 의료, 보육시설, 주차시설, 공원과 유원지, 문화회관, 쓰레기 소각시설, 도서관, 놀이터, 체육시설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전라남도와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시설, 의료보건시설, 보육시설, 공원과 유원지, 주차시설 순으로 응답하여 있어서, 전국 평균 응답률과 달리

주차시설보다는 공원과 유원지를 우선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특히 광주는 쓰레기 소각 시설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은데 반해 전라남도는 전국 16개 시 · 도 중 6위, 전라북도는 7위로 높은 관심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조사 결과는 지역정책 입안 시 우선 순위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쓰레기 수거는 호남지역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와 대행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총 수거 인원 및 장비에 관해 보면, 광주시의 쓰레기 수거 인원은 총 1,045명, 차량 231대, 손수레 337대로 광주시 인구와 대비해 보면, 수거 인원 1명당 담당 인구수가 1,294명, 차량 1대당 8,642 명, 손수레 1대당 5,924명의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쓰레기 수거 인원 1,153명, 차량 491대, 손수레 610대, 중장비 34대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다. 전라북도 인구수와 대비시켜 보면, 수거 인원 1명당 1,639명, 차량 1대당 3,850명, 손수레 1대당 3,099명, 중장비 1대당 55,608명의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고 있어서, 광주에 비해 수거 인원이 적은 대신 수거 장비 수준이 양호하다. 전라남도는 수거 인원 1,727명, 차량 440대, 손수레 738대, 중장비 27대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다. 인구구와 대비해 보면, 수거인원 1인당 1,156명, 차량 1대당 4,537명, 손수레 1대당 2,705명, 중장비 1대당 73,942명의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고 있다. 수거 인원과 손수레의 경우 광주와 전라남도보다 분담 인구수가 적고, 차량 당 분담 인구수는 광주보다는 적지만 전라북도보다는 많다.

환경오염 배출 시설 현황을 보면 광주가 1,292 개소, 전라북도가 4,442개소, 전라남도가 5,568 개소인데, 그 중 수질 오염 배출 시설이 각각 72.4%, 60.5%, 48.4%로 그 비율이 높다. 전라남도는 수질 오염 비중이 가장 낮은 대신 대기 오염 비중이 광주(24.1%, 311개소), 전라북도보다 크다. 지역 내의 상황을 보면, 전라북도의 전주, 익산이 20% 대로 오염 배출 시설이 많고, 전라남도의 경우는 여수, 순천에 오염 배출 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 호남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므로 이들 지역 뿐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도 오염에 대한 대비는 타 지역보다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지역문제와 지역정책

18세기 후반 이후의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경제적 지역문제 발생과 더불어 19세기 중반이후

에는 국가 발전을 위한 지역 개발이 등장하게 된다. 지역 문제는 크게 도시지역 문제와 도시지역에 대비되는 상대적 침체지역 문제, 도시의 생활공간과 생산 공간 문제, 도시 산업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또는 저 개발된 지역의 문제로 구분된다. 따라서 20세기의 계획 내지 지역개발의 연구대상은 낙후지역, 침체지역, 촌락지역의 문제이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자원개발, 물적 개발의 내용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나라마다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지역정책을 실시하고 방법론을 응용하는데, 1970년 후반이후에는 지역성을 중시한 자기 완결적 지역개발, 복지 균형, 기본수요 충족, 주민 참여를 통한 영역적 통합 즉 상향식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1) 지역문제

지역 문제는 지리적 환경, 경제적 환경, 제도적 환경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게 된다. 지리적 환경으로는 지형, 지세, 기후 및 자원으로서의 자연적 조건, 경제활동을 위한 중심지와의 원격성 등을 들 수 있다. 경제적 환경은 지역 경제를 위한 산업의 구조적 측면, 제도적 환경은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 고용기회와 관련되는 사회적 구조를 포함한다. 이러한 환경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지역 문제가 나타나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지역문제는 인구이동에 따른 과밀 · 과소, 생산 및 소득 격차, 생활환경의 수준 차이라는 지역 간 불균형성 특히 수도권으로의 집중에 따른 타 지역과의 불균형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성 완화를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경제적 집중의 억제정책들이 수행되었으나 여전히 지역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지역의 균형 발달은 한정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사회적 위화감에 따른 분열 방지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이고도 당면한 과제이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호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경제, 생활환경 측면에서 발달 정도가 미진하다. 이는 국토의 불균형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요인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으로서의 바람직한 지역정책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1) 지역문제의 요인

우리나라의 지역 발달은 지리적, 경제적 여건보다는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 하에 시행된 강력한 제도적 지원을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호남지역의 지리적, 경제적 여건은 상대적으로 지역 성장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어 경제, 생활환경 측면의 불균형 성장이 지속되면서 현재와 같은 지역 성장의 불균형이라는 지역문제가 야기된다. 호남지역의 불균형성 내지 지역 문제의 형성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대 이후 진행된 경제개발 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업 중심의 개발이 추진된 점이다. 광복 후 우리나라의 최우선 과제인 낙후된 경제의 재건을 위해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년~1966년)이 추진된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전략산업 중심의 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산업이 국토 전역에서 균형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특정의 전략산업 중심으로 발전한다. 특정 산업의 입지에 유리한 수도권과 동남권 중심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이 시작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1971년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국토개발로서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년~1981년)이 공포된다. 지역성을 고려한 공업의 적정 배치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대도시의 공업 분산과 중소도시의 공업 개발을 목표로 하여, 대규모 사업 위주의 권역별 개발계획이라는 거점 개발 방식을 채택한다. 계획, 관리, 집행을 위해 종합적인 토지이용규제인 토지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국토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남해안의 공업벨트, 경부선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 배치에 따라 사회간접자본과 인구, 산업의 지역적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년~1991년)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계획이다. 국토의 다핵화로 인구의 지방 정착 유도, 국토 개발 가능성의 확대와 국토환경의 보전, 복지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1982년에 제정되어 5개 수도권역이 지정되는 한편, 수도권에 대응되는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등 지역 경제권을 설정하고 소규모 공업단지 정책을 채택하여 개발 가능성을 극대화 시킨다. 1987년의 수정계획으로 성장거점과 생활권 구상이 지역생활권으로 통합되어 국토 전체를 다핵구조의 합리적 정주체계로 개편한다. 그러나 이 역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투자되고, 호남 같은 낙후지역 개발은 미흡하여 국토이용의 불균형 해소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년~2001년)은 지방 분산에 의한 국토 공간의 균형성, 국토 이용의 효율성, 통일 대비를 목표로 하고, 지방도시 · 농어촌의 육성, 남북교류지역의 개발 및 관리 전략을 채택한다. 이와 같이 1차 계획 기간 중에 중점을 둔 대규모 공업화 정책으로 지역 불균형이 초래되면서 제2차 계획부터는 국토의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둔다. 1983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1993년의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도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간, 도농간 불균형성은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2000년에 최종 확정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도 여전히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기존의 계획 및 개발이 하부구조 중심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문화적인 속성을 고려한 질적 향상, 남북통일에 대비한 기반 조성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공업과 개발 일변도의 정책 과정에서 농업 중심의 호남지역은 개발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그에 따른 생산연령층의 사회적 이동에 따라 인구 감소와 노령화, 사회적 기반시설 및 서비스시설의 미진이라는 지역문제로 이어진다.

둘째,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영역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발전되어 온 점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거의 모든 영역이 집중되면서 집중된 인구와 기능은 서울 인근의 경기, 인천 중심의 수도권으로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서울과의 원격성, 특히 공업에서 제외된 촌락지역은 수도권 · 공업지역과는 심각한 성장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수도권과의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내에서의 공장입지 제한, 일부 행정기능의 대전으로의 이전 등 기능의 분산정책이 시행되었으나, 다양한 영역의 수도권 집중은 보다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행정 수도 이전이라는 강력한 분산정책도 제안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방 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역 내 낙후지역이 도외시 되고 있으므로 더욱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

(2) 지역문제

앞에서 분석한 지역 구조를 기반으로 보면, 호남지역은 수도권과의 불균형, 호남지역 내에서의 도시, 촌락으로 대비되는 불균형 등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인구 규모, 인구 증가율에서의 불균형성 문제이다. 낙후된 경제개발을 위해 추진된 우

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는 제도적인 요인으로 인해, 호남의 지리적인 입지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게 된다. 농업에 유리한 호남지역은 우리나라 경제가 급성장한 1960년대 이후의 공업화정책 환경 하에서 공업입지, 기간산업의 투자 중심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제된다. 그 결과 공업 중심지역, 수도권과의 심화된 불균형성은 경제적 낙후성 외에 장래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내재하게 된다. 지역 성장의 기본인 인구 측면의 구조적 문제이다.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1970년의 28.3%에서 2000년에는 46.3%로 인구 집중이 심화되는 반면, 호남의 인구 비중은 1970년의 20.4%에서 2000년에는 11.3%로 하락한다. 호남지역 내에서도 2000년 현재 도시지역(읍부와 동부)에의 인구집중도가 76%나 된다. 호남지역 중, 전라북도는 도시에의 인구 집중이 보다 커서 읍 이상 거주자가 74.2%, 시 거주자가 81.4%나 된다. 전라남도도 61.5%가 읍 이상의 도시 거주자이고, 시 거주자는 52.7%이다. 이는 전라남도의 경우 중심도시 광주시가 행정구역상 분리되어 있는 반면, 전라북도의 경우는 행정상 분리되지 않은 전주시의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인구규모의 변화는 인구증가율의 변화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전국적으로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지만, 특히 전라남도는 수도권 및 대도시지역의 증가율이 크게 나타나던 1980년에도 -증가율을 나타내고 2000년 현재도 -0.7%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인구가 이와 같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노년인구 비중은 수도권이 3%대인데 반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10%가 넘는다. 이와 함께 인구부양비가 수도권이 40%정도인데 반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45%가 넘는다. 노년부양비는 수도권이 7~8%이고,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15%이상이나 된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양적, 질적 불균형성은 생산과 장래 성장에 있어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된다.

둘째, 소득 및 생산 측면에서의 불균형성 문제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의 양적 집중과 함께 질적 집중은 경제적 생산의 우위를 야기 시키고 있다. 1985년 이후 지역별 GRDP는 서울의 경우 1985년의 23.9%에서 1990년 25%, 1995년 22.7%, 1999년 20.7%로 다소 둔화되지만, 이는 인천, 경기도로의 영역 확대에 의한 것이지 원격 지역으로의 분산이 아니다. 인천은 1985년의 4.2%, 1995년의 4.8%까지 다소 증가 하나 1999년에 4.4%로 비중의 증가가 주춤한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는 1985년의 12.2%에서 1990년 14.2%, 1995년 16.3%, 1999년의 19.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라북도는 1985년의 4.5%에서 1990년 급감하여 3.6%, 1995년과 1999년에는 각각 3.5%, 3.2%로 완만히 감소하고 있다. 광주 및 전라남도는

1985년의 7.1%에서 1995년에 7.4%까지 완만히 증가하였으나, 1999년에는 7.0%로 그 비중이 크게 낮아진다. 이는 호남지역이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할만한 주요 경제 산업이 취약한 탓이다. GRDP의 비중은 제조업과 인구 비중이 큰 지역이 높게 나타나므로 지역 전체의 경제 구조보다는 단편적인 측면이 강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 산업 취업자수를 통해 전반적인 경제 구조를 보면, 수도권의 취업자 비중은 1990년에 42.9%에서 2000년에 46.2%로 증가하는데, 그 중 경기도는 14.4%에서 19.4%로 급상승한다. 2000년 현재 전라남도는 농림어업 비중이 크므로 전국 평균 보다는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데, 전라북도와 광주는 전국 평균보다도 낮다. 특히 광주는 전국 16개 시 · 도 중에서 최하위이다. 지역 내 생산 비중을 보면, 2000년 현재 수도권에 48.5%나 집중되어 있고, 호남은 10.3%에 불과하다. 도 · 소매업 비중은 2002년 현재 수도권의 경우, 사업체수 비중이 45.0%, 종사자수 비중이 50.5%, 매출액 비중이 64.4%나 된다. 이에 반해 호남의 경우는 각각 11.5%, 9.9%, 6.9%로 수도권과는 대조적으로 특히 매출액 비중이 매우 미흡하다. 숙박 및 음식업의 매출액 비중도 2002년 현재 수도권이 51.5%, 호남이 8.9%로 도 · 소매업 비중보다는 집중도가 덜하지만, 절반 이상의 매출액을 나타낸다. 정보 관련 고차서비스의 비중은 특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2002년 현재 정보관련 서비스 사업체의 74.4%, 종사자수의 87.2%가 수도권에 분포하는데, 특히 서울에 집중 분포하여 각각 67.5%, 81.1%나 된다. 호남의 경우는 사업체 비중이 4.1%, 종사자 비중이 1.7%로 고차 서비스 영역의 영세성내지는 낙후성을 잘 보여준다. 수도권은 면적 비중이 고작 11.8%인데 전 국토 경제 기능의 절반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더욱이 서울, 인천 중심에서 신도시 건설 등의 여파로 인근 경기지역으로의 인구, 경제의 확산이 두드러진다. 재정 자립도를 보더라도 1992년의 경우 서울이 99.0%, 인천이 94.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광주는 74.1%로 6대 도시 5위 수준으로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한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50.0%, 44.4%로 전국 15개 시 · 도 중 12위와 14위이다. 1992년 이후 재정 자립도는 낮아져서 1999년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평균이 63.8%인데, 7대 도시와 경기도만이 전국 평균 이상이고, 8개 도는 모두 전국 평균치를 하회한다. 서울, 인천의 비중이 다소 완화되지만, 경기도의 비중이 확산되었을 뿐, 8개 도는 40~50%대로 낮아져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는 더욱 심화된다. 특히 광주는 대도시이지만 주변 촌락의 중심도시, 수도권과의 원격성이라는 특성상 69.5%로 7대 도시의 최하위 수준이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경우는 각각 42.0%와 41.4%로 전국 16개 시 · 도

중 14위와 최하위로 1992년보다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아진다. 이와 같이 호남지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대적인 낙후지역임을 알 수 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분포 역시 농업 중심의 호남에서 높게 나타나 아직도 인구 1,000명당 생활보호대상자가 50명을 넘는데, 특히 전라남도의 비중이 현저히 크다.

셋째, 사회적 측면의 불균형성 문제이다. 인구, 경제의 수도권 집중과 함께 그에 수반되는 생활환경으로서의 사회적 기반시설의 불균형성도 야기된다. 먼저 도로 연장 및 도로 포장율의 불균형성 문제이다. 산업의 근간이 되는 도로 연장의 비중 변화를 보면 수도권에의 비중은 1980년의 22.9%에서 1990년 에는 25.7%로 증가하지만, 2000년에는 24.4%로 둔화된다. 호남의 비중은 1980년의 19.5%에서, 1990년에는 17.9%, 그리고 2000년에는 17.4%로 계속 그 비중이 떨어지지만, 타 기능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다. 도로의 질적인 측면인 도로포장율을 보면 2000년 현재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포장율은 100%에 가깝지만, 시 · 군도로의 포장율은 40%대로 매우 낮다. 총 도로포장율을 보면 1995년의 경우 수도권 중에서는 인천의 포장율이 미흡하지만 서울, 경기도는 85%가 넘는다. 호남은 광주가 100에 가까운데 반해 촌락지역은 60~70%대이다. 2000년의 경우도 큰 변화는 없는데, 전라남도는 오히려 포장율이 낮아진다.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관이 2000년 현재 수도권에 절반 가까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호남에는 11.8%만이 분포하여 인구 10,000명당 의료기관 수도 심한 불균형성을 나타낸다. 특히 광주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 2000년 현재 병상 수의 비중은 수도권이 40.4%, 호남이 13.6%로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수도권 집중도가 낮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호남지역은 우리나라의 경제 내지 지역 발전 과정에서 야기된 수도권의 경제, 사회, 문화적 기능의 과다한 집중으로 상대적으로 열등한 불평등성을 경제적, 구조적으로 안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간 심화된 불평등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중심의 계획, 개발 정책과 함께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지원이 전제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변화, 지역 잠재력을 제고한 지역 내부에서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다음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역정책에 관해 고찰하기로 한다.

2) 지속가능한 지역정책

급격한 경제 성장을 경험한 세계 모든 지역은 발전과 함께 다양한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도시 성장에 따른 과밀 · 혼잡 · 공해 문제, 지방자치제의 확대에 따른 행정상의 문제, 모든 지역이 균등하게 성장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정체, 침체 내지 낙후성이라는 문제 등을 지닌 문제지역이 등장하게 된다. 특히 도시화에서 제외된 촌락지역의 경우는 상대적 쇠퇴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지역은 국토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되므로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신속한 대응 및 바람직한 발전 전략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계획 이후 지역 문제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인 안이 마련되고 있다.

호남권의 지역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심화된 수도권과 타 지역과의 불균형 문제가 근저에 있으므로 지역 외적 해결 방안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지역의 불균형 발전은 지역 격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소득과 고용이라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영향력 · 환경이라는 사회적 측면, 지역 전통 문화라는 문화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지역 정책도 단순한 경제적 측면만이 아닌 다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서해안 시대라는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되는 지역, 편의 시설의 최소 요구치를 만족시킬 만한 인구조차 확보 되지 않아 비효율적 투자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하부시설에 대한 투자도 어려운 지역, 새로운 사회로의 적응 전략에 중점을 두어야 할 지역 등 지역 구조에 따른 차별화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본적으로는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생태적 발전 전략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000년 1월 18일 최종 확정 공고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개발 중심의 기존 계획에서 탈피하여 통합과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목표와 전략은 도시-촌락 통합계획, 친환경적 국토 계획, 개방을 고려한 연안 축의 개발, 고속 교통 정보, 문화 관광, 지방광역권, 산업별 수도, 기업 분산, 지자체 간 협력을 주요 골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호남지역의 발전 전략도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본 틀 안에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지향하는 호남 지역의 개발 목표는 첫째, 광 산업이 특화된 첨단 과학 도시로의 발전 둘째, 남도 고유의 문화, 예술, 관광 자원의 특화 셋째, 서남권 중심도시로서 중국과의 교류를 위한 내륙 지원 기능의 강화 넷째,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녹색환경 도시기반 구축이다. 한편 2002년 2월 제정된 국토기본법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 계획 · 후 개발 원칙, 자연 생태자원

과 경관 등 자연 환경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고려한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토지 적성 평가에 기초한 토지이용이라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국토 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지역 계획, 부문별 계획의 경우도 지속가능한.국토 발전을 위한 자원 및 환경의 개발과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1984년부터 정부 주도 하에 촌락개발 전략으로 추진된 관광농원, 주말농원, 휴양단지, 농촌 민박마을도 촌락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생태적 개발을 근간으로 하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촌락의 위기, 주 5일 근무제의 도입과 함께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농업 시범 마을 조성, 환경 농업 지구 조성 사업, 친환경농업 직불제, 2001년부터 농림부 주관 하에 시행되고 있는 그린 투어리즘, 환경부의 자연생태 우수마을, 복원 우수 사례 선정 사업, 정주지 개발 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산촌 개발 사업, 행정자치부의 오지 개발사업 등 다양한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또한 실천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이 성공적인 지역 정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중앙 및 지방 행정가들이 의사결정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governance 접근방법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근간을 두고 지역계획으로서의 광역권 개발계획 · 특정지역개발계획, 도 종합계획으로서의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 전라남도 제3차 종합계획을 종합 고찰하여 호남지역의 바람직한 지역정책에 관해 제안하고자 한다.

(1) 지역정책의 기반

합리적인 개발방안의 고안을 위해, 호남지역의 개발 잠재력과 관련 있는 계획 내지 개발의 역사적 과정, 개발 환경으로서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생산지향 개발 방식에 의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년~1981년)에서는 계획지역 개념을 도입하여 4대강 유역권(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8중권(수도권, 태백권, 충청권, 전주권, 대구권, 부산권, 광주권, 제주권) 17소권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기본적으로 경인 · 경부 · 호남 · 남해 · 영동 고속도로 등의 건설로 산업 · 생활의 연계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영산강유역종합개발에 의해 영산강하구언, 장성댐, 담양댐, 대초댐 및 별도로 섬진강유역의 동복

댐 건설이 추진되어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하여 생산 · 소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생산 면에서는 영산강유역 및 해안평야는 농업생산 기반을 확충하여 식량기지, 여수 · 광양, 군산, 광주는 공업생산의 터전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그러나 자원 및 식량 생산, 환경 등의 문제점이 대두된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생활개발을 지향하기 위해 생활권, 성장거점도시 방식을 도입하여 5개 대도시 생활권, 17개 지방도시생활권, 6개 농촌도시생활권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그 후 4대 지역경제권, 4대 특정지역으로 광역개발방식의 수정 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호남이 포함되는 서남권의 계획안이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끝나는 해에 마무리 되어 실효성이 없게 끝난다. 계획의 특징은 전라북도는 전주 · 이리 · 군산이 중부권으로, 순창 · 정읍 · 고창이 서남권에 분리되어 포함된다. 서해안 전진기지로서의 서남권이 설정되고, 광주권 지역개발사업은 별도로 계속 추진이 된다. 또한 주암댐이 건설되고, 영산강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지구가 설정된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년~2001년)에서는 균형개발과 낙후지역중점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9개 권역, 5대 광역도시권, 신산업지대 계획을 추진한다. 광주-나주권, 광양-여수-순천권, 목포-진도-해남권으로 구분되고, 주요 사업으로는 여수-여천-순천-광양 연담도시권, 광주 · 목포 · 광양만, 군산의 신산업지대 설정으로 대불 · 광양 중심의 교역 거점, 광주 첨단 · 대불 · 영암 · 율촌 · 여천의 기술집약형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종합적인 국토계획 이전부터 시행된 특정지역계획에서는 영산강 · 다도해 · 88올림픽고속국도주변지역이 계획에 포함된다.

지역개발은 광주권 지역개발 외에 서남권이 설정되고, 특히 서해안개발계획이 1988년의 서해안 개발추진위원회의 발족과 함께 추진된다. 산업기지로서 군장 광역산업기지, 대불산업기지가 개발되고, 내륙공업단지로서 전주-이리-군산-정주 공업벨트. 광주 하남공단-목포 축, 전주 · 광주 첨단산업단지가 생산부문을 담당하게 된다. 배후 지원도시로서의 전주-이리-군산, 광주-나주-목포 가 설정되고, 관광 · 문화 · 오락 관련 지역개발이 추진된다. 이와 같이 호남지역의 개발은 산업 영역의 경우는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1970년대에 광주 · 전주 · 이리 · 군산 · 순천 · 나주에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1980년대에는 광주의 하남 · 소촌 · 전주 · 대불 · 군장 공단이 개발된다. 1990년대에는 광주 · 군산 · 장항 · 목포 · 광양만 개발이 이루어진다.

도시 영역의 경우는 광주 · 전주 · 정주 · 남원 · 순천 · 목포가 생활권의 중심으로 개발된다. 문화 · 관광 · 휴양 영역의 경우는 다도해 · 백제 및 마한 문화권이 설정된다.

지역정책 고안의 배경으로서 호남지역 현황을 자연적 환경, 인문 ·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자연적 환경은 공간 측면에서 보면 간석지, 대륙붕, 다수의 섬, 얕은 수심, 복잡한 해안선 등 해양 관광적인 요소를 다양하게 지니고 있다. 시간 측면에서 보면, 최근의 세계화 · 지방화라는 변화에 맞추어 지역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동북아 교류 및 환태평양 진출의 요충지이다. 인문 · 사회적 환경 중, 외부 환경은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와 직접 영향을 주고받는 세계화시대로 변화되고, 그 가운데 동북아지역이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되고 있다. 세계화가 진행되는 한편, 지방화를 통해 각 지역이 세계 속에서 직접 경쟁하는 지방자치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지식정보화라는 기술적인 측면의 진보와 관계가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개발 위주의 지역 성장을 도모한 결과,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 지역간 갈등 문제가 대두되면서 안정 성장 내지 지속적인 성장이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내부 환경은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동남부 도시 중심의 공업 일변도 불균형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 경제적 낙후지역 특히 산업 인프라, 생활환경 기반이 미진한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인구구조 측면에서는 절대적 인구 감소, 생산연령층 인구의 감소,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경제구조 측면에서는 영세한 단순 경영 일변도의 농 · 수산업 중심 사회이다.

1960년대 이후 다양한 국토 및 지역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요인은 종합적 계획과 집행의 미진, 실효성 있는 지방 육성 시책의 부재,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개발, 세계 지향적인 관점이 부족한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호남지역의 계획 내지 개발의 과정과 현황, 장래 비전으로 볼 때, 호남지역의 지역개발정책은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호남지역의 내부적인 잠재력의 안정적 개발과 국제교역 개발 측면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 지역의 균형 발전, 경쟁력 강화, 지역 잠재력을 고려할 때 산업 및 기간교통 개발, 친환경 · 고부가 생산의 농 · 어촌 개발, 역사 · 문화 · 해양 중심의 관광 개발, 편익 위주의 정주생활권 개발로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하여 개발함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이러한 개발방향,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도 종합개발계획에 기초하여 지역별 개발 방안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2) 지역정책

첨단지식기반 산업의 육성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동남권 지역에 집중된 산업과 인구로 인해 개발의 한계성을 드러내며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는 한편, 서남권을 비롯한 저개발 지역에서는 지속된 침체 현상으로 국토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상대적 저개발지인 서남권에 대한 투자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지역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소재 대학의「지역기업 종합지원 센터」등을 활용하는 한편, 첨단과학산업단지를 활성화하여 첨단과학기술 관련 연구에 힘써야 한다.

광주는 서남권의 중심도시로서 기본적으로는 생산을 기반으로 한 관리 · 서비스의 실질적인 중추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생산을 위한 전략으로는 기존 산업의 구조개편, 기존 산업과의 연관성 및 입지 조건을 고려한 친환경 · 고부가가치의 미래지향적인 첨단지식기반 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효율적이고도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의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산 · 학 · 연 · 관의 공동 체제를 구축하여 기술, 경영 및 정보가 체계적으로 즉각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의 기능 활성화와 테크노파크의 조성을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기술 개발,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해야 한다. 광주의 기존 산업 중 일반기계나 수송기기는 지역 전체 수출량에 대한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산업들을 육성하는 한편, 정보통신, 전자, 생명공학, 의료기기, 신소재, 광학산업 등의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특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기업은 업종 전문화와 계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정착화 하고, 중소기업은 개성적인 제품의 생산에 관한 특화, 중소기업 간의 협업화와 공동화를 통해 경영의 합리화를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의 품질, 포장, 용기, 디자인 등의 차별성 부각까지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및 투자 환경의 확충, 제도적인 지원,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시민의 벤처마인드 배양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의 질적 향상을 병행해야 한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텔레포트 조성, 진입로, 교량, 하수처리시설, 용수시설 등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산업 관련 중앙 관서의 지역 유치 및 기능 강

화, 지역 연고가 있는 전국 규모의 기업체 본사를 지역 내에 유치한다. 그고 상공회의소, KOTRA, 무역협회 등 산업 관련 지원단체와의 직접적인 네트워크 구성으로 정보의 집적화를 꾀하여 지역의 산업 중추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주체들이 행정서비스와 정보원에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리고 외부 기업유치 시 문제시 되는 대기업의 수도권 입주 선호, 최근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 수도권의 아파트형 공장 건설 등 외부적인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금융기관의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투자와 융자 확대,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지역특화산업체에 대한 조세상의 우대 조치가 필요하다.

서남권 생산 · 물류 · 교통의 결절

서남경제권으로서의 호남은 세계화 · 개방화에 따른 국가간 경제 교류의 확대와 함께 일본 · 중국 경제권과의 유리한 접근성을 지역 개발 전략으로 십분 활용할 수 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큰 틀인 국제적 생산 및 교역의 거점으로서의 특성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산 거점의 개발 및 국제적 수송체계의 구축, 국내 타 지역과의 광역 교통체계 구축, 지역 내 파급효과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해야 한다. 생산 거점의 개발 및 국제적 수송체계 전략으로는 석유화학 · 전자 · 전기 · 기계 · 자동차 중심의 군산 · 장항 국가산업단지의 개발, 중국 · 일본 · 동남아지역과의 국제무역에 대비한 자유무역지역과 배후 물류기지의 확보, 군산항 · 광양항 · 목포항의 확충 및 연결 도로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내 타 지역과의 광역 교통체계, 지역 내 파급효과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 전략은 국가 장기개발축인 환황해축과 남부 내륙축의 핵심지역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과의 접근성 증대를 위한 고속철도 · 초고속통신망과 같은 교통 · 통신의 기반 확충, 광주공항 · 군산공항, 무안국제공항 등과의 연결 고속도로망의 정비, 그리고 새만금간척지 개발 전략 내지 지역 특화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참고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새만금간척지의 개발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과거의 간척지 개발 방안과는 차별화 된 첨단산업단지, 종합물류 거점, 생태적 관광지, 국제업무단지, 첨단 영농 중심의 전원지구 등의 조성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인적 수송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반으로 하는 고급화된 항공 · 고속전철 등 초고속 교통수단

의 개발과 함께 경전철, 전기자동차, 자전거 등 그린 수송수단을 위한 기반시설 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고부가 · 친환경 · 과학 농업의 특성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영농 기술, 경영과 유통 구조가 향상되고, 소득 증대와 함께 소비자의 기호 변화로 주곡과 일부 과일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호남지역은 우리나라 최대 식량산지로서 미곡 중심의 저부가가치형 영농구조를 고수하고 있어서 주민 소득이 낮다. 이는 60세 이상의 노년인구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과학적, 기업적 영농이 어렵고, 영농 후계자 양성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품종 개량 · 유기농법 · 제품의 특화 등 농산물의 고품질화에 힘써서 고부가가치 산업화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대학의 특성화, 육종단지 · 종축단지의 건설과 이들 지원 조직체와 농민과의 상설 연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보유한 만큼 어업 인구 비중도 높으므로 종묘 배양장 · 수산업 관련 연구소 · 지역 대학과의 연계로 수산물에 대한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 축산물의 경우도 청정 사료의 공급과 체계화 된 위생 유통을 기반으로 수입 개방에 대처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농수산물의 생산력 향상과 함께 고 품질의 청정 농축수산물이라는 지역 이미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 · 홍보 · 마케팅에도 힘써야 한다. 생산물의 인증제도를 통한 신뢰성 제고, 처리 · 저장 · 가공 · 유통 시설의 확보와 체계적 운영, 회원제와 해외시장 같은 안정적인 시장 확보, 농 · 축 · 수산물 관련 정보망 구축을 통한 적시 출하와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화, 포장, 디자인까지 특화된 상품의 브랜드화, 체험장을 겸한 관광 상품화 등은 농 · 어촌 개발을 통한 지역개발의 하나의 사례이다.

한편 도시 주변지역은 근교농업으로의 특성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신흥 주택단지 · 대규모 공단의 조성에 따른 경지면적의 감소, 농업환경의 오염, 노동력의 노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임차 및 휴경 농경지의 증가 등 농산물의 공급 측면이 변화되고 있다. 수요 측면을 보더라도 저공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증대, 수입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심화 등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채류 · 화훼 · 차 등 고 품질의 지역특화 작물의 육성과 생산 판매, 관광농업의 활성화 등 고도화, 다변화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 수익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문화 · 역사 중심의 관광산업 육성

성장 일변도의 지역 개발에 따른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최근에는 개발의 중점이 자연과 환경을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수려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호남지역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개발 여건을 지닌 지역으로 평가된다. 특히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문화가 산업의 주요 주제로 부각 되면서, 독자적인 문화유산과 전통을 지닌 호남지역은 문화 컨텐츠 산업 전략에 유리하다. 차세대 유망산업으로서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예술 · 문화 시설의 정비와 확충, 향토 전통 문화의 발굴과 계승 발전, 경연 및 국제 이벤트 등 예술 · 문화 활동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예술 · 문화 교육기관의 확충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물적, 인적 측면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일제 치하에서의 활발한 의병 활동지, 광주학생운동, 5 · 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계승할 수 있는 정신적 승화 및 문화 자원화가 필요하다. 그 외에 백제 역사 공간의 확보,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매력 있는 문화예술지구의 조성, 해양 휴양자원, 청정 산지자원의 활용 등 문화 · 자연 · 관광의 연계 개발, 네트워크화 등을 통해 풍부한 지역 잠재력을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킨다.

쾌적한 생활환경

지역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전제로 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물리 · 사회적 환경, 교육 · 문화 · 의료 등 종합적인 복지 향상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자연과 문화가 조화된 쾌적한 주거 환경, 지역 복지서비스, 인적 자원의 교육 등 생활 전반에 관련된 기반 정비를 통해 지역 내 젊은 층의 전출을 억제하고 지역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 부여, 편리한 교통 · 통신시설의 확보, 공원 · 녹지의 체계적 입지에 기초한 환경친화적 녹색환경의 도시체계 구축, 전통과 미래 지향적인 시설의 조화, 다양한 주거 형태를 자연 · 전통과 조화시킨 환경친화적 주거 공간의 조성 등으로 물적, 미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편리한 시민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복지 측면에서는 사회복지 기능의 강화로 복지 공동체를 구현해야 한다. 생활수준, 시민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주민들은 보다 상위의 욕구 충족을 희망하게 되고, 지방자치제의 정착으로

개발 행정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 정부는 행정기능의 능률화 · 합리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적정 배분이라는 실천적 측면 뿐 아니라, 행정의 개방과 공개 및 주민의 참여 기회 확대로 지역 행정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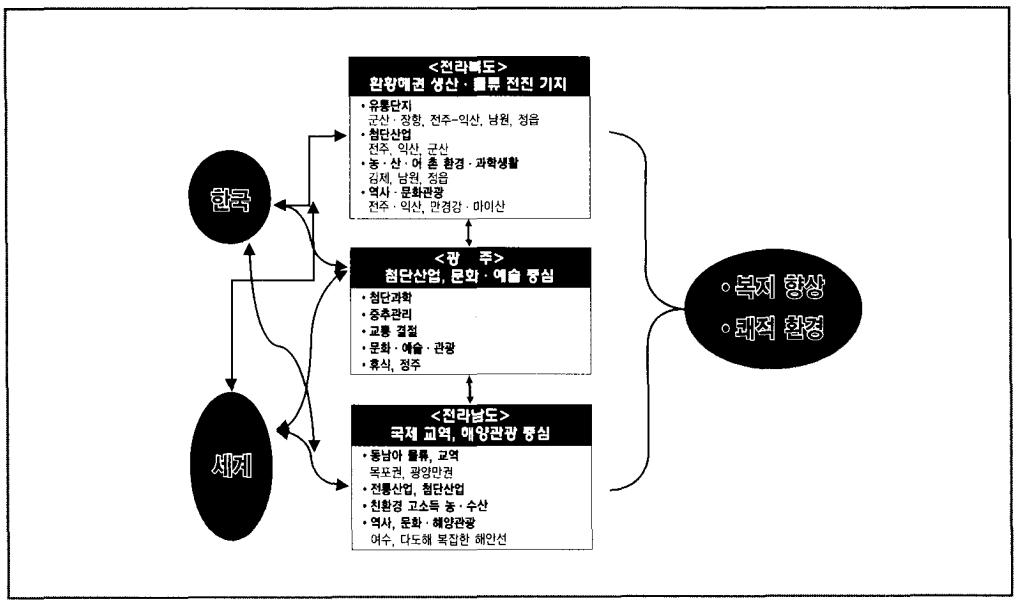
획일적인 모더니즘 사회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주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과거에 도외시 되었던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과 함께 다양한 측면의 여성 복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저 소득층 지원은 사회 복지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저 소득 모자 가정은 사회적 편견으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여성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모자 가정의 보호 및 지원이 우선 되어야 한다. 저소득 모자 가정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생계비 및 아동 양육비를 현실화 하며, 지원 대상의 연령을 현실적으로 확대하고, 자립을 위한 직업 교육, 의료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도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노령화 현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아직 바람직한 대응책은 시나리오에 불과할 뿐 실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서구 선진국이 장기간에 걸친 사회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준비된 노령화 사회를 맞이한데 반해 우리 사회는 급속한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 특히 호남지역은 노령화 현상이 두드러진 1차 산업 중심의 지역으로, 타 지역과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므로 훼손된 산업 중심의 도시지역에서보다는 호남지역에서 미래의 노령사회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대응 모형을 제시할 수도 있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사회적 활동 가능 기간은 길어지고 있지만 과거의 정년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유휴 고급 노동력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 복지 정책은 고급 노동력에 대한 정책이라 볼 수 있으므로 지역 활성화의 관건이 된다. 우선 젊은 노동층에서 구하지 못하는 유 경험의 고급 노동력, 또는 일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노년 인구층에 관한 정보망을 유형별로 구축하고, 취업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 외에 공동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생산 · 건강을 위한 전문 의료기관의 운영, 치매 종합센터 및 치매 전문 요양시설 확충, 가정 도우미 제도 도입, 노인 여가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 건전 놀이문화 프로그램 개발,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노인 이용시설의 확충 및 운

영비의 지원 현실화, 노인 종합 복지관 및 노인 공동 가정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

호남지역의 경우 지역정책 분야 중 가장 미진한 부문이 장애인 복지 분야이다. 차별화된 특별 배려보다는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편견 없이 일반인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어 장애인 복지의 목표일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지역 모든 시설을 장애인 스스로 접근 ·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반인 · 장애인 모두에게 특별하다는 편견을 해소시키기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복지를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 · 설비 · 조직 등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의 상황별 실태 및 요구 사항 조사, 경제적 안정을 위한 기본 생활 보장, 전문 재활 의료 시설 및 서비스 확충, 보장구 개발 및 공급 전문기관 운영, 복지관(체육문화시설, 전용도서관 등 편의시설) 운영, 단독 활동 가능한 시설 · 설비 완비(이동로, 교통시설, 기타 편의시설), 직업 교육 · 알선 · 사후 재교육, 공공기관 및 일반 업체에서의 장애인 의무 고용 준수, 주택 개발, 보조금, 교육 · 보육 시설 설립 및 경영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이 있다. 호남지역의 개발 방안에 관한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림 9-13〉과 같다.



〈그림 9-13〉 서해안시대의 호남지역 정책



제10장
전라지방 - 전라의 발전전망

이건철 (광주 · 전남발전연구원)

빈 면

제10장 전라의 발전전망

1. 21세기 전라권 발전의 여건

1) 사회적 여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1960년대 출발 당시부터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집중을 방지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과 정책이 수립·추진되어 왔다.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확충되고, 지역적으로도 산업화와 농·어촌 등 낙후지역의 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역발전과 관련한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함께 그 효과에 스스로 한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발전에 대해서는 1970년대부터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정기적으로 수립되었으나, 「선계획 - 후추진」체계가 정착되지 못해 실천력이 미흡하여 그 의미가 평가절하되었고, 그나마 추진된 사업들도 대선, 총선 등 정치적 요인에 의한 임기응변식 정책의 산물이되었다. 그리고 정책의 주 대상인 교통·통신망, 산업단지, 용수공급, 인력개발 등과 관련한 시설의 신설과 확충이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실정을 고려한 발전 잠재력은 거의 반영됨이 없이 당장의 수요에 대한 검토와 이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만을 강조한 나머지, 시설의 배분이 공간적으로 편중되어 지역별로 경제집적기반 조성의 격차가 발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켰다는 점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지방, 동과 서, 즉 발전된 곳과 낙후된 곳간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나 동남권과 서남권간 격차는 국민적 통합성이나 국가경쟁력 제고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어 향후 국토개발의 당면 과제는 「통합의 국토관리」에 두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이르렀다.

지난 40여년동안 역대 정부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국가정책의 주요 기조로 삼아 도시와 농촌, 서울과 지방으로 이원화된 성장격차를 줄여 균형된 국토공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간

격차,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수도권은 인구와 기능 · 시설 · 산업이 집중된 반면, 비수도권은 생산 · 소득기반이 취약하여 취업기회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인구유출이 지속되고, 성장에너지가 고갈됨으로써 저성장의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이처럼 구조적인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지역간 격차는 결국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국민적 통합까지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은 2002년 현재, 면적은 전체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절반에 가까운 47.2%가 집중되어 있고, 경제력은 제조업체수의 55.1%, 은행예금의 65.9%가 집중되는 등, 전체의 60% 내외가 집중되어 있다. 특히 미래산업이나 신산업의 경우 수도권 집중도가 더욱 높아 앞으로도 집중이 심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업의 경우 수도권에 업체수와 생산액 기준, 각각 88.9%와 97.8%, 소프트웨어업체의 82.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미래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연구개발비의 62.7%, 연구개발인력의 58.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 · 출자기관의 86.5%, 정부출연연구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집중되어 있다(표 10-1).

[표 10-1] 중추관리기능의 입지(2001년)

구 분	전 국	수 도 권	수도권 비중(%)
중앙행정기관(청단위 이상)	37	28	72.7
정부투자 · 출자기관	37	32	86.5
정부출연연구기관	43	30	69.8
100대 기업 본사	100	95	95.0
기업부설연구소	4,553	3,242	71.2
벤처기업수	9,656	6,874	71.2

자료 : 권용우,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3.

이러한 지역간 격차를 반영하듯,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넓은 곡창지역과 풍부한 수산자원을 중심으로 국내 굴지의 식량공급지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전국 3대 항만의 하나인 목포항을 중심으로 1차산품 중심의 물류거점기능을 담당했던 전라권은 지난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시대가 본격 개막되면서 경부축 중심의 불균형적 국토개발과정에서 소외되어 산업

구조 고도화의 상대적 부진으로 낙후지역으로 반전되고 말았다.

중앙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대명제 하에 전라권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서남권을 수도권이나 동남권(부산권)에 대극하는 개발권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토균형개발정책을 표방해 왔으나, 그 효과는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1980년대 후반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함께 서해안의 집중개발에 국토개발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서남권종합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정도로 중앙정부의 정책의지를 표출했으나, 결과적으로 그 실천력이 미흡하여 전라권은 아직도 소외지역이자 저발전지역으로 남아 있다.

2) 경제적 여건

이와 같은 전라권의 경제적 저개발 실상은 산업별 취업자수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표 10-2). 2002년 12월 현재, 1차산업 비중이 광주는 1.4%로 특별 ·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고, 전남과 전북은 전국대비 각각 16.0%, 10.1%로 16개 시 · 도 가운데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표 10-2] 전라권의 경제여건

구분	전 라 권				전국(E)	비중(%)			
	계(A)	광주(B)	전남(C)	전북(D)		A/E	B/E	C/E	D/E
인구(천명)	5,424	1,402	2,060	1,962	48,518	11.2	2.9	4.2	4.0
면적(km2)	20,589	501	12,037	8,051	99,585	20.7	0.5	12.1	8.1
취업자수(천명)	2,425	603	981	841	22,169	10.9	2.7	4.4	3.8
농림어업	571	29	332	210	2,069	27.6	1.4	16.0	10.1
광공업	271	80	82	109	4,259	6.4	1.9	1.9	2.6
서비스업	1,584	494	567	523	15,841	10.0	3.1	3.6	3.3
제조업									
업체수(개)	6,874	1,823	2,693	2,358	111,025	6.2	1.6	2.4	2.1
종업원수(명)	193,303	51,055	71,739	70,509	2,712,310	7.1	1.9	2.6	2.6
생산액(억원)	638,898	109,019	364,103	165,776	6,361,506	10.0	1.7	5.7	2.6
부가가치(억원)	213,555	45,537	103,829	64,189	2,436,409	8.8	1.9	4.3	2.6
지역내총생산(10억원)	56,094	12,277	26,117	17,700	534,720	10.5	2.3	4.9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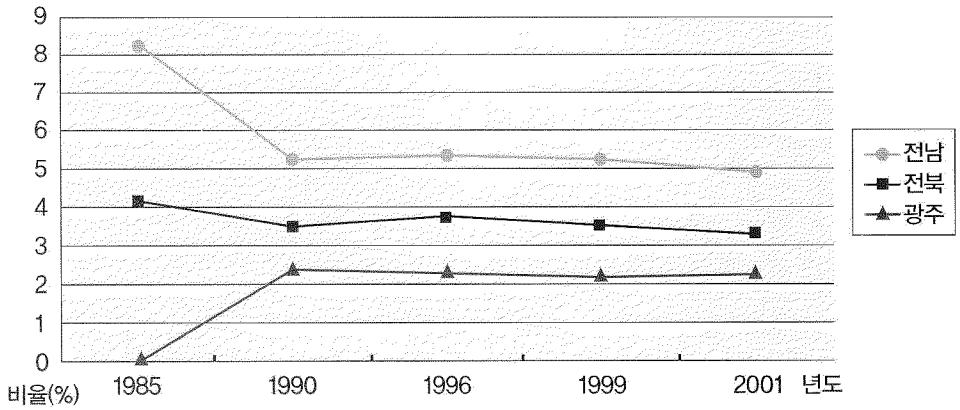
자료 : 전라남도,「2002 시 · 도 비교통계」, 2003. 통계청,「2001년 시 · 도별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2003.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전라권의 실상 가운데 농림어업 취업자수 구성비(27.6%)만이 3개 시 · 도 면적의 전국비중(20.7%)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부가가치 가득률이 높은 2, 3차산업 비중이 낮은, 즉 산업고도화가 가장 부진한 지역으로 뉴라운드시대 완전한 농업개방이 이루어지고, 중앙정부가 1차산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전라권의 생산기반은 더욱 황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라권의 저개발 실상은 지역의 제조업 실태를 보면 더욱 쉽게 알 수 있다. 전라권의 5인 이상의 제조업체수는 6,874개로 전국대비 6.2%로 인구비중 11.2%에도 미달하고 있으며,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국대비 7.1%에 불과한 실정이다. 생산액과 부가가치 규모도 각각 전국의 10.8%, 8.8%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경상가격 기준, 56조940억원으로 전국의 10.5%(광주 2.3%, 전북 3.3%, 전남 4.9%)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유의해야 할 것은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그림 10-1). 광주는 1985년부터 1990년 동안에 급격히 증가하다가 1990년대 접어들어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전북과 전남은 1985년부터 1990년 동안에는 급격히 감소하다가 1990년대 접어들어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전라권은 절대인구 규모의 감소로 경제활동인구의 전국 비중이 3개 시 · 도별로 약간의 격차는 있으나, 급감하고 있어 산업인력의 공급부족상태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0-1〉 전국대비 지역내 총생산(GRDP) 비율의 변화

자료 : 통계청,「2001년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2003.

(표 10-3). 전라권 경제활동인구의 전국대비 비중은 1990년 13.3%에서 1994년 12.0%, 1998년 11.5%를 거쳐 2002년 현재 10.9%로 12년 동안 무려 2.4%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 도별로 살펴보면,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 순으로 감소폭이 크다. 광주는 1990년 2.4%에서 1998년 2.5%, 2002년 현재 2.7%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전북은 1990년 4.5%에서 1994년 4.2%, 1998년 4.1%를 거쳐 2002년 현재 3.8%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전남은 1990년 6.4%에서 1994년 5.4%, 1998년 5.0%를 거쳐 2002년 현재 4.4%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표 10-3). 특히 전남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상대적인 생산 · 소득기반 취약으로 최근 10년간 전남 전체인구의 9.7%인 217천여명이 감소(전국 7.5%증가)했기 때문이다. 2003년 한해 동안만 하더라도 36천명이 감소했으며, 2004년에도 5개월 동안 무려 15천명이 감소할 만큼 심각한 인구유출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감소인구의 대부분을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고령화율이 높아짐으로써(노인인구 비중이 14.1%로 전국의 2배 수준), 결국 산업인력은 수급면에서 공급부족상태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0-3] 전라권의 취업자수 변화 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경제활동인구(1990)			경제활동인구(1994)			경제활동인구(1998)			경제활동인구(2002)		
	계	취업자	실업자	계	취업자	실업자	계	취업자	실업자	계	취업자	실업자
전라권(A)	2,459	2,423	36	2,433	2,382	51	2,473	2,339	135	2,490	2,425	64
광 주(B)	437	423	14	493	474	18	535	494	42	625	603	22
전 남(C)	1,182	1,171	11	1,089	1,076	13	1,065	1,019	46	1,003	981	21
전 북(D)	840	829	11	851	832	20	873	826	47	862	841	21
전 국(E)	18,487	18,036	451	20,326	19,837	489	21,456	19,994	1,461	22,877	22,169	708
A / E(%)	13.3	13.4	8.0	12.0	12.0	10.4	11.5	11.7	9.2	10.9	10.9	9.0
B / E(%)	2.4	2.3	3.1	2.4	2.4	3.7	2.5	2.5	2.9	2.7	2.7	3.1
C / E(%)	6.4	6.5	2.4	5.4	5.4	2.7	5.0	5.1	3.1	4.4	4.4	3.0
D / E(%)	4.5	4.6	2.4	4.2	4.2	4.1	4.1	4.1	3.2	3.8	3.8	3.0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이처럼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임에도 전남이 오히려 높은 수준의 지역내총생산, 생산액, 부가가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지역의 전반적인 산업기반이 충실해서라기보다는 단

순히 광양만권의 광양제철 및 여천화학산업단지 때문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광주 · 전남 내 동부권 5개 시 · 군(여수 · 순천 · 광양시, 고흥 · 보성군)과 서부권(목포시, 해남 · 영암 · 무안 · 신안군), 그리고 광주권(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 · 장성 · 화순군)의 제조업실태를 보면(표 10-4), 업체수나 종업원수는 동 · 서부권간 격차는 거의 없고, 광주권이 동부권을 3.5배 정도 앞서고 있으나, 생산액 부문에서는 서부권은 동부권의 1/11 수준, 광주권은 동부권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부가가치 부문에서는 서부권은 동부권의 1/8 수준, 광주권은 동부권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광양만권의 광양제철 및 여천화학산단을 제외하면 광주 · 전남의 제조업 기반이 매우 열악하다는 증거이다.

[표 10-4] 광주 · 전남의 권역별 제조업 현황

구 분	업체수(개)	종업원수(명)	생산액(백만원)	부가가치(백만원)
동 부 권(A)	705	31,369	29,803,498	8,008,780
서 부 권(B)	637	17,298	2,762,395	1,013,810
광 주 권(C)	2,445	63,580	13,322,770	5,372,523
B / A(%)	90.4	55.1	9.3	12.7
C / A(%)	346.8	202.7	44.7	67.1

자료 :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통계연보」, 2003. 전라남도,「전남통계연보」, 2003.

문제는 그나마 외형적으로 지역 제조업의 생산액이나 부가가치 수준을 높이고 있는 광양제철 및 여천화학산단 기업마저도 대부분이 장치산업이자 지역의 쾌적성을 훼손하고 있고, 더욱이 관련단지(협력업체)나 본사가 지역 내에 입지하지 못해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의 제조업 기반은 열악하다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농림어업 취업자수를 제외한 전국대비 비중이 모두 면적대비 비중 20.7%는 물론, 인구대비 비중 11.2%를 하회하고 있고, 산업클러스터 기반도 취약하여 향후 지역경제전망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처럼 전라권의 산업화가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SOC가 경부축에 편재되어 전라권에는 소외된 결과로 판단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권역내외 기업인을 대상으로 전라권에 투자하기 어려

운 이유로서 어김없이 60% 이상이 SOC 부족을 꼽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하겠다. 특히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제조업의 산업입지는 고속도로 I.C를 중심으로 대규모화, 집중화되는 과정에서 전국 산단의 73%가 고속도로 I.C 10Km 이내에 입지함으로써 고속도로가 통과하지 못한 전남 서남부지역에 산업화가 진전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최근 고속철도 개통으로 앞으로의 제조업 산업입지가 고속철도 역사 주변을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거나 건설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속철도가 건설되지 않은 전라권의 산업화에 대한 전망은 상대적으로 불투명하다.

그리고 이처럼 열악한 전라권의 개발실상은 참여정부에 접어들어 강조하고 있는 지역혁신의 기본인 교육 및 인적역량이 취약하여 향후 첨단산업진흥 전망도 밝지 못하다. 우리나라 총 연구비의 권역별 분포(2001)를 보더라도(표 10-5), 전라권에서 사용된 연구비는 4,946억원으로 총 연구비의 3.1%로 수도권은 물론, 영남권이나 충청권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연구인력 수도 마찬가지로 열악하다. 연구개발인력 수 기준의 집중도 측면에서도 전라권은 1만5천여명으로 영남권이나 충청권의 1/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밖에 참여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산업클러스터 형성기반이 전무하며, 아울러 공학/과학연구센터(ERC/SRC), 기술이전기관, 애로기술 해결기관 등도 양적이나 질적으로 취약하여 산업혁신 역량의 제고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전라권의 향후 첨단산업진흥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0-5] 권역별 연구비 및 연구인력 분포

구 분	수 도 권	영 남 권	충 청 권	전 라 권	강 원 권	제 주 권
연구비(백만원)	10,097,148	2,592,597	2,817,600	494,587	95,658	35,125
(전국대비, %)	(62.7)	(15.9)	(17.6)	(3.1)	(0.6)	(0.2)
연구인력수(명)	149,388	43,880	41,920	15,146	6,318	1,154
(전국대비, %)	(58.6)	(16.7)	(16.0)	(5.8)	(2.4)	(0.4)

자료 : 2002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

3) 해양 · 도서자원 여건

전라권의 비교우위적 특성이라면 해양 · 도서자원을 빼놓을 수 없다. 전라권은 타 시 · 도에서 볼 수 없는 빼어난 해양 · 도서관련 해상관광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휴양관광지로서의 개발잠재력이 크다. 도서수가 2,078개(유인도 306, 무인도 1,772)로서 전국의 65.6%를 점하고 있으며,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50.0%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해안선 길이가 6,921Km로서 전국 해안선의 54%를 점하고 있다(표 10-6). 더욱이 대부분의 도서가 육지부와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며, 빼어난 절경을 갖추고 있어 개발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개발잠재력 또한 크다.

[표 10-6] 전라권의 해양 · 도서자원 현황

구 분	도 서 수 (개)			도서면적(Km2)	해안선(Km)
	계	유인도	무인도		
전 국 (A)	3,170	491	2,679	3,786	12,903
전 남 (B)	1,969	280	1,689	1,856	6,431
전 북 (C)	109	26	83	38	490
B+C / A (%)	65.6	62.3	66.1	50.0	53.6

자료 : 전라남도,「2002 시 · 도비교통계」, 2003

그럼에도 해양 · 도서자원에 대한 접근 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거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해양 · 도서자원이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고, 전라권에 집중됨으로써 전국적 사업이 아닌 특정지역 사업으로 평가절하된 탓이다.

중앙정부는 늦게나마 1988년부터 한시적 계획으로 「제1차 도서종합개발계획(1988~1997)」을 수립하여 도서의 물(수원), 불(전기 · 전화), 발(연륙 · 연도교 등 교통시설) 확충사업을 시작했으나, 10년 동안의 총재원이 3,800여 억원에 불과하여 연륙 · 연도교 건설사업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1997년부터 「지역균형개발법(94. 1. 7)」에 의거하여 수립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전라권에서는 연륙 · 연도교 건설사업을 적지않게 반영했으나, 재원부족을 이유로 1999년부터 정지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도서자원

이 집중되어 있는 전남의 경우, 현재 연륙교는 14개소, 연도교는 11개소가 건설되어 있고, 6개소의 연륙교와 2개소의 연도교가 건설 중에 있다. 2,000여개의 도서 가운데 약 1.5%에 불과한 30여개의 연륙 · 연도교만이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에 있다. 또한 1998년부터 우여곡절 끝에 「제2차 도서종합개발계획(1998~2007)」이 추진되고 있으나, 역시 재원 규모의 영세성으로 연륙 · 연도교 등 해양 · 도서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전남을 중심으로 한 전라권의 입장에서는 연륙 · 연도교 건설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도서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환상형 해양관광휴양벨트」를 구축하여 「동북아의 관광허브」로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중앙정부의 의지부족에 따른 재원 취약으로 연륙 · 연도교나 해안교통시설 등 접근교통망 취약이 가장 큰 장애물로 부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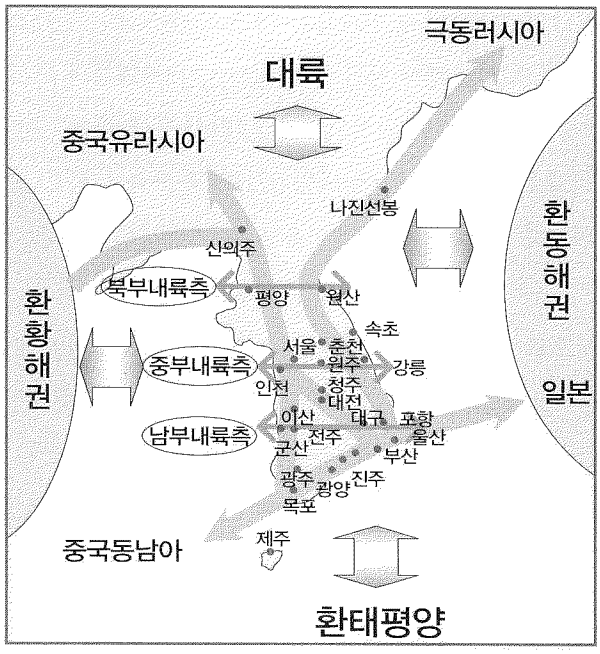
2. 전라권 미래발전

1) 국토종합계획상의 전라권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은 「21세기 통합국토 실현」을 기조로 개발과 환경의 통합, 지역간의 통합, 동북아지역과의 통합을 촉진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남북한의 통합을 4대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국토를 실현하기 위해 3개의 연안축과 3개의 동서내륙축을 포함하는 「3×3축」의 차세대 국토골격을 형성할 계획이다. 3개의 연안축은 국제물류, 관광, 산업특화지대의 기능을 담당할 환남해축(부산~진주~광양~목포~제주), 대중국 신산업벨트의 기능을 담당할 환황해축(목포 · 광주~군산 · 전주~인천(~신의주), 그리고 환동해권 국제관광 및 기간산업 고도화 기능을 담당할 환동해축(부산~포항~강릉 · 속초(~나진 · 선봉)이며, 3개의 동서내륙축은 수도권 기능의 분산수용 및 산악~연안 연계관광기능을 담당할 중부내륙축(인천~원주~강릉 · 속초), 영 · 호남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간 연계 강화기능을 담당할 남부내륙축(군산 · 전주~대구~포항), 그리고 북부내륙축(평양~원산)이다(그림 10-2).

종래 경부내륙축 중심의 국토축에서 3개의 연안국토축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



〈그림 10-2〉 개방형 통합국토축 구상

기할만하다. 특히 환남해축에는 전남과 부산 · 경남의 주도하에 천혜의 다도해와 남해안의 자연 · 역사 · 문화자원을 활용한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2000~2011)」을 수립하여 추진되고 있고, 단계적으로 서해안, 동해안 순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전연 안이 연계되는 관광벨트를 형성할 계획이다.

「3×3축」의 차세대 통합형 국토의 골격 가운데 전라권과 직접 관련되는 축은 환남해축과 환황해축, 그리고 남부내륙축으로 전체 6개의 축 가운데 3개 축이 해당되어 이러한 국토골격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전라권은 차세대 국토골격의 중심지역으로 입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통합국토 실현의 근저에는 한반도가 동북아의 교류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국토축을 형성하면서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내용으로 자리하고 있다. 한반도가 「환태평양과 대륙이 만나는 동북아의 지리적 중심」이라는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환황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권」과 연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동북아를 겨냥한 국제개방적 생산교류기반을 구축한다는 측

면에서 인천, 아산만, 군장, 대불, 광양만 · 진주, 신산업지대를 연계하는 서해안~남해안으로 이어지는 신산업지대망을 구축하고, 국제허브공항 · 항만, 대륙연계 철도망 등 교류기반을 강화하고, 이들 지역을 TSR(Trans Siberia Railway : 시베리아횡단철도)의 기점으로 설정하거나 TCR(Trans China Railway : 대륙횡단철도)과 연계할 계획이다.

전라권과 관련되는 공간계획으로는 「광역권의 전략적 개발계획」을 들 수 있다.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를 위해 10대 광역권을 설정하여 지방의 세계화 중심지로 집중 개발할 계획인데, 아산만권, 대전 · 청주권, 전주 · 군장권, 광주 · 목포권, 광양만 · 진주권, 부산 · 경남권, 대구 · 포항권, 강원동해안권, 중부내륙권, 제주권의 10대 광역권 가운데 3개 권역이 전라권에 입지하고 있다. 전주 · 군장권은 환황해경제권의 국제적 생산거점이자 신산업도시 건설 및 영상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광주 · 목포권은 중국 및 동남아경제권과의 국제교류거점이자 광소자, 레이저, 광통신 등 첨단광산업 및 지식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광양만 · 진주권은 동북아 중추항만도시 및 항공산업도시이자 영 · 호남 협력개발의 시범지역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전라권과 관련되는 또 다른 사업으로는 「지방도시의 '산업별 수도화'와 '기능전문화' 계획」이 있다. 지방대도시를 수도기능의 적극적 분담을 위한 「산업별 수도」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특정부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특화하여 서울에 집중된 수도기능을 분담하고, 특정 산업군의 본사기능, 지원서비스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해당분야에서 성취를 원하는 인재양성 및 정착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예컨대 광주권은 첨단광산업 및 문화 · 예술산업수도로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미 국가적 「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있다. 그리고 여타 지방 대도시도 국제물류산업수도(부산), 섬유패션산업수도(대구), 과학기술수도, 메카트로닉스수도, 영상산업수도로 육성하고 있거나 육성할 계획이다. 동시에 지방중소도시는 기능전문화를 통해 원료 · 부품공급업체, 대학, 연구소 등 관련조직체가 공존하는 도시별 주력산업군집(산업클러스터)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도시와 차별화된 매력적이고 여유로운 정주여건을 형성하여 관광휴양도시, 대학도시, 문화예술도시 등으로 전문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농 · 산 · 어촌 등 낙후지역이자 조건상 불리한 지역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농 ·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친환경농업 등)와 수출산업화를 유도하고, 유기농업 및 수

출농업의 과감한 육성으로 고소득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기능의 다원화와 도농복합형 산업 육성 계획을 추진하여 선진국의 농어촌처럼 인근 도시들의 주력산업과 연계한 부품산업 유치 및 농수산가공산업, 여가관광기능 확대로 노동교류 촉진 및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이미 2004년 8월부터 산업의 쇠퇴, 인구 감소 등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시 · 군 · 구지역을 인구변화율과 인구밀도, 소득수준,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활력지역」으로 선정, 중앙정부가 매년 2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낙후지역의 자연경관, 갯벌 등의 보유자원이 「5都2村」행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 도 · 농간 교류 촉진과 농촌소득 증대가 이루어지고, 그린비지니스(green business),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의 가속화를 통해 낙후지역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또한 전라권에 가장 시급한 광역교통망이 확충되어 타권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제고되어 한반도 서남단에 입지하고 있는 지리적 불리함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도로망은 전국 어디서나 30분내 고속도로망에 접근가능한 도로망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 하에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고속도로망 골격을 구축하고, 대도시 순환고속도로와 중소도시 우회도로를 적극 건설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0년이면 고속도로와 일반국도가 각각 6,100km, 19,000km로 증대될 전망이다. 철도망은 중 · 장거리 대량수송을 위해 기존철도의 복선화와 함께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장기적으로 연안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제항만 및 거점항만 육성 차원에서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고, 동시에 군산항, 목포항 등 권역별 거점항만을 육성할 계획이며, 고속고급교통수요에 대비한 공항시설 확충 차원에서 무안국제공항 등 권역별 거점공항을 육성할 계획이다.

그밖에 「디지털국토」구축을 위한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내집 마련」에서 「살기좋은 우리동네」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커뮤니티(community)의 조성 및 다양한 주거공간 창출, 도시와 농촌을 통합하는 계획을 수립 · 추진하기 위한 도시 · 농촌통합계획체제 도입, 환경과 조화된 문화 · 관광 국토기반 조성 차원에서 남원~장수~곡성~구례~하동~산청~함양간 지리산통합문화권 조성사업, 목포~완도~여수~남해~통영~부산을 잇는 남해안관광벨트 구축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성장추세인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천진~서해안~제주간이나 상해~남해안~큐슈간 동북아 국제크루즈루트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2) 여건변화 전망

(1) 기회적인 요인

첫째, 중앙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과 「중앙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기대된다. 수도권에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자본, 교육, 문화, 언론, 그리고 경제력이 집중되어 제자원이 전국으로 분산되지 못함으로써 비수도권의 인 · 물적자원의 유출만 심화시키는 악순환구조가 고착화되어 오면서 수도권 집중의 요인을 제거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유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기 사업들은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전라권과 같은 소외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수도 이전사업단 자료에 의하면, 신행정수도 건설과 중앙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이 함께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 감소하고, 영남권과 호남권의 인구는 각각 72만명과 34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와 전국의 주요 도시간 통행시간 · 거리가 상당수준 감소하고, 교통비용 또한 연간 1조1천억원이 절감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수도권의 환경오염이 완화되어, 연간 1,060억원의 환경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며, 건설산업의 신규고용효과도 창출되어 이른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으로는 「서울지향주의」라는 편향된 가치관이 크게 완화되어 지역간 갈등 해소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그동안 발전과정에서 소외된 전라권의 발전에도 상당한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권은 삼국시대 이래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수도를 갖게 될 것이며, 수도까지의 지리적 거리는 물론이고 시간 · 비용거리, 심리적 거리가 단축되어 신행정수도 건설효과가 쉽게 파급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40여년동안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실망해 온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금번 신행정수도 건설과 중앙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실질적 의지를 신뢰하게 됨으로써 지역발전에 대한 결집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라권의 입장에서, 기대해 볼만한 대목은 바로 「중앙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강조했으면서도 실천되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지방분산의 대표적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대기업의 지방분산이 민간기업이나 자본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는 지원의 정도와 폭이 아무리 크더라도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

대기업의 지방분산은 중앙정부의 의지만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히 국민의 정부 때 확실히 입증된 바 있다. 1999년 6월부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분산정책」을 위해 기존의 조세감면 일변도의 단편적 지원제도가 아닌 이전 대상기업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기업체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통합지원제도」라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도입하여 대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정책을 추진했으나, 지방이전실적은 매우 미흡한 실적에 그치고 말았다. 따라서 민간기업이나 자본의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나 자본을 수도권에서 「밀어내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80% 이상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중앙공공기관이 지방으로 先이전하여 지방 현지에서 민간기업을 「불러들이는 방식」으로 대전환한다는 의미에서 중앙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전라권 발전에 기회적 요인임에 틀림없다. 이를 반영하듯, 중앙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정부관료 설문조사(국토 · 도시계획학회, 2002)에서도 기관의 지방이전 필요성을 68%로 높게 답하고 있다(표 10-7).

[표 10-7]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필요성에 관한 정부관료 설문결과

답변문항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잘모르겠다	기 타	합 계
답변비중	68%	23%	8%	1%	100%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중앙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킨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여러 지방도시로 분산시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를 들 수 있는데, 프랑스는 파리권에 대한 인구 및 고용 집중완화와 낙후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1960년대부터 중앙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990년까지 30여년 동안 2만3천여명을 지방으로 이전시켰고, 크레송총리가 등장한 1991년부터는 7차례에 걸쳐 315개 기관 약 42,600명에 달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표 10- 8), 2003년 6월까지 총 29,695명이 이전하였고, 4,233명이 이전 중인 것으로 나타나 약 80% 정도의 이전실적을 보이고 있다.

[표 10-8] 프랑스의 1990년대 이후 중앙공공기관 이전계획

시 기	이 전 계 획	시 기	이 전 계 획
1차(1991)	200개 기관 약 13,300명	5차(2001)	9개 기관 약 5,000명
2차(1994)	29개 기관 약 10,200명	6차(2002)	11개 기관 약 2,400명
3차(1997)	43개 기관 약 5,200명	7차(2003)	1개 기관 약 200명
4차(2000)	22개 기관 약 6,300명		
총 계		315개 기관 약 42,600명	

자료 : 김태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토연구원「국토정책 Brief」재인용

따라서 우리나라도 중앙공공기관이 먼저 지방이전 후, 후속으로 지방에서 대기업, 관련업체, 연구기관 등을 불러들여 집적화(클러스터)시키는 계기가 되는 중앙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패키지사업으로 추진하되, 외국의 성공사례에서 보듯 전라권처럼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집중 배치한다면 전라권 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참여정부의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과 동남권의 한계로 인한 후발주자의 이점을 활용하면 한반도 서남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참여정부 접어들어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주요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통합(교정)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 2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전자인 통합적 균형발전정책은 전국 모든 지역의 인 · 물적 자원이나 시설의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을 충족시켜 권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으로서 낙후지역 개발, SOC 및 생활인프라의 전국 최소기준 충족이 핵심 내용이다. 후자인 역동적 균형발전정책은 지역의 특성화 역량을 확대하여 권역내 효율성을 증진시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정책으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으로 「지역혁신체계(RIS : Regional Innovation System)」개념을 도입하여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지방대학의 발전 → 지역산업의 발전 → 인재의 지방정착 →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자립형 지방화」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가시화된다면 전라권에 기회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위에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국토개발를 선도해 왔던 수도권이나 동남권(부산권)의 과밀로 인한 사회 · 경제적 발전의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향후 국토개발

축은 서남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전라권은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스스로의 혁신발전역량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면 지역발전잠재력과 중앙정부의 국가균형개발의지에 힘입은 「후발주자의 이점」을 살려 수도권, 동남권에 대극하는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지역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셋째, 교통수단의 고속화 및 규모화로 전지역 2시간권내 진입으로 접근도가 제고될 것이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고속도로망의 신설, 국도의 확포장으로 권역내 접근은 1시간권내로, 수도권까지도 2시간권내로 접근이 가능한 교통의 고속화로 접근도가 제고될 것이다. 고속전철 건설로 광주와 목포간은 물론, 전주와 목포간까지도 「분생활권」에 진입해 있으며, 호남고속철도가 건설되면 권역내 거점도시간 접근도는 훨씬 제고될 것이며, 수도권과의 접근도 또한 2시간권 이내로 진입할 것이다. 반면, 생활 ·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승용차 대중화에 따른 교통체증의 심화로 버스, 철도 등 대량수송수단의 비중이 커질 것이다. 현재에도 전라권의 자동차는 147만여대(광주 395,092, 전북 544,701, 전남 532,322)로서 승용차를 기준으로 4차선도로 1,800Km를 완전 주차장화할 수 있는 규모에 이르고 있는 바, 호남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아울러 접근이 어려운 해양 · 도서지역도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연륙 · 연도교 건설과 함께 경비행기의 대중화로 1시간권내로 진입될 것이다.

넷째, 3개 시 · 도가 상생발전을 목표로 상호 협력과 제휴의 분위기가 성숙되어 광역화된 효율적인 지역발전이 촉진될 것인 바, 이 또한 기회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자치단체 주도로 다방면에서 공통점을 지닌 자원이 많고, 공유하는 가치의 폭이 넓은 3개 시 · 도가 상호 협력하여 공동발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2004. 9. 17). 우선 「3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당면현안인 고창~장성~담양간 고속도로 조기 완공, 섬진강권역 영상문화벨트 조성, 한방산업 공동 육성 등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교통 · 통신, 산업의 발달로 생활권이 행정구역을 넘어 확대되는 추세에서 3시 · 도별 개별적 지역개발사업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시켜 전라권의 공동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회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섯째, 이상과 같은 지역의 기회적 발전잠재력을 인식한 국내 · 외 민간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 과거의 개방이 수입자유화와 수출 촉진에 기반을 두었다면, 21세기 새로운 개방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활성화로 대변되면서 작금 국가나 지역적으로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 경쟁에서 한국은 중국과 싱가포르, 홍콩 등에 비해 개방성, 국가지원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외국기업 투자유치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시점이다. 따라서 전라권의 발전잠재력이 재인식되고, 중앙정부의 지원 증대와 지역의 독자적 대응논리 마련이 효과적으로 조화되면 이처럼 중요한 외국기업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전라권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만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중앙정부가 신행정수도를 이전할 만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면 오랫동안 소외가 지속되어 온 전라권에 2면이 바다이면서 동북아 중심이라는 지정학적 잠재력을 충분히 살려 관련공공기관을 과감하게 이전하고, SOC를 대폭 확충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국가경쟁력이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서 국내외 민간기업의 활동영역이 확대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는 무한국제경쟁시대에 국가운용의 목표를 국가경쟁력제고에 두고, 이를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든 법적 · 제도적 · 물적 요소를 개선하여 국내외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행적적 · 경제적 규제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종래의 공업위주 지역개발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산되어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관광, 문화 · 예술 등의 자원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바, 타 지역에 비해 보전적이고, 관광, 전통 문화자원이 풍부한 전라권은 이들 부존자원을 통한 발전잠재력이 크다. 광주의 「문화중심도시」, 전북의 「새만금지구」 및 「변산반도」, 그리고 전남의 「서남해안해양레저타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등은 기반시설만 확충되면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거점이자 동북아의 생산 · 관광거점의 잠재력을 인정받아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 부정적인 요인

전라권은 상기와 같은 기회적인 요인과 함께 부정적인 요인도 적지않게 직면해 있다.

첫째, [표 10-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3개 시 · 도간 격차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전국대비 비중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산업진흥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전북의 자동차 및 부품, 메카트로닉스, 생명공학산업, 광주의 광산업, 디자인산업, 문화산업, 그리고 전남의 생물산업, 문화관광산업, 조선 · 물류산업 등 전략산업과 전통적인 문화 · 예술산업 등 전라권이 집중 추진 예정인 전략산업의 진흥이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력수급의 차질이 예상되어 지역산업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도시화의 진전과 농어촌 주거환경 열악으로 농촌인구의 감소가 전망된다. 내년이면 전국의 예상 도시화율이 90% 이상으로 증대하여 국토 대부분이 도시화될 전망인데, 특히 농어촌의 경제 · 문화 · 교육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전라권도 도시화율이 86% 수준을 유지하여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농어촌인구는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농어촌의 극심한 인구유출은 농어업의 경쟁력이나 농어촌의 관광상업 진흥에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다.

셋째, 주민의 개발의지 증대에 따른 집단 ·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화와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의지 및 지역간 경쟁분위기가 고조되어 주민의 욕구수준이 높아지면서 집단 ·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러한 이기주의가 부정적으로 전개되면 선호시설이나 비선호시설 등의 배치에도 주민의사가 이기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시설물 배치장소 선정과 관련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시 · 도별 발전전략과 전라권 발전 비전

(1)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그동안 낙후지역개발 및 균형개발이라는 소극적인 차원의 개발기조를 채택하여 왔으나, 지식정보의 문화창출력이 중시되는 21세기에는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국가거점지역」으로서의 발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전라북도의 발전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차원을 넘어 21세기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대 목표를 설정 · 추진하고 있다.

첫째,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집적경제기반 구축이다. 우선적으로 환황해경제권의 국제적 경제 · 교류거점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개방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세계화 전진기지를 구축토록 한다. 전북을 환황해권의 생산 · 교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국제 항만 · 공항 등 물적 기반과 경쟁력있는 집적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연구개발, 첨단산업 육성, 국제교역 및 업무기능을 확충한다.

둘째, 개성있는 세계적인 지역문화를 창출한다. 21세기는 전통과 문화가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인 만큼 지역문화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유한 정체성과 매력을 지녀야 하며,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개방성을 갖추어야 한다. 세계적인 지역문화 창출에는 지역문화 수준의 세계화와 함께 개방적인 주민의식 및 제도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지역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고, 차세대를 위한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 · 경제적 이동성 증진, 지역주민의 가치실현 및 생태, 환경자원보전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내 문화적 삶의 질 확보를 위해 사회적 조건 및 물적환경의 개선과 함께 교육 · 문화 · 의료 등 인적 자원개발 및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의 질적 탁월성을 높이는데 치중한다.

이러한 기조와 목표를 구체화기 위한 7대 발전전략을 설정 · 추진하고 있다.

첫째, 지역의 통합성 증진을 위한 공간개발을 촉진한다. 도시기능 전문화와 지역중심성 강화를 위한 개발권을 구상하여 도시간 기능보완 · 연계강화를 위한 개발축을 설정한다. 둘째, 개성있는 친환경적 지역정주기반을 형성한다. 인간중심의 친환경적 도시생활기반을 구축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 · 산 · 어촌 및 특수지역 개발을 촉진한다. 셋째, 미래사회를 선

도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한다. 농림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산업화를 도모하고,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신산업을 육성한다. 넷째, 세계와 지역을 통합하는 교통 · 정보인프라를 구축한다. 국제교류거점 시설조성과 간선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광역도시교통체계 구축과 첨단교통 · 정보인프라를 구축한다. 다섯째,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보전 및 자원개발을 촉진한다. 지역의 경관과 생태를 고려한 지역생태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등 공급처리시설을 완비한다. 여섯째,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위한 문화 ·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지역문화 인프라 확충과 문화 · 여가를 활성화시키고, 경관 및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관광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지역문화 창출과 국제교류 · 협력을 강화한다. 일곱째, 삶의 질 확보를 위한 고품격의 생활 · 복지환경을 조성한다. 전통과 문화에 바탕을 둔 쾌적한 주거경관을 조성하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복지서비스 및 생활기반을 확충한다.

(2)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동북아시대 서남권 첨단과학 · 광산업 · 문화 중심도시 건설」을 기조로 설정하고, 이러한 기조 하에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있다. 산학연 협력체계가 구축된 첨단과학 · 광산업 중심도시 육성, 문화예술과 디지털기술이 접목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자연과 문화, 첨단기술이 조화된 환경생태도시 조성, 세계평화와 인권 ·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인권 도시공동체 형성의 4대 목표이다.

이러한 기조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6대 발전전략을 설정, 추진하고 있다.

첫째,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개발(R&D) 및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 협력 기술혁신 및 산업혁신체계 구축, 광산업, 정보가전, 자동차/첨단부품소재, 문화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 내륙거점도시를 우리나라 과학기술삼각벨트로 구축하기 위한 첨단과학산업단지의 R&D 허브 조성, 전략산업 중심의 특화된 산업클러스터 시범단지 조성, 수요자 중심 인력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인적자원개발체계 구축, 기술혁신 및 기업지원의 인프라 확충과 기업입지 매력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기반 구축 및 문화경관을 창출한

다. 이를 위해 아시아문화전당 조성을 통한 문화예술기반 확충과 창작활동 활성화, 디지털 기술과 접목한 디자인, 문화콘텐츠, 영상 등 문화산업 집적화, 문화발신 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 관련 중추기관 유치, 중외문화벨트, 문화산업집적지구, 여가단지, 도시경관 조성 등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문화관광 및 컨벤션 유치를 위한 도시매력 증진 및 추진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환경을 관리한다. 이를 위해 무등산과 영산강을 중심으로 자연환경 보전과 친환경 관리, 도시지역에 녹지공간 확보, 친수공간 및 녹지휴식공간 조성, 가로, 건축물 등 미시적 녹지공간 확충과 관리 강화, 태양에너지 등 환경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절약 도시환경 조성, 오염원 감축, 환경오염 방제, 녹지 및 환경관리체계 등 환경시범도시 추진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넷째, 민주 · 인권 도시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민중심의 사회적 환경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민주인권 도시정체성을 나타내는 물리적 공간 조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복지환경 개선 및 공동체 조직 육성, 세계평화와 민주 · 인권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추진, 시민을 중시하는 정치, 행정, 사회 · 문화적 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다섯째, 첨단광산업 · 문화 중심도시에 맞는 도시공간 및 입지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기존 도심 활성화 및 신도심 개발 · 관리로 균형적 도시공간체계 형성, 주택지구(단독, 공동), 중추상업지구, 문화지구, 녹지지구, 산업지구 등 기능별 공간배치를 통한 경관, 녹지환경 등 집중적 관리체계 구축, 국제교류, 물류, 교통 · 통신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 매력있는 입지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 및 사회복지환경 선진화, 지하철과 공항, 버스, 철도와 연계된 도시 대중교통체계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여섯째, 도시발전 및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관정 협력의 혁신적 거버넌스체계 구축, 도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분야별 산학관민 추진기구 구성, 발전정책을 추진하는 민간부문 실행주체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3)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동북아 물류 · 관광 · 미래산업 중심지 육성」을 기조로 설정하고, 동북아 물류 · 교역의 중심지 개발, 동북아 관광중심지 육성, 전통산업과 첨단미래산업의 조화로운 발전, 친환경 고소득 농수산업 육성, 복지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환경보전의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표 10-9] 시 · 도별 발전 기조 · 목표전략

구 분	기 조	목 표	발 전 전 략
전라북도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국가거점지역	• 국제경쟁력을 갖춘 집적경제기반 구축 • 개성있는 세계적인 지역문화 창출 •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 지속가능성 확보	• 지역통합성 증진을 위한 공간개발 촉진 • 개성있는 친환경적 지역정주기반 구축 •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지식기반산업 육성 • 세계와 지역을 통합하는 교통 • 정보인프라 구축 •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보전 및 자원개발 촉진 •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위한 문화관광산업 육성
광주광역시	동북아시대 서남권 첨단과학 · 광산업 · 문화중심도시 건설	• 산학연체계가 구축된 첨단과학 • 광산업중심도시 육성 • 문화예술과 디지털기술이 접목된 문화중심도시 조성 • 자연과 문화, 첨단기술이 조화된 환경생태도시 조성 • 인권 ·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인권 도시공동체 형성	• 산학연체제 구축을 통해 기술개발 및 산업클러스터 형성 •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기반 구축 및 문화경관 창출 • 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환경관리 • 민주 · 인권 도시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민중심의 사회적 환경 구축 • 첨단광산업 · 문화 중심도시에 맞는 도시공간 및 입지환경 조성 • 도시발전 및 기본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체계 구축
전라남도	동북아 물류 · 관광 · 미래산업 중심지 육성	• 동북아 물류 · 교역의 중심지 개발 • 동북아 관광중심지 육성 • 전통산업과 첨단미래산업의 조화로운 발전 • 친환경 고소득 농수산업 육성	• 동북아 물류 · 교역의 중심지 개발 • 동북아 관광중심지 개발 • 전통산업과 첨단미래산업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 친환경 고소득 농수산업 육성 • 복지수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

자료 : 전라북도,「제3차전라북도종합계획(2000~2020)」
전라남도,「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2005~2020)에 반영할 전라남도발전계획의 기본방향(안)」
광주광역시,「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2005~2020)에 반영할 광주발전계획의 기본방향(안)」

이러한 기조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5대 발전전략을 설정, 추진하고 있다.

첫째, 동북아 물류 · 교역의 중심지로 개발한다. 이를 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목포권 신개방거점 육성, 육 · 해 · 공 복합물류체계 구축(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망 구축, 대량 · 안정 수송의 철도 건설, 국제물류 · 교역의 거점공항 · 항만 건설, 내륙복합화물터미널 건설 등 추진, 광양컨부두 배후부지 조기 개발, 율촌자유무역지역 지정 ·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둘째, 동북아 관광 중심지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물, 섬, 해안선을 활용한 국제적 해양관광 거점화(해양레저타운 건설 등), 다도해 해양관광 및 전통 남도역사 · 문화의 관광자원화,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및 국도 77호선 조기 완공으로 다도해 접근성 제고, 체험형 농 · 산 · 어촌 관광상품 개발 및 영산강유역 역사문화 클러스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셋째, 전통산업과 첨단미래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기존산업(중화학, 조선, 철강)과 미래전략산업(IT벨리 조성, BT, NT, ET, 소재, 우주항공, 물류산업)의 조화로운 육성, 조선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해초, 약초를 이용한 한방 바이오산업 육성 및 기능성 식품종합지원단지 조성, 획기적인 투자환경 개선으로 투자매력도 제고, 기업도시 유치,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신기술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넷째, 친환경 고소득 농수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체계화된 친환경 농업 및 청정수산업 육성으로 품질 · 브랜드파워 제고, 생물농약 · 비료 연구개발 및 첨단농업 · 벤처농업 중점 육성, 농산물 연구 · 생산 · 가공 · 판매 · 관광기능의 집적화 및 가공유통회사 설립,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신유통질서 확립(직판장 설치), 새로운 농촌 진입인력 육성 및 특색 있는 농외소득원 발굴 ·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다섯째, 복지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및 자활 · 자립능력 배양, 노인복지 증진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확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 깨끗한 물관리와 체계적인 수질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4) 전라권의 미래상

전라권의 21세기 미래상은 중앙정부가 신행정수도 이전에 비견되는 국가균형발전의지를

실천하고, 지방에서도 지속적으로 혁신발전역량을 강화하고, 상기와 같은 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간다면, 기존의 소외지역의 실상과 이미지에서 벗어나 성장하는 발전지역으로서 면모를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북아의 중심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점, 광산업과 바이오산업 등의 첨단신산업, 그리고 전통문화자원과 오염되지 않은 생태 · 해양자원을 조화롭게 활용하면, 젊은 층이 모여드는 활기찬 지역, 특히 환경적 쾌적성과 문화적 생활여건 등 여유로운 삶의 공간으로 지역정주기반이 구축되어 「첨단기술, 생태환경, 문화기반을 고루 갖춘 활력있는 전라권」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혁신성과 일자리가 풍부한 활력있는 새로운 국가적 성장거점으로 자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산업화를 통해 농어업이 새로운 미래산업화되는 생태영농지대가 형성되고,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영상산업, 광산업, 디자인산업, 생명산업, 조선산업 등 첨단 · 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지역산업 고도화와 지역내 고급일자리 창출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둘째, 동북아경제권의 물류 · 산업 · 관광 거점지역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국제항만, 공항 등 국제적 교류시설을 중심으로 국제교역 업무도시 기반이 확대되고, 광역교통 · 정보인프라기반 구축으로 동북아 지역과의 원활한 접근이 가능하고, 지역내 친환경적인 신교통수단이 도입됨과 동시에 초고속정보망이 갖추어진 동북아의 물류 · 산업 · 관광거점으로 자리할 것이다.

셋째,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룬 청정지역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태환경과 경관자원의 보존으로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생태 및 경관탐방의 명소가 되고 환경친화적 개발이 이루어져 주민생활의 쾌적성과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다.

넷째, 문화 · 전통 · 경관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여가관광지대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문화와 예술활동을 진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확보되어 다양한 국내외 문화이벤트가 개최되는 세계적 수준의 지역문화 · 예술 중심지로 발전할 것이다. 다섯째, 삶의 질과 창의를 보장하는 여유로운 지역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와 사회적 참여가 보장되고 여가 · 교육 · 주거 등 삶의 질이 확보된 고품격 지역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3. 전라권과 신행정수도 건설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은 전라권의 입장에서 국토공간의 재편과 함께 지역간 기능분담을 통해 특색있게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물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신행정수도가 건설된다고 해서 국가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데 유의해야 한다. 더욱이 신행정수도가 중앙의 부처나 기관의 지방분산 없이 충청권으로 이전하면 국가균형발전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충청권은 지난 4월 개통된 고속철시대 개막으로 수도권과 「분생활권」에 진입함으로써 생활권이나 경제권 측면에서 「준수도권」으로 편입되는 셈이며, 이에 따라 지역간 격차는 수도권의 3개 시 · 도와 여타 13개 시 · 도간 문제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의 6개 시 · 도와 여타 10개 시 · 도간의 문제로 옮겨지는 수도권의 外延확장 현상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2002년 12월 말 현재(표 10-10), 수도권의 면적과 인구의 전국대비 비중이 각각 11.8%, 47.2%인데, 수도권과 충청권을 합한 6개 시 · 도는 면적이 전국대비 28.4%임에도, 인구는 이미 전국대비 57.1%

[표 10-10] 수도권과 충청권의 인구 · 면적 비중(2002년 12월 말 기준)

전 국		수 도 권		수도권 + 충청권	
인구(천명)	면적(km2)	인구(천명)	면적(km2)	인구(천명)	면적(km2)
48,518	99,900	22,877(47.2%)	11,773(11.8%)	27,722(57.1%)	28,343(28.4%)

자료 : 전라남도,「2002 시 · 도비교통계」, 2003.

[표 10-11] 신행정수도 규모별 생산 및 고용변화

구 분	신행정수도만 건설			신행정수도 건설 + 공공기관 지방이전		
	인구(만명)	고용자수(만명)	GRDP(조원)	인구(만명)	고용자수(만명)	GRDP(조원)
수 도 권	▽51(▽49)	▽8.3(▽9)	▽75.4(▽2.8)	▽171	▽30.1	▽94,382
충 청 권	65(34)	11.6(7.5)	152.8(2.2)	60.3	12.4	32,168
영 남 권	*(4)	*(0.6)	(0.2)	71.5	11.1	40,603
전 라 권	*(4)	*(0.7)	(0.3)	34.4	5.5	21,342
기 타	*(0)	*(0)	(0)	4.9	1.1	4,692

자료 : 신행정수도연구단(2003. 12),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분석 및 사례조사 연구"
토지공사(조규영, 2004. 4),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와 균형발전효과 추정"
주 : * 표는 연구결과 없음. ( )는 조규영교수 연구결과

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50만 신행정수도 건설로 충청권으로 유입될 인구를 감안하면 6개 시·도와 여타 10개 시·도간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 즉 신행정수도가 중앙의 부처나 기관의 지방분산 등 보완사업이 없이 충청권으로 이전했을 때 나타나는 국가균형발전의 역효과는 이미 예고되어 왔다. 〈표 10-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신행정수도만 건설할 경우 충청권은 인구 65만명이 증가하고, 고용자수가 11만6천명 증가하며, GRDP는 무려 152조8천억원이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긍정적 효과는 충청권에 집중되고, 전라권 등 나머지 지역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전술한 중앙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추진될 때 비로소 수도권의 인구와 자본이 지방으로 골고루 배분되는 국가균형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국 이래 가장 규모가 큰 국책사업인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외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다극화된 국토공간구조 설정, 호남고속철도 조기 건설, 전라권에 수도권에 비견되는 대규모 집적경제기반 확충을 통해 동북아 경제중심지 육성, 그리고 지방중심전략이 효율적이라는 중앙정부의 새로운 인식 등의 정책이나 발상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로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 감소하고, 영남권과 호남권(전라권)의 인구는 각각 72만여명과 34만여명이 증가할 것이라는 논거도 신행정수도 건설과 동시에 수도권의 중앙공공기관이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분산시켰을 때 나타나는 효과라는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1)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극화된 국토공간구조 설정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구조는 지난 '60년대 경제개발 이후 「경부축」중심 구도로 지속되다가 '90년대 「해양입국」실현을 목표로 「U자형」구도를 표방한 적이 있으며, 「제4차국토종합계획」에는 「U자형」의 3연안에 3내륙축을 첨가한 「3×3」구도가 반영되어 있다. 「경부축」구도는 서남권 소외로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켰다는 평가이고, 「U자형」이나 「3×3」구도는 시행도 못해 본 상태이다.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된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기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면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토대로서 다극화된 국토공간구조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행정수도와 낙후정도가 심한 지역과의 연계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설정해야 한다. 이는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논리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토공간 재편의 기본방향은 충청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강원권, 동남권, 서남권(전라권)의 다극화된 「環狀型」구도로 재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가운데서도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도시 · 지역간 네트워크체계 형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지역간 연계와 네트워크체계의 전제는 자원의 공유화와 이를 바탕으로 지역적인 전문화와 특성화를 추구하고, 이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간 협력과 협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국민의 정부 시절 중국과 동남아 진출거점이자 이들 지역의 관광객 유인을 목표로 수립한, 목포~부산간에 분포되어 있는 천혜의 다도해와 남해안의 자연 · 역사 · 문화자원을 활용한 「남해안국제관광벨트」조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를 서해안과 동해안으로 확대 발전시켜 3연안을 개발함으로써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등거리」의 균형적 연안개발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호남고속철도 조기 건설

1990년대 이후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도로체증에 의한 사회적 손실이나 물류비용의 급증에 따라 교통망의 근간이 자연발생적으로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 속에 지역내 · 외 연계성 강화 및 통행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는 수도권 등 타권역과의 접근도는 물론, 권역내 접근도를 제고하여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호남고속전철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호남고속전철이 개통된 지 불과 5개월여가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으나, 지역발전을 촉진하기보다는 시행착오적 문제점들이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의 공동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주요 문제점은 연계교통체계 미형성, 운행간격 증대, 상대적 고요금, 굴곡노선으로 인한 저속 운행, 좌석 불편 등의 이유로 고속철 이용객이 당초 예상보다 적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환승센터 및 연계교통망을 중심으로 한 연계교통체계 미형성으로 물리적 ·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수요부족을 이유로 운행간격이 확대되어 이용객의 시간적 필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저속 운행으로 인한 과다 소요시간으로 이용기피현상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고속철 요금이 절대적으로 고요금 수준으로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속철도와 고속전철 요금이 차별화되지 못하고, 현재의 고속버스요금체계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아 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워 고속철의 대중화 실현이 어려운 실정이다. 건설비가 과도하게 소요되고, 운행소요시간이 짧게 소요되는 고속철도와 상대적으로 적은 건설비에 운행소요시간이 긴 고속철의 요금체계가 차별화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새마을호 요금의 1.25배, 항공요금의 70%인 고수준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고속철도와 고속철의 요금이 차별화되지 못한 점은 고속버스요금과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나타난다. 고속버스요금은 서울~동대구 구간이 서울~광주 구간보다 400원이 비싸지만, 고속철요금은 서울~대구 구간이 서울~광주 구간보다 오히려 1,700원이 저렴하다(표 10- 12).

[표 10-12] 고속철과 고속버스 요금 비교

구 간	운행소요시간(분)	우등고속버스요금(원)	고속철요금(원)
서울~대구	90분대	19,600	34,900
서울~광주	150분대	19,200	36,600

[표 10-13] 고속철 정착구간별 소요시간의 비교

철도구간	연장(km)	2004년	2010년	새마을호 소요시간	단축시간 (2004년)	단축률 (2004년)
서울~천안아산	96.3	34분	34분	60분	26분	43.3%
서울~대전	159.2	49분	47분	1:32분	43분	46.7%
서울~동대구	292.4	1:39분	1:20분	3:03분	1:24분	45.9%
서울~부산	409.8	2:40분	1:56분	4:10분	1:30분	36.0%
서울~익산	243.0	1:38분	1:38분	2:39분	1:01분	38.4%
서울~광주	352.0	2:38분	2:38분	3:52분	1:14분	32.3%
서울~목포	411.4	2:58분	2:58분	4:42분	1:44분	36.9%

자료 : 철도청 내부자료

호남고속철의 광주~대전구간은 전철화 사업 추진 시 전철화의 선행조건인 선도 계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속 운행하고 있다. 심지어 기존 새마을호보다 저속인 시속 80km로 운행하기도 한다. 경부고속철도가 최고시속 300km로 운행되면서 서울~대전 구간은 47~49분, 서울~대구 구간은 80~99분, 서울~부산 구간은 116분의 운행시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시속 200km로 운행한다던 호남고속전철의 경우 서울~익산 구간은 1시간 38분, 서울~광주 구간은 2시간 38분, 서울~목포 구간은 2시간 58분이 소요되며, 새마을호 대비 소요시간 단축률이 경부선의 40%대에 비해 호남선은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선도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속으로 운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행착오적 문제점 때문에 호남선의 승차율은 전국 평균 60%대의 절반인 31%로 경부선의 67%를 훨씬 하회하고 있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은 운행간격의 확대 문제인데, 이는「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중앙정부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수요부족이나 저속 운행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고, 철도당국이 이러한 수요감소를 이유로 운행간격을 더욱 증대시키면 수요는 급감하는 악순환을 나타낼 것인 바, 오히려 운행간격을 축소하고, 조기에 선도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수요를 증대시키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과거 새마을호의 경우처럼 (운행간격 확대 → 수요 감소 → 운행간격 더욱 확대 → 수요 더욱 감소)의 악순환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운행간격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수요부족으로 이유로 오랫동안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이 백지화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절대수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작 저속운행으로 인한 과다 소요시간, 고요금 등의 불편함 때문에 수요가 적음에도 이러한 수요부족을 이유로 호남고속철도 건설의 타당성을 낮게 평가하여 계속해서 검토단계에 머물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다.

참여정부는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만큼 국가균형발전에「국운을 걸고」국정의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진실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호남고속철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고자 한다면「당장의 수요나 경제성」보다는「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호남고속철도를 조기에 건설해야 한다.

3) 전라권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육성

전라권이 수도권으로의 인구나 자본 유입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도권이나 동남권에 비견할만한 경제 및 생활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이나 동남권은 상대적으로 도시화 및 산업선도지역으로서 다양한 경제, 문화, 생활의 기회와 경쟁력을 갖춘 집적 경제기반을 갖추고 있는 반면, 전라권은 농수산업 중심지역으로 이에 대응할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기 시작한 「광역권별 대도시의 산업수도 육성 및 권역별 중추관리 기능 강화」사업을 비롯해서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금번의 신행정수도 건설사업까지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40여년간의 장기간 소외가 지속되어 경제적 활력이나 동력이 취약한 전라권 경제가 상기 법령이나 계획에 의해 활성화될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생산 · 소득기반 취약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유출되어 부분적으로 20%대의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라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떠난 사람과 자본의 유입을 기대하기 힘들다.

전라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버금가는 특단의 조치가 추진되어야 한다. 「기업신도시」나 「100년 무상임대형 국제자유생산기지」같은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을 추진하여 전라권 경제 활성화와 함께 동북아경제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전라권은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으로서 잠재력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중국 교류 · 협력전진기지로서의 잠재력과 호남고속철 개통으로 전국 어느 곳과도 「2시간 생활권」에 진입한 전라권의 적정지역에 전라권 경제의 거점이자 동북아경제권의 산업중심으로 대기업 다수가 입지(클러스터화)될 수 있도록 기업활동 최적의 거점을 건설하여 동북아 기업특구로 육성해야 한다. 예컨대 「기업신도시」나 「100년 무상임대형 국제자유생산기지」등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기업신도시

대기업 그룹 차원의 이전을 목적으로 대기업에 각종 세제혜택과 금융 지원을 과감히 부여하고, 도시개발권, 토지수용권 등을 부여하여 대기업 주도 하에 산업시설, 주거, 학교, 병원, 복지시설을 갖춘 100만~1천만평 이상 규모의 자족도시를 의미한다. 중앙정부도 이미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을 마련하여 「산업교역형(제조업과 교역중심도시)」, 「지식기반형(연구개발중심도시)」, 「관광레저형(관광 · 레저 · 문화중심도시)」, 「혁신거점형」의 4개 유형의 기업도시를 조성할 계획인 바, 군산 · 새만금지구, 영암 · 해남지구,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등에 관광레저형이나 산업교역형의 기업신도시를 건설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은 전라권 기업신도시 발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통제조업과 정보기술(IT) 등 미래산업형(일본 도요타시), 콘텐츠, 문화, 레저산업이 복합된 고부가가치형 서비스업(미국 할리우드), 산업시설과 연구개발(R&D) 시설이 집적된 R&D형(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시-에릭슨, 핀란드 울루시-노키아) 등의 유형을 벤치마킹하여 전라권 및 동북아의 산업여건과 입주기업의 여건에 적합한 모델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2) 100년 무상임대형 국제자유생산기지

21세기 새로운 개방의 핵심인 외국기업의 유치활성화를 위해 세계각국은 상기의 기업신도시보다도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경쟁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인센티브 규모나 질적인 측면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외국기업 유치가 활성화되기 어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특단의 방안으로 최소 100년 동안 토지를 무상으로 외국기업에 임대하고 파격적인 세제, 행정지원 지원조건 등을 제시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3면이 바다인 우리 국토의 특성과 동북아 지정학적 잠재력을 살려 서해안과 남해안을 끼고 있는 전라권에 외국기업이 자유롭게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동북아 자유생산기지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향후 국토경제권을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서남권(전라권), 강원권이 골고루 잘사는 구

도로 재편성하고, 동북아경제권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동북아경제권의 지리적 중심지역이면서도 지금까지 가장 소외된 전라권의 획기적인 발전전략을 구상·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라권의 광역거점인 「전주·군장권 광역개발권역」, 「광주·목포권 광역개발권역」,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권역」을 우선 개발해야 한다. 인근 도시가 가지고 있는 하부구조를 최대한 이용하여 공해가 적은 기술집약형 첨단산업을 배치해야 한다. 특히 지역산업의 기술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자유지역」과 「R&D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리적으로 지근거리에 있는 상해 인접지역에 조성 예정인 고부가가치산업기지를 겨냥한 공업지역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전라권 개발사업의 완결판으로 충청권의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전라권에 21세기형 「컴퍼니 뉴타운(기업신도시)」나 「100년 무상임대형 국제자유생산기지」건설이 필요하다.

4) 지방 중심전략이 효율적이라는 중앙의 새로운 인식 필요

지금까지 수도권에 과다 집중되고, 전라권과 같은 지역의 발전이 정체된 것은 지역의 입지적 특성이나 실정을 감안한 전국토공간의 균형적인 활용이라는 대명제는 도외시한 채, 당장의 수요가 충족되는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는 중앙정부의 근시안적 압축성장정책의 귀결이다.

다행히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방 우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틀을 마련,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도 「2만불시대」조기 진입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명분 하에 당장의 수요나 효율성을 앞세운 수도권 중시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러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과도하게 인·물적자원이 집중된 수도권이 소외된 지방보다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당장의 수요와 효율성을 내세워 지방투자에 인색한 일부 중앙부처는 '그렇다' 고 답하겠지만, 반대의 결과도 도출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난 20년간의 지역간 투자의 변화가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에 의거하여 분석하고, 미래의 전망에 대해 도출한 시뮬레이션 결과

[표 10-14]를 보면, 향후 전국에서 차지하는 지방의 투자비율을 현재보다 5% 포인트 증대시킬 경우 현재의 추세 경우보다 국내총생산액(GDP)을 단기적으로는 0.10%, 중기적으로는 0.14~0.19%, 장기적으로는 0.25% 증대시키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이는 수도권의 인구분담율을 현행의 추세연장의 경우보다 단기적으로는 0.16% 포인트, 중기적으로는 0.33~0.50% 포인트, 장기적으로는 0.69% 포인트 감소시켜 수도권의

[표 10-14] 총투자비의 지역배분 변화에 따른 국가경제 효율성 및 지역간 균형성 효과 추정

총투자의 수도권 · 지방간 배분	단기 (1~3년)	중기 (4~6년)	중장기 (7~10년)	장기 (11~15년)
총투자의 지방 비중을 5%포인트 증가할 경우				
• 1인당 국내총생산(%)	0.10	0.14	0.19	0.25
•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 점유율 변화(%포인트)	△ 0.16	△ 0.33	△ 0.50	△ 0.69
총투자의 수도권 비중을 5%포인트 증가할 경우				
• 1인당 국내총생산(%)	△ 0.10	△ 0.15	△ 0.21	△ 0.28
•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 점유율 변화(%포인트)	0.18	0.33	0.50	0.69

자료 : 박양호,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방안, 2003. 10 재인용

과밀 해소 및 지역간 균형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수도권으로 투자를 증대시킬 경우 오히려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지역간 불균형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향후 전국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의 투자비율을 현재보다 5% 포인트 증대시킬 경우 현재의 추세 경우보다 국내총생산액(GDP)을 단기적으로는 0.1%, 중기적으로는 0.15~0.21%, 장기적으로는 0.28%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이는 수도권의 인구분담률을 현행의 추세연장의 경우보다 단기적으로는 0.18% 포인트, 중기적으로는 0.33~0.50% 포인트, 장기적으로는 0.69% 포인트 증가시켜 수도권의 과밀악화, 지역간 불균형을 가속화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향후 지방의 투자증대는 국가경제 효율성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균형성에도 이바지한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이처럼 수도권의 경쟁력이 약화된 요인 중에는 투자사업비에서 차지하는 용지가격의 비중이 지방보다 4~5배 높고,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체증으로 인한 불경제적 폐해가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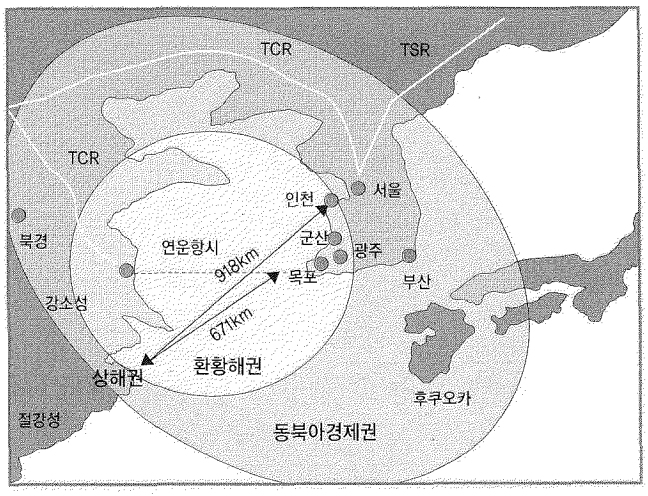
이제 중앙정부는 당장의 수요나 효율성을 중시하여 수도권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효율적으로 제고시킨다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앙정부는 국가경쟁력은 지역별로 발전잠재력이 정확히 평가되고 이러한 지역부존자원의 합리적 배분에 따른 정부의 형평성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때 가장 효율적으로 제고된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결국 지금까지 뒤쳐진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우선, 지방중심의 국토개발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중앙정부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4. 동북아경제권시대의 전라권

1) 전라권과 동북아경제권

지난 '8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상반된 두개의 조류가 공존하는 형태로 변모해 오고 있다. 하나는 모든 국가에게 혜택과 편의가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무차별주의」, 즉 다자간협상의 원칙에 입각한 WTO(세계무역기구) 시대이며, 다른 하나는 지난 1980년대 이래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국경을 초월한 「지역주의」심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흐름에 비추어 전라권의 입장에서는 특히 후자인 지역주의에 관심을



〈그림 10-4〉 통합개발권

가질 필요가 있다. 동북아시아에서도 경제블록 형성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름아닌 한국 · 중국 · 일본 3국에 의해 중국 동해안, 한반도 서남권, 일본 남부지역을 대상범역으로 하는 「동북아경제권」형성 움직임이다. 이들 3국은 경제발전수준, 산업구조, 자원의 부존상태 등에서 상당 부분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 이들을 연계시키면 동북아시아지역의 경제발전잠재력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막대한 자본과 선진기술, 중국의 거대한 인력자원, 풍부한 자연자원,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 그리고 한국의 개발경험, 경영관리기술 등이 연계되면 동북아경제권의 형성효과는 지대할 것이다. 일찍이 아놀드 토인비(A. Toinbee)의 예언처럼 동북아경제권이 형성되면 세계경제의 중심이 대서양권에서 태평양권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그림 10-4).

동북아 3국의 인구규모는 2003년 현재(표 10-15), EU(유럽연합)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합한 인구의 2배에 이르고 있으며, 3국의 GDP는 2002년 현재, 총 5조7610억달러(일본 3조9,770억달러, 중국 1조2370억달러, 한국 5,470억달러)로서 이미 세계경제에서 한 · 중 · 일 3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무시할 수 없으며, 특히 중국의 고도성장을 감안하면 동북아경제권이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부상하는데는 길지 않는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0-15] 동북아 3국과 주요 경제권 비교

구 분	동북아 3국				EU (15개국)	NAFTA (3개국)
	한 국	중 국	일 본	계		
GDP(십억달러)	547	1,237	3,977	5,761	8,642	11,865
무역규모(십억달러)	373	851	855	2,079	5,576	2,891
인구(백만명)	48	1,304	128	1,480	429	372

자료 : 통계청,「국제통계연감」, 2004
주 : GDP는 2002년, 무역규모는 2003년, 인구는 2003년 장래인구임.

이러한 동북아경제권의 형성이나 발전과정에는 장애요인이 적지 않다. 圈域內的 차원에서 구성국간의 정치 · 경제적인 이질성 등으로 인해 경제권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클 것이라는 구조적 문제점 외에 GDP 규모에서 한 · 중 · 일 3국의 70% 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일본의 소극적 자세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경제권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형성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북아경제권의 한국 측 범역의 중심지역인 전라권의 입장에서는 중 · 장기적으로 이에 대비하는 노력을 경주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대중국교류 · 협력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2) 전라권과 대중국 교류 · 협력

이처럼 동북아경제권의 형성이 중 · 장기적 과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은 중국과의 경제교류 · 협력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시점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경제의 중심을 향해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경제는 '90년대 후반부터 계속해서 7~8%대의 고도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인구는 2003년 13억명에서 2050년 16억명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그밖에 중국은 인구(1위), 쌀생산량(1위), 조강생산량(1위), 에너지 소비량(2위), 국토면적(4위) 부문에서도 세계 상위 랭킹을 기록하고 있다. 2001년 4월 중국의 투자환경 점검을 위해 중국을 순방한 유명한 경제학자 스테판 로치는 "중국은 강력한 개발성공사례이자 아시아와 세계경제에 오아시스 역할을 하며,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21세기 경제 및 투자의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할 정도이다.

그동안 중국의 발전은 자원동원에 의존한 「외연적 성장」이었으나 IT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내연적 성장」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이미 중국은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례로 중국은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 가전생산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3년 5월 4일 KOTRA가 입수해 발표한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의 「2003년 전자제품 나라별 시장점유율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01년 TV(세계점유율 36%), 에어컨(50%), 세탁기(24%) 등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12개 품목 가운데 휴대전화, 컬러TV, 노트북컴퓨터, 데스크톱컴퓨터, 휴대용개인정보단말기(PDA), DVD플레이어, DVD롬드라이브, 카오디오 등 8개 분야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마쓰시다의 TV, 도시바의 비디오, 산요의 DVD 플레이어 등 일본 가전업체들은 본사기능

을 아예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하겠다.

또한 중국은 2차산업에서의 급속한 성장으로 부분적이긴 하지만, 고소득층 인구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이 고도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GNP나 1인당 GDP 수준이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경제특구가 밀집되어 있는 동부 해안지역의 1인당 연수입은 7,145위안으로서 중부지역의 5,213위안, 서부지역의 4,837위안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전체의 5%에 해당하는 고소득층 인구는 한국 전체인구보다 많은 6천여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상위 20% 이내(2억5천여만명)의 소득이 전체 국부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중·상위계층은 소득수준이 높다는 점이다. 더욱이 중국정부는 「제10차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계획(2001~2005)」에서 2010년에는 GDP 수준을 현재의 2배 이상 증가시키고, 아울러 티벳 등 중서부 내륙지방의 집중개발을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중국 중·상위계층의 소득수준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전라권간 교류·협력 과정에서 현재까지는 전라권 발전에 기회적 요인으로만 기능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본격화된 대중국교류 증대가 전라권 발전에 부정적이고 도전적인 요인으로 기능한 점도 적지 않았다. 전라권은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기술산업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을 활용하여 교역이 증대되더라도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어려웠다. 전라권의 공업화가 현재까지는 일부 중화학공업 및 영세한 음식료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들 공업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에서 수입되는 품목은 농수산물과 일부 중소기업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오히려 지역의 관련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품목들의 가격은 예외없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동일품목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아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의 최대도시인 상해권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이 우리의 대응 부족으로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전라권은 대중국 교류·협력 측면에서 향후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지역발전에 기회적으로 작용할 잠재적인 요인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한·중 양국의 국토개발기조가 모두 연안지향적이어서 양 연안지역간 교류·협력 기반 구축이 용이할 것이다. 중국은 국토개발기조를 해안(중국 동해안)에 발전거점을 설정

한 후, 그 발전효과를 내륙지방에 파급시키는 「外引內聯」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한국도 그동안 경부축 등 내륙에 발전거점을 설정한 후, 그 발전효과를 외부 해안지방에 파급시키는 「內引外聯」정책을 추진해 오다가 지난 '90년대 후반 이후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U자형 국토개발공간구조를 정착시키고 있다. 따라서 양국의 「연안지향적 개발정책」이 부합되어 서해를 둘러싼 교류 · 협력기반이 빠르게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제4차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는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이라는 기조하에 「환남해축」, 「환황해축」, 「환동해축」의 3연안축을 설정하고 동북아를 겨냥한 국제적 개방적 생산교류기반 구축 차원에서 서해안~남해안으로 이어지는 신산업지대망 구축계획을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천, 아산만, 전주 · 군장권, 광주 · 목포권, 광양만 · 진주권의 신산업지대를 연계하는 계획이다. 이처럼 양국의 국토계획기조가 서해를 중심으로 「환황해경제권」을 겨냥한 개방적 생산교류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어 양국 지방단위의 교류 · 협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양국의 거점도시간 거리가 어느 나라, 어느 지역보다 가깝다. 중국의 최대도시인 上海와 목포와 군산간 거리가 각각 671Km, 790Km(인천~상해 918Km)로서 현재 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인천, 부산이나 일본의 나가사키보다도 가깝다. 더욱이 기개설되어 있는 광주~상해간 항공노선은 대중국 교류규모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대규모 교역은 해상운송에 대한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리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과 서해를 사이에 두고 서해연안지역의 대중국 수출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표 10-16] 전국 및 서해연안지역의 대중국 수출현황 추이

[단위 : 백만불, %]

구 분	전국(A)	서해연안지역(B)						B/A
		소 계	인 천	경 기	충 남	전 북	전 남	
1996년	11,377	3,970	559	1,658	759	239	755	34.9
1997년	13,572	4,158	624	1,384	884	247	1,019	30.6
1998년	11,944	4,387	503	1,611	968	217	1,088	36.7
1999년	13,685	5,317	481	2,218	1,054	257	1,307	38.8
2000년	18,454	7,549	852	3,497	1,548	278	1,374	40.9
연평균 증가율	12.4	18.0	9.7	22.1	40.1	18.9	53.1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내부자료.

2000년에는 4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상해권과 지근거리에 입지해 있는 전라권의 대중국 수출규모가 절대액에 있어서는 크지 않지만,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면, 전남이나 전북 모두 전국 평균증가율(12.4%)이나 서해연안지역 평균증가율(18.0%)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표 10- 16). 특히 전남은 가장 높은 53.1%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지리적 지근성 등을 활용한 대중국교역의 적지라는 잠재력이 발현되고 있는 증거이다.

셋째, 전라권은 중국연안과의 문화적 동질성이 커서 교류 · 협력 가능성이 높다. 전라권은 역대 전국 최대 유교문화의 번성지였던만큼 중국의 유교문화에 대한 친화력의 보유 정도가 크다는 측면에서 지역단위의 교류 · 협력 가능성이 높다. 향후 세계경제질서는 종교나 문화적 가치를 저변으로 하는 상이한 문화권간의 갈등 · 대립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일문화권이라는 변수는 경제협력 · 교류에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전술한 지리적 지근성과 동일문화권을 이유로 대규모 중국관광객 유입이 기대된다. 중국은 1년에 신혼부부수만 하더라도 1만쌍이나 탄생하며, 전체의 5%에 해당하는 고소득층 인구는 물론이고, 고도경제성장으로 소득수준이 급상승하고 있어 대규모의 해외여행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고 내륙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전라권을 많이 찾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초창기 해외여행이 동남아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3) 전라권의 효율적인 대중국 교류 · 협력 추진전략

문제는 이러한 대중국 교류 · 협력상의 기회적 요인이 저절로 전라권 발전에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민선자치가 정착되었다고 해서 지역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응 여하에 따라 지역발전의 성패가 갈라진다는 사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제조업과 문화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전라권이 공동대응 방안 부문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응방안들을 제시한다.

(1) 상호 보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재-부품산업 육성

중국의 제조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급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이 IMF 경제위기를 맞아 주춤거리고 있는 동안 중국은 꾸준히 제조업을 진흥시켜 왔다. 이에 따라 중국은 범용기술, 중저가부문에서는 이미 한국을 추월한 상태이다. 백색가전, 섬유(의류 · 직물), 신발의 생산 · 수출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발전설비, 플랜트 건설 등의 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육박해 있으며, 범용기계의 기술수준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일부 중화학공업과 고부가가치부문은 5년 이내에 한국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합섬, 디지털 가전, 첨단공작기계, 그리고 철강산업의 기술력은 5년 이내 한국과 대등해질 전망이다. 현재 중국의 철강 생산능력은 세계 1위로 부상했다. 결국 중국은 대부분의 주력산업에서 최장 10년 이내에 한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거나 추월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문은 5~10년 이내 한국과 경쟁관계에 들어서고, 양산 조립산업인 자동차는 10년 이내 한국과 대등해질 전망이다. 10년 후에도 한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문으로서 반도체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이 부문도 안심할 사항이 아니다.

[표 10-17] 한국과 중국의 주력산업 경쟁력 추이

총투자의 수도권 · 지방간 배분	5년 이내 대등할 부문	10년 이내 대등할 부문	10년 후에도 한국이 우위 유지 부문
백색가전(중국 1위, 한국 5위), 섬유, 신발(중국 1위), 농기계	함섬, 디지털가전, 첨단공작기계, 철강	정보통신,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반도체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제 302호).

따라서 전라권의 제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대응전략은 전라권과 비교적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적정교류지역을 선정, 그들 지역의 주력산업, 발전수준, 부존자원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상호 연계나 보완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적정교류지역은 중국 상해를 중심으로 남북에 인접해 있는 浙江省과 江蘇省을 중심으로 한 황해연안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지역은 전라권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중국 「국가계획위원회」가 권역별로 차별적인 지역개발정책과 산업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발표한 10대 경제권 중의 하나인 「양자강델타경제권」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황해연안지역 11개 성 · 시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으며, 국가계획위원회는 이 지역을 중 · 고급부가가치 제조업

과 3차산업의 직접투자 대상지역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는 전라권과의 교류가 미미한 지역이지만, 앞으로는 첨단기술형이나 금융 · 서비스업종에서의 교류가능성은 크다 하겠다.

전라권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역의 성장거점에 새로운 산업지대를 조성하되, 지역내는 물론 동북아경제권내의 교류가 원활한 지역과 전 · 후방연관효과가 높은 산업을 배치함으로써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즉 최근 江蘇省과 浙江省을 중심으로 한 황해연안지역의 노동집약적 조립산업으로 파생되는 중간재의 수요를 겨냥하여 전라권에 부품산업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동북아경제권의 공업제품 교역중심지역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금융 · 물류서비스 및 각종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중심지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조업의 진흥전략 추진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보다도 전라권에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 즉 원료 · 부품공급업체, 대학, 연구소 등 관련조직체가 공존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중앙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와 「기업신도시」등을 차질없이 건설하여 전라권을 첨단광산업과 바이오산업산업 부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특화하여 서울에 집중된 수도기능을 분담하고, 해당산업군의 본사기능, 지원서비스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江蘇省과 浙江省을 중심으로 한 황해연안지역과 연계성이 높은 첨단산업지대를 조성하되, 해당분야에서 성취를 원하는 인재양성 및 정착의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실리콘벨리, 스위스 바젤, 이태리 몬테벨루나 등을 철저히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2) 문화관광개발을 통해 중국관광객 적극 유치

전라권이 아무리 대중국교류에 철저히 대비하더라도 1 · 2차산업에서의 열위를 만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격은 물론, 단계적으로 제품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대중국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1 · 2차산업에서의 열위를 보전하기 위해 중국의 대규모 인력을 유입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다름아닌 중국관광객을 전라권으로 적극 유인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수는 '98년 이후 매년 40% 이상씩 증가하여 2001년을 계기로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일본에 이은 「한국 방문객 2위 국가」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처럼 양적으로는 증가추세에 있지만, 질적으로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광업계 조사에 의하면, 중국관광객 중 상당수가 "다시는 오지 않겠다"라고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관광경험이 있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은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가 없는 3무의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2002 월드컵 기간중 중국관광객이 당초 예상치 6만5천여명에 크게 못미치는 3만5천여명에 불과한 것도, 이에 대한 반증이라 하겠다.

따라서 중국의 문화관광객을 본격 유인하기 위한 상품개발과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예컨대 중국인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관광상품으로서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중국어판 주요 지역 안내도, 한자 관광안내판 설치, 그리고 통역요원 배치 등의 관광인프라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규격과 디자인으로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와 관광인프라가 확충되면 향후 전라권을 찾는 중국 관광객의 수요는 전술한 바와 같이 대규모 잠재수요와 지리적 지근성, 그리고 문화적 동질성을 이유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2 월드컵 직전 중국 국영방송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방문의사를 물은 결과, 약 1억명이 방문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겠다.

이처럼 증가가 예상되는 중국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대비가 절실한데, 그 가운데서도 중국의 특히 신혼부부나 중·상류층이 선호하는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라권의 비교우위자원인 藝·義·味의 「3鄕」의 전통을 활용하는 방향에서 확충되어야 한다. 중국과 동일문화권인 유교문화, 5·18민주성지, 그리고 전통적인 맛깔스런 요리나 음식을 상품화해야 한다. 그리고 볼거리는 전국 최대의 해양·도서에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의 관광객 가운데 잠재수요가 내륙거주민 쪽에 많기 때문이다.

살거리를 위해서는 전라권의 거점도시인 광주, 전주, 군산, 목포, 여수 등지에 대규모 가전·의류센터를 확충해야 한다. 중국의 한국계 리서치 전문기관인 「차이나 리서치센터」가 2000년 12월 중국 네티즌 1천1백명(직장인 2백89명, 대학생 6백5명, 고교생 2백6명)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요 희망 쇼핑품목으로는 전자 · 디지털 제품이 첫째로 꼽혔으며(44%), 기념품(20%) · 지방특산품(15%), · 의류 및 장신구(10%) · 가전(7%) · 음악 및 영화 관련 CD(3%)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도 현재 외국관광객의 행선지는 80% 이상은 서울로 나타나고 있다. 동해안, 경주, 제주보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수가 훨씬 많다. 서울 가운데서도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의 가전 · 의류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입국하는 중국과 러시아인이 태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전라권에서도 거점도시의 재래시장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아 대규모 가전 · 의류센터를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중국관광객을 유인하는 첩경으로 판단된다. 신혼부부가 신혼여행도 즐기고, 자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염가에 양질의 가전 · 의류를 구입하는 것은 전라권이 「다시 찾고 싶은 지역」이자 이웃이나 친지에게 「권하고 싶은 지역」으로 오래도록 추억에 남는 경험으로 간직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기적 전략에 의해 관광수요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중 · 장기적으로 숙박시설과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인프라는 속성상 민간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해안과 서해안을 중국과 연결하는 「동북아크루즈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유람선은 여가시간에 순수관광유람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시설, 음식시설, 위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려한 관광지를 안전하게 순항 · 유람하는 선박운송이라고 개념지울 수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성행하기 시작하여 세계적 경기부양과 소득향상 및 근로시간의 단축 · 휴가의 장기화 등에 힘입어 유람 전문의 호화롭고 큰 객선의 출현을 이끌어냈으며, 1970년대 이후 세계의 항해인구는 매년 6%를 초과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광유람만을 목적으로 한 선박의 운항은 1997년 금강산 관광을 목적으로 시작한 금강호가 효시라 할 수 있다.

유람선은 그 출발이 대양을 횡단하는 호화여객선이었다는 점에서 「지루함을 달래고」, 「먹고 자고 꾸미는」, 「호화로운 시설수준」을 갖추고 있는 바, 일반적인 필수시설은 일류호텔과 같은 숙박시설, 식당, 바 · 라운지, 카지노, 메인라운지, 극장, 풀, 갑판(데크), 사무실, 의무실, 면세점, 미용실, 사우나, 대중탕, 그리고 헬스클럽을 비롯한 스포츠시설 등이 고루 갖춰져 있다.

전라권은 항해구역상 크루즈 운항에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크루즈 항해구역은 항만, 항로, 자원 등 3가지 기본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자원성에서 전라권은 풍경이 뛰어난 섬들과 연안육지의 관광자원이 많아 단기항해 유람에도 유리하다. 그리고 전라권은 유인도서가 상대적으로 많아 항로개설이 많은데다 비교적 고요한 해수면을 이루고 있어 유람선 운항 및 이용효과면에서 유리하다. 그 위에 전라권은 특수한 먹거리와 놀거리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행사나 모임터로서의 「레스토랑 크루즈」나 「파티 크루즈」에 매우 적합하다. 다음으로 항만조건도 양호하다. 전라권에 분포한 주요 거점항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항만은 군산, 목포, 광양항, 완도항 등을 들 수 있는데, 대부분 확장되었거나 확장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크루즈 기항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크루즈 운항에 양호한 조건을 갖춘 전라권에 1차적으로 국내 서남해연안을 범역으로 하는 크루즈루트를 개발한 후, 단계적으로 상해~남해안~후쿠오카(오사카), 산동성~서해안~남해안~후쿠오카(오사카) 등의 동북아 국제 크루즈루트를 개발 ·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박항을 시드니, 싱가포르에 대응하는 거점 크루즈항으로서 동북아크루즈 허브기능을 보유하는 국제미항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크루즈사업은 전라권의 관광개발에 있어서 최대 난제인 대규모 고품질의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대체함으로써 전라권의 관광개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02 월드컵 붐을 활용하여 지역 연고 프로축구팀을 활용하여 중국의 浙江省, 江蘇省, 廣東省 등 특정 省 연고 축구팀과 축구 정기전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를 계기로 광주 · 무안공항~상해간 항공노선과 중국~서 · 남해연안~일본간 크루즈를 통해 중국의 대규모 축구팬(치우미 8천5백만명)들을 전라권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3) 중국을 제대로 아는 노력 필요

이제 세계각국은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경제질서에 국가나 지역을 단위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다. 국가발전이나 지역발전 모두가 세계경제질서 변화의 틀 속에서 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국가나 지역간 경쟁분위기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전

라권의 발전도 당연히 동북아경제권의 틀 속에서 국가나 지역간 경제협력을 기조로, 한편으로는 선진제국의 견제와 후발국의 추격에 공동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과의 교류증대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전환점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물론 수년내에 동북아경제권이 형성되고 대중국교류가 우리에게 기회적인 요인으로만은 작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은 2010~2020년이면 세계경제를 선도할 것이라는 점과 역사 · 지리적 관점에서의 대중국교류의 가능성을 감안하면 향후 전라권 발전전략에서의 대중국 경제협력에 대한 우선순위는 미 · 일 등 여타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러한 경제협력을 통한 교류증대가 어느 일방의 이익만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지구촌은 각국, 각지역간 치열한 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동일한 경제권역내의 국가나 지역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과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시장을 대상으로 경쟁관계에 들어서 있으며, 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치열한 경쟁은 미국 등 선진제국의 통상압력에 빌미를 제공하여 양국이 모두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라권이 대중국 경제협력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역단위간 상호 보완이 필요할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양국, 양지역간 상호 이해증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양지역간에 진정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의 정립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이해관계는 경제부문은 물론 제도, 문화, 의식부문도 동시에 추진되어 양지역이 개별국가 내부의 고착성을 뛰어넘어 단일의 공동체로 확산될 때 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 지역간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연구를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79년 중 · 미간의 국교수립 전까지는 우리의 중국에 대한 연구는 한 두권의 인물평이나 중국 공산당사의 출간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1992년 한 · 중 국교 수립을 계기로 상당한 정도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지역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양국간, 양지역간 상호 이해증진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급작스런 교류는 그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한 · 중 양국은 단순히 동일문화권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상대를 자국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해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연구자료 자체의 확충은 물론, 각 연구기관간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보유자원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의 지역연구 부족이 비단 중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미국, 유럽, 일본 등에 대한 지역연구도 미진하다는 측면에서 차제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중국관련 전문연구자를 양성하거나 전문연구기관을 육성해야 한다. 중국과의 이해증진을 위해서 '80년대 이후 대학에 중국관련학과가 적지않게 신설되었으나, 주로 문학분야에 치우쳐 있어 현실적이고 생동감있는 연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양적 증가가 반드시 질적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할 전문연구자의 양성이나 연구기관 육성을 위한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일본은 중국에 대한 정식 국교수립이 없었던 때에도 꾸준한 관계 지속과 연구를 위한 전문연구자를 양성하고, 전문연구기관을 육성해 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작금의 중국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국내와 중국 현지에서 교류협력의 일선에서 종사하여 체득한 산 경험을 적절히 활용한 현실적인 성과나 업적의 필요성이 크다는 차원에서이다. 따라서 중국연구에 관련한 전문연구자, 전문연구기관, 자치단체, 그리고 관련업계가 상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건설적인 산학관연의 협동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중국과 전라권은 양국가, 양지역간 상호 이해증진이 전제될 때 경제협력을 통한 교류증대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知彼知己 百戰百勝"이라는 동양의 古代兵法을 명심해야 할 시점이다.



제1장
제주지방 - 과거와 현재

정광중 (제주교육대학교)

빈 면

제1장 과거와 현재

1. 지리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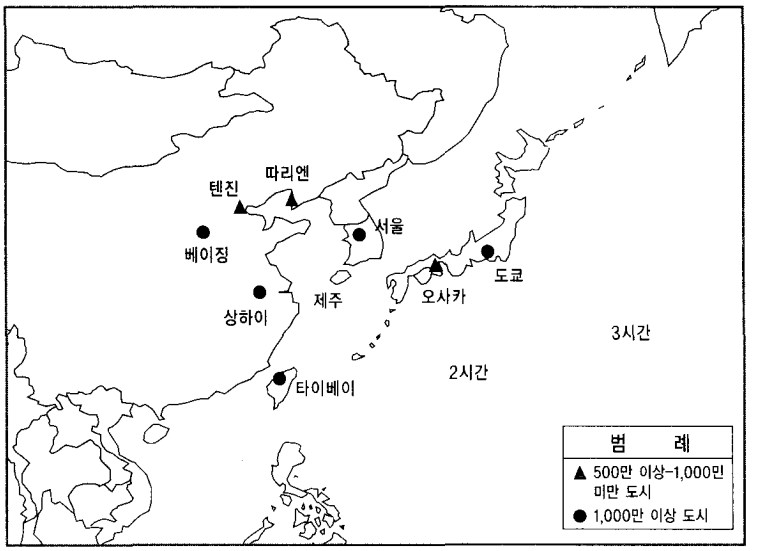
1) 위치와 영역

삼다삼무(三多三無)의 섬, 그리고 감귤과 관광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도 가장 큰 유인도이다. 제주도는 한반도의 서남단, 동중국해 상에 위치하는 화산도(火山島)로서 전라남도 목포시와는 직선거리로 약 142km, 부산광역시와는 약 286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그리고 일본의 쓰시마(對馬島)와는 약 255km, 큐슈(九州) 지방과는 약 265km, 중국의 상하이(上海)와는 약 528km 정도 떨어져 있다(그림 1-1).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동쪽으로는 일본의 큐슈지방, 서쪽으로는 중국대륙, 남쪽으로는 일본의 류큐제도(琉球諸島), 타이완(臺灣) 및 필리핀제도, 북쪽으로는 한반도와 마주하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지리적 위치에서 볼 때, 제주도는 선사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주변지역과 인접국가를 잇는 해양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지적할 수 있다.

제주도의 총면적은 1847.2㎢(2002년)로서 한국 전체면적(2002년, 99,585㎢)의 1.9%를 차지한다. 면적의 크기를 시 · 군별로 보면, 제주시 255.5㎢(제주도 전체면적의 13.8%), 서귀포시 254.6㎢(13.8%), 북제주군 721.8㎢(39.1%), 그리고 남제주군이 615.3㎢(33.3%)를 차지한다(표 1-1). 시 · 군별 하위 행정구역의 편제를 살펴보면, 제주시는 19개의 행정동(법정동 40개), 서귀포시는 12개의 행정동(법정동 22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제주군은 4읍 3면 96리, 남제주군은 3읍 2군 76리로 구성되어 있다(제주도, 2003a).

제주도의 수리적 위치는 [표 1-2]와 같이, 본도(本島)에 한정했을 때는 N 33°11′27″~33°33′50″, E 126°09′47″~126°56′57″이고, 부속도서를 포함했을 때는 N 33°06′37″~34°00′00″, E 126°08′43″~126°58′20″로 나타난다. 아울러, 제주도의 최장 연장거리는 동서로 73.2km, 최단 연장거리는 남북으로 41.1km이며, 해안선의 연장거리는 253km이다. 제



〈그림 1-1〉 제주도의 지리적 위치

자료 :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2001,「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 p.3.

주도에 소속된 부속도서는 유인도가 8개, 무인도가 55개이며, 이들의 총면적은 15.6㎢이다. 나아가 8개의 유인도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2002년 현재 5,693명으로 집계된다(제주도, 2003a).

보통, 제주도는 중앙부에 위치한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산북지역(山北地域)'과 '산남지역(山南地域)'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축으로 하여 '동부지역'과 '서

[표 1-1] 제주도의 행정구역 구성현황(2002년)

지 역 별	면 적(㎢)		읍·면·동 수				통·리 수			반(班) 수
		비율(%)	읍	면	동		통	리		
					행정	법정		행정	법정	
합 계	1847.2	100.0	7	5	31	62	658	172	133	5,504
제 주 시	255.5	13.8	-	-	19	40	541	-	-	2,696
서귀포시	254.6	13.8	-	-	12	22	117	-	-	730
북제주군	721.8	39.1	4	3	-	-	-	96	84	1,295
남제주군	615.3	33.3	3	2	-	-	-	76	49	783

자료 : 제주도, 2003a,「제43회 제주통계연보」

[표 1-2] 제주도의 수리적 위치

구 분	극지점명	수리적 위치
동 단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북제주군 우도면 조일리	E 126°56′ 57″ E 126°58′ 20″
서 단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한장동)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차귀도)	E 126°09′ 47″ E 126°08′ 43″
남 단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	N 33°11′ 27″ N 33°06′ 37″
북 단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북제주군 추자면 시루여	N 33°33′ 50″ N 34°00′ 00″

주 : 상단은 제주도 본도만의 수치이고, 하단은 부속도서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 제주도, 2003a,『제43회 제주통계연보』

부지역' 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산북지역은 제주시를 기점으로 하여 서쪽으로는 애월읍, 한림읍 및 한경면 등 2읍 1면으로 구성되고, 동쪽으로는 섬 지역인 우도면을 제외하면 조천읍과 구좌읍 등 2개읍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동부지역은 조천읍, 구좌읍, 우도면,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의 4읍 2면이 포함되고, 서부지역은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의 3읍 2면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역구분의 사례는 기상정보(특히 기온, 강수량, 바람)를 비롯한 도내의 다양한 생활정보를 알리는데 자주 활용된다. 나아가, 제주도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해발고도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해발고도의 의한 구분방법은 '해안지역(200m 이하 지역)', '중산간지역(200~600m 지역)' 및 '산간지역(600m 이상 지역)' 으로, 이 방법은 지역개발이나 학술적인 연구차원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2. 역사와 문화

1) 제주의 역사

제주도는 선사시대를 걸쳐 약 1100여 년 동안 독립국인 탐라왕국의 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1105년에 이르러 고려의 한 군현(郡縣)인 탐라군(耽羅郡)으로 편입된 이후는 고려와 조선이

라는 중앙조정의 통제를 받으며, 오랜 세월 동안 변방(邊防)으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과거의 역사를 더듬어볼 때, 제주도는 중앙으로부터는 그다지 대접을 받지 못한 지역적 이미지가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은 제주도를 단순히 토지의 가치적 측면을 포함하는 면적이나 중앙과의 거리적 측면을 반영하는 절대적 위치(site)에서 보면 당연지사라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고고학적 유물이나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인간생활의 발자취를 더듬어 가는 과정에서는 반도부의 역사에 못지 않게 중요한 측면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빌레못 동굴유적과 서귀포 천지연동굴유적 등과 같은 구석기시대의 유적은 물론 고산리 · 김녕리 · 북촌리유적 등 신석기시대의 유적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으며, 역사시대로 접어들면 탐라국 시대로 구분되는 섬나라 왕국(王國)이 12C초까지 이어지며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형성하며고 있었다(김일우, 2000). 궁극적으로, 이러한 배경은 제주도를 인간생활의 터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 1-2〉는 제주도내 선사시대의 유적지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 전역에 걸쳐 선사시대의 유적들이 발굴되고 있는데, 이들 유적의 시대는 크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및 초기 철기시대의 유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국립제주박물관, 2001). 이들 유적을 통하여 선사시대의 제주도 내 거주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로, 전체적으로 보면 유적들은 해발고도 100m 이하인 해안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시대적으로 볼 때는 초기 철기시대의 유적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지석묘(고인돌)라는 점이다. 특히, 남서부에 위치하는 가파도에는 160여기의 지석묘가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어서, 당시의 사회적 실태나 정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유적이 되고 있다. 셋째로는 유적의 입지나 분포밀도에서 볼 때, 동부지역에 비하여 서부지역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현시점에서는 다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선사시대의 제주도에는 서부지역의 해안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특히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가족단위의 집단을 이루며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초기 철기시대(B.C. 2~A.D. 2)로 접어든 이후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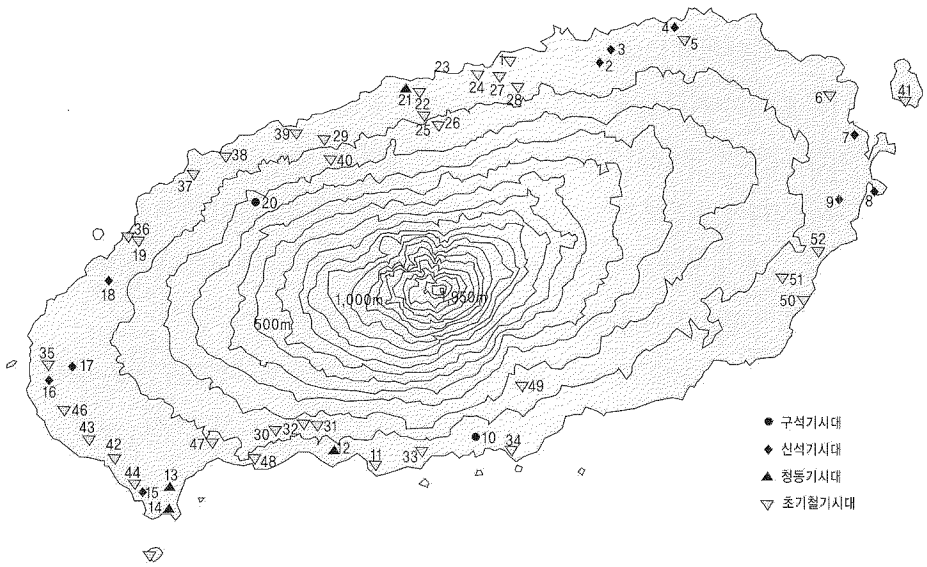
〈그림 1-3〉은 역사시대인 탐라시대,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에 걸친 유적지의 분포를 나타

낸 것이다. 〈그림 1-2〉의 선사시대와 비교할 때, 시간적 차이점은 물론이고 비록 시대는 다르다 할지라도 인간행위의 연속성에 따른 공통점도 파악할 수 있다. 첫째로, 역사시대 이후에도 선사시대에 이어 사람들의 집단적인 거주지나 활동 거점지는 산북지역과 산남지역으로 구분되지만, 산북지역에서는 현재의 제주시(구제주)를 중심으로 애월읍과 조천읍을 중심으로 한 해안지역에 밀집하고 있으며, 산남지역에서는 서귀포시의 일부 해안지역과 안덕면 해안지역에 주로 밀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선사시대의 선사인들의 거주지나 활동범위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로, 선사시대와 비교할 때 서부 해안지역에는 유적지의 분포밀도가 매우 낮아진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유적지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거주지나 활동 거점지가 어느 특정지역으로 집중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지역과 화순-중문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에 많이 밀집된 실태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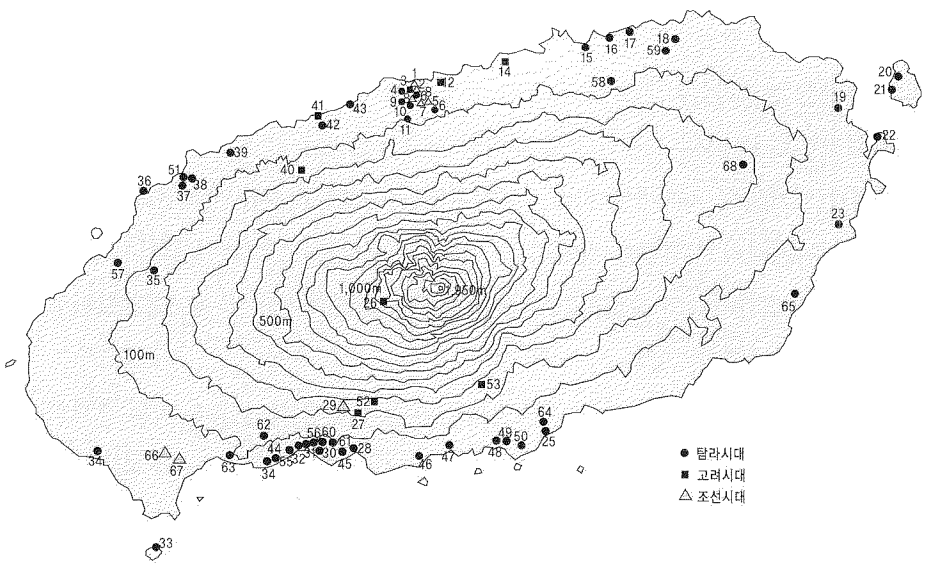
셋째로, 앞서 지적한 두 유적지의 밀집지역도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면,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산북지역의 제주시와 그 주변지구는 탐라시대,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의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반해, 산남지역의 화순-중문지역과 그 주변지역에는 탐라시대와 고려시대의 유적지만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서 조선시대의 유적은 극히 대표성을 지닌 것만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유적지 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거주지나 활동 거점지의 기능이 더욱 명확해지는 지역이 존재하는 반면, 특정시대에 이르면 특수한 사회변화에 의하여 거주지와 활동 거점지로서의 역할이 정지되는 지역도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시대에 따른 인간생활의 중심지가 특수한 요인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유적지의 분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해발고도 200m 이상의 지역에는 선사시대나 역사시대에도 유적이 거의 한정적으로 분포한다는 점이고, 해안지역에서도 산북지역의 일부지역과 산남지역의 일부지역에 분포밀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해안지역 내에서 거주지의 이동이나 집단화해 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림 1-2〉 선사시대 제주도의 유적지 분포실태

자료 : 국립제주박물관, 2001,『제주의 역사와 문화』, 통천문화사, p.256.



〈그림 1-3〉 역사시대(탐라 · 고려 · 조선시대) 제주도의 유적지 분포실태

자료 : 국립제주박물관, 2001,『제주의 역사와 문화』, 통천문화사, p.257.

마을의 성립에 따른 외형적인 모습이 오늘날과 같이 환상(環狀)의 형태를 띠기 시작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중요한 일면을 제시하자면, 역사시대로 접어든 이후 제주도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환상의 마을형태를 띠기 시작한 한 것은 탐라국 시대의 중 · 후기(5C 후반~10C)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 배경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탐라국 시대 중기(5C 후반~7C 후반) 이후에는 상대적인 인구증가에 의해 인구이동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해안지역의 여러 곳으로 소규모 마을들이 확산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더불어, 중 · 후기에 이르면서부터는 외부와의 교역도 한층 강화하게 되는 과정에서, 현재의 제주시의 1도, 2도 및 3도 지구에 자리잡은 중심마을의 사회적인 위치가 견고해지는 동시에, 주변마을의 경우는 규모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중심마을과 긴밀한 사회적 · 기능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체제 속에서, 대략 현재와 같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환상형태의 마을분포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정광중, 2002a).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배경을 덧붙이자면, 탐라국의 건국 초기부터 고려의 한 군현으로 편입되기 직전인 1105년(숙종 10)까지의 인구규모는 아무리 높게 계산해도 20,000여명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러 해안지역에 분포하는 마을의 규모가 오늘날과 비교할 때 훨씬 작은 규모라는 점이다.

어떻든, 제주도는 고려 숙종 10년(1105)에 당시 탐라국의 국호인 탁라(乇羅)를 폐지하고 고려의 한 영토를 의미하는 탐라군으로 개칭하면서 고려의 관리를 직접 파견 · 통치하기에 이른다(김봉옥, 2000). 고려 의종(毅宗) 7년경(1153)에는 탐라군을 탐라현(耽羅縣)으로 개칭하였고, 충렬왕(忠烈王) 26년(1300)에는 당시 제주목(濟州牧)에 속해 있던 현촌(縣村)을 14개의 현촌 즉 귀일, 고내, 애월, 곽지, 명월, 차귀, 산방, 예례, 홍로, 호촌, 토산, 김녕, 함덕, 신촌현을 두어 다스렸다. 이들 14개의 현촌과 더불어 고려 희종(熙宗) 7년(1211)에 만들어진 귀덕현을 더하면 현촌은 모두 15개로 구성되고 있었으며, 당시 대촌(大村)으로 구분되던 제주(제주시)를 합하면 고려 때 탐라주민들의 거주지는 16개의 군현지역에 집중적으로 형성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김일우, 2000). 그리고 지역이름이 탐라군에서 제주로 개칭된 것은 고려 고종(高宗) 10년경(1223)이다.

조선시대로 들어서면, 태종 16년(1416)부터 한라산을 분수령으로 하여 산북지역은 제주목이라 하여 목사(牧使)를 파견하였으며, 산남지역은 2개로 나누어 동쪽을 정의현(旌義縣), 서

쪽을 대정현(大靜縣)이라 정하면서 두 지역에는 현감(縣監)을 파견하였다(김봉옥, 2000). 이와 같은 제주도의 3읍 체제는 조선시대부터 일제 강점기로 접어드는 1910년까지 약 500여 년에 걸쳐 유지되고 있었다. 물론 그 사이에 행정단위의 개편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전체적으로는 3개의 지역으로 분할되어 행정과 통치가 이어지며 내려오게 된 것이다.

2) 제주의 문화

제주의 문화를 단적으로 잘 나타내는 문구로서 삼다삼무(三多三無)가 있다. 삼다는 돌, 바람, 여자가 많다는 것(石多, 風多, 女多)이고 삼무는 도둑, 대문, 거지가 없다는 것(盜人無, 大門無, 乞人無)이다. 여기서는 삼다의 요소를 토대로 하여, 제주도의 문화적 특성을 좀 더 심층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돌의 문화에 대해 살펴보자. 제주의 문화는 돌의 문화라 해도 좋을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돌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에는 돌문화 공원이 한창 조성 중에 있는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주주민들의 생활에 돌이 얼마만큼 중요한 요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겠다. 제주도의 돌은 반도부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현무암, 조면암 및 조면질안산암이 주를 이룬다. 이들 중 생활에 이용되는 것은 90% 이상이 새까만 현무암이다. 예를 들면, 보통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돌을 의미하는 담이 들어가는 어휘를 찾아보면 집담, 밭담, 산담, 잣담, 원담, 성담 등이 있으며, 돌(담)이 재료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건축용 재료, 생산용 재료, 생활 용구용 재료, 신앙생활 관련재료는 물론이고, 다소 특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통신 · 방어용 재료, 비석용 재료 및 기타 재료 등으로도 구분하여 접근해 볼 수 있다(김종석, 1998; 강정효, 2000).

[표 1-3]에 제시한 돌의 이용사례는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제주주민들이 항상 사용해 오던 것의 일부분을 소개한 것이다. 이 자료에서 명백히 파악할 수 있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돌이 매우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 정도이라면, 돌(현무암)은 단순히 재료의 차원을 떠나 지역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최근에는 주변에서 흔하게 얻을 수 있는 현무암인데도 조각작품의 재료로 활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이 경우 현무암의 크기에 따라서는 고가에 거래되기도 한다. 물론, 현재

는 현대식 물질문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표 1-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 대신 대형 건축물을 비롯한 도로 조성이나 밭담 조성 등에는 여전히 대량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제주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돌을 활용하는 지혜는 오늘날까지도 매우 뛰어난 일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바람의 문화와 관련해서도 제주도의 여러 문화적 요소와 연관시킬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제주도의 전통가옥을 대표적인 사례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제주도로 불어오는 바람은 독특한 주거문화를 형성케 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바람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의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전통가옥도 이제는 대부분이 사라져 버렸고, 그나마 전통가옥의 원형은 1984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성읍민속마을 내의 초가나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초가 등 극히 일부 사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형편이다.

[표 1-4]는 제주도의 전통가옥과 택지 안에서 바람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보면, 언제나 불어오는 바람을 극복하기 위한 시설은 지붕에서부터 집담, 올레, 이문간, 굴묵, 이중문, 풍채, 고랑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김기

[표 1-3] 일상생활에서 돌의 이용실태

	용 도 구 분	구 체 적 사 례
일반적이용	건축용 재료	집담(집울타리), 올레, 벽체, 댓돌, 물팡(팡돌), 눌굽, 구둘장판, 우영(채전)담, 정주석, 둥
	생산용 재료	밭담(밭울타리), 잣담, 원담(갯담), 돌테, 돌바퀴, 돌추, 연자마(웃돌, 알돌), 곰돌 등
	생활 용구용 재료	돌화로, 봉덕, 소줏돌, 돌등잔, 물확(빨래확), 돗도 리, 물통, 디딜팡, 돌 레, 풀 레, 돌방아, 돌절구, 돌확, 약 레, 기름틀 등
	신앙 생활용 재료	지석묘(고인돌), 산담, 동자석, 문인석, 망주석, 방사탑(防邪塔), 돌하르방, 돌미륵 등
특수적이용	통신 · 방어용 재료	도대불(돌등대), 연대, 성담(3읍성, 9진성, 환해장성) 등
	경계용 재료	목장경계(잣성: 하잣성, 중잣성, 상잣성), 시 · 군경계(제주시-조천읍 경계돌담), 마을경계(성읍리-가시리 경계돌담) 등
	비석용 재료	공덕비, 청송비, 불망비, 열녀비, 효녀비, 효자비 등
	기타 재료	등돌(놀이용), 댓돌(휴식용 공간) 등

자료 : 김종석, 1998,「제주도 전통사회의 돌(石) 문화」,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 강정효, 2000,『화산섬, 돌 이야기』, 도서출판 각 등에 의해 필자 작성.

덕, 1999). 가장 먼저 바람을 이겨내기 위한 제주도의 전통가옥은 지붕의 형태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의 초가지붕은 대략 경사도가 20~22° 로 매우 완만하고 용마름이 없는 것이 큰 특징이다(송성대, 2001). 특히 지붕의 재료인 띠(새)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엉을 우물정(井)자의 형태로 동여 메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집담(울타리)은 특히 해안가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처마의 높이(보통 1.7~2.5m)까지 쌓아 올려서 가옥 자체는 물론이고 실내를 보호하는 기능도 겸하게 한다. 제주도의 전통적인 주거공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올레의 경우도 길게 S자형으로 설치함으로써, 가옥의 실내를 보이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바람의 강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풍채는 대개 함석이나 띠를 재료로 하여 만든 직사각형 모양의 몸체를 가옥 전면의 처마에 매달고, 지면 쪽에는 2~3개의 나무 기둥으로 떠받치는 시설을 말하는데, 비바람이나 눈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 풍채는 몸체를 떠받치는 나무기둥으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가능한 한 풍채의 위치를 낮추어 바람이나 눈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며, 여름철에는 반대로 위치를 높여 많은 바람이 실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된다. 고랑채는 가옥의 뒤쪽에 설치되는 시설이며, 일종의 완충공간으로 강풍이나 냉기로부터 실내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김기덕, 1999).

끝으로, 여다(女多) 문화와 관련해서는 제주도 여성을 상징하는 해녀(잠수)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미 제주도의 해녀는 세계적으로 알려질 정도로, 제주도의 여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제주도의 해녀는 한 집안의 누이이자, 어머니이자, 할머니들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에 의해 입증되었듯이, 제주도의 해녀들은 척박하고 험난한 자연환경을 헤치며 자신과 가족들의 삶을 지켜온 생활전사(生活戰士)로서 평가되고 있다. 이 배경에는 해녀들이 집안 일은 물론이고 밭일과 잠수일(물질)까지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제주여성의 근면함과 억척스러움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김영돈, 1999). 해녀들의 물질작업은 가정경제를 상징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따라서 해녀들은 한집안의 가장(家長) 아닌 가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그러므로 제주도의 해녀들은 제주여성의 역사와 문화를 창조해온 주인공들이며, 나아가 그녀들의 생활상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제주문화의 한 모습으로 정형화하게

[표 1-4] 제주도의 전통가옥과 택지 내에서 바람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

시 설	분포지역	기 능
지 붕	도내 전역	유선형으로 만들어져 비바람으로부터 잘 견딜 수 있도록 함
집 담	도내 전역	처마 높이까지 담을 쌓아 바람을 차단하고 가옥전체를 보호함
올 레	도내 전역	도로변에서 마당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굴곡(S자형)을 두어 바람의 강도를 약화시킴
이문간	북사면 해안지역	부속 건물에 설치된 출입문으로 강풍을 약화시킴
굴 묵	도내 전역	원래의 목적은 겨울철을 위한 난방시설이지만, 구들(방)과 외벽 사이의 완충공간으로서 바람에 의해 구들의 온기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음
이중문	북사면 지역	구들 창문으로 강풍을 차단하여 실내 온기를 유지하며, 밀창과 거창으로 구성됨
풍 채	도내 전역	가옥 외부의 전면 상부에 설치하여, 비바람 등으로부터 실내를 보호함
고랑채	북사면 전지역 남사면 일부지역	상방의 뒷문 쪽 좌우에 설치하여 비와 강풍을 차단함

자료 : 김기덕, 1999,「제주도 기후와 관련된 전통 가옥 경관 특성」(건국대 석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필자가 일부를 추가 · 수정함.

된 것이라 지적할 수 있다(정광중, 2002b).

[표 1-5]는 1970년 이후 최근까지 해녀수의 변화와 더불어 해녀들의 연령층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근거를 두고 볼 때, 1970년 제주도의 해녀수는 14,143명으로 당시 제주도 여성인구(19만 329명)의 7.4%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2년 시점에서는 5,659명으로 1970년에 비하면 무려 8,484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주도 내에서는 해녀들의 지속적인 감소현상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우려는 시간이 흐를수록 해녀들의 연령이 고령화해 간다는 사실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연령구조를 검토해 보면, 2002년 5,659명의 해녀 중에서 30세 미만의 해녀는 단 2명뿐이고, 50세 이상은 4,688명(82.9%)이다(제주도, 2003b). 결국, 이러한 상황은 현재의 해녀들이 노령으로 인하여 물질작업을 그만두게 된다면, 앞으로는 제주도 내에서도 해녀의 모습을 쉽게 발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만약에, 제주도의 해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다면, 제주도로서는 아주 소중한 인적자원을 잃는 셈이 된다. 제주도의 해녀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제주도 여성의 역사와

문화를 이끌어온 주역들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근면성과 개척정신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과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도의 관광을 소리 없이 견인하는 숨은 선두주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 1-5] 제주도 해녀수의 변화(1970~2002년)

구분 \ 연도별		1970	1980	1995	2000	2002
해녀수(명)		14,143	7,886	5,886	5,789	5,659
연령구성비율(%)	30세 미만	31.3	9.8	0.6	0.1(3명)	-(2명)
	30~49세	54.9	60.7	33.4	22.1 (1,282명)	17.1 (969명)
	50세 이상	13.8	29.5	66.0	77.8 (4,504명)	82.9 (4,688명)

자료 : 제주도, 2003b,「해양수산현황」, p.45.



제2장
제주지방 – 자연 및 생태환경

김태호 (제주대학교)

빈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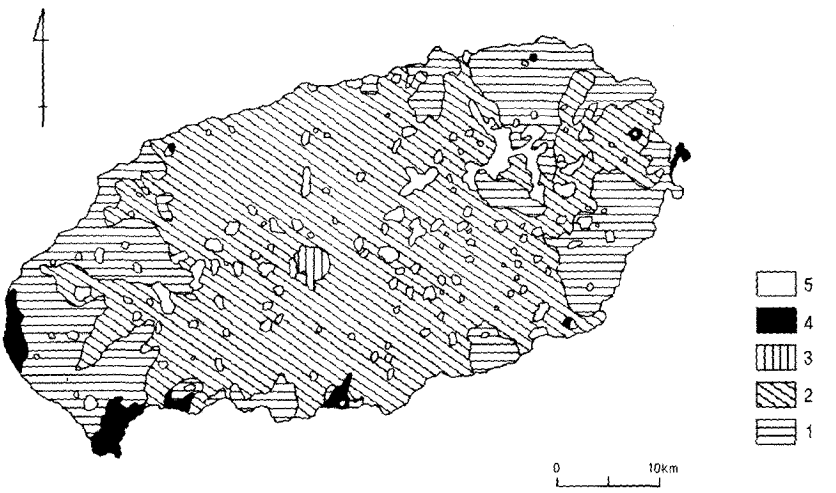
제2장 자연 및 생태환경

1. 자연환경

1) 화산활동사와 지질

제주도의 기저부는 한반도 남부해안과 유사한 백악기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회암 위로는 100~200m 두께의 미고결 퇴적층이 피복하고 있으며, 그 위로 제4기의 화산활동에 의한 분출물이 출현한다. 제주도 형성사는 이 화산활동의 순서와 시기구분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데(原口, 1931; 원종관, 1975; 李, 1982; 이동영, 1994; 이문원, 1994; 윤선, 1995), 가장 널리 알려진 4단계 형성사를 중심으로 제주도의 화산활동사와 지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2-1).

제1분출기는 해수면 아래의 기저부가 형성된 시기이다. 제주도의 지하에는 지역에 따라



1. 제1·2 분출기 화산암 2. 제3분출기 화산암 3. 제4분출기 화산암 4. 응회암 5. 스코리아

〈그림 2-1〉 제주도의 지질분포(원종관, 1975)

자료 : 원종관, 1975, 제주도의 형성과정과 화산활동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이학논문집

층후(層厚)의 차이를 보이지만 평균적으로 해수면 아래 100m까지는 감람석휘석현무암이 분포한다. 감람석휘석현무암의 연대측정치는 120만년~94만년을 가리키므로 제주도의 화산활동은 플라이스토세 전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20만년의 분출시기를 보이는 시추자료(손인석 외, 1998)도 보고되고 있어 제주도의 형성시기는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제1분출기의 말기에는 서귀포에서 안덕에 이르는 남부해안 일대에 조면암질 용암이 분출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산방산조면암의 절대연대는 87만년으로 제주도의 지표면에 분포하는 가장 오래된 화산암에 해당한다(이문원 외, 1994).

제2분출기는 용암대지 형성기로 한라산 본체를 제외한 제주도 대부분의 모습이 결정된 시기이다. 남부해안 일대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 걸쳐 분포하는 장석감람석현무암이 이 분출기를 대표하는 화산암으로 절대연대는 60만년~37만년을 가리킨다. 특히 표선을 중심으로 제주도 동·서부해안에 넓게 나타나므로 표선리현무암으로 불리는데, 용암류 표면에 구갑상 절리와 새끼줄구조가 잘 발달한 전형적인 파호이호이용암이다(원종관, 1975). 제2분출기의 말기인 41만년전에도 서귀포와 중문 일대에서는 조면암질 용암이 분출하였다.

제3분출기에 들어오면서 분화양식이 제주도 전역에 걸친 틈분화로부터 중앙부의 중심분화로 변화하였다. 그 결과 중앙화구를 중심으로 화산체의 고도가 높아지면서 한라산 순상화산이 형성되었다. 중산간지대에 분포하는 장석현무암과 비현정질현무암은 이 시기의 화산암으로 초기 현무암의 절대연대는 27만년을 가리킨다. 제주도 북부와 남부지역에서는 제3분출기의 현무암질 용암이 해안 부근까지 흘러가 분포한다. 제3분출기의 말기인 16만년전에는 한라산 정상 일대에서 조면암질 용암이 분출하여 백록담 서벽을 비롯하여 영실 오백나한과 왕관릉을 형성하였다.

제4분출기는 제주도 전역에 걸쳐 소형 화산체가 형성된 시기이며, 2만5천년전에는 한라산 정상에서도 다시 분화활동이 일어나 백록담 분화구가 출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7만년전에 일어난 조면암의 분출이 백록담 용암원정구와 분화구를 형성하였다는 의견(윤선, 1995)도 있어 백록담 분화구의 형성시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에서의 화산활동은 역사시대에 들어와서도 계속되어 고려 중엽인 1002년과 1007년에 용암류 분출과 화산체 생성에 관한 기록이 『高麗史』에 실려 있다.

2) 지형

(1) 해안지형

제주도 해안은 용암류로 이루어진 화산해안으로 전체 해안의 75%에 이르는 229.7㎞가 암석해안으로 분류된다(표 2-1). 용암류 유형에 따라 암석해안의 지형경관은 달라지는데, 현무암질 용암은 유동성이 크므로 특히 파호이호이용암이 분포하는 동·서부해안에는 높은 비고를 보이는 지형의 출현은 적고 바다를 향하여 완만하게 기울어진 평탄한 사면지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에 남부해안에 분포하는 유동성이 작은 조면암질 용암은 상당한 두께로 흘러 비고가 큰 지형을 형성하므로 조면암에 잘 발달하는 주상절리도 가세하여 남부해안에는 급경사의 해식애가 출현하기 쉽다. 해식애는 소형화산체로 이루어진 암석해안에서도 잘 발달한다. 제주도의 해안에는 수증기마그마폭발로 형성된 수성화산체가 도처에 분포한다. 미립질의 화산쇄설물로 구성된 수성화산체는 파식에 비교적 약하므로 바다에 면한 부분에는 수직에 가까운 해식애가 잘 발달한다.

[표 2-1] 유형별 제주도 해안선의 길이

단위: ㎞

유 형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합 계
암석해안	15.2	29.0	85.5	100.0	229.7
사질해안	1.7	4.8	4.9	10.5	21.9
인공해안	10.8	2.8	31.0	10.1	54.7
합 계	27.7	36.6	121.4	120.6	306.3

자료 : 김태호, 1997, 제주도의 해안지형, 탐라문화

파랑이 강하며 대부분 암석해안으로 이루어진 제주도에서는 해안 전역에 걸쳐 파식대가 나타난다. 그러나 모식적인 암석해안에서와는 달리 배후에 명료한 해식애를 동반하지 않는다. 이는 현무암질 용암의 유동성으로 인하여 비교적 완경사의 사면이 해안에 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식대는 대부분 간조시에 노출하는 조간대형 파식대로 그 형태는 암석과 파랑에너지의 강도를 반영하는데, 아아용암류 파식대보다 파호이호이용암류 파식대가 훨씬 매

끄러운 평탄면을 보인다. 또한 같은 파호이호이용암류가 분포하더라도 한경보다 파랑에너지가 강한 성산의 파식대가 더욱 평탄하다(최성길 · 박원권, 1996).

제주도의 하천은 유역이 투수성이 큰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강수 직후에만 일시적으로 유수가 발생하는 건천을 이룬다. 따라서 하천을 통하여 해안으로 다량의 토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므로 제주도의 사질해안은 규모와 출현빈도가 모두 낮아 전체 해안의 7.1%에 해당하는 21.9㎞에 불과하다(표 2-1). 협재, 곽지, 함덕, 김녕, 표선, 중문해수욕장 등 제주도의 사빈은 길이가 500m 이하이며, 도처에 기반암이 노출되어 사빈의 연속성도 좋지 않다. 또한 육지 쪽으로부터 모래를 공급받지 못하므로 사빈퇴적물 가운데 해저로부터 공급된 패사의 함량이 매우 높아 석회질 퇴적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67%에 달한다(한태흥, 1998). 반면에 주변에 파식에 약한 수성화산체와 해성퇴적층이 분포하여 다량의 암설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화순, 사계, 신양 일대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사빈이 발달하며, 사빈퇴적물에서 패사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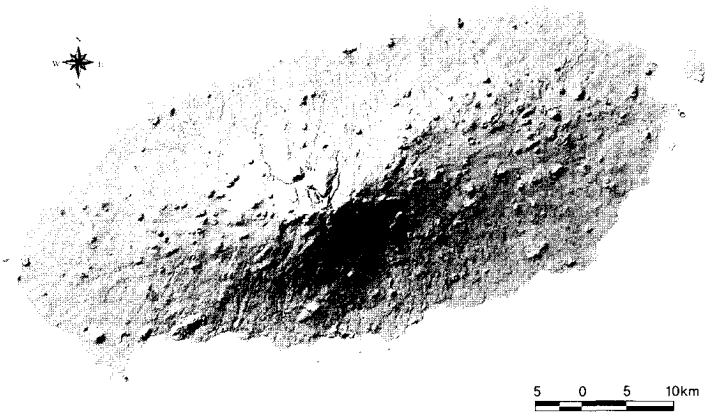
최근 제주도에서도 제주를 비롯하여 한림, 애월 등 각지에서 공유수면의 매립을 통하여 인공해안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간척사업과 해안침식방지를 위한 호안시설의 설치로 인공해안이 급증하는 한반도 해안과 비교하면 제주도 해안의 인공화는 크지 않은 편으로서 이는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제주도 해안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2) 화산지형

제4기의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제주도는 주산체인 한라산과 산록의 소형 화산체가 어우러져 독특한 경관을 만들고 있다(그림 2-2). 한라산은 순상화산의 정상부에 용암원정구가 놓여 있는 복합화산이다. 제주도 화산활동사에서 제3분출기에 들어오면 분화양식이 제주도 중앙부에서의 중심분화로 바뀌게 되고 그 결과 중앙화구를 중심으로 다수의 용암류가 누적되면서 하와이형 순상화산이 형성되었다(원종관, 1975; 李, 1982). 순상화산은 10° 이하의 완만한 사면경사가 특징이며, 분화시 폭발력이 약하므로 파편상의 분출물은 극히 적어 화산쇄설물은 구성물질의 1% 이하에 불과하다. 제3분출기 말기인 16만년전에는 조면암질 용암이 분출하여 화산체의 정상에 용암원정구가 출현하였으며, 이후 용암원정구에서

다시 분화활동이 일어나면서 한라산 정상에 동서길이 500m, 남북길이 400m, 둘레 1.7㎞, 최대깊이 110m의 백록담분화구가 형성되었다.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소형 화산체는 일윤회의 분화활동기를 통하여 형성된 단성



〈그림 2-2〉 제주도의 음영기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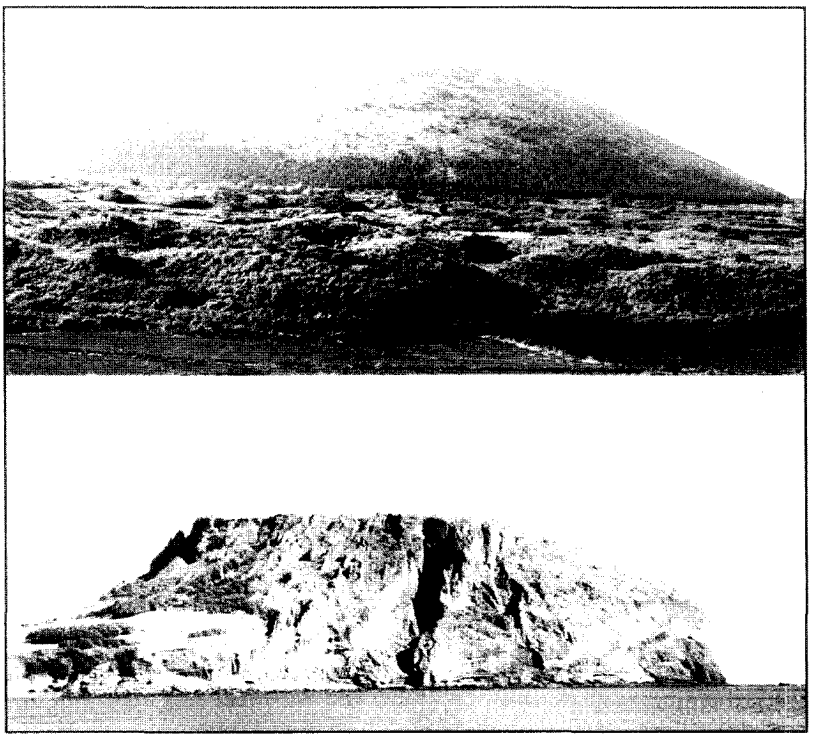
자료 : 제주도 지리정보실, 1999

화산으로 제주도에서는 '오름'이라고 부른다. 단성화산은 화산분출물의 성질을 반영하여 여러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제주도의 오름은 대부분 '송이'라고 부르는 화산쇄설물로 이루어진 스코리아콘에 해당한다(그림 2-3). 스트롬볼리식 분화에 의해 화구 위로 방출된 화산쇄설물이 화구 주변에 떨어져 집적됨으로써 형성되는 스코리아콘은 30°에 가까운 급경사의 직선사면을 지닌 원추형을 보이며, 산정에는 화산체에 비하여 규모가 큰 화구가 나타난다. 물장올, 물영아리, 물찻오름 등의 화구는 담수하여 산정 습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화산체가 형성된 이후에 시작되는 침식작용으로 화구 주변은 제거되므로 모든 스코리아콘에 화구가 출현하는 것은 아니며 제주도에서는 화구가 결여된 스코리아콘이 일반적이다.

제주도 해안에는 스코리아콘과는 외형뿐 아니라 구성물질과 구조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수성화산체가 도처에 분포한다. 수성화산체는 마그마의 분출에 외부의 물이 영향을 미치는 수성화산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비교적 비폭발적인 현무암질 마그마도 지표수나 지하수와 접촉하면 다량의 물이 기화하면서 압력이 증대되어 폭발적인 분화를 일으킨다. 강

력한 수증기마그마폭발이 일어나면 폭발력의 증대로 화산쇄설물은 미립질 화산회가 많아지고 화구를 중심으로 화쇄난류가 사방으로 퍼지면서 화산쇄설물이 퇴적하므로 기저부의 직경이 큰 반면에 비고가 낮은 화산체가 형성된다(그림 2-3). 화산체의 기저직경에 대한 비고의 비율을 비교하면, 스코리아콘이 1/5~1/6인데 비하여 수성화산체에 속하는 응회구는 1/9~1/11로 작다. 응회구의 극단적인 형태로 이 비율이 1/10~1/30에 이르는 화산체는 응회환이라고 한다(Heiken, 1971). 제주도에서는 일출봉과 우도의 쇠머리오름이 응회구에 해당하며, 응회환으로는 수월봉, 송악산, 용머리 등을 들 수 있다(Sohn, 1996).

점성이 큰 용암이 화구에서 밀려 올라오면 빨리 흐르지 못하고 화구 주변에서 다소 퍼지면서 반구 모양의 화산체를 이루게 된다. 보통 종상화산으로 불리는 이 유형을 용암원정구라고 한다. 용암원정구는 양파와 같은 내부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먼저 분출한 용암은



상: 스코리아콘(다랑쉬오름) 하: 응회구(성산일출봉)

〈그림 2-3〉 제주도의 화산쇄설구

뒤이어 나오는 용암으로 인하여 얇게 늘어나면서 바깥쪽으로 밀려나가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는 조면암 분포지역에 용암원정구가 잘 출현하며, 대표적인 화산체로는 산방산과 한라산 정상의 백록담 서벽을 들 수 있다.

제주도에 분포하는 오름의 수는 334개에서 368개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박승필, 1985; 제주도, 1997; 長谷中 외, 1998). 또한 오름의 분포를 유형별로 비교하면 스코리아콘은 주로 중산간지대에 밀집하는데 비하여 응회구는 동부해안지대에, 응회환이 서부해안지대에 출현하여 분화환경의 지역성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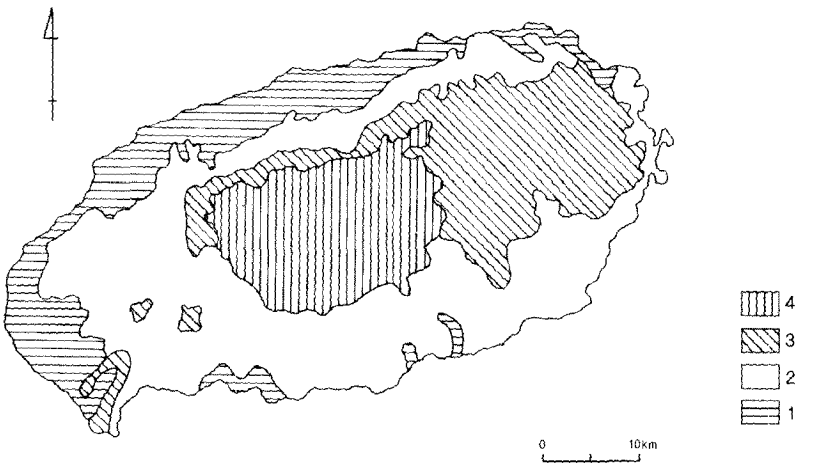
한편 파호이호이용암이 분포하는 지역에는 용암동굴이 잘 발달한다. 제주도의 동·서부 해안에는 파호이호이용암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므로 세계 최장동굴로 인정받는 길이 13,422m의 만장굴을 비롯하여 11,749m의 빌레못굴 등 용암동굴의 발달이 현저하다. 또한 협재굴, 쌍용굴, 당처물동굴 등 해안 주변에 분포하는 용암동굴의 내부에는 석회동굴에서 볼 수 있는 종유석이나 석순과 같은 스펠레오뎀이 나타난다. 그러나 용암동굴의 스펠레오뎀은 지질적인 요인에 의한 것은 아니며, 동굴 위의 지표면을 덮고 있는 패사를 용식한 우수가 지하로 침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3) 토양

화산회토로 분류되는 제주도의 토양은 한반도 토양에 비하여 토양용적밀도가 낮고 공극률이 높다. 따라서 투수성이 높아 물의 하방침투가 매우 빠르고 바람에 의한 침식을 받기 쉽다. 또한 토양모재인 현무암이 염기성이나 많은 강수량과 높은 투수성으로 인하여 염기의 용탈이 심하므로 염기포화도는 매우 낮다(유순호·송관철, 1991). 식물생육과 작물재배에 불리한 이 화산회토를 제주도에서는 '뜬땅'이라고 부르며, 화산회토가 변하여 일반토양에 가까워진 '된땅' 또는 '관땅'과 구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1976)에서 실시한 정밀토양조사에 따르면 제주도에는 63개의 토양통이 분포한다. 화산회토에 속하는 토양통은 36개로 제주도 면적의 80%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제주도의 토양은 토색에 의해 암갈색토, 농암갈색토, 흑색토 및 갈색삼림토로 구분한다(그림 2-4). 이 가운데 암갈색토를 제외한 세 유형의 토양이 화산회토로 취급되는데, 농암갈색토

는 14개통, 흑색토는 15개통, 갈색삼림토는 6개통의 토양을 포함한다. 토양의 분포지역을 보면 27개통으로 구성된 암갈색토는 제주, 조천, 애월, 한림, 한경, 대정 등 주로 북부와 서부지역의 해발고도 200m 이하 해안지대에 분포한다. 가장 넓은 분포면적을 보이는 농암갈색토는 동부지역을 제외한 중산간지대 전역과 남부지역 대부분의 해안지대에 분포한다. 흑색토는 구좌, 성산, 표선 등 주로 동부지역의 중산간지대에 분포하며, 갈색삼림토는 해발고도 700m 이상의 한라산 산악지역에 나타난다.



1. 암갈색토 2. 농암갈색토 3. 흑색토 4. 갈색삼림토

〈그림 2-4〉 제주도의 토양분포

자료 : 농촌진흥청, 1976, 정밀토양도(제주도)

4) 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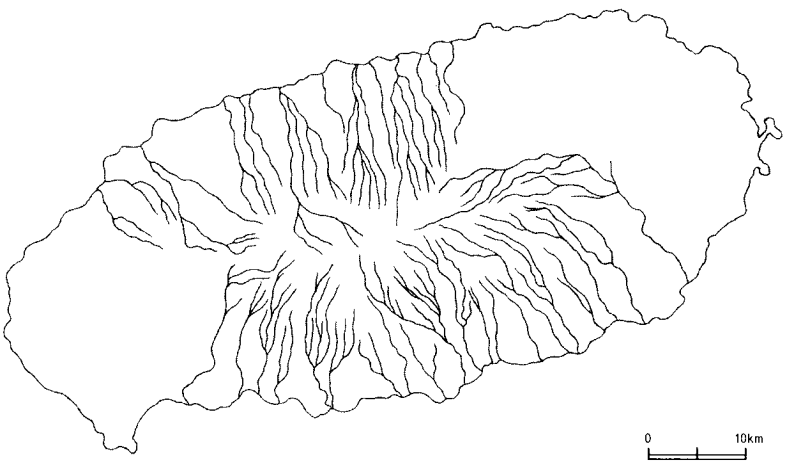
(1) 하천

제주도의 수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발산하는 방사상을 보인다. 그러나 비교적 평탄한 용암대지로 이루어진 동·서부지역에는 하천이 출현하기 어려우므로 제주와 서귀포의 남·북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발달한다(그림 2-5). 제주도에는 현재 60개의 지방2급하천과 83개

의 소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이들 143개 하천의 총길이는 826.57㎞이므로 제주도의 하계밀도는 0.447㎞/㎢가 된다(제주도, 2003).

제주도의 하천은 강수 직후에만 유수가 나타나는 건천이다. 하천 집수역은 층리나 절리, 동굴이 잘 발달한 현무암질 용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우수가 지하로 쉽게 침투할 수 있다. 따라서 강우강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표면유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침투율을 초과하는 큰 규모의 강수가 발생하면 급격하게 유량이 증가하는 전형적인 플래쉬성 유출을 보인다. 지하수면이 해수면 부근의 고도에 위치하므로 무강수기에 기저유출에 의해 함양되는 유수는 해안 주변의 일부 하류구간에서만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최다우지의 많은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하도에 유수가 출현하지 않으며, 하계망의 발달도 강수량에 비하여 미약한 편이다.

하도는 중·상류뿐 아니라 하구 부근의 최하류 구간에서도 기반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 구간이 산지하천의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하도 구성물질이 사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충적하천과는 여러 가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지하천은 사력의 분급과 파쇄·마모기능이 활발하고 하상은 계단상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곡벽에 의해 하도의 평면형상이 제약을 받는 등 기반암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므로 충적하천과 하도특성에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림 2-5〉 제주도의 수계분포

자료 : 필자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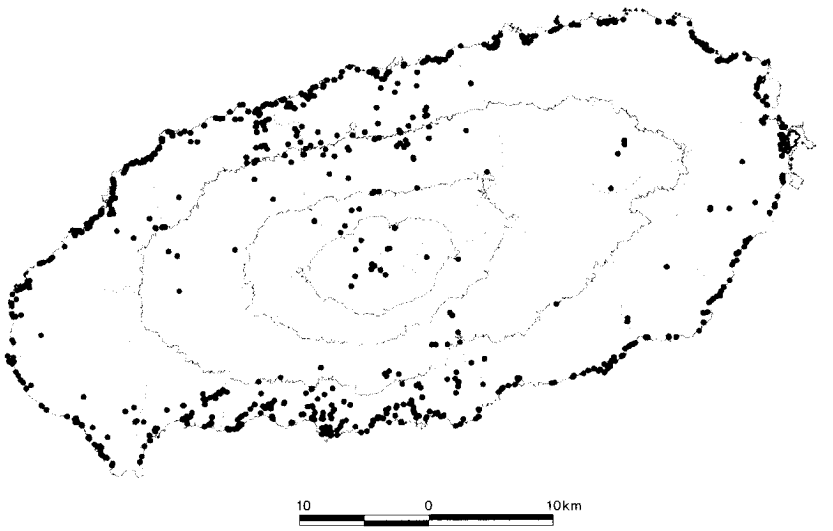
제주도의 하천은 하천차수가 높지 않고 각 하천의 1차수 하천의 수도 일반 하천에 비하여 매우 적게 나타난다. 하계망에서 1차수 하천은 지류를 지니지 않는 최상류의 하천에 해당하므로 1차수 하천의 수는 지표유출의 정도를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1차수 하천이 많지 않은 제주도의 저밀도 하계는 기반암의 높은 투수율과 낮은 지하수면 등으로 인하여 지표유출이 일어나기 어려운 하천유역의 지질조건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천 분기율도 대부분 2~3 정도로 낮은 편이어서 하천의 차수가 높아져도 증가하는 하천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은 저밀도 하계의 특징을 보인다.

한라산의 산록을 흘러내리는 제주도의 하천은 평면형상이 직선에 가까운 직류하천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곡류의 정도를 가리키는 지표인 굴곡도는 1.1~1.3에 불과하여 1.5 이상의 사행하천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강상배, 1980). 본류에 합류하는 지류도 사면경사에 지배되어 최단거리의 유로를 유지하면서 본류와 동일한 방향으로 흘러내리므로 평행상 하계모양이 나타난다(그림 2-5).

(2) 지하수

제주도는 국내 최다우지에 해당할 뿐 아니라 투수성이 높은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토층의 발달도 미약하여 지하수의 함양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제주도의 지하수 함양율은 총강수량의 44~46%로서 한반도 내륙지역의 평균 18%를 훨씬 상회하는데, 농어촌진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사에 의하면 매년 14.9억~16.3억m^3의 물이 지하수로 함양되고 있다(제주도, 2003).

제주도 지하수의 부존은 도서라는 조건을 반영하여 상위지하수뿐 아니라 기저지하수, 준기저지하수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상위지하수는 해수면 위의 불수투층을 따라 분포하는 지하수체이며 주로 중산간지대에 나타난다. 반면에 기저지하수와 준기저지하수는 해수면 아래에 분포하는 지하수체이다. 기저지하수는 가이벤-헤르츠버그(Ghyben-Hertzberg)의 원리에 의해 염수보다 비중이 작은 담수가 해수 위에 렌즈 형태로 떠 있는 것으로 동부 해안에 주로 분포한다. 준기저지하수는 해수면 아래에 분포하는 서귀포층 위에 놓인 지하수체이며 북부와 서부해안에 넓게 나타난다.



〈그림 2-6〉 제주도의 용천분포

자료 : 제주도, 2000, 제주도의 물 용천수

지하수의 부존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하수면의 높이와 지하수위의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도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즉 안덕에서 남원에 이르는 남부지역에서는 조석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으며, 주로 강수량에 의해 3~20m에 이르는 큰 폭으로 지하수위가 변동하고 있다. 반면에 북촌에서 표선에 이르는 동부지역에서는 강수량보다는 조석이 크게 작용하여 1일 최대 1m의 수위 변동이 일어난다. 서부와 북부지역은 두 요인이 모두 작용하지만 강수량의 영향이 더 큰 혼합형에 해당한다(고기원, 1997).

지하수의 일부는 지표면과 교차하는 지층이나 암석의 틈을 통해 지표로 용출하여 용천을 이루게 된다. 제주도에서는 용천이 취락의 입지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데, 부속도서를 제외하면 전부 911개소의 용천이 분포하고 있다(제주도, 2000). 지역별로는 북제주군 398개소, 남제주군 203개소, 서귀포시 168개소, 제주시 142개소의 순이다. 표고별로는 200m 이하 해안지대에 841개소, 200~600m의 중산간지대에 49개소, 600m 이상 산악지대에 21개소로 대부분 해안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표고 5m 이하의 해안 부근에만 520개소가 분포하여 전체 용천의 57.1%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2-6).

5) 기후

제주도는 국토의 최남단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한반도와는 상이한 기후환경을 보인다. 아시아대륙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몬순의 영향이 큰 대륙동안기후의 특징을 보이나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성기후의 요소도 현저하다. 또한 섬의 중앙부에 위치한 표고 1,950m의 한라산과 근해를 흐르는 해류가 중요한 기후인자로 작용하여 독특한 기후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제주도는 쾨펜의 기후구분법을 적용하면 남해안 일대와 함께 아열대습윤기후(Cfa)에 해당한다(김광식, 1976).

제주도에서는 제주, 서귀포, 성산포 및 고산의 4개소에서 유인기상관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9개의 자동기상관측소, 1개의 고층 · 레이더관측소가 운용되고 있다. 1988년부터 관측을 시작한 고산기상대를 포함하여 제주, 서귀포, 성산포기상대에서 1971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에 걸쳐 관측된 기상자료를 토대로 제주도의 기후환경을 살펴본다(표 2-2).

[표 2-2] 제주도의 지역별 기후요소

관측소	기온(℃)	상대습도(%)	강수량(㎜)	일조시간(h)	풍속(㎧)
제 주	15.5	73.3	1456.9	1898.9	3.8
서귀포	16.2	70.7	1850.8	2061.7	3.1
성산포	15.2	75.3	1840.9	2148.2	3.1
고 산	15.5	76.5	1094.7	2054.3	6.9
평 균	15.6	74.0	1560.8	2040.8	4.2

자료 : 제주지방기상청, 2003, 제주도 기후 특성집

제주도의 연평균 기온은 15.6℃이며 서귀포가 16.2℃로 0.6℃ 높고 성산포는 15.2℃로 다소 낮다. 최한월인 1월의 월평균 기온은 5.9℃이며 성산포가 5.0℃로 가장 낮고 서귀포가 6.6℃로 다소 높다. 반면에 최난월인 8월의 월평균 기온은 26.4℃이며 지역적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연교차는 20.5℃이며 성산포가 21.3℃로 가장 크고 고산이 19.8℃로 가장 낮다. 최고기온의 극치는 1942년 7월 25일 제주에서 관측된 37.5℃이며, 최저기온의 극치는 1990년 1월 23일 성산포에서 관측된 -7.0℃이다.

국내 최다우지인 제주도의 연평균 강수량은 1,560.8㎜이다. 강수량이 가장 많은 달은 8월로 250.5㎜에 달하나 가장 적은 달은 12월로 41.9㎜에 불과하다. 기압배치보다는 풍향의 영향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북서부에서 남동부 쪽으로 강수량은 증가하는데, 고산과 서귀포의 연평균 강수량은 756.1㎜의 차이를 보인다(제주지방기상청, 2003). 월평균 강수량 200㎜ 이상인 달이 서귀포는 4개월이나 고산은 나타나지 않으며, 100㎜ 이하인 달도 서귀포는 5개월이나 고산은 7개월로 지역적 차이를 보인다. 제주도에서는 온대성저기압을 비롯하여 장마전선과 태풍에 의해 강수가 발생하는데, 동·남부지역에서는 온대성저기압과 장마전선으로 인한 강수가 많은데 비하여 태풍에 의한 강수는 상대적으로 북부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이승호, 1999).

제주도의 연평균 일조시간은 2,040.8시간으로 성산포의 2,148.2시간에 비하여 제주는 1,898.9시간에 불과하여 지역적 차이를 보인다. 12월~2월에는 월평균 일조시간이 130시간 이하로 짧아지는데 북서계절풍이 한라산의 북사면에 가로막혀 흐리거나 강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특히 제주는 이 기간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30~80시간 적다. 여름철에는 180시간을 넘으나 일조시간이 가장 긴 달은 215.1시간의 5월이며 207.2시간의 8월이 뒤를 잇는다.

제주도의 연평균 풍속은 4.2㎧로 한반도에 비하여 1~2㎧ 강한 바람이 분다. 고산의 풍속이 6.9㎧로 가장 빠르고 제주가 3.8㎧, 서귀포와 성산포는 3.1㎧로 지역적 차이가 크다. 이러한 경향은 겨울철에 강화되어 1월 고산의 풍속은 9.7㎧에 달하나 서귀포는 3㎧에 불과하여 6.7㎧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그 차이가 3㎧ 이하로 줄어든다. 제주도의 겨울철 탁월풍은 서고동저형 기압배치로 출현하는 북서풍으로 북부지역에서는 북서풍이 연중 최다풍이나 한라산의 영향을 받는 남부지역에서는 북동풍이 최다풍을 이룬다. 반면에 봄과 가을의 탁월풍은 북고남저형 기압배치에 의한 동풍계열이며, 여름철에는 남서~남동풍계열이 탁월풍을 이룬다(이병설, 1979).

2. 생태환경

1) 토지이용 및 식생피복

제주도의 토지이용을 보면 임야가 전체면적의 49.7%에 이르는 918.6㎢로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밭, 과수원, 목장용지의 순으로 나타난다. 최근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부지 조성과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대지와 도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하여 임야와 목장용지는 감소하고 있다(제주도, 2003). 2002년 말 현재 국토이용계획상 제주도의 용도지역별 지정면적은 1,847.194㎢이며, 이 가운데 관리지역이 1,117.315㎢로서 60.5%를 차지한다(표 2-3).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전체면적의 10.6%에 대하여 절대보전지역(163.517㎢) 및 상대보전지역(33.186㎢)을 지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 관리하면서 적절한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정규화식생지표(NDVI)를 사용하여 계절별로 작성한 제주도의 화상(畵像)을 비교하면 여름철에는 활력도가 산악지대에서 가장 높고, 중산간, 해안지대로 갈수록 감소하여 식

[표 2-3] 제주도의 국토이용계획

단위: ㎢

구 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제주도
도시지역	127.701	104.572	84.130	71.534	387.937
관리지역	57.805	66.001	537.381	456.128	1,117.315
농림지역	5.434	41.068	49.537	53.858	149.897
자연환경보전지역	64.543	42.926	50.796	33.780	192.045
합 계	255.483	254.567	721.844	687.160	1,847.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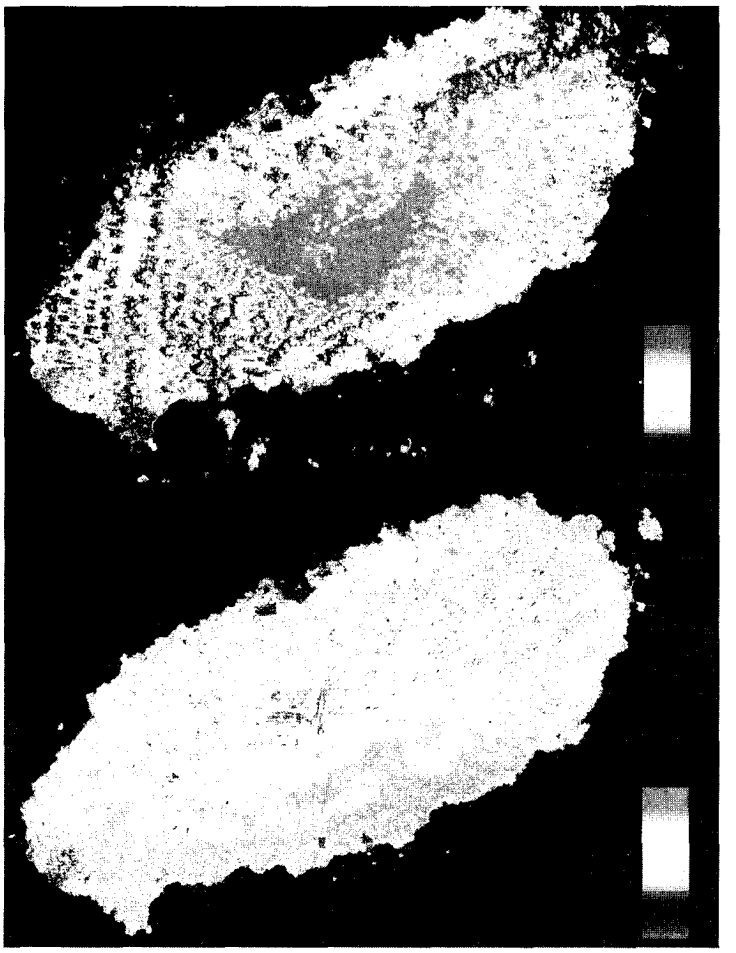
자료 : 제주도, 2003, 2003 환경백서

생의 활력도가 제주도의 지역구조에 대응한다(그림 2-7). 일반적으로 제주도의 지역구분은 표고를 기준으로 200m 이하의 해안지대, 600m 이상의 산악지대 및 두 지역간의 점이대인 200~600m의 중산간지대로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름철 화상의 식생피복이 제주도의 수직적인 지역구조를 잘 보여준다.

식물군락의 고도별 분포를 비교하면 제주도 면적의 86.7%를 차지하는 표고 600m 이하의 지역은 주로 경작지와 초지군락으로 구성되며 상록활엽수림이 혼재한다(임양재 외, 1991). 즉 200m 이하의 해안지대에는 경작지와 초지군락이 각각 49.8%와 27.0%를 차지하며, 200~600m의 중산간지대에는 경작지가 9.9%로 감소하나 초지군락은 65.8%로 증가한다. 산악지대의 경우 600~1,400m는 대부분 삼림으로 낙엽활엽수림을 이루며,

1,400m 이상의 아고산대는 침엽수를 비롯하여 관목림과 초지군락이 분포한다. 따라서 제주도의 식생은 경작지, 초지군락, 낙엽활엽수림, 침엽수림의 순서로 수직적으로 배열되며, 이러한 분포 양상이 여름철 화상에 동심원 모양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겨울철에는 해안에서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식생의 활력도가 낮아지고 있다. 특히 해안지대와 중산간지대의 식생피복에 주목하면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활력도가 매우 다른데, 전반적으로 한라산 남사면의 식생지표치가 북사면보다 높게 나타난다(그림 2-7).



상 : 1992년 7월　하 : 1993년 1월

〈그림 2-7〉 정규화식생지표에 의한 제주도의 식생피복

자료 : 김태호, 1996

제주도의 기후는 동서방향으로 뻗은 한라산의 능선을 경계로 남북사면에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대륙도를 기준으로 제주도는 남북으로 구분되며, 남부지역이 북부지역보다 해양성기후의 특색을 잘 보여준다(Yim and Kira, 1975). 이러한 기후의 차이는 식생분포뿐 아니라 농업적 토지이용에도 반영되어 남부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과수재배지가 분포하여 전체 면적의 65%가 서귀포와 남원에 집중한다. 해안지대는 경작지와 초지군락이 전체면적의 76.8%를 차지하므로 겨울철에는 밭이나 초지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북부지역보다는 상록활엽수의 과수재배지가 집중하는 남부지역에서 식생지표치가 높아진다.

2) 생물종 다양성

제주도에 서식하는 생물종 수를 살펴보면 식물은 1,841종에 이르며, 육상동물의 경우 곤충류 3,315종, 양서류 10종, 파충류 15종, 조류 320종, 포유류 37종으로 지역 면적에 비하여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하고 있거나 문헌으로 기록되어 있다(표 2-4). 특히 자연환경보전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멸종위기 및 보호 동 · 식물 194종 가운데 52%에 달하는 103종이 분포하고 있다(제주도, 2003).

제주도는 식물의 보고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식생이 자생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의 지리적 위치가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해당하므로 제주도가 북한계가 되는 난대성 식물이 서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섬 중앙에 높이 1,950m의 한라산이 위치하고 있어 고도별로 각기 다른 기후대의 식물이 나타날 뿐 아니라 고지대에는 제주도 특산식물을 비롯하여 한대성 식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하곡을 비롯하여 습지, 사구 등 다양한 서식환경이 혼재하기 때문이다(김문홍, 1994).

또한 제주도는 한반도와 중국, 일본의 중앙에 놓여 있으므로 이동성이 큰 곤충류나 조류는 계절에 따라 종의 변화가 다양하나 이동성이 작은 포유류나 양서류, 파충류는 종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대형 포유류는 제주도가 육지와 격리되어 있고 면적이 협소하므로 분포하지 않으며, 노루, 오소리, 족제비, 다람쥐가 한라산을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다. 포유류 37종 가운데 큰노루, 대륙사슴, 멧돼지, 불곰은 화석기록종이며 삵은 최근 멸종된 것으로 보고 있다(박행신, 1994). 한때 개체수가 크게 줄었던 노루는 1980년대부터 전개된 보호활동으

[표 2-4] 육상동물 분포 현황

구분	곤충류		양서류		파충류		조 류		포유류	
	전국	제주도	전국	제주도	전국	제주도	전국	제주도	전국	제주도
분포 현황	29목	2목	2목	2목	2목	2목	18목	18목	7목	6목
	467과	301과	6과	6과	10과	8과	72과	59과	26과	16과
	10,898종	3,315종	19종	10종	27종	15종	450종	320종	105종	37종

자료 : 제주도, 2003, 2003 환경백서

로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한라산 노루의 서식밀도는 0.138마리/ha로 보고되고 있다(오장근 · 신용만, 2002). 철새 이동경로에 놓여 있는 제주도는 철새의 번식과 월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제주도에서 관찰 기록된 320종의 조류에서 텃새는 13.1%인 42종에 불과하고 나머지 278종은 철새로 분류되고 있다. 철새 가운데 통과조류는 66종이며, 겨울 및 여름철새는 각각 96종과 53종을 차지하고 있어 한반도 보다 통과조류와 겨울철새가 많은 특징을 보인다(제주도, 2003).

제주도는 면적에 비하여 난대성 곤충과 한대성 곤충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진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제주도의 곤충류는 25목 301과 3,315종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930종을 차지하는 딱정벌레목이 우점종을 이루며 이밖에 나비, 파리, 벌도 비교적 많이 서식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인 두점박이사슴벌레와 산굴뚝나비, 보호대상종인 물장군, 비단벌레 및 왕은점표범나비 5종이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다.

제주도 주변 해역은 쓰시마난류로 인하여 전체적으로는 아열대성 해황을 보이나 한국 연안수, 황해 저층냉수, 양쯔강 희석수 등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수괴의 영향도 받고 있으므로 한반도 어느 해역보다 해양생물의 종 다양성이 높은 곳이다. 제주도 근해에 어류는 제주 고유종 108종을 포함하여 510종, 패류는 350종, 해조류는 450종, 갑각류는 280종, 산호류는 90종이 분포하고 있다(제주도, 2003).

3) 생활환경 현황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적은 제주도의 대기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오염도를 보인다(표 2-

5). 아황산가스의 경우 2002년에 0.002ppm으로 국가기준치에 비하여 10배 낮게 나타나며, 대기중에 장시간 부유하면서 스모그를 일으키는 입경 10㎛ 이하의 미세먼지 농도도 51㎍/㎥로서 국가기준치 70㎍/㎥에 비하여 양호한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도 최근 황사의 영향이 나타나 황사가 자주 발생하는 3월과 4월에는 미세먼지의 오염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및 오존 농도는 각각 0.01ppm, 0.43ppm 및 0.034ppm으로 1995년 이래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강우산도는 제주시가 5.09pH, 삼림지역이 5.12pH로서 오염원의 유무에 관계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므로 제주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이 산성비 발생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부 지역 특히 공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에서 산성 오염물질을 혼입한 비구름의 산성도가 제주도의 강우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제주도, 2003).

[표 2-5] 제주도의 대기오염도(제주도, 2003)

연도	아황산가스 ppm	이산화질소 ppm	일산화탄소 ppm	미세먼지 ㎍/㎥	오존 ppm	강우산도 pH
1996	0.0045	0.012	0.30	39	0.035	5.07
1998	0.0035	0.010	0.50	36	0.036	4.85
2000	0.0030	0.014	0.25	36	0.034	5.25
2002	0.0020	0.010	0.43	51	0.034	5.11

자료 : 제주도, 2003, 2003 환경백서

제주도에서도 인구증가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오폐수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02년 오수 발생량은 164,183㎥/일로 1인당 297/일에 해당한다. 또한 분뇨 발생량은 552㎥/일로 1인당 1/일에 해당한다. 분뇨 처리는 수세식이 88%를 차지하며 12%는 수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 말 현재 제주도에서 운영중인 분뇨처리시설은 8개소로 1일 처리능력은 587.5㎘이다. 폐기물 발생량도 1998년 1일 1,378톤에서 2000년 2,204톤, 2002년 2,521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폐기물은 대부분 매립 처리되었으나 최근 재활용이 크게 확대되면서 매립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폐기물 관리목표도 매립 비율을 15%로 하향조정하고 재활용과 소각 비율을 48%와 37%로 상향조정하고 있

다(제주도, 2003).

4) 환경보전

제주도에서는 청정 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련 제도정비를 비롯하여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환경오염측정망의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환경기본조례는 제주도 환경보전의 기본이념과 원칙, 제주도 환경시책의 방향과 책무, 사업자와 도민의 환경보전 책무, 주민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제주지역 환경관련 자치법규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제주도환경기본조례에 의거하여 1999년도에 제주도 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되었는데, 미국에서 개발된 대기오염(PSI)을 고려한 이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과 유럽 선진국 기준 수준으로서 대기와 하천 수질분야의 기준을 국가기준보다 강화하였다. 즉 대기분야의 경우 아황산가스 등 5항목에 대하여 국가기준보다 최고 3배, 하천 수질분야도 카드뮴 등 5항목에 대하여 국가기준보다 최고 10배까지 강화하였다. 또한 제주도의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주도환경기본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해 제주도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도 제정되었다. 환경보전기금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지역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추진을 비롯하여 지역환경 보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활동 지원, 환경산업 육성자금 지원, 민간환경단체의 활동 지원, 환경교육 및 홍보 등에 활용된다.

1992년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지방의제21'을 설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1999년 6월 5일 '영원히 푸른 섬 제주(Forever Green Island, Jeju)'를 환경비전으로 정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 경제환경 및 환경정책의 5개 분과로 이루어진 환경종합실천계획 '늘푸른 제주21'을 수립하였다.

환경이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복구에도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요구되어 결국은 경제활동에도 제약을 초래하게 되므로 환경파괴 및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가 필요하

다.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EPA)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의 경제성뿐 아니라 환경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마련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근거가 최초로 마련되었다. 제주도에서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자치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1년부터는 환경, 교통, 재해를 포괄하는 통합영향평가제도가 실시되어 19개 분야 66개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환경기초시설의 확충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폐기물의 경우 매립 위주의 정책에서 감량화와 재활용 정책으로 전환하고 가연성 쓰레기만 소각 처리할 계획으로 1일 27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은 2002년 말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군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연안해역뿐 아니라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2006년까지 군지역에도 5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하수관거는 시설계획 3,864㎞의 59.7%인 2,308㎞가 설치되어 있으며, 국고지원 확대를 통하여 2006년까지 하수관거 설치율을 80%까지 높일 예정이다(제주도, 2003).

제주도의 환경오염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대기, 수질, 소음, 토양분야에 대하여 각각 측정망이 운영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대기오염은 3개소, 산성비는 2개소, 수질은 하천 10개소, 지하수 100개소, 해수욕장 12개소 등에서 정기적으로 측정되고 있다. 또한 해양수질과 환경소음은 전국 측정망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해양수질은 해양수산부 남해수산연구소에서 7개 해역 22개 지점을 대상으로, 환경소음은 환경부 제주환경출장소에서 11개 지역 55개 지점의 주야간 소음도를 측정하고 있다. 토양도 제주환경출장소에서 전국 측정망의 일환으로 38개 지점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오염이 우려되는 50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제주도, 2003).

3. 자연재해

1) 자연재해 현황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면 재해는 태풍, 홍수,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하는 재난과는 구분이 된다. 그러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 가운데 발생 원인이 궁극적으로 인위적인 것이라면 인위재해로 불리며 재난으로 분류된다. 재해는 발생과정의 시간적 차이에 의해 홍수나 해일과 같이 급격하게 발생하여 진행되는 급성재해와 전염병이나 환경파괴와 같이 진행속도가 느린 만성재해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발생원인에 따라 기상재해와 지질재해로 구분되는데, 기상재해에는 풍해, 수해, 설해, 해일, 뇌해, 한해, 냉해, 상해, 병충해가 포함되며, 화산과 지진은 지질재해에 들어간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145회의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1,058명, 이재민 167,725명이며, 재산피해는 침수면적 490,679㏊에 피해금액은 6조8천억원에 달한다. 제주도에서는 같은 기간에 51회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75명이 사망하고 6천8백억원의 재산피해가 생겼다(표 2-6).

[표 2-6]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현황(1992~2001)

구 분		사망 (인)	이재민 (인)	침수면적 (ha)	피해금액 (백만원)				피해횟수
					건물	농경지	공공시설	기타	
전 국	합 계	1,058	167,255	490,679	132,274	330,112	4,733,677	1,614,512	145
	평 균	106	16,726	49,068	13,227	33,011	473,368	161,451	15
제주도	합 계	75	225	4,459	1,592	3,839	32,847	23,401	51
	평 균	8	23	446	159	384	3,285	2,340	5

자료 : 제주도 · 제주도 재해대책본부, 2003, 2002 재해백서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는 대부분 기상재해에 해당하는데, 특히 여름철에 수위 상승으로 저지대가 범람하는 수해가 발생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수해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장마전선을 비롯하여 태풍과 이동성저기압에 동반된 호우가 매년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경우도 51회의 자연재해 가운데 태풍과 호우로 인한 재해가 28회에 이른다. 특히 제주도의 위치는 우리나라에 내습하는 태풍의 길목에 해당

하므로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하는 태풍으로 인한 풍수해를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입게 되는데, 2002년 태풍 '루사'는 511억원, 2003년 태풍 '매미'는 493억원의 재산피해를 일으키고 있다(표 2-7). 제주도는 폭풍과 폭풍설로 인한 피해도 많이 나타나는데, 최근 10년간 발생한 23회의 기상재해는 폭풍과 폭풍설로 인한 것이므로 매년 2.3회의 빈도로 발생하는 기상재해이다. 폭풍과 폭풍설은 바람이 강해지는 늦가을부터 이른 봄에 걸쳐 발생하게 되는데 주로 1월과 2월에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표 2-7] 최근 10년간 제주도 내습 태풍 현황(제주지방기상청, 2003)

태풍명	내습시기	중심기압 hPa	최대풍속 m/sec	강우량 mm	태풍명 hPa	내습시기 m/sec	중심기압 mm	최대풍속	강우량
브랜던	1994. 7	992	25.0	48.0	제 브	1998.10	975	31.0	-
더 그	1994. 8	965	25.0	307.2	올 가	1999. 7	975	43.3	437.0
세 스	1994.10	955	27.8	202.5	바 트	1999. 9	930	46.0	394.6
페 이	1995. 7	940	22.5	150.0	프라피룬	2000. 8	990	38.8	90.5
티 나	1997. 8	955	29.0	48.0	사오마이	2000. 9	985	31.1	166.2
올리와	1997. 9	960	38.0	47.0	루 사	2002. 8	955	56.7	192.0
예 니	1998. 9	975	28.0	669.0	매 미	2003. 9	950	60.0	269.0

자료 : 제주지방기상청, 2003, 제주도 기후 특성집

2) 재난관리시스템

제주도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여 상황관리반, 행정지원반, 구호대책반, 홍보반, 복구반, 소방반의 6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상황 전개에 따라 재해대책본부의 대비체제는 3단계로 가동되는데, 먼저 준비체제는 폭풍, 호우, 해일, 대설 등에 관한 주의보나 태풍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이며, 경계체제는 경보가 발표되어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이며, 비상체제는 제주도 대부분의 지역에 재해가 발생하거나 지역적으로 막대한 재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이다.

자연재해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풍수해 예방대책에는 방재물자 비축과 복구장비 지정 관리, 구호 및 방역물자 비축,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인명구조체제 확립, 인력동원

및 방재정보 전달체계 구축,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재해경보 전달체계 구축, 침수지역 분뇨 및 쓰레기 처리계획 수립, 방재교육 및 훈련, 주민대피계획 수립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재해 취약지역인 하천, 산간계곡, 해안을 경계구역으로 설정 운용하며,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관리하고 정비계획을 세우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해 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옹벽, 도로, 교량, 저수지 등 재해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은 우기 전에 정비하고 있다(제주도 · 제주도재해대책본부, 2003). 이와는 별도로 택지개발, 골프장 조성, 관광지구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요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제주도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1996년에 제주도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 기금은 재해대비 사전점검 결과 시급한 보수나 정비가 필요한 사업을 비롯하여 재해에 따른 응급복구사업, 하천 및 소하천 시설의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주로 충당되고 있다. 최근의 기금운용 사례로는 10억원이 사용된 2000년 산지천 재해위험지구 복구사업과 17억원이 사용된 2002년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을 들 수 있다(제주도 · 제주도재해대책본부, 2003).

빈 면



제3장
제주지방 – 인구의 구조와 변동

권상철 (제주대학교)

빈 면

제3장 인구의 구조와 변동

1. 인구의 성장, 구조와 분포

1) 인구의 성장

제주도의 인구는 1970년대의 본격적인 관광개발과 감귤과수원의 개원에 따른 노동력 흡수요인이 작용하여 육지부로부터의 유입인구가 증가하는 사회증가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속에서 1985년의 인구는 488,576명에서 1990년에는 50만을 넘어서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 총인구가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전국 인구 40,448,486명의 1.21퍼센트에서 2000년에는 1.11퍼센트로 나타나 큰 변화는 없으며 '전국 1퍼센트' 제주도로 불리워지기도 한다.

[표 3-1] 제주도 인구 추이

(단위 : 명)

제주도	인구			세대수	세대별 인구
		남자	여자		
1985년	488,576	239,529	249,047	118,144	4.14
1990년	514,605	254,322	260,283	131,367	3.92
1995년	505,438	249,138	256,300	146,426	3.45
2000년	513,260	254,449	258,811	157,563	3.26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증가를 성별로 보면 여성인구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인구수가 비교적 급격히 증가한 시기에는 남자의 증가가 높게 나타나고 완만한 증가의 경우에는 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를 보인다. 세대수의 증가는 인구증가에 비해 매우 높게 대략 10퍼센트 이상의 증가를 보여 세대별 인구수의 감소가 뚜렷이 나타나는 핵가족화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도의 인구성장을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출생과 사망에 따른 자연적 증가는 매년 약 4천명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증가는 증가와 감소가 혼재되어 나타나는데, 1995년이래 전반적 전출이 전입을 초과하는 인구손실을 보이는 모습이다.

[표 3-2] 제주도 인구의 자연적 · 사회적 증가

(단위 : 명)

제주도	자연적 증가			사회적 증가		
	출생	사망	순증감	전입	전출	순증감
1985년	-	-	-	17,229	20,663	-3,434
1990년	6,739	2,913	+ 3,826	22,491	19,363	+ 3,128
1995년	8,706	2,763	+ 5,943	18,335	19,161	-826
2000년	8,546	2,887	+ 5,659	20,881	23,239	-2,358

주 : 인구동태 1985 없음 ; 전입, 전출은 육지부-제주간의 이동임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인구동태, 인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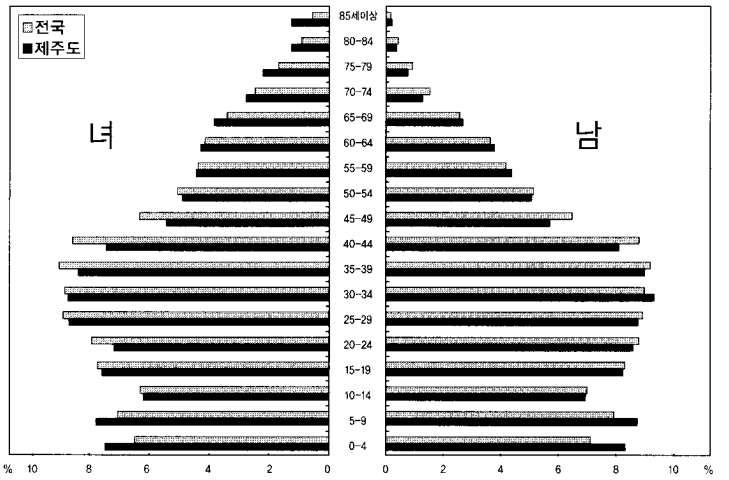
인구의 전입, 전출은 경제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데 단기적인 경기변동에도 영향을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주도가 도서지역이어서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사회적 증가에서는 젊은 층의 유출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는 2011년의 인구를 62만 정도로 전국인구의 1.2퍼센트 비중을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1994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인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경험은 산업구조가 1차산업과 관광산업에 편중되어 있고 그나마 투자가 부진할 경우 육지부로부터의 유입인구가 줄어들고 유출인구가 늘어 상대적 인구감소로 나타난 것으로 설명 되어 진다. 따라서 제주도의 미래 인구추정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자유무역지대조성, 외국인 장기체류허용 등에 따른 인구증가율을 감안하되 전국 평균보다 약간 상회하는 보수적인 예측치이다.

2) 인구구조와 분포

제주도의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를 전국 구조와 비교하여 보면 〈그림 3-1〉과 같다. 제주도의 인구구조는 전국의 구조와 유사한 모습이나 10세미만의 유아인구에서는 제주도가 높

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10세 이상에서 54세까지는 전국에 비해 제주도가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55세 이상부터는 다시 제주도가 전국에 비해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이는 모습이며, 여성에서 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구분지어 보면 전국적으로 여성 고령층이 두텁게 나타나는데, 제주도는 전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제주도의 55세 미만 인구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전체적으로 조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제주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청장년층의 비율이 조금 낮은 반면 유아층과 장·노년층 비율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3-1〉 제주도와 전국의 인구피라미드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연령별 인구구성 변화를 보면 14세 미만의 유년층과 30세 미만의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고령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65세 이상의 인구는 1985년 5.2퍼센트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0년 현재 8퍼센트를 보이고 있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제활동인구층인 15-64세의 인구 비중은 1985년 63.2퍼센트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0년 현재 약 69퍼센트를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층은 내부적으로는 15~29세 사이 인구는 점차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절대수에서도 1990년의 168,377명에서 2000년의 125,479로 42,898명의 감소를 나타내고

[표 3-3] 제주도의 연령별 인구구조 추이

(단위:명)

제주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합계
			15-29세	30-49세	50-64세		
1985	154,138 (31.6)	308,724 (63.2)	154,785 (31.7)	109,232 (22.4)	44,707 (9.2)	25,438 (5.2)	488,300 (100%)
1990	131,553 (25.6)	353,051 (68.6)	168,377 (32.7)	129,556 (25.2)	55,118 (10.7)	29,832 (5.8)	514,436 (100%)
1995	118,162 (23.4)	353,037 (69.9)	146,787 (29.1)	142,546 (28.2)	63,704 (12.6)	33892 (6.7)	505,095 (100%)
2000	119,663 (22.7)	379,371 (68.9)	125,479 (24.5)	158,913 (31.0)	68,817 (13.4)	43,334 (8.4)	512,541 (100%)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있다. 반면 30세 이상 64세 이하에서는 조금씩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시 · 군별 인구 구성을 보면 제주시가 1985년 전체인구의 41.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수위도시의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북제주군 23.4퍼센트, 남제주군 18.3퍼센트 그리고 서귀포시 16.8퍼센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 · 군별 인구 비율의 변화를 보면 제주시는 1995년 51.1퍼센트로 제주도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넘어섰고, 2000년에는 54.5퍼센트로 그 수위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나머지 지역들은 절대수의 감소를 보이며 제주도내에서 제주시의 수위성을 상대적으로 더욱 강화시키고

[표 3-4] 제주도 시 군별 인구

(단위:명)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제주도
1985	202,707 (41.5)	82,268 (16.8)	114,118 (23.4)	89,207 (18.3)	488,300 (100%)
1990	232,553 (45.2)	88,259 (17.2)	108,801 (21.1)	84,823 (16.5)	514,436 (100%)
1995	258,307 (51.1)	82,241 (16.3)	88,726 (17.6)	75,821 (15.0)	505,095 (100%)
2000	279,529 (54.5)	80,734 (15.8)	87,280 (17.0)	64,998 (12.7)	512,541 (100%)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있다. 특히 남제주군과 서귀포시가 급속한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어 북부와 남부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어가는 양상을 띄고 있다. 제주시는 인구규모나 기능면에서 제주도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육지부와의 연계를 담당하는 관문도시로 역할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점차 주변지역으로부터 이주해 들어오는 인구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시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제주도내 불균등발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 인구이동 : 양적 그리고 질적 측면

1) 인구이동의 양적 측면

제주도 인구이동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제주도의 유입, 유출인구를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지만 5년전 거주지가 제주도가 아닌 경우와 5년전 거주지가 제주도이나 현재 거주지가 제주도가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검토해 보았다. 제주도의 유입, 유출인구를 합한 총 이동인구는 1985년 58,656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2퍼센트를 차지하여 상당한 규모의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동인구수는 점차 증가하여 활발해지는 인구이동과 이에 따른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전체인구에서 이동인구의 비율은 1985년 12.0퍼센트, 1990년 11.56퍼센트, 1995년 12.5퍼센트, 그리고 2000년의 경우 약 13.5퍼센트로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매년 이

[표 3-5] 제주도 유입, 유출 인구수

(단위:명)

	1985		1990		1995		2000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이동인구 수	25,421	33,235	29,107	30,424	32,124	30,810	38,199	30810
총이동인구	58,656		59,531		62,934		69,009	
순이동인구	-7,814		-1,317		1,314		7,389	
전체인구수	488,576		514,605		505,438		513,260	

주 : 5세이상 인구수, 유입과 유출인구는 5년전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가 제주도와 육지부인 경우로 구분하였음.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표본 조사

정도의 육지부와의 인구교환은 제주도 인구 구성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인구이동의 증가는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한 이동의 가능성과 편리함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구득이 가능해 진 것으로 설명되어 진다. 그러나 정보의 구득과 이동성은 인구집단에 차별적으로 나타나기에 인구이동은 지리적 이동과 사회적 이동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유입, 유출인구 비교는 총인구수 변화에서는 포착되지 않는 인구구성의 질적 변화를 보여준다.

2) 질적 측면의 고려

제주도 인구이동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다음에서는 출생지, 5년전 거주지, 유입, 유출인구의 나이, 혼인상태, 경제활동상태, 교육수준, 직업을 비교하였다. 제주도 거주자의 출생지와 5년전 거주지를 보면 우선 자도 출생자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제주도는 도서지방이며 도시화, 산업화의 정도가 낮아 인구이동이 적어 출생자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점차 활발해 지는 인구이동 그리고 이들의 누적적인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표 3-6]을 보면 1985년에는 제주도 거주자의 약 87퍼센트가 자도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0년에는 그 비율이 81.5퍼센트로 감소하고 있다. 그 외 출생지의 분포를 보면 1985년에는 전라남도가 4.9퍼센트로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된 곳이고 다음으로 서울시, 부산시, 그리고 경상남도 순으로 나타난다. 출생지 분포는 시간이 흐르며 서울시, 부산시, 경상남도, 경기도 등의 지역들이 조금씩 비율을 높이며 주요 지역의 다양성을 더하고 있다. 이는 이들 지역에서 유입되는 이동인구가 증가하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5년전 거주지 분포를 검토해 보면 인구이동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5년전 거주지로 본 인구이동의 지리적 특성은 우선 서울이 제주도 인구이동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상지역으로 전체 이동인구의 1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음으로 많은 유입인구는 1985년에는 전라남도와 부산시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1990년부터는 부산시가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유입하는 곳으로 나타난다. 이후 전라남도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대신 경기도와 경상남도가 제주로 인구를 이동시키는 중요한 지

[표 3-6] 제주도 인구 출생지와 5년전 거주지 비교

(단위:%)

	1985		1990		1995		2000	
	출생지	5년전	출생지	5년전	출생지	5년전	출생지	5년전
제주도	86.9	49.3	84.9	46.8	83.8	44.1	81.5	42.3
서울시	1.5	15.6	1.8	15.5	2.3	15.9	2.7	15.0
전라남도	4.9	8.8	4.9	6.4	4.3	3.6	4.4	2.7
부산시	0.9	8.0	1.3	9.4	1.6	10.2	1.7	8.4
경상남도	1.0	3.4	1.3	3.3	1.4	4.1	1.7	4.6
경기도	0.6	3.3	0.7	4.5	1.0	6.6	1.2	9.2
경상북도	0.7	1.9	0.9	2.1	0.9	1.8	1.1	1.9
전라북도	0.7	1.8	0.8	1.7	0.8	1.8	1.1	1.5
충청남도	0.7	1.8	0.8	1.2	0.7	0.8	0.8	1.2
강원도	0.4	1.5	0.5	1.9	0.6	1.3	0.7	1.2
대구시	0.2	1.5	0.3	1.9	0.4	1.5	0.5	2.3
인천시	0.1	1.1	0.2	1.0	0.3	2.0	0.4	2.7
충청북도	0.3	0.7	0.3	0.6	0.4	0.8	0.5	0.9
광주시	-	-	0.4	2.1	0.5	2.1	0.5	2.2
대전시	-	-	0.1	0.9	0.1	0.6	0.2	1.4
합계(N)	100% (488,300)	100% (48,624)	100% (505,805)	100% (53,565)	100% (494,908)	100% (57,484)	100% (512,541)	100% (66,160)

주 : 상위 3곳에 밑줄; 1985년 광주시, 대전시는 행정구역이 현재보다 좁아 해석에 주의를 요함; 북한과 외국이 있어 전체 합이 100%가 안되는 경우도 있음.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10%표본.

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이동이 수위도시인 서울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인구교환 지역으로 나타나지만, 전라남도의 경우 약화되는 것을 보면 지리적 근접이 이전에는 중요했지만 점차 그 중요성이 이동지역의 인구규모보다 약화되어 나타나는 지리적 특성을 알 수 있다.

제주도 유입, 유출인구의 속성 비교는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구성의 변화 그리고 지역정체성과 지역발전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제주도 유입, 유출인구의 개인속성을 비교해 보면 이동인구의 평균 나이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며,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유출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를 보면 기혼자들이 이동인구의 과반수를 넘어서고 있으며, 유입인구에서 유출인구보다 10퍼센트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미혼자들은 유출인구에서 높은

[표 3-7] 제주도 유입 · 유출인구 개인 속성 비교

		1985		1990		1995		2000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나이 평균		27.6	24.9	28.0	25.9	29.2	28.6	30.3	28.6
혼인(%)*	기혼	68.5	53.7	67.2	54.0	69.8	57.2	65.7	51.4
	미혼	25.0	43.1	27.2	41.9	24.1	35.8	27.4	39.0
	기타	6.6	3.3	5.6	4.1	6.1	7.0	6.9	9.5
계(N)		100% (748/577*)	100% (752/613*)	100% (614/500*)	100% (601/485*)	100% (700/573*)	100% (580/486*)	100% (752/613*)	100% (563/461*)

주 : *15세이상; 기타는 이혼, 사별 등을 포함함.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비율을 보이고 있어 앞의 평균나이와 더불어 고려해 보면 미혼의 젊은 층이 다수 유출되고 있으며, 기혼자들이 가족단위로 취업기회를 찾아 제주도로 유입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취업인구는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입인구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제주도로의 유입이 취업기회를 찾아 들어온 이주인 반면 학업의 경우 유출인구에서 대략 10퍼센트 정도의 월등히 높은 비율이 보여지는 데 이는 교육기회, 특히 고등교육 기회를 찾아 이동한 모습이라 하겠다.

제주도에는 현재 종합대학으로 제주대학교 4년제 대학으로 제주교육대학교, 탐라대학교 그리고 3개의 전문대학이 있다. 따라서 대학이나 대학원의 고등교육을 위해 이주해 나간 경우를 다수 포함하여 앞의 유출인구는 미혼의 혼인상태와 함께 더불어 다양해 질 것이다.

[표 3-8] 제주도 유입 · 유출인구의 경제활동상태 비교

(단위:%)

	1985		1990		1995		2000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취업	53.7	46.7	60.2	54.2	66.0	55.8	62.3	49.2
학업	4.9	14.7	3.0	12.4	2.6	12.6	7.0	16.3
기타	41.4	38.4	36.8	33.4	31.4	31.7	30.7	34.5
계(N)	100% (585)	100% (623)	100% (486)	100% (481)	100% (573)	100% (486)	100% (606)	100% (454)

주 : 15세 이상; 기타는 구직, 가사, 연로, 질병 등을 포함함.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인구이동을 인적자원의 이동으로 고려할 때 이동인구의 교육수준과 직업의 종류는 가장 중요한 검토 사항일 것이다. 이동인구 취업자의 교육수준을 비교해 보면 우선 가장 다수를 이루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자로 40퍼센트를 넘어서고 있으며 유입인구에서 더욱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모두 합쳐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의 비율로 보면 1985년에 유출자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 외에는 매번 유입인구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대학교 졸업자는 1985년과 1995년에는 유입인구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1990년 그리고 2000년에는 유출인구에서 비교적 큰 비율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학원이상의 경우 유입인구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에 있는 기업이나 기관의 고위직들이 육지부에서 파견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정부행정직 종사자나 대기업 관리직 종사자와 같은 전출에 의한 이주이기 때문에 일시적 거주지로 생각하여 지역사회에의 적응에 소극적이고 지역연계가 부족한 편이다. 고학력의 이동인구 비율이 최근으로 오면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학력층에서 이동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반영하기도 한다. 제주도 이동인구의 학력이 이전보다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출인구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대학교 졸업자가 나타나는 것은 인재유출의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직업을 비교해 보면 보편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직업은 서비스 판매직으로 특히 유입

[표 3-9] 제주도 유출 · 유입인구의 취업자 교육수준 비교

(단위:%)

	1985		1990		1995		2000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초등학교이하	14.7	20.1	11.3	6.5	6.4	8.4	6.3	2.6
중학교	21.1	23.8	14.6	14.4	10.8	11.8	7.6	8.4
고등학교	45.3	40.9	53.5	51.7	45.5	40.2	40.8	36.1
전문대학	4.0	3.6	4.0	4.6	4.2	12.5	12.6	18.5
대학교	15.0	11.6	15.0	21.7	26.5	25.1	25.1	30.8
대학원이상	0	0	1.7	1.1	6.6	1.8	7.6	3.5
계(N)	100% (327)	100% (303)	100% (301)	100% (263)	100% (378)	100% (271)	100% (382)	100% (227)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에서 높은 비율을 보여 관광지 제주도의 주요 취업기회 분야를 반영하고 있다. 농림어업직은 비교적 높은 비율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사무직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 또한 제주도의 경제기반에서 화이트칼러 직종이 두텁지 않으며 농업과 관광에 치중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표 3-10] 제주도 유출 · 유입인구 취업자의 직업 비교

(단위:%)

	1985		1990		1995		2000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전문 · 기술 · 행정관리직	9.1	13.4	14.6	13.6	18.5	28.4	26.5	37.3
사무직	12.1	13.7	9.0	18.7	13.5	8.9	9.7	12.9
서비스 판매직	37.8	23.6	44.2	29.2	34.9	23.2	33.3	25.3
농림어업직	19.9	10.9	11.0	5.1	7.7	4.1	10.8	2.7
기능 · 기계조작 · 단순노무직	21.2	38.4	21.3	33.5	25.4	35.4	19.7	21.8
계(N)	100% (307)	100% (284)	100% (301)	100% (257)	100% (378)	100% (271)	100% (381)	100% (225)

주 : 15세 이상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유입, 유출인구를 비교해 보면 서비스 판매직의 경우 유입인구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관광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기능 노무직의 경우 유출에서 높게 나타나 공장이 없는 제주의 실상을 또한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이는 사무직과 전문관리직에서도 유출인구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을 반영한다 하겠다. 특히 전문 관리직의 비율이 유입, 유출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제주경제가 육지부와의 연계가 강화되며 점차 많은 수의 전문인력의 이동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점차 고도화 되어 가는 지역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3. 인구문제와 지역발전

제주도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현재 약 1.15퍼센트이며 인구증가율 또한 전국 평균 증가율의 반 정도로 제주도 인구증가율은 그리 높지 않다. 또한 제주도의

인구변화는 지역경제상황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상당히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제주도의 산업구조가 1차산업과 관광산업에 편중되어 다양하고 안정된 양질의 취업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관광개발 그리고 이와 관련한 건설경기에 기인하는 바 또한 크다. 인구구조면에서는 전국평균에 비추어 제주도는 경제활동인구층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연령층이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것은 소규모 지역경제에 따른 교육 · 취업기회의 부족으로 젊은 층들이 육지부로 이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유년층과 특히 노년층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인구부양부담이 높은 편이다. 제주도는 농업이 중요한 경제기반으로 자리잡고 있어 노년층이 아직 중요한 노동력으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며 사회복지시설의 수요 또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의 이러한 낮은 인구증가 상황에서 제주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 제주시는 행정, 교육, 교통의 중심지로 도내 그리고 육지부와의 관문도시의 역할을 해 왔으며, 도내 여타 지역보다 생활기회가 확대, 개방되어 도내 인구를 유입하며 점차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제주 또한 전국적인 상황과 유사하게 교통 통신의 발달이 주거나 경제활동의 분산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권의 확대와 더불어 점차 중심도시, 제주시로 인구가 집중하는 역류효과로 나타나고 있어 서서히 교통체증과 주거비 상승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도내 인구이동과 더불어 육지부와의 인구이동은 더욱 제주도내의 1차산업과 관광산업에 편중된 취업 기회, 특히 전문 취업기회의 부족 그리고 정보화사회에 진입하며 요구되는 정보근접의 요구로 인해 고등교육을 도내보다는 육지부에서 받으려는 이동성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 인구이동의 질적 측면, 특히 선별적인 인적자원의 이동으로 고려해 본 유입과 유출인구의 속성을 비교해 보면, 우선 개략적인 지리적 특성으로 제주도는 서울과 지속적인 가장 대규모의 인구이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기타 이전에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전라도가 중요한 이동지역이었으나 최근으로 오며 부산, 경남 그리고 경기도가 중요 지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인적자원 그리고 경제활동과 관련한 인구이동 특성을 보면, 제주도는 유입인구에게 농업과 관광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육지부로의 인구유출은 학업과 취업기회를 찾아 젊은 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보여지며 유출인구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유입인구에 비해 높고 유출인구의 직업이 전문직에서 높게 나타나 인재유출이 발생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도서지역은 취약한 경제기반으로 인해 인구유출(migration) 그리고 주요 취업기반이 정부기관(bureaucracy)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제한적인 취업기회로 특징지워져 고학력 전문직의 인재유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제주도의 경우도 이러한 도서지역의 경제 특성을 보이고 있어 인구유출, 특히 인재유출을 경험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도시계층의 상층인 수도권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해 이러한 인구이동에서 고급 인적자원의 유출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 또한 일부 전문 인력이 이주해 오지만 이들은 다수 정부직 종사자나 대기업 관리직 종사자로 일시적 이동으로 생각하고 이주해온 경우가 많으며 이동성향 또한 높은 집단이라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도의 인구문제는 질적 측면에서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는데 학업과 취업기회를 쫓아 이루어지는 두뇌유출(brain drain)을 막기 위한 지역차원의 인적육성은 교육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들을 위한 취업기회를 또한 확보해야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가 지역내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높은 교육수준의 전문직 인력은 높은 이동성향을 나타내며 이들의 노동시장 영역이 전국 또는 세계 차원인 것을 고려한다면, 지역인적자원 확보는 해당지역내의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자체 양성 외에 고급인력을 유입하는 전략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해 이들 고급 인력의 지역화를 위한 전략, 즉 지역사회에 뿌리내림을 통해 협력적 인간관계를 지역내에 구축해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더불어 이를 교환, 활용하는 상호학습체계를 갖출 필요가 크다.

제주도의 인구문제는 전국 1퍼센트의 섬이라는 한정된 규모의 양적 측면의 문제도 있지만, 인구이동의 지리적 현상을 통한 사회적 이동으로 인한 고급인력의 유출이 질적 측면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최근의 지역역량에 기초한 내생적 지역발전의 추구를 위해서 강조되고 있는 자원, 자본보다 더욱 중요시되는 인적자원 그리고 이들에 기초한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인재육성과 더불어 고급인력 유치를 통한 인재확보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상호학습과 협력을 도모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002년부터 야심적으로 시작한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의 성공을 위해 지역인적자원의 육성과 유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제4장
제주지방 - 취락의 발달과 구조

강만익 (제주공업고등학교)

빈 면

제4장 취락의 발달과 구조

1. 정주체계의 형성과 구조

정주체계는 인간정주의 단위로서 취락이 갖는 일련의 공간적 질서를 의미하며, 삶의 양식이 빚어낸 역사적 산물이다. 또한 생산활동과 일상생활의 장으로서 지역정책을 실시하는 기본적인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정주체계에 대한 분석은 지역 내에 존재하는 취락의 분포와 입지 관계, 상호 기능의 계층 관계를 구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최희선, 1993).

제주지역의 정주체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대표되는 시 지역과 읍 · 면 지역(7읍 5면) 그리고 리 · 동 지역에 형성되어 있다. 이들 정주체계들은 서로 계층성을 띠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 관계에 있다. 한편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정주체계가 재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과 교육 · 문화시설의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어촌과 부속 도서지역의 정주체계는 인구 감소에 따라 그 기반이 위축되고 있다.

정주체계의 실태를 지역별로 보면, 먼저 제주도 최대의 정주체계가 형성된 제주시의 경우 크게 서부지구(신제주), 중부지구(구제주), 동부지구(화북 · 삼양동)에 형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신제주라고 불리는 서부지구에는 관광위락시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중부지구는 인구와 상업시설이 집중되어 도심의 성격이 강한 곳이다.

인구 29만명의 제주시는 제주도의 제1도시로 제주도의 행정 · 교육 · 문화기능을 수행하는 중심지이며 배후지역에 생활편익 서비스, 공공 서비스, 의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구 8만3000명의 서귀포시는 크게 구시가지, 신시가지, 중문지구에 정주체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제주도 남부지역의 실질적인 행정 · 문화 · 교육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귀포 구시가지와 중문지구 사이에 신시가지가 형성되어 새로운 정주체계가 탄생되었다.

인구 3만명 이하의 읍 · 면 단위 정주체계에는 중 · 고등학교와 공공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일반병원 · 보건소 · 상설시장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후지역에 농수산물의 중간 집산(集散) 기능과 일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읍 · 면 단위 정주체계 중 남제주군 남원읍에는 6,600세대 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어 남제주군 최대의 정주체계가 되고 있으며, 주로 감귤의 생산과 유통기능을 하고 있다.

제주시의 근교지역으로 시 행정구역 경계에 접하고 있는 조천읍과 애월읍 지역의 정주체계는 도 · 소매권, 통근 · 통학권, 상품 구매권 측면에서 제주시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 되고 있다. 특히 애월읍 지역은 9,800세대 2만 7천명이 거주하여 북제주군 최대의 정주체계가 되고 있다. 이밖에 면 지역의 정주체계는 부속 도서지역인 추자도와 우도 그리고 해안지역에 위치한 한경면, 안덕면, 표선면에 형성되어 있으나 자족성이 약한 실정이다.

리 · 동 지역의 정주체계에는 초등학교 · 유아원, 약국 · 의원이 입지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1~2개의 리 · 동 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제주도에는 172개의 행정리가 있으나 일상 생활편익 시설이 부족하여 정주체계가 정체 또는 약화되고 있다.

2. 촌락의 구조와 변화

제주도의 촌락은 선사시대부터 해안지역에 주거지가 형성된 후 고려시대에는 현촌(縣村) · 포구촌(浦口村) · 진촌(鎭村)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읍성촌 · 원촌 · 화전촌이 성립되었다. 해방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받아 복구촌과 개척촌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촌락들은 가옥 밀집도에 따라 크게 산촌(散村)과 집촌으로 그리고 촌락의 기능에 따라 농촌과 어촌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촌과 포구촌, 진촌은 대부분 해안지역에 입지하였다. 이중에서 현촌은 지방행정구역의 최하부 단위로 등장한 촌락이며, 진촌은 방어를 위해 만든 진성(鎭城) 내에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형성된 것이었다. 읍성촌은 읍성(邑城)으로 둘러싸인 취락으로 제주읍성촌, 정의읍성촌, 대정읍성촌이 있었다. 특히 제주읍성촌에는 당시 제주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통치시설이 집중되어 제주도의 실질적인 중심지였으며, 현재 이곳에는 제주읍성과 관덕정, 제주목관아지가 남아있다. 원촌은 읍성촌과 읍성촌을 연결하는 도로교통의 요지에 형성된 소규모 교통촌락으로 관리들에게 숙박 및 교통수단인 말을 제공하기 위해 성립된 것이었다. 복구촌은 1948년에 발생한 4 · 3 사건으로 인해 황폐화된 일부 중산간 마을이 복구되면서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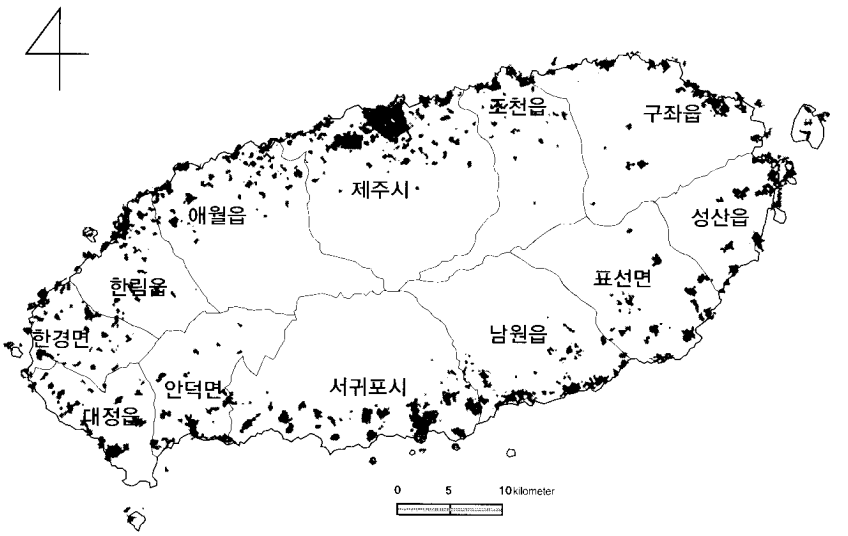
성된 촌락이다.

농촌은 해안지역과 중산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해안지역의 농촌에서는 감귤, 양배추, 당근 등 환금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어촌은 해안지역과 도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바다와 농경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반농반어촌이 대부분이지만 전업적인 어촌도 비양도, 마라도 및 추자도에 나타나고 있다. 이들 어촌에서는 어선어업과 잠수(해녀)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류비용의 증가와 선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으며(정광중 · 강만익, 2003) 또한 해녀의 노령화로 인해 잠수어업이 쇠퇴하는 추세에 있다.

이상과 같은 제주도의 촌락들은 해안지역(해발 200m 이하)에 가까울수록 많고 내륙 산간지역으로 갈수록 적게 분포하고 있다. 대부분의 촌락들이 해안지역에 분포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한라산을 정점으로 한 타원형의 환상(環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4-1).

한편, 도시를 중심으로 정주체계가 재편된 결과 촌락지역은 중심도시와 연결된 개방체제로 편입되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1990년대로 들어선 이후 촌락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양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최근에 들어오면서 남부 지역 과원촌락을 중심으로 감귤과수원의 일부를 폐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농산물 시장개방의 여파로 감귤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과수원



〈그림 4-1〉 제주도 취락의 분포(2004)

의 구조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폐원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8월말까지 이루어진 폐원결과를 보면 제주시 575.5ha, 서귀포시 388ha, 북제주군 2,029.1ha, 남제주군 1,627.9ha로 총 4,620.5ha가 폐원되었다.



〈그림 4-2〉 아름다운 어촌으로 지정된 한경면 고산리 자구내 어촌(2004년 8월 촬영)

둘째, 농어촌 지역의 준농림지에 휴양형 민박가옥인 펜션(pension)이 만들어지면서 촌락의 새로운 구성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관광객 유치로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 농어촌에 토대를 둔 지역자본들이 결합하여 펜션 가옥을 단지화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펜션 가옥들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애월읍 신엄리 해안과 성산읍 시흥리 해안에 특히 많이 입지하고 있어 새로운 관광지구로 부상하고 있다.

셋째, 관광화에 영향을 받아 촌락의 경관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실례로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표선면 성읍리 민속촌과 조천읍 교래리 마을 그리고 마라도와 우도에는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한 민박시설과 음식점들이 새롭게 입지함으로써 경관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어촌지역 중 주변경관과 어업체험 여건 등이 뛰어난 서귀포시 보목마을과 북

제주군 우도 · 비양도, 한경면 고산리, 애월읍 구엄리, 남제주군 성산읍 오조리, 신양리 마을은 최근 해양수산부에 의해 '아름다운 어촌'으로 지정되어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어촌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그림 4-2).

넷째, 자연경관과 문화 · 역사경관이 수려한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축제가 열리면서 마을 이미지 제고와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서귀포시 보목동이 주관하는 '보목 수산일품 자리돔 큰 잔치'와 법환동의 '법환 한치 축제' 그리고 구좌읍 송당리의 '송당마을 신화 축제'와 제주시 삼양동의 '검은 모래 축제' 등은 규모면에서 대표적인 마을축제에 해당되며 전국을 대상으로 한 장소마케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주민 간 내적 결속 및 마을 발전의 계기가 되고 있다.

다섯째, 특산물 생산지를 중심으로 정보화마을(Invil: information network village)이 만들어지면서 사이버 공간을 통해 도시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촌락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정보화에 소외된 농어촌 및 산촌에 초고속 인터넷 이용 환경과 전자상거래 등 정보 컨텐츠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정보생활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촌락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남제주군 알토산 마을(토산2리)과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 해녀마을과 한경면 저지리는 대표적인 정보화 시범마을이다.

3. 도시화와 도시 내부구조

인구 5만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을 도시라고 할 경우, 제주지역의 도시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다. 이들 도시들은 공통적으로 도시적 기능과 경관요소가 탁월한 지리적 시(해발 200~300m 이하)가 시정(市政)이 법적으로 미치는 행정시(해안~한라산 정상)에 비해 훨씬 작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통적으로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체계가 이루어져 왔으며 제주시의 중심성이 다른 시 · 읍 · 면 지역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불균형 정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귀포시, 한림읍, 성산읍 등의 중심성을 점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도시화 과정과 도시 내부구조를 파악하여 제주지역의 도시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도시화 과정

도시화는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집중하는 현상으로 인구밀도의 증가, 도시내부의 토지이용 변화와 2 · 3차 산업인구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시화의 정도는 도시화율로 나타낼 수 있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를 토대로 산출한 제주지역의 도시화율(2003년)은 68% 정도이나 제주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화율은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1) 제주시의 도시화

제주시 지역에서 도시화는 일제강점기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는 시가지 범위가 제주읍성 내로 국한되었으며 1920년대부터 산지항구가 축조되면서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제주도와 한반도부, 일본을 연결하는 관문인 산지항을 중심으로 외부와 교역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곳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들과 주정 공장, 선박 공장, 상업 시설 등을 비롯한 도시적 기능요소들이 집중 현상을 보이면서 도시적 경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산지항 주변의 시가지 형성은 1940년대까지 계속되어 산지천 연안로(동문로 로터리~산지항)는 번화가로 오랫동안 그 기능이 유지되었다.

1950년대에 이르러 6 · 25 피난민의 유입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지 개발을 위해 현재의 제주시청 주변을 중심으로 하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었다. 이곳이 사업지구로 선정된 배경은 중앙로 로터리 동쪽에 위치한 사라봉과 서쪽에 위치한 비행장이 시가지가 동서방향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제주시, 1994) 그 대안으로 남쪽지역에 위치한 시청주변이 선정된 것이었다. 그 결과 제주시의 남북방향(중앙로 로터리~제주시청)을 연결하는 도시화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지구에는 먼저 공공기관들이 이전 · 신설되어 집중됨으로써 '관가 1번지'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비지적(飛地的)으로 이루어진 도시화는 이후 점차 주변지역과 연담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제주시는 T자형의 시가지 형태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1980년대에는 T자형 도시화로 말미암아 발생한 공백지대인 남동쪽과 남서쪽

을 도시화하기 위해 제2지구 · 제3지구 · 신산지구 · 삼성혈지구 · 연동지구 · 화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도시화의 범위는 점차 남서 · 남동쪽으로 점차 확대되어갔다(표 4-1). 특히 이 시기에 연동의 신시가지(신제주 제1 · 2지구) 건설은 도시화의 공간범위를 더욱 남서쪽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쾌적한 관광타운 건설과 업무시설 유치 및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이곳으로 제주도청, 제주경찰국, 제주도교육청, 북제주군청 등의 공공기관과 한국방송공사, 제주문화방송 등의 언론기관, 각종 정부산하기관과 기업체들이 신설되거나 이전되었다. 그러나 호텔과 유흥주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도시기능보다 관광 · 위락 기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시 동쪽에 위치한 화북지구에는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인구유입현상이 나타나 새로운 주거지구가 되고 있다.

1990년대에는 노형 · 외도 · 이도 · 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져 새로운 주거지구로 등장하였고, 동쪽으로 우회도로가 확장되면서 주거지가 확산되어 도시화를 더욱 견인

[표 4-1] 토지구획정리 과정

(단위 : ㎡, 년월, 억원)

시기	지구명		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억원)
1950년대	제1지구		588,657	1954.08~1967.04	10
1960년대	진성동지구		37,088	1962.12~1963.12	1
	삼성혈지구		149,074	1964.03~1966.08	9
	제2지구(삼도동)		582,153	1967.12~1970.04	34
	신산 제1지구		568,870	1968.12~1971.12	100
1970년대	제3지구(서사라)		982,875	1976.06~1979.12	2,214
	신제주 제1지구		1,421,469	1977.03~1978.05	4,446
1980년대	신제주 제2지구		572,125	1980.04~1981.12	5,059
	신산 제2지구		1,015,154	1980.07~1983.12	11,843
	화북지구	공업	288,551	1984.01~1986.12	2,337
		주거	262,030	1984.01~1986.12	2,713
1990년대	이도지구		828,833	1990.04~1993.12	30,976
	신제주 제3지구		756,906	1991.10~1995.04	33,254
	노형지구		213,158	1993.08~1996.03	9,144
	삼양지구		657,618	1995.04~2001.03	33,690
	외도지구		752,031	1997.04~2002.03	35,951

자료 : 제주시청 도시과 홈페이지 자료를 재구성, www.jejusi.go.kr

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제주시에는 신흥 주거지구인 화북동과 노형동의 성장으로 인해 다핵구조로 변모해 가는 도시화의 공간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제주시, 1994). 이상과 같이 제주시의 도시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진 토지구획정리 과정은 [표 4-1]과 같다.

한편, 도시화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진 과정에서 제주시내에도 인구밀도와 지가분포에 있어서 지역차가 나타나고 있다. 인구밀도(명/㎢)를 보면, 1980년에 661명이었던 것이 2004년 현재 1,167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도 총인구의 53%가 집중한 결과 종주도시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내에서도 구제주의 중심부인 일도동은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구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곽지대에 위치한 화북동 · 삼양동 · 노형동에서는 최근에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인구밀도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의 지가는 도시의 발전적 동태를 표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데, 특히 상업지구의 지가는 도시화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구제주의 일도동과 이도동은 상업시설 집중으로 인해 최고 지가를 형성하고 있으며 신제주(연동)는 두 번째로 높은 지가를 형성하고 있다(강민정, 2001).

(2) 서귀포시의 도시화

서귀포에서 주거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439년에 서귀진(西歸鎭)이 축성되어 진취락이 등장하면서부터로 볼 수 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경찰주재소, 우편국, 도지청(島支廳) 등의 각종 행정관서와 수산출장소, 금융조합이 집중되면서 남부지역의 실질적인 중심지가 되기 시작하였다. 1935년부터는 면제(面制)가 실시되었는데 당시 서귀면의 중심지는 면사무소가 입지했던 송산동이었다.

해방이후 1950년대에 들어오면서 서귀포의 시가지는 점진적인 확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1946년부터 제주도가 2군제로 편제되면서 서귀포에는 남제주군청과 경찰서, 즉결 심판소, 등기소, 교육청 등이 입지하여 남부지역 7개 면지역(성산 · 표선 · 남원 · 서귀 · 중문 · 안덕 · 대정)을 관할하는 지역으로 변화하였다. 이후 4 · 3 사건과 6 · 25 등 사회적 불안기에 서귀포의 인구유입이 늘어나 송산동 내부가 포화상태가 됨에 따라 이곳에 입지했던 공공기관들이 해안일주도로(12번도로) 북쪽인 '뒷벵듸' 부근, 즉 오늘날의 중정로(서문로 로터리

~동문로 로터리) 도로변으로 이전되면서 이곳이 서귀포의 새로운 중심지구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서귀포의 도시화 과정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1차 도시 확장이었다(서귀포시, 2001). 이 과정에서 송산동과 이웃한 정방동, 중앙동이 연담화되어 발전하면서 서귀읍으로 승격되었다.

1960년대~1970년대에 들어와 서귀포의 도시화는 제1횡단도로(5 · 16도로)의 개통에 영향을 받는다. 즉 서귀포와 제주시를 연결하는 이 도로가 개통되어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관광객이 증가함에따라 현재의 구시가지 지구에 각종 숙박 · 서비스 시설이 입지하기 시작한 결과 도시화가 더욱 촉진 될 수 있었다. 이후 서귀읍 도시계획안이 확정되면서 주된 공공기관들이 다시 '뒷벵듸'에서 북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현재의 서홍동 지구(중앙로터리 북쪽)로 이전되었다. 그 결과 시가지가 배후지로 더욱 확산됨과 동시에 현재의 서귀포 구시가지 윤곽이 완성되었다. 이것은 서귀포 시가지의 2차 확장이었으며, 이곳에는 남제주군청을 비롯하여 경찰서, 즉결 심판소, 등기소 등 주요 관공서와 함께 도립병원, 한국전력 등 공공시설이 입지하여 서귀포를 대표하는 신흥업무지구가 되었다. 이러한 2차 도시확장은 송산동에서 '뒷병듸'(서귀동 250번지~332번지 일대)로 이루어졌던 1차적 외연 확장 때보다도 훨씬 광범하면서 집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 토지이용과 경관구조면에서 도시화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서귀포시, 2001).

1980년대~1990년대에 들어와 시 승격과 신시가지 건설이 도시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서귀포 서쪽의 중문면 지역을 통합하여 시 승격이 되면서 도시화 범위는 서쪽으로 보다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구시가지 지구와 중문지구 사이에 위치한 고근산(396.2m) 남쪽 과수원 지대에 신시가지 지구가 만들어져 서귀포시청, 서귀포경찰서, 감귤협동조합, 서귀포우체국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이전됨으로써 새로운 업무지구가 형성되었다. 현재 5,8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업무기능 외에 아파트 단지와 개인주택, 상업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혼재되고 있다. 그러나 비지적으로 이루어진 도시화의 결과 신시가지 지구에는 생활 편의시설인 대중목욕탕과 병 · 의원, 차량정비업소 등이 입지하지 못하여 많은 경제활동을 구시가지 지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서귀포시,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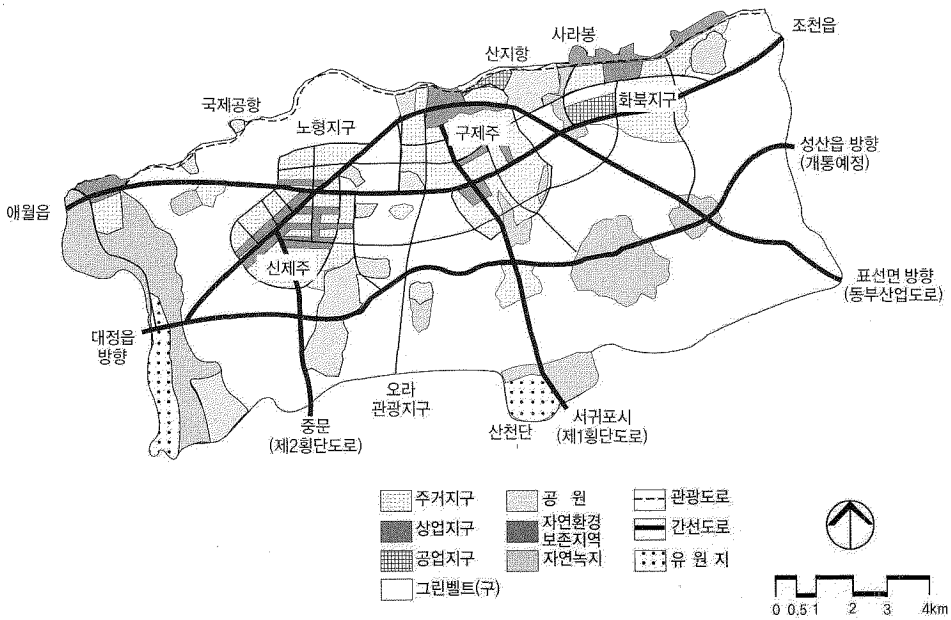
2000년대 초에는 월드컵 경기장이 신시가지 지구 남쪽 도로변에 입지하여 관광명소로 크게 부각되면서 신시가지 내 상업기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신시가지 지구에서 서쪽

으로 약 10km 떨어진 중문지구의 도시화는 중문 관광단지 개발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가 이곳에 입지함으로써 중문지구를 국제회의산업과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부각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2) 도시 내부구조

도시의 내부구조는 도시 내의 더 작은 등질적인 지역들의 배열을 의미하는데 크게 상업지구, 주택지구, 공업지구로 구분할 수 있다. 제주시는 시가지의 외연적 확대가 진행되고 있으나 뚜렷한 기능분화 과정을 밟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제주시가 도시 규모가 작고 관광도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1) 제주시의 내부구조



〈그림 4-3〉 제주시 도시지역 내부구조

자료 : 한일지도(주), 2000, 〈제주시 도시계획총괄도〉를 토대로 재구성

해발 300m 이하(과거의 그린벨트 경계선)에 해당하는 제주시 도시지역(지리적 시)의 내부구조는 크게 주거지구, 상업지구, 녹지(綠地)지구로 구분되고 있다(그림 4-3). 이 중에서 상업지구는 도시의 크기와 상관없이 반드시 존재하는 공간으로, 제주시의 상업지구는 동문로, 칠성로, 관덕로를 포함하고 있는 구제주의 일도동에 대표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현재 제주도 제1의 상가지역으로 접근성이 가장 높아 최고지가를 나타내는 곳이기도 하다(강민정, 2001). 이러한 상업지구는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선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곳의 업종별 점유율은 도소매업, 음식업, 기타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상가(商街)를 대상으로 상업지구의 성격을 보면, 먼저 칠성로 상가는 중앙로 로터리와 탑동 부근에 위치하여 '제주의 명동'이라고 알려진 곳이다. 의류 및 고급예물 구입 장소이기도 하며, 유명브랜드 의류점, 양복점, 귀금속점 등이 밀집되어 제주도의 '패션 1번지'로 자리 잡았으나 대형 마트와 신제주 및 일도지구의 개발, 지하상가의 설립 등으로 점차 칠성로의 상가는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칠성로 상가에서는 최근 통행로를 정비하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상가 점주를 중심으로 옛 명성 되찾기 운동을 통해 지역 부흥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앙로 상가는 중앙로 로터리에서 남문로 로터리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형성되어 있다. 이곳에는 1980년대까지 전자제품 판매점이 밀집되어 있었으나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도로변이 승용차의 주 · 정차 금지구간으로 바뀌면서 고객감소가 심하게 나타난 결과 많은 점포가 이전하고 말았다. 따라서 현재는 의류, 신발류, 스포츠웨어 판매점으로 대체되어 있다. 특히 중앙로의 지하상가에는 의류판매점을 중심으로 신발, 완구, 가방 등 운반과 휴대가 용이한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많이 입지하여 있다.

시청 상가는 2개 대학의 교통거점으로서 시청주변에는 1990년대에 들어와 도로확장과 건물 신축이 이루어졌다. 시청 담장을 허물고 정류장 공간을 확보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청 앞 도로변이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면서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있다. 그 결과 시청 서쪽 도로변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을 주된 고객층으로 하는 음식점, 오락실, PC방이 밀집되어 이른바 '대학촌'이 되고 있다. 신제주 상가는 신광로 도로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곳에는 국내외 관광객 대상의 숙박, 위락 및 음식점이 많이 들어서 있다(제주지방중소기업청, 1999).

주거지구는 신제주 제3지구, 일도지구, 화북 · 삼양지구, 노형지구, 외도지구가 대표적이다. 이들 주거지구들은 1990년대에 이루어진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택지개발 사업에 의해 형성된 곳으로 이 중에서 일도지구는 제주시의 중앙부분 그리고 화북 · 삼양지구는 동쪽부분, 신제주 제3지구 · 노형 · 외도지구는 서쪽부분에 조성된 주거지구에 해당된다.

이 밖에 공업지구는 제주시 동부지역인 화북동에 소규모로 만들어진 '화북공업단지'가 있다. 단지 조성 당시에는 제주시의 변두리였으나 화북 · 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배경으로 도시개발이 가속화된 결과 공업단지 주변에는 초등학교, 중 · 고교, 대학교 등 교육시설과 함께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상업시설 등이 밀집하고 있어 공업단지 이전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제조업체, 정비업체, 운수업체 등 300여 개 업체가 입지해 있다.

(2) 서귀포시의 내부구조

서귀포시는 제주도 남부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북쪽으로는 한라산 백록담 남쪽으로는 바다와 접하고 있으며 동서로 길게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다. 인구 83,000명의 소규모 관광도시로 도시와 농촌이 결합되어 시 지역을 이루고 있다. 서귀포시의 정주체계는 구시가지 지구, 신시가지 지구, 중문지구로 구분할 수 있다(서귀포시, 2000). 이 중에서 구시가지 지구는 중심상업 · 유통 · 금융 및 교육 · 문화기능, 신시가지 지구는 행정 · 업무기능 그리고 중문지구는 관광 · 국제회의 · 위락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서귀포시 역시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도시의 기능 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해발 200m 이하(조선시대 국영목장의 하한선인 하잣성 아래)에 해당하는 서귀포시 도시지역의 내부구조는 크게 주거지구, 상업지구, 자연녹지지구로 구분되고 있다(그림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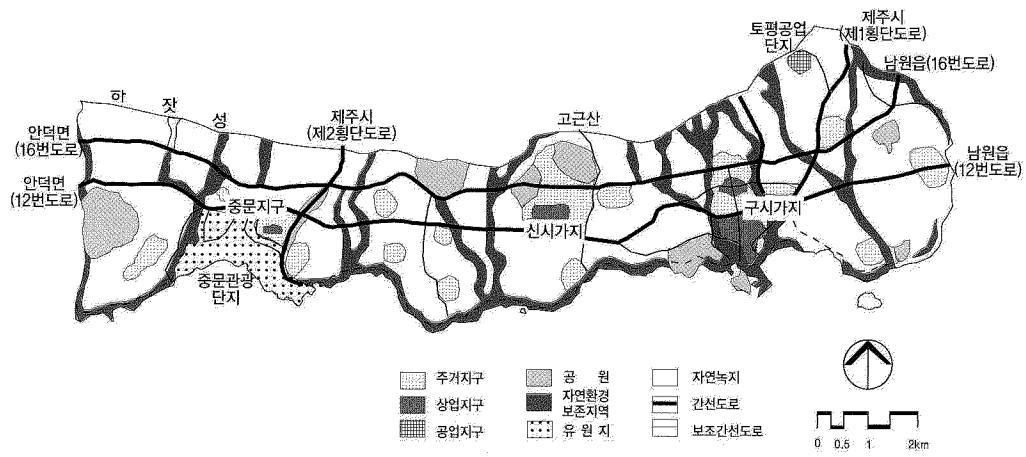
상업지구는 접근도와 지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구시가지 지구의 중앙로 로터리와 동문로 로터리 그리고 초원 사가로를 연결하는 삼각지대에 발달하고 있다. 이곳에는 각종 상업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차량 통행량이 많아 교통체증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곳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업지구의 업종들은 도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주요 상가들은 중정로, 중앙로, 동문로의 도로 양편에 밀집되어 있다.

이 중에서 중정로 상가는 서귀포시의 대표적인 중심상가로, 상설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유

동인구가 많으며 의류판매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심상가이기 때문에 점포임차료도 서귀포시 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로 상가는 중앙로 로타리(1호광장)에서 (구)중앙파출소 사이의 500m 도로 구간에 형성되어 있으며 이곳에는 소매업 · 서비스업이 주로 입지하고 있다.

동별로 보면, 송산동의 경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서귀포 관내에서 최대의 상가가 형성되었으나 구시가지 외곽 부분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인구이주가 많이 이루어진 결과 이곳의 상가는 점차 쇠퇴하고 있다. 중앙동에는 중정로, 중앙로, 동문로가 위치하여 상가가 가장 밀집한 지구에 해당한다. 소매업 · 음식업 · 서비스업이 높은 비율을 보이는 동시에 금융기관이 많이 입지하고 있다. 대규모 관광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중문지구는 유동인구가 많아 서귀포시 외곽지역 중 가장 많은 점포가 입지해 있다(제주지방중소기업청, 2000).

주거지구는 서귀포시내 취락들이 동서로 길게 분산 · 분포하는 성격을 반영하여 여러 지구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중 대표적인 주거지구는 1993년~1997년에 걸쳐 조성된 동홍동 지구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서귀포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구가 되고 있다. 이 밖에 공업지구는 서귀포시 동쪽 외곽인 토평동에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던 소규모 공장들을 모아 단지화(團地化)를 꾀하여 만든 토평 공업단지가 있으며 이곳에는 자동차 정비 공업사와 레미콘 공장 등 30여개 업체가 입지하고 있다.



〈그림 4-4〉 서귀포시 도시지역 내부구조

자료 : 한일지도(주), 2002, 〈서귀포시 도시계획총괄도〉를 토대로 재구성

빈 면



제5장
제주지방 – 산업구조의 개편과 지역경제의 변화

정광중 (제주교육대학교)

빈 면

제5장 산업구조의 개편과 지역경제의 변화

1. 산업구조의 개편

1) 산업구조의 변화

제주도 산업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5-1]은 1988~2002년간 제주도의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1970년대 중반경만 하더라도 제주도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비율이 거의 70%에 가까울 정도로 1차 산업 종사자가 많았다(제주도, 1993; 제주도, 2003c). 이 점은 관광산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지 않았다는 배경도 있지만, 당시의 주된 경제활동은 보리, 조, 콩, 깨, 유채, 고구마 등을 중심으로 재배하는 밭농사 위주의 농업이나 무동력선에 의한 연안어업과 여성(해녀)들에 의한 잠수어업(물질작업), 그리고 표고버섯 등을 생산하는 임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패턴은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80년대 후반까지도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웃돌 정도로 1차 산업은 제주도의 기간산업이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1980년대 말부터 5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한 농림어업은 1990년대 중반 경에 이르면 겨우 30%대를 유지하는 상황을 맞이하였고, 2002년 시점에서는 23%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은 앞으로 제주도의 1차 산업의 존속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농어민들의 부정적인 견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취업자수의 실수에서 확인되듯이, 1988년 11만 명에 달하던 농림어업의 종사자수는 2002년에는 62,000명으로 거의 반수에 육박할 정도로 감소하고 말았다(제주상공회의소, 2003). 이는 제주도조차도 1차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과 사회적인 기반이 붕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차 산업인 광공업에 대해서는 표에 제시된 수치로 볼 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특히 제주도는 2차 산업을 대표하는 제조업체와 그 종사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1차 산업이나

3차 산업에 비해서 산업별 구성비에 대한 변화의 폭도 매우 낮다.

3차 산업에 해당되는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과 기타서비스업 부문은 1980년대로 진입하면서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특히, 제주도는 1971년 「제주도종합개발10

[표 5-1] 제주도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화(1988~2002년)

(단위 : 천명, %)

연 도	농림어업		광공업		S.O.C와 기타 서비스업		취업자수 합계 (천명)
	취업자수 (천명)	구성비(%)	취업자수 (천명)	구성비(%)	취업자수 (천명)	구성비(%)	
1988	110	51.6	8	3.8	95	44.6	213
1992	84	33.8	10	4.0	154	62.1	248
1996	80	30.5	12	4.6	170	64.9	262
2000	70	27.0	10	3.7	180	69.3	269
2002	62	23.0	13	4.8	195	72.2	271
2002 (전국)	2,282	10.2	4,288	19.1	15,885	70.7	22,455

자료 : 통계청, www.nso.go.kr : 제주도,『제주통계연보』, 해당연도.

개년계획」(건설부)과 1973년 「제주도관광종합개발계획」(청와대 관광개발기획단)의 수립 등에 힘입어 중문관광단지가 조성되었으며, 그 이후부터 관광산업은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송재호, 2002). 그 결과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로 돌입하면서부터 한국의 경제 성장과도 맞물려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다. 제주도의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표 5-1]에서 볼 수 있듯이, 1988년에 44.6%에서 2002년 72.2%에 이르기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제주도의 3차 산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이다.(제주도, 2003a).

2)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제주도의 노동가능인구(15세 이상)는 2002년 현재 40만 1000명으로, 이 인구는 같은 해

제주도 전체인구(55만 2,310명)의 72.6%에 해당된다. 그리고 제주도의 노동가능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로 전체 인구수에 비례하여 매우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표 5-2]에서는 제주도의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2002년 제주도의 경제활동인구(27만 7,000명) 중에서도 취업자수는 27만 1,000명이고, 실업자수는 6,000명이며 실업률은 2.2%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은 69.1%로서 전국 평균치인 61.9%보다도 7.2%가 높게 나타난다(통계청, 2003).

경제활동인구를 10년 전인 1992년과 비교하면, 취업자수에서는 23,000명이 증가하였고, 실업자수에서는 4,000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경제활동 참가율은 2.1%가 증가하였지만, 실업률에서는 오히려 1992년보다 2002년이 0.1%가 높다. 실업자의 증감율은 사회적 ·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나, 2002년보다 10년 전인 1992년에 훨씬 경기가 좋았고(제주도, 1993; 제주도 2003c), 그 결과 취업의 기회가 더 많았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이어서 남녀별로 살펴보면(2002년), 남자의 경제활동인구는 14만 5,000명으로 이중에서 취업자수는 14만 1,000명, 실업자수는 4,000명, 경제활동참가율은 75.5% 그리고 실업률은 2.8%로 나타난다. 여자의 경우는 경제활동인구가 13만 3,000명이고, 이중 취업자수가 13만 명, 실업자는 3,000명, 경제활동참가율은 63.6% 그리고 실업률은 1.5%로 나타난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제주도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이다. 즉, 같은 해의 서울(49.6%), 부산(48.9%), 대구(49.7%) 등 대도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겨우 40%대에 머물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을 많이 끼고 있는 강원도(49.3%), 전라북도(47.9%), 전라남도(57.0%) 및 경상북도(55.2%) 등도 60%대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제주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두드러진다고 하겠다(통계청, 2003).

이처럼 제주도 여성들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은 과거로부터 일컬어지던 "제주도에는 여성이 많다"라는 표현과 부합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다시 말해, 원래 제주도와 같은 도서지역은 여러 모로 생활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항상 밭이든 바다에서든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반도부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방문시에 늘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남성보다는 주로 여성이었던 것이다.

[표 5-2] 경제활동인구의 추이(1992~2002년)

(단위 : 천명, %)

구 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 업 률(%)	
	총 계		취 업 자		실 업 자					
	1992	2002	1992	2002	1992	2002	1992	2002	1992	2002
전 국	19,499	22,877	19,009	22,169	490	708	60.9	61.9	2.5	3.1
제주도	250	277	248	271	2	6	67.0	69.1	2.1	2.2
대비(%)	1.3	1.2	1.3	1.2	0.4	0.8	-	-	-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해당연도.

2. 지역경제의 특성

1) 산업별 지역내총생산의 실태

제주도 지역경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먼저 산업별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표 5-3]을 보면, 우선 1992년 우리 나라의 국내총생산은 금액으로 환산할 때 231조 2,144억 원이었으나, 10년이 지난 2002년 시점에서는 563조 9,190억 원으로 대략 2.4배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두 시점에서 제주도의 지역내총생산을 보면, 1992년 2조 2,786억 원에서 2002년 4조 9,986억 원으로 증가함으로써 10년 사이에 약 2.2배가 높아졌음을 이해할 수 있다.

2002년 국내총생산에서 가장 많은 생산액을 보이는 업종은 제조업으로서 전체의 3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뒤를 이어 부동산서비스업이 13.9%로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도소매업(9.9%)을 비롯한 건설업(9.4%)과 금융보험업(9.2%)이 거의 10%에 가까운 비율을 보이고 있다. 1992년과 2002년 사이의 업종별 증감에 대하여 구성비로 검토해 보면, 건설업은 13.8%에서 9.4%로 감소하여 가장 높게 감소한 업종으로 나타나며, 이어서 농림어업이 7.7%에서 4.1%로 감소하여 감소폭이 큰 업종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금융보험업은 5.9%에서 9.2%로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인 업종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제조업도 31.7%에서 34.1%로 증가하여 전체의 총생산을 높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

[표 5-3] 제주도의 산업별 지역내 총생산(1992 : 2002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업종	전 국				제 주 도			
	1992		2002		1992		2002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농림어업	17,869,991	7.7	23,177,061	4.1	715,016	31.4	949,180	19.0
광 업	1,045,900	0.4	1,020,713	0.2	9,724	0.4	9,807	0.2
제 조 업	73,208,451	31.7	192,357,654	34.1	99,534	4.4	185,215	3.7
전기가스수도사업	5,366,026	2.3	17,715,142	3.2	30,379	1.3	89,958	1.8
건 설 업	31,834,363	13.8	53,218,152	9.4	374,797	16.4	679,637	13.6
도소매업	26,880,067	11.6	56,052,390	9.9	274,745	12.1	640,821	12.8
음식숙박업	6,467,139	2.8	13,993,143	2.5	156,417	6.9	443,406	8.9
운수창고업	11,242,351	4.9	27,648,005	4.9	119,859	5.3	308,790	6.2
통 신 업	5,846,843	2.5	14,637,776	2.6	62,652	2.7	132,027	2.6
금융보험업	13,534,028	5.9	51,705,534	9.2	140,077	6.1	470,806	9.4
부동산사업 서비스업	27,920,251	12.1	78,453,330	13.9	168,207	7.4	525,594	10.5
사회·개인 서비스업	9,998,957	4.3	33,940,145	6.0	127,175	5.6	563,372	11.3
합 계	231,214,367	100.0	563,919,045	100.0	2,278,582	100.0	4,998,613	100.0

자료 : 통계청, www.nso.go.kr

로 나타난다.

제주도의 지역내총생산에서는 2002년 현재 농림어업이 9,492억원(전체의 19.0%)을 기록하여 여전히 가장 생산이 많은 업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건설업이 6,796억원(13.6%)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전체 구성비에서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을 보면, 농림어업과 건설업을 포함하여 도소매업(12.8%), 사회·개인서비스업(11.3%) 및 부동산서비스업(10.5%) 등 5개 업종으로 나타난다. 1992년과 2002년 사이의 업종별 증감을 검토해 보면, 농림어업이 31.4%에서 19.0%로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 반대로, 사회·개인서비스업은 5.6%에서 11.3%로 증가하여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업종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금융보험업(6.1%→9.4%)과 부동산서비스업(7.4%→10.5%)도 높은 성장률을 보인 업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제주도의 지역내총생산은 항상 국내총생산의 1%대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점은 제주도의 산업구조나 경제규모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총생산과 제주도 지역내총생산과의 증감비교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농림어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금융보험업, 부동산서비스업 및 사회 · 개인서비스업 등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업종에 비하여 중간투입서비스(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와 최종소비서비스(사회서비스 및 개인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한국사회에도 선진공업국에서의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정광중, 2000).

2)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지역내총생산에 이어서 산업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 5-4]는 1993년과 2002년 시점의 산업별 · 시군별 종사자수를 정리한 것이다. 2002년 시점의 산업별 전체 사업체수는 41,756개로 1993년에 비하여 12,471개가 증가함으로써 증가폭은 1.4배로 나타난다. 같은 해 국내 산업별 사업체수는 313만 1,963개인데, 이 수치에 대비해 보면 제주도 사업체수의 비율은 1.3%에 해당된다. 전체 사업체를 다시 시군별로 구분해 보면, 제주시가 24,783개(59.3%)로 가장 많이 분포하며 서귀포시가 7,175개(17.2%), 북제주군이 5,342개(13.8%) 그리고 남제주군이 4,456개(10.1%) 순으로 나타난다(제주도, 2003a).

산업별 사업체수로 세분해서 검토해 보면, 도매 및 소매업(12,020개)과 숙박 및 음식점업(10,124개)이 나란히 1~2위를 차지하며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두 업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3.0%나 되며, 이처럼 편중된 경향은 국내 전체의 동향과도 일치한다(김학훈, 2003).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는 1993년에 비하면 1.7배(4,269개)나 증가하여 10년 사이에 가장 성장세가 큰 업종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업종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증가는 제주도가 국내외의 유명 관광지로서 크게 성장했다는 배경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두 업체의 시군별 분포에서는 제주시가 각각 60.1%와 57.6%를 점유하여 가장 높게 나타난다. 즉, 두 종류의 업체는 편리한 교통(도로, 항공)과 더불어 상주인구가 많은 시가지 지역(특히 제주시)에 입지해야 하는 특성을

[표 5-4] 제주도의 산업별 · 시군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대비(1993년 : 2002년)

(단위 : 개소, 명)

구분		1993	2002			
			합 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농림 및 임업	사업체수	52	378	21	58	137	162
	종사자수	347	7,088	214	846	3,064	2,964
어 업	사업체수	73	119	3	4	64	48
	종사자수	224	817	3	256	188	370
광 업	사업체수	19	11	3	-	2	6
	종사자수	305	149	20	-	32	97
제 조 업	사업체수	1,592	1,945	1,057	281	373	234
	종사자수	7,794	8,268	3,934	757	2,182	1,396
전기,가스,수도사업	사업체수	16	28	13	2	8	5
	종사자수	472	853	483	88	145	137
건 설 업	사업체수	693	1,028	692	185	90	61
	종사자수	8,099	10,021	8,075	1,290	353	303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수	10,823	12,020	7,226	2,302	1,222	1,270
	종사자수	25,749	33,011	21,631	5,915	2,667	2,798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수	5,855	10,124	5,834	1,815	1,326	1,149
	종사자수	21,314	33,737	19,891	7,365	3,381	3,100
운 수 업	사업체수	2,015	5,127	3,224	683	814	406
	종사자수	10,542	12,922	9,040	1,220	1,879	783
통 신 업	사업체수	63	103	51	14	19	19
	종사자수	948	1,375	886	235	107	147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수	533	610	371	106	60	73
	종사자수	10,231	8,995	6,122	1,290	741	842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체수	728	852	604	161	45	42
	종사자수	1,382	2,860	2,224	480	80	76
사업 서비스업	사업체수	474	738	600	97	20	21
	종사자수	2,869	5,948	5,185	566	51	146
공공 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사업	사업체수	424	367	97	41	126	103
	종사자수	10,220	10,677	7,386	1,670	991	630
교육서비스업	사업체수	1,040	1,455	875	243	192	145
	종사자수	9,239	13,241	8,119	2,033	1,868	1,221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사업체수	456	910	561	121	132	96
	종사자수	3,365	6,821	4,556	927	741	597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사업체수	959	1,506	961	254	150	141
	종사자수	4,335	6,604	3,610	1,077	980	937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사업체수	3,470	4,435	2,590	808	562	475
	종사자수	9,367	10,422	6,228	1,995	1,195	1,004
합 계	사업체수	29,285	41,756	24,783	7,175	5,342	4,456
	종사자수	126,802	173,809	107,607	28,010	20,644	17,548
비 율(%)	사업체수	-	100.0	59.3	17.2	13.8	10.7
	종사자수	-	100.0	61.9	19.1	11.9	10.1

자료 : 통계청, www.nso.go.kr; 제주도, 2003a,『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지닌 업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주도 내에 많은 산업별 사업체는 운수업(5,127개, 12.3%), 기타 공공 ·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4,435개, 10.6%), 제조업(1,945개, 4.7%), 오락 · 문화 및 운동 관련서비스업(1,506개, 3.6%) 순이다. 이중에서도 운수업체는 1993년에 비하여 2.5배에 달하는 3,112개나 증가하여 10년 사이에 운수업 관련사업이 매우 활발해졌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산업별 종사자수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자. 2002년 시점의 제주도 내 사업체 종사자수는 전체 17만 3,809명이며, 이 수는 제주도 전체인구(2002년, 55만 2,310명)의 31.5%에 해당된다. 1993년과 비교하면, 그 동안의 사업체수의 증가에 힘입어 1.4배에 해당하는 47,007명의 증가를 가져왔다. 더불어, 사업체 종사자의 시군별 분포에서는 제주시 10만 7,607명(59.3%), 서귀포시 28,010명(17.2%), 북제주군 20,644명(13.8%) 및 남제주군 17,548명(10.7%)으로 확인된다(제주도, 2003a).

사업체별로 볼 때 가장 많은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으로 전자가 33,737명, 후자는 33,011명으로 집계된다. 이 두 업체의 비율은 전체의 38.4%를 점하고 있다. 이어서 10,000명 이상을 거느리고 있는 사업체는 교육서비스업(13,241명, 7.6%), 운수업(12,922명, 7.4%), 공공행정 및 사회복지사업(10,677명, 6.1%), 기타 공공 ·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10,422명, 6.0%) 그리고 건설업(10,021명, 5.8%)의 5개 업체이다. 이들 사업체의 시군별 분포에서도 제주시가 압도적으로 많아, 지역간 편중현상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볼 때, 제주도 내의 사업체수나 종사자수는 10년 사이에 거의 모든 업종에서 큰 폭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지만, 주로 3차 산업과 관련된 사업체와 종사자의 증가가 컸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도가 다른 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발달이 미약하고 동시에 관광지로서의 꾸준한 성장을 하는 것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제주도, 2004). 나아가, 시군별 분포에서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가 제주시를 중심으로 편중적인 분포를 보이는 경향성이 발견되고 있다.

3) 주요 산업별 특성

제주도는 반도부의 다른 시도와는 달리 감귤과 관광을 대표로 하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특화되어 있다. 따라서, 주요 산업별 특성에서는 1차 산업에 속하는 농업과 어업, 3차 산업에 속하는 상업 및 서비스업에 한정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농업과 어업

제주도의 농업환경은 10여년 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악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2002년 제주도의 총 가구수는 18만 8,760가구로, 이 중 농가수는 37,851가구로 전체의 20.1%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수의 변화에서는 1992년 40,055가구이던 것이 2002년 37,851가구로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의 폭은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농가인구는 1992년 15만 2,093명에서 2002년 11만 8,790명으로 약 33,000명이나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의 폭은 매우 크다고 지적할 수 있다.

2002년 시점에서 농가성격을 검토하면, 전업농가가 18,218가구로 48.1%를 차지하고 제1종 겸업농가가 7,708가구로 20.4%, 제2종 겸업농가가 11,924가구로 31.5%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1992년과 비교할 때는 오로지 농업소득에 의존하는 전업농가가 크게 감소한 반면, 겸업농가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시군별 농가수에서는 제주시 7,274가구(19.2%), 서귀포시 7,039가구(18.6%), 북제주군 12,176가구(32.2%) 및 남제주군 11,362가구(30.0%)로, 상대적으로 배후에 농어촌 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제주도, 1993; 제주도, 2003c).

[표 5-5]는 제주도의 농경지 면적의 변화실태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농경지 면적변화에서는 1992년 54,197ha에서 2002년 59,167ha로 4,970ha가 증가했음이 확인된다. 이것은 10여 년 동안에 걸쳐 감귤을 비롯한 도라지, 더덕, 감자재배를 위한 경지 개간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감귤 과수원의 조성은 주로 해안지역의 임야를 개간하여 이루어졌으며 도라지, 더덕 및 감자 등을 위한 밭의 개간은 중산간 지역의 임야와 목장용지를 개간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감귤재배를 위한 과수원의 조성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

[표 5-5] 제주도의 농경지 면적의 대비(1992 : 2002년)

(단위 : ha, %)

구분 / 지역	1992				2002			
	합계	논	밭	호당면적	합계	논	밭	호당면적
전 국	2,069,933 (100.0)	1,314,727 (63.5)	755,206 (36.5)	0.8	1,862,622 (100.0)	1,138,408 (61.1)	724,214 (38.9)	0.7
제 주 도	54,197 (100.0)	474 (100.0)	53,723 (100.0)	1.4	59,167 (100.0)	194 (100.0)	58,973 (100.0)	1.6
제 주 시	5,574 (10.3)	14 (3.0)	5,560 (10.3)	불명	5,910 (10.0)	- (-)	5,910 (10.0)	0.8
서귀포시	7,401 (13.6)	10 (2.1)	7,391 (13.8)	불명	7,116 (12.0)	25 (12.9)	7,091 (12.0)	1.0
북제주군	20,195 (37.3)	364 (76.8)	19,831 (36.9)	불명	24,935 (42.1)	120 (42.1)	24,815 (61.9)	2.0
남제주군	21,027 (38.8)	86 (18.1)	20,941 (39.0)	불명	21,206 (35.9)	49 (25.2)	21,157 (35.9)	1.9

주 : 1992년도의 1호당 농경지 면적은 당해연도의 시군별 농가수가 불명인 관계로 산출이 불가능함.
자료 : 통계청, www.nso.go.kr; 제주도, 1993, 2003c,「제주통계연보」

결과는 2002년 시점에서 서귀포시를 제외한 세 지역의 전체 경지면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의 농경지는 화산도의 성격을 그대로 잘 반영하고 있듯이, 논은 0.3%에 불과하고 99.7%가 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농경지는 제주시나 서귀포시와 같은 도시지역보다는 주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의 농어촌지역에 훨씬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두 지역이 차지하는 농경지의 비율은 78%(46,141ha)나 된다.

농경지 중에서도 밭은 일반적인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전(常田)과 과수 등의 작물을 식재하여 장기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과수원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제주도 내의 과수원 면적은 25,683ha이며, 이 중 감귤 재배면적이 25,207ha로 전체의 98.1%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감귤 생산량의 증가로 인하여 농가소득의 저하가 지역사회의 문제로 등장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감귤원의 폐원 등을 통해 면적의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불안정한 감귤소득 때문에 단감과 키위 등 대체작물에 대한 재배면적의 증감을 보이는 것도 1990년대 이후 도내 과수재배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어서, 최근 제주도 내 주요 농산물의 실태(2002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제주도, 2003c). 먼저 맥류에서는 맥주보리(3,939ha, 18,238t)의 생산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두류에서는 콩(6,276ha, 6,464t), 서류에서는 감자(4,273ha, 107,628t)가 높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콩과 감자는 모두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는 작물들이다. 계속해서 과채류에서는 수박(271ha, 8,040t), 엽채류에서는 양배추(1,796ha, 102,785t)와 배추(905ha, 48351t), 조미(료) 채소에서는 마늘(3,613ha, 52,714t)과 파(1,290ha, 30,844t), 근채류에서는 무(1,389ha, 78,151t)와 당근(1,991ha, 87,903t)이 비교적 생산량이 많은 작물들이다. 특히 양배추와 당근, 마늘 등은 10년 사이에 엄청난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올 정도로, 다른 작물에 비하여 농가소득에 일익을 담당하는 품목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의 주요어업은 연근해 어선어업, 마을어업 및 양식어업으로 구별된다. 연근해 어선어업에서는 제주, 서귀포, 성산포, 한림, 추자도 등을 중심으로 하여 연승어업과 유자망어업 및 채낚기 어업이 주로 행해지고 있으며, 마을어업에서는 제주도 어업종사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5,600여명의 해녀(잠수)들이 종사하며 소라, 전복, 우뭇가사리, 톳, 성게 등을 채취하고 있다. 그리고 양식어업은 제주도가 외해에 바로 연접해 있고, 지형상 큰 만(灣)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며 해마다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해면양식업은 발달하지 못하고 그 대신 육상양식업과 종묘양식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제주도, 2003d).

최근 제주도의 어업 동향은 [표 5-6]을 통하여 개략적인 실태를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국내의 어업동향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2002년 총 어가수는 73,124가구이고, 어가인구는 21만 5,174명으로 집계된다. 1992년과 비교하면 어가수는 43,041가구, 어가인구는 20만 9,765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 볼 때, 10년 사이에 국내의 어업환경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의 경제활동이 각종 서비스 산업부문에 편중되면서, 1차 산업에 속하는 농업, 임업 및 어업부문은 매년 악순환을 거듭하며 침체의 길을 걸어왔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국적인 동향을 배경으로 하여, 제주도의 어업동향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002년 현재 제주도의 어가수는 6,356가구, 어가인구는 20,390명으로 전국대비에서는 각

[표 5-6] 제주도 어가수와 어선보유 실태의 대비(1992 : 2002년)

(단위 : 가구, 명, 척, 톤)

구분 / 지역	1992				2002			
	어가수	어가인구	어선 보유		어가수	어가인구	어선보유	
			척 수	톤 수			척 수	톤 수
전 국	116,165	424,939	94,135	불명	73,124	215,174	94,935	812,629
제 주 도	7,915	28,132	2,017	14,765	6,356	20,390	3,340	22,292
제 주 시	불명	불명	317	4,274	불명	불명	551	4,686
서귀포시	불명	불명	281	1,956	불명	불명	542	2,909
북제주군	불명	불명	824	5,248	불명	불명	1,173	7,566
남제주군	불명	불명	595	3,287	불명	불명	1,074	7,132

주 : 1992년도의 전국 어선 보유톤수와 시군별 어가수 및 어가인구는 통계결여이며, 2002년 제주도 어가수도 통계결여로 2001년도 수치를 활용하였음.
자료 : 통계청, www.nso.go.kr; 제주도, 1993, 2003c,「제주통계연보」

각 8.7%와 9.5%로 확인된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보통, 제주도가 차지하는 전국대비는 거의 모든 부문과 영역에서 1% 내외이다. 그런데, 어업부문에서 어가수와 어가인구의 비율만큼은 약 8~1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주도가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환경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며, 동시에 어업경제의 관점에서 어업환경과 조건이 비교적 유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992년과의 비교에서는 어가수가 1,559가구, 어가인구는 7,742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지만, 어선보유 실태에서는 1992년 2,017척, 14,756t에서 2002년 3,340척, 22,292t으로, 각각 1,327척과 7,536t의 증가를 가져왔다. 시군별 변화실태는 자료의 부재로 증감의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업동향과 관련하여 어항시설(2002년)을 살펴보면, 제주도에는 크고 작은 어항을 합해 모두 99개소가 있으며, 이중 국가(지정) 어항이 6개소(도두, 모슬포, 위미, 김녕, 신양, 하효), 지방(지정) 어항이 18개소(고산, 화북, 조천, 우도, 사계, 대포, 표선 등) 그리고 소규모 어항이 75개소(이중 도서낙도의 소규모 어항이 12개소)로 구분된다. 어항의 위치를 시군별로 보면 제주시가 10개소, 서귀포시가 6개소, 북제주군이 49개소, 남제주군이 34개소로 나타난다(제주도, 2003c). 그러나 제주도 어업의 기반을 이루는 필요한 기본적인 어업시설은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다.

(2) 상업과 서비스업

제주도 내의 상업과 서비스업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되는 도 · 소매업과 숙박 · 음식점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기본자료로 삼고자 한다(표 5-7). 산업구조에서 각종 서비스 산업부문의 고용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고도의 경제생활을 추구하는 선진공업국의 추세라 할 수 있는데, 1990년 이후 한국에서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변화도 그러한 서비스 경제화의 증가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정광중, 2000).

먼저 4개 업종에 대한 국내의 동향을 정리해 보면, 도매업과 소매업에서는 소매업 부분이 사업체수나 종사자수에서 훨씬 많은 경향을 보인다(김학훈, 2003). 두 업종을 전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비율로 보면, 사업체수에서는 7.0% : 21.7%로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종사자수에서는 5.1% : 13.9%로 2.7배의 차가 나타난다. 숙박업과 음식점업의 경우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음식점업이 압도적으로 많다. 숙박업의 전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비율은 매년 1% 전후를 보이나, 음식점업의 경우는 사업체수가 거의 2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또한 종업원수는 10% 전후한 수치를 기록한다.

제주도의 업종별 실태분석에서는 전국의 동향과는 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도매업과 소매업의 동향에서 볼 때, 전국 도매업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제주도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제주도 자체가 소비할 인구가 적은 배경과 함께 업종 특성상 도매업이 대도시에 주로 입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숙박업과 음식점업에서도 전국 동향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특히 숙박업의 경우는 제주도가 사업체수나 종사자수에서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제주도, 2003a). 그리고 음식점업에서는 오히려 전국 비율이 16.9%나 높게 나타나며, 종사자수에서는 반대로 제주도 비율이 4.2% 높게 나타난다.

시군별로 분포 경향을 보면, 도매업은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순으로 낮아지며, 소매업은 제주시→서귀포시→남제주군→북제주군 순으로 낮아지고 있다. 더불어 제주도 내에서의 도 · 소매업은 모두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된 제주시에 집중되는 분포양상을 보인다.

숙박업에서는 제주시에 가장 많은 사업체가 입지해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북제주군에 콘도형 민박이나 펜션 등 숙박시설이 많이 입지함으로써, 제주시에 못지 않은 사업체수가 밀

집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종사자수에서는 서귀포시가 제주시를 다소 웃돌 정도로, 고급형 또는 대형호텔 등의 숙박시설은 제주시보다도 서귀포시에 밀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식점업에서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 제주시가 압도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2위인 서귀포시와의 차이를 보면 제주시가 사업체수에서는 3.5배, 종사자수에서는 3.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볼 때, 제주도 내에서도 고급형이나 대형호텔과 같은 일부 숙박시설의 입지를 제외하면, 도 · 소매업이나 숙박 · 음식점업종들은 제주시에 편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시가 국제공항이나 제주항 등 중요한 교통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상주인구나 유동인구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7] 제주도내 도 · 소매업과 숙박 · 음식점업의 현황(2002년)

(단위 : 개, 명)

업종 / 지역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 국	218,348	933,238	680,526	1,682,495	39,706	143,925	595,791	1,586,409
전산업 비율(%)	7.0	6.4	21.7	11.5	1.3	1.0	19.0	10.9
제 주 도	1,639	8,835	10,381	24,176	1,424	7,570	8,700	26,167
전산업 비율(%)	3.9	5.1	24.9	13.9	3.4	4.4	2.1	15.1
제 주 시	1,105	5,625	6,121	16,006	488	2,988	5,346	16,903
서귀포시	316	1,838	1,986	4,077	277	3,000	1,538	4,365
북제주군	136	716	1,086	1,951	441	1,082	885	2,299
남제주군	82	656	1,188	2,142	218	500	931	2,600

자료 : 통계청, www.nso.go.kr; 제주도, 2003a,『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제6장
제주지방 - 교통 통신 에너지체계의 발달

김오진(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빈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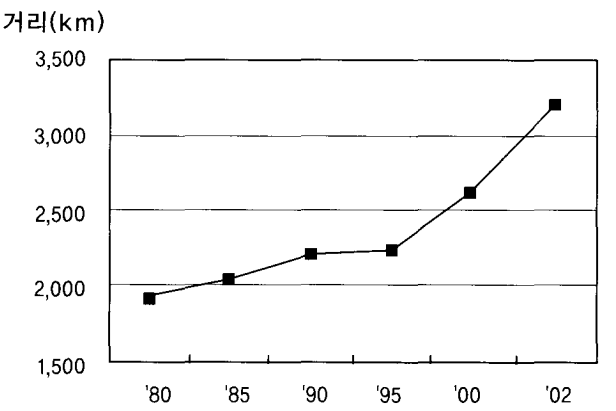
제6장 교통 통신 에너지체계의 발달

1. 교통

1) 육상 교통

(1) 도로망 확충

제주도의 육상교통은 철도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도로교통에 의존하고 있다. 도로는 크게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로 나눌 수 있다. 법정도로는 일반국도, 지방도, 시 군도 등이고, 비법정도로는 농로, 마을 안길 등이다. 1980년부터 2002년까지 제주도 법정도로망의 변화 추세를 보면 〈그림 6-1〉과 같다. 1995년 이후 도로망이 급속히 확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말 현재 법정도로망의 총연장은 3,199.5km인데, 그 중 국도는 14.2%, 지방도는 9.4%, 시 군도는 76.4%로 시 군도의 비율이 가장 높다. 법정도로망의 전체 포장율은 81.7%이고, 그 중 일반국도는 100%, 지방도는 74.8%, 시 군도는 79.4%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6-1〉 법정도로망 변화 추세

2003년 현재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는 국도 및 지방도는 총 16개 노선으로 그 현황은 [표 6-1]과 같다. 국도 12호는 제주도 해안선을 따라 섬을 한바퀴 순환하는 도로로 도내 육상교통의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는 기간도로망이다. 국도 16호는 중산간마을들을 연결하면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중산간지대를 순환하는 도로이다. 국도 11호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한라산 동쪽을 경유하여 연결하는 제1횡단도로이고, 국도 99호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한라산 서쪽을 경유하여 연결하는 제2횡단도로로 우리나라 국도 중 가장 높은 해발 1100m 지점을 통과한다. 국도 95호는 국가지원지방도에서 2001년에 국도로 승격했으며 한라산 서쪽의 광활한 2차 초지대를 경유하여 제주시와 대정읍 보성리를 연결하는 것으로 도내 최초로 입체교차로 시설을 갖춘 도로이다. 국가지원 지방도 97호는 한라산 동쪽 2차 초지대를 경유하여 제주시와 표선을 연결한다. 지방도 1112호는 제주시와 구좌읍 평대리를 연결하는 것으로 주변경관이 빼어나 건설교통부가 2002년 처음 실시한 '아름다운 도로' 공모에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되었다. 지방도 1114호는 추자교를 통해 상추자도 대서리와 하추자도 예초리를 연결하는 추자도의 중심도로이다. 지방도 1115호는 한라산 남사면을 경유하여 용당과 상효를 연결하고, 지방도 1116호는 중산간지대를 경유하여 한림과 창천을 연결하며, 지방도 1117호는 한라산 북사면을 경유하여 제주시 월평과 애월읍 어음을 연결한다. 지방도 1118호는 한라산 동사면 산록지대를 경유하여 남원과 조천을 연결하고, 지방도 1119호는 중산간지대를 경유하여 서귀포와 성산을 연결한다. 지방도 1120호는 중산간지대를 경유하여 대정과 한림을 연결하고, 지방도 1121호는 제주시와 안덕을 연결하며, 지방도 1122호는 제주와 성산을 연결한다.

(2) 자동차교통의 발달과 운송 현황

2002년 말 현재 등록된 도내 자동차대수는 총 190,659대로 1980년과 비교하면 32배나 증가했다. 2002년 말 현재 전체 차량 중 자가용이 91.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영업용과 관용이 각각 7.6%, 0.6%를 차지하고 있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61.3%, 버스가 9.6%, 화물차가 29.0%, 특수차가 0.1%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 말 현재 제주도의 운수업체는 시외버스 6개 업체, 시내버스 4개 업체, 전세버스

[표 6-1] 국도, 지방도, 시 군도 현황(2003)

구분	구간	구간	연장(km)	포장율(%)	노선수
국도	일주도로(국12호)	제주~제주	176.1	100	5
	중산간도로(국16호)	제주~제주	173.2	100	
	5 16도로(국11호)	제주~서귀포	40.6	100	
	1100도로(국99호)	제주~서귀포	35.1	100	
	서부관광도로(국95호)	제주~보성	29.0	100	
	소계		454	100	
국가지원지방도	동부관광도로(지97호)	건입~표선	35.4	100	1
지방도	비자림로(지1112호)	평대~봉개	27.3	100	10
	추자로(지1114호)	대서~예초	5.9	100	
	제2산록도로(지1115호)	용당~상효	43.9	80.6	
	한창로(지1116호)	한림~창천	14.3	100	
	제1산록도로(지1117호)	월평~어음	20.8	100	
	남조로(지1118호)	남원~조천	30.2	100	
	서성로(지1119호)	서귀포~성산	33.9	52.8	
	대한로(지1120호)	대정~한림	18.0	100	
	제안로(지1121호)	제주~안덕	41.7	45.8	
	제성로(지1122호)	제주~성산	28.2	11.7	
	소계		299.6	72.	
시 군도	제주시(시도)		1,334.1	91.8	3,947
	서귀포시(시도)		229.9	98.4	276
	북제주군(군도)		478.4	59.4	76
	남제주군(군도)		403.5	51.3	74
	소계		2,445.9	79.4	4,373
총계			3,199.5	82.0	4,389

자료 : 제주도 건설과

56개 업체, 대여자동차(렌터카) 72개 업체, 택시 35개 업체 1,577대, 개인택시 3,475대가 등록되어 있다. 운수업체의 과다한 난립과 증차, 자가용 대중화 등으로 손익구조가 악화되면서 운영난을 겪고 있다. 2002년도 연간 도내 육상 대중교통수단을 통해 수송한 총인원은 1억 6,433만 5천명이다. 교통수단별 여객 수송 비율을 보면 택시가 72.2%로 가장 높고, 시내버스 19.6%, 시외버스 5.7%, 전세버스 1.8%, 렌터카 0.7% 순이다. 2002년 도내 육상화물 총 수송량은 4,038만 5천 톤으로 1일 평균 111천 톤이 발생하고 있다. 월별로는 12월이

[표 6-2] 차량증가 추세

(단위: 대)

연도	계	업종별			차종별			
		관용	자가용	영업용	승용차	버스	화물차	특수차
1980	5,925	321	3,826	1,778	1,952	590	3,359	24
1990	43,185	683	37,475	5,027	19,606	6,043	17,499	37
2000	164,360	1,028	151,664	11,668	95,565	19,344	49,208	243
2002	190,659	1,098	174,994	14,567	116,957	18,171	55,224	307

자료 : 제주도, 1996, 통계연보; 제주도, 2003, 통계연보; 제주도, 1993, 제주도지.

가장 많고, 11월, 10월 순이다(제주도, 2003a).

2) 해상 교통

(1) 전통시대의 해상 활동

『삼국지』, 『당서』, 『일본서기』, 『삼국사기』 등 고기록을 보면 탐라가 일찍부터 주변국들과 활발하게 교역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는 동북아시아의 지리적 위치상 십자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국을 서로 연결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다. 북으로 한반도, 동으로 대마도, 고토열도, 일본열도, 남으로 유구열도, 서로 중국의 산동성, 절강성, 강소성 등과 마주보고 있다. 제주도는 쿠로시오 해류와 몬순이 통과하는 길목이고, 섬 중앙에 1,950m의 한라산이 솟아 있어 원거리에서도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등대 역할과 피항지, 물자 공급지 역할을 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제주도에서 해류와 바람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한반도, 중국, 일본, 유구에 쉽게 도착할 수 있다(황경수, 2003). 제주인들은 이러한 해양지리적 위치를 적극 활용하여 일찍부터 바다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바다 활동을 천시하는 유교문화가 유입되고, 출륙금지령 등 도민 통제정책이 행해지면서 제주인들의 해양 활동은 쇠퇴해 버리고 만다.

(2) 해상교통 및 항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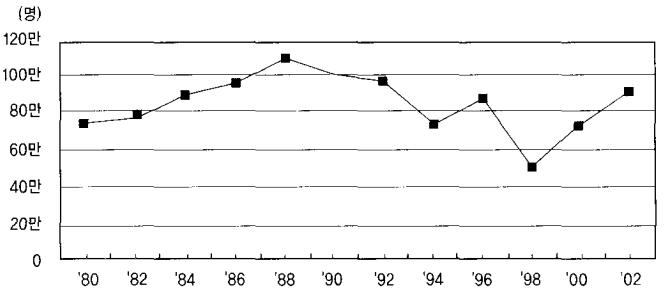
[표 6-3] 여객선 운항 현황(2003)

운항구간	운항거리(mile)	선박명	운항소요시간	톤수	정원(명)
제주 ↔ 부산	169	오리엔트스타호	12:00	3,205	472
		오리엔트스타호 2호	12:00	5,688	535
		코지아일랜드호	11:00	4,388	678
제주 ↔ 목포	96	씨월드고속훼리호	5:30	4,255	800
		카훼리레인보우호	5:30	4,734	642
		컨티넨탈호	3:30	223	250
제주 ↔ 완도	56	한일카훼리 1호	3:30	2,019	474
		한일카훼리 2호	3:00	3,195	861
		온바다훼리호	5:00	606	255
제주 ↔ 인천	266	청해진고속훼리호1호	15:30	3,87	601
		춘향호	14:00	3,633	586
제주 ↔ 여수	106	남해고속카훼리호	7:00	4,065	590
제주 ↔ 녹동	70	대흥고속카훼리호	5:00	1,190	392
성산 ↔ 통영	117	만다린호	3:30	2,982	549

자료 : 제주지방수산청

2003년 현재 제주도와 육지부를 연결하는 정기여객선 운항 노선은 7개 노선인데, 그 현황은 [표 6-3]과 같다. 제주도내 도서를 연결하는 연안항로는 제주시~추자도, 성산포~우도, 모슬포~가파도 마라도, 한림~비양도간에 개설되어 있다.

1980년에 해상 여객수는 734,972명이었으나 수학여행단 등 단체 관광객 여객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1989년에는 1,119,500명으로 최고를 기록하였다. 그 후 항공교통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IMF 구제금융 여파로 1998년에는 503,328명으로 급감했다. 최근 선박의 고속화, 대형화, 쾌적화로 항공교통에서 느낄 수 없는 해상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점차 이용객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2년 말 현재 여객수는 906,064명을 기록하고 있다. 2002년 해상여객의 항로별 이용률을 보면 제주~완도 42.6%, 제주~목포 27.6%, 제주~부산 16.6%, 제주~여수 6.9%, 제주~인천 4.7%, 성산포~통영 1.0%, 제주~녹동 0.7% 순이다. 2003년도 해운 화물취급량은 총 9,839천톤인데, 항만별 처리 비율을 보면 제주항 60.4%, 화순항 11.8%, 한림항 9.8%, 애월항 8.1%, 서귀포항 6.3%, 성산포항 3.6% 순이다.



〈그림 6-2〉 해상 여객수 변화 추세

제주도의 관문 역할을 하는 제주항은 2만톤급 선박 1척, 1,000톤 이상 대형선 17척, 100톤 이상 소형선 7척을 접안할 수 있다. 제주항의 접안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항만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제주외항 건설사업이 2001년 준공되어 2007년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서귀포항은 5000톤급 선박 1척, 1,000톤 이상 대형선 5척, 100톤 이상 소형선 15척을 접안할 수 있으며, 수려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미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3) 항공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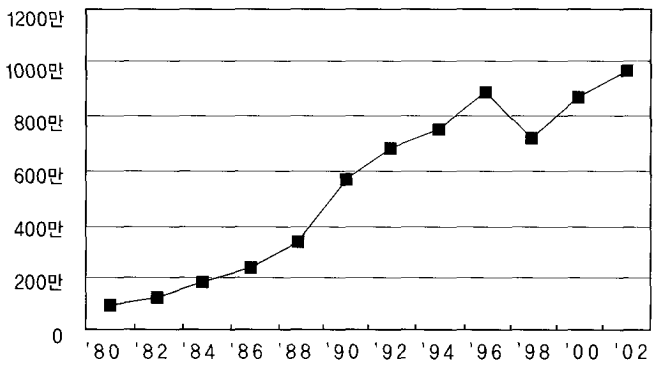
1988년 교통부는 새로운 민간항공으로 (주)서울항공을 면허함으로써 국내항공교통은 대한항공 독점시대를 끝내고 경쟁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서울항공은 회사 명칭을 (주)아시아나로 바꾸고 시험 비행을 거친 후 1989년 1월 1일을 기해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 2002년 말 현재 제주를 기점으로 운항되고 있는 국내 및 국제노선 현황은 [표 6-4]와 같다.

1963년 항공 이용객수는 제주 출발 여객 기준으로 10,581명이었다. 1982년 제주 출발 도착 승객수가 1,135,635명으로 100만을 돌파하였고, 1989년 아시아나가 취항하면서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항공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1997년 항공여객수는 9,393천여명이었으나 IMF구제금융 여파로 1998년 이용객이 7,156천여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최근 꾸준한 경기상승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2년 말 현재 제주도를 출입한 국내노선 항공여객수는 9,451,133명이고, 국제노선 항공여객수는 289,497명으로

[표 6-4] 제주기점 국내 국제노선 현황(2002)

구분	노선	거리 (km)	운항시간 (분)	운항회수 (회)	연간 결항률 (%)	여객수 (명)	연간좌석 이용률 (%)	노선 개설일
국내노선	서울	485	70	17,848	1.5	5,407,658	73.3	'62. 12. 1
	부산	294	55	6,860	3.0	1,602,252	72.3	'71. 5. 15
	광주	183	50	2,342	1.5	723,047	80.4	'62. 12. 4
	대구	370	60	2,682	1.2	560,682	72.0	'76. 3. 6
	여수	213	45	626	1.5	55,710	83.9	'77. 8. 1
	진주	285	50	880	3.1	71,554	81.9	'77. 8. 1
	군산	274	55	1,446	31.2	140,429	70.8	'92. 12. 14
	목포	149	40	502	14.2	35,842	67.0	'93. 2. 1
	울산	335	60	724	1.3	67,482	71.9	'93. 2. 6
	청주	385	60	2,122	0	582,975	67.5	'97. 4. 28
	인천	458	70	362	1.6	134,683	73.5	'01. 7. 13
	포항	470	55	664	10.4	52,879	46.1	'92. 10. 1
	예천	609	70	-	-	15,940	-	'95. 9. 15
	오사카	835	90	552	0.3	90,388	59.6	'69. 10. 7
국제노선	도쿄	1,293	155	384	1.4	88,526	67.8	'85. 10. 27
	나고야	970	100	288	0.7	53,839	62.7	'88. 3. 27
	후쿠오카	433	55	433	1.0	15,843	61.6	'91. 5. 30
	베이징	1,146	155	192	0.3	38,212	47.8	'00. 8. 3
	상하이	704	85	42	0	2,689	46.3	'00. 5. 26

자료 : 제주도, 2003, 통계연보.



〈그림 6-3 〉 항공여객 수송 추세

총 9,740,630명이다. 이는 2002년 해상 정기여객선 여객수 906,064명에 비해 11배 정도 많은 인원으로 제주도를 출입하는 여객의 91.5%가 항공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육지부에 출입할 때 항공교통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유가 상승 및 경영 적자를 내세워 항공료를 잇달아 인상하고 있다. 지역 여론을 무시한 두 항공사들의 조치에 제주도민들은 반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는 지역항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항공교통의 기반은 제주국제공항이다. 1981년 신활주로가 준공되면서 대형 여객기 이 착륙이 가능하게 되었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1981년 여객청사가 신축되었고 1991년 증축되면서 여객처리능력이 국제선은 연 90만 명, 국내선은 연 1,100만 명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2003년도에 공항이 용객 천만시대를 돌파한 현 시점에서 제주국제공항은 포화상태에 직면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4) 유통 활동

제주도의 유통구조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상품 수급의 불균형과 복잡한 유통과정으로 유통업체의 영세성과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정부의 유통근대화 정책, 대형 카페리 취항에 따른 다품종, 대량상품의 유입은 제주도의 유통구조 개선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후반에 보훈연금매장과 공무원연금매장 등 대형매장이 등장하면서 유통구조에 변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1996년 가격 및 유통구조 파괴를 기치로 내건 박리다매형 대형할인매장인 뉴월드마트와 E마트의 등장으로 유통구조의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거대 자본과 첨단 경영기법으로 무장한 대형할인마트의 등장은 도내 슈퍼마켓, 편의점, 재래시장, 백화점 등 기존 상권을 크게 위축시켰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소유통업체들은 조합을 결성하여 제품의 공동구매, 물류보관창고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재래시장은 주차 시설 확대, 건물 현대화, 시장 리모델링 등을 통한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2002년 현재 제주도내 상설 시장은 총 19개소로 제주시에 17개소, 서귀포시에 2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건물 연면적 3,000㎡ 이상 되는 대형 점포는 도내에 6개소가 분포하고 있는데, 모두 제주시에 입지하고 있다. 백화점은 제주시에 1개소, 서귀포에 2개소가 분포하고 있다(제주도, 2003a). 이처럼 시장분포가 제주시에 집중된 원인은 2002년 말 현재 도내 인구 552,310명 중 52.6%인 290,664명이 집중되어 있어 시장 규모가 크고, 한반도와 제주도를 연결하는 연륙교통의 중심지이면서 도시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내 도로망이 제주시를 중심으로 환상, 방사상으로 잘 정비되어 있어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내 정기시장은 2004년 현재 9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1909년 처음 생겨난 정기시장은 당시 도내에 15개소가 분포하고 있었다. 1964년부터 1974년까지는 25개소에서 정기시가 열리면서 성황을 이루었으나 그 후 점차 그 기능이 축소되면서 많이 줄어들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정기시가 축소된 원인으로는 교통의 발달과 상설시장의 증가로 구매 행태가 변화되었고, 농어촌지역의 이촌현상으로 인구 규모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재래시장의 현대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시장화 전략 등을 동원하며 기존 상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 규모가 작고, 교통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정기시장 이동상인들은 도내 전 지역을 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2. 정보통신

1) 방송과 신문

2004년 현재 도내 TV방송국은 KBS제주방송총국, MBC제주문화방송, JIBS제주방송 등 3개사가 있다. 라디오방송국은 KBS제주방송총국, MBC제주문화방송, CBS제주방송, JIBS방송 등 4개사가 있다. 1950년 KBS제주방송국이 개국되면서 공중파 방송이 시작되었다. 1968년에 MBC제주문화방송이 개국되면서 공 민영 방송의 경쟁시대를 열게 되었다. 1980년부터는 KBS, MBC 양사가 모두 컬러 방송을 시작하면서 방송 품질도 눈부시게 향상됐다. 2002년에는 지역 민방인 JIBS 제주방송이 개국되면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과 각종 정보를 제주도민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이밖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인 KCTV제

주방송, 제주유선방송, 스카이라이프 등이 있다.

2004년 현재 도내 지방일간지로는 제주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제주타임스 등 4개 신문사가 있다. 제주일보는 1945년 10월 1일 제호를 제주신보로 하여 창간된 신문으로 1996년 제호를 제주일보로 변경했다. 한라일보는 1989년 4월 8면체제로 창간된 신문으로 오사카, 도쿄, 뉴욕에 해외지사를 두고 있다. 제민일보는 1990년 제주신문 폐업 사태로 사원들이 제주신문을 떠나면서 같은 해 6월에 창간되었다. 제주타임스는 1999년 3월에 창간되어 주 2회 발간하다 2004년 3월 일간지로 전환하였다. 이밖에 지방주간지로는 서귀포남제주신문, 제주여성신문, 제주투데이, 제주관광신문 등이 있다.

2) 우편 및 전화

2002년 말 현재 도내 우체국수는 일반국과 분국, 우편취급소를 포함하여 6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우체통수 453개와 사서함수 429개가 설치되어 있다. 2002년 말 현재 국내 우편물 접수 물량은 24,285천통이고, 배달 물량은 51,543천통이다. 국제 우편물 접수 물량은 234천통이고, 배달 물량은 80천통이다(제주도, 2003a).

제주도의 전화는 1915년 제주와 김녕을 연결하는 전화가 개통되면서 시작되었다. 1983년 기계식자동교환기에서 컴퓨터에 의해 제어되는 전자교환기의 도입으로 접속이 빠르고 오접속이 거의 없게 되었고, 도내를 단일통화권으로 완전 자동화시키는데 바탕이 되었다. 도내 단일통화권이 실시됨에 따라 서귀포, 고산, 성산포 등에서 각기 운용하던 시외교환업무가 제주로 통합되었다. 꿈의 통신망이라고 불리는 종합정보통신망 ISDN이 1991년 시범 운용되다가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되어 운용되고 있다. 2002년 말 현재 전화국은 제주시에 3개소, 서귀포시에 2개소 총 5개소가 있다. 전화가입대수는 총 243,373대로 업무용 76,384대, 주택용 166,989대이다(제주도, 2003a). 지역별 전화가입 구성비를 보면 제주시가 56.5%로 가장 높고, 북제주군 15.8%, 서귀포시 15.5%, 남제주군 12.1% 순이다.

3) 인터넷 정보

[표 6-5] 도내 가정인터넷 접속방법 및 주이용 목적(2003. 6)

컴퓨터 보유(%)						컴퓨터 미보유(%)
소계	xDSL	ISDN	케이블망	전화(모뎀)	인터넷미사용	30.6
69.4	55.2	1.4	1.3	0.4	11.1	

주이용 목적(%)									
정보검색	메일	쇼핑	채팅	게임	뱅킹	학습	오락	뉴스	기타
41.7	12.6	2.8	2.5	29.5	0.6	5.9	1.1	3.1	0.3

자료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이즈이즈(http://isis.nic.or.kr)

인터넷은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상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트워크이다. 인터넷망에 접속하여 정보에 접근하려면 컴퓨터가 있어야 한다. 2003년 6월말 현재 제주도내 각 가정에 PC 보급률은 69.4%이다.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유선인터넷 이용률은 59.6%로 전국 평균 이용률 65.5%보다 약간 낮다. 가정에서 인터넷을 접속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은 xDSL을 통한 접속이 가장 많고, ISDN, 케이블망, 전화 모뎀 순이다. 인터넷 주 이용목적은 자료 및 정보검색이 가장 높고, 인터넷 게임, 메일, 학습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특정한 컴퓨터를 찾기 위한 주소는 IP(Internet Protocol)이지만 이를 기억하기 쉽도록 영문자나 한글로 표현된 주소자원이 도메인 이름(Domain name)이다. 2004년 6월말 현재 전국에는 612,740개의 도메인이 등록 되어있는데, 제주도는 그 중 0.5%를 차지하고 있어(한국인터넷정보센터, http://isis.nic.or.kr) 인터넷 정보통신 기반에서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3. 에너지 수급체계

1) 전력 공급 및 수요

제주도의 전력사업은 1926년 제주전기주식회사가 제주시 산지천 포구에 40KW 중유발전기를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1970년 제주화력발전소, 1979년 남제주화력발전소, 1982년

북제주화력발전소가 건설되었다. 1996년에는 제주지역 송전계통 환상망이 준공된데 이어, 1998년에는 제주와 전남 해남을 연결하는 101km(육상 5km, 해저 96km)의 해저케이블에 의해 육지부 전력이 공급되기 시작했다.

2004년 현재 제주도에는 한국중부발전(주) 제주화력발전소와 한국남부발전(주) 남제주화력발전소(한림발전소 포함)가 있고 이밖에 회천LFG발전소, 행원풍력발전소, 한경풍력발전소가 있다. 도서 지역인 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에도 소규모 발전시설이 있다. 도내 주요 발전소의 발전 양식을 보면 기력 발전은 증기로 터빈을 회전시켜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식이다. 내연 방식은 엔진에 연결된 발전기로부터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식이다. 가스

[표 6-6] 전원별 발전 설비용량 및 발전량(2003)

구분	발전설비용량(MW)	발전량(MW)
연 계 선	150.0	1,103,980
기 력	180.0	1,129,246
내 연	80.0	273,154
복 합	105.0	59,066
가스터빈	165.0	2,059
풍 력	9.8	18,561
L F G	2.0	5,659
계	691.8	2,591,725

자료 :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http://kpxj.or.kr)

터빈발전은 가스로 터빈 발전기를 구동시키는 방식이고, 복합발전은 내연발전과 기력발전을 조합한 방식이다. LFG발전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것이고, 연계선 발전은 해저 케이블에 의해 육지부에서 공급되는 전력이다.

2003년말 현재 제주도의 발전량은 2,591,725MW이다. 전원별 발전비율을 보면 기력발전이 43.6%로 가장 높고, 연계선 발전 42.6%, 내연발전 10.5%, 복합 발전 2.3%, 풍력발전 0.7%, LFG 발전 0.2%, 가스터빈발전 0.1%순이다.

2002년 전력사용량을 보면 2,174,767MWh이다. 각 용도별 전력사용비율을 보면 서비스업이 43%로 가장 높고, 농림수산업 27%, 가정용 19%, 공공용 6%, 제조업 5%, 광업 0.3%

순이다. 월별 전력사용량을 보면 8월이 가장 많고, 12월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 대체에너지 개발

1990년대 중반 월령연구단지에서 국내 최초로 풍력발전 시험 가동이 성공을 거두었고, 뒤이어 1998년에 구좌읍 행원풍력발전소에서 국내 최초로 상업 발전에 성공을 거두었다. 제주도청에서 운용하는 국내 최대 풍력발전단지인 행원풍력발전소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203억원을 투자하여 15기를 설치했는데,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전력에 공급한 전력은 24억 7천만원의 수익을 내었고, 2003년도에는 12억원의 수익을 남겼다. (주)한국남부발전에서도 한경풍력발전소에 풍력발전기 4기(6,000KW)를 설치하여 2004년부터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에 전력 공급하고 있다.

회천LFG발전소는 대체에너지 개발업체인 서희이엔씨에서 생산시설비 40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에 준공했다. LFG발전소는 제주시 회천동 쓰레기 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설비용량은 2MW이고 2003년도 전력 생산량은 5,659MW이다. 서희이엔씨에서는 한국전력거래소에 kWh당 65.20원에 판매하여 연간 10억원대의 수익을 올릴 전망이다.

3) 에너지자원 수급

제주도는 대부분 신생대 제4기 플라이스토세(Pleistocene)에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하에 매장된 에너지자원이 없어 전량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다. 2002년 도외에서 반입된 민수용탄은 총 1,714 M/T으로 전량 해상을 통해 수송되고 있다. 민수용탄은 대부분 연탄을 생산하는데 소비되고 있으며, 연탄공장은 1개소 분포하고 있으나 수요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석유 제품은 육지부 정유공장에서 원유를 수입하여 가공한 다음 해상을 통해 제주도의 각 저유소에 수송된다. 도내의 정유회사 지점이나 대리점을 통해 각 주유소 및 판매소에 공급되고 있다. 2002년 말 현재 도내 소비자에게 석유를 공급하는 업체는 주유소 140개, 석유

판매소 76개가 분포하고 있고,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는 용기충전소 3개, 자동차 충전소 16개가 분포하고 있다. 2002년 도내 석유류 소비량을 보면 경유가 101,835,342kg으로 가장 많고 등유 168,669,967kg, 휘발유 101,835,342kg, 중유 93,416,000kg 순이다. 가스 소비량은 프로판가스 49,288t, 부탄가스 56,451t이다(제주도, 2003a).



제7장
제주지방 - 관광 및 여가활동

정광중 (제주교육대학교)

빈 면

제7장 관광 및 여가활동

1. 관광자원과 관광시설의 분포현황

1) 관광자원 분포현황

제주도의 관광자원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나,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유형화할 것인지가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된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관광자원을 포함하면서, 그것의 존재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포괄적인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포괄적인 개념의 하나로 자연관광자원과 인문관광자원의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1) 자연관광자원

제주도의 자연관광자원은 형성배경과 성격 혹은 그 위치에 따라 크게 지형관광자원, 식생관광자원, 해양관광자원 및 기타관광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을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 [표 7-1]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주도의 자연관광자원은 지형과 관련되는 것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형관광자원은 특성에 따라 기암, 기생화산(오름), 동굴, 폭포, 계곡 · 소연(沼淵), 지층 · 화석 및 도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다양하며, 관광자원으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김대용, 2001). 아울러, [표 7-1]에 제시된 해양관광자원도 지형관광자원에 포함시켜도 별 무리가 없다고 가정할 때, 지형관광자원의 범주는 상당히 넓어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은 화산활동의 결과 탄생하게 된 것들이며, 일정한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제주도 전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관광자원의 경우는 제주도 내에서도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분포하는 것들이 있다. 가령, 현재 관광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문-대포 주상절리나 갯깍 주상절리(서귀포시 예래동) 또는 정방폭포, 천제연 및 천지연 등의 폭포는 한라산을 중심축으

[표 7-1] 제주도 자연관광자원의 현황

관광자원 구분		구 체 적 사 례
지형관광자원	기 암	백록담, 용두암, 외돌개, 오백나한, 절부암, 선돌, 바람바위, 왕관릉, 삼각봉, 갯깍 주상절리, 중문-대포 주상절리, 성널오름의 수직암벽 등
	기생화산(오름)	성산일출봉, 산방산, 산굼부리, 수월봉, 다랑쉬오름, 소머리오름, 송악산, 용눈이오름, 아부오름, 어승생악, 사라봉, 원당봉, 민오름, 새별오름, 금오름, 삼매봉 등(368개)
	동 굴	만장굴, 김녕사굴, 빌레못동굴, 당처물동굴, 선흘벵뒤굴, 북촌동굴, 와흘굴, 미천굴, 협재굴, 쌍용굴, 황금굴, 소천굴, 산방굴(사), 차귀도·우도의 해식동굴, 범섬·마라도 해식동굴 등
	폭포/소연(沼淵)	정방폭포, 소정방폭포, 천제연, 천지연, 엉또폭포 / 백록담, 물영아리·물장오리·물찻오름·어승생악·사라오름·동수악의 산정호수, 돈내코, 혼인지, 용연, 쇠소깍, 논짓물, 무수천, 방선문, 산지천·강정천 하류 등
	계 곡	탐라계곡, 영실계곡, 아흔아홉골(구십구곡), 안덕계곡, 수악계곡 등
	지층/화석	서귀포지층, 신양리층, 송악산·수월봉·소머리오름 주변의 화산쇄설성 퇴적층, 용머리 지층 등 / 서귀포지층 내의 패류화석, 송악산 해안의 조류화석, 사계리 해안의 동물발자국화석, 송악산과 우도 소머리오름 부근의 갈대화석 등
	도 서 (유인도/무인도)	유인도 : 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 무인도 : 토끼섬, 범섬, 숲섬, 문섬, 새섬, 형제섬, 차귀도, 눈섬, 서건도(썩은섬) 등
식생관광자원		안덕계곡 상록수림지대,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위미동백나무군락, 도순동 녹나무자생지군락, 서귀포 담팔수나무 자생지,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 납읍난대림지대, 천제연 난대림지대, 천지연 난대림지대, 구좌읍 비자림지대, 한라수목원, 서귀포자연휴양림, 절물자연휴양림, 김녕미로공원, 비자림로의 삼나무숲, 5·16도로 변의 숲터널, 곶자왈지대의 나무숲 등, 여미지 식물원, 한라산국립공원 내의 나무숲, 한라산 선작지왓의 철쭉군락 등
해양관광자원		용머리 해안, 섭지코지 해안, 남원리 큰엉, 신엄리 해식애, 대평리 해식애(박수기정), 소남머리, 돔베낭골, 구엄리-중엄리 해안, 중문·함덕·협재·김녕·하모·표선·신양·곽지·금릉·이호·삼양해수욕장, 우도 서빈백사(홍조사), 내도 알작지 해안, 추자도 신양리 작지해안(장작평사), 서귀포 앞바다의 산호군락, 추자도 및 제주 해안의 낚시터 등
기타 관광자원		제주의 현무암(밭담, 산담 등), 한라산국립공원, 하도리·용수리 철새도래지, 제주의 야생 동·식물(노루, 원앙, 꿩, 제주족제비, 오소리 등/한란, 풍란, 황근, 왕벗나무, 구상나무, 한라부추, 손바닥 선인장, 제주황기 등), 제주마(조랑말), 용암수형, 화산탄, 장수물·구시물 등의 용천수 등

자료 : 제주도청, www.jeju.go.kr / 제주도 관광진흥과, 2003,「제주관광 매뉴얼 Jeju」 등에 의해 필자 작성

로 볼 때 주로 산남(山南)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더불어 탐라계곡을 제외한 다른 계곡들도 주로 산남지역에 치우쳐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점은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화산활동에서 산북지역에 비해 산남지역으로 점도가 높은 조면암과 안산암 계통의 많은 용암이 흐른 결과이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산남지역이 융기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동굴의 경우도 다소 지역차가 발견된다. 예를 들면 만장굴과 협재굴, 쌍용굴, 황금굴 등과 같이 현재 관광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용암동굴이나 비교적 학술적으로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김녕사굴, 빌레못동굴, 당처물동굴, 선흘벵뒤굴 및 북촌동굴 등의 용암동굴도 산북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관광자원으로 이용되는 해식동굴은 차귀도, 우도, 범섬 및 마라도 등 제주도 본섬 주변부의 유 · 무인도에 전형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여러 자연관광자원 중에서도 생태관광, 체험관광 또는 테마관광 등의 형태로 많은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자원들이 있는데, 다름 아닌 기생화산(오름)과 퇴적층, 해식애를 배경으로 하는 해양관광자원(사계리 용머리 해안, 섭지코지 해안, 남원 · 신엄리 해식애)들이다. 특히, 제주도에서 오름이라 부르는 기생화산은 심신단련과 등산, 야생화와 산정호수의 감상, 오름 트레킹 등의 체험관광 및 테마관광에 활용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전국적으로 오름 매니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오름은 제주도 내에 368개(1997년 제주도 조사)가 산재하며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그 대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제주도, 1997).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주도 내에는 오름동우회가 180여 개가 생겨날 정도로 오름의 인기는 폭발적이며(김창집, 2003), 현시점에서 볼 때 체험 및 생태관광의 핵심축은 다양한 형태의 오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인문관광자원

인문관광자원은 [표 7-2]에 제시하였다. 제주도의 인문관광자원도 자연관광자원에 못지않게 그 수는 많지만, 관광객의 흡인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인문관광자원은 과거의 문화유산인 문화관광자원을 비롯하여 산업관광자원, 레저 · 스포츠시

설 관광자원 및 기타 관광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중에서도 자원수나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문화관광자원이 압도적으로 돋보이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문화관광자원 중에서도 문화재관련 관광자원은 지정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로 나눌 수 있는데, 지정문화재는 다시 국가지정문화재와 제주도지정문화재로 구분된다. 2004년 2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는 보물 4건, 사적 5건, 천연기념물 31건, 중요민속자료 8건 중요무형문화재 5건으로 총 53건이 지정 · 보호되고 있다. 이를 시군 단위로 분포정도를 살펴보면 제주시 15건, 서귀포시 9건, 북제주군 14건, 남제주군 13건이며 그 외 2건이 도내 일원으로 지정되어 있다(제주도, 2003).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는 총 31건이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본 장의 관광자원 구분에서는 자연관광자원으로 속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지정문화재는 총 94건이 지정 · 보호되고 있는데, 이들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유형문화재 18건, 무형문화재 15건, 기념물 52건(이중 사적 28건, 수목 18건, 경관 · 지질 기타 6건), 민속자료 7건 그리고 문화재자료가 2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지정문화재는 제주시가 3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북제주군 28건, 남제주군 14건, 서귀포시 10건, 도내 일원이 10건으로 나타난다(제주도, 2003; 제주도, 2004).

문화재자원 중에서도 지정문화재의 경우는 삼성혈, 제주목관아지,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삼양동 선사유적 등과 같은 사적지나 목석원, 법화사지 및 추사적거지 등과 같은 기념물이 관광객의 흡인력을 높이는 자원이라 할 수 있으며, 비지정문화재의 경우는 계절별로 행해지는 문화축제가 그나마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내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문화축제는 축제내용이나 성격으로 볼 때 관광객들을 직접적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송재호, 2002). 다시 말하면, 문화축제에 직접 참가하거나 참관하는 관광객들은 일차적으로 제주도라고 하는 이국적인 도서지방을 관광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도한 사람들이며, 따라서 축제관람이나 참가를 제1의 목적으로 내도한 관광객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문화관광자원 중에서도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테마파크 및 공연장은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이 관광객을 유도할 목적으로 자본투자를 통해 인위적으로 조성한 시설 또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관광시설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김종근 · 길용현, 1988; 김대용, 2001). 그러나 이들 사업체나 시설들

[표 7-2] 제주도 인문관광자원의 현황

관광자원 구분			구 체 적 사 례
문화관광자원	문화재	지 정	●관덕정, 불탑사오층석탑, 제주향교, 연북정, 대정향교, 정의향교, 일관헌, 추자 처사각(추자도) 등의 보물 및 유형문화재 ●삼성혈, 제주목관아지, 제주 삼양동 선사유적,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제주 고산리 선사유적 등의 사적지 ●연자마(하가리, 신엄리), 성읍민속마을, 성읍 조일훈가옥, 성읍 고평오가옥, 돌하르방(제주시·성읍리·대정읍성 주변 총 45기), 제주시 도두동·이호동 방사탑, 복신미륵(2기) 등의 중요민속자료와 민속자료 ●제주칠머리당굿, 제주민요, 갓일, 탕건장, 망건장, 해녀노래, 납읍리·송당리 마을제, 성읍민속마을 오메기술, 고소리술, 방앗돌굴리는 노래, 덕수리 불미공예, 영감놀이 등의 중요무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창천리·하귀리·광령리·외도동·삼양동·도두동·용담동 지석묘, 봉수대(25개소), 연대(38개소), 오현단, 제주성지, 서귀진성, 화북진성, 해신사, 목석원, 화북비석거리, 법화사지, 명월대, 별방진, 북촌리 선사주거지 유적, 명월성지, 대정성지, 혼인지, 최영장군사당 등의 기념물
		비지정	●일부 선사유적 : 화순리·종달리 패총, 용담동·오라동·외도동·예래동·동명리 등의 유물산포지, 화북동·삼양동·우도·하모리·신례1리·신산리·색달동·가파도 고인돌, 대림리·가파도 선돌, 예래동·중문동·하예리·한남리 등의 바위그늘주거지 등 ●일부 역사유적 : 고내리·북촌리·행원리 환해장성 등, 도내 일원의 하잣성·상잣성, 차귀진성, 수산진성, 애월진성, 조천진성, 정의현성, 산양리 월광동·고산리 굴동산·조수2리 불그뭇 노랑굴(도요지), 구억리 상동 검은굴(도요지), 무릉리 인향동 기와가마, 신흥리 방사탑(답) 등 ●일제 강점기의 전적 유적 : 알뜨르 비행장, 강병대 교회, 비행기 격납고, 송악산 해안·성산일출봉 해안·섭지코지·수월봉·어승생악 등의 진지시설 등 ●문화축제 : 제주왕벚꽃잔치, 제주유채꽃잔치, 고사리꺾기대회, 제주도새기축제, 서귀포칠선녀축제, 철쭉제,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제주국제관악제, 서귀포칠십리축제, 탐라문화제, 제주억새꽃축제, 제주감귤축제, 탐라국입춘굿놀이,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등
	박물관 / 미술관 / 전시관 / 테마파크 / 공연장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교육박물관, 제주민속박물관, 신영영화박물관, 초콜릿박물관, 제주민속촌박물관, 테디베어뮤지엄, 오설록녹차박물관, 중문입속어촌박물관, 성산포조가비박물관, 소리섬박물관, 평화박물관 등 /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신천지미술관 등 / 제주항일기념관, 항몽기념관, 김만덕기념관, 정석항공관, 한국야구명예의 전당, 삼양동선사유적전시관, 추사적거지, 하멜기념관, 네덜란드엿보기전시관, 김영갑갤러리, 서재철자연사랑갤러리, 이기풍선교기념관, 이승만자료관, 제주나비레전시관 등 / 김녕미로공원, 한림공원, 소인국테마파크, 소인국미니월드, 동물테마파크, 제주조각공원, 여미지식물원, 퍼시픽랜드, 분재예술원, 일출랜드, 금릉석물원 등 / 회천관광타운, 탑동해변공연장, 제주민속관광타운 등
산업관광자원	생활민속		제주초가, 제주와가, 제주방언, 제주도예원, 제주옹기마을, 제주민속오일시장(제주시·표선, 대정·성산·중문·서귀포 등), 전통재래시장(동문시장, 서문시장) 등
	당 / 사찰		송당리 본향당, 건입동 칠머리당, 종달리 생개납돈짓당, 마라도 애기업개당, 상명리 느지리캐인틈당 등 / 관음사, 산방굴사, 존자암, 약천사, 법화사, 불탑사, 천왕사, 석굴암 등
	농원 / 목장		서광다원, 도순다원, 한남다원, 금산자연농원, 도내 일원의 감귤원 / 송당목장, 이시돌목장, 명도암관광휴양목장, 제동목장, 대원목장, 건영목장, 제주마방목지 등
	도 로		비자림로, 산록도로변(아라동) 및 1100도로변(노형동) 신비의 도로(도깨비도로), 이중섭거리, 하귀-애월 해안도로, 세화-성산해안도로, 사계해안도로, 신창-용수해안도로, 5·16도로 등
	도대불/항구·포구		용담동 다끄네·김녕리·북촌리·고산리 자구내 포구 도대불 등 / 제주항, 서귀포항, 성산항, 모슬포항, 애월항, 다끄네·자구내·대평리 당캐 포구 등
	기 타		원담(돌그물), 행원리 풍력발전단지, 월령리 신·재생에너지시범단지, 마라도·영실의 태양열 발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수 공장 등
레저·스포츠시설 관광자원			돈내코 유원지, 종달리 조개잡이 체험어장, 동복리·구엄리 바릇잡이 체험어장, 제주경마장, 제주월드컵경기장, 대유랜드, 대국해저관광(잠수함), 제주씨월드, 남녕월드, 오라·제주·중문·크라운·핀크스·파라다이스·다이너스티·나인브릿지·레이크힐스 등의 골프장
기타 관광자원			해녀, 제주의 음식 : 옥돔구이정식, 갈치호박국, 몸국, 자리물회, 한치물회, 전복죽, 말고기 등,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우도, 섭지코지, 법환동 포구 등) 등

자료 : 제주도청, www.jeju.go.kr / 제주도 관광진흥과, 2003,「제주관광 매뉴얼 Jeju」등에 의해 필자 작성

의 존재자체가 궁극적으로 보면, 관광객들의 관광의욕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관광자원으로 분류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튼, 최근의 경향을 보면 국립제주박물관과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한 기당미술관, 김만덕기념관, 하멜기념관 등 몇몇 국 · 공립 관광자원(시설)을 제외하면,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립 관광자원(시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산업관광자원 중 농원과 목장은 주로 체험관광이나 전원적 · 목가적인 경관감상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도로는 드라이브를 비롯한 산악 및 해안지역의 경관감상에 활용되는 자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도대불은 현대식 등대가 보급되기 이전에 민간에서 돌로 쌓아 만든 등대시설을 말하는데, 현재 도내의 포구를 중심으로 16기 정도가 남아 있다(북제주군 · 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아직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항 · 포구와 함께 주로 관광객들의 숙박지 주변의 산책코스에 편입되어 있어서 향후에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는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레저 · 스포츠시설 관광자원에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유원지, 체험어장, 경마장 및 월드컵경기장은 물론 특별한 체험을 요구하는 사격 · 사냥 및 수중탐험의 시설자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골프장은 도내의 스포츠시설자원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을 흡인하는 자원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2003년 12월 현재 오라 CC, 제주 CC, 중문 CC 등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골프장 시설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사업승인이 된 곳이 12개소, 정차이행 중인 곳이 9개소, 사업예정으로 지정된 곳이 6개소가 있는데, 이들을 모두 합하면 전체 골프장 수는 37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다(제주도, 2004). 그러나 이들 골프장 시설자원은 대부분이 제주도 내의 중산간 지역을 개발하여 건설하는 관계로 인하여 사업주체와 도민 · 환경관련단체 사이에 항상 마찰의 불씨가 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골프 관광객을 노리기 위한 목적으로 골프장을 증설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2) 관광사업체의 현황

관광사업체는 크게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체와 기타법령(예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체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및 관광편의시설업이 속하며, 후자에는 휴양펜션업, 골프장, 숙박업, 승마장업, 유람선업, 오일장, 보세판매장(면세점), 자동차운송사업체 및 관광지 등이 속한다(제주도, 2004).

먼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의 현황을 [표 7-3]에 제시하였다. 2002년 12월 현재 관광사업체는 522개소로 집계되며, 이 중에서는 여행업이 387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여행업은 다시 일반, 국내 및 국외여행업으로 나뉘어지는데 일반은 25개소, 국외가 53개소, 국내가 309개소로 전체에서 국내 여행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 시군별로는 제주시 353개소, 서귀포시 49개소, 북제주군 30개소, 남제주군이 13개소로 제주시에 집중하는 분포특성을 보이고 있다. 여행업은 1992년과 비교하면 3.7배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으며(제주도, 1993; 제주상공회의소, 2003), 이것은 10여 년 사이에 관광지의 선택범위나 관광비용의 폭도 그만큼 증가했다는 사실과도 관련된다.

관광숙박업은 총 59개소로 전체 관광사업체 중에서 11.3%를 차지하며 1992년과 비교할 때는 20개소의 증가를 가져왔다. 관광숙박업은 크게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나뉘는데, 호텔업 중에서는 종합관광호텔이 42개소로 압도적으로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휴양콘도미니엄은 1990년 말부터 계속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1992년에 1개소였던 것이 2002년에는 13개소로 늘어났다. 휴양콘도미니엄의 증가는 제주도 내로 들어오는 관광객의 관광패턴이 가족단위나 친구 · 동료 등의 그룹단위로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군별 관광숙박업의 분포에서도 제주시(27개소)와 서귀포시(18개소)에 주로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제주도, 1993; 제주상공회의소, 2003).

휴양콘도미니엄업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관광 사업체인 휴양펜션업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휴양펜션업은 관광진흥법에 근거를 둔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표 7-3]에는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다. 휴양펜션업의 특징은 농어촌 지역에 자리잡으면서도 고급스럽고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식사와 숙박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구형 관광숙박시설이라는 점이다. 제주도에서는 휴양펜션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하여 2002년 3월부터 입지하기 시작했는데, 2003년 12월 현재 총 15개소로 제주시에 4개소, 서귀포시에 2개소, 북제주군에 3개소, 남제주군에 6개소가 입지하고 있다(제주도, 2004). 앞으로 제주도 내의 휴양펜

선업은 새로운 형태의 관광활동을 촉진시키며 관광객을 유인하는 촉매제로 작용하여 당분간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관광객이용시설업은 전문휴양업,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및 유원시설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총 사업체수는 32개소(2002년)이며 세 가지 사업체 중에서는 외국인전용 관

[표 7-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의 연별 · 시군별 현황 비교(1992 : 2002년)

(단위 : 개소)

사업체별 \ 연별 · 시군별			1992	2002				
				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합 계			167*	522	430	49	30	13
여행업	소 계		106	387	353	14	16	4
	일반 여행업		13	25	23	-	-	2
	국외 여행업		10	53	48	3	2	-
	국내 여행업		83	309	282	11	14	2
관광숙박업	계		39	59	27	18	10	4
	소 계		38	46	27	15	3	1
	호텔업	종합관광호텔업	35	42	25	13	3	1
		한국전통호텔업	1	1	-	1	-	-
		일반호텔업	2	3	2	1	-	-
	휴양콘도미니엄업		1	13	-	3	7	3
관광객이용시설업	소 계		19	32	20	6	3	3
	전문휴양업		6	8	-	4	2	2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10	17	15	1	1	-
	유원시설업		3	7	5	1	-	1
국제회의업	국제회의기획업		0	1	1	-	-	-
	카지노업		?	8	5	3		
관광편의시설업	소 계		?	35	24	8	1	2
	관광유흥음식점업	한국음식점업	?	4	2	2	-	-
		관광극장식당업	?	6	4	2	-	-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	1	-	1	-	-
	관광식당업		3	21	15	3	1	2
	관광사진업		?	3	3	-	-	-

*주 : 1992년 합계 수치는 관광편의시설업의 통계미비이거나 혹은 분류방법의 차이로 인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 제주도, 1993,「제주통계연보」/ 제주상공회의소, 2003,「제주경제현황(Ⅷ. 관광편)」

광기념품 판매업이 17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시군별로는 제주시가 20개소(62.5%), 서귀포시가 6개소(18.7%),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각각 3개소(각 9.4%)로 나타난다(제주상공회의소, 2003).

관광편의시설업은 크게 5개 사업체로 구분되며 2002년 12월 현재 총 35개 사업체가 있다. 이들 중에서는 관광식당업이 21개소(60.0%)로 가장 많으며, 관광극장식당업이 6개소(17.1%)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관광편의시설업의 시군별 분포에서는 제주시 24개소(68.6%), 서귀포시가 8개소(22.9%), 북제주군이 1개소(2.8%), 남제주군이 2개소(5.7%)로 확인된다(제주상공회의소, 2003).

한편, 관광진흥법이 아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비롯한 기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설립하여 운영중인 관광관련 사업체는 2003년 12월 현재 총 903개 업체가 있다. 위에서 지적한 15개의 휴양펜션업 외에 골프장 10개(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숙박업 626개(부가가치세법), 승마장업 24개(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유람선업 18개(유선 및 도선사업법), 오일장 9개, 보세판매장(면세점, 관세법) 3개, 자동차운송사업체 173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광지가 25개 업체(관광진흥법 및 문화재보호법)가 있다(제주도, 2004). 이들 중에서도 제1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관광자원으로 분류한 것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전체 903개 사업체 중 가장 사업체수가 많은 숙박업의 경우는 일반호텔이 78개소(12.5%), 여관이 426개소(68.0%), 여인숙이 122개소(19.5%)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동차운송사업체의 경우는 시내 · 외버스 12개, 전세버스 61개, 렌터카 65개, 회사택시 35개 업체가 있다.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체에 포함되지 않는 교통수단이지만, 개인택시가 3,592대(2003년 12월)가 있다(제주도, 2004).

2. 관광객의 관광동향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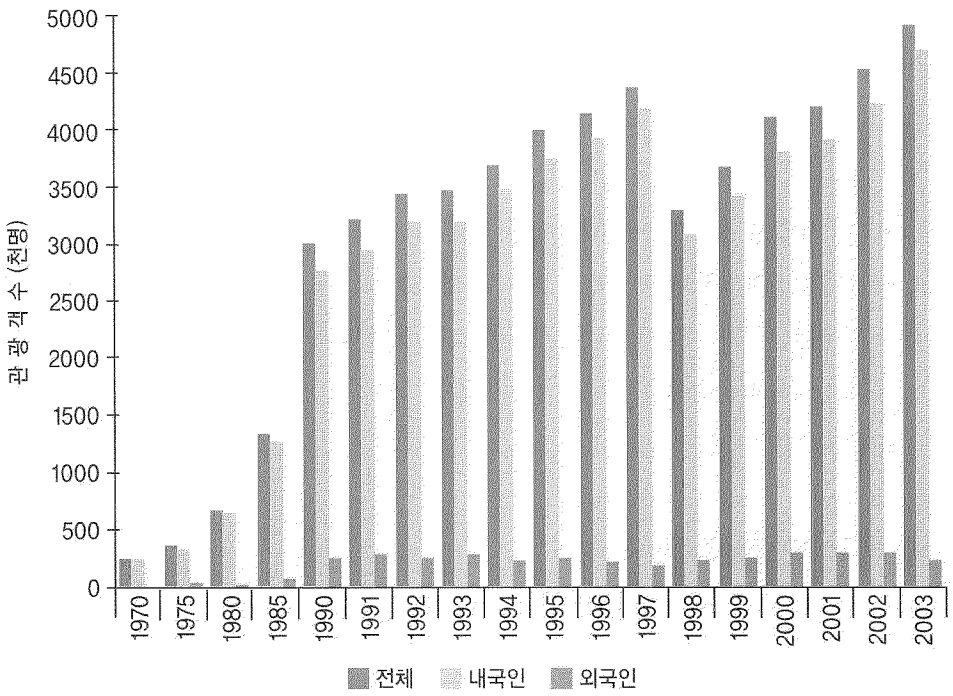
1) 관광객과 관광수입의 실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의 추이와 더불어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을 지에 대한 분석은 앞으

로 제주도 관광발전의 가능성을 타진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지명도(知名度)가 높은 관광지인 만큼, 국내경기의 호·불황 여부에 따라서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03년 현재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491만 3,000여명으로, 곧 500만 명을 돌파하는 시점을 맞게 된다(제주도, 2004). 오늘날 491만 명이 넘는 관광객의 방문은 그저 단순하게 얻어진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제주도가 나름대로 고민하며 관광상품과 관광지의 개발, 관광기반 시설의 확충, 관광객의 유입정책 등을 꾸준하게 실시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7-1〉은 1970~2003년까지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의 실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1970년 24만 5,000명이었으나, 1980년에는 2.7배가 증가한 66만 9,000명을 보였다. 또한 1985년에는 드디어 100만 명을 돌파함으로써,



〈그림 7-1〉 관광객수의 연도별 변화(1970~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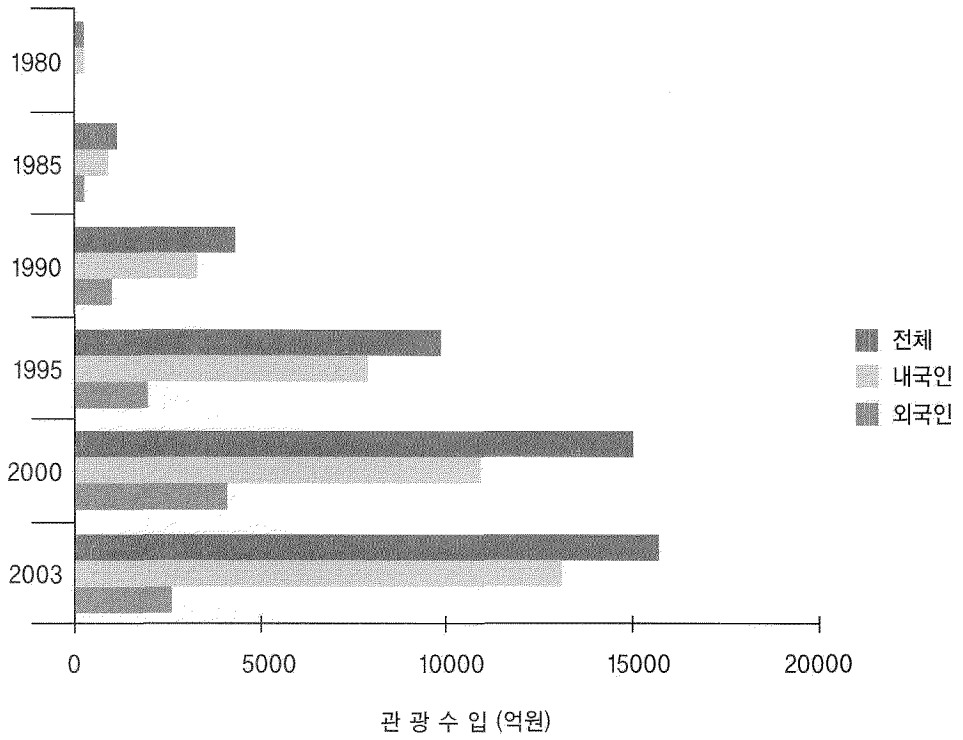
자료 : 제주도, 2004,『주요 관광행정현황』

명실공히 전국적인 관광지로서 급부상하기 시작하였으며, 계속해서 1990년에는 약 300만 명, 1995년에는 4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리고 1996년 400만 명의 관광객을 넘어선 시점에서 IMF의 영향으로 인한 경기침체 때문에 약 2년간 감소하였다가, 2000년부터는 다시 400만 명을 넘어서 이전의 증가폭을 보이기 시작하였다(제주도, 2004).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2004년부터는 드디어 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내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금강산 육로관광의 개척, 저렴한 해외 관광상품(속칭 올빼미 관광)의 개발, 계속되는 항공료 인상 등으로 인하여 제주도는 점점 더 경쟁면에서 불리한 관광지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제주관광신문, 2004). 따라서, 제주도로서는 개별적인 관광지의 특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저렴하고 효율적인 관광상품의 개발이나 특이한 관광형태의 창안 등을 통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동향을 보면, 1970년에 7,000명이었던 관광객이 20년 후인 1990년에는 23만 5,000명으로 증가했으나, 연평균 증가수는 11,700여명으로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2003년 12월 현재 외국인 관광객은 1990년보다도 오히려 감소한 상황이어서, 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찾는 관광지로는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서는 매년 50~60%가 일본인에 편중되는 사실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송재호, 2002; 현창국, 2000). 그러므로 21C의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을 목표로 삼는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자리 매김을 해야 하는 과제도 함께 떠안고 있다고 하겠다.

〈그림 7-2〉는 1980년 이후 관광수입의 변화를 5년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1980년 제주도의 관광수입은 약 260억 원에 불과했으나, 1985년 1,157억 원, 1990년 4,319억 원, 1995년 9,814억 원 그리고 2000년에는 1조 4,975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크게 높아졌다. 결국, 관광객 1인당 소비액의 변화에서도 1980년에 38,864원에서 1985년 87,453원, 1990년 14만 4,351원, 1995년 26만 1,358원, 2000년에는 34만 7,724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제주도, 2004).

2003년도의 총 관광수입은 1조 5,661원이며 1인당 소비액은 31만 8,767원으로서, 2000년 이후에는 국내외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제주도의 관광시장 자체도 다소 정체된 듯한 상황을 맞고 있다. 관광수입 중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교에서는 1980년 내국인에 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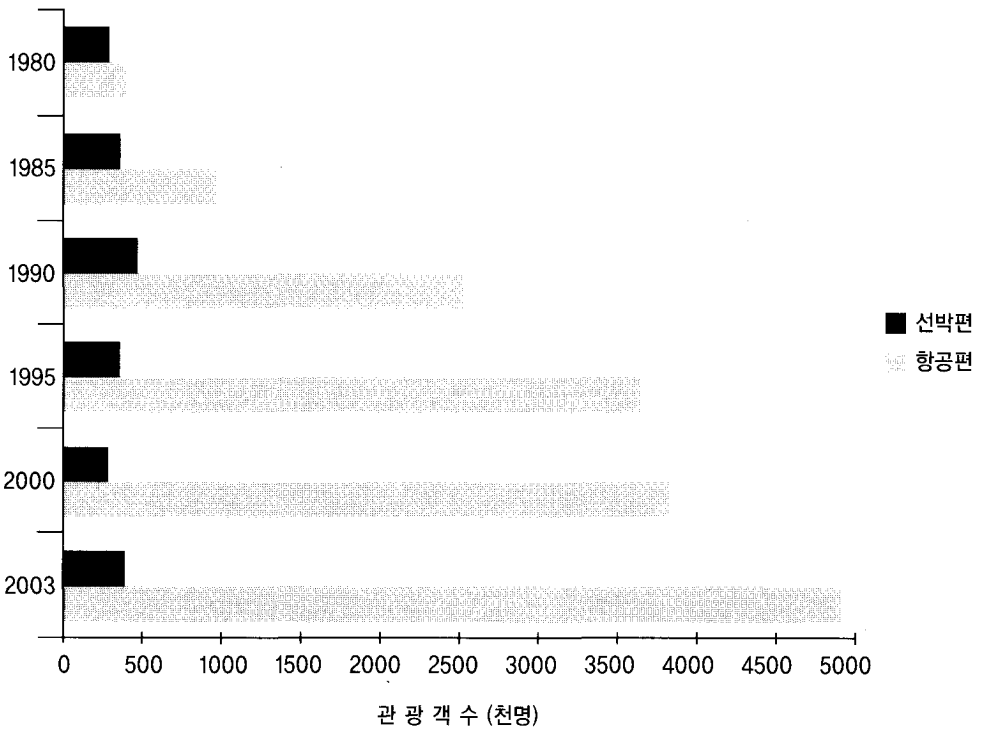
〈그림 7-2〉 관광수입의 변화(1980~2003년)
자료 : 제주도, 2004,『주요 관광행정현황』

관광수입이 87.3%, 외국인에 의한 관광수입이 12.7%를 보이고 있었으나, 1990년에는 내국인 76.6%, 외국인 23.4%, 2000년에는 각각 72.6%와 27.4%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항상 내국인에 의한 관광수입이 70% 이상을 점하는 가운데서도, 외국인의 관광수입이 낮은 비율로 증가하는 국면을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03년에는 내국인 수입이 83.7%, 외국인 수입이 16.5%로 다시 내국인에 의한 관광수입 비율이 한층 높아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액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제주도, 2004).

2) 교통수단과 관광형태별 관광객의 동향

제주도의 관광에서 항상 중요하게 거론되는 문제는 제주도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인하여 관광객들이 항공편으로 내도 하느냐 아니면 선박편으로 내도 하느냐 하는 점이다. 말하자면, 관광객들이 본격적인 관광을 위하여 방문시의 교통수단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가령, 항공편으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관광비용은 높아지는 대신에, 관광지의 순회나 각종 체험활동 등 여행일정에서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그림 7-3〉은 관광객의 내도 실태를 크게 2개의 교통수단, 즉 선박편과 항공편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도 나타나듯이,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항공편을 보편적인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제주도, 1993; 제주도, 2003).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1980년 항공편 이용 관광객은 39만 여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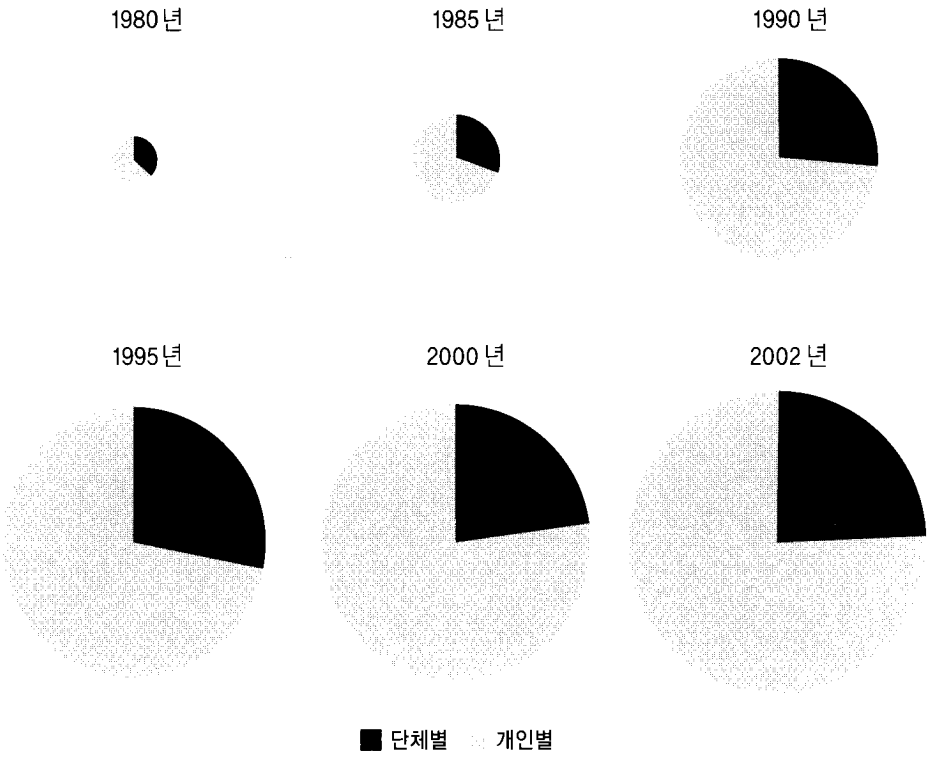
〈그림 7-3〉 교통 수단별 관광객의 내도 현황(1980~2003년)

자료 : 제주도, 2004,『주요 관광행정현황』/ 제주도, 2003,『제주통계연보』

58.2%이고, 선박편 이용 관광객은 28만 여명으로 41.5%를 점유하여 그 차이는 약 17% 정도였다. 하지만1985년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하였는데, 1985년에 73:27정도의 비율로 1990년에는 85:15, 1995년에는 91:9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그리고 가장 최근이라 할 수 있는 2003년에는 항공편 이용 관광객이 491만 3,000여명으로 92.8%이고 선박편 이용 관광객이 38만 3,000여명으로 7.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교해 볼 때, 향후 선박회사의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항공기를 이용한 관광객의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제주도, 1993; 제주도, 2003; 제주도, 2004).

이어서 관광객의 관광 형태별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관광 형태별 관광객의 동향은 제주도가 어떤 성격의 관광지로 성장 · 발전하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하겠다. 〈그림 7-4〉는 1980년 이후 단체별 관광과 개인별 관광의 비율을 연도별로 비교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1980년 관광객 중 단체별로 방문한 관광객수는 25만 1,000여명(37.5%)이고 개인별 관광객수는 41만 9,000여명(62.5%)으로, 개인별 관광객이 대략 2배에 가까운 높은 수치를 보여 왔다. 이와 같이 개인별 관광객수의 증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많아져서, 1990년에는 221만 여명으로 73.8%, 2000년에는 317만 여명으로 77.2%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제주도, 1993; 제주도 2003). 이러한 사실은 한국사회도 점진적으로 선진공업국과 같은 개인주의적 성향의 관광활동이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광객의 월별 내도 현황(2002년)을 보면 전체적으로 단체별 관광보다는 개인별 관광이 많은 가운데 최근에는 특히 8월과 4월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내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단체별 관광과 개인별 관광의 월별 내도 현황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단체별 관광에서는 4월, 5월, 10월, 11월 순으로 많고, 개인별 관광에서는 8월, 4월, 5월, 10월 순으로 많이 방문하고 있다(제주도, 2003). 단체별 관광이 주로 봄(4~5월)과 가을(10~11월)에 많이 방문하는 배경은 날씨가 화창하여 야외활동에 적합한 계절이기 때문에, 효도관광이나 친목(회) 관광 등으로 장 · 노년층의 단체관광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별 관광에서 8월이 가장 많은 이유는, 여름철로서 산과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내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7-4〉 관광 형태별 관광객의 내도 현황(1980~2002년)

자료 : 제주도, 각연도,『제주통계연보』

최근 월별 관광객들의 내도 현황에서 중요한 변화중의 하나는 다른 계절에 비하여 특히 12~2월에 방문하는 관광객수가 많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아직도 12월과 2월의 관광객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회복한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점은 앞으로 제주도가 통년형(通年形) 관광지로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빈 면



제8장
제주지방 – 지역정체성

송성대 (제주대학교)

빈 면

제8장 지역정체성

1. 제주인의 에토스와 자연환경

복잡다기한 뜻을 담고 있는 '정체성(identity)'의 일의적 개념은 "내가 누구인가?(자아-정체성)" 혹은 "우리가 누구인가?(집단정체성)"란 실존적 질문에 대한 내재적 응답을 말한다. 그것이 '내재적 응답'이라는 면에서 이데올로기와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것의 궁극적인 충족이 향토(鄕土)에의 소속감 확인에 의한다는 점에서 또한 이데올로기와 구별된다.

사회과학으로서의 지리학에서는 당연히 집단정체성에 대해 관심을 갖지만 전통적으로 지리학 일반에서 사용하는 지역성(Regional Characteristics)과 지역정체성(Geographical Identity)은 개념을 달리한다. 즉, 지역성은 지리학 모든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지만 지리적 정체성으로서의 지역정체성은 문화지리학의 관심 대상으로 지역 정신문화의 특성을 구명하려 한다.

정체성은 자아의 공간적 일관성(Geographical Identity), 자아의 시간적 일관성(Historical Identity), 주체적 자아(I)와 객체적 자아(Me)의 조화(Communal Identity), "나는 나다"라는 실존적 자아의식(Individual Identity) 등의 요소가 복합된 개념이다. 부연해서 정체성은 문화종합에 의해 형성 표현되는 것으로 '남과 다른 나(우리)', 또는 '달라진 나(우리)'를 한편으로 하고, '여전히 살아가야 할 나(우리)'를 다른 한편으로 하여 이 양자의 관계에서, 그 '나(우리)'에게 조성된 위기에 대응하여, '나(우리)를 계속 나(우리)로 살게 하는 힘'의 원천을 '나(우리)의 정신' 안에서 특정 형태로 재창출하고자 하는 일종의 정신태도 담론이다. 그리고 문화종합이란 각 문화에 지속적이고도 불가피하게 닥치는 변화에 즈음하여, "자연환경 및 그에 대한 해당 문화의 지식과 이해에 놓여지는 여러 제약 조건들 안에서 그 문화의 존속과 번영을 가장 잘 보장해 줄 관념, 가치, 태도, 관행들에 대해 창출된 최적의 종합"을 의미한다.

지리적 일관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이 '태어나고 생활해온' 지리적 환경과의 일체감을 말한다. 따라서 정체성은 자신(들)의 역사성을 갖게 되

고 이것이 또한 이데올로기와 다른 바이기도 하다. 여기서 역사란 순간순간 주민과 그들의 환경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사상(event)들의 누적된 묶음일 뿐이다. 따라서 정체성론에서 언급되는 역사란 역사적 시간이 아니라 지리적 시간, 즉 아날학파들이 말하는 '장기지속의 시간' 을 의미한다.

객관화된 집단정신(ethos)으로 설명되는 지리적 일체감은 어떤 문화적 표상(이름)으로 드러낼 수 있다. 예컨대, 선비정신, 군자도, 무사도, 기사도, 신사도, 개척자 정신 등등하는 예가 그렇다. 모든 학문에서 그러하지만 사실의 기본적 요소가 논거에 의한 '설명 혹은 서술' 이라면 그러한 진술의 최종적 단위으로서 이름(name)이 제시되어야 한다. 공식찾기의 자연과학과 달리 인문 사회과학은 궁극적으로 이름찾기를 하는 학문이다.

'화산도' 인 제주도는 화산구조선에 따라 동서로 긴 타원형을 이룬 본섬을 비롯해 7개의 유인도와 54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제주도의 면적은 1,845㎢로서 섬의 정중앙에 1950m의 높이를 갖는 '한라산' 이 있는 '고도(孤島)' 다.

위의 '화산도(척박성)', '한라산(다양성)', '고도(孤島=격절성)' 라는 제주도의 자연환경 요소는 제주도로 하여금 '지척민빈(地瘠民貧)' 의 섬으로 불리게 하였지만 이 환경 요소들이 제주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3대 기반이 되었다. 즉, 제주인들은 위의 3대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 문화를 창조하여 역사에 남도록 했으며 마침내는 독특한 지역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먼저 제주도가 '화산도(火山島)' 라는 것은 그로 인해 형성된 지질구조, 환언하면 생존을 위한 터전으로서의 토양이 화산회토가 되도록 하였다. 화산회토를 제주도에서는 '뜬땅(浮燥土)' 이라 하여 극히 메마르고 가뭄에 쉬이 노출되는 특성을 가져 농경에는 매우 불리한 토양이다.

다음에 제주도가 곧 '한라산(漢拏山)' 그 자체가 되지만, 한라산은 고도에 따라 전혀 다른 경관이 나타나는데 대체로 해발 200m이하는 해안(평야)지대로 비교적 평탄한 지형에다 외부와의 접근성이 높고 기후 역시 온화하며 토심이 깊기 때문에 일찍부터 인구조밀지대를 이루고 있는 지대다. 해안지대는 〈인문경관지대〉로 농경과 해산활동이 동시에 이루질 수 있는 유리한 지대라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인문 자연경관지대〉로서 중산간지대라 불리는 해발 200~600m 사이는 내륙평원(용암평원)지대로 거주 조건이 해안지대보다는 못하나

해발 600m 이상의 〈자연경관지대〉인 산악지대가 안외쿠메네가 되는 것과 달리 그런대로 거주 가능한 지대가 된다.

세 번째로 제주도가 고도(孤島)라는 것은 제주도가 대륙과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섬이 환해도(環海島)이기는하나 여러 섬들이 어우러져 있는 군도(群島)나 열도(列島)가 아닌 절해고도라는 것이다. 고도에 살아온 제주인들은 그 만큼 단일의 문화를 가지면서 생존을 위해 자생력을 키워야 했고 동시에 바다 건너의 외부 세계와 교류하도록 압박을 받았다.

한반도, 중국대륙, 일본열도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가운데 지점에 절해고도로서 입지한 제주도는 일본의 동경과는 1,220km, 중국의 북경과는 1,120km, 상해와는 550km, 서울과는 469km의 공간거리를 갖는다. 근대 이전의 범선 시대는 최단연륙지점인 한반도 최남단의 해남반도를 통하여 교통이 이루어졌으나 기선시대인 근대 이후로는 142㎞ 떨어진 한반도 남서단의 목포와, 그리고 287km 떨어진 한반도 남동단의 부산을 통하여 한반도부와 교류하여 왔다.

이런 제주도의 3대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 제주인들은 제주인들만이 갖는 문화종합의 현재화되는 에토스를 갖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 10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에토스는 집단의 정신 혹은 정서, 심성, 인성 등의 뜻을 갖는다.

① 생활력이 강하여 활기가 있다.
② 의뢰심이 적고 자영자족(自營自足)을 존중한다.
③ 근검질실(勤儉質實)하여 경제사상이 발달해 있다.
④ 전통적으로 기개(氣槪)가 부(富)하고 용맹하다.
⑤ 위기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단결을 잘한다.
⑥ 배타성이 있다.
⑦ 자존심이 강하다.
⑧ 시의심(猜疑心)이 강하다.
⑨ 공존공영심(共存共榮心)이 약하다.
⑩ 표한(慓悍) 방사(放肆)하다.

①~⑤까지는 긍정적인 내용이고 ⑥~⑩까지는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이 열 가지 내용을 수렴시켜 하나의 문자로 정리 표현하면 제주인들은 '광풍촉석(狂風矗石)'과 같은 사람들로 은유화할 수 있다.

광풍촉석이란 표현은 은유화된 조선 8도지방 사람들의 에토스와 비교하기에 유용하다. 참고로 보면 18세기 말엽(정조때)에 살았던 규장각 학자 윤행임(尹行恁)은 각 도민의 성격을 「四字評」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함경도 사람들은 이전투구(泥田鬪狗)
평안도 사람들은 맹호출림(猛虎出林)
황해도 사람들은 석전우경(石田牛耕)
경기도 사람들은 경중미인(鏡中美人)
강원도 사람들은 암하노불(岩下老佛)
충청도 사람들은 청풍명월(淸風明月)
경상도 사람들은 태산교악(泰山橋岳)
제주도 사람들은 광풍촉석(狂風矗石) ┐
전라도 사람들은 풍전세류(風前細柳) ┘

위 [ ]속의 제주도분은 필자에 의한 것으로서 조선시대 팔도의 지역범주에서 제주도는 전라도에 속하였기 때문에 따로 은유화된 에토스의 특성을 표현하지 않았었다.

포괄법칙 모형(covering-law model)에 따른 과학적 설명은, 설명되어야 할 현상과 관계있는 일련의 다른 현상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데에 있다. 에토스는 '설명되어야 할 현상'이며, 자연환경은 '일련의 다른 현상'에 해당한다.

이제 제주인의 에토스로 표상된 광풍촉석의 구체성은 무엇(What)이며 어떻게(How) 형성되었으며 왜(Why) 그렇게 규정될 수 있는가? 아울러 거기에 현재성(現在性)과 대중성(大衆性)은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해보자.

2. 화산회토에의 적응기제인 자립정신(Self-relianceship)

제주도의 토양은 90% 이상이 화산회토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곳곳에는 화산암반의 노두(露頭)가 나와 있어 경지를 잘게 나누어 버리고 또 토양 속에는 화산암설들이 들어있다. 화산회토를 제주 사람들은 '뜬땅'(浮燥土)이라 부르고 부분적으로 분포하는 점토질의 토양은 '된땅' 이라 부른다.

화산회토는 주지하다시피 수십 수백만년 동안 화산활동시 분출된 화산재가 잔적하여 이루어진 토양이다. 입경 크기에서 사양토로 분류되는 화산회토로서의 뜬땅은 투수성(透水性)과 관계된 공극률이 70%가 넘는 외에 빗방울의 충격이 있을 경우 곧 표면 공극을 메워 초기에 많은 수량이, 다량의 토양 성분, 가용성 염류, 토양 유기물 등과 함께 바다로 유실되어 버린다. 그러나 이 화산회토는 일단 물을 머금으면 일반 재(灰)와 같이 큰 공극률로 인하여 쉬이 투수되어 함수량이 낮아지게 된다. 강수량의 40%(12억m^3)가 지하로 스며들어 이 중의 약 20%는 다시 지질구조대를 따라 바다로 유출되고 나머지 80%(10억m^3)가 지하에 포장되나, 높은 공극률로 모세관 현상을 일으키지 못하여 지표로의 수분 공급이 안 되는 것이다.

산악지대의 넓은 피복층을 갖고 있는 제주도는 한반도부와 비교해서 그 피복층이 지온을 높여, 식물의 생육과 유기질 분해, 미생물의 활동을 높이는 유리한 부식질이 3배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역시 끈기가 없는 화산회토라서 낮은 보수력을 가져 한반도부와 비교하여 훨씬 낮은 약 10% 정도의 낮은 함수량만을 갖는다. 이것은 한반도의 논농사지대가 토양모암으로서의 화강암이나 화강편마암의 풍화물인 식양토로 되어 그것이 물을 머금었을 때 불투수층의 경반층이 형성되어 물을 저수할 수 있는 것과 매우 대조되는 것이다. 이러한 화산회토의 특성은 한반도부 중국대륙 일본열도 등의 논농사지대는 물론 밭농사지역의 토양과도 현저히 다르다.

화산회토는 척박함의 상징이며, 사막의 상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응은 다량의 거름과 지속적인 잡초와의 싸움도 해야 하겠기에 과부하의 노동이 투입되는 밭농사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산재하는 화산암석류에 의한 경지의 영세화는 중국대륙의 중원지역이나 한반도의 삼남지방, 일본열도 대화분지의 지배문화지대인 논농사지대와 달리 소유경지를 분

산한 채로 경영할 수밖에 없다. 이 분산된 경지경영체계가 제주 사람들로 하여금 균분상속제, 정확히는 단자우대균분상속제로 가게 했다. 균분상속제야말로 논농사지대의 '두레'처럼 협동노동을 않는 것이 〈최소거리이동의 원리〉를 좇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이 되었다. 이것은 곧 부자간, 형제간의 독립된 생활을 의미한다. 제주도만이 갖는 신거은거제(新居隱居制)는 바다생활과도 관련있게 되지만 이렇게 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언어 자체가 이데올로기라 하지만, 제주도에는 "다 질루지만썩 살아야메!" "애비아덜간 범벅도 그뭇그성 먹으라!"(아버지와 아들간 범벅 먹을 때도 선을 그어 놓고 제몫씩만 먹어라) "시집갈땐 솥단지 들렁간다(핵가족제를 의미)" "아덜은 장개가민 팔촌이라" 등하는 격률 내지 훈육담이 있고 모두가 이의 없이 이에 동의한다. "언어가 없으면 사유도 없다." 정신이 최초로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언어이다. 사회와 정신의 고귀한 기구인 언어 자체가 행동을 지시하는 이데올로기, 바로 그것이다.

"논은 자리로 해먹고 밭은 거름으로 해먹는다"는 말이 있지만 비산비야(非山非野)의 구릉의 문화를 갖게 된 한반도에서의 논농사는 '문전옥답'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그 입지가 산불근(山不近) 강불근(江不近)의 산록완사면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만 홍수의 피해를 피하고 개울에서 내려오는 물을 역학적으로 쉬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요지는 흔치 않았고 따라서 권문세가 즉 호강(豪强 : 일은 하지 않고 놀면서 큰소리치는 지주, 양반, 토호 부류를 지칭)들만이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마침내 한국적 특징인 동족취락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강우를 이용하여 행하여만 하는 완사면에서의 논농사는 물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위계질서를 철저하게 기할 수 있는 동족취락을 만드는 것만이 최선의 삶의 전략이었던 것이다. 동족취락은 곧 항렬 내지 촌수에 의해 위계가 세워진 혈연적 집단주의를 의미하고 여기서는 피붙이끼리 서로 온정(hospitalism)을 베풀며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일조백손(一祖百孫) 사상을 견고히 하는 사당문화(祠堂文化)가 일반화되었고 孝를 지상의 이데올로기로 내세우고, 이를 고취하는 선비들을 동일시의 대상으로 강조하여 왔다. 유교관에 투철한 지관들이 만든 "過瀛洲山勢論"에 역시 "反相背而南北 不孝悌而哮 左向山而右背 六親戚而不合(한라산 정상부가 남과 북으로 향하고 있어 부모나 형을 잘 모시지 않는다. 왼쪽을 향한 산이 오른쪽을 등지고 있어 일가친척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분산경지경영과정에 형성된 혼성취락의 전통을 이어 온 제주도에는 사당이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대신 한반도에는 전혀 없는, 입촌시조 모두를 모셔 백조일손(百祖一孫) 사상을 견고히 하는 '본향당(本鄕堂)' 이 있다. 본향당은 자연취락 어디에나 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효 이데올로기보다는 용(勇) 이데올로기를 강조한다. 사당이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가까운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형제간에 나누어서 봉사하고 계절제도 돌아가면서 하는 윤제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3. 산고원야에의 적응기제인 주인정신(Ownership)

전통농경사회에서는 토지의 소유 상태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근원 인자가 된다. 그런데 한라산 산록의 광활한 무주공야의 용암평원이 해안의 집단거주지대에 근접하여 있어 다행히도 제주섬의 농민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또 다른 경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그럼에도 "밭 한판 늘리느니 식솔 하나 줄이는 것이 낫다."라는 속담을 만들어 놓는 등 하면서 제주인들은 보다 넓은 경지 면적을 소유하여 생산량을 올려 논농사지대의 농가에서처럼 부(富)를 추구하고 또한 지주가 되려 하지 않았다. 왜일까?

제주섬에는 비록 비옥도가 낮으나 총경영지 면적 중 개간 경작 가능한 야초지가, 다른 지역은 1%도 안 되는데 제주도는 무려 21.2%나 되고 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에서는 17세기 후반까지 기본적으로 노비를 동원한 부재지주로서의 경반(京班)이나 토호로서의 향반(鄕班)들에 의한 경지 확장이 끝나 더 이상 개간에 의한 경지 확대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이후로 지주로서의 양반의 세력은 더 이상 신장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자 균분(均分)에서 장남우대의 상속 제도(宗法經濟制度)로 바뀌게 되고 아울러 동족집단의 사회적 결속력은 더욱 강화,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5대조 이상의 조상 제사(時祭 혹은 墓祭)를 행하는 문중 조직의 성립을 보도록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제주도는 전술한 대로 한라산 산록에 넓은 무주공야(無主空野)의 용암평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 비록 비옥하지는 못하지만 의지만 있으면 개간 경지화한 사람이 그 경지를 자가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바로 그 이유가 제주도에서는 소작인이나 머슴이 거의 나타날 수 없어 도무(盜無) 걸무(乞無)의 섬이 되게 하였고, 구성원간의 갈등도 저감시킬 수

있어 양반을 희롱하는 탈춤 등의 민속도 나타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물론 제주에도 일제시대 때(1912) 국공유지인 산간지대의 화전농이 금지되기 시작하면서 극히 미약하나마 소작농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지리적 공간으로 보아 토지 생산력이 비교적 높은 그리고 반농반어의 생활권인 해안지대에 국한되었고 토지 점유가 자유였던 반농반목 생활권인 중간지대는 전무하였다. 그러나 그 소작인들도 자립심이 강했기 때문에 시대가 지남에 따라 곧 소멸되어 갔다. 이러한 자작농의 일반화의 증거는 1928년의 농가 3만 6476호가 9년 후인 1937년에는 그보다 1만1116호가 증가(매년 1,235호 증가)한 4만 4146호로 증가한 예에서 알 수 있다. 1937년 당시 한반도에 있어서의 소작농은 전 농호(農戶)의 82%였는데 반해 제주는 16%에 불과했다.

왕토사상이 있었던 조선조 때의 토지 소유관계가, 토지 생산력이 극히 높은 논농사 중심의 한반도부에서는 '국가적 영유 — 지주적 소유 — 소작농적 점유' 라는 중층구조였다면, 변방이며 열악한 토지 생산력을 갖는 제주는 '국가적 영유 — 자작농적 소유' 라는 단층구조를 가졌던 것이 제주로 하여금 농노적 소작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던 이유이다. 이것은 유럽이나 일본의 성벽으로 에워싸인 장원과 다르고, 혈족에 의해 둘러싸인 한국형 봉건 장원인 양반들의 '반족농장(班族農莊)' 내의 소수의 지주와 다수의 소작인으로 이루어진 상황과 전혀 다른 내용인 것이다. 즉 신분과 계급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던 특히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부의 논농사지대에는 1920년의 예만 보아도 한국 농민 전체의 3.3%만이 '호강(豪强)' 이라 불렸던 양반 지주였고, 19.5%는 자작농, 그리고 나머지 77.2%가 머슴에 가까운 소작농이었다. 전통적으로 한반도부는 제주섬과 달리 평균해서 농민의 70% 내외가 소작인이 되어 관에서도 관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로 인한 피폐가 심하여 호강과 그 밑에 있는, 제주 사람들은 그 이름조차 모르는, 악명 높은 세리(稅吏)라 할 '마름(舍音)' 에게 대부분의 농가가 시달린 것과 비교된다는 것이다. 당시는 농민인구의 3.3%에 해당하는 지주가 전국 논 면적의 64.3%, 전국 밭 면적의 43.3%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곡창이라 불리는 호남지방 김제군 하나의 군이 생산하는 식량은 강원도 전도의 생산량과 같았다.

4. 풍다도에의 적응기제인 해민정신(Seamanship)

제주땅은 물막은 화산섬이다. 거기에 풍세가 다른 지역에 비길데 없이 강하다. 제주를 '대문무의 섬' 이라 하지만, 거지와 도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풍세가 강한 위에 방목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방 형태의 대문은 있을 수 없었고 3개의 통나무를 가로 걸친 정낭만이 있었다. 독특한 내풍성의 견고하고 빈틈없는 가옥경관 또는 "집지성 삼년, 배지성 삼년"이란 경구에서 보듯이 제주사람들은 '대충' 해서는 살 수 없었고 '모지지기'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다.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모지지기 정신' 을 높이 치는 제주사람들은 대충하는 사람을 '해밀쌔기' (반푼수), '식은 죽 닮은 거(얼간이)' 라 하여 흉을 봤다.

제주섬은 화산섬이기에 보리쌀이나 좁쌀, 잡곡 외에는 돈으로 쓸 수 있는 쌀(米貨)도 옷감(布貨)도 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을 만들 쇠붙이도, 아프면 먹을 약도, 긴요한 소금도 거의 나지 않거나 전무했다. 이러한 생필품 모두를 외부에서 구입해 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부연해서, 문명생활을 하려면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나지 않는 희소 상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희소상품으로 육상에서 말총 정도나 났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했다. 제주사람들은 마침내 바다로 눈를 돌리게 되었다.

제주 바다 바닥(海床)은 한반도나 중국대륙의 연안처럼 뻘이 아니라 온통 돌바닥이었다. 돌바다라는 것은 풍부한 해조류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다시 해조류를 먹고 사는 어패류가 풍부함을 의미한다. 거기에 바다 속은 어로작업에 유리하도록 맑디맑았다. 바다가 보고라는 것을 알게 된 제주선인들은 바다에 뛰어들었다. 배 위에서 하는 소극적 어법이 아니라 옷을 벗고 직접 뛰어들어가 하는 적극적 어법으로 해산물을 캐는 사람(裸潛漁民; 男=보제기, 女= 좀 녜)과 이 해산물들을 유통하는 사람들(船主와 船格)이 나타났다. 이들을 제주사람들은 '보제기(浦作人)' 라 하지만 이들 바다와 관련된 삶을 사는 갯사람 모두는 (순)농민과 대비되는 바로서 해민(海民; Seaman)들이었다. 물론 이들의 생활과 불가분한 신당(神堂)의 신들과 무당들도 넓은 의미의 해민이기도 하다.

해민이라고 해서 오로지 바다생활만 한 것은 아니고 거의 반농반어생활을 했다. 그렇지만 제주섬 내에서도 이들은 뚜렷이 구분되어 유교에 감염된 산불근(山不近) 해불근(海不近)의 삶을 신조로 하는 중산간 내륙지방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마을은 양촌(良村)이며 따라서 자신들은 양반이라 생각했다. 반면, 해민들이 사는 갯마을을 포촌(浦村)이라 불러 이들을 '알뜨르 보제기' 라 하여 천시하였다. 그러나 알뜨르 보제기들은 그럴 때마다 중산간 내륙지

방 사람들을 보면 바깥 세상을 모르는 고루하고 미개(未開)한 '웃뜨르 촌놈'이라 놀려댔다. 두 지역간에는 혼사도 꺼려했다.

물막은 제주섬에 이들 해민들이 출현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남아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처럼 채집생활에 머므르고 있었을 것이다. 자연의 스트레스가 강한 물막은 섬이기에 고대 그리스에 비견되는 그리고 임석재 교수와 조동일교수도 주장한 바와 같이 유니크한 신앙과 신화가 탄생하였고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다. 해민들은 칠성판을 등에 지거나 덕판배를 타고 다니며 이어도를 그리며 생을 살았다.

바다에서의 생활은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쟁은 실력을 중시한다. 특히 남자에 비해 보다 평화적이라는 여성들 사회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최초의 중국 주재 영국 대사였던 마카트니 경(Lord Macatney)은 사회변혁은 없이 사람만 바뀌어지는 동양의 역성혁명(易姓革命)을 듣고 보고나서, 바다사람(海民)답게 "부족한 사람이 갑판 위에서 명령을 내리게 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배의 기강과 안전은 작별을 고한다."라는 말로 빗대어 바다를 모르는 중국을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동서양의 모든 사람들은 실력자에 대해 '배의 조타수가 파도를 헤치고 항로를 열어가는 능력'에 비유하지만, 바다에서만은 문무를 겸한 탐색가가 되지 않으면 실력자가 될 수 없었고, 따라서 실력에 의해서 그들의 삶의 질은 달라졌다. 해녀사회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농경사회처럼 촌수, 항렬이나 나이 또는 신분 등의 귀속적 지위가 아니라 해산물 채취능력에 따라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누어져 의사결정 과정에, 혹은 '불턱'(잠시 몸을 덥히는 모닥불 자리)의 윗자리 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기에 모녀 사이, 자매 사이도 경쟁을 하게 된다. "게움(질투)이랑 허지말곡, 심벡(경쟁)이랑 ᄒᆞ라"라는 제주섬에서만 볼 수 있는 격률은 앞에서 언급한 균분상속제에와도 관련되지만 성취적 지위를 존중하는 바다생활자들과 관련이 깊다.

그러나 제주해민들은 경쟁만 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깊은 관용 내지 박애정신으로 대동주의를 실천했다. 한반도부의 어디서나 바다는 바다 주인인 해주(海主, 藿田主)가 있지만 제주해민들은 공동체의 대동을 위해서 공동어장문화를 창조했고 거기에서 직접 생산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공동체 구성원이면 수확물을 나누어주는 품증관행이 있었다. 그리고 어부들의 뱃동서의식, 노인을 위해 할머니들만 어로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할망바당'도 있었다. 이것은 능력에 따른 배분적 정의(the right: 옳음)와 이웃사랑에 따른 균분적 정의

(the good; 좋음)를 잘 조화시킨 이상적인 이념(the beauty;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17세기 이후에 출현했다는 해녀들은 제주섬을 '여성의 섬'으로 인식토록 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주로 남자(보제기)들이 생활을 주도했다. 탐라국을 당나라의 최대무역상대국으로 올려 놓은 것도 보제기들이었으며, 7세기 신라(선덕여왕)가 탐라가 두려워 국가보위용으로 세운 황룡사 9층탑의 4층(1일본 2중화 3오월 4탁라 5응유 6말갈 7단국 8여적 9예맥)을 탐라(托羅)로 자리매김토록 한 것도 해민들이었다. 그리고 왕조실록 여러 곳에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대선단을 이끌어 '바다의 유목생활'을 주도한 것도 해민들이었다. 제주인들이 서방정토라는 '이어도 사상' 역시 이들 남자 해민들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해산물을 내가고 생필품을 외국에서 들여 온 것도 남자 해민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제주도가 여다의 섬이 된 것은 이들 남자 해민들의 희생이 컸기 때문에 만들어진 말이다. 제주섬에 만연했던 축첩문화도 그렇게 해서 생겨났다.

남자가 귀해지고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생활전선에 나가 벌이를 하게 되자 문화는 엄청난 변화를 하게 되었다. 남녀가 평등해지기 시작했고 이윽고는 이혼율이 높아졌다. 그렇게도 '소박데기' 될 것이 두려워 시부모와 남편을 하늘처럼 모셨던 한반도부에서는 이제서야 "초라한 더블보다 화려한 싱글이 더 좋다"하여 여자쪽에서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지만, 제주섬에서는 일찍부터 "귀찮은 더블보다 자유로운 싱글이 더 좋다"하여 쉽게 이혼한 역사를 갖는다. 남자육아취사풍습, 부모자식간 경제생활 분리도 이로써 설명된다. 조혜정 교수는 제주는 남녀관계를 '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양편 비우세(neither dominant) 사회'라 하고 제주여성들은 세계적으로 보아 'proto-feminist(여권신장의 元祖)'들이라고 평하고 있다. 여성이 해방되지 않는 땅에서 부르짖는 민주는 허상일 뿐이다.

바람 많고 척박한 제주섬은 '장소의 번영(place's prosperity)'은 가져올 수 없었지만 해민들에 의해 '주민의 번영(people's prosperity)'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근세에 있어 평균적으로 제주섬사람들이 한반부 어느 지역보다도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해민 특히 해녀들이 외지에서 벌어 온 몫이 컸다.

제주섬에는 유교문화에서 가장 천시했던 이들 해민을 기리는 문화가 있다. 모슬포 포구의 김묘생(金卯生) 공덕비, 김만덕을 기리는 제주시 사라봉 모충사, 제주항여객터미널의 해녀

벽화. 제79회 전국제주체전의 마스코트인 '숨비(어린 비바리 해녀)'가 그 한 예이다. 그리고 김녕리 한연 한배임제, 평대리 부대각, 조천 〈새콧알 본향당〉에 신으로 모셔진 안씨선주 송씨선주 박씨선주처럼 신으로 모셔지기도 한다. 이 모두 유교근본주의 문화권에서는 언감생심 생겨날 수 없는 정신문화이다

5. 제주인의 정체성으로서의 해민정신의 특수성과 보편성

균분상속제, 수눌음(우커니 대커니=give & take) 벵작(竝作) 드살이(계약제머슴문화), 겹부조, 신거 은거제, 실력주의(심벡ᄒᆞ라), 높은 이혼율, 자작농의 일반화, "질루지만썩 살아야메!(형제간 분리자립하기)" "오몽해질때까지 이녘쿠로 일허당 죽주(자식에 의존치 않는 노친의 자립하기)" "족박광 사름은 시민 신대로 으시민 으신대로(타자에 의존치 않는 자존적 삶)" 등에서 제주인들의 개체주의(따로주의) 정신은 여실히 증명된다. 또한 공동목장, 공동어장, 본향당, 뱃동서의식(어획물의 관용적 분배), 품증 할망바당 구휼문화, 모듬소분, 오늘날의 컨벤션센터 건립, 먹는샘물공장 운영, "ᄂᆞᆷ의 대동(大同) 허라!" "아기업개 말도 들어사 혼다(민중정신)" 등에서 제주인들의 독특한 대동주의(또같이주의) 정신은 잘 드러나고 있다. 이 두 가지 정신은 한반부에는 전무하며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정신이다.

개체주의와 대동주의의 두 용어를 합치면 '개체적 대동주의(Individual Corporativism)'로서 이의 다른 이름은 '아나키적 공동체주의' 혹은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이라 해도 좋다. 개체적 대동주의는 "공동체에 기여할 때 완성될 수 있는 개인에 비중을 두는 삶", 즉 "나(주체적 자아=I=나)와 나 아닌 나(객체적 자아=We=우리)를 위한 삶"을 지상 이념으로 삼는 '따또주의'인 것이다. 따또주의란 혈연집단을 단위로 모든 것을 '또같이또같이' 살아가려는 무개성의 동족취락의 '또또주의' 즉, '혈연적 집단주의(Family Collectivism)'와 모든 것을 '따로따로'만하려는 도시유목민의 따따주의(개인주의 혹은 원자주의)와 뚜렷이 구별되는 삶의 정신이다.

또또주의의 문제점을 익히 아는 동양의 지성들은 서양의 개인주의를 동경하고, 또한 원자주의에 위험을 느끼는 서양의 지성들이 동양의 가족주의를 동경한다고 할 때 이 양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되는 정신은 제주인의 따또주의밖에 있을 수 없다.

현재 유럽(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이어 프랑스 사회당 리오넬 조스팽 집권, 게르하르트 슈뢰더의 독일사민당 총선승리〈'98년 9월 27〉)을 중심으로 해서 일고 있는 '제3의 길(The Third Way : 중도좌파성 이념)', 즉 21세기 이상적 이데올로기로 내세우는 것으로서 '사회적 자본주의(Social Capitalism)' 혹은 '참여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라는 것이 있다. '사회적' 혹은 '참여'라는 용어는 '대동'에, 자본주의라는 말은 개체주의(따또주의 : 중도우파성 이념)에 걸맞다. 또한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 하고 있고,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하고 있지만, 개체를 인정 않는 민주(民主)는 공허하고, 대동을 실천 않는 공화(共和)는 위선인 것이다. 이것은 개체적 대동주의(따또주의)가 남북통일의 대안 이념이 됨을 의미한다.

이상으로 보아 해민정신(海民精神, Seamanship)으로 표상되는 제주인의 개체적 대동주의(따또주의)는 아나키공동체를 지향해온 정신문화로서 "가장 예스러우면서 가장 새로운 정신"일뿐더러 "가장 제주적이면서 가장 세계적인 보편정신"의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빈 면



제9장

제주지방 - 지역구조와 지역정책

권상철 (제주대학교)

빈 면

제9장 지역구조와 지역정책

1. 지역구조

1) 토지이용

제주도의 총 면적은 2000년 현재 1,846.29㎢로 각종 매립사업으로 1985년의 1,824.81㎢보다 약 21.5㎢증가하였다. 지목별 토지용도를 보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임야로 대략 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경지가 다음으로 많은 29.3%, 목장용지가 9.8%, 그리고 대지가 2.4%를 보이고 있다. 농경지 중에는 전(田)이 1985년에는 80%를 상회하는 비율을 보이고 과수원 17.7% 그리고 답(畓)이 1.8%를 보였으나 점차 전과 답은 감소하고 과수원 면적은 증가하였다. 2000년에는 전이 1985년에 비해 약 17% 줄어들고 과수원이 면적으로는 2배 이상, 약 103%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임야와 대지면적은 인구증가와 시설 확충에 따른 결과로 대지는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고 임야는 감소를 보이고 있다.

국토이용계획에 따른 제주도의 용도지역을 보면 1993년에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당시 전체면적 1,826.2㎢은 도시지역 20.5%, 준도시지역 2.6%, 농림지역 8.9%, 준농림지역

[표 9-1]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연도	농경지				목장용지	임야	대지	기타	합계
	총면적	전	답	과수원					
1985	519.0 (28.4)	417.8 (22.9)	9.4 (0.5)	91.8 (5.0)	68.7 (3.8)	1068.0 (58.5)	38.0 (2.1)	131.1 (7.2)	1824.8km² (100%)
1990	519.8 (28.5)	387.4 (21.2)	9.1 (0.5)	123.4 (6.8)	164.0 (9.0)	962.3 (52.7)	41.5 (2.3)	138.1 (7.6)	1825.6km² (100%)
1995	532.8 (28.9)	365.3 (19.8)	8.8 (0.5)	158.7 (8.6)	183.8 (10.0)	945.5 (51.2)	40.7 (2.2)	142.6 (7.7)	1845.4km² (100%)
2000	541.2 (29.3)	346.2 (18.7)	8.3 (0.4)	186.8 (10.1)	181.2 (9.8)	925.6 (50.1)	45.0 (2.4)	153.3 (8.3)	1846.3km² (100%)

자료 : 제주도, 각 년도, 제주통계연보

57.6%, 자연환경보전지역 10.4%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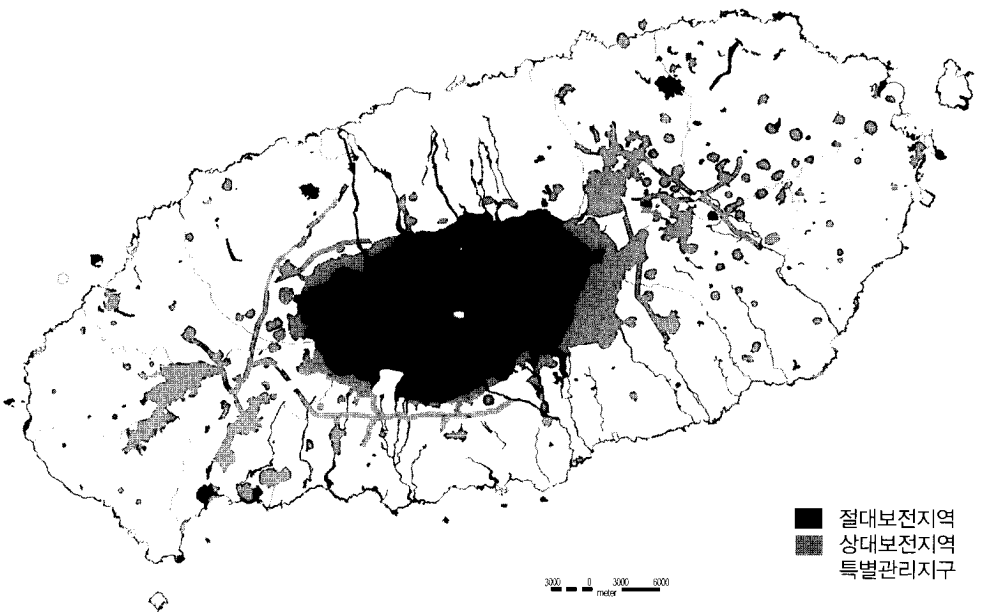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은 인구증가와 도시계획구역 확장으로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 또한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농림지역은 지정된 보전 임지로써 해당 면적을 거의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준농림지역은 도시 인근 및 농어촌지역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무질서하게 입지하는 난개발이 이루어지며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용도 전환되어 1996년 이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설정 당시부터 큰 변화없이 그 면적을 유지하고 있다.

[표 9-2]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현황

연도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
1993	374.3 (20.5)	46.3 (2.5)	162.9 (8.9)	1052.4 (57.6)	190.3 (10.4)	1826.2km² (100%)
1996	367.5 (19.9)	55.4 (3.0)	150.9 (8.2)	1081.5 (58.6)	190.1 (10.3)	1845.36km² (100%)
1998	386.2 (20.9)	74.6 (4.0)	150.6 (8.2)	1043.2 (56.5)	191.0 (10.4)	1845.59km² (100%)
2000	386.3 (20.9)	80.0 (4.3)	150.6 (8.2)	1036.9 (56.2)	192.1 (10.4)	1845.92km² (100%)

자료 : 제주도, 각 년도, 제주통계연보

제주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4년 6월부터 절대 · 상대보전지역, 특별관리지구를 지정하고 있는데, 절대보전지역은 제주도의 자연을 구성하는 한라산, 오름, 해안, 하천, 폭포, 용암동굴, 도서지역 중 원시성이 보존되고 자연경관이 빼어난 지역 등, 상대보전지역은 독특한 자연경관 요소, 자연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지역, 절대보전지역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접지역, 그리고 주요 도로변 제주도의 고유경관 조망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절대보전지역의 면적은 252.29km²로 이 중 한라산이 219.9km²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보전지역은 275.8km²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여기에 특별관리지구는 면적이 약 2km²로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및 문화재 중 집중이용에 따른 훼손이 진행되고 있거나 위험에 처한 지역에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림 9-1〉 제주도 절대, 상대보전지역,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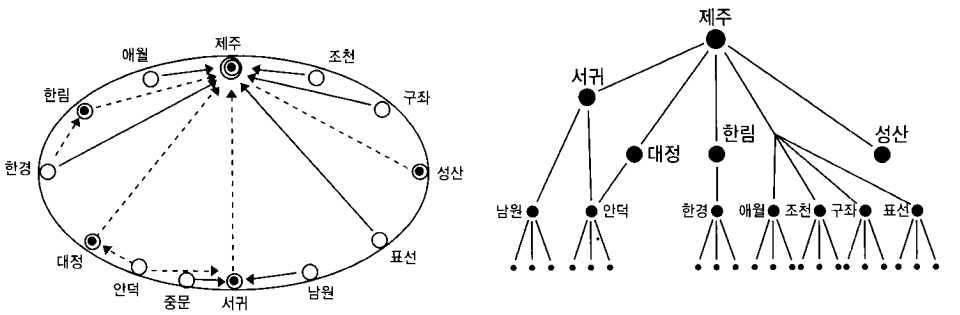
자료 : 제주도, 1997

제주도의 이들 보전지역/지구들은 2000년 1월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의한 지하수, 생태계, 경관보전지구로 세분하여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제주는 경쟁력의 원천을 청정한 환경이라는 인식아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선계획 후개발' 체제를 구축하여 난개발과 시가지의 무질서한 개발 및 확산을 방지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이용 관리체계를 수립하려는 것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으로 토지수요의 양적/질적인 수요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공간적 구조의 변화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조치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개발수요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용지, 상업용지, 그리고 1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지의 보전, 그리고 환경보전을 점차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결과이다.

2) 계층구조

제주도는 자체 광역자치단체와 도내 기초자치단체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의 제주도 행정구역은 해방이후 도(道)제가 1946년 2군 1읍 12면으로 시작된후 1955년 제주시, 1981년 서귀포시가 승격으로 등장하며 2시 2군 체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제주도의 계층구조를 생활권 측면에서 보면 1994년 당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조사에서 인구규모, 산업규모, 세력권, 접근도 등의 지표로 보아 제주시가 도의 탁월한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는 〈그림 9-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귀포를 제외한 모든 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모습이며, 서귀포시의 경우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남원지역과 안덕지역 일부의 남부지역 생활권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고등교육, 고급의료, 고급상품 등의 서비스는 제주시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시 지배적인 계층구조는 1994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집적이익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 무게를 실어 동부와 서부의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기존의 하부구조 시설을 활용한다는 입장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북부에는 제주, 성산, 한림, 남부에는 서귀포와 대정을 중생활권으로 하는 생활권 조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역의 균형개발, 지형, 교통체계 등을 바탕으로 기능적 연계를 가능하고 하며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농어촌지역을 하나의 지역생활권으로 묶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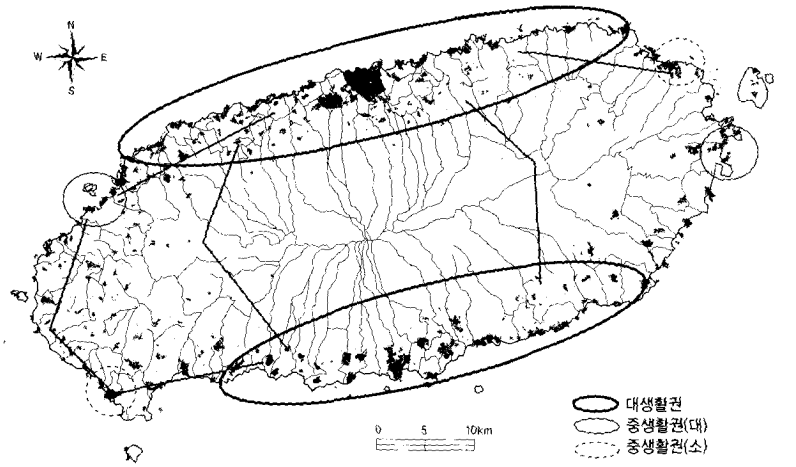


〈그림 9-2〉 1994년 당시 생활권 구조

자료 : 제주도, 1994

그러나 최근의 제주도 상황은 제주시 도내 인구 유입과 기능 집중이 점차 심화되어, 제주도 전체 인구의 과반수,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에서 60% 이상을 넘고 있다. 또한 주변지역에서 제주시로의 통근 통학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는 역통근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주시의 수위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민들의 주거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주하고 싶은 지역으로 제주시가 가장 우선시되며 특히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지역주민들은 60% 정도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제주시의 집중도는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서귀포시의 독자적인 남부권역의 발전 중심 지역으로써의 역할 수행이 미약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양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하부지역별 고유 역할 분담, 지역간 균형개발, 도시과밀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에서는 이러한 현황과 문제점에 비추어 청정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제자유도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분산된 집중을 계층적으로 유도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취락분포는 제주시, 서귀포시 그리고 북제주군 한림과 구좌, 남제주군 대정과 성산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기초하여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를 읍·면단위내와 근교의 중심지에서 공급받는 자족성이 비교적 높은 동부와 서부



〈그림 9-3〉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2001(안)의 생활권 구조

자료 : 제주도, 2001

지역에 발전 촉진 중심지를 조성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간 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특화 기능을 부여하고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외연적 확장을 방지하고 농촌지역은 환경보전의 가치 아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 교통 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활동 범위 확대를 감안한 행정구역 개편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좌는 제주시, 대정은 서귀포시 생활권으로 포함하도록 구상하고 있다 (그림 9-3).

제주도의 미래 공간구상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양대 축으로 하는 남북의 양극구조로 구분지어 발전시키고, 동서의 지역은 지역별 특화산업 위주로 발전시키는 방향, 그리고 남북의 양극구조는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권 구조는 전통과 현대를 포괄하는 구도로 남북지역에 현대적 시설과 기능을 집중시키고 동서지역에 전통적 경관과 산업을 유지 발전시켜 제주도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관광휴양과 농촌 그리고 국제교류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이다.

2. 지역문제 : 지역문제의 유형과 원인

1) 지역문제의 유형

제주도의 지역문제는 가장 최근 2004년 6월 5일에 실시된 제주도지사 재선거 운동기간 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도민들의 의견조사(제주일보, KBS제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도민 유권자 700명을 대상으로 2004년 5월에 조사)와 2003년 민선 3기 제주도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조사(제주발전연구원이 제주도 거주 만 20세 이상 남·녀 1500명 대상으로 조사) 등의 설문조사에서 언급된 제주의 지역현안과 과제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근간의 제주지역의 이슈는 국제자유도시 추진, 지역경제발전, 감귤을 포함한 1차산업 살리기, 골프장, 지하수 이용 관련 환경보호 등으로 중요한 지역 현안과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문제는 이들 내용에 비추어 아래 3가지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관광개발 방식의 문제로, 제주도는 전통적인 생활세계에서 중앙정부 주도아래 다양

한 관광지 그리고 자유도시 계획의 시행이 국가차원의 방향과 이익으로 주도되어 지역산업 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졌으나 '주민의 번영'이 아닌 '장소의 번영'으로 치달은 모습이다. 이 이슈는 개발초기, 특히 제주도개발특별법 반대운동에서 심각하게 대립되어 나타났으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라 하겠다.

둘째, 지역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개발과 보전의 상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IMF관리체제와 함께 세계차원의 경쟁 상황에서의 경쟁논리를 앞세우며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대규모 개발사업들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며 제주사회는 이전 개발계획에의 주민참여나 개발이익 환수 등의 형평성문제에서 개발에 대한 환경보전의 문제가 불그러져 나오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개발사업들이 자연환경을 훼손함은 물론 제주도의 관광이나 농업이 자연자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에 더욱 생활환경의 확보와 장기적인 안목의 개발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지역구조 측면에서 제주시가 도내에서 최적의 생활환경을 제공하게 되며 다른 지역이 상대적으로 침체되는 상황으로 주민의 번영과 유사한 맥락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계획과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지역문제의 원인: 제주발전 전략과 검토

제주도의 지역문제들은 다양한 규모와 양상을 보이지만 앞에서 제시한 개발방식의 문제, 환경과 개발의 상충문제, 그리고 도내 불균등발전으로 압축해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개발방식의 문제는 제주도의 개발이 중앙정부 주도로 1963년의 자유항 구상에서 시작하여 여러 차례의 중앙정부 주도의 계획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제주도 개발계획들의 기본 방향은 국제관광지를 지향한 국민관광지화와 국제자유지역 조성이었다. 특히 후자는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제주도 개발은 도민들에게 소득 수준을 높이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라 전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구가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점차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소외가 증대되었다. 여기에는 개발계획에 주민의견이 미흡하게 반영되고 자본의 영세성과 기술부족으로 개발사업 참여가 제약되

어 소외감이 커지게 되고 개발에 따라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정착성이 약해지고, 외부의 대자본에 의한 개발과 개발이익의 다른 지역 유출로 인해 주민들이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분위기에서 1991년의 제주도개발특별법은 반대분위기를 줄이기 위해 제주도민이 주체가 된 계획을 강조하였으나, 기대와는 달리 주민참여없는 시안 작성으로 인해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1년 반에 걸친 반대운동은 특별법안 내용의 수정과 보완을 끌어내는 데 제1조 목적조항이 "제주도 일원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도민생활 향상에 기여…"에서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도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로 수정되고,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지원 그리고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와 관련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둘째, 개발과 환경의 상충문제는 1990년대 지방자치제의 실시 그리고 IMF관리체제로 들어서며 개발지향의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이와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제주사회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아래 주민들의 투표로 뽑게 되는 자치단체장들은 지역개발에 더욱 가속도를 붙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인데, 이는 지방재정확보를 위해 그리고 자치단체장들이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허가하거나 직접 시행하게 된다. 제주도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로 북제주군의 묘산봉지구개발계획과 남제주군의 송악산지구개발계획 그리고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들 수 있다. 묘산봉지구개발계획의 경우 인구 3만명을 수용하는 체류형 휴양지 개발을 도와 군당국이 추진한 것으로 개발업자에게 군이 군유지를 매각하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생활터전을 빼앗기고 자연환경을 파괴한다며 반대운동을 전개한 사례이다. 이와 유사하게 송악산지구개발의 경우도 1998년 제주도가 남제주리조트개발에 개발사업 승인을 하고 남제주군은 사업자에게 군유지를 매각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개발 편의를 제공하게 되며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송악산은 이중분화구로 지질학자와 문화재 전문가 등이 학술적 가치를 주장하며 반대가 시작되고, 이어 도내 그리고 육지부의 환경단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게 된 갈등 사례이다. 이들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며 당선된 단체장들은 관광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주민들을 배제한 채 사업허가와 편의를 제공하며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 성과를 올리려 하는 사례들로 우

리나라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1990년대 초부터 높아진 것과 더불어 제주도내에서도 도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지고 환경단체들이 활발해지게 되는 배경을 이루고 있다. 개발지향적 분위기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팽배하였으나 환경보전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IMF관리체제와 함께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개발계획들이 다시 국내·세계차원의 경쟁논리를 앞세우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는 새로운 관광소득원을 만들어 내고 동시에 훼손된 등반로를 복원시킬 수 있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라산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논리로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토지무상임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며 외자를 유치해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는 계획 등의 개발전략들이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상충적인 갈등양상을 만들고 있다.

[표 9-3] 제주도 지역개발정책 과정

연도	계획명	주요 전략	목 표	계획기간
1985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3개단지 13개지구의 성장거점에 의한 관광개발	국민관광 기반 국제관광지 조성	1985-1991
1985	제1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사회간접시설 확충, 균형적인 지역개발	관광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균형발전	1985-1991
1991	제주도개발 특별법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한 지방정부 주도하의 개발	국제경쟁력있는 관광산업 육성	1992-2001
1994	제2차 제주도종합 개발계획	관광과 농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룬 개발	관광산업과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을 동시 개발	1994-2001
1999	제주국제자유 도시계획	관광 쇼핑 회의 그리고 교역 금융자유지역	외자유치, 경제활성화	2002-2011

자료 : 이상철, 2003, 양영철, 1999을 수정·첨가

셋째, 제주도의 지역개발은 균형개발보다는 주로 불균형적인 거점개발 방식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다. 한정된 투자재원을 개발잠재력이 가장 큰 몇 개의 지역을 선정하고 집중투자함으로써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고 점차 주변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거점개발방식은 그 동안 제주도의 개발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개발효과의 확산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

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에 불균형발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관광주도형 지역개발정책은 농업의 생산양식을 파괴하여 제주도의 산업구조를 기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서 산업간에 불균형성장을 초래하였다. 즉 그 동안의 지역개발정책은 농업과의 관련 파급효과를 고려함이 없이 관광개발에 편향된 나머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시설 투자를 등한시하여 농촌의 피폐화 현상을 촉진시켰으며, 전체 도민의 과반수가 넘는 농민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생산과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게 된다는 불안감을 갖도록 하였다. 1985년의 제1차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확정에 따라 3개단지 13개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지구가 추가지정해지되어 현재 3개 단지(중문, 성산포, 표선) 20개 지구(봉개, 오라, 돈내코, 우보악, 함덕, 만장굴, 묘산봉, 세화 송당, 원동, 송악산, 용머리, 남원, 수망, 신흥, 토산, 미천굴, 교래, 재릉, 곽지, 차귀)가 지정된 상태다. 이러한 지구지정방식은 선정된 지역에만 투자가 집중되는 불균형개발이기도 하지만 관광지구의 지정후 개발을 유도하게 되어 지가상승과 토지의 확보 곤란으로 개발이 부진하게 되며, 변화하는 관광 욕구와 기대를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계획적인 관광개발이 가능하고 공공시설의 유치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발방식의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제주도의 지역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의 경험과 유사하게 효율성, 형평성, 환경성의 목표 가치간의 갈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제주지역은 개발 초기에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중앙정부의 이익과 지역주민의 요구와의 상충으로, 이후에 효율성과 환경성의 갈등으로 노정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제주사회는 이전 개발계획에의 주민참여나 개발이익의 환수 등의 형평성문제에서 제주도 개발특별법반대운동, 탑동매립반대운동 등의 주민운동을 경험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개발과 환경보전의 문제로 송악산개발 반대운동, 한라산 케이블카건설반대운동 등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제주도의 대표 시민단체인 '제주범도민회'가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도민참여가 배제된 것에 대한 반대운동을 통해 조직되었으나 이후 명칭을 '제주참여환경연대'로 바꾼 것에서 제주지역에서 환경보전이 새로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변화의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제주도에서의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은 개발사업에의 도민참여의 연장선상에서 기존의 개발사업이 도민을 배제하고 개발이익의 지역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한 반대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도민의 실망감은 환경보호의 주장에서 그리고 제주참여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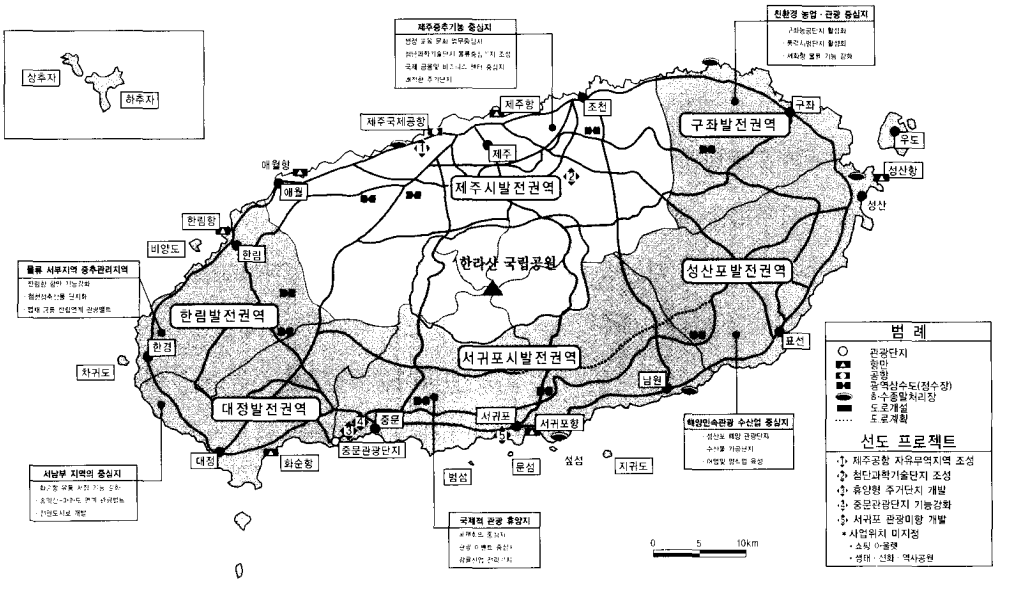
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의 환경단체 등장에서 환경보전의 이슈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환경보전 자체로 보아서도 제주도의 관광대상물이 자연자원에 의존하고 있기에 대다수 개발사업들이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개발이 이루어지기에 더욱 생활환경의 확보와 장기적인 안목의 개발방향에 대한 관심의 표출로 볼 수 있다.

3. 지역개발 정책과 방향

제주도는 현재 도 전역을 포괄하는 지역개발정책으로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 아래 다양한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자유화 그리고 산업의 지식기반화와 정보화의 시대적 조류에 대처하여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국가개방거점개발 및 제주도민의 소득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기본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은 제주지역의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장기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21세기 제주지역발전의 기본방향과 도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특성을 조화시켜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유사자원과 기능을 보유/수행하고 있는 지역들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고 특화된 기능을 부여하여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의 발전축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의 제한된 지역자원활용을 극대화하고 제주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일련의 개발을 추진하는데 촉매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연관부문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7대 선도프로젝트를 관광과 휴양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도내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여 개발사업에 추진력을 붙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제주시발전권역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조천읍, 애월읍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제주도의 중추기능중심지역으로 업무 교육 문화중심지, 국제금융과 비즈니스센터 등을 조성하고, 선도프로젝트로 제주대학교 주변에 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공항 주변에 자유무역지역을 위치시키게 된다. 서귀포발전권역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남원읍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감귤산업 전략기지, 컨벤션센터, 호텔 숙박시설을 유치하여 국제적인 관광 휴양지로 육성하는데 선도프로젝트로 휴양형 주거단지, 서귀포 관광미항, 그리고 중문관광단지의 기능을 강화하여 제주를 대표하는 종합 위락관광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그외 성산포발전권역은 성산읍과 표선면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해양 민속관광과 수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성읍과 표선민속촌을 활용한 관광코스를 개발한다. 한림발전권역은 한림읍과 한경면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물류중심 및 서부지역의 중추관리기능 지역으로 청정 축산물 단지화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임해관광벨트를 구축하고, 대정발전권역은 안덕면을 포함한 서남부지역의 중심지로 전원도시 및 역사유적관광지로 개발 구좌발전권역은 친환경농업과 풍력시범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그림 9-4〉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역발전축과 선도프로젝트

자료 : 제주도, 2002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의 지역개발전략은 분산된 집중형태의 현대와 전통의 경관과 시설을 구분하여 개발함으로써 개발의 수요와 보전의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며, 지역간 · 산업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통합성을 이루어 나가고 국내 외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역발전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단위계획으로 제시된 제주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은 '동북아 관광 휴양 중심 도시'

를 비젼으로 제주지역 내부의 육성의지, 국내외시장에서의 비교우위가 높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큰 관광산업, 건강뷰티생물산업, 친환경농업, 디지털컨텐츠산업의 4대 산업을 제주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시키고자 계획하고 있다. 행정체제측면에서는 인구와 면적에 비해 행정계층수가 많아 업무비용이 과다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정책수행이 곤란하고 지치단체의 재정력 격차 또한 심화되고 있어 행정전산화로 통제범위가 확대가능해 행정의 효율화를 꾀하고 지역주민의 통합을 제고하는 행정계층 축소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 행정측면의 전략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과 더불어 인간환경 지식중심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한다는 비젼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빈 면



제10장
제주지방 - 제주의 발전전망

권상철 (제주대학교)

빈 면

제10장 제주의 발전전망

1. 21세기 제주권 발전의 여건

제주도민들은 21세기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조사(제주발전연구원에서 2001년 2월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1,050명을 대상으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 주민의견조사)에서 '쾌적한 생활환경,' '국제관광지역,' '국제적 교역중심지역,' '과학영농의 중심지역,' '첨단산업지역' 등을 우선 순위로 중시하며 쾌적한 삶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부적으로 생활환경면에서 도민들은 주거분야에 관해서는 만족을 느끼고 있는 반면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이 열악하고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해서도 불만족스러움을 표출하고 있었다. 지역개발에 관해서는 개발과정에서 주민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과반수이상이 답하였고, 지역개발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해서도 과반수이상이 불충분하다고 답하여 근간까지의 지역개발이 그다지 도민의 참여와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제주도의 지역개발은 주민소득 증대, 자연환경보호, 그리고 도민참여 확대 등을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어, 도민들의 입장은 이제 장소의 번영보다는 주민의 번영으로 개발방향을 선호하고 있음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관광개발의 성과는 보통인 것으로 보는 도민이 과반수를 넘었고, 성공적인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지역주민의 의지와 주민의사의 적극 수용을 제시하고 있어 개발방향이나 방법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기본 목표에서 21세기 국가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기반을 확충하며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관광, 비즈니스, 물류, 교역, 금융 등 지식기반 산업의 복합적 전략기지로써 친환경적 복합형 국제자유도시 건설로 계획되어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은 이러한 국토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제주의 발전잠재력과 제약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SWOT(Strength 강점, Weakness 약점, Opportunity 기회, Threat 위협)분석에서, 강점으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대만, 일본 등과 인접해 있어 동북아지역의 중심이라

는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뛰어난 자연환경과 양호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도서지역으로 국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법령 및 계획의 적용이 가능하고, 광범위한 편의시설과 국제수준의 호텔을 포함하는 관광산업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들고 있다. 약점으로는 지리적 고립성으로 높은 물류비용, 섬의 상당부분이 중산간지역으로 개발에 부적합하고, 인구 규모의 한계로 독자적 제조업 수요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대외 의존적 지역경제체제와 열악한 지방재정, 숙련된 노동력과 국제 비즈니스 및 관광산업 종사자의 외국어 구사능력이 부족, 젊고 우수한 인력의 역외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국수준보다 강화된 환경기준 적용과 지역개발에 대한 사회 · 문화적 관행이 외국인 투자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기회요인으로는 고도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도서지역의 입지적 한계가 점차 극복될 것이며, 중국의 해외여행 자유화 확대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 남북교류가 확대될 경우 한라산-백두산 교차관광의 특수를 기대할 수 있고 남북한 고위급 회담의 개최지로 평화의 섬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음을 들고 있다. 위협요인으로는 시장개방에 따라 특히 1차산업의 타격이 예상되고, 중국의 WTO 가입으로 감귤산업 등 농업부문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 및 동북아 여타지역의 유사한 개발계획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이 위축되고, 비용이 저렴한 동남아지역 관광지와의 관광산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라 타 자치단체 및 북한과의 관광경쟁 관계가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약점과 위협을 극복하며 제주도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국가발전에도 보탬이 되는 지혜를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여기에는 청정한 자연환경, 특이한 섬문화 등 관광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세계적 관광휴양지로 개발하고, 다양한 생물자원과 유전자원을 활용한 첨단생명공학 산업을 육성하고 농 수 축산물의 종자생산기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제주 전통문화의 보전과 재조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와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과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하에서 다가오는 미래의 향방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2.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자원으로 인해 국가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정책이 수립되었으며 여기에 1980년대까지 관광중심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는 개방경제의 영향을 받으며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경쟁이 격화되며, 제주지역발전을 위한 계획들이 지방정부가 명목상 개발의 중심에 무게가 실린 1991년의 제주도개발특별법 이래 2002년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으로 이어져 시행되고 있다. 더불어 지방 활성화를 위한 제1차 국가균형발전계획이 수립되며 제주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



〈그림 10-1〉 제주국제자유도시 홍보물

자료 : 제주도, 홍보용 책자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은 중앙정부와 제주도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고 야심적으로 시작한 계획이다. 제주도의 상황에서는 지난 40년에 걸친 수차례의 개발계획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산업은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기초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과 함께 독자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만큼 공공의 투자나 전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시행은 사람 상품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국가 개방거점 개발 및 제주도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기본 목표를 세우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제기반이 관광과 감귤에 편중된 여건에서 1990년대 들어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며 제주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고, 감귤산업 또한 농산물수입개방과 더불어 성장의 한계가 노출되며, 세계화 경제의 추세에서 국제자유도시 전략을 제주의 장점에 비추어 선택하게 되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은 기존의 관광산업과 투자, 금융, 비즈니스 및 무역분야에서 자유경제 기능의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초기 도입단계(2002년)에는 외국인 무사증 입국 확대, 외국 전문인력 장기체류 허용 등을 통한 관광자유도시를 조성하고, 다음 성장 발전단계(2006년)에는 비즈니스 물류 교역자유도시로 점차 확대한 후, 마지막 성숙 정착단계(2010년)에는 금융을 포함한 복합형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목표로 하는 개발 구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통해 세계의 선진 기술, 경영기법 등이 도입되어 국내 도내 기업의 경영 선진화와 국제 경쟁력을 높이게 되고, 지역경제의 발전으로 고급 일자리가 많이 생겨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2)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제주도

최근 우리나라의 과거 압축성장이 중앙정부주도의 획일적인 정책 추진으로 국민소득을 높이는 데에는 성공적이었으나, 심화된 지역간 불균형발전과 지방의 창의와 자율을 이끌어 내는 데 실패하였다고 판단하고 기술, 인재 및 문화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으로의 정책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상황에 비추어 지역혁신발전 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혁신형 · 개방형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의 4대 전략산업과 지역연고산

[표 10-1]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전략산업 선정결과

전략산업		선정근거
업종명	세부업종	
관광산업	· 국제회의, 실버, 휴양 등	· 제주 제 1의 전략산업
건강 · 뷰티 생물 산업	· 건강식품(기능성 식품의약), 천연물 향장품, 종자 · 원예 등	· 생물종 다양성 자원보유,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으로 산업 클러스터 구축 용이
친환경농업 생명산업	· 밭작물, 감귤 등	· 친환경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자연생태적 충분조건 구비
디지털 컨텐츠산업	· 문화, 정보, 게임, 영상, 캐릭터 등	· (주)Daum 커뮤니케이션 본사 제주이전 추진,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으로 산업 클러스터 구축 용이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산업자원부, 2004,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업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체계, 과학기술체계, 기업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직 · 간접적인 상호 연계기관 및 제도의 혁신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전략산업은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기여효과, 기존 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조화, 지역의 내부역량과 육성의지, 그리고 국내 · 외 시장에서의 비교우위에 기초하여 선정하였는데 [표 10-1]과 같다.

관광산업은 제주 제 1의 전략산업으로 세부적으로는 휴양형 국제관광과 더불어 컨벤션센터를 기반으로한 국제회의산업과 온화한 기후조건에 기초한 스포츠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이를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건강뷰티생물산업은 제주도의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종과 1차산업 기반을 기초로 한 지식산업화를 유도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생명산업은 제주의 청정브랜드와 제주 농산물의 안전성, 우수성, 친환경성을 집중 홍보하여 가격지지 및 유통의 활성화 도모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여건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컨텐츠산업은 첨단 IT산업 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 경쟁력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광과 문화 디지털 컨텐츠 구축 시범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지역연고산업은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성에 기초하여 지역경제 기여효과, 지역자원 활용가능성, 그리고 지역의 내부역량과 육성의지에 기초하여 축산업, 수산업, 스포츠산업, 향토음식산업, 화훼산업, 청정에너지산업, 기념품산업의 7개를 선정하여 육성시키게 된다. 이

들 전략 · 지연산업은 지역자원 그리고 지역역량에 기초한 산업으로 특히 관련 산업들과의 연계를 중시하며 산학연관의 정보교환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전략산업과 지역연고산업은 기술혁신과 연계된 도내 · 외 연구개발자원에 대한 DB구축하고 전략산업과 지역연고산업 부문별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지역정보 시스템 구축하고 관광활성화와의 연계효과를 중시하게 된다. 여기에 지방의 특성과 자율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대학의 역할을 중시하여 관련 지식의 창출과 더불어 제주도의 경우 일자리가 부족하여 고급인력이 제주도를 떠나는 인재유출을 막고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3. 세계화시대의 제주도

세계화 추세 속에 제주도 또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변화의 요구와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고심하고 있다. 섬이라는 지역특성으로 인해 독특한 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어 수차례 계획아래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관광지로 개발되고, 감귤이 환금작물로 재배되며 오늘의 제주를 특징지우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 해외여행의 확대로 인해 제주지역은 새로운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제주도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국가균형발전계획을 통해 지방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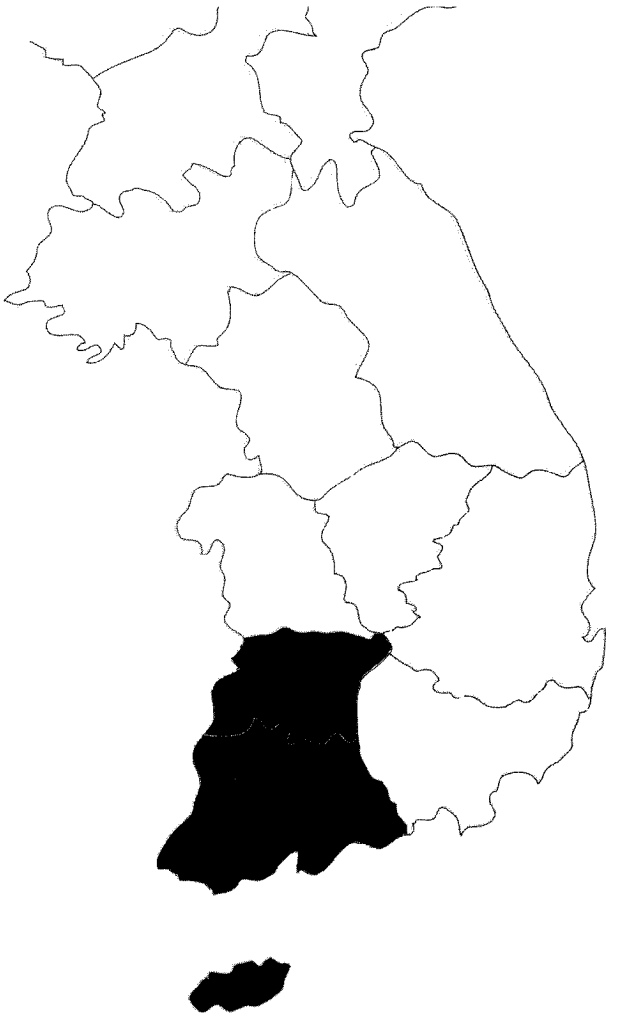
제주도가 지역 나름대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이익과 국가이익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발전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내적 선결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개발에서 문제가 되었던 도민참여와 환경보전은, 도민참여의 경우 지역개발에 대한 도민소외감과 개발이익 배분을 줄이기 위해 개발사업 결정과정에의 절차적 참여로 지역설명회, 공청회, 주민투표 등의 수단을 통해 주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발에 주민을 참여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있는 사업 부문에 대해 도민을 대상으로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하여 제주도민의 자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고,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이라는 결과적 참여 형태에서는 원자재의 현지 조달, 현지주민의 고용 그리고 개발수익금의 일정액을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장소의 번영과 더불어 주민의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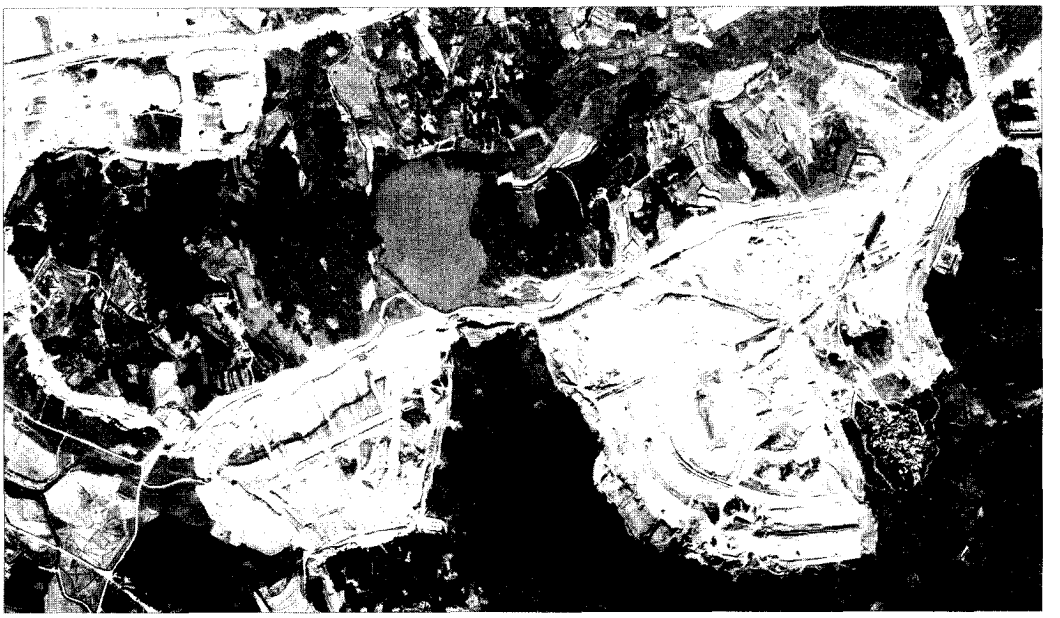
제주도민의 소득향상과 고용기회 확대와 더불어 환경보전 대책 또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주지역 환경기준을 유럽 수준으로 설정·운용하고 있으며, 현재의 절대, 상대보전지역 설정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제주도 전지역을 지하수, 생태계, 경관보전지구로 구분하고, 각 지구를 1~4등급으로 세분하여 개발행위를 차등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를 묶어 통합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를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하려는 계획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는 섬 지역으로 인한 지리적 고립성, 지역경제규모의 영세성과 1차산업과 3차 산업에 대한 편중도가 한계로 지적되지만, 한편 섬 지역으로서 국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법령 및 계획 적용 가능하고, 지식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물종 보유, 국제적 수준의 공항과 수심 깊은 항구를 갖추고 있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국가균형발전계획에서 요구되고 있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한 지역산업 육성에 미래를 걸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도내에 축적된 자본이 없고 노하우와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는 과욕일 수 있다. 또한 국가가 제주지역을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적 관점에서만 인식한다면 이는 제주의 불이익 차원을 넘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기에 현실적으로 제주의 가치를 인정하여 지역이익과 국가이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발전잠재력을 지닌 보물섬으로 21세기 동북아지역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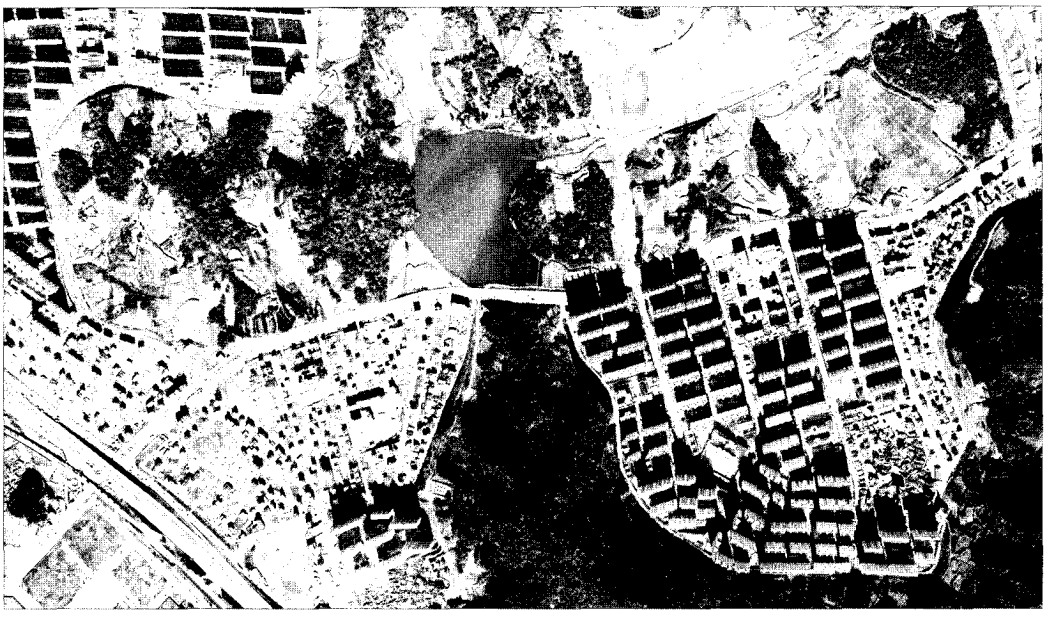
빈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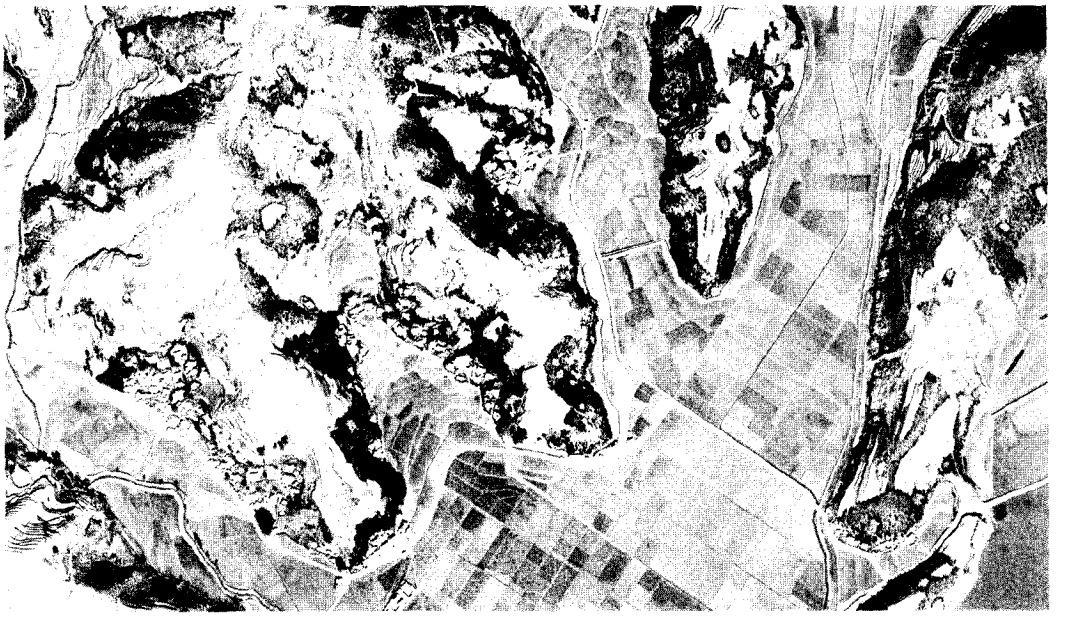
빈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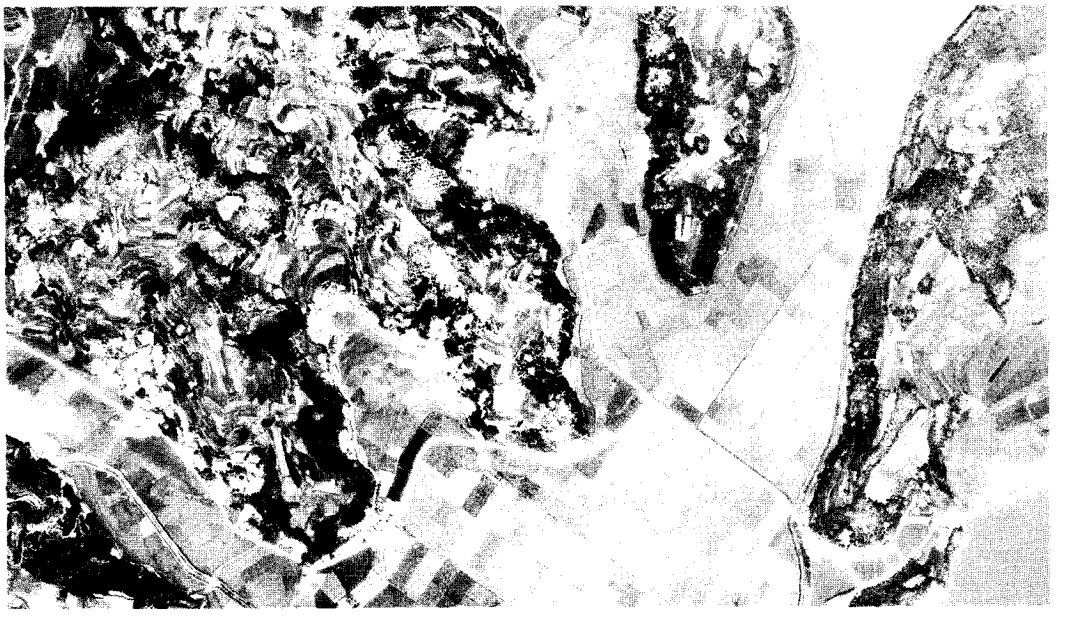
1996년도 광주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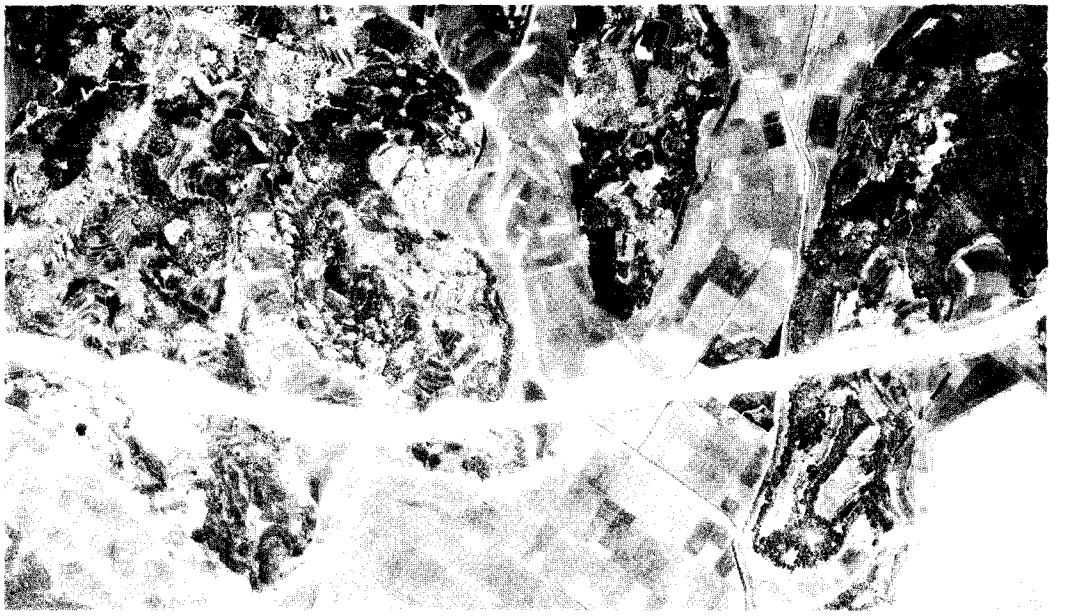
2002년도 광주 항공사진



1970년도 광양 항공사진



1979년도 광양 항공사진



1985년도 광양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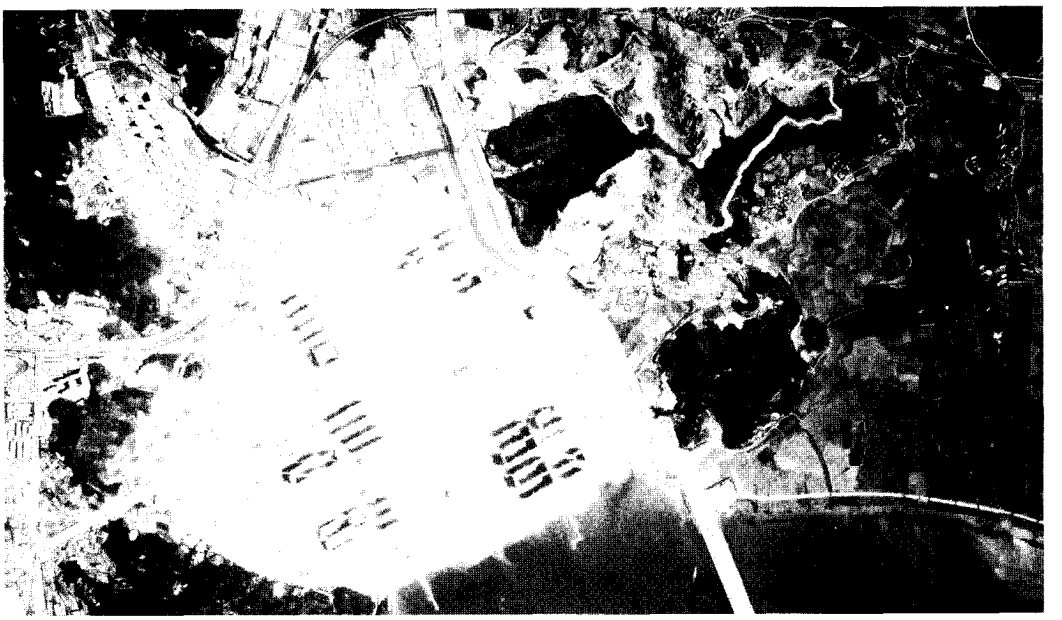
1994년도 광양 항공사진



1967년도 목포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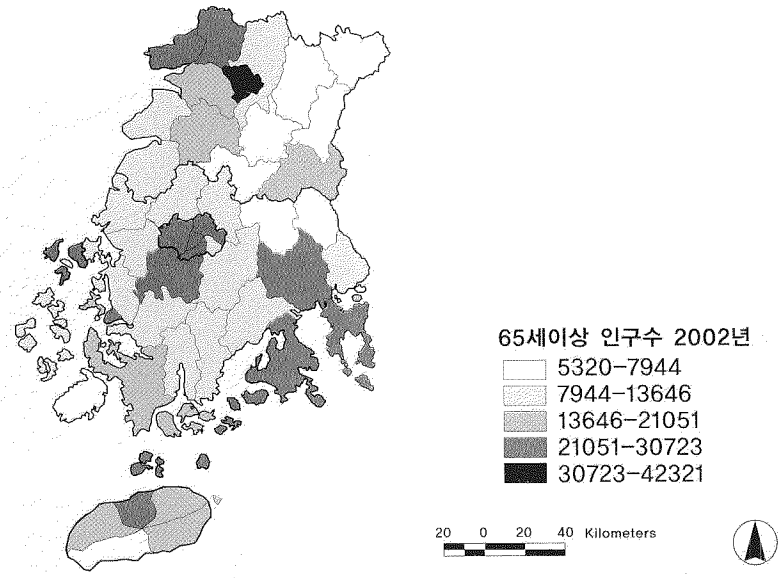
1976년도 목포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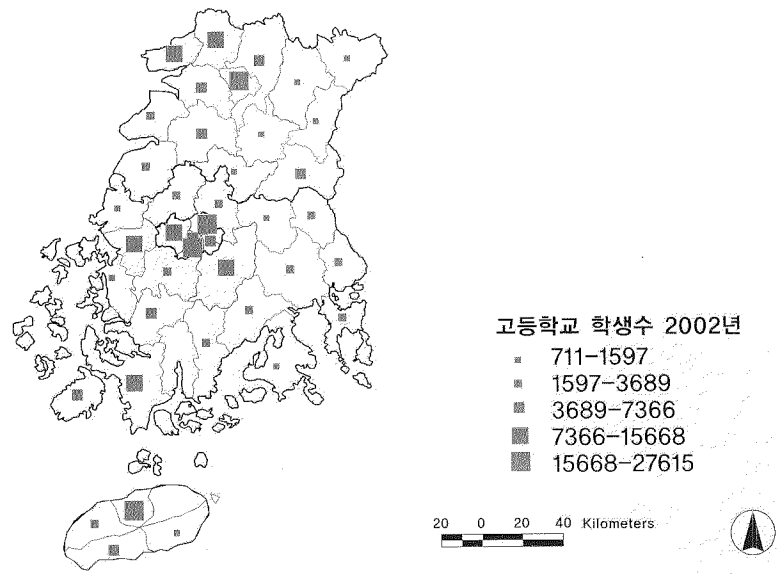
1994년도 목포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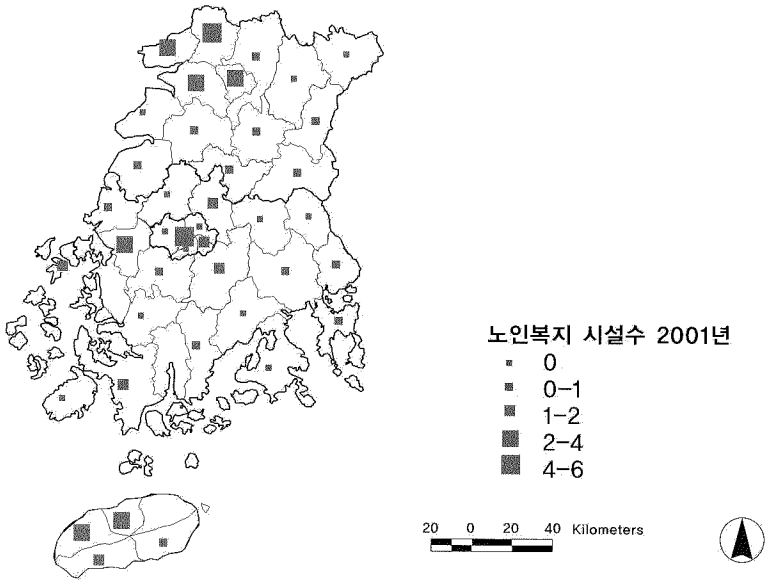
2002년도 목포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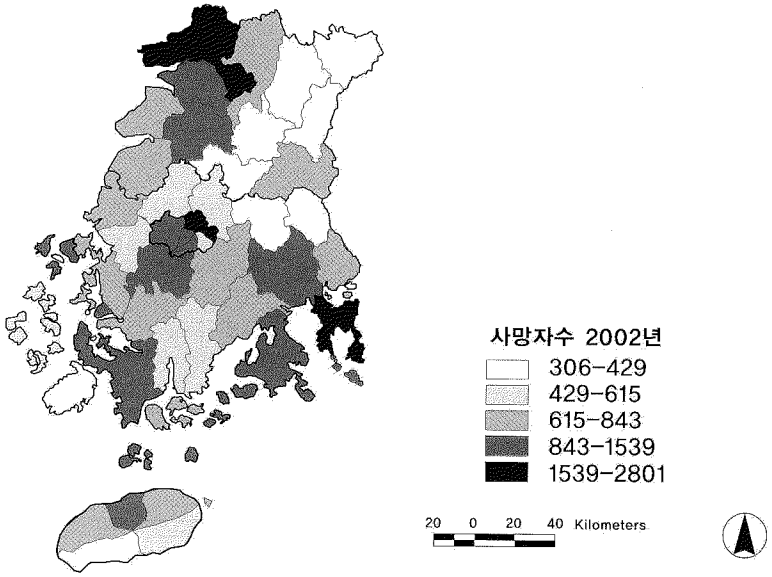
〈그림-1〉 65세이상 인구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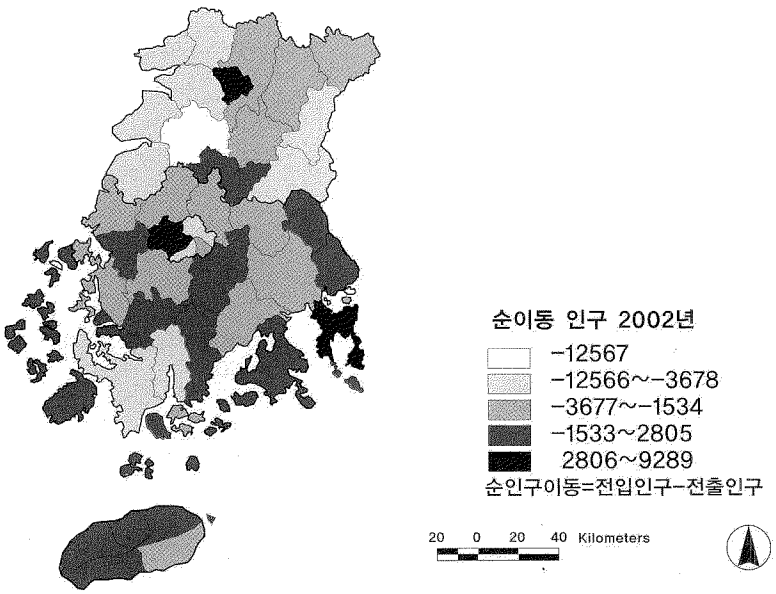
〈그림-2〉 고등학교 학생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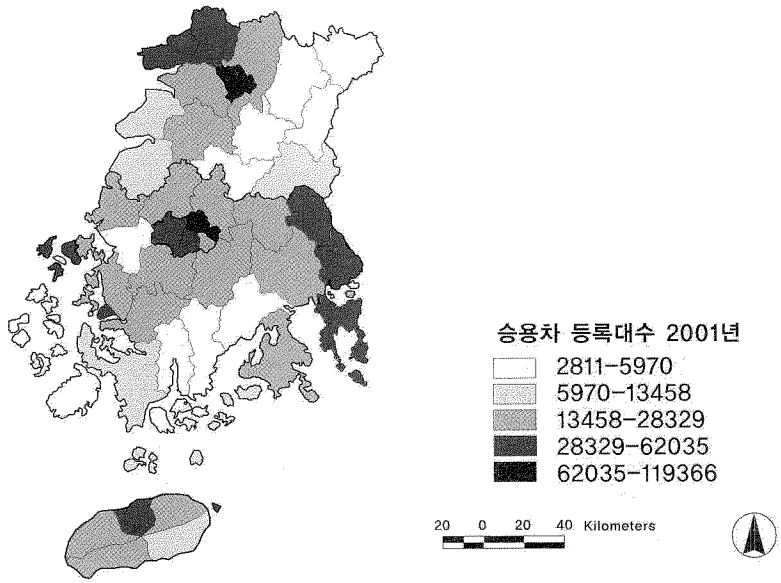
〈그림-3〉 노인복지 시설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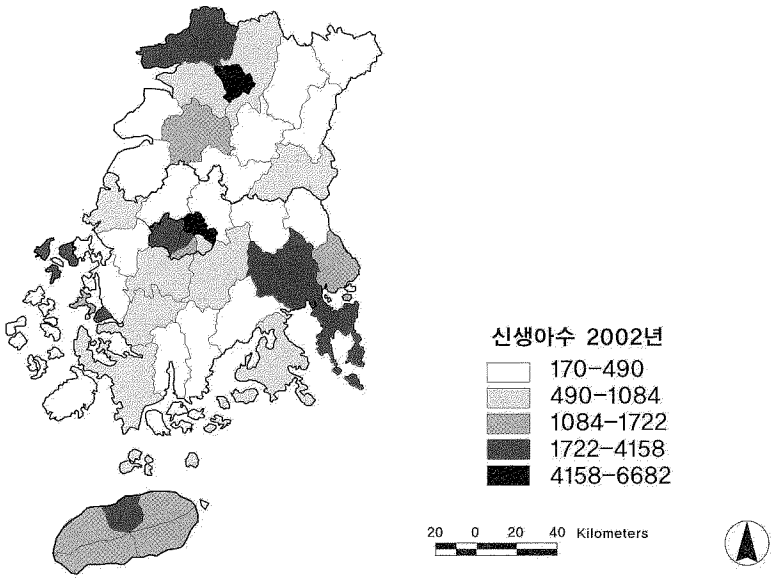
〈그림-4〉 사망자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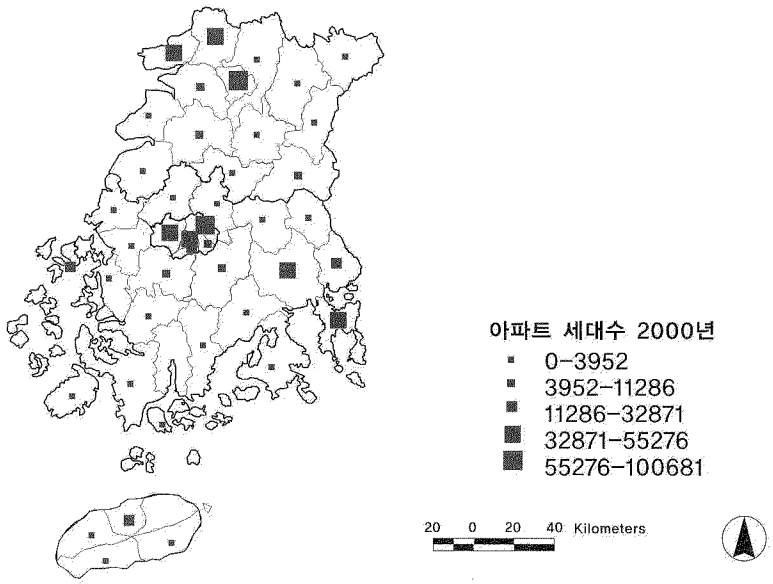
〈그림-5〉 순이동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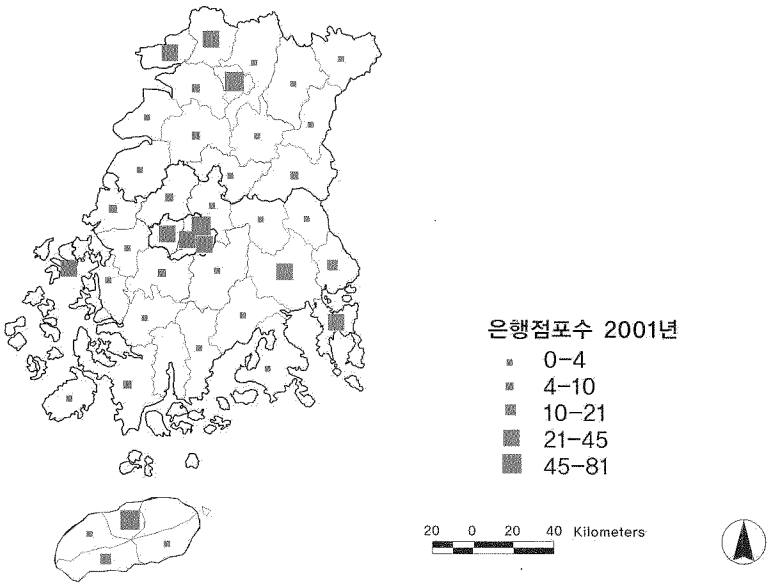
〈그림-6〉 승용차 등록대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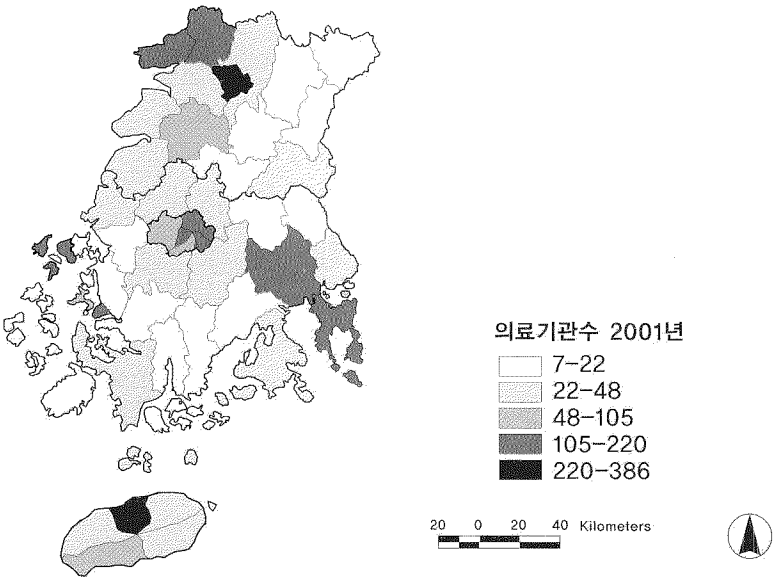
〈그림-7〉 신생아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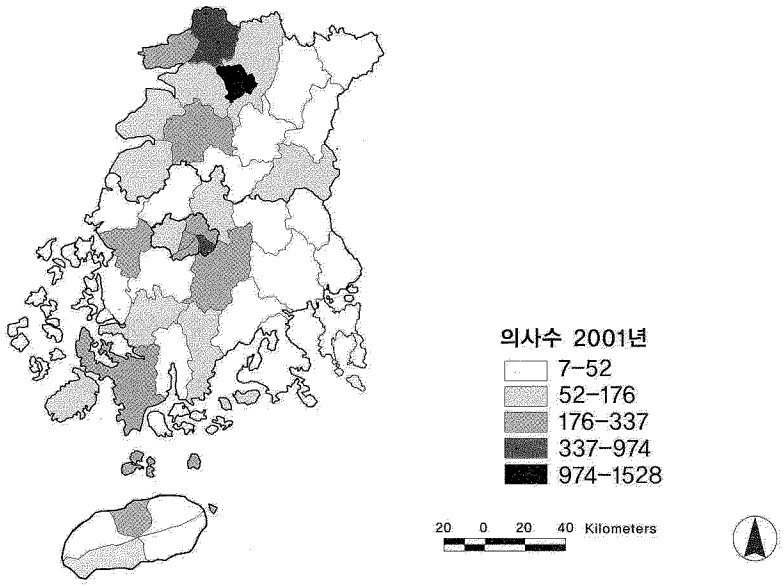
〈그림-8〉 아파트 세대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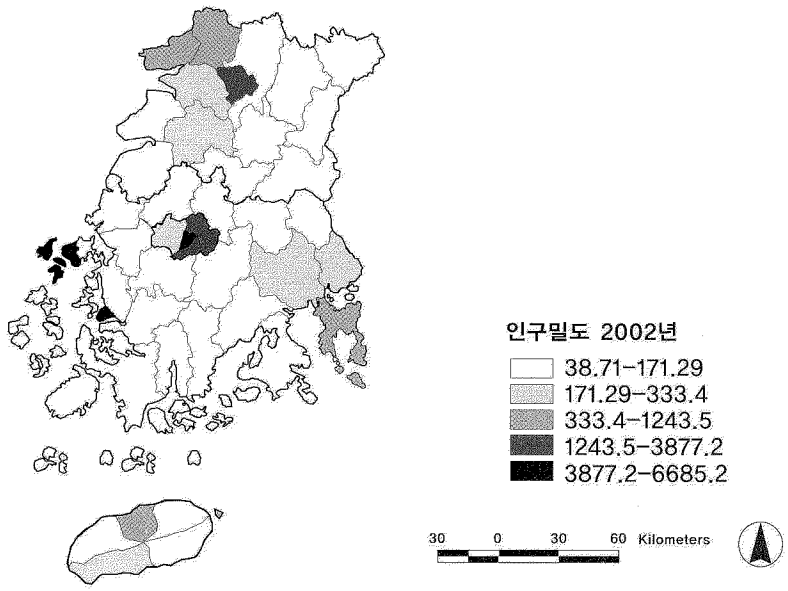
〈그림-9〉 은행점포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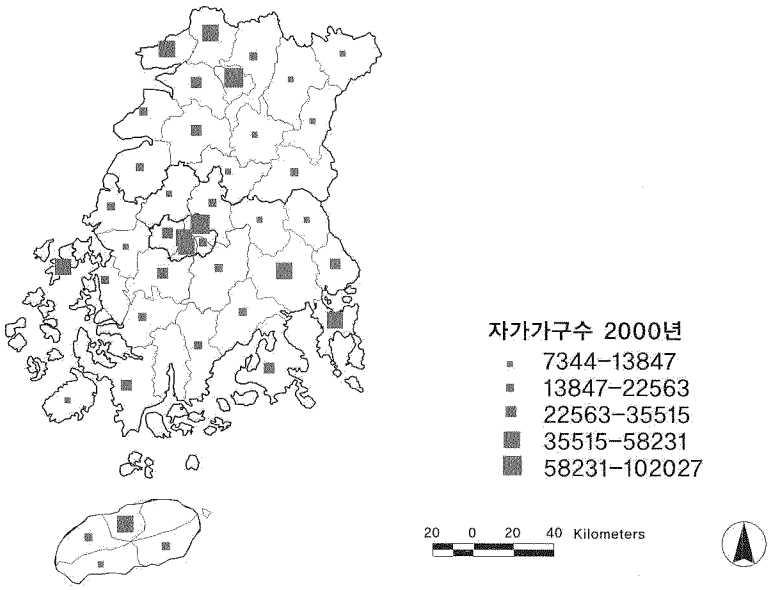
〈그림-10〉 의료기관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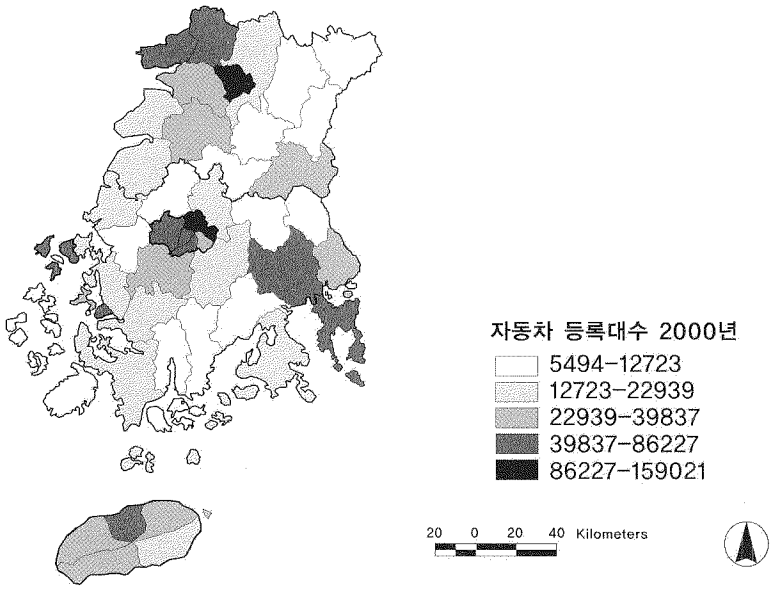
〈그림-11〉 의사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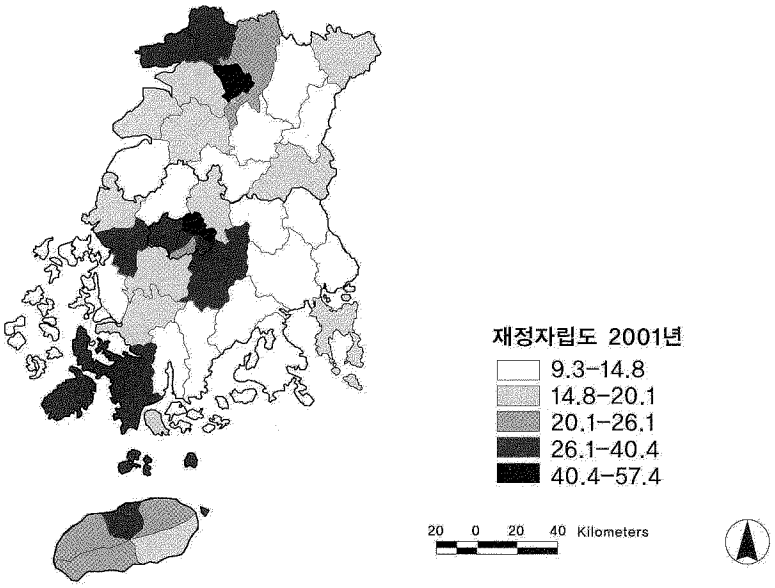
〈그림-12〉 인구밀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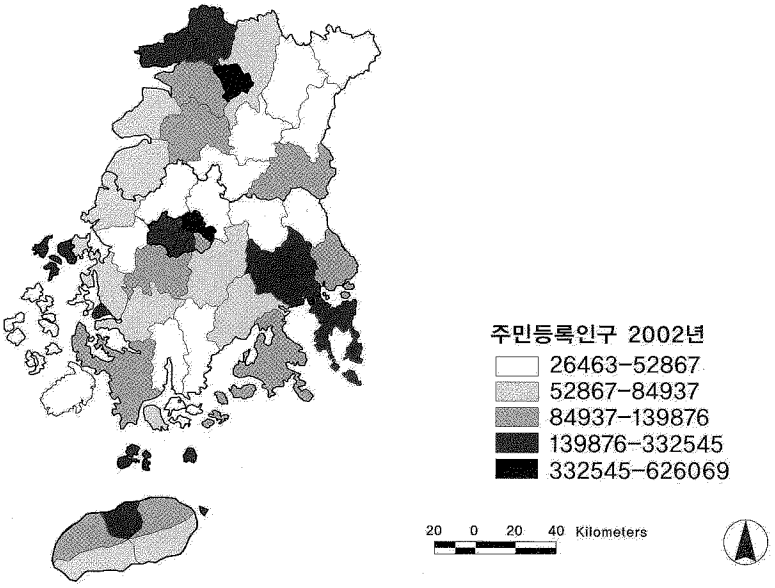
〈그림-13〉 자가가구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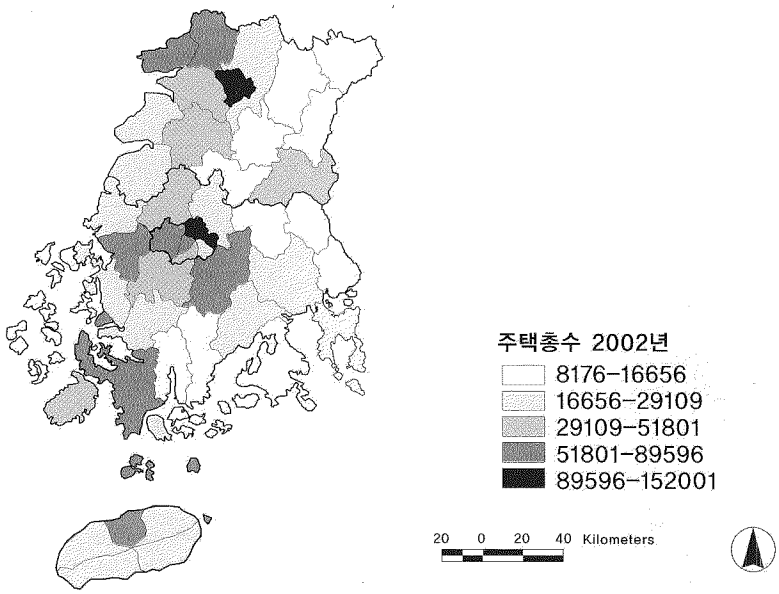
〈그림-14〉 자동차 등록대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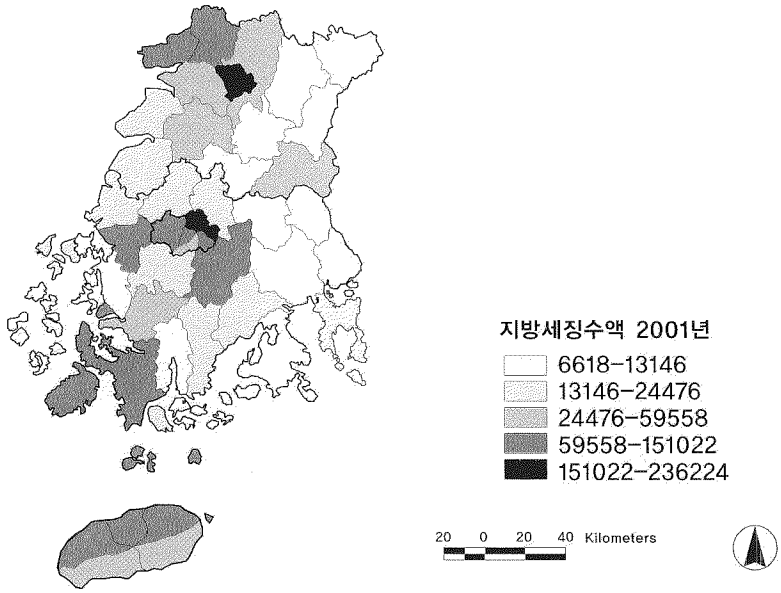
〈그림-15〉 재정자립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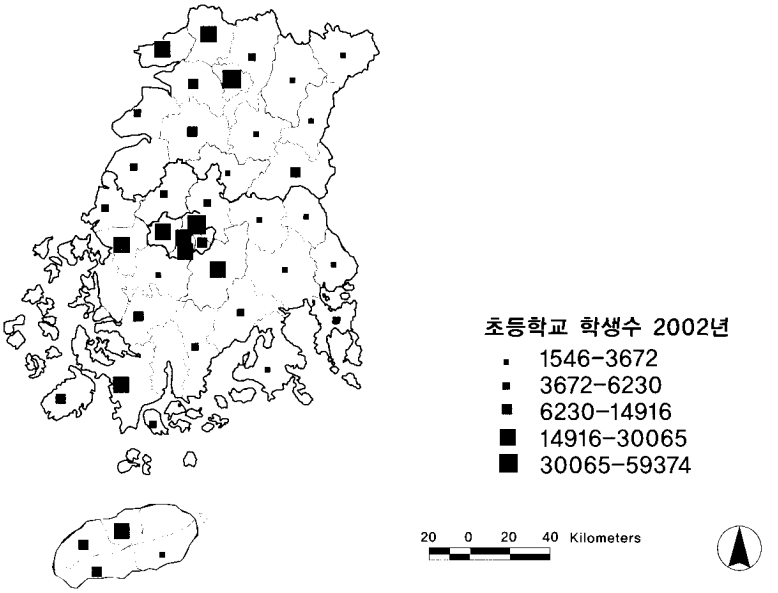
〈그림-16〉 주민등록인구 분포



〈그림-17〉 주택총수 분포



〈그림-18〉 지방세징수액 분포



〈그림-19〉 초등학교 학생수 분포

빈 면

참고문헌

전라편 참고문헌

1. 국내논저

강대균, 2004, 소하천 하류의 임해충적평야-영광군 불갑천을 중심으로-, 한국지형학회지 11(1), 41-51.

강성렬 · 박승필, 2004, 주암분지의 지형, 한국지형학회지 11(2), 113-125.

고기만, 1993, 운봉분지의 지형분류, 한국교원대학교석사논문.

고의장, 1983, 지리산 화엄사선상지에 관한 분석적 연구, 지리학총 10, 18-29.

고철환, 2001, 한국의 갯벌, 서울대학교출판부.

과학기술부, 2003, 과학기술연구활동 조사보고서

광주 · 전남발전연구원, 2001, 광주 · 전남지역발전의 회고와 과제, 광주.

광주상공회의소, 1987, 광주권생산도시화운동.이정식, 김용웅, 2001, 세계화와 지역발전, 도서출판 한울.

권용우, 2003, 2003년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움 논문집, 대한지리학회.

권혁재, 1975, 호남평야의 충적지형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지리학 12, 1-18.

———, 1995, 한국지리-각 지방의 자연과 생활, 법문사.

기근도, 1991, 월출산 화강암 지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석사논문.

기근도 · 이오석, 2004, 지형학 관점에서 본 낙안분지, 한국지형학회지 11(1), 105-125.

기상청, 2001, 한국기후표(1971-2000).

김경덕, 2003, 농촌지역 인구이동 : 실태 · 요인 ·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김광식, 1984, 농업기상학, 향문사.

김두섭 · 박상태 · 은기수, 2002, 한국의 인구, 통계청.

김만흠, 1994, 한국의 정치적 균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태환, 2004,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제58호).

나간채, 1992, 지역민간의 사회적 거리감,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서울 : 성원사.

남궁봉, 1990, 하천유역일대 간석지상의 간척취락유형에 관한 연구-만경강 · 동진강유역을 사례지역으로-, 서울대학교박사논문.

남영신, 1992, 지역패권주의연구, 서울: 학민사.

대한지질학회, 1999. 한국의 지질, 시그마프레스.

박만규 · 나경수, 1999, 호남전통문화론, 전남대학교 출판부.

박승필, 1996, 무등산 지역의 지형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형학회지 3(2), 115-134.

박양호, 2003,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방안, 국토연구원 개원기념 세미나 주제발표

박의준, 2000, 순천만 염하구 퇴적과정의 시 · 공간적 변이, 서울대학교박사논문.

박종관 · 양해근 · 조경민, 2004,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한 영산강 상류역의홍수 유형, 한국지형학회지 11(3), 137-150.

백영기, 2003, 전북지역 산업단지의 입지 및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2), 307-326.

백영기 · 김진석, 2000, 전북 제조업의 성장과 공간적 발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3(2), 5-22.

신승식, 2002.7,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의 내륙 기종점 분석 및 시사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신행정수도연구단, 2003,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분석 및 사례조사 연구

이건철, 2002, 효율적인 대중국 교류 · 협력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 · 전남발전연구원 리전인포 제 74호.

———, 2004, 신행정수도 건설과 광주 · 전남발전, 신행정수도 건설 광주 · 전남권 설명회 주제발표.

———, 2004, 호남고속철 개통에 따른 광주 · 전남지역의 영향과 발전방향, 고속철도와 국가균형발전 지역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이정록, 1998, 광주 · 전남지역 관광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지역개발연구.

———, 2002, 공업단지의 입지와 지역변화에 관한 연구: 여천산단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5(2), 137-155.

이진숙, 8도인의 성격 특성에 대한 선입관념, 사상계 12월호, 1959.

장 호, 1980, 섬진강 상류(백운~마령)의 단구상지형의 연구, 전북대학교논문집 22(자연과학편), 201-209.

———, 1983a, 지리산지 주능선동부의 주빙하지형, 지리학 27, 31-50.

———, 1983b, 남서부지방의 제암석에 나타나는 풍화혈의 성인과 형성시기, 지리학논총 10, 305-323.

———, 1994,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금오지구의 지형, 한국자연보존협회 조사보고서 32, 53-68.

———, 1995, 호남평야와 논산평야내의 충적평야 주변에 분포한 저구릉의 토양지형학적 연구, 한국지형학회지 2(2), 73-100.

———, 1997, 전북의 지형, 전북학연구(Ⅰ), 63-79.

장 호 · 박희두, 2001, 한국의 하안단구, 한국의 제4기 환경(서울대학교출판부), 193-235.

장재훈, 1972, 남원지역의 산록완사면 연구, 지리학 7, 12-23.

———, 1983, 한국의 산록완사면에 관한 지형학적 연구, 경희대학교박사논문.

———, 1997, 남원 남서부지역의 산록완사면에 관한 지형연구, 지리학연구 30, 87-102.

———, 1998, 곡성지역의 산록완사면과 선상지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32, 19-39.

전미영, 1991, 군산공업단지의 공업구조와 지역연계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26, 68-98.

정기환 · 문순철 · 민상기, 1999, 농촌인구 과소화 지역의 유형별 특성과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규영, 2004,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와 균형발전효과 추정, 토지공사

주승만, 2003, 지역주의 선거 근본원인에 대한 성찰과 해결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리산지역개발조사연구위원회, 1963, 지리산지개발에 관한 조사보고서.

최경수외, 2003,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1981, 빈곤의 실태와 영세민대책.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광주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문화환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인구변동에 따른 노동인력 수급전망과 정책과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7, 5대강유역사연구2: 영산강유역사연구

2. 국내자료

건설교통부, 2002, 우리 ᄀᆞ름 길라잡이, 1 : 75,000 수문지도.
———, 2003, 2004 도로교통량통계연보
———, 2003, 시외버스 운행계통
경제기획원, 각년도, 한국통계연감.
과학기술부, 1997, 광주 지질도폭(1 : 250,000) 설명서.
광주광역시, 2000, 빛과 생명의 문화광주 2020 기본계획
———, 2001, 광주중기종합발전계획.
———, 2003, 광주광역시통계연보.
———, 각 년도, 통계연보.
———,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2005~2020)에 반영할 광주발전계획의 기본방향(안).
광주권발전연구소, 광주권연구, 제5호, 사단법인 광주권발전연구소. 광주상공회의소.
국립공원관리공단, 2003, 지리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국토개발연구원, 1990, 해안편람.
———, 1996, 국토50년, 서울프레스.
국토지리정보원, 2003, 한국지리지 충청편, 서울.
김정호, 청구도.
내무부, 1985, 도서지.
농촌진흥청, 1983, 한국토양도(축척 : 1/100만).
대한민국,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데이코산업연구소, 2003.3, 2003 한국방송통신연감.
동진농지개량조합, 1975, 동진농지개량조합 50년사.
문화관광부, 2004, 2003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민족문화추진회 번역, 1969, 신증동국여지승람Ⅳ.
산업자원부, 2004,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한국산업단지공단.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제 302호).
서울특별시, 1979, 저소득시민의 생활대책에 관한 기초조사.

영산강환경관리청, 1995, 영산강 대권역 환경백서.
이광원, 2003, 관광자원론, 기문사.
이상춘, 2003, 관광자원론, 백산출판사.
이승호 · 이현영, 2002, 기후학의 기초, 두솔.
이후석, 2003, 관광자원의 이해, 백산출판사.
이희연, 1996, 인구지리학, 법문사.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분석 연구위원회, 2002, 한국의 주택.
전라남도, 1992, 전남인의 가치관과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 각년도, 전남통계연보.
———, 1990, 2000, 농업총조사보고서.
———, 2001, 제3차전라남도종합계획.
———, 2003, 2002년 시 · 도 비교통계.
———, 각년도, 전라남도지.
———, 각년도, 통계연보.
———, 제3차 전라남도종합계획(2000~2020).
———,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2005~2020)에 반영할 전라남도발전계획의 기본방향(안).
전라남도 ·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2002, 전남향토문화백과사전, 광주.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1993, 전라남도지, 전라남도.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1994, 전라남도지, 전라남도.
전라북도 완주군, 2003, 전라북도 대둔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전라북도, 1990, 2000, 농업총조사보고서.
———, 1997, 전북학연구(I).
———, 2001, 제3차전라북도종합개발계획.
———, 각년도, 전라북도지.
———, 각년도, 전북통계연보.
———, 제3차 전라북도종합계획(2000~2020).
전주시, 각년도, 전주시통계연보.
정보통신부, 각 년도, 정통신통계연보.

조석필, 1997, 태백산맥은 없다, 사람과 산.
조선일보사, 2003, 실전 백두대간 종주산행.
조혜종, 1993, 인구지리학개론, 명보문화사.
조화룡, 1987, 한국의 충적평야, 교학연구사.
주영하 외, 1996, 한국의 시장: 제3권, 공간미디어.
철도청, 2003, 2002 철도통계연보.
최영선, 1995, 자연사 기행, 한겨레신문사.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 1990, 2000, 농업총조사보고서.
———, 1990, 2000, 시도별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 1990, 2000, 어업총조사보고서.
———, 1993, 2002,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 1993,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 1997, 2002,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 1997, 2002,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 1997,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적 과제.
———, 2002.12, 시 · 군 · 구 100대지표.
———, 2003, 2001년 시 · 도별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 2004, 국제통계연감.
———,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 각 년도, 지역통계연보.
———, 각 년도, 총조사인구총괄.
———,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인구동태조사(1995, 2000).
———, 인구이동통계연보(1995, 2000).
한국교통산업연구원, 2003.7, 2003 한국교통산업연감.
한국방송연구원, 2003.1, 2003 인터넷방송연감.
한국언론재단, 2002, 2003 한국신문방송연감.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3, 2003 인터넷연감, 전자신문사.
———, 각 년도,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 각 년도, 정보화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04, 2004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한국전산원, 각 년도, 정보화통계집.
———, 각 년도, 한국인터넷백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3, 2002년도 광산물수급현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9, 2001 해운통계요람.
한주성, 1999, 인구지리학, 한울.
해양수산부, 2003.7, 2003 해양수산통계연보.
행정자치부, 2000,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환경부, 2002, 전국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전라남도 신안Ⅳ-.
———, 2004, 환경백서.
대한상공회의소, 1991, 한국의 상권.

3. 국외논저

안재학, 1990, 韓國における人口移動の地域パタ・ンと決定要因 -1965년~1985年間の變化-, 筑波大學博士學位論文.
赤木祥彦, 1971, 韓國, 光州市附近の Pedimentと岩塊流, 동북지리 23(2), 11-115.
조혜종, 1999, 韓國と日本の人口水準平價に關する比較研究, 立正大學 박사학위논문.
Akagi, Y., 1974, Pediment in the Taean Peninsula and the Yeongsan River Basin, Korea, The Science Reports of the Tohoku University 7th Series(Geography) 24(2), 183-203.
Chang, H., 1987, Geomorphic Development of Intermontane Basins in Korea, Ph. D. Dissertation to the University of Tsukuba.
Daniels, P.W. (ed.) 1991, Services and Metropolitan Development: International Perspectives, London: Routledge.

Koto, B., 1909, Journeys through Korea, Journal of the College of Science, Imperial University of Tokyo 26(2), 1-207.
Ono, Y., 1990, Alluvial Fans in Japan and South Korea, in Rachocki, A. H. and Church, M.(eds), Alluvial Fans: A Field Approach, John Wiley & Sons, 91-107.

4. 인터넷 자료

http://freeway.co.kr
http://hanacatv.co.kr
http://home.nec.go.kr:7070/sinfo/sinfo.htm
http://kicox.or.kr
http://korail.go.kr
http://koreanet.kbs.co.kr
http://kosis.nso.go.kr
http://krnetwork.or.kr
http://ktx.korail.go.kr
http://mnum.mokpo.ac.kr/skkoh/lecture/honamh&c/Ysrcultf.htm
http://stat.provin.jeonbuk.kr
http://stat.provin.jeonbuk.kr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200004/nd2000040130.html
http://www.esandan.net/
http://www.gwangju.go.kr/
http://www.gwangju.go.kr/
http://www.gwangju.kma.go.kr
http://www.jeonnam.go.kr/statistics
http://www.jeonnam.go.kr/statistics
http://www.kcta.or.kr/com/com_01.asp
http://www.kowaco.or.kr

http://www.kpf.or.kr/db/orgainfo_media.html
http://www.metro.gwangju.kr
http://www.nso.go.kr
http://www.stat.go.kr

제주편 참고문헌

1. 국내논저

강민정, 2001, 제주시 도시화의 공간적 특성,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강상배, 1980, 제주도 남 · 북사면지형의 비교연구, 지리학연구, 5, 157-179.

고기원, 1997, 제주도의 지하수 부존특성과 서귀포층의 수문지질학적 관련성,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고충석, 2003, 제주개발의 발전가치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제주불교사회문화원 엮음, 전환기 제주도 지역개발 정책의 성찰과 방향, 도서출판 각, pp. 29-47.

권상철, 2001, 제주도 관광개발과 환경보존의 상충, 자연보존, 제114호, pp. 51-55.

———, 2003, 인구이동과 지역발전: 제주지역 유입 · 유출인구의 속성비교, 濟州道硏究, 제24집, 85-107.

金東栓, 1995,(원류수정) 18 · 19世紀 濟州島의 身分構造 硏究 -大靜縣戶籍中草를 중심으로- , 博士學位論文, 檀國大學校大學院.

———, 1997, 耽羅國의 中央으로의 歸屬(1105~1402), 耽羅史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사정립추진위원회. (원류수정)

金奉玉, 1979, 濟州人 · 濟州道精神-進取的 氣象 · 强靭한 主體性-, 제주도, 75호, 제주도.

金榮墩, 1965, 濟州島民謠硏究, 一潮閣.

———, 1968, 濟州島 民謠에 비친 서울, 제주도, 36호, 제주도.

김 현, 2001, 우리나라 인터넷 정보유동의 공간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덕, 1999, 제주도 기후와 관련된 전통 가옥 경관 특성,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김문홍, 1994, 제주의 육상식물, 한국이동통신 제주지사(편) 제주의 자연생태계, 90-123.

김일우, 2004, 제주 사람들의 海上活動과 그 유형 -고려시대 이전을 중심으로- , 제1회 제주해양포럼, 제주해양연맹.

김종석, 1998,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石) 문화,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김창집, 2003, 생활 속의 오름, 제주인의 삶과 오름, 탐라문화연구소 · 한라일보사 공동학술 토론회 자료집, 탐라문화연구소, pp.43~45.

김태호, 1996, 리모트센싱에 의한 제주도 식생피복의 계절적 변화, 지리학논고, 14, 1-8.

노 박, 마이클, 1993, 카톨릭윤리와 자본주의정신, 許鐘烈 譯, 韓國經濟新聞社.

文 建, 1990, 濟州地域發展과 情報化, 國際化와 情報通信, 通信開發研究院.

문무병, 1989, 제두도굿의 연희적 특징, 濟州島研究, 제6집.

———, 1993, 濟州島 堂信仰 研究, 博士學位論文, 濟州大學校大學院.

박승필, 1985, 제주도 측화산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논문집, 30, 159-166.

朴齊家, 北學議, 實學研究入門, 歷史學研究會編(1973), 一潮閣.

박행신, 1994, 제주의 육상동물, 한국이동통신 제주지사(편) 제주의 자연생태계, 46-89.

西歸浦市, 2001, 西歸浦市誌(상권)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시민교육연구실, 1994, 공동체 문화형성과 시민의식,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시민교육연구실.

손인석 · 이문원 · 윤정수, 1998, 제주화산도의 해수면하의 층서, 한국지구과학회지, 19, 581-589.

양영철, 1999, 국제자유도시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法과 政策, 제5호, pp. 91-110.

芮庸海, 1985, 韓國의 風土와 人情, 歷史를 만든 韓國人, 韓國出版公社.

오장근 · 신용만, 2002, 한라산 노루의 분포 특성, 한라산연구소 조사연구보고서, 1, 101-113.

오페르트, 에른스트, 1880, 朝鮮紀行, 韓 · 邢 譯(1979), 一潮閣.

원종관, 1975, 제주도의 형성과정과 화산활동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이학논집, 1, 7-48.

유순호 · 송관철, 1991, 제주도의 토양과 농업자원, 제주도연구, 8, 41-58.

융 · 에릭슨/이부영 · 조대경 역, 1993, 현대의 신화/아이덴티티, 삼성출판사.

李 根, 1968, 三多의 哲學-女多-, 제주도, 37호, 제주도.

———, 1970, 제주도민의 자립정신, 제주도, 43호, 제주도.

李起旭, 1995, 濟州道農民經濟의 變化에 대한 硏究, 博士學位論文, 서울大學校大學院.

李琪亨, 1968, 三多의 哲學-風多-, 제주도, 37호, 제주도.

———, 1990, 風俗圖, 漢拏日報社.

李氣鴻, 1967, 農業의 勞動生産性問題, 건국학술지, 제8집, 건국대학교학술연구원.

李夢一, 1991, 韓國風水思想史, 明寶文化社.

이문원, 1994, 제주도의 형성사와 지질구조, 대한지하수환경학회(편) 제주도 지하수자원의 환경학적 보전과 개발이용, 54-74.

이문원 · 원종관 · 이동영 · 박계헌 · 김문섭, 1994, 제주도 남사면 화산암류의 화산층서 및 암석학적 연구, 지질학회지, 30, 521-541.

이병설, 1979, 제주도의 바람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6, 11-18.

이승호, 1999, 제주도 지역의 강수분포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34, 123-136.

이창억, 2000, 탐라순력도 고선의 선박사적 의의, 탐라순력도연구논총, 제주시 · 탐라순력도연구회, 160—184.

정광중, 2000, 제13강 산업과 경제, 한국지리정보연구회『지리학강의』, 한울아카데미, p.280~306

———, 2002a, 탐라시대의 지리적 환경과 주민들의 생활기반, 초등교육연구, 제7집, 35~59.

———, 2002b, 제주해녀의 상징성과 존재의 필요성, 제주일보 '시론' 기사(3월 8일자, 제4면).

정광중 · 강만익, 2003, 추자도 어선어업의 실태와 특성, 제주교육대학교 학위논문집 (제32집).

좌승희, 1999,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평가와 발전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주최 우리나라의 경제특별구 평가 및 발전전략, 세미나 자료, pp. 1-18.

진성기, 1987, 南國의 巫俗, 螢雪出版社.

———, 1962, 三多가 빚어낸 島民의 生態, 제주도, 4호, 제주도.

———, 1980, 耽羅의 神話, 平凡社.

진영일, 1998, 古代耽羅의 교역과 國 形成考, 탐라사 연구자료집, 제주사정립추진위원회. (원류수정)

최성길 · 박원권, 1996, 제주지역 shore platform의 형태와 발달과정, 지리학논집, 22,

107-121.
최영진, 1999, 한국지역주의와 정체성의 정치, 오름.
최희선, 1993, 대도시 주변 농촌지역의 정주체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韓三寅, 1985, 離婚에 관한 硏究(II)-濟州道에 있어서의 離婚率과 裁判上離婚에 관한 實態分析-, 社會發展硏究, 創刊號, 濟州大學校社會科學大學 社會發展硏究所.
한태흥, 1998, 제주도 연안 해빈과 사구 연구, 한국지형학회지, 5, 73-87.
황경수, 2003, 해방 이전 제주항로의 변천사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23, 87—115.

2. 국내자료

강정효, 2000, 화산섬, 돌 이야기, 도서출판 각.
고창석, 1995, 탐라국사료집, 신아문화사: 제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산업자원부, 2004,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국립제주박물관, 2001, 제주의 역사와 문화, 통천문화사.
국토지리정보원, 2003, 한국지리지 충청편.
김광식, 1976, 한국의 기후, 일지사.
김대용, 2001, 제주관광론, 백산출판사.
김봉옥, 2000, 증보 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김여수, 1997, 언어와 문화, 철학과현실사.
김영돈, 1999, 한국의 해녀, 민속원.
김일우, 2000,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김종근 · 길용현, 1988, 관광지리학, 집문당.
김진영, 1995, 제주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한울, pp. 312-342.
김태호, 1997, 제주도의 해안지형, 탐라문화, 18, 381-397.
농촌진흥청, 1976, 정밀토양도(제주도).
문옥표, 1994, 일본의 농촌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朴趾源, 燕巖集, 한국의 실학사상, 유형원 외/강만길 외 역, 삼성출판사.

邊時志, 1988, 예술과 풍토, 열화당.

부만근, 1997, 濟州地域 住民運動論, 제주대학교 출판부.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북제주군의 문화유적(I) -선사 · 역사-.

사회와철학연구회, 2001, 세계화와 자아정체성, 이학사.

서귀포시, 2000, 2016년 서귀포 도시기본계획

송성대, 2001,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도서출판 각.

송재호, 2002, 제주관광의 이해, 도서출판 각.

芮庸海, 1994, 한국인의 정서구조 1권, 신원문화사

윤 선, 1995, 제주도 형성사, 제주도, 98, 148-164.

이동영, 1994, 제주도의 화산활동사, 제주도(편) 한국의 영산 제주도, 69-76.

이득재, 2001, 가족주의는 야만이다, 소나무.

李丙燾, 1994, 한국의 역사-양반과 민중의 갈등- 17, 한국교육문화사.

———, 1995, 19세기말 제주도의 가족구성, 가족과 법제의 사회사, 문학과지성사.

———, 1995,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환경 -도전 · 적응 · 초월의 메커니즘- , 제주사회론, 신행철 외, 한울.

이상철, 2003, 제주도 지역개발정책의 전개와 성격, 제주불교사회문화원 엮음, 전환기 제주도 지역개발 정책의 성찰과 방향, 도서출판 각, pp. 5-28.

임양재 · 백광수 · 이남주, 1991, 한라산의 식생, 중앙대학교출판부.

제주관광신문, 제19호, 2004년 1월 11일자.

제주도 관광진흥과, 2003, 제주관광 매뉴얼 Jeju.

제주도, 1997, 제주도 중간지역 종합조사.

———, 1997, 제주의 오름 , 제주도.

———, 1998,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

———, 2000, 제주도의 물 용천수.

———, 2001,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

———, 200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02-2011.

———, 2003, 2003 환경백서.

———, 2003,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제주도

——, 2003, 해양수산현황.
——, 2004, 관광행정현황.
——, 2004, 제주경제동향, 제주도
——, 각연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 각연도, 제주도지.
——, 각연도, 제주통계연보.
제주도 · 제주도재해대책본부, 2003, 2002 재해백서.
제주문화방송, 1994, 속탐라록, 제주문화방송사.
제주발전연구원, 2001,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주민의견조사
——, 2003, 제주도 주요정책 도민의견조사.
제주상공회의소, 2000, 제주상의65년사.
——, 2003, 제주경제현황
제주시, 1994, 도시계획사십년사
제주일보, 2004, 유권자 Agenda(의제) 도민 설문조사, 5월 12일.
제주지방기상청, 2003, 제주도기후특성집.
제주지방중소기업청 · 제주소상공인지원센터, 1999, 상권분석(제주시편)
——, 2000, 상권분석(서귀포시편)
조성윤, 2003, 제주도 지역개발정책과 주민운동의 전망, 제주불교사회문화원 엮음, 전환기 제주도 지역개발 정책의 성찰과 방향, 도서출판 각, pp. 225-248.
崔在錫, 1984, 濟州島의 親族組織, 一志社.
탁석산, 2000, 한국의 정체성, 책세상.
통계청, 1985, 1990, 1995, 200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 표본조사.
——, 2003, 경제활동인구연보
포퍼, 칼 H, 1993, 역사는 도대체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문화와 사상, 소흥렬 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포퍼. 칼 H, 1950, 열린사회와 그 敵들 Ⅰ, 이한구 옮김(1996), 민음사.
피터슨, 마크 지음, 1996, 金惠貞 옮김(2000), 儒敎社會의 創出, 一潮閣. (원류수정)
해양수산부, 2001, 한국의 해양문화 5-제주해역.

현창국, 2000, 제주다워야 제주가 산다, 한울.

3. 국외논저

朴泰赫, 1995, 醜しい韓國人, 光文社.

原口九萬, 1931, 濟州島の地質, 朝鮮地質調査要報, 10, 1-34.

李文遠, 1982, 韓國,濟州火山島の地質, 日本岩石鑛物鑛床學會誌, 77, 55-64.

長谷中利昭 · 李文遠 · 谷口宏充 · 北風嵐 · 宮本毅 · 藤券宏和, 1998, 韓國濟州單成火山群の火山カタログ, 東北アジア研究, 2, 41-74.

Heiken, G. H., 1971, Tuff rings: Examples from the Fort Rock-Christmas Lake Valley Basin, south-central Oregon, Jour. Geophy. Res., 76, 5615-5626.

Karl Pearson, 1892, The Grammar of Science, J.M. Dent & Sons.

Pieter, A. A., 1899, 제주도방문, 제주향토무크 3, 1993, 濟州歷史研究會.

Royle, Stephen, A., 2001, A Geography of Islands: Small Island Insularity, Routledge.

Sohn, Y. K., 1996, Hydrovolcanic processes forming basaltic tuff rings and cones on Cheju Island, Korea, Bull. Geol. Soc. Ame., 108, 1199-1211.

Yim, Y. J. and Kira, T., 1975, Distribution of forest vegetation and climate in the Korean Peninsula. I. Distribution of some indices of thermal climate, Jap. Jour. Ecology, 25, 77-87.

4. 인터넷 자료

http://isis.nic.or.kr/sub02/sub02_index.html

http://kpxj.or.kr

http://www.jeju.ac.kr

http://www.nso.go.kr

빈 면

찾아보기

전라

가

가이벤-헤르츠버그의 원리 · · ·

메카트로닉스수도 · · ·

응회환 · · ·

파

파급효과 · · · · · 178
파식대 · · · · · 541
파호이호이용암 · · · · · 540
포스트포디즘 · · · · · 242
표선리현무암 · · · · · 540
피병 · · · · · 157
피세 · · · · · 157

하

하천 분기율 · · · · · 548
하천쟁탈 · · · · · 84
한전 · · · · · 155
해성퇴적층 · · · · · 542
해식애 · · · · · 541
핵석 · · · · · 60
호강 · · · · · 25
화쇄난류 · · · · · 544
10월유신 · · · · · 396
PCM(Pulse Code Modulation) · · · · · 298
ratchet effect · · · · · 192
SOC · · · · · 482
urban shadow현상 · · · · · 181

찾아보기

제주

가

가이벤-헤르츠버그의 원리 · · · · · 548
경제활동인구 · · · · · 567
관문도시 · · · · · 569
국내총생산 · · · · · 598

다

다핵구조 · · · · · 586
단지화 · · · · · 582,591
대정현 · · · · · 532
도시문제 · · · · · 569
두뇌유출 · · · · · 567
따또주의 · · · · · 656

마

목사 · · · · · 531
문화축제 · · · · · 630

바

박리다매 · · · · · 618
방사상 · · · · · 619
본향당 · · · · · 651

사

사회간접자본 · · · · · 596
사회증가 · · · · · 565
상전 · · · · · 604
생태관광 · · · · · 629
서비스 경제화 · · · · · 607
수성화산체 · · · · · 542
수위도시 · · · · · 568
스코리아콘 · · · · · 543
스트롬볼리식 분화 · · · · · 543
스펠레오뎀 · · · · · 545
신거은거제 · · · · · 650

아

역류효과 · · · · · 575
연승어업 · · · · · 605
오름 · · · · · 662
올레 · · · · · 534
용마름 · · · · · 534
용암원정구 · · · · · 544
유류비용 · · · · · 581
유자망어업 · · · · · 605
읍성촌 · · · · · 580
응회환 · · · · · 544
인구부양비 · · · · · 575
인문관광자원 · · · · · 627

자

자연관광자원 · · · · · 627
자연증가 · · · · · 566
절해고도 · · · · · 647
정규화식생지표(NDVI) · · · · · 552
정보화마을 · · · · · 583
정의현 · · · · · 531
정주체계 · · · · · 579
정체성 · · · · · 645
종묘양식업 · · · · · 605
주상절리 · · · · · 541
중간투입서비스 · · · · · 600
중심성 · · · · · 583
지역내총생산 · · · · · 598
지적민빈 · · · · · 646
집단정신(ethos) · · · · · 646
집산기능 · · · · · 580

차

채낚기어업 · · · · · 605
최종소비서비스 · · · · · 600

타

탁라 · · · · · 531
통년형 관광지 641

파

파식대 · · · · · 541
파호이호이용암 · · · · · 540
폐원정책 · · · · · 582
포괄법칙모형(Covering-law model) · · · · · 648
표선리현무암 · · · · · 540
풍채 · · · · · 534

하

하천 분기율 · · · · · 548
해성퇴적층 · · · · · 542
해식애 · · · · · 541
화산도 · · · · · 525
화쇄난류 · · · · · 544
환상 · · · · · 619
ISDN · · · · · 620
SWOT · · · · · 677

집필진

◆편찬위원

신인기 (국토지리정보원장)
김태호 (국토지리정보원 지도과장)
박삼옥 (대한지리학회장)
박영한 (대한지리학회 지리연구소장)

◆집필위원

전라편 : 박영한 (서울대학교)
백영기 (전북대학교)
안영진 (전남대학교)
이강원 (전북대학교)
이건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이상석 (순천대학교)
이정록 (전남대학교)
이현욱 (전남대학교)
장 호 (전북대학교)
전경숙 (전남대학교)
조성욱 (전북대학교)
황철수 (경희대학교)

제주편 : 강만익 (제주공업고등학교)
권상철 (제주대학교)
김오진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김태호 (제주대학교)
송성대 (제주대학교)
정광중 (제주대학교)

◆편집위원

안영진 (전남대학교)
주성재 (경희대학교)
황철수 (경희대학교)

◆자문위원

구자용 (상명대학교)
김기혁 (부산대학교)
손명원 (대구대학교)
손용택 (정신문화연구원)
이재덕 (서원대학교)
전영권 (대구카톨릭대학교)
정성훈 (강원대학교)
정재준 (성신여자대학교)
한주성 (충북대학교)

◆담당 및 감독관

장영복 (국토지리정보원 지도과)
안치환 (국토지리정보원 지도과)

◆책임편찬기관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 부설 지리연구소

◆디자인 • 제작

성화기획

ISBN 89-956027-2-4 94980

본 한국지리지(전라 및 제주편)는 국토포털사이트(www.land.go.kr))국토정보)국토강좌에서 온라인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한국지리지 – 전라 · 제주편

발행일 | 2004년 11월
발행처 | 국토지리정보원

주 소 | 442-77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길 587(원천동 111번지)
전 화 | 031-210-2600